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96. 2~'96. 4)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목 차

Ⅰ. 4자회담 제의 / 3

Ⅱ. 북한, 정전협정 위반 / 45
1. 전쟁위협 발언 / 45
2. 판문점 무력 시위 / 59
3. 우리측 대응 / 85

Ⅲ. 대북정책 / 119

Ⅳ. 대북 식량지원 / 145

Ⅴ. 대북 경수로지원 / 167

Ⅵ. 탈북자 관련 / 185
1. 귀순자 대책 / 185
2. 성혜림 일가 망명 / 195
3. 조명길 망명 요청 사건 / 237

Ⅶ. 남북관련 동향 / 255
1. 남북 경협 / 255
2. 사회·문화 동향 / 283
3. 북한, 미·일 관계 / 297
4. 북한 내정 / 331
5. 북한 위조달러 유통 등 / 345

Ⅷ. 사설·칼럼 / 365

<부록> 남북관계일지 / 425

Ⅰ. 4자회담 제의

▽ 한겨레신문 1996. 4. 15

한반도 '4자회담' 추진

한-미 정상회담뒤 북한에 제안…평화협정 이행여부 주목

정부, 비무장지대 관리·전시작전권 귀속등 후속조처 준비

한-미 두 나라는 오는 16일의 한-미 정상회담 뒤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다시 열고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경제지원을 추구하기 위해 16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러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기본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의 실현이 크게 주목된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 해외현지 법인의 북한 투자와 △나진-선봉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진출 △북한의 통신분야 장비투자에 미국 기업의 진출 등을 허용하는 등 광범위한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해외현지 기업의 북한 진출을 허용할 경우,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조처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런 4자회담 제의에 따른 후속조처로 △비무장지대 관리·운용방안 △전시작전권 귀속문제 △상호군축 등 군사신뢰 구축조처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도 "대북한 경제제재의 추가 완화 문제 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태호 이상기 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5

대북한 유화전환 실마리

한-미 4자회담 제안 배경

정전협정 명분 · 실효 상실 사실상 인정

총선전 한미 합의…한반도 정세 대전기

이상기 기자

4·11총선 때문에 그동안 보류되어 왔던 대북 정책의 유화적 전환이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지나면서 우선 교착의 실마리를 푸는 노력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환경이 교착상태에 빠진 결정적 원인은 남북대화의 불통 때문이었으며, 남북대화의 장기적 교착은 △북한이 남쪽을 제외시킨 채 문제를 풀려는 경직된 태도와 △총선거를 의식한 남쪽정부의 강경한 대북 자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한-미 두 나라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지난달 말 공로명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로명 외무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총선 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유인책'과 전향적인 조처가 있을 것임을 비쳤다.

정부가 '4자회담' 제의에 나선 것은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 조처와 북-미 군사접촉에 대비해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은 그동안 △당사자 해결원칙 △평화체제 구축 때까지 정전협정 유지 △점진적 접근 등 수세적인 자세를 취해온 남한에 대해 적극적·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등 남북간 관계개선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돼온데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군사시위를 통해 현 정전협정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일 수교협상 재개는 물론 북-미 군사협상마저 열리는 마당에 정전협정의 명분과 실효는 더이상 없어졌다는 게 정부쪽의 판단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4자회담'이 특히 이목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최근 북한이 줄곧 제기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위한 기본틀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해결 자세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의 비무장지대 사태 등은 이를 위한 시도로 분석되었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앞 화단에 14일 오후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제주/연합

물론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4자회담 제안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틀의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4자회담' 외에도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자회담'의 경우 '직접' 3자회담이나,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 군사위의 가동을 통한 남북회담과, 미사일 회담, 유해송환 회담 등을 통한 북-미 회담 등 두 개의 채널을 가동하는 '간접' 3자회담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하고 있다.

아무튼 '4자회담'의 제안으로 이제 공은 북한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북한 정권이 참담한 경제사정과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4자회담' 수용이나 남북 직접회담 재개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베이징 창구를 통해 북한이 제안한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미 정부는 미국의 해외현지 법인의 대북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대폭적인 경제제재 완화 추가조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한을 둘러싼 외교 경제적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1996. 4. 16

北-美대화 가속화 조짐

美, 한반도문제와 분리키로

▽ 조선일보 1996. 4. 16

클린턴 "남북한화해 노력"

【엘멘도르프공군기지(美 알래스카州)=聯合】 金泳三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방문길에 오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5일 미국은 南北韓 사이의 궁극적인 화해와 분쟁의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용기인 美공군 1호기가 오전 2시(현지시각) 연료보급차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州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가진 회견에서 우리는 핵문제를 통제하에 두고 이를 완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화해와 분쟁의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이 세계는 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南北문제 한국이 주도역할

美, 정전협정 직접 협의안해

오늘 韓美정상 「제주3원칙」채택

金대통령

클린턴대통령

【제주=金東哲·朴濟均】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6일 제주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기도에 따른 대북대응책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이날오전 호텔 신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와 미국과 북한간 대화문제는 분리해 처리한다 △한반도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한다 △정전협정 등 한반도평화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담은 「제주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선언중 北-美간의 대화를 한반도평화문제와 분리시킨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가속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양자간 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정상은 또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남북문제는 남북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양국정상은 단독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합의내용을 밝힌다. 양국정상은 이어 양측 관계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실무오찬회담을 갖고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대만사태 이후 동북아정세 △경제 등 한미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 동아일보 1996. 4. 16

◇최근 韓美정상회담日誌

1993.7.10~11=클린턴대통령 訪韓, 金泳三대통령과 회담(서울) 공동기자회견(7.10), 클린턴대통령 국회연설(7.10)

93.11.21~24=金泳三대통령 시애틀 APEC정상회담 참석(11.17~20)후 訪美, 클린턴대통령과 정상회담(워싱턴), 공동기자회견(11.23)

94.11.14=보고르 APEC 정상회담 계기, 韓美정상회담(인도네시아)

95.7.27=金泳三대통령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 참석차 訪美, 클린턴대통령과 정상회담(워싱턴)

96.4.16=클린턴대통령 방한(제주도), 공동기자회견

韓美정상 25번째 공식만남… 無泊방한 두번째

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韓美정상회담은 48년 접촉수립후 양국 정상간의 25번째 공식 「만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양국간 첫 정상회담은 한국전쟁중이던 52년 12월 2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訪韓, 李承晩대통령을 만났던 경우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89년 2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두번째 「無泊(무박)」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無泊방문의 가장 큰 이유는 클린턴대통령의 바쁜 정치일정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체류시간이 총9시간으로 늘어나 양국간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기에 충분하며 오히려 실속과 짜임새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양국 정상은 16일 오전 소규모 정상회의를 가진 뒤 오후에 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무박정상회담이 앞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90년대 들어 세계 각국에서 정상외교의 비중이 급등하면서 유럽 등 서구 선진국가들간에는 무박방문이 茶飯事(다반사)가 됐으며, 하시모토(橋本龍太郎)일본총리의 경우 취임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無泊일정으로 클린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매우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두차례 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을 가져 정상회담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91년 4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방문이후 사상 두번째로 제주도에서 이뤄져 세계적 관광명소로서 제주도의 위상을 올릴것으로 기대된다.

〈宋義達기자〉

▽ 중앙일보 1996. 4. 16

美, 對北관계개선 재량 확대

韓美정상이 채택할 對北 3원칙

김두우 기자

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대북관련 3원칙은 요약하면 한가지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등 한반도 안보및 평화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한국이, 그밖의 미·북관계 개선등의 문제는 미국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와 관련, 한국이 그동안 『미·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진전속도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조만간 열릴 북한과의 미사일회담이나 6·25때 실종된 미군의 유해송환 논의,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와 대북한(對北韓)경제제재 해제문제 논의 등에서 재량권을 갖게된 셈이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와는 별도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과 일본의 대북수교협상 진전등은 그동안 한국의 반대에 부닥쳐 기형적으로 진행돼왔다. 이제 그런 짐을 서로 덜어보자는 것이 제주선언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있다.

미국은 『한국의 총선때까지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등을 보류하면서 집권당을 도와줬으니 한국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도와달라』며 반대급부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측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효과를, 미국으로서는 미국민들에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세계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한미정상간의 이런 합의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대북접근 방식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접근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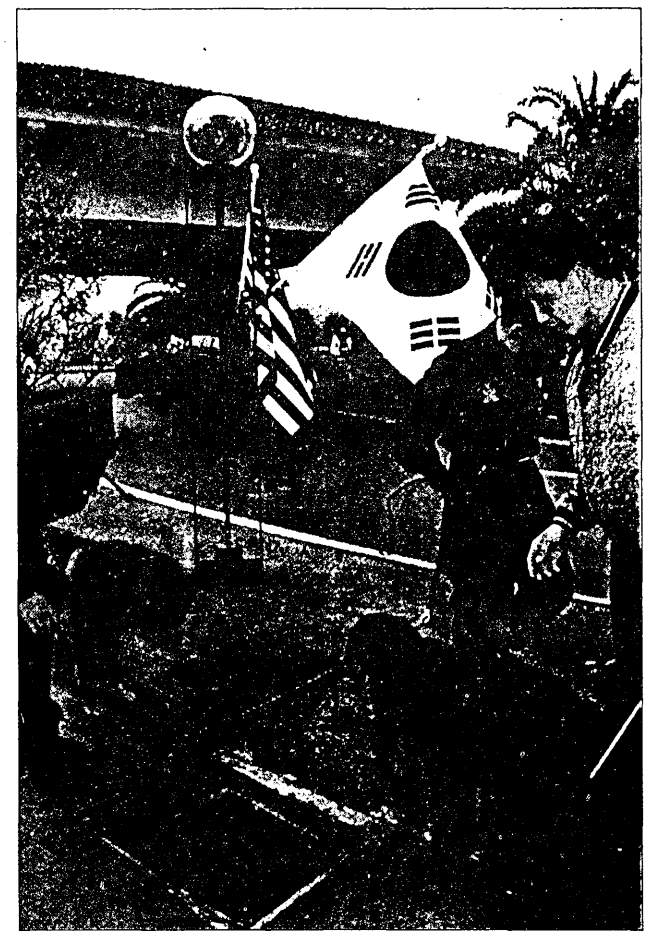
다만 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쐐기를 박기로 했다. 정전협정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남북한 당사자의 대화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당사자 원칙」이 여전히 존중된다.

당사자 원칙의 재확인은 『미·북관계의 진전이 거꾸로 한국에 압력으로 작용해 한국이 끌려가는 형국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측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經濟 제재 해제등 자율로
安保관련은 '당사자 원칙'

이와함께 제주선언은 한국정부의 대북접근 자세에도 일대 전환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미·일의 대북접근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도 미국과 중국등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하에 남북한 당사자와 미·중이 참여하는 이른바 「2+2」회담등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식등을 검토하고 있다.



회담장 보안점검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제주 호텔신라 주변에서 경호실 관계자들이 회담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김주만 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6

한국 "북-미접촉 안막겠다" 선회

오늘 발표되는 한-미 '제주선언'

남북관계와의 연계원칙 포기 '현실론' 선택
대북정책 '큰틀' 정리…북-일협상 활기띨듯

제주/김종구 기자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합의될 것으로 알려진 '제주선언'의 핵심은 한가지다. 그것은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 안보체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 북-미간 접촉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직된 자세에서 탈피해 미국쪽에 큰 재량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미 접촉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어 진행시킨다'는 기존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깨진 것이다. 비록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무게 중심은 북-미 접촉에 쏠리고 있다.

미국은 이번 선언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이나 유해 송환 협상에서 좀더 홀가분한 입장에 서게 됐다. 북-미간 접촉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나 경제재제조처의 완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어차피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결국 이번 제주선언은 미국쪽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대신 북한과의 접촉 문제에서 한국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며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신 우리쪽은 미국이 정전협정 전환 문제를 놓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미국은 최근 "휴전협정 유지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한국과 미국간에 이런 입장조율이 타결된 시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우선 4·11총선이 여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문제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여유가 생겼다. 오히려 이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입지를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고려도 했을 법하다. 또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무작정 압박만 가하는 것보다 체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도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양국 합의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제치고 앞서 나가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이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와 떼어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선언의 파장은 의외로 클 수도 있다.

한-미간에 합의된 원칙은 일본과 북한과의 접촉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도 급속히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어느 면에서 이번 제주선언은 지금까지 기형적으로 진행돼온 북-미, 북-일 접촉을 정상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한국은 대북쌀 지원 실패 이후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철저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취해 왔으나 이제는 이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히려 북-미, 북-일 접촉이 활발해짐으로써 북한을 대화와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진척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일보 1996. 4. 17

한반도 4者회담 제의

韓·美정상 공동발표 南北韓·美·中 항구平和논의

"조건없이 조속 개최하자"

새 평화체제때까지 停戰협정 유지

【서귀포 = 申載旻·張寅鐵 기자】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6일 상오 제주 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대표간의 「4者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이날 제의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해결에 따른다는 이제까지의 원칙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평화체제 논의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4者회담의 성사를 위해 지난 주말께 이미 북한과 중국측에 별도의 채널을 통해 각각 제의사실을 통보했으며 일본과 러시아등 주변국가에도 사전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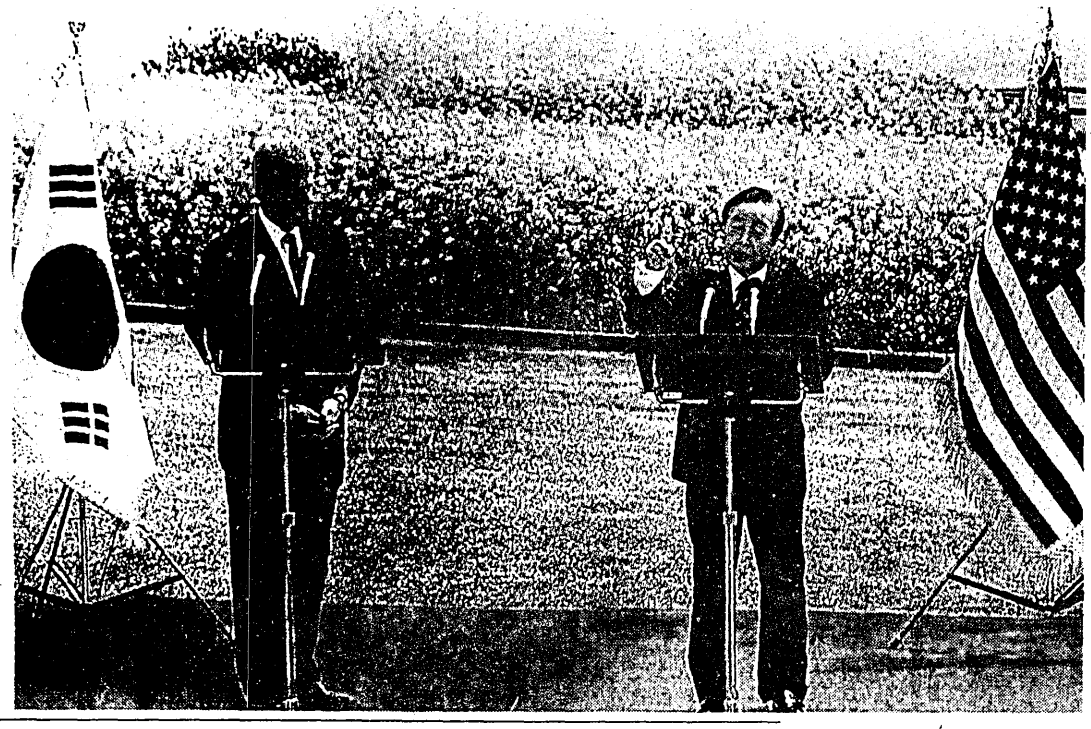
金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뒤 호텔 후원잔디밭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4者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반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제의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적극적인 호응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경계태세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구축은 한국인, 즉 남북한의 책임이고 미국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정전협정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별도의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이 끝난뒤 孔魯明외무장관, 李養鎬국방장관, 워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등이 배석한 가운데 업무오찬을 갖고 美日안보조약, 동북아정세, KEDO문제등 양국간의 기타 관심사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새벽 5시30분께 제주에 도착한 클린턴대통령은 일정을 마치고 하오3시께 다음 목적지인 도쿄(東京)를 향해 출발했다.



◇양국 頂上 야외회견 金泳三대통령이 16일 낮 제주 호텔신라에서 클린턴 美대통령과 韓美정상회담을 마친뒤 호텔 야외회견장에서 공동회견을 갖고 있다. 【서귀포 = 申翔淳기자】

▽ 세계일보 1996. 4. 17

金대통령 冒頭발언 (요지)

클린턴대통령과 나는 최근 판문점사태를 비롯한 한반도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클린턴대통령과 나는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군사활동을 통해 동 협정을 위반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양국정상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韓·美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두 사람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현 정전협정이 계속유지되고 준수돼야 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직접당사자인 南北韓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클린턴대통령과 나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되고 있는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대한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두 사람은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관련국인 美國 中國이 참여하는 「4者회담」을 전제조건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한다는데 합의하고 이에 관한 공동제안을 발표키로 했다. 우리 제의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적극적인 호응을 해줄 것으로기대해 마지 않는다.

클린턴 冒頭발언 (요지)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할 결의가 돼 있다.

미국과 한국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4者 평화회담을 제의한다. 이 회담은 조속히 개시될 것이며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 우리의 제의는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북한측이 이를 신중히 받아들일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 우리는 또 정전협정의 또다른 서명자로서 중국의 참가를 환영한다. 정전협정 위반은 사고나 실수 또는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군은 동맹국인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될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용의가 있다. 평화구축은 한국인, 즉 남북한의 책임이다. 우리는 북한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장래는 한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韓·美의 동반자 관계는 안보적 관심에 기초하고 있으나 우리가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여타의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 조선일보 1996. 4. 17

"北에 줄수있는 최후의 제안"

北도발 대처 安保공조 합의
정전협정 北과 협의없을것
金대통령 클린턴

제주 韓-美정상 일문일답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다음은 그 요지.

▲金대통령=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경계태세와 방위공약을 재천명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증가시키며, 이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화구축은 남·북한 한국인들의 책임이다. 우리는 북한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기자가 클린턴에게) 북한이 대외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가.

▲클린턴 대통령=북한은 다음은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발표문 全文이다.

1. 김영삼 한국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4·16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 증진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2.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고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양국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국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희망을 피력하였다. 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4.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5. 김대통령은 한국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 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6. 이에 따라 양국 대통령은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할것을 제의하였다. 이 회담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7. 양국 대통령은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8.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이와 같은 주도적 제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김대통령은 미국의 계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발코니의 韓-美정상 金泳三대통령(오른쪽)과 클린턴美대통령이 16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韓美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발코니에서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西歸浦=韓永熙기자】

韓-美 공동발표문 〈全文〉

다음은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발표문 全文이다.

1. 김영삼 한국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4·16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 증진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2.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고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양국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국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희망을 피력하였다. 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4.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5. 김대통령은 한국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 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6. 이에 따라 양국 대통령은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할것을 제의하였다. 이 회담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7. 양국 대통령은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8.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이와 같은 주도적 제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김대통령은 미국의 계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경향신문 1996. 4. 17

日선 "회담 환영"

【東京=姜成輔특파원】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는 16일 『韓·美 정상이 제의한 4자회담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의의를 가지는 이니셔티브로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4자회담이 실현돼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양성이 촉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은 이 제의를 지체없이 수락, 대화의 자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中 회담참여 시사
"건설적 역할할것"

【北京=愼榮樹특파원】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沈國放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沈대변인은 이날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제의에 관해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말해 중국이 한반도 4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沈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모든 관계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 새로운 평화체제의 목적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沈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4자회담)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4. 17

4者회담 1차는 長官級으로

權부총리 기자간담 정상회담으로 발전 가능성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6일 4자회담 제의와 관련,『북한으로부터 완전 거부당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의하지는 않았다』며『북한도 평화체제구축을 주장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남북이 주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회담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權부총리는 이날 상오 남북회담사무국과 통일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갖고『북한의 태도에 따라 별도의 남북한 직접회담이나 별도의 제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자회담 레벨과 관련,權부총리는『1차회담은 장관급이 돼야 할 것이고 그이후 회담에서도 정부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장차관급은 돼야 한다』며『정상회담이 최종적인 회담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위한 유인책으로 식량지원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한·미공동발표문에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고 돼있는 것과 연관해 석해도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權부총리는『북·미관계를 북·미가 주도한다는 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간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포기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북·미가 직접 얘기하는 것에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병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具本永기자〉

오늘 3부요인 초청 4者회담 배경 설명 金대통령

金泳三대통령은 17일 아침 청와대에서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는 데 이어 낮에는 黃珞周국회의장·尹錤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오찬모임을 갖고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그의 성사를 위한 각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 1996. 4. 17

"南北협상주도…美中 보증역할"

權부총리,「4者회담제안」배경설명

◇權五琦통일부총리가 16일 오전 통일원 기자실에서 濟州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의된 4자회담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金振平기자〉

權五琦통일부총리는 16일 한미 양국의 4자회담 제안배경을 설명하면서『이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제주 이니셔티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2+2」회담과 4자회담의 차이는 뭔가。

『형식은 4자회담이지만, 내용은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는 「2+2」가 될 것이다。미국과 중국은 도와주고, 협상결과를 보증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북한은 일관되게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는데。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한반도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모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다른 방도가 없다。북한이 냉전을 탈피하고 평화체제로 옮겨가는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한채 「미-북 관계개선 대화」에만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진행되는 미-북 관계개선 대화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미-북 관계 진전과 남북관계개선을 연계한다는 「조화와 병행」원칙은 살아있다。한-미 공조는 어느때보다 잘 이뤄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는 언제 통보했나。

『적절한 채널을 통해 양측에 4자회담안을 전달했다。북한에는 이틀전 인도네시아를 통해 우리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러시아와 일본이 「2+4」 형식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논의는 그후 논의할 문제다。한반도문제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 결론 도출에 유리하다。』

|4자회담이 가동되면 기존 남북대화 채널가동은 포기하나。

『남북의 정부대표가 4자회담에서 얼굴을 맞대면 다른 대화채널이 필요하겠나。하지만 북한측에 4자회담 전이라도 남북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둔 상태다。북한이 호응해온다면 정상회담이든 총리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회담에 응하겠다。』

〈金演光기자〉

|4자회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

『최소한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급이 참석, 의제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후속협상까지 장관급 회담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자회담이 당사자 해결원칙을 토대로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은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천명했다。휴지조각이 돼버린 기본합의서가 4자회담의 토대위에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도발을 계속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평화협상 제의와 정전체제유지는 별개의 문제다。정전협정을 지키기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다。』

"평화체제가는 첫발…北호응 기대"

최소 장관급 참석 의제설정해야"

▽ 문화일보 1996. 4. 16

"北에 印尼통해 통보"

平壤사정어려워 전격제의

柳宗夏안보수석 일문일답

그동안 미국측과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아온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4자 회담 제의와 관련,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한·미 4자 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북한측에 대해 물꼬를 터준다는 성격이 강하다。金泳三대통령은 지난해부터 4자 회담에 대해 깊이 생각해왔다。이번 4자 회담도 모두 한국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金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왔다。그러나 북한 중국등의 호응이 어떨지 모르고 전체적 분위기도 성숙되지 않았기때문에 주저해 왔다。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사정이 어려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더이상 망설이지 않고 한반도 정세의 물꼬를 돌리기로 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등 다른 관련당사국에는 사전통보를 했는가。

▲수일전에 통보했다。4자 회담을 가능한한 쉽게, 그리고 이른 시일내에 개최했으면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북한에 대해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입장을 전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통로를 통해 직접 했다。미국도 독자적 채널을 통해 한것으로 안다。

|북한이나 중국측의 반응은 있었는가。

▲중국측은 이해하겠다 또는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북한측에 대해서도 북한입장을 고려해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제의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러시아등 다른 관련국에도 통보했는가。

▲일본과 러시아 정부에도 통보했다。일본은 즉각 지지입장을 표명했다。러시아는 6자등 다자회담을 제의해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濟州=崔永範기자〉

한국外交 홀로서기 시험대

4자회담 제의 배경-전망

「당사자해결 원칙」 사실상 무너진셈
對坐실현땐 「停戰체제 변화」계기로
北입장 상당히 고려… 美-中입김 커질 우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 제의는 지난 53년 휴전이후 40여년간 계속돼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일대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이후 남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정전(停戰), 즉 전쟁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말 냉전체제의 종식 등 국제정치의 환경변화로 남북한의 전쟁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한 모두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90년대 들어서 북한이 그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대미관계개선을 정책목표 1순위로 잡으면서 정전체제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정전체제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내세웠다.

이에대해 한국정부는 「현정전체제의 유지」를 주장, 팽팽하게 맞섰다. 그런 가운데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검토해 왔다.

정부가 검토한 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정전협정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이른 바 「2+2」방식이 첫번째다. 또 미국만이 보장하는 「2+1」,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자가 보장하는 「2+4」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2」를 지난해 8·15를 계기로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사전에 새나가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제의를 포기했다.

북한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2+2」의 앞쪽 2, 즉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고 이때문에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당사자도 미국과 북한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선(先) 남북한당사자 평화협정체결」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남북한문제의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사실상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지만 일단 4자회담을 연 이상

▽ 한겨레신문 1996. 4. 17

북 거부해도 장기적으론 수용 전망

'4자회담'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정상회담·대북수재지원 재추진할듯
군축 논의 불가피…한미작전권 관심

이상기 기자

이번 한국과 미국에 의한 '4자회담' 제의로 향후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경색국면을 벗어나 유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용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 변화의 폭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그동안 특히 북쪽에 의해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받아들여진 정전체제가 사실상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계진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이 이번 제의를 일단 거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적잖은 유연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제의가 남한 단독이 아닌 미국과의 협의 끝에 '합작'으로 나왔다는 점도 북한이 결국은 4자회담의 틀 속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군축 등의 고단위 정치·군사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물론 중간 단계로 당면한 대북 수재지원과 경협확대 등의 조처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란 얘기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크게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무산된 정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정부당국자들도 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도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4자회담에서는 무엇이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도 (논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비쳤다. 또 정상회담이 내년 대선의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과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로 미루어 이의 성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김정일 비서의 주석직 승계가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권력승계 이전에 권력승계를 조건으로 미리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비통제 문제 역시 향후 남북간 주요 의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군축은 평화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력과 무기체계의 감축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시작전권의 한국군에의 환수 문제 등 한미간 민감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이를 미국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관심사다.

다음으로 대북수재지원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여론을 의식해 중단돼온 대북지원이 총선을 거치면서 남한 내부의 저항요소를 어느 정도 걷어낸데다 향후 이 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5월 춘궁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16일 오전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정부종합청사 통일원 기자실에서 한미 정상의 4자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7

2+2회담 전단계 '북 끌어내기'

'4자회담' 정부 왜 내세웠나

정전협정 무력화기도에 '미국참여 보장' 유인

강태호 기자

이번 '제주선언'의 핵심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제의에 있다. 그 다음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남북한의 합의와 미국·중국이 이를 보증하는 이른바 '2+2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llegible]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하려 했[illegible]데 그것이 '2+2회담'이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제안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은 이 '2+2 회담'에 앞서 4자회담을 앞세웠다는 점이다. 정부쪽 설명에 따르면 이 '4자회담안'은 2+2 회담의 부분적 변형일 뿐이다.

다시말해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을 남북이 논의하며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증하는 '2+2의 형식'을 담보하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고, 정전협정을 대신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평화체제 구축 협상은 남북한의 당사자 회담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2회담'을 추진하긴 했지만 이를 공식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남북 직접당사자 원칙의 수정 내지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남한의 '남북 직접대화 원칙과 정전협정 유지'의 입장,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체결 제의'를 둘러싸고 남북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해왔다. 70년대 말 '3자회담' 제의로 절충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지만 이 남북대화와 북-미 직접협상이라는 양쪽의 자세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해결 원칙의 수정은 대북정책의 뼈대를 뒤흔드는 것으로 비치기 십상이었다.

사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제의를 공허한 선전공세로 가볍게 일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가 이뤄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북-미 협상채널이 상시 가동되는 상황도 그렇지만 정부도 시인하고 있듯이 정전협정 체제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 앞에서 현실적으로 그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2 방식'은 현실의 변화를 인정하고 정전협정 유지 입장을 포기하고 당사자 원칙의 제한적 수정을 통해서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대응한다는 '자구책'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2+2 회담'이 아니고 그 변형인 '4자회담' 구상을 내놓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2+2 회담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자회담이라는 유인책이 없는 한 북-미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을 주장해온 북한을 '2+2 회담'으로 끌어들일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2+2 회담'의 본질은 남북대화가 중심축이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의 주체이며, 나머지 '2'는 이를 보증하는 보조자 역할에 그칠 뿐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2+2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광복 50주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북한이 보인 반응은 격렬한 반대였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당시 정부가 이를 취소한 데는 국내여론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부정적 반응도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북-미 직접협상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형태 다시 말해 미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2+2 회담'의 변형인 '4자회담안'을 낳았다는 것이다.

▽ 한국일보 1996. 4. 17

北의중도 미리타진

美、4者회담案 극비추진 과정

3월부터 美中·韓中·韓美 물밑 연쇄조율

北측은 소극적반대… 中國이 설득 맡기로

빌 클린턴행정부는 韓美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내놓기 앞서 극비리에 한국 중국과 의견조율을 거쳤으며 북한의 의중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전 정지작업은 3월초 劉華秋(류화치)중국 외교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시작됐고 이 결과는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됐다. 이에 孔魯明외무장관이 北京(베이징)을 방문, 錢其琛(첸지천)중국 외교부장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訪美, 韓美간 세부협의를 거쳤다.

이어 내주 중국을 방문할 워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은 내주 헤이그에서 錢외교부장과 만나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중국은 美中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對북한 설득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난달 초부터 계속된 관계국간 여러갈래의 물밑 접촉과정에서 북한의 소극적인 반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對北설득은 美中관계개선의 대가로 중국이 떠맡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은 남북대화를 중시하는 「2(남북한)+4(미일중러)」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4자회담으로 돌아선 것은 러시아의 對北영향력 감소와 일본의 소극적 자세등을 감안한 효율성 문제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자회담 논의의 시발은 美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미국은 당초 金泳三대통령이 총선이후 4자회담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중국이 북한을 끌고 들어온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이 金대통령의 제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껄끄러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미국의 제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鄭炳鎭특파원】

줄 수 있다는 언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韓美-北中간 협의방식이 거론됐고 그 결과 4者회담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당초 金泳三대통령이 총선이후 4자회담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중국이 북한을 끌고 들어온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이 金대통령의 제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껄끄러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미국의 제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西歸浦 = 金昌基·具聖宰 기자】

▽ 조선일보 1996. 4. 17

「4者회담」제의 막후

작년 8·15때 對北제의 발표 검토

안보보좌관 「실무라인」 절충-조율

北에 이틀전 통고하는 「誠意」 보여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美대통령이 16일 濟州정상회담에서 공동제의한 4者회담은 2개월여간 막후교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4者회담 제의가 있기까지 양국 고위실무자간의 끊임없는 접촉과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주요 변수중의 하나인 중국에 대해서도 「다지기외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실적 대안으로 4者회담을 공식 검토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내부검토를 여러차례 했으며 4자회담의 장단점도 논의했었다.

그러나 당시 쌀 지원을 위한 남북 북경접촉, 중국의 입장, 북한 정세등을 고려해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유보시켰다.

잠시 잠자던 이 안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레이크 美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訪韓했을 때인 지난 2월 중순. 당시 柳宗夏 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레이크보좌관은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하는등 공식적인 행사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두사람 사이에 4者회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柳수석은 金대통령 지시에 따라 레이크보좌관과 실무절충을 계속, 4者회담 제의에 대한 기본 윤곽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클린턴대통령 訪韓이 확정됨으로써 4者회담의 공동제의안이 급피치를 올리게 됐다는 후문.

특히 클린턴대통령의 濟州방문이 발표된 뒤 북한은 돌연 정전협정 무력화를 기도하며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등 공세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지난달 전인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4者회담 제의 배경과 내용을 북한에 통보해 성의를 보였다는 것.

정부가 더욱 제의에 앞서 이런 성의를 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이는 이번 제의가 북한측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

대북 간접채널로서 인도네시아가 선택된 것은 북한공관이 나와있어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우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10여년전에도 대북제의를 할 때 인도네시아 채널이 이용됐었다고 말했다.

【西歸浦 = 金昌基·具聖宰 기자】

▽ 세계일보 1996. 4. 17

평화체제 전환싸고 43년攻防

停戰협정에서 4者회담 제의까지

美軍철수 노린 北韓 집요한 공세

韓國「당사자간 원칙」서 방향선회

지난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남북한은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북한은 특히 미군철수 등을 노리고 이 문제에 관한한 늘 공세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한국측은 현 정전협정 체제 고수로 이에 맞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북한은 60년대에는 남북한간 평화협정, 70년대 이후에는 미-북간 평화협정, 84년 이후에는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한 소위 3자회담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어 지난 94년이래 3자회담 대신 미-북간 협정 체결로 요구사항을 단일화했다.

북한의 金日成주석은 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대남 선전공세를 시작했다.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남북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물론이다.

북한은 그러나 74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남북평화협정 주장을 철회하고 최초로 對美 평화협정 체결을 제기했다. 북한은 당시 「先미군철수 後남북평화협정 체결」 대신 「先미-북 평화협정 체결, 後주한미군 철수」로 방향을 선회했다.

북한은 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3자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은 당시 3자회담 제의 선행을 통해 「우리(북한)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수단인 셈이다.

북한은 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대대적인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전개했다. 북한은 특히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94년 4월 28일 북한측 군사정전위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으며 94년 12월 14일 군사정전위로부터 중국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북한은 지난 2월 22일 대미 평화협정의 중간단계로 「잠정협정」 체결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측은 이번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의하기까지 남북한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기 앞서 현 정전협정 체제가 준수돼야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한국측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상태가 창출되며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당사자가 돼 평화협정을 맺어야한다는 논리로 북한의 주장에 맞서왔다가 이번에 4자회담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濟州 = 鞠貞然기자〉

▽ 조선일보 1996. 4. 17

「4者회담」 중국입장

對美·對러관계 사이 "어정쩡"

韓美제의 「형식」에 불만… 다소 부정적

최근 對러 접근… 러 배제 동조어려워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기본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우선 중국은 4자회담의 제의형식이 韓美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부터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2+2」 또는 「2+多者」쪽을 지지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간에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주변국들이 개입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무장지대내의 임부를 폭기한다는 선언과 군사행동을 보인 직후 중국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직접당사자간의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당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질문에 『유관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직접당사자』라고 설명, 「직접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의식하고 있다. 중국은 停戰협정의 서명당사자이지만, 한반도분단사태의 직접당사자였고 전통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경쟁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팔짱끼고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으로서는 남북한이 평화체제구축 논의를 먼저 시작한 다음, 북한측의 초청에 따라 개입하는 절차를 밟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야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배제된 가운데 한국이 초청한 미국을 포함해 4개국이 2+2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의 정확한 반응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北京방문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공개발표되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은 이번 韓美정상의 4자회담 제의 사실을 옐친과의 회담탁자에 올려 깊이있게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韓美정상의 4자회담 제의라는 형식이 회담의 성사가능성을 낮추고 있는데다, 요즘의 나쁜 對美관계때문에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국제정치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러시아가 배제되는 4자회담에 당장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면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데에 중국은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기회있을 때마다 밝혀왔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도 밝혀왔다. 분단된 한반도보다는 통일된 한반도에 영향력을 구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 자연스럽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남북한 직접당사자간의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北京=朴勝俊기자】

▽ 조선일보 1996. 4. 17

對北제의·南北관계 일지

▲70.8.15=朴正熙대통령 8·15선언, 남북간의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표명과 선의의 경쟁 제의

▲72.7.4=남북공동성명 발표

▲73.6.23=朴正熙대통령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할슈타인원칙 포기천명

▲74.1.18=朴正熙대통령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

▲74.8.15=朴正熙대통령 평화통일3대기본원칙 제시,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남북대화 성실진행,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79.7.1=한·미공동성명 「남북한·미국 3당국회의」 제의

▲81.1.12=全斗煥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82.1.22=全斗煥대통령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의

▲87.3.17=남북총리회담 개최 제의

▲88.7.7=盧泰愚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 발표

▲88.10.18=盧泰愚대통령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 건설, 남북정상회담,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제의(유엔총회 본회의 연설)

▲89.9.11=盧泰愚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천명(제147회 정기국회 연설)

▲91.11.8=盧泰愚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92.12.10~12.13=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92.7.19~7.25=북한 金達玹부총리, 崔珏圭부총리 초청으로 서울방문

▲93.5.29=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현안문제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제의

▲93.7.6=金泳三대통령 3단계통일방안과 통일정책 3대기조 천명

▲94.2.25=金泳三대통령 제조업·농업·건설·에너지분야에서 남북경제공동개발용의 표명

▲94.4.15=정부 「4·15조치」발표, 북한 벌목공 망명허용결정,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상호사찰 필요성등 지적

▲94.6.18=金泳三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제의수락

▲94.6.28=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

▲94.8.15=金泳三대통령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 천명

▲95.3.7=金泳三대통령 대북 곡물·원자재 지원용의 표명

▲95.5.15=金泳三대통령 대북 곡물·물자지원용의 재표명

▲96.4.16=한·미정상, 북에 4자회담제의

▽ 조선일보 1996. 4. 17

외교관련 통해 일단 거부

종전입장 되풀이… 中-러 중재여지 남아

경제원조등 노린 「협상용 전략」 일수도

壤平 입장

북한은 한·미 양국이 내놓은 「4자회담」 제안을 일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 孫成弼은 4자회담 제안이 나온지 2시간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의 신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며 4자회담을 일축했다. 이타르타스는 孫대사가 『평화협정체결에 미국과 북한 양자간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의 역할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태국주재 북한대사 李三 등은 이날 4자회담제의에 관해 논평을 요구받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협정체제에 미국과 북한 양자간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간에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주변국들이 개입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三의 발언은 북한당국의 공식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의 발언을 뒤엎고 4자회담에 응해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 동안 「2+2」 방식을 포함한 「多者(다자)안보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들의 논평을 북한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무런 실권도 없는 식민지 꼭두각시인 남조선이 평화협정 체결에 낄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작년 8·15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대북제의로 4자회담을 골자로한 가칭 「한반도안보 구축안」을 마련했으나, 북한이 반대 입장을 보여 불발로 끝나기도 했다. 또 북한은 지난 94년 11월 李鵬 중국총리가 「새로운 평화협정체제구축과정에 관련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조선문제와 관련없는 나라들이 개입하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복잡성만 야기된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서 4자회담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미 양국이 이 제안을 수용하도록 경제원조 등의 「달콤」을 제시한다든가, 4자회담이 미-북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이다. 여기에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나선다면 북한이 거부할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4자회담제안 수용에는 회담에서 소외된 일본과 러시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남북관계 진전과 관계없이 수교협상을 재개해 배상금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회생에 적극 나서는 경우이다. 또 러시아등이 이른바 「2+4」형식의 6자회담을 고집한 경우 북한이 이를 구실로 4자회담수용을 의도적으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金仁杭기자〉

"원칙적찬성" 속 주도권 신경전

韓·美 정상회담 4者회담 각국입장

미국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안" 적극추진
「항구 平和협정」 국익에도 도움인식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그동안 한결같이 「남북한간 직접 대화」와 「당사자 참여 원칙」을 견지해 왔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자 동맹국인 이상 북한이 원하는 바와 같이 냉정한 평화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미국측 입장 표명에는 韓·美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를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계산과 함께 미국이 당사자인 남북한에 앞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마련,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7월 金泳三대통령의 워싱턴방문 이전 韓·美간에 심도 있게 검토된 이 방안을 놓고 현재로선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한반도문제 해결구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은 이 방안과 관련, 중국과 지속적인 협조방안을 모색하면서 사실상 중국측의 묵시적인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東亞太 담당 차관보는 최근 美하원 청문회를 통해 중국이 한국에 의해 제시된 「2+2」 방식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유중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91년 남북한 당사자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4강이 참여하는 6者회담을 거부했듯이 다시 4者회담 제의를 거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미국측 관단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내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남북한간 대화가 재개되면 지역안정은 물론 세계평화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 43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부합된다는 것이다.

〈워싱턴=申相鎭특파원〉

중국

"기존입장 일치" 환영… 美독주는 不願
北韓 정치적고립-자극 방식 반대

韓·美 양국 정상이 제의한 한반도 4자 평화회담에 대해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다만 정전협정 서명국의 하나로서 한반도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번 제주도 제안이 장기적인 평화제안이고 이는 중국의 기본입장과 일치하는 만큼 중국이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중국은 이번 「2+2회담」제안을 中·美관계 개선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新평화체제에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중국은 원치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은 4자 회담에 앞서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 외교부 달국자는 이와 관련, "현재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영구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한반도 인민의 이익에 유리하므로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반도문제의 최종해결은 직접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좌지우지하는데 중국은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韓·美 양국 또는 美·日 양국이 새로운 안보협정 등을 통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국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한국 또는 북한중 어느 한 국가를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는 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유리한 체제 수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데 어떤 협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소외 내지 고립시키거나 자극하는 국제사회 또는 韓·美 양국의 행동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에 韓·美 양국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北京=金星路특파원〉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뒤 내외신기자들이 양국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濟州=兪光善기자〉

러시아

「관련당사국」 제외에 불만
對北 경제접촉 강화 예상

러시아는 클린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 제의를 사전에 예상하고 대응해온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한반도문제 해결 구상으로 남북한과 美·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제의에 앞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를 촉구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비친 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러시아의 이런 제의는 한반도문제 접근에 한계가 있는 러시아로서는 최선의 제안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극동정세 특히 한반도문제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데 상당한 조바심을 가져온게 사실이며, 이번 미국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러시아측의 입장은 부정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의 4자회담 제의는 자신들의 외교입지를 상당히 손상했다는게 러시아의 기본인식이다.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려는 러시아로서는 러·北수송철도 개통등 경제문제를 필두로 한 對北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러시아는 94년 판노프 외무차관 파견등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둘 수 있는 교두보로서 북한 접근에 상당한 집착을 보여왔다. 작년 9월 러·北군사동맹조약의 폐기선언이후 러시아는 對북한 영향력이 극히 감소됐다는 점을 실감하고 이를 대체할 조약체결에 부심해왔다. 韓·러 수교이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인사로는 최고위층인 이그나텐코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한것도 對北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丁勝旭기자〉

일본

한반도 정세 안정기여 기대
향후 「6者회담」 가능성 대비

일본정부는 16일 韓·美 양국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등 4개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2+2)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데 대해 『휴전협정 유지를 골자로 해온 미국의 對한반도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는 이날 담화를 통해 『4자회담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이 촉진돼 현행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영속적인 평화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제안이 클린턴대통령의 재선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침입을 되풀이함에 따라 남북간에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대통령은 이 기회에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반도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 북한측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제안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對北관계개선을 추진중인 일본으로서는 이번 4자회담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추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등 다자간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북한이 어디까지나 對美직접대화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4자회담이 실현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도쿄=田賢一특파원〉

▽ 경향신문 1996. 4. 17

北 주도 - 美 반대 모순

한국주장 「2+2」 象과 형식만 달라
강대국일김 차단·틀러리 경제 과제

「4者회담」의 문제점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2+2」 형식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여전히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 동아일보 1996. 4. 17

北, 서울과 사전협의 주장

회담장소 명칭 등 몇가지 걸림돌

「4者회담 제의」 배경은 무엇일까

북한이 16일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2+2」 형식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 조선일보 1996. 4. 17

北, 거짓 시사

「韓 먼저 지적했다」

「4者회담 제의」 배경은 무엇일까

【서울=연합】 북한이 16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2+2」 형식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한 것은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협의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이 「2+2」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주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주도의 협의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 세계일보 1996. 4. 17

北수라땐 쌀지원등 획기적조치

정부 빠른시일내 실무접촉 공식제의 방침

4國대표 장-차관급… 頂上회담 가능성도 權부총리

【瀋陽=鞠慶然기자】정부는 북한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한 획기적인 대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駐뉴욕 북한대표부등 미-북간 채널과 인도네시아 정부등을 통한 외교경로를 통해 4자회담 개최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 4국 또는 남북한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북한측에 공식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분간 13, 1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간 차관보급 회담을 통해 4자회담 추진등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우방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은 차관보급회담에서 대북 식량 추가지원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방안및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추진방안등을 협의,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미-일 3국은 지난 2월 하와이회담에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2차 차관보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이 춘궁기를 지나 7, 8월쯤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북 식량지원문제등을 재론키로 했다"면서 "이번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제주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별개로 추진키로한 만큼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한다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가로 완화하고 북한과의 수교등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교섭 재개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4. 17

韓美, 北수용유도 단계조치

4者회담 관련 經協확대·제재완화·쌀지원등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4者회담 수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제재완화와 경협확대 등 對北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일 열릴 北·美미사일회담과 미군유해송환협상, 北·美연락사무소협상 등과 병행한 미국의 對北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조치가 가시화할 것은 물론 우리 정부도 조만간 對北경협확대 및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 등을 포함한 전환적 對北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韓·美 양측은 이날 상오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孔魯明외무장관과 朴健雨駐美대사,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제임스 레이니駐韓미대사등이 참석한 고위 외교·안보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 서울신문 1996. 4. 17

러, 한반도문제 8者회담 촉구

南北韓·美·러·日·中·유엔·IAEA 참여

【모스크바=연합】러시아는 15일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함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6개 관련국과 유엔및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알렉산데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은 이날 한반도 상황은 양자간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모든 관련 당사자의 참여 아래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고 전제, 러시아는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최근 남북한간 관계 악화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핵문제를 정전의 유지와 분리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가 북한과 미국간 양자접촉을 통해 처리됐으나 곧 이어 DMZ사태가 야기됐음을 상기시켰다.

▽ 조선일보 1996. 4. 17

북한, 정면 거부

孫成弼대사 "美와 단독협상" 주장

【모스크바=聯】북한은 1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갖자는 한국과 미국의 제의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재촉구했다. 孫成弼 러시아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모스크바 북한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의 新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중재자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孫 대사는 "현재 다른 나라는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역할도 갖고 있지않다"면서 "따라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서명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만 이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泰주재 李三魯도 회견

【방콕=聯】駐태국 북한대사 李三魯도 이날 4자회담 제의에 관한 논평을 요구받고 "정전협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만큼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회담 역시 北美 2자간에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회견에서 그러나 北美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열린다면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문제를 미국측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4. 17

"노동신문 거부시사 北입장표명 아닐것"

통일원밝혀

金京雄통일원대변인은 16일 북한 노동신문이 논평에서 남한은 정전협정 문제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부는 이를 4者회담제의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반대 입장 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4. 18

"南·北간 평화헌장… 北·美간 평화협정"

합의문에 담아 安保理 추인

韓·美, 4者회담 北 受容대책 마련

김용호 전문기자

한·미 양국은 북한에 제의한 「4자회담」에 북한이 호응토록 하기위해 한국전 교전 4개국간 협정을 하나의 최종합의서에 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고위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손성필(孫成弼)주러시아대사를 통해 4자회담 제의가 있은 16일 당일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우리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등을 의식, 거부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중▶남북한간에 평화헌장▶북·미간에 평화협정▶한·중및 미·중간에는 한국전에서의 적대관계를 공식 청산한다는 협정등을 하나의 포괄적인 합의문안에 담고 이 합의문을 유엔안보리가 추인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존 메릴 한국과장을 비롯한 미 국무부의 실무진이 이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밖에도 남북한이 서명주체가 되고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평화관리기구 설치등을 내용으로 한 한반도평화협정등도 검토될수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 제의에 응할 경우 쌀지원 재개등을 포함한 획기적 대북(對北)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럼에도 북한이 군사도발등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를 계속한다면 단호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18

"4자회담 북 회답 없어"

서한전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AFP 연합】 인도네시아 알리 알라타스 외부장관은 17일 "지난 주말 한국, 미국 양국으로부터 4자회담 개최 제의를 북한에 전달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았다"며 지난 14일 이를 북한쪽에 전달했으나 북한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회답이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996. 4. 18

"4者회담 南北이 주체"

金대통령 밝혀

金泳三대통령은 17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민족통일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회담』이라며 『제주정상회담에서 공동제의한 4자회담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무위원과 청와대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빌 클린턴 美대통령과의 회담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4자회담이 미·중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한반도평화문제에 대해 절대로 별도의 협상을 갖지 않겠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이어 黃珞周 국회의장 尹錤대법원장 李壽成총리 등 3부요인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북한이 거부하는 듯한 본도가 나오고 있으나 결국 북한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學淳기자〉

▽ 세계일보 1996. 4. 18

北 한반도 4者회담 동고 딜레마

수용여부 손익계산 분주

수락땐 명분상실·거부는 국제적 부담

수정제의도 검토… 결정엔 시간 걸릴듯

우리 정부의 4자회담 제의를 놓고 북한은 어떻게 컴퓨터자판기를 두드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측이 회답제의를 하면 빠르면 3~4일, 늦어도 1주일이면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하루가 지난 지금 북한은 손익계산을 한다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크게 보아 북한은 4자회답을 놓고 수용과 거부, 수정제의, 무반응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입장이다. 4자회답을 섣불리 수용했다가는 74년이후 22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對美평화협정체결의 기조가 굴절될 것이고, 거부하면 국제적 부담을 떠짊어져야 할 판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상 전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뿌리가 뽑힌 사회주의사상을 「金日成=檀君」 그렇다고 일거에 4자회답을 거부하는 것도 북한으로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북한핵문제 만큼이나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4자회답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비롯, 北·美사일회담, 北·美연락사무소 설치등 관계개선문제, 對서방 경제원조등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쯤은 그들도 잘 알고 있으므로 한순간의 판단미스로 맞출은 「당근」을 몽땅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계산을 할 법하다.

여기에다 북한군부가 최근 일련의 비무장지대(DMZ)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감각이 있는 외교부 등이 나설 여지도 별로 없어 고민이 가중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수정제의를 해야하는데, 늘 그랬듯이 孫成弼주러시아대사 등 외교관들을 앞세워 수용도 거부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변죽」만 울릴 것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91년 「하나의 조선론」을 부르짖다 남한에 이골려 울며겨자먹기로 유엔동시가입을 해야했듯이 버티다 상황에 떠밀려 4자회답에 나설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른다.

〈趙敏皓기자〉

▽ 동아일보 1996. 4. 18

4자회담 北참여 유도

中통한 설득작업 착수

정부

정부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의한 4자회답에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설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국의 江澤民(강택민)국가주석이 4자회답 제의와 관련, 『이해하고 유의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즉각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 및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자회답 제의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4자회답 제의가 북한의 즉각적인 찬성을 기대하고 나온 것이 아닌만큼 4자회답 준비와 관련한 정부 대책반 구성은 북한의 공식반응이 나온후에 시작할 방침이다.

▽ 한국일보 1996. 4. 18

4者회담 차관급대표 추진

정부 초기議題 평화협정 前단계등 설정

정부는 4者회담이 구체화할 경우 차관급을 대표로 통일원과 외무·국방 등 관련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대표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회담 초기 의제로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주체에 관한 입장조율, 평화협정 이전의 경과적 지역 안보조치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회담이 추진될 경우 각국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국방·외교 당국자가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새로운 평화협정의 서명자는 장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4者회담의 관건은 물론 북한측의 반응』이라며 『그러나 우리측은 회담의 가동시기가 언제가 되든 회담의 형식과 일정에 따른 의제 등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의 초기 의제와 관련, 『정부는 4者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측의 초기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제와 일정을 조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4者회담 초기에 한반도 정치문제에 관한 주체문제를 재론하자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무부는 이날 전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4者회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지표명을 유도하라고 지시한뒤 북한측의 태도변화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 북한을 설득해줄 것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張寅鐵기자】

▽ 국민일보 1996. 4. 17

「4者회담」 北과 협의거쳤다

백악관대변인 日·中·러와도 외교채널통해 논의

【워싱턴=연합】한국과 미국은 4자회담 제의에 앞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화해를 유도해낼 수 있는 여러가지 구상에 대해 많은 토의를 가졌으며 이 구상들은 적절한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과도 이미 협의를 거쳤다고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그는 아시아를 순방중인 클린턴대통령의 수행기자들에게 또 이러한 구상들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 특히 러시아 일본 등과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紙는 한·미 양국이 對북한 정책과 관련, 대외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로 인해 미국과의 방위동맹관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 그같은 접근방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18

"北반응따라 후속조치"

4者회담 장기적 관점서 추진

宋통일원 차관

宋榮大통일원차관은 17일 북한의 孫成弼주러시아대사의 4자회담 거부발언과 관련, 북한의 직접적인 공식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宋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孫대사의 16일 기자회견은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4월13일 외교부답화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宋차관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예상반응과 관련, 『국제적 반응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북한반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등 장기적 관점에서 4자회담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趙敏皓기자〉

▽ 한국일보 1996. 4. 18

4者회담 제의는 외교승부수

당사자원칙 양보로 다자간협상 시험대

中國참여유도로 北美관계 견제 의도도

정부가 남북 당사자간 해결의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美·中을 참여시키는 4者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한 외교적 승부수로 볼 수 있다. 美·中등 최근접 이해관련국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우리 외교에 엄청난 부하가 걸릴 것이 분명하고 예기치 않은 복병이 우리 외교력을 시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4者회담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4者회담을 제의한 「제주성명」이 발표된 직후 전재외공관에 제의의 배경과 취지를 주재국에 설명하고 지지표명과 함께 가능한 외교적 협력을 얻어내라고 긴급 훈령했다.

특히 북한이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등 서방 선진국과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국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력의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17일 영국이 유럽연합(EU)국가로서는 최초로 지지성명을 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첫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남북문제를 제한적이나마 국제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외교력의 동원이 어느정도 성과를 낳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에 대해 北·美 단독의 직접협상은 어떤 경우에든 불가능하다는 점 만큼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에 전달됐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으로 한미회담에서 4者회담을 공동제의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당장 끌어들이기 보다는 남북한과 미국의 우선적 협의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이른바 「2+1」방식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79년 한미가 공동성명을 통해 南·北·美 3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79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데다 핵문제 해결을 빌미로 급속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를 견제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남북한 美·中 등 4자구도가 갖는 견제와 균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위해 중국의 참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高泰成기자】

"4者논의 거쳐 南北이 주체로"

정부, 회담의제·형식등 다각적 검토나서

經協·식량지원등과는 별개로 추진 방침

정부는 4者회담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4者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조정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을 4者회담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일단 4者회담의 초기 성격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체문제를 논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측 입장을 조율한 뒤 남북이 주장하는 北·美주체론을 당장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측에 대한 설득요인이 될 수 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4者회담 의제는 반드시 4자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점차 남북이 주체가 되는 「4-2」방식』이라며 『4者회담 초기에 정치적 의제와 경제 등 다각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이전까지 한 시점에 남북한 당사자 차원의 회담으로 반도의 안보를 보장할 경과적 안보조치를 위해 긴장완화 및 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방안마련 등도 초기 회담과 남북경협확대 및 식량지원 등을 논의할 對北협상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4者회담과 여타의 對北협상을 연계할 경우 오히려 4者회담 추진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련의 對北조치는 표면적으로 4者회담의 진척여부와는 관계없이 병렬형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4者회담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4者회담 체제가 가동될 경우 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하고 통일 외무 국방 등의 부처에서 국장급이 참여하는 형식을 내정해놓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수석대표는 통일원이나 외무부에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담 전담기구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張寅鐵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8

정부 '4자회담' 후속조처 준비

정부는 17일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수용할 경우와 거부할 경우, 또는 수정제의할 경우 등에 대비해 후속조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지난 16일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재촉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북한의 수용 또는 거부 등에 대비해 갖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공식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어떤 추가조처도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긴장완화를 이루려는 이번 제의를 북한이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은 자국 이익과 부합하는 이 제의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

▽ 한국일보 1996. 4. 18

韓·美제의 '4자회담' 北, 조만간 거부전망

이타르타스 보도

【모스크바 2일 연합 = 특약】 북한은 조만간 韓·美 양국 정상의 한반도 4者 회담 제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北·美 직접협상을 고수하는 것이 될 것 같다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은 기존입장을 완강히 고수, 제3자의 개입 없는 北·美 직접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996. 4. 18

北·美 평화협정 조건부 수용

정부 4者회담 틀안에서 직접접촉 인정

정부는 17일 북한이 4자회담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4자회담의 틀내에서 北·美 양국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협상을 갖는 문제를 수용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협정에 관한 북·미간 접촉을 완강히 거부해온 정부의 기본방침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자회담의 형식에 융통성을 발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상을 남북당사자만이 하고 사후에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해주는 「2+2방안」을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의 틀을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별도협상을 갖는 것은 절대 반대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제의의 요점은 북한을 4자회담의 틀로 견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면 4자회담의 운영방식은 북한의 의견을 감안,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1차로 4자가 함께 대좌하고 그 다음 남북한이 협상을 가질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북·미 양자가 협상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자회담이 이같이 북한이 참여할 여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對北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大根기자〉

▽ 서울신문 1996. 4. 18

4者회담 北韓수용 설득 주력

정부 1백41國에 협조 요청… 英도 지지 표명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등이 전폭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도 회담성사의 협조를 당부하는등 북한의 설득에 진력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영국측이 한·미대통령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을 환영하고 성공하기 바라며,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영국은 18일 정부 공식성명을 통해 이같은 지지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유럽연합(EU)국가를 중심으로 지지성명이 잇따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외무부는 이날 1백41개 해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4자회담」의 내용을 주재국에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또 지난 11일 북한의 정전협정 파괴행위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4자회담의 제안배경을 설명하고, 안보리 이사국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무부의 鄭泰翼제1차관보는 16일 주한외교단을 외무부로 초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4자회담 제의배경을 설명하고, 북측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李度運기자〉

▽ 조선일보 1996. 4. 18

4者회담 추진관련 對北유화조치 없어

정부당국자 밝혀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 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4자 회담 문제는 기존 대북 정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획기적인 대북 지원·경협조치의 확대·경제제재 완화 등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북한에 의해 취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4자 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 『성사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각각 진행중』이라며 『북한측의 반응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具聖宰기자〉

▽ 한국일보 1996. 4. 18

EU, 4者회담 지지

영국은 17일 유럽연합(EU) 국가중 최초로 4者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외무부가 전했다.

美"北반응 기다리자" 신중

「4者회담」제의 워싱턴 시각

봉쇄된 南北대화에 물꼬 기대

「對北군사채널 확보」의미 부여

"판문점도발 중단…경고메시지 효과"분석도

16일(한국시각 17일) 한반도 4者회담에 대한 美정부 안팎의 반응은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자는 신중한 쪽이다。美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고만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駐러시아 북한대사 손성필이 4자회담에 대해 즉각 거부 반응을 보인데 대해서도 『그 발언을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고 말했다。

美정부의 한 소식통은 『어차피 당장 북한에서 긍정적 신호가 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클린턴 대통령이 「4자회담」을)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대답한 부분을 주목하라고 했다。

美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를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다뤄왔다。

반세기 이상 지켜온 「한반도 당사자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의 회답 요구에 응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1백만 이상 군대가 대치중인 판문점 부근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공세를 태라는 명분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각종 미-북 대화 채널에서 북한측의 미-북간 직접 평화협정 회담이라는 주장에도 맞설 수 있는 틀을 확보한 점에 주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美정부 안팎에서 실제 4者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일단 지금까지의 「정전협정 공세」가 주한미군 철수까지의 상황을 겨냥한 「미-북 평화체제」를 노린 것인만큼 이에 정면배치되는 4자회담을 북한이 선뜻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관계가 여의치 않음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美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金日成 死後 중-북관계가 원만치 않으며, 이는 북한이 회담 여기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한-미 정부가 이번 제의에 충분한 무게를 실었는지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북한측이 이 제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판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고」와 「제의」의 성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美정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 최근 판문점 도발이 중단된 것도 우리의 강력한 경고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워싱턴=朴斗植기자】

"4者회담 성공위해 주한미군 증강해야"

베이커 前美국무

【싱가포르=聯】 제임스 베이커 前 美국무장관은 17일 北韓의 일방적인 행동을 달래려 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말하고 4者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駐韓美軍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커 前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인 정치인 조찬 모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北韓은 무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로 생각되며 무력만을 이해할 뿐이라며 北韓과의 핵합의에 대해서도 『전쟁의 위험을 높이지, 줄이지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多者회담」 국제사례

中東 평화협정 美중재로 이스라엘-이집트 조인

88년 아프간협정 아프간-파키스탄-美-蘇 「1+3」

73년 베트남협정 4개당사자 협정… 12國 확인보장

「한반도 4자회담」은 지역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함께 주변관련국이 참여하는 「多者간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려는 대화방식이다。

다자간 평화보장체제는 참여국의 숫자나 참여국의 지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한-미 양국의 제안은 4개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돼 있으나 실현될 경우 실제 운영은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중이 뒷받침하는 「2+2」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자)로 조인하기도 했다。그러나 미국이 국내 선거일정에 급급해 협정체결을 조급하게 서둘러 관련 당사국인 요르단 시리아 PLO의 참여가 배제됐으며 이집트가 이들을 와주는 일종의 「1+3」형 평화보장안이었다。

88년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은 미국 소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 참여한 평화보장안이었다。이 협정은 미국과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정 불간섭및 불개입을 국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련군 철수를 도모한 일종의 「1+3」형 평화보장안이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주체인 叛軍이 제외된 상태에서 협정이 체결돼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2개 이상의 주변국가가 중재에 나서는 평화보장방안으로는 1차세계대전 이후의 로카르노 조약(25년 10월)이 대표적이다。독일 프랑스 벨기에 3국중 한 나라가 「라인란트 비무장지대」(3국 경계지역)를 침략할 경우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제외한 나머지 1개국가와 영국 이탈리아 등 3개국이 피침략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굳이 따지면 「2+3」인 셈이다。

73년 키신저의 외교적 수완이 발휘된 베트남 평화협정은 유엔이나 다수의 중립국이 保障者(보장자)로 나서는 형태였다。평화협정 조인에는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 4자가 참여했으나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인으로 구성되는 국제감시통제위원회가 구성됐다。

또한 4개 당사자와 소련 폴란드 중국 프랑스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평화협정을 국제적으로 확인-보장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장치가 제도화되지 못해 2년 후 북베트남에 의해 무력통일 되고 말았다。독일통일 과정에서는 동서독과 미-소-영-불 등 전승 4개국이 참여하는 「2+4」회담을 통해 독일통일의 대외적 문제들을 해결했다。

〈金仁杋기자〉

▽ 동아일보 1996. 4. 18

北「손익계산」長考예상

「4자회담」평양의 전략

對南정책·경제實利 놓고 저울질

개방파 관료·軍部 대립 가능성도

주말~내주초 외교부 공식반응 나올듯

韓美 양국이 16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 직후 孫成弼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가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북한이 과연 공식적인 입장을 세웠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孫대사는 모스크바 북한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새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오직 미국만을 상대로 이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孫대사의 발언은 그동안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돼야 하며 한국은 이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孫대사의 발언이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는 볼 수 없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대사관이 지난 15일 북한외교부의 13일자 답화(유엔안보리의장의 대북 성명비난)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던 점으로 볼 때 지난14일 북한에 전달된 4자회담제의를 孫대사가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미관계개선을 염원하는 북한으로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을 일개 대사를 통해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도 孫대사발언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 우리의 제의에 대해 빠르면 3~4일, 늦어도 1주일 내엔 가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당장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유는 4자회담제의가 그만큼 북한으로선 쉽사리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4자회담은 어떤 면에선 미국이 북한의 현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이를 간단히 일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4자회담을 수용하자니 기존의 대남 대외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거부할 경우 잃게 될 실리가 많다는 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 미국이 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물밑에서 모종의 「당근」을 제시하며 외교적 설득작업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북한은 상당기간 4자회담 수용에 따르는 손익을 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외교 경제 관료 등 개방파와 군부 등 강경파간에 상당한 논란이 벌여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공개 채널 등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4자회담이후의 「장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언질을 받지 않는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들은 또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굳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4자회담에 응하지 않고도 대미관계개선을 이룰수 있다는 자신이 설 경우엔 이번 제의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주에 있는 클린턴 미대통령의 일본 러시아 방문 및 미중 외무회담 등 주변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빨라야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쯤 외교부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韓起興〉

▽ 한겨레신문 1996. 4. 18

4자회담 '내용물'이 성패 좌우

아직 원론수준…북 끌어들일 후속조처 필요

강태호 기자

제주에서 한-미 두 나라가 내놓은 4자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일단 북한쪽이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중국이 선뜻 참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에 앞서 태도를 결정할 수 없는 속사정 때문이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은 '이해'한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 제안에 대해 양해는 하지만 확답은 하지 않았다는 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다. 북한의 4자회담 거부가 명확하다면 중국이 취할 자세는 중립적인 것이거나 유보적인 것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래의 2+2 회담 방식에서 4자회담으로 부분적인 양보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북-미 직접협상을 주장해 온 북한이 4자회담을 선뜻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도 제주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의는 당장 북한의 반응을 얻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오늘 당장 좋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이상의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4자회담'도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제의처럼 '제안 내지 구상에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분위기와 다양한 조처들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4자회담의 형식이 더 구체화돼야 할 것이며, 4자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수용여부는 그 형식에 못지 않게 4자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4자'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제시된 '4자회담'은 현재로선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따르면 △아무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하며 내용은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처'도 토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1차회담으로서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언급했으며, 공로명 외무장관이 남북한간의 예비접촉을 절차로 제시했을 뿐이다.

물론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한-미 양국과 북-미간에 이미 상당한 협의가 진행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제의에 앞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화해를 유도해낼 수 있는 여러가지 구상에 대해 한-미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으며, 이들 구상들은 적절한 외교 통로를 통해 북한과도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한의 참여의사 못지 않게 '4자회담 제의의 모호성'이 회담 성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대미 '잠정협정' 체결 제의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의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등 비무장지대의 안전질서와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북한의 대미 직접협상 요구에 담겨있는 이런 현안들을 4자회담의 틀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회담의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 한국일보 1996. 4. 18

"한반도에 희망의 불꽃 피웠다"

세계주요언론 앞다퉈 보도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제안한 4자회담은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마침내 화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을 피우면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이날 제주 韓美정상회담에 관한 해설기사에서 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경제난과 기근, 韓美 양국의 선거정국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내면서 평화구축을 재신도해 불만한 충분한 시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수용여부이며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한다하더라도 협상은 94년 北·美간 핵회담처럼 至難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4자회담 개최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가 준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 = 趙在鏞특파원】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사설에서 클린턴대통령의 4자회담 제의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한 적절한 접근이기는 하나 너무 강하게 밀어 붙이거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서 호응확률 70%… 너무 큰 기대는 말아야"

워싱턴 타임스는 "美정부는 북한이 전쟁이 아닌 對美협상에 계속 매달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클린턴대통령이 한반도 4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단독 입수했다고 밝힌 美국무부 비밀정보보고서 초안 등을 인용, 북한이 미국과 실종 미군, 테러문제 및 미사일 수출 등에 관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외교적 접촉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전쟁을 통해 북한에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양의 로도 다양한 접촉채널을 통해 4자회담 만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활로임을 인식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공개적인 남북한 문제 개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4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駐中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설득하도록 외교적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承哲기자〉

▽ 경향신문 1996. 4. 18

분위기 조성·外交압력 병행

정부「北 끌어내기」어떻게

정부는 현재 대북유인책을 크게 여건조성과 외교적 압력으로 구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자회담제의의 산파역할을 맡았던 柳宗夏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7일 『북한이 당장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과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결국 북한이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위해 직접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孔鍾明외무장관도 예비회담제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孔장관이나 柳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직접적으로 대북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데 당분간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건조성 방법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고 있는 것이 대북쌀제공 논의재개와 경협확대다.

權五琦통일부총리는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쌀 제공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의 틀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이처럼 쌀제공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북한정권에 있어서 식량문제가 절체절명의 아킬레스건으로서 한계상황에 돌입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이미 뉴욕 접촉채널을 통해 북한에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양의 로도 다양한 접촉채널을 통해 4자회담 만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활로임을 인식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공개적인 남북한 문제 개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4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駐中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설득하도록 외교적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承哲기자〉

쌀회담 재개·經協확대 모색

美·中등 통해「수용」설득도

▽ 동아일보 1996. 4. 19

한반도평화유지 中 "건설적역할"

【北京 = 黃義鳳】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바라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沈國放(심국방)외교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과 미국이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해 『북한과 韓美간에 회담의 방식 및 범위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沈대변인은 4자회담과 관련, 북한과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관련 각국간에 회담참가방식과 범위에 관해 아직 진일보한 접촉이 없었다』고 말하고 관련당사국들이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1996. 4. 19

美-北 예비회담요구땐 정부, 수용하지 않기로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과 관련, 미-북 양자간의 예비회담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태국주재 북한대사 李三魯가 일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옵서버 참여를 미-북 예비회담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金演光기자〉

▽ 세계일보 1996. 4. 18

美, 北공식답변 기다려 孫成弼발언 의미 안둬

【도쿄 = 외신AP연합】미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4者회담 제의와 관련,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들이 17일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을 수행하고 일본을 방문중인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우리는 명확한 답변이 모스크바주재 북한외교관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클린턴대통령은 북한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孫成弼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는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이 16일 4者회담을 제안한 직후 『지금 단계에서 제3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며 미국측과의 직접대화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대변인도 孫대사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나는 그것이 공식적인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18

중국 "4자회담 실현위해 노력"

장팅옌 주한대사 회견

중국은 남북한과 중국·미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팅옌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중국대사관에서 〈한겨레신문〉과 가진 단독 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밝히고 "한-미 정상이 밝힌 4자회담 제의는 관련당사국 간에 물밑접촉을 통한 절충이 있었지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공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자회담 실현을 위해서 중국이 종래 취해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장 대사는 정전협정을 평화체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는 당사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서명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해 중국은 북한이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의 협상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찬성치 않는다는 견해를 분명히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보인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의무를 포기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새 평화체제가 수립되기까지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4자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지만 우선 남북 사이의 이견이 좁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우 기자

▽ 경향신문 1996. 4. 19

北 "4者회담 현실성 검토"

외교부대변인 회견 입장정리前 이례적 공식반응 주목

통일원 "거부표현 없어…수용 기대"

북한의 외교부대변인이 18일 韓·美 양국이 제안한 4者회담의 「현실성」을 검토중이라며 4자회담 제의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반응을 나타냈다.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중앙통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평화유지문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토의·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4자회담 제안에 다른 기도가 깔려 있지 않은지, 현실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내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최종적인 입장이 아닌 「검토중」임을 밝힌 것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어 『4자회담의 제안이 정전협정서명국간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데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논평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원의 金京雄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金대변인은 『북한측이 4자회담 제의에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북한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李大根기자>

▽ 한국일보 1996. 4. 19

"南北양자회담 중요 美·中은 보조 역할"

金대통령 강조

金泳三대통령은 18일 金潤煥대표등 신한국당의 주요당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4자회담제의와 관련, 『남북한간의 양자회담이 중요하고 미국과 중국은 보조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클린턴 美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절대로 직접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즉각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신한국당의 孫鶴圭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4자회담에 대한 북한태도와 관련,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 점도라면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있는만큼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또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과거에 야당대표들이 제의했지만 그때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한편 야당대표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20

러, 4者회담 지지표명

옐친, 日총리와회담서 北에 수용설득 共助키로

【도쿄=田賢一특파원】보스니아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 4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19일 저녁) 크렘린궁에서 1시간동안 가진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이 실현될지는 매우 불투명하지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사자간 회담을 수용할 것을 북한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20

정부, 중·러 외교교섭 강화

정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4자회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관련국과의 외교교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외교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

"4자회담 중국지지 기대"

크리스토퍼 미국무

【헤이그=AP 연합】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은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4자회담 제의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19일 밝혔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은 그들의 지원과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 "북 반응 환영"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18일 북한 외교부가 4자회담 제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첫 공식 반응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4. 19

"北, 「4자회담」 득실 저울질 늦어도 내주 수용여부 판명"

통일원 분석

북한이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인가. 韓·美정상이 지난 16일 4者회담을 제의한지 사흘째, 14일 북한에 사전통보한지 닷새째인 18일까지 북한은 가타부타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4자회담의 현실성을 검토중』이라고 이례적으로 내부사정을 전하고 이에 앞서 17일 李三魯주태국북한대사가 4자회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李대사는 『4자회담은 잘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면서도 『평화협정은 실질적 당사자인 北·美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불분명한 태도를 견지했다. 북한이 이같이 공식거부는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4자회담 제의가 고민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여기고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발언들은 孫成弼주러시아대사가 16일 4자회담 제의 2시간만에 『북·미외의 제3자개입은 불필요하다』며 4자회담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는 다소 맥락이 다르다. 북한이 일단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보인다. 따라서 孫·李대사의 잇단 발언은 내부검토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려는 여론탐색용 애드벌룬일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북한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빠르면 회담제의 이후 3~4일(19~20일), 늦으면 7일(23일) 전후에 북한의 공식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게 통일원의 전망이다. 그러나 10일(26일)정도 지나도 반응이 없다면 북한이 「무시정책」을 선택,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발표창구는 전례에 비춰 외교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밖에 한반도평화문제라는 점을 고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나설 수도 있고 최근 한반도긴장 조성에 앞장선 金光鎭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李大根기자>

北외교부 회견 내용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반도의 평화절차 시작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더이상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측이 왜 갑자기 「4자회담」을 제안했는지 분명히 알수 없다.

한반도는 현저하게 전쟁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정전협정은 시급히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

이같은 현실에 기인해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안해왔다.

우리는 아직 4자회담 제안이 정전협정 서명국간 진실한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과 한국은 이미 불가침, 화해, 협력에 합의했으며 합의문내용도 전세계에 발표됐었다.

중요한 것은 합의내용이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북대화가 남한당국에 의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4자회담 제안」이 이 문제와 관련 있는지 여부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현재 그 제안이 또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검토중에 있다.

현 단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논평할 게 없다.

▽ 세계일보 1996. 4. 19

"실질논의 당사국은 南北韓"

한반도 4者會談 어떻게 추진되나

회담성사보다 실무접촉에 신경전

北 "평화협정은 美와 협의" 공세 예상

韓-美 양국이 제의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에 대해 북한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간에는 물밑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駐뉴욕 유엔대표부 등을 통해 4자회담이 공식 제의되기 2개월여 전부터 이 문제를 사전 협의해 왔으며 20일께 베를린에서 개최될 미북 미사일회담에서도 이 문제를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4자회담의 당사국들은 현재 이 회담의 성사 여부를 떠나 이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어떻게 해야한는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될 것이므로 남북한이 4자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중국과 북한에 제의한 것 이외에 회담의 내용, 형식, 회의개최장소 등 밑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관련국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 하나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처음에 한자리에 모이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선는 미-중이 빠지고 남북한만 협상 테이블에 남아야되는 만큼 4자회담은 결국 「4-2」형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4자회담 형식 및 남북한 실무접촉 구상에 대해 북한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李三魯駐태국대사는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회견을 통해 4자회담과 관련해 『평화협정은 미국과 협의할 문제』라며 『한국을 옵서버로 참여시키는 문제를 미국과 예비회담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8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4자회담 제의를 검토중』이라고 처음으로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미국측의 제의가 또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韓-美양국이 제의한 4자회담을 굳이 미국의 제의로 해석한 점이 눈에 띈다』면서 『북한은 4자회담을 수용하더라도 이를 위한 예비회담 또는 실무접촉에 미-북이 참여하고 결국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도 미-북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께부터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인 미-북 미사일회담은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타진한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의 아인홀른副차관보와 북한 외교부의 李형철미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對美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기할 경우 미국측은 이에맞서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것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미 양국은 당초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만을 논의키로 사전에 합의했으나 4자회담을 공식 제의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공식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4자회담의 당사국들은 현재 이 회담의 성사 여부를 떠나 이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어떻게 해야한는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될 것이므로 남북한이 4자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중국과 북한에 제의한 것 이외에 회담의 내용, 형식, 회의개최장소 등 밑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관련국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 하나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 북한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북한은 그동안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1996. 4. 20

北 4者회담 수락할것

日외무성 발표

【東京=鋼鎔】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된 4자회담을 결국은 수락할 것이라고 日외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19일 말했다。

이 관리는 남-북한과 미

▽ 조선일보 1996. 4. 19

北 「4자회담 검토」 발표안팎

일단 긍정반응…「수용」까진 거리

"韓-美 확고한 자세따라 입장선회" 추측

국제압력 모면-시간벌기용 수단일수도

"클린턴이 제안" 云云…의도적 한국 배제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18일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의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의 공식반응으로서 일단 긍정적인 조짐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북한이 우리의 각종 대북제의에 대해 역제안이나 可否답변 등 최종결정이 아니라 「검토중」이라는 식의 중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북한이 자신의 고민을 중간발표 형식을 빌려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그만큼 4자회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징표』라면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발언내용에 대미비난을 일체 삼간채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북한이 이처럼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배경은 명확지 않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4자회담이 ▲한-미양국이 대통령의 공동제안이라는 형식으로 무게를 실었으며 ▲대북제의를 미리 귀띔해 주는 등 한국측이 성의를 보였고 ▲한-미정상이 이번 제안에서 최종제안이라며 확고한 자세를 보인 점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긍정적 반응을 보이게 한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 4자회담을 설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성의를 보이겠다는 자세로도 보여진다。

또한 손의계산에 따르더라도 북한이 4자회담 자체를 걷어 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평가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조-미간 평화협정에 미련을 드러낸 만큼 어떤 형태든 수정제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으로 4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한 수용의사 표시는 아니다。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이거나 최종거부로 가는 중간단계일 수도 있다。

평화협정이 미-북간에 토의-결정할 문제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점이나 4자회담을 『클린턴 대통령이 16일 제안한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한국정부를 배제시킨 사실등도 미심쩍은 구석이다。 이날 李三魯 태국주재 북한대사가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회견에서 『평화협정에 한국을 옵서버로 참가시키는 문제를 미국과 예비회담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로 북한이 4자회담을 미국의 제의로 규정한 것은 수용 또는 수정제의를 위한 명분축적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북한의 이날 반응이 내부적 이견으로 인해 아직 4자회담 수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중간반응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확실히 천명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金仁杭기자〉

▽ 조선일보 1996. 4. 20

北수정제의 도대체 무엇인가

「남북고위급회담」 성명 분석

빠르면 내주중 최종답신 예상

美와 사전 개별접촉 의도등 주시

북한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남북고위급회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4자회담 개최 여부는 이제 미국의 최종 답신에 달려 있게 되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4자회담 제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요구한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를 4자회담 의제와 동시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미국이 요구한 사항을 북한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최종 답신에 대한 북한의 사전 개별접촉 의도를 주시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성명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주중 최종답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이 이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사전 개별접촉 의도를 밝힌 것은

▽ 조선일보 1996. 4. 21

江澤民 "4者회담 지지" 친서

金대통령에 외교경로 통해 답신

中、北무력시위 강력 경고

중국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이 최근 金泳三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韓美정상이 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 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江국가주석의 친서는 4자 회담 지지를 요청한 金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형식으로 江 주석의 친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는고 정부 당국자가 20일 밝혔다.

江주석은 이 친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4자 회담에 대한 江국가주석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북한의 입장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중국정부는 江주석의 친서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이같은 입장을 구두로 전달하면서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할 경우 중국도 동참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중국은 이에앞서 朱창춘 駐中북한대사에게 4자 회담을 지지한다는 중국측 입장을 전하고 『북한이 남북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정부는 또 朱대사에게 『최근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에대해 『중국의 이런 입장 전달은 이례적인 것이며, 대북 역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은 이런 중국측 태도로 4자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측의 이같은 촉구에 대해 『알았다』며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具聖宰기자〉

▽ 중앙일보 1996. 4. 21

美국무부 官吏 극비 訪北

韓美정상회담 당일 4者회담·경수로등 현안 협의

칼린 정보조사국 부과장등 2명

안희창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6일 미국무부의 관계자가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 4자회담을 비롯한 북·미 관계 전반에 걸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로버트 칼린 정보조사국 부과장 등 미국무부 관리 두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지난 16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전하고 『이들 일행은 4자회담·미사일·생화학무기·경수로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북한측과 긴밀한 협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정부가 한국과 정상회담이 진행중인 당일 관리를 북한에 보낸 것은 유례 없는 일로서 향후 한·미, 북·미 관계의 추이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외교부대변인이 지난 18일 「4자회담 제의에 관해 미국의 의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바로 칼린 일행과 협의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칼린부과장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5일 사이에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 정전협정 전환문제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경향신문 1996. 4. 21

對北정책 조율

정부 어제 안보조정회의

정부는 20일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權五琦통일부총리주재로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열고 4자회담제의에 따른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자회담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적극적으로 미국 중국 등을 통해 북한의 수용을 설득하는 한편 경협확대등 여건조성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접촉은 사전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따라 진행되어야한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관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權부총리를 비롯, 孔魯明외무·李養鎬국방장관 權寧海안기부장 金光一대통령비서실장 柳宗夏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 〈李承哲기자〉

▽ 서울신문 1996. 4. 22

"北 4者회담 수정제의 不容"

정부, 北 움직임에 제동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

정부는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수정제의를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1일 『최근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할 때, ▲4자회담을 수용하되, 예비접촉을 북·미간에 하자고 요청하거나 ▲북·미간의 회담에 한국과 중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수정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4자회담의 기본적인 원칙에 배치되는 어떠한 수정제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4자회담의 기본원칙은 남북 당사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관련국이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對話통로찾기 '물밑 잰걸음'

「4者회담」제의 1週…한반도氣流

北美관계

多채널 가동…관계改善 가속화

美、韓國과 水位조절등 "신경전"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지 1주일이 지났다。4자회담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유물인 휴전체제를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 제의로 평가되고 있다。이 제의를 계기로 한반도주변정세는 새질서를 이루기 위한 소용돌이 상태로 들어갔다。미국과 북한은 미사일회담、유해송환협상、정부 인사들의 상호방문등 多채널 동시접촉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정부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 주변강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4·11총선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접촉은 급속히 활기를 띠고 있다。미사일회담 유해송환협상등 공식회담은 물론 비공식 채널도 여러갈래로 가동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제주도 韓·美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 「북·미관계는 분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對北햇볕 제약요인들이 상당히 제거되었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北·美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軟着陸(soft landing)」시키는 것을 한반도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왔다。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지금까지 남북한 양쪽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은 南·北·美가 현안을 풀어가는 순서에서부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남북대화가 북·미관계 진전에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돼야 한다는 이른바 「조화와 병행」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그러나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분리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은 남북대화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제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로버트 칼린 부과장등 북한측과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관리의 평양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칼린 부과장은 지난 2월27일~3월5일 사이에도 美스탠퍼드대 국제안보군축연구소 대표단과 함께 訪北、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미리 떠봤다。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칼린 부과장이 평양에서 북한외교부 관계자들과 주로 논의한 안은 南·北·美가 한자리에 모이는 3자회담 형태였다는 것。미국은 이것이 「北·美+南」이라는 북한측 주장과 「南·北+美」라는 한국측 요구를 형식적으로는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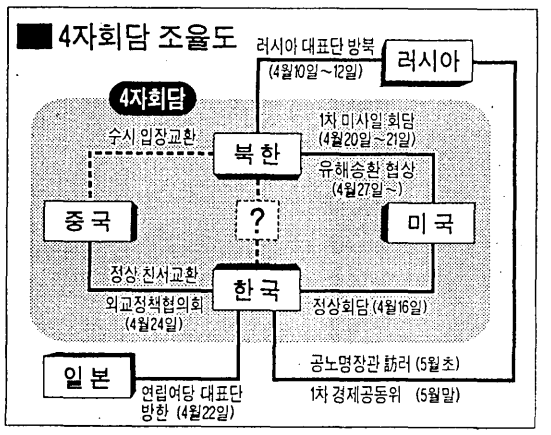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안이 기존의 북한측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래서 한·미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틀은 「4자회담」으로 결론이 났다。

미국은 북한측에 4자회담 촉구를 포함、여러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정부에는 평화문제를 위한 북한과의 단독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현안이 복잡하게 뒤엉킨 상황에서 평화문제와 북·미간의 쌍무적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전반적 문제들이 모두 막후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이전까지 북·미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입장에 있다。따라서 4자회담 성사와 북·미관계 개선을 향한 미국의 발걸음에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秉璨기자>

베를린의 北대표 北·美 미사일회담 북한측 대표인 李혁철외교부 미주국장(가운데)이 20일 베를린의 美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베를린=연합>



中國입장

공식반응 유보속 '당사자해결' 강조

「4자회담」에 대해 중국은 아직 눈에 띌 만큼 진전된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中國은 韓半島 평화와 안정유지에 계속 긍정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江澤民중국주석은 4자회담과 관련、최근 金泳三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친서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9일 錢其琛외교부장은 헤이그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도움을 주기 이전에 남북한이 직접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기존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재강조했으며 沈國放외교부대변인도 이런 맥락의 논평을 했다。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우선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기 이전에 중국이 먼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낼 경우 이는 韓·美양국의 입장을 옹호해 북한을 몰아붙이는 결과가 되며 이는 자칫 북한의 반발을 초래、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한반도에 불안이 초래될 경우 한창 가속도가 붙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이다。또 설불리 韓·美양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결국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이는 南北韓문제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을 가능한한 배제하려는 중국의 이해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정부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 『회담성사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표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崔永範기자>

日·러입장

韓國지원 표명 적극 참여 모색

한반도 주변강대국이면서 4자회담 참여국에서 일단 제외된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新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따라서 러시아가 빠진 4자회담 자체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이해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도 돌입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비탈리 이그나텐코 부총리가 이끄는 러시아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방문、북한과의 관계복원을 위해 정치협상을 벌였음이 확인됐다。이 기간중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한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서두르면서 한국과도 모종의 협상을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孔魯明외무장관이 5월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5월말에는 그동안 여러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던 제1차 한·러 경제공동위가 서울 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즉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한국에 대해서는 4자회담과는 다른 형태의 국제회의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는 달리 4자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지난 16일 4자회담제의 직후 하시모토총리는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미·일 신안보선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묘한 입장을 고려、당분간 한국정부를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경우 일본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립여당 대표단은 한국 방문 뒤 북한방문도 추진하는 등 4자회담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李炅式기자>

▽ 동아일보 1996. 4. 23

北-美「4者회담」비밀접촉

韓美제의후 뉴욕서 첫 회동

北 유엔주재공사가 제안
美의도-배경등 탐색한듯

한국과 미국이 지난 16일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4자회담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간의 첫 비밀접촉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비밀접촉에는 북한측에서 韓성렬유엔주재공사가, 미국측에서 리처드 크리스텐슨 국무부 한국과부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 접촉은 북한의 韓공사가 지난 18일 미국무부 데이비드 브랑운 한국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4자회담의 제의배경과 궁금한 사항을 묻기 위해 국무부 관계자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의 접촉제의는 지난 18일 북한외교부대변인이 『4자회담 제의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뉴욕 비밀접촉은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보다 깊숙이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비밀접촉에서 북한측은 수락여부의 공식표명에 앞서 4자회담에 대한 그들의 기본입장을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비밀접촉을 4자회담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의 성격으로는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4자회담 예비접촉은 북한과 미국이 아닌 남북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미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실적으로 뉴욕주재 유엔대표부를 통한 미-북간의 대화채널이 있는 만큼 북한이 뉴욕채널을 통해 4자회담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보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텐슨 부과장은 미 국무부내의 한국통으로 한국어에 능통하며 차기 주한미국대사관 공사로 내정돼 있다.

▽ 조선일보 1996. 4. 23

4者회담 제의관련 2주간 PC공청회

통일원은 韓美양국의 최근 대북4者회담제의와 관련, 다음달 6일부터 2주일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주제로 컴퓨터(PC)통신을 통해 통일문제 「電子(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宋義達기자〉

▽ 동아일보 1996. 4. 24

中 "南北문제 당사자 해결"

외교부대변인 회견

【北京聯合】중국은 23일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4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음을 시사했다.

沈國放(심국방)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당사자들 협의를 통해 상호 이견 해소를 추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주권국가(남북한)가 그들 나름의 상황에 의거,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1996. 4. 23

北·美접근 가속에 고민하는 政府

한반도문제와 분리원칙 모호 혼선
一喜一悲보다 장기적 대응론 제기

김성진 기자

제주정상회담 이후 북·미접근을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북한이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벌써부터 「9월중 연락사무소 설치」등이 운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정된 것이긴 하지만 베를린에서 북·미간 미사일협상 1차회담을 열었으며 이달말께 뉴욕에서 제2차 유해송환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베를린 미사일회담에서는 예견된대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으나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후속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측 회담관계자는 『협상을 계속하면서 회담방식문제를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레벨이나 채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북·미간 고위군사채널 구축의 호기로 간주하고 있는 유해송환협상에서의 미측 대응태도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클린턴 정부입장에서는 선거의 핫이슈인 인도적 차원의 유해송환협상에 가시적 성과를 얻기위해 유화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이와 함께 4자회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미간 고위급회담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같이 급진전되고 있는 북·미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하루전인 15일 밝힌 대북 3원칙이 현실을 수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미대화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해석상의 혼란을 낳았다. 정부는 그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통해 기존의 조화·병행원칙이 살아있음을 강조했지만 대북정책의 무정견을 호도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서 공동제의된 4자회담에 대해서도 당사자원칙이 일부 수정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4자회담이 사실상 2+2 방식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보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관리가 4자회담 제의 당일 평양에 들어간 사실은 극구 부인하는등 당장의 비판을 면키위해 부심하는 중이다.

외교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옹색한 처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제에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등에서 드러난 대로 북·미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 북·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입안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 세계일보 1996. 4. 23

韓-美-日 對北유화책 강구

내달 3國 濟州회담서 구체안 확정

4者회담수용 유도 분위기조성

경협확대-美의 경제제재 완화

中에 영향력행사 공동요청 방침

韓-美-日 3국은 북한이 한반도 4자회담에 응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남북경협 확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 北-日 수교교섭 재개등 적극적인 對北유화책을 강구키로 하고 내달 13, 1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차관보급 회담에서 이를 확정, 발표키로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다고 보고 중국측에 대한 설득작업을 공동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검토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등 한국 우방국의 대북정책 전환및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라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인 대북정책 전환방안을 공동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한-미-일 3국 차관보급 회의에서 3국이 북한측에 제공할 수 있는 유화책을 집중 논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라며 『미국측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완화 △여행자 소지금액 상한 증액 △미국 선박의 북한 입항 △미-북간 경제거래 대금의 직접결제 등 구체적인 추가완화방안을 마련,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미-북 제네바 핵합의 사항중 핵동결분야등 남북대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게 미국의 판단』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를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변화로 간주,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鞠箕然기자〉

▽ 서울신문 1996. 4. 23

외교소식통 밝혀

"北, 4者회담 긍정평가

미사일회담 北대표 실현성 있어… 곧 입장 발표"

북한은 지난 20, 21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국과의 미사일 회담에서 한미가 공동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베를린 미사일 회담의 북한측 대표로 참석한 이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은 4자회담이 실현성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수용여부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곧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서울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이형철 국장은 또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에 따르게 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보상조치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 회담이 끝난뒤 외교경로를 통해 이형철 국장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4자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오는 9월까지는 4자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李度運기자〉

▽ 세계일보 1996. 4. 23

"美-北개선 남북대화 연계

한반도문제와 별도추진 사실무근"

美 고위소식통

【워싱턴=申相一특파원】남북대화와 美-북한 관계개선이 상호 「조화와 병행」을 이루며 추진돼야 한다는 韓-美간 對北공조상의 기본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美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와 美-북한간 대화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국은 이른바 「2+2」로 알려진 4者회담 제안과 상관없이 미사일협상, 유해송환문제등 이미 추진해온 사항들에 대해선 계속 북한과 접촉을 가질 방침이나, 이것이 남북문제와 美-북한 관계개선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4者협상 제안은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한반도평화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4. 24

北 "美속뜻 뭐냐" 長考

「4者회담」 平壤측반응 분석

"필요없다→검토여지→따져보는중"… 거부는 안해

강온파 조율등 내부정리 시일걸릴듯

수용해도 南韓배제전략 고수 가능성

韓美양국이 지난 16일 제주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지 1주일이 됐으나 북한은 아직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4자회담제의에 대해 북한이 이처럼 장고(長考)를 거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은 그만큼 4자회담의 득실을 계산하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직간접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모두 네차례。

孫成弼주러시아북한대사는 지난 16일 4자회담이 제의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새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李三魯주태국북한대사는 다음달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회견을 자청, 北美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4자회담 제의는 면밀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미국측의 제안에 모종의 다른 기도가 깔려 있지 않은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논평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학술 세미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泳南대외경제위원장도 지난 21일 북한이 4자회담제의를 검토중이라는 외교부 발표를 되풀이했다。

이같은 일련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는 북한이 4자회담 대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란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이번 제의에 대해선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밝힌 외교부대변인 논평의 경우만 해도 『클린턴 미대통령이 제안한 4자회담은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제안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을뿐 4자회담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때문에 정부는 현단계에서 북한의 반응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결국 이번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저돌질」이 반드시 4자회담 수용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4자회담 제의후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한편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유엔주재 대표부 등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4자회담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타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물론 미국은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선언한 4자회담의 취지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이나 변형된 형태의 4자회담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배제」라는 그들의 원칙에 따라 4자회담을 수용하더라도 한국을 실질적인 논의 구조에서 어떻게든 제외시키려는 책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4자회담 수용 여부는 북한의 입장에선 체제 보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양측의 관계개선과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뒤 북한 내부 강온파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신중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따라서 이번 제의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이 나오기 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정부 예상이다。〈韓起興〉

4자회담제의에 대한 북한측 반응

일자	발언자	요지
4.16	孫成弼주러시아대사	· 한반도의 새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전혀 없다 · 오직 미국만을 상대로 이 문제를 협의할 용의
4.17	李三魯주태국대사	·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남한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 · 4자회담제의는 면밀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4.18	외교부성명	· 한반도 평화보장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토의결정할 문제 · 4자회담 제의에 다른 기도가 깔려있지 않은지 따져보고 있는 중
4.21	金正宇대외경제위원장	· 4자회담 제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중

▽ 서울신문 1996. 4. 24

"한반도문제 당사자해결 우선"

정부 4者회담 美·北예비접촉 不容

정부는 4자회담 성사보다도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고위당국자가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4자회담 공동제안이후 세차례의 비공식 통일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원칙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북·미간의 예비접촉이나 실무협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4자회담의 성사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북·미 예비접촉의 불가)라는 두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라면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4자회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당국이 만나 협의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라면서 『4자회담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예비접촉이나 실무접촉 등 사전협의가 이뤄지면 북한은 4자회담을 하겠다는 구실로 미국과의 접촉만 계속 고집할 것』이라고 말했다。〈李度運기자〉

▽ 세계일보 1996. 4. 24

美-北 상설대화채널 가동

지난2월부터 「4者회담」 접촉

정부, 美에 濟州합의 위배항의
韓-美 예비회담싸고 갈등조짐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상설 대화 채널을 이미 본격 가동, 이 회담의 개최 방안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한반도 4자회담 개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한 시점과 동시에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駐뉴욕 유엔대표부를 창구로 매일같이 전화나 팩스 교환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4자회담 개최 방안등 에 관해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지난 16일 한-미 제주정상회담을 통해 4자회담을 북한측에 공식 제의하기 앞서 뉴욕 채널을 통해 이를 북측에 통보했으며 19일 미-북 양측 정부당국자들이 직접 회동을 갖고 4자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은 美국무부의 토마스 허바드副차관보와 북한 외교부의 金桂寬부부장간 서신 및 팩스 교환에 의한 대화 방식과 美국무부의 제프리 골드스타인 북한담당관 또는 리처드 크리스텐센 한국과 副과장과 북한 대표부의 韓성렬공사참사관이 뉴욕에서 직접 회동하는 방식으로 미-북간 상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4자회담의 의제, 장소, 회의 진행 수순 등 예비적인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미-북 접촉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미국측에 전달해 놓고있다』고 말해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의 예비접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孔魯明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당사자는 남북한인 만큼 4자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또는 실무회담에는 남북한만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魏賢然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24

한-미 '대북 접근' 미묘한 신경전

4자회담 관련 북-미 뉴욕접촉 파장

고위대화 전단계 여부·남 따돌리기 경계 한
"한국이 정보 흘리는것 아니냐" 불만 표시 미

강태호 기자

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제의 형식으로 제시된 4자회담과 관련한 북-미간의 '막후접촉'에 대해 남한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을 둘러싸고 한-미가 미묘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이른바 '접촉'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와 미 국무부간의 접촉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해 왔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접촉을 가진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밀·막후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언론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 일각에 이 '일상적인 접촉들'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들은 이 뉴욕접촉을 4자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간의 예비접촉이거나 더 고위급 채널의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전단계일 수 있다고 경계한다.

실제로 국내 언론은 '얼굴 없는 당국자'의 입을 통해 미 국무부의 허바드 부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간에 이뤄진 서신 교환 및 지난 19일 4자회담 제의 뒤에 북-미가 뉴욕에서 가진 '비밀접촉'을 잇따라 공개했다. 물론 정부의 공식해명은 이들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쪽에서 보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못마땅할 수 밖에 없다. 외교 관측통들은 19일 있었던 한성렬 북한 유엔대표부 공사와 리처드 크리스텐슨 국무부 부과장 사이에 이뤄진 뉴욕접촉에 대한 보도의 경우 남쪽 정부가 어떤 의도에 따라 흘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속속들이 접촉과정과 협의 내용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허바드-김계관의 서신 교환도 마찬가지다.

허바드 부차관보가 지난 1월 베를린 미사일협상을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으로서 '극비사항'에 속한다. 미국이 보도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쪽은 북-미 접촉에 대한 보도들이 미국의 '남한 따돌리기'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쪽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윈스턴 로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미 관계개선과 남북대화 재개 사이에서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북-미 접촉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런 불협화음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대미 접근에 적극적인 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미 알려진 바처럼 이번 4자회담 구상은 미국쪽에서 제기됐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북-미 직접협상을 주장하는 북쪽을 4자회담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북당사자 원칙을 고수하는 남한을 설득해 4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했었다. 남한쪽이 제주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북-미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시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한-미간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 "남북대화가 안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이 문제는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남한이 북-미 접촉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론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1996. 4. 24

韓·美「對北정책」또 마찰

「濟州회담 합의문」해석에 異見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의한 지 열흘도 안돼 한·미간에 대북정책문제를 두고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미국이 베를린회담 등 최근에 열린 일련의 대북접촉에서 4자회담 개최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대북접근을 가속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달한 우려의 핵심은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4자회담이 남북한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2+2회담으로 예비회담은 남북한간에 열려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지난 21일 KBS와 가진 회견에서 『의제·시기·장소·수준 등을 논의할 4자회담 예비접촉은 남북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이 점을 분명히했다.

이밖에 미국이 4자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는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정부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국의 반응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미가 양국 정상회담 합의문에 엇크도 마르기 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의문에서 한·미가 어디까지나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어야지 미국이 전면에 나서면 결국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체결 공세에 말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은 4자회담의 기본 취지에 입각해 4자회담을 관철시켜놓고도 합의문에서 당사자원칙을 인정, 발목이 잡힌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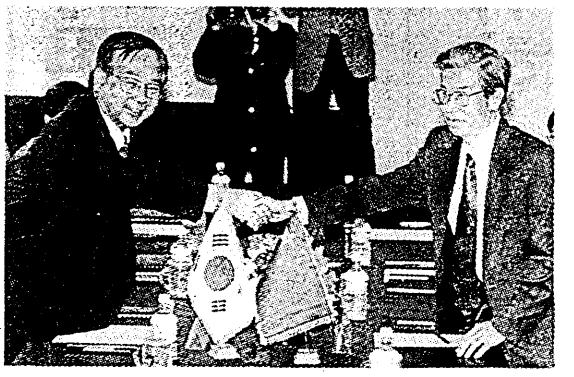
또 이번 4자회담 제의 자체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입장차이는 이미 4자회담이 제의됐을 때부터 예고되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2회담에서 사실상 당사자원칙을 한발짝 양보, 4자회담으로 입장을 선회해놓고도 4자회담을 「실질적인 2+2회담」 또는 「4-2회담」 등으로 강변하는 등 당사자 원칙에 집착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李承哲기자〉

▽ 세계일보 1996. 4. 25

韓·中「4者회담」협의 안팎



◇趙源—외무부외교정책실장(왼쪽)과 중국의 鄭錦炯외교부정책실장이 24일 외무부에서 열린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 4자회담 성사를 위해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24일 외무부에서 열린 양국 차관보급 회담인 한중 정책기획협의회는 4자회담 제의 이후 양국 정부간의 첫 공식 정책조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측은 이 회의를 통해 『4자회담에 대한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중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해왔다. 이는 중국 특유의 남북한 등거리 노선에 다름아니다.

中, 철저한 南北등거리외교

北韓참여 전제 지원의사 표명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엔 동조

중국은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제의한 4자회담에 참여할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전제로한 지원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이에 불참하겠다고 나서면 중국도 어쩔수 없다는 복선이 깔려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가능한한 북한이 여기에 참여토록 설득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중국은 그러나 4자회담이 일과성이 아닌 장기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일단 북한의 태도변화등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임을 비쳤다.

한·중 양국은 4자회담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정부는 비록 한·미 양국의 공동제안 형식으로 4자회담을 제의와 관련,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안정적 대화채널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합의와 주도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趙실장은 말했다.

한편 중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일 건강 문제와 관련, 『공개석상 등장, 현지 지도, 군지도부 인사 단행등으로 미뤄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具聖宰기자〉

▽ 조선일보 1996. 4. 25

"중국, 4者회담 적극협조"

韓-中정책기획協 南北韓 안정적 대화채널 협조

중국은 24일 외무부에서 열린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에서 4자회담 성사에 필요한 한·미·중 3국의 협력과 대북접촉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혔다고 우리측 대표인 趙源 외무부 외교정책실장이 밝혔다.

중국측 대표인 정진지웅(鄭錦炯)외교부 정책연구실 주임은 이날 협의회에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4자회담 제의와 관련,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안정적 대화채널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합의와 주도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趙실장은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4. 26

「4자회담」 中國참여

北, 강한 거부감

잇단 北-美실무접촉서 드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제의한 4자회담에 중국이 참여하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군축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 군축평화연구소의 金열, 金철남연구원은 지난 23일오전(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미국 무부관리들과 만나 4자회담의 중국참여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무부측에서 매크린스키 한국과북한담당관과 존 메릴 정보조사국북한담당관이 참석한 이날 北-美접촉에서 북한측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중국이 개입할 이유가 뭐냐』고 말하는 등 중국참여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뉴욕에서 韓성렬 유엔주재북한대표부공사와 리처드 크리스텐슨 국무부한국과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미 비밀접촉에서도 韓공사는 중국의 참여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중국참여 거부는 중국의 江澤民(강택민)주석이 지난해 초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반대입장을 표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두고 北-中간 갈등이 노출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과 세차례의 판문점내 도발 등 일련의 정전협정 무력화시위 과정에서 단 한번도 중국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에 균열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 조선일보 1996. 4. 26

北 "4者회담 검토중"

孫成弼 駐러대사 새 평화체제가 주의제 돼야

【모스크바=이타르타스 聯】 러시아 주재 北韓 대사관은 25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4자회담 제의가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孫成弼 러시아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 당국은 현재 4자회담 제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제의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대사관 무관인 노신열도 이날 북한은 현재 4자회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孫대사는 그러나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측이 신뢰할만한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미국을 주된협상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상의 주된 과제는 정전협정을 새로운 한반도 평화유지체제로 대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孫은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는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노신열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는 미국과 평화보장 문제를 결정지어야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4. 26

"4者회담 공식 반응 北韓, 내주께 보일듯"

정부당국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북한은 미국과의 잇단 접촉을 통해 4者회담의 의제와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중 4者회담에 대한 공식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 경제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金正宇 북한 대외경제위원장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중인 朴석균 북한외교부부국장이 2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브라운美국무부한국과장과 전화접촉을 했다』며 『통화에서 朴석균은 4者회담이 북한측의 평화체제 제의와 접점이 있을 경우 귀국 직후 이에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제협력 세미나를 마친 북한대표단은 美국무부 관리들과 비공식 연쇄 접촉을 갖고 있다』며 『이는 우리정부도 양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權五琦통일부총리와 孔魯明외무장관은 24일 하오 별도로 만나 4者회담과 관련한 북한측의 최근 반응과 향후 정부 대책 등을 협의했다.

【張寅鐵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26

"북 4자회담 수용 기대"

이총리 밝혀

이수성 국무총리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4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일조일석에 거부하지 않고 유보상태에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조짐"이라며 "북한이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병찬 기자

▽ 조선일보 1996. 4. 26

캐나다 총리와 통화 4者회담 지지 謝意

金대통령

金泳三대통령은 25일 오전 장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갖고, 캐나다 정부가 지난 19일 우리의 4자 회담 제의를 전폭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크레티앙 총리는 金대통령이 작년 10월 캐나다 방문 때 자신의 訪韓(방한)을 초청해 준 것과 관련, 내년 1월에 3백~4백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무역과 투자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金昌基기자〉

▽ 동아일보 1996. 4. 26

"南-北 4자회담 극비논의"

NHK 보도

【東京聯】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휴전협정에 대체하는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한국과 북한이 이미 극비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3~4일안에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일본 NHK TV가 美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대화 촉진을 위해 4자회담을 열자는 제안에 대해 북한측이 반응을 보여 한국과 극비리에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멀지않아 한국측에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NHK에 밝혔다.

NHK는 또한 4자회담에 관해 미국측이 한국을 대신해 회답제의 배경 등을 설명한 것은 알려졌으나 한국과 북한이 어와 관련해 극비 협의를 벌이고 있음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996. 4. 26

南北 비밀접촉 說 다시 "고개"

貿公-삼천리社 「북경라인」 가동중

해외교포 통한 메시지교환 활발

남-북한 비밀접촉說이 또 제기됐다. 정부는 25일 남-북한이 4자회담과 관련, 극비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일본 NHK의 보도에 대해 『지금은 전혀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도 남-북한 비밀접촉설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4자회담의 전제조건이나 내용과 관련, 남-북한이 해소해야할 긋금증과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다각적인 「접촉」을 통한 대북 설득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라며 『다만 그 접촉이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한 고위당국자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돼 있지 않다. 정부내에서 「88라인」으로 불렸던 남-북한간의 「핫라인」은 지난 85년 朴哲彦안기부장특보와 韓時海조평통부위원장 사이에 처음 개설됐고, 6공에 들어서는 徐東權안기부장과 金容淳대남담당비서간에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4자회담 제의 직후 해외공관에 주재국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훈령을 내려보냈다. 외무부 당국자들은 북한외교관들이 훈령없인 움직이지 않는데다, 한국 외교관 접촉을 극력 피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남-북한 외교접촉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간접 접촉」은 여러형태로 비교적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활발한 곳은 북경으로 지목된다. 『쌀회담을 성사시킨 대한무역공사와 삼천리총회사간의 북경라인은 살아있다는 게 통일원 당국자의 얘기다. 북측 쌀회담 대표였던 全속哲은 올해들어 두차례 이라인을 통해 북경쌀회담 재개를 요청해오기도 했다.

삼천리총회사는 대우와 남포공단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북측 창구여서 우리 기업을 통한 「메시지」 전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핀란드대사를 지낸 금강산국제개발 사장 여승철은 우리기업은 물론, 駐中 대사관측과도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金日成의 생일인 4월15일을 전후해 발북한 80여명의 재미교포들 가운데서도 몇몇 인사들이 한미 양국의 메시지를 북한 고위층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이 4자회담 제안을 북한에 처음 통보한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고위층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메신저를 서너명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교포 메신저들은 4자회담 성사후 시작될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내용▲4자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와의 관계▲4자회담 운영방안 등에 관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金演光기자〉

▽ 경향신문 1996. 4. 26

「고비」마다 密使 활약

南-北 비밀접촉史

분단국가에 있어서 중대현안이 있을 때 공개적인 접촉보다는 통치권자의 위임을 받은 밀사들간의 비밀접촉에 의한 해결노력이 일반적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독이전에 동·서독 총리실 간에 비밀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남북한간에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는 6공화국 알려진 최초의 비밀접촉은 들어 남북 비밀접촉를 맡74년 7월 당시 李厚洛정보부장과 金日成북한주석 게됐던 당시 朴哲彦안기부의 실제인 金英柱 노동당 잠특보(현 자민련의원)와 韓時海노동당 부부장(현 조직지도부장(현 부주석) 조평통서기국장)등이 배석의 접촉이다. 李부장은 金했다. 許비서는 이때 金대주석을 면담, 朴正熙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문제를 비롯, 남북이산 가족문제 등을 논의했다.

李부장의 평양방문으로 시작된 이들의 비밀접촉은 나중에 남북조절위원회를 탄생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5공화국때인 85년 9~10월에도 당시 張世東안기부장(구속중)과 북한의 許錟노동당 비서(91년 사망)사이에 비밀접촉이 이뤄졌다.

먼저 許비서가 같은해 9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을 방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 머무르면서 張부장과 비밀회담을 가졌으며 도착 다음날인 5일에는 경기 기흥의 世元硯동아그룹회장 별장에서 金과 燒대통령과 만났다.

張부장은 평양을 방문한 金주석을 면담, 「내가 평양에 다녀온 후에 주석님이 서울을 방문해 달라」는 내용의 金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비밀접촉에서 ▲1차 정상회담을 조기에 평양에 가질 것 ▲2차 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고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와 회담 공개방안·시기 등에 대해 협의했었다. 그러나 張世東-許錟의 비밀접촉은 그 이후 남북한간의 관계악화로 중단됐다. 이후 남북간 비밀 접촉이 재개된 것은 88년 6공때이다.

6공의 환태자로 북방외교에 열심이었던 朴哲彦 당시 청와대정책보좌관의 대북 비밀접촉이 드러난 것은 89년 7월 평양 축전에 참석, 조총련계 인사들에게 노출되면서부터다.

朴씨는 그 이후 韓時海 조평통서기국장과 서울과 평양, 싱가포르 등에서 연쇄 접촉을 가지면서 남북 정상회담문제를 비롯, 경협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朴哲彦-韓時海라인은 남북경협 개시 등 상당한 성과를 남겼지만 90년 4월 朴씨가 金泳三대통령과의 대권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중단됐다. 현정부들어서도 수차례에 걸쳐 남북 비밀접촉설이 있었으나 확인된 적은 없었다.

93년 초 현정부 출범직전 미국 무역회사인 씨코사의 머피회장을 매개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이 있었으나 소문에 그쳤다.

북한핵문제가 한창이던 94년 봄에도 金대통령과 金주석의 밀사가 중국에서 회합을 가졌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역시 미확인 상태로 끝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남북한의 비밀접촉은 한반도에 변화의 기운이 몰아칠 때마다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 비밀접촉설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李承哲기자〉

74년 李厚洛씨 최초로 金주석 면담

85년 張世東씨 許錟과 워커힐 만남

88년 朴哲彦-韓時海라인 3년 지속

▽ 세계일보 1996. 4. 26

"北, 4者회담 수용할듯 빠르면 내달 입장표명"

외교소식통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북한은 현재 4자회담의 득실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내달초까지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미국측과의 뉴욕채널을 통한 접촉및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金正宇대외경제협력위원장 일행의 美국무부 관계자들과의 전화접촉 등을 통해 4자회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심각한 식량난등 경제난을 겪고있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공동제의한 4자회담을 전면으로 거부할 경우 對美관계 개선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제재 추가완화도 늦춰지는 등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게 한미 양국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金부위원장과 함께 訪美중인 朴석균북한 외교부부국장등 대표단이 美 국무부 관리들과 연쇄 접촉을 통해 한반도 4자회담의 협의 의제와 형식 등을 질의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표명에 대비해 남북한 실무접촉 제의및 한-미 공조체제 유지 방안등 후속조치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鄭貿然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26

통일원선 접촉부인

통일원 김경웅 대변인은 25일 일본 〈NHK〉 텔레비전의 4자회담과 관련한 남북 비밀접촉 보도에 대해 "남북한간 극비협의 및 접촉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상기 기자

▽ 경향신문 1996. 4. 26

「당근」무게 줄다리기

달래는 美國 떼쓰는 北韓

「4者회담」제의 열흘 점검

25일로 4자회담을 제의한지 열흘을 맞았다。

북한은 아직 4자회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않고 있지만 그간 북한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이해관계국간의 교차접촉은 여러가지 형태로 전개돼왔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북한과 미국의 연쇄접촉이다。

회담제의후 북한과 미국은 베를린 미사일회담、북한 金正宇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의 방미 등의 과정에서 공식·비공식 외교채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특히 金부위원장은 美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지만 세미나 일정이 끝나자 미국관리들과 「실무접촉」을 본격적으로 갖고 있다。金과 동행한 朴성균외교부 부부장등이 적극적으로 미국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카터센터 주최의 학술세미나에 참석중인 李鍾革노동당 아·태평화위부위원장도 카네기센터의 초청으로 5월1일 워싱턴을 방문、미국무성 관리들과 실무접촉을 가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李부위원장의 직책과 역할을 감안할 때 「진전된 대화」가 오고갈 것이란는 전망이다。

또 이에 앞서 이달중 미군유해협상이 예정돼있으며 다음달초에도 북한외교부 李형철 미주국장이 美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韓成烈공사참사관이 미국무부 인사들을 만나거나 토머스 허바드 미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金桂寬 북한외교부 부부장이 서신왕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답을 수용할 경우 반대급부를 충분히 보장해주겠다는 언질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도 4자회답이 나온 이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왔다。북경과 평양의 대사관을 통한 접촉과 대화가 중국과 북한이 그동안 의견을 교환해온 주요 창구라는게 외무부의 설명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으나 지난 19일 헤이그에서 열린 미·중 외무장관회담 이후 4자회담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에서도 『동북아의 지역안정과 평화유지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설득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중국은 앞으로 당간부나 군고위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4자회담의 수용이 북한에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줄 것임을 집중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도 4자회담 제의가 나온 직후 모스크바주재 孫成弼북한대사를 상대로 북한의 의도를 타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러시아는 4자회담에서 자국이 배제된데 다소 서운해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북한의 수용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마침 한국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남북한간에 비밀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3~4일안에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외신도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국간의 다양한 접촉 결과 4자회답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4자회답 제의후 열흘간의 각국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李炳光기자〉

北、美와 연쇄접촉 "실속 부풀리기"

中·러도 설득나서 긍정기류

中·러 "건배" 중국을 방문중인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左)이 25일 北京인민대회당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한뒤 江澤民중국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北京=聯同】

「4자회담」관련 일지

- 4·16 한반도 4자회담 공식제의 孫成弼주러북한대사 4자회담 거부시사
- 4·18 북외교부대변인 「4자회담 현실성 검토중」
- 4·19 韓成烈유엔주재 북한공사, 크리스텐슨 美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회동
- 4·20 북·미 미사일협상
- 4·22 金正宇북대외경제위 부위원장, 워싱턴 방문
- 4·23 하시모토 日총리, 金泳三대통령에 4자회담 지지친서
- 4·24 애슐먼 미국무부 한국과 경제담당관 방북
- 4·25 李鍾革북노동당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방미

▽ 한국일보 1996. 4. 27

"北·中 4者회담 공식반응없어"

美국무부대변인 밝혀

워싱턴=鄭炳鎭특파원】 북한과 중국은 25일 현재까지 4자회담과 관련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글린 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몇몇 북한인 그룹이 미국을 방문중이지만 그들의 역할은 평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또 중국으로부터도 공식적인 반응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2차 北·美 미사일회담과 관련、베를린회담 이후 새로운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4. 27

南北대결 청산… 4者회담 응하길

權부총리 對北촉구

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장기구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의 수용을 촉구했다。

權부총리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金玟河중앙대총장)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가 여의도 63빌딩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통일은 근본적으로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하나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權부총리는 또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나 급작스런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具本永기자〉

▽ 한국일보 1996. 4. 27

南北、4者회담 극비접촉

北京등서 對話재개 포함 懸案 집중논의

北긍정반응땐 쌀추가지원등 검토

정부는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美대통령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과 관련, 중국 北京(베이징) 등에서 북한과 극비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정부와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과의 각종 협상에 참여해온 정부의 한 관계자가 지난 24일부터 北京에서 북한측과 비밀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남북의 해외공관이 상주하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北京에서 북한측과 접촉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서울을 출발, 현지에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당국자간 남북대화재개 방안등의 현안을 집중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언론은 남북의 해외공관이 상주하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접촉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접촉 결과 북한측이 4者회담이나 남북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對北식량지원재개와 남북경협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京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중인 정부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측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 쌀회담을 성사시킨 북한통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밀접촉에 앞서 쌀회담 파트너였던 북한측 삼천리총공사측과 협의재개를 위한 연락을 계속해왔던것으로 알려졌다.

【李在烈·張寅鐵기자】

日언론서도 보도 정부선 공식否認

한편 일본 NHK는 24일 서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남북비밀접촉說을, 아사히신문은 25일 우리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비밀접촉을 시인했다고 각각 보도했으나 통일원측은 두 보도를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 경향신문 1996. 4. 27

"北 4者회담 수용땐 남북대화 진전 간주"

정부 美와 北제재 단계적 완화 합의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4자회담 제의를 수락할 경우 이를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간주해 단계적인 對北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기로 미국측과 의견일치를 본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남북대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4자회담은 제네바합의 가운데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남북대화를 이행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대화를 「남북한간 실질적인 관계의 진전」이라는 기존 해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 주목된다. 정부는 4자회담의 진전 정도에 따라 앞으로 3단계의 해금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낸다는 복안을 갖고 우리측 시나리오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처음에는 대북제재완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에서 출발하되 점차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李承哲기자〉

▽ 서울신문 1996. 4. 27

4者회담과 연계

對北제재 완화 孔외무·레이니大使 회담成事 韓美공조 논의

孔泰明외무부장관과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26일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와 각각 만나 북한의 4자회담을 유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일치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북 단독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문제도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는 것을 보아가며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孔장관은 이날 야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郎)일본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일본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李度運기자〉

▽ 세계일보 1996. 4. 27

실무회담 4國참여

4者회담 전략수정… 南北접촉 철회

정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제의한 한반도 4자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실무회담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변경, 남북한과 미국 중국등 4국이 참여하는 실무회담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당초 4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 실질적인 평화협정체결 문제등을 논의하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4자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도 남북한간에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4자회담의 형식, 의제, 장소, 진행수순등 제반 현안을 사전협의하는 예비회담에는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등 4국정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관계국과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鞠貞然기자〉

▽ 중앙일보 1996. 4. 27

北, '3者회담' 逆제의 할듯

南北韓-美회담 형식 … 내부방침 내비쳐
경제제재 완화·南서 경제지원 조건부로

北-美실무접촉서 확인

안희창 기자

한·미양국이 공동제의한 한반도 평화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조건부 남·북한및 미국간 3자회담」이라는 형식으로 역제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4자회담 제의 이후 평양·뉴욕 등지에서 진행된 북·미간 실무접촉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수교등 대미관계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한과의 대좌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남한·미국과 원탁에 앉는 방식의 3자회담을 제의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의 대미 실무접촉을 통해 미국의 대폭적인 경제제재 완화, 한국의 경제지원 등을 3자회담 개최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아직 이를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전하고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대남제의를 해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당초 「남한이 옵서버 자격이면 3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한 후에 남한이 거부하면 「조건부 3자회담」을 다시 제시한다는 순차대응방침도 검토했다가 미국측의 반대로 이 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1996. 4. 27

"美와만 평화논의"

북한 중앙통신 논평

【서울=內外】 4자회담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북한이 26일 『남조선은 조선반도 평화보장 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 중앙통신은 논평을통해『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서만 토의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남조선은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통신은 4자회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 서울신문 1996. 4. 28

EU "4者회담 지지"

내일 성명 발표

【파리=朴政賢특파원】 유럽연합(EU)은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지지성명을 29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올 상반기까지 의장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의 의장국 성명을 통해 4자회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관한 최종 문안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브뤼셀의 한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단일국가의 4자회담 지지성명은 밝혀진 바 있지만 EU의 성명은 국가협의체로서는 처음 이뤄지는 일이다.

▽ 경향신문 1996. 4. 27

「南北 접촉說」 왜 자꾸 나오나

日언론 잇따라 보도 주목

주변여건 성숙 가능성높아
독자채널 北京·뉴욕 유력

쌀접촉 관여 정부核心인사 北京활동 관심

정부 당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비밀접촉설이 외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NHK가 지난 25일 美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남북비밀접촉설을 보도한 데 이어 26일에는 아사히(朝日)신문이 서울 외교소식통의 입을 빌어 北京과 뉴욕 등 구체적 지명까지 제시하면서 남북한간의 비밀접촉설을 전했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 당국과 비밀접촉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남북대로 「독자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동안 의 북·미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없이는 북·미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남측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보다 평양이 보다 나은 상태다. 지난해 이루어진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으며 바로 쌀회담때 가동됐던 채널이 재가동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지난23일 싱가포르로 출국, 북경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부 산하기관의 한 간부동정이 관심거리다. 그는 북경 쌀회담에 관여했으며 북한과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4자회담성사를 위해 비밀접촉을 진행중이라는 관측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뉴욕도 남북간 비밀접촉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다는 곳이다. 그러나 뉴욕에서 남북 비밀접촉이 벌어지고 있다면 외교경로를 통한 실무급 접촉일 가능성이 높다.

4자회담 제의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때 중개역할을 했던 인도네시아의 중재에 의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남북한 모두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개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지적이다. 〈李承哲기자〉

그는 싱가포르를 거쳐 북경에 도착한뒤 북한측이 과연 무엇때문 담보자를 과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4자회담성사를 위해 비밀접촉을 진행중이라는 관측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뉴욕도 남북간 비밀접촉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다는 곳이다. 그러나 뉴욕에서 남북 비밀접촉이 벌어지고 있다면 외교경로를 통한 실무급 접촉일 가능성이 높다.

4자회담 제의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때 중개역할을 했던 인도네시아의 중재에 의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남북한 모두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개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지적이다. 〈李承哲기자〉

지적대로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에는 접촉수준과 내용,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비밀접촉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한반도 주변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4자회담을 제의했다. 4자회담이란 그동안 한국이 고수해온 당사자원칙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자칫 한국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들러리론의 전락 우려 때문에 4자회담 제의부터 실제 회담에까지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의 남북접촉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다급한 식량난 문제가 북쪽으로 하여금 남북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비밀접촉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선 간단한 방법으로 「특사급 접촉」과 「실무급 접촉」이 있을 수 있다.

특사급 접촉은 과거 남북간에 있어왔던 비밀접촉: 이 것의 다 이같은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남북비밀접촉설도 특사급 접촉쪽에 기울어 있다는 느낌이다.

특사접촉과 관련, 그 장소는 한반도가 아니라면 북경일 가능성이 높다. 북경은 지리적으로 남북한에 모두 인접해있을 뿐 아니

▽ 한겨레신문 1996. 4. 28

'4자회담 실타래' 가닥 잡혀간다

진전상황과 북 반응

미 주도속 남북 힘겨루기…아직 검토수준

북-미 '성사' 교감…북, 대화 분위기 띄워

강태호 기자

4자회담 제의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그 수용여부가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긴 하나 아직은 '검토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다 활발한 북-미 접촉과 대비되는 남북대화 부재 상태가 4자회담에 대한 남한 내부의 지지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4자회담 성사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미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자회담이 성사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4자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미국 처지에서 볼 때 남은 것은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다.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혁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들의 잇따른 미국행과 미국 안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등은 이런 맥락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언론의 과잉보도로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지만 남한의 외교적 소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오히려 이를 통해 북한쪽에는 남한의 반발을 들어 4자회담의 수용을 촉구하고 남한쪽에는 대화재개를 위한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해 양면적으로 압박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자회담 수용 압력은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렌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은 손성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가 16일 4자회담 직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낮은 직급의 관리가 뭔가 얘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가볍게 일축했다. 이는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그럼에도 25일 손성필 대사가 4자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북한의 공식입장을 다시 밝힌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18일 나온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긍정적인' 검토 성명에 대해서도 그 전날 나온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과 연계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커리 대변인은 17일 "명확한 답변이 모스크바 주재 외교관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공식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을 전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미국과의 '교감' 속에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 성명에 두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4자회담 제안이 정전협정 서명국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4자회담이 불가침 화해·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4자회담과 함께 남북간의 불가침 등에 관한 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풀이를 하게 한다.

따라서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남북대화' 발언은 제주선언이 남북간에 아무 전제조건 없는 정부차원의 만남을 제의한 데 대한 반응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공방이나 회담장소와 대표의 성격문제를 둘러싼 다소의 논란이 있겠지만 4자회담 개최와 함께 남북이 대화재개 쪽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1996. 4. 28

美 "4者회담 北수락 기대"

직접협상 일단 거부

【워싱턴=연합】 美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변인은 26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 北·美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조선 중앙통신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이를 북한의 공식반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4자회담 제안을 수락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자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북한 외교부의 성명은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또 오는 30일 美 의회에 보고될 테러지원국가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 리비아 이란 이라크 쿠바 시리아 수단 등 7개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對北 경제제재를 추가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경제제재 추가 완화는 『북·미관계의 진전뿐 아니라 남북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이른 시일내에 이같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4. 27

南韓과 對話 불가피 판단

北 '조건부 3者회담' 검토 배경

안희창 기자

한반도 평화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조건부로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그들로선 가장 기대할만한 중국을 배제하는 이러한 구상을 왜 했는지도 의아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4자회담과 그동안의 대미(對美)·대중(對中)관계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처지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우선 북한으로선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저변에는 핵문제를 계기로 지난 3년여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와 명분을 상당히 확보했는데 이제와서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만 복잡하게 된다는 생각이 자리했을 수 있다.

초점이 흐려지고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과 수교이후 한국과 상당한 관계개선을 이룬 중국이 미덥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선 남한을 배제하면서 미국과의 접촉틀을 계속 유지, 경제적 실리와 국제적 위상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가장 바란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북한 입장에만 동조하기를

韓·中 관계개선 불쾌감… 中개입 배제

국제사회 생색내며 시간벌기 속셈도

『중국을 믿지말라』는 말이 북한 외교부내에 돌고 있다는 한 귀순자의 증언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는 부분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남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의 4자회담 제안도 북한의 그같은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북한은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선 4자회담을 수용하면 지금까지

애써 구축해놓은 「조·미 협상틀」의 근저가 무너지는 셈이며 그 때문에 4자회담을 덥석 받기도 곤란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이 궁리해낸 대안이 「조건부 3자회담」이라는 것이다.

이 안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그동안 철통같이 유지해왔던 「미국과만의 협상」에서 일단 한발 물러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양보했다는 유화적 이미지를 내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회담이 실제로 개최되기 위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언제고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도 남겨논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협상때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은 「논의 의제의 세분화 전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협상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카드를 최대한 세분화해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호응할 때마다 수확을 거둬들이는 수법인 것이다.

한편 북한은 3자회담 제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걸어놓은 조건에 한·미가 응하면 회담이 열려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회담에 참석한 뒤에도 의도적으로 한국을 도외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계산을 했음직하다.

때문에 한국정부로선 3자회담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다 북한이 수용키 어려운 조건들을 전제로 3자회담을 역제의해올 가능성이 커 이를 수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4자회담을 둘러싼 공방은 상당한 시간 계속될 전망이다.

▽ 세계일보 1996. 4. 28

美 "北수용기대"

【워싱턴=연합】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낮(미국시간)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해 북한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그들이 검토중이라는 것이며 북한정부가 4자회담 제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고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같은 일에 북한이 최종적인 결론을 낼 때까지는 한상방향이 안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제, 미국은 26일자 북한 중앙통신의 논평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받은 바 없으나 현재 북한의 공식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27

貿公、對北접촉

관계자 經協문제 논의후 귀국

접촉장소는 안밝혀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과 관련, 남·북한 관계자가 비밀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는가운데 남북 쌀회담을 주도했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북한측과 접촉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洪之瑨(홍지선)북한실장은 최근 북한측과 경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출국, 27일 귀국했다. 李光基(이광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은 27일 『洪실장이 지난 23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며 『북한 당국자와 남북경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접촉장소는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洪실장은 지난해 5월에도 北京(베이징)에서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비밀접촉을 벌여 李錫采(이석채) 당시 재정경제원차관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 부위원장의 쌀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洪실장은 귀국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朴世熹기자〉

▽ 중앙일보 1996. 4. 27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반응

날짜	발언자	내 용	비 고
16일	손성필 러대사	북·미외3자개입불필요	유엔발표문 의식한 발언
16일	노동신문	정전협정 북·미사이 체결 남조선은 못끼여들 신세	기존 입장 되풀이
17일	이삼로 태국대사	4자회담 연구가치 있다 평화협정 북·미가 당사자	
18일	외교부 대변인	정전협정은 북·미문제 4자회담 현실성 검토중	최초의 공식반응
19일	한성렬 유엔공사	정전협정 주체는 북·미 4자회담 의도 무엇인가	미국무부 한국과 부과장에게 문의
21일	김정우 대외경제위부위원장	클린턴 대통령제안 현실성 따져봐야 한다	워싱턴 세미나에서 언급
22일	평양방송	잠정협정 제안 2개월째 미국 긍정반응 없다	4자회담 언급 없음
25일	손성필 러대사	4자회담 의도 검토중 남한 신뢰할 당사자 아님	이타르-타스통신과 회견
26일	중앙통신	평화보장문제는 북·미문제	논평

겉으론 "南은 빠져라" 고집

4者회담 그간의 北반응

최원기 기자

북한은 한반도평화 4자회담 제의에 대해 지금까지 모두 여덟차례의 직·간접 반응을 보였다. 발언 주체와 내용은 조금씩 틀리지만▶대체로 4자회담에 다소간 부정적이며▶남한 배제 원칙을 고수하고▶유보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공식적인 반응으로 간주되는 외교부 대변인 발언(18일)과 러시아 주재 손성필(孫成弼)대사 기자회견(25일)내용도 한결같이 「정전협정=북·미문제」입장과 함께 남한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노동신문과 평양방송 등은 직접적으론 4자회담 자체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전협정은 북·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남조선은 끼어들지 못할 신세』라는 식으로 기존의 대남(對南)비방을 반복하고 있다.

또 미국에는 한성렬(韓成烈) 주미공사가 리처드 크리스텐슨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등에게 4자회담 제의의도를 타진하는 등 여러 차례 「응수타진수」를 띄우고 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26일 『정전협정 체계를 결사반대한 남조선 괴뢰들이 여기에(평화보장) 끼어들 수 없다』고 종전의 남한 배제입장을 반복했다.

통일원 고위당국자는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 자체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같다』며 『정부는 북한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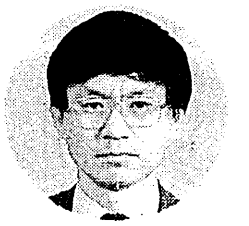
美國에도 "진의 뭔가" 여러차례 타진

정부 "신경안쓰고 의연히 대처" 강조

▽ 서울신문 1996. 4. 28

"4者회담 관련 北접촉說 사실무근"

洪之瑨 貿公 북한실장 일문일답



북경에서 4자회담과 관련, 북한과 막후접촉을 벌였다는 추측을 받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洪之瑨 북한실장은 27일 북한과의 접촉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이날 하오 귀국한 洪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北京 간적·없어"…통일원 확인도 전면부인

—북한측과 접촉했나.

『신문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난 23일 싱가포르에 갔다가 오늘 돌아왔다. 북경에는 가지도 않았다. 북한과의 접촉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싱가포르에는 왜 갔었나.

『순전히 우리회사의 고유업무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봤나.

『우리집 숫가락 숫자까지 일일이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통일원 당국자들이 洪실장의 북한접촉을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확인해주었겠나. 싱가포르에만 있다가 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洪실장의 북한 접촉설이 나온다고 생각하나.

『언론의 추측보도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일개 부장이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의 방침이 먼저 결정돼야 할 일이 아니냐. 지난번 3차 쌀회담에서 결론 난 것이지만 앞으로 협상은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해야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왜 007식으로 들어왔나.

『그렇지 않다. 정상적으로 일반 승객들과 같이 걸어 들어왔다. 단지 모자를 하나 쓰고 왔을 뿐이다』

—저녁에는 어딜 갔었나.

『대학 동창과 저녁을 먹었다』 〈孫成珍기자〉

한반도 외교각축전 "긴박"

4者회담 제의 이후

美-日, 對北접촉 급진전… 한국 속수무책

中國, 美-日 영향력 확대 조짐에 거부감

러, 4者회담제외 불만… 韓-日은 「배타수역」 난기류

韓美양국이 지난 16일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간의 외교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4·11총선이 끝난 선언한 이후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갑작스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후부터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개입할 여지가 적어졌다.

「그럼에도 4자회담 성사를 비롯, 앞으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는 한국정부에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난 22일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미국의 향후 대북접촉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날 주미 한국대사관 李彰浩공사는 토머스 허바드 미국부부차관보와 만나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미접촉의 「대세」는 북-일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다음달초 양국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에 따른 어업협정 재검토를 위해 협상테이블을 움직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고민인 동시에 활로다.

한일관계 국이 참여하지 않는 4자회담에 대해 일단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일 접촉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방한한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은 연립여당대표단의 방북추진 등 북-일 접촉에 대한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일의 무장관의 남아공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UNCTAD)참석을 계기로 30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일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다음달초 양국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에 따른 어업협정 재검토를 위해 협상테이블을 움직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고민인 동시에 활로다.

한일관계 국이 참여하지 않는 4자회담에 대해 일단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일 접촉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방한한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은 연립여당대표단의 방북추진 등 북-일 접촉에 대한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일외무장관의 남아공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UNCTAD)참석을 계기로 30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일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다음달초 양국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에 따른 어업협정 재검토를 위해 협상테이블을 움직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고민인 동시에 활로다.

한미관계 지난 16일 제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미대화 분리원칙을 비롯, 앞으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는 한국정부에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난 22일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미국의 향후 대북접촉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날 주미 한국대사관 李彰浩공사는 토머스 허바드 미국부부차관보와 만나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미접촉의 「대세」는 북-일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다음달초 양국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에 따른 어업협정 재검토를 위해 협상테이블을 움직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고민인 동시에 활로다.

북·일관계 일본은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욱 의식해 북-일 관계개선에 조심스러운 편이다. 그러나 일본도 한국 총선 이후 북-일관계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한국정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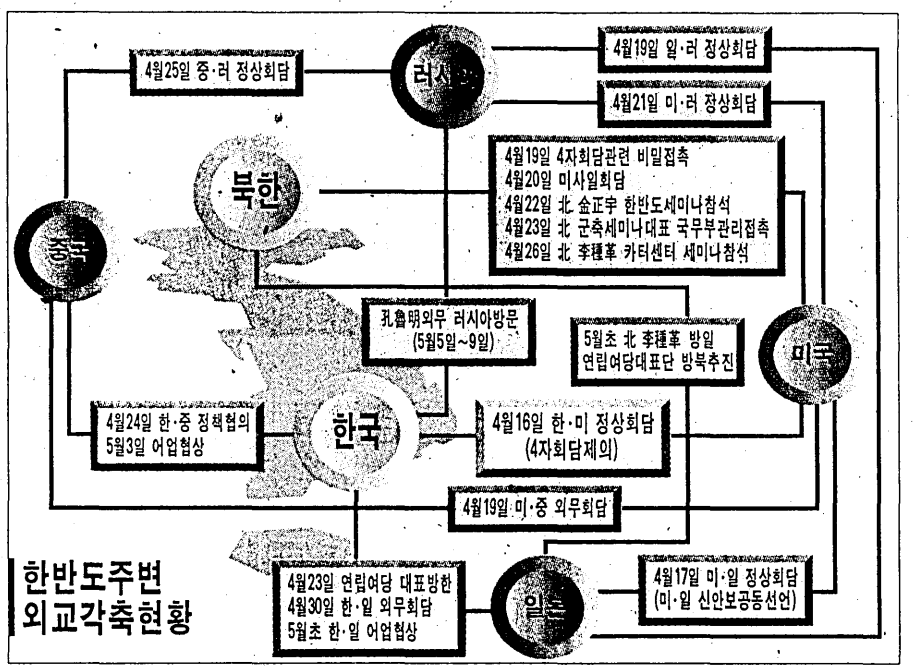
미국을 방문한 李種革부위원장은 다음달초 일본을 방문, 대북식량지원문제를 비롯한 북-일관계개선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일수교협상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시하고 있는 일본 연립여당측은 올 상반기중 북한 방문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고 뒤이어 북-일수교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관계 한국과 중국은 4자회담문제 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에는 비교적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편이다. 중국은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체결 주장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또 지난 17일 발표된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이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한중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한중정책기획협의회를 열고 4자회담제의 등 향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냉랭한 등거리 외교」를 공식 표방, 한국쪽으로 바짝 다가오지는 않고 있다.

한러관계 지난 91년 수교이후부터 급속히 가까워진 한러관계에 최근 이상기류가 일고 있다. 러시아는 한미의 4자회담 제의에 러시아가 배제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孔魯明외무장관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측의 불만을 무마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인다.

〈朴濟均〉



한반도주변 외교각축현황

▽ 동아일보 1996. 4. 28

남북접촉說 부인

朴銖吉 유엔대사

【유엔본부=李圭敏】朴銖吉유엔대표부대사는 남북한이 뉴욕에서 극비접촉을 갖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朴대사는 26일 『현재 북한의 유엔대표부대사 자리가 공석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북한측과 접촉할 대상도 없으며 접촉하라는 본국의 훈령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朴대사는 이어 『유엔대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남북한의 극비접촉은 있을 수 없으며 대사급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접촉도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4. 28

"北중앙통신 논평 공식입장 아니다"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한반도 평화보장문제는 북·미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중앙통신이 보도한 논평의 발표주체가 명확치 않다』면서 그것을 북한당국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1996. 4. 28

北, 베트남 休戰협상서 원용

3者회담案 과거사례

최원기 기자

북한이 한·미 양국의 한반도 평화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대응카드로 「조건부 3자회담」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진행된 일련의 북·미 실무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북·미 관계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해 남한과의 대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남북한과 미국이 원탁에 둘러앉는 3자회담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평양이 검토중인 3자회담의 원조는 지난 78년 2월의 「2단계 3자회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때까지 남북 직접 정치협상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던 김일성(金日成)은 유고의 티토 대통령을 통해 미국측에 2단계 3자회담을 제의했다. 북한과 미국이 1차로 양자회담을 열고 남한을 나중에 끼워주는 식이었다.

북한의 그같은 아이디어는 베트남 휴전협상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월맹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핵심사안을 사전협의·처리하고 나중에 월남을 들러리로 끼워줬는데 북한도 이를 한반도에 응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제의는 남북 당사자 원칙을 고수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에 의해 즉각 거부됐다.

그러나 朴대통령은 그로부터 1년4개월뒤인 79년6월 북한에 거꾸로 3자회의를 제의하게 된다. 물론 당시 한·미가 제의한 것은 북한식 3자회담이 아닌 「3당국 고위회담」이었다. 즉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남북회담 사무국의 정석홍(鄭錫弘)자문위원은 『당시 우리는 3당국회담을 하고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할 수 없이 미국에 끌려갔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다행스럽게도(?) 이같은 한·미정상의 제의를 거부, 3당국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북한은 84년1월부터는 「북·미 평화협정, 남북한 불가침선언」으로 좀더 정교해진 형태의 2원화된 3자회담 제의를 들고 나왔다.

그후 3자회담은 북한 외교의 「비책(祕策)」으로 자리잡아 북한은 군사당국자 3자회담(86년6월), 남북한과 미국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3자외상회담(87년 8월)등 포장지와 내용물을 조금씩 바꾼 「유사품」을 계속 선보여왔다.

한반도 평화 「3자회담」제의 일지

일시	제의주체	내용
78년2월	북한	선 북·미협상후 남한 참여방식의 「2단계 3자회담」
79년6월	한·미정상	남북한,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3당국회담
84년1월	북한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을 위한 2원화된 3자회담
86년6월	북한	남북한과 미국의 군사당국자가 참여하는 3자회담
87년8월	북한	남북한과 미국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3자회담
88년12월	북한	북한 김영남외교부장, 슐츠 미국무장관에게 3자회담 위한 실무접촉 제의

78년 제안한 2단계 회담이 원조

포장만 바꿔 '유사품' 줄곧 내놓아

▽ 세계일보 1996. 4. 28

4者회담 中반응 北韓 이례적보도

한·미 양국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27일 이와 관련한 중국측 반응을 보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이날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9일 4자회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는 『클린턴의 제안은 먼저 유관 각측이 의견일치를 보아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유관측들의 일치한 동의를 받아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沈國放 중국 외교부대변인도 지난 18일 주례발표 모임에서 이에 대해 『중국은 조선을 포함한 유관 각측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희망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세발전에 따라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정전협정을 없애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와함께 세계 각국의 출판물들이 4자회담과 관련, 「현실성 검토중」이라고 밝힌 북한 외교부대변인의 기자회견(4·18)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선전하면서 중국 신화통신과 이타르타스통신, AP통신, 일본 NHK등의 보도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서울=연합〉

▽ 조선일보 1996. 4. 28

韓·美조바심 자극 "實利 극대화"

2週째 강-온 극단오가며 시간벌기

北 4者회담 「兩面반응」속셈

韓·美양국의 4자회담 제의 11일째가 되는 26일 북한은 지난 16일 孫成 駐러시아대사가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미간에만 논의돼야하며 중재자는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인이후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강온 양극단을 오가는 「兩面(양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得失 면밀히 계산

북한은 부정적인 강경발언을 하면서도 지난 18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4자회담이 실현가능한 지 검토중』이라는, 남북대화 역사상 前例(전례)가 없는 온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신중하면서도 극단을 오가는 「타진수」를 띄우는 眞意(진의)는 과연 무엇일까. 북한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무엇보다 북한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4자회담 수용과 거부시, 得失을 면밀하게 따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반응이 늦은 것은 강온파간 토론이 아직 계속되거나 내부 입장정리를 대충 마친다음 시간을 벌기위한 두가지 경우일 것』이라며 『만약 후자라면,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 자체를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은 공식 반응을 최대한 늦추면서 韓美의 4자회담 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조바심을 계속 자극, 대북 쌀지원·경협확대·경제제재 완화조치 같은 반대급부를 최대한 획득, 실리를 극대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평화협정 관철 의도

북한은 최종적이며 단호하게 제의를 거부하지 않는 대신, 美-北간 직접평화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 3자회담제의같은 逆(역)제의나 4자회담 수용시 당초 목표인 美北평화협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전술적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즉각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시간을 끌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북한의 4자회담 거부는 美-北관계개선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추락을 가져올 것인만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宋義達기자〉

▽ 한국일보 1996. 4. 29

北, 實利극대화 겨냥

「4者회담」 애매한태도 13일째

可否결정 미뤄 시간끌기 전략

절차·방식조정 逆제의 가능성

미사일 협상등 현안과 연계 속셈도

韓美정상이 4者회담을 제의한지 13일이 지난 28일까지 북한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양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직·간접적인 반응은 「생각해 보겠다」는 범위안의 것들로 분명치가 않다. 단지 정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전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반응의 성격이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내용 또한 強穩 양극의 이중적인 것이다.

예컨대 4者회담 제의 당일인 16일 孫成弼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북한과 미국 이외의 제3자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말했고 같은날 노동신문도 이같은 종전의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그러나 18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4者회담의 현실성을 검토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4者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반응이다.

이어 21일 金正宇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워싱턴의 세미나에서, 25일 孫成弼대사가 모스크바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26일에는 방미중인 李種革 亞·太평화위副위원장이 「4者회담 제의가 어떤 내용인지 연구중이며 남북대화는 잘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한 가운데서도 격렬한 대남비방이나 「남한 배제주장」이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7일 북한에 대한 경협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하는 유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무역공사를 통한 북한과의 비밀접촉도 확인됐다.

우리정부는 4者회담제의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감지되고 있는 북·미간의 활발한 물밑 접촉에 대해서도 「묵인한다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시간이 흐를수록 외교적 수세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북한은 어떤식으로든 4者회담 제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결코 「혼쾌히」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분간 시간을 끌면서 득실을 따져 본 뒤 복선이 깔린 결정을 보고 있다는 점이 있다.

북한은 2년반 이상을 끌어온 핵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의제를 세분화해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년반 이상을 끌어온 핵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의제를 세분화해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미사일협상과 유해송환협상, 미국의 對北경제제재조치 추가완화문제 및 연락사무소개설등 다양한 현안을 갖고 있다. 일본과도 추가쌀지원 및 수교협상등을 앞두고 있다.

【洪潤五기자】

「4者회담」 애매한태도 13일째

北·美 다갈래접촉 갈수록 봇물

「세미나外交」·美관리 잇단 訪北등

경제제재 추가완화 整地작업인듯

4者회담을 둘러싼 남북한간 비밀접촉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北·美간 공식, 비공식 접촉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북·미는 우선 북한측의 연기통보로 일단 5월이후로 넘겨졌던 유해송환협상을 5월초 뉴욕에서 열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지난 1월 하와이 1차협상때와 마찬가지로 북측에서 평화협정 「전문가」로 알려진 金炳弘 외교부국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1차협상때 북측이 유해문제는 전반적인 평화체제문제와 별개부의 관계라고 주장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협상에서 4者회담과 관련, 북측이 구체적 입장표명을 할 가능성 높다.

북·미는 이와함께 지난 21일 베를린에서 이틀간의 미사일회담을 끝내면서 합의한 대로 제2차 미사일회담을 늦어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절충을 벌이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챙겨야 하는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미국이 전세계적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에 북한을 끌어들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 인도주의를 앞세운 유권자들의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 유해송환을 선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북·미간의 접촉에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있는가. 북한이 현실적으로 미국로부터 가장 바라는 것은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완화이고 궁극적으로는 수교나 관계개선이다. 하지만 이와관련된 북·미간 접촉은 표면적으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또 우리 정부에 북·미간 비공식접촉을 언론에 알리지 말것을 종용하고 있고 언론보도가 나오면 상당히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이같은 점에 4者회담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접촉의 이중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미는 미국이 공식적인 회담으로 인정하는 접촉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그 하나는 「세미나외교」로 지난 21일 방미한 金正宇대외경제위副위원장, 24일 방미한 李種革 亞·太평화위副위원장등은 물론 평화및 군축연구소 관계자들도 잇따라 방미, 세미나가 끝나면 예외없이 美국무부관리들과 만나고 있다.

북·미간 이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경로는 美국무부관리들의 방북이다. 퀴노네스 정보분석국 북한정세분석관과 리처드슨 평양연락사무소장내정자 등은 올들어서만도 2,3차례 방북했고 애슬만 한국과 북한경제담당관은 지난 27일부터 방북중이다. 이들의 방북목적은 하나같이 페연료봉 보관작업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접촉의 불균형성을 감안하면 세미나외교나 美국무부관리들의 방북을 통해 경제제재완화등을 위한 실태파악및 사전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4者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對北견제카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韓·美공조가 새삼 강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高泰成기자】

▽ 국민일보 1996. 4. 29

南北대화 3원칙 수정

정부 北京비공식접촉등으로 "死文化"

정부가 지난해 9월 北京쌀회담 이후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유지해온 북한 당국자의 대화제의 한반도내 회담, 대남비방중지 등 남북대화재개 3원칙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양국이 제의한 4자회담개최와는 별개로 3원칙이 충족돼야만 남북한 접촉이 가능하다는 대북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경쌀회담 당시 우리측 비밀창구였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洪之璿 북한실장이 지난 23일 이후 북경에서 북한측 협상대표를 만나 남북경협문제를 논의하는등 정부가 3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 접촉창구 외에도 경협을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9일 「洪실장이 남북한 경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측 당국자를 만났다」면서 「洪실장이 북측대표와 접촉함으로써 정부가 내건 3원칙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후 3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남북간 공식·비공식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3원칙 수정문제는 이미 4자회담 제의와 함께 정부내에서 논의됐다」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접촉은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남북대화 원칙 변화는 급속한 북·미관계개선에 대한 대응과 4자회담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대북채널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3월말 북경쌀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팩스를 全炳哲대표 명의로 우리측 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당시재정경제원차관)에게 보냈지만 3원칙에 위배된다며 거절했었다.

(韓玟洙)

▽ 동아일보 1996. 4. 30

美"4者회담 조심스런 낙관"

訪美 北관리접촉결과 "北 완전거부 안할것"

정부당국자 밝혀

미국은 워싱턴 뉴욕 등지에서 북한관리들과 접촉한 결과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에 「조심스럽운 낙관」을 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2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여부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인 판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이 4자회담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접촉은 지난 19일 뉴욕에서 리처드 크리스텐슨 국무부북한과부과장과 韓성렬유엔주재북한대표부공사의 접촉이 유일하다」며 「현재 방미중인 金正宇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과 李種革아시아태평양위원회부위원장은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공식답변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에서의 접촉 결과 북한이 4자회담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란게 미국정부의 판단」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뉴욕채널 등을 통해 4자회담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4. 29

北 "4者회담 조건부 수용"

美와 실무접촉서 표명 議題 분리협상방안 제시

"평화체제 美와, 南側과는 「기본합의」 이행 협의"

북한은 일련의 北·美접촉과정에서 4者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논의하되 의제를 분리해 우리 정부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를, 미국과는 평화보장문제를 논의할 경우 4者회담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따라 방미한 金正宇 대외경제위원위원장, 李種革 노동당副부장 등을 통한 美국무부측과의 실무접촉 과정에서, 또 韓성열 유엔대표부공사를 통한 뉴욕 상설대화채널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美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와관련, "남북한간에는 이미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만큼 구체적인 이행방안만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북한은 그러나 평화보장문제는 미국이 주된 협상대상자이고 우리는 보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일단 남북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천명한 4者회담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북한이 조건을 달았지만 4者회담의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한의 입장표명이 회담의 의제와 형식에 관한 수정제의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高泰成기자】

▽ 세계일보 1996. 4. 29

北, 4者회담 수용 배제않아

金正宇-美 副차관보회담 "정보검토후 최종입장 결정"

美에 식량 추가지원-제재완화 요구

【워싱턴=申相진특파원】워싱턴을 방문중인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金正宇부위원장은 롬 허바드 美국무부 東亞太담당 부차관보와 만나 미국의 4者협상 제안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美국무부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金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美·북한간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북한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제안수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채 더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만 북한의 최종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김정우가 4者협상 대표의 지위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남아있다면서 "우리는 현재 협상제안을 일종의 연막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金은 또 26일 이뤄진 허바드副차관보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한 후 미국의 추가 식량지원과 對北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허바드부차관보는 현재로선 對北 추가 제재 완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못박고, 미국은 미사일 확산방지, 유해송환 등 관심사항이 해결되는 즉시 그 속도에 맞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美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은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者협상 제의와 對北 제재완화를 명시적으로는 연계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4. 29

북한李種革 워싱턴 방문주목

"4者회담 北입장 美전달"

金正日과 直報채널 가진 北 외교거물
카네기재단 주최 비공개 세미나 관심

학술회의 참석차 애틀랜타에 온 북한의 李種革일행이 30일 워싱턴에 도착, 美-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위원회 金正宇일행이 경제대표단의 성격을 띠고 워싱턴에 왔다면 이종혁일행은 정치적 대표단의 성격을 띠고 워싱턴에 온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이다.

金정淳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인사중 최고위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종혁의 워싱턴방문은 95년 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가 된다. 李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전경남 부위원장 등을 대동했던 당시에도 스스로 자신을 미국땅을 밟는 북한 최초의 정치대표단 대표라고 소개한 바 있다.

세계식량기구(FAO) 북한대표부 대표 등을 역임한 李는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에게 북한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李를 초청, 당월달 1일 비공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카네기재단의 셀릭 해리슨 수석연구원은 李가 특히 美-북한관계에 있어 金正日로부터 특별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

李가 카네기재단에서 행할 연설 내용도 「북한의 시각에서 본 美-북한관계」로 소개돼 있다.

李가 「김정일의 측근」 혹은 「외교 거물」로 통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김일성 생전에 평양을 방문한 미국측 인사들이 김일성과 면담 때 李가 배석, 김일성에게 초청장들을 직접 소개한 인물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李는 자신의 직속상관이라 할 수 있는 金정淳을 거치지 않고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李의 워싱턴 방문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美클린턴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者협상 제안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락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가 분명한 가부 여부를 통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종의 조건을 제시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李의 워싱턴 방문은 앞서 김정우가 이례적으로 고위급인사인 롬 허바드 東亞太 담당 부차관보를 만난 직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李도 허바드 혹은 그 이상의 미국측 고위급 인사와 만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측 인사의 방미때 접촉수준을 과장급 이하의 실무선으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李는 美도착 이후 이미 4者협상, 남북대화 재개 등에 관한 북한측 입장을 제시한바 있다.

〈워싱턴=申相진특파원〉

II. 북한, 정전협정 위반

1. 전쟁위협 발언

▽ 조선일보 1996. 2. 1

北, 全面戰 경고

金容淳 "비정상사건으로 충돌가능"

【東京=AP聯】 북한은 31일 한반도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곧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이날 평양에서 열린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조선인들은 한반도 긴장해소와 화해, 통일로 가는 길에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동경에서 청취된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국민일보 1996. 2. 1

北 金容淳 전면전경고 "사실 아니다"

통일원 "外信서 문장해석 잘못"

통일원은 1일 북한 노동당 金容淳 對南담당비서가 전면전 경고 발언을 했다는 외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통일원은 金容淳이 3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북과 남 사이에 평화냐 전쟁이냐 화해냐 대결이냐 한는 첨예한 정세사정도 있으며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민족의 열망이 날로 비등하고 있는 때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했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金의 이같은 발언이 문장상의 해석차이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玫洙〉

▽ 한국일보 1996. 2. 1

"전면전 비화" 金容淳 발언 방송엔 없어

지난달 31일 金容淳노동당 비서겸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의 「전면전 비화」관련 발언을 보도한 북한 중앙통신의 성격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통신은 金容淳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비정상적인 사건은 무력분쟁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그의 발언 전문을 녹음 방송한 중앙·평양방송에는 이같은 위협성 발언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통신은 1946년 발족해 1948년 현재의 이름과 체제로 개편된 북한 유일의 국영 통신사로 노동당과 정무원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해 외국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상태과장 北美협정 체결 노린듯

중앙방송은 대내용, 평양방송은 대남용, 중앙통신은 대외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처럼 공식적인 사안 외에는 중앙통신과 다른 방송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당국이 동일사안을 놓고도 대외용과 대내용으로 따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필요에 따라 국외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작을 위해 중앙통신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셈이다.

이번의 전면전 비화 관련 보도도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과장, 北·美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러 왜곡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金炳讚기자

▽ 경향신문 1996. 2. 7

"北 전쟁도발 가능성 기아확산 생존에 위협"

美태평양 공군사령관

【싱가포르=AP연】 북한은 기아로 인해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美태평양 공군사령관인 존 로버 대장이 6일 말했다.

로버 사령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문제에 관한 회의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한반도는 여전히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전제하고 『한국은 계속 번영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경제적 생존가능성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곳에는 현재 식량부족이 만연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버 사령관은 이어 『북한주민들은 기아로 인해 결국 「전쟁의 길」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사태는 우리 모두가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996. 2. 2

『北 전면전경고』 이념적기만

대내-대외용 기사분리…방송선 언급없어

對南전략 고수속 美-日접근 가속화 노려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인 金容淳이 지난달 31일 「전면전」을 위협했다. 이날 동경에서 청취된 조선중앙방송(KCNA)에 따르면, 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의든 우발적이든 사소한 사고라도 일어나면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나아가서 전면전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불바다」 발언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노골적인 도발위협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같은날 청취한 북한의 중앙방송에 따르면, 金容淳은 정당 사회단체 회의의 보고에서 「全面戰(전면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金은 이 보고에서 『올해 남조선과 해외의 통일애국인사들과의 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도 좋다』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늘 해오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중앙방송은 대내-외 겸용 방송이다. 이때문에 통일원 당국자들은 1일 오전 『동경에서 조선중앙통신을 청취한 AFP측이 한글을 영문화하는 과정에서 오역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AFP 동경지국장인 타이 퍼씨는 전화통화에서 『조선중앙통신의 전문은 영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誤譯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북한 정당 단체 연합회의, 올해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이라는 제목의 한글版 전문 역시 金의 전면전 발언을 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남전략을 고수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읽게하는 대목이다. 또한 金의 연합회의 보고에서 우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당국자간 회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남한배제」를 고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관계자들은 일단 金의 발언을 심각한 「전쟁위협」이라기보다는 對美-日 접근을 가속화시키기위한 「엄포」로 보고 있다. 한반도위기관리를 강조하는 미국, 대북 진출을 서두르는 일본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의해왔다. 金의 발언은 우리의 정치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대남심리전 차원의 교란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金演光기자〉

▽ 조선일보 1996. 2. 10

"北, 한국침공땐 체제붕괴"

美 前국방차관보 中國은 臺灣침공능력 없어

【워싱턴=聯合】 北韓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매우 신속히 격퇴당해 체제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조지프 나이 前 美국방차관보가 8일 말했다.

지난해 12월까지 美국방부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현행정부의 對아시아 안보전략의 기초를 마련했던 나이 前차관보는 이날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매우 빠른 시간내에 철저히 격퇴될 것이며 그것은 곧 북한 체제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軟착륙」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을 사전에 억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1996. 2. 16

"北韓 아직 안정적 상태"

美국무부 외교부등 정부기능 정상

【워싱턴=金昌均기자】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북한에서 진행중인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도 불구, "북한정권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의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근거로 "金正日의 지도력이 도전받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중이며, 평소와 다른 군사움직임 등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成慶琳씨 탈출, 평양 총격사건 등에 대해 언론 보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 "이같은 상황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2. 10

"北韓軍 특이동향 포착"

安企部 최근 훈련강화등 지휘체계 보강"

북한은 89년 이후 계속 줄여오던 군사훈련을 최근 핵문제 등 대내외정세와 관련, 점차 확대하는 등 군사적으로 특이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가안전기획부가 9일 밝혔다.

안기부에 따르면 94~95년 북한군 훈련활동은 91~93년에 비해 지상군과 해군은 1.3배, 공군은 1.5배 늘어났고 올들어서도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우리 지형과 비슷한 지역에서 남침시 나리오에 따라 군단급 공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병의 실사격훈련을 실시하고 동·서해상에서 지난 85년이래 최대규모의 해·공군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동계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지난해 10월 인민무력부장·총참모장 등 군수뇌부가 교체되고 지난해 10월말 항공기 전방재배치 이후 최초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黃性淇기자〉

▽ 한국일보 1996. 2. 18

北 쇠망과정접어들어

최악땐 전쟁도발우려

LA타임스

【로스앤젤레스=연합】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쇠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북한체제가 2~3년내 붕괴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날자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韓美 양국은 북한이 생존을 위해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식량부족사태와 국외탈출 증가, 특히 金正日의 전처 成慶琳씨의 해외 탈출 등 심상찮은 북한 동향을 거론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 서울신문 1996. 2. 12

"北 경제난속 戰力증강 계속"

장사정포 전방 추가배치

平壤의 모험적 도발 경계

국방부는 한·미 양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식량난·체제위기 등 올 겪고 있는 북한의 정세도 불안정하다고 보고 대북 감시와 즉각 대응태세 및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李養鎬국방부장관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지난해 말 북한은 다수의 항공기와 장사정포를 전방기지에 추가배치시키는 등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군사동향과 1·21 청와대기습, 아웅산테러 같은 과거 행태로 미뤄볼 때 북한은 기회만 포착하면 모험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 "북한 주민들은 87년 이후 「하루 두끼먹기 운동」등 감량배급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체 곡물생산량만으로도 최대 9개월분의 배급이 가능하다"면서 "더욱이 수개월분의 군량비축미를 일부라도 방출하면 식량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군사정책과 관련, "긴장상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위의 기능회복을 포함해 남북군사접촉을 활성화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신뢰구축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나가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남북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군사당국자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민·군관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94·95년 2년간 5억 3천5백만평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면서 "올해 군사시설보호 관련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 출입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黃性淇기자〉

▽ 조선일보 1996. 2. 23

"평화협정 前단계 조치" 北,美에 「잠정협정」제의

"공동軍事委도 설치" 외교부 담화

북한은 22일 미국측에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계적인 조치로서 군사적 충돌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북한 외교부는 이날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을 통해 내보낸 담화에서 『현 朝美관계수준을 감안해 조선반도에서 무장 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잠정협정 체결▲잠정협정의 이행을 감독할 「조-미 공동군사기구」 설치▲이를 위한 북-미 대화개시등 3개항을 제시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 판문점 군사정전위 사무실에서 열린 미군측과의 「판문점 일직장교회의에서 이같은 북한정부의 방침을 미군측에 직접 전달했다.

북한 외교부는 이날 담화에서 『잠정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발생시 해결방도, 조-미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등이 담기게 된다』며 『판문점에 설치될 조-미군사공동기구는 유명무실해진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에대해 『중간조치를 하나 설정했지만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는 북한의 기본구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金演光기자〉

▽ 중앙일보 1996. 2. 23

비무장지대 共同관리 명분 南韓배제 접촉線확대 의도

北,美에 '잠정협정'제의 왜 했나

최원기 기자

정전체제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는 북한이 22일 들연 미국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할 「잠정협정」체결을 제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북·미합의문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는데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열전에 돌입한 시점이라는 시기적 측면도 관심을 높이는 부분이다.

또한 평화협정 주장을 뒤로 하고 잠정협정을 먼저 체결하자고 제의, 미국측 운신폭을 넓혔다는 사실과 이를 기화로 북·미간 직접협상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같은 북한의 대미(對美)제의 1차 목적은 남한배제와 워싱턴과의 접촉선 확대다. 즉 비무장지대 공동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기존 정전협정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한편 남한을 배제시키자는 의도다.

북한 외교부가 대미평화협정 제의 2주년을 기해 내놓은 이번 담화에서 눈에 띄는 다른 대목은 평양이 잠정협정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우선 북은 이번 제안에서 「잠정협정」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또 잠정협정 내용과 관련, ▶비무장지대 관리▶무력충돌때 해결방안▶북·미 군사공동위 구성▶잠정협정의 수정 보충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의 잠정협정 제의에 크게 신경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는 74년 3월 최고인민회의(국회)가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한이래 조금씩 표현만 바꾼채 계속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같은 제의에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그럴듯한」대안으로 자리잡을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한미군측은 비무장지대안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내심 우려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전협정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총격전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교섭창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 군사적 관점에서 볼때 북한의 이번 제의는 워싱턴에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마련해놓은 전술적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美 大選앞둬 시기적으로 주목

우리측 "표현만 바꿔 새것없다"

▽ 조선일보 1996. 2. 18

전방 집결 北전투기 일부 후방철수

【東京=李濟기자】 북한이 작년 가을부터 휴전선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결시켰던 전투기 일부를 최근 후방으로 철수시켰음이 확인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청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매년 실시해온 동계훈련도 올해는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에서 망명자가 잇따르고있는 사태와 관련, 『민심이 동요하고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당장 金正日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현시점에선 희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1996. 2. 23

美·北직거래 노린것 정부, 북한주장 일축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22일 북한이 평화협정체결을 전단계로 잠정협정체결을 미국에 제의한 것과 관련, 『북한이 지금까지 제기해온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제의는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으며 △남북당사자 해결 △관련국 협조를 통한 한반도평화의 실효성 보장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 존중 등 3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趙敏皓기자〉

▽ 중앙일보 1996. 2. 24

붕괴 기정사실화… 平和的 진행에 초점

美國의 對北정책 기본인식 변화

김정일 사고방식 예측 안되는 상황
제한적인 지원으로 극단행동 막기

워싱턴=길정우 특파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22일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CIA)국장과 국방부 정보처장 팻 휴스, 토비 가티 국무부 정보담당차관보를 출석시켜 「미국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가졌다. 행정부의 정보담당 최고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미국의 북한문제 인식이 청문회에서 비교적 명확히 표명되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우선 북한지도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정일(金正日)의 공식 권력승계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김정일이 군부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회생을 기대하기엔 지나치게 피폐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위협은 군사적 충돌에서 비롯되기 보다 체제의 한계에서 시작된 내부소요나 사태악화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요약컨대 행정부는 북한 현정권의 붕괴를 거의 기정사실화해 놓고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생 불가능한 체제를 통치하면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의 사고방식을 헤아릴 길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경제조치를 통해 극한상황을 피하는 예비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하나 유의할 대목은 미국의 이같은 인식이 처음으로 공식 표명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작년말까지만 해도 북한 붕괴론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 고위 수뇌들이 본격적으로 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생각보다 북한 내부 상황이 훨씬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런 분석 결과가 도이치 국장의 의회증언으로 표출됐다는 것은 많은 시사를 던진다고 하겠다.

美CIA국장 '北붕괴 가능성' 증언 全文

워싱턴=진창욱 특파원

존 도이치 미 중앙정부국(CIA)국장이 22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한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관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다. 미국은 북한의 정책방향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군부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직도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은 남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의 북한정권은 방식이야 평화적이 될는지, 폭력적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북·미합의 이후 핵개발을 동결했으나 핵시설을 해체한 상태는 아니다.

북한에 식량부족등 경제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은 경제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악화정도도 매우 심한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이같은 경제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역전시킬 능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말해 북한은 식량부족등으로 인한 주민기아·주민탈출등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알 수 없는 의문은 북한이 한국측으로부터 지원제의가 있자 처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심각한 경제난속에서 북한지도자가 사안별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국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한국측 지원제안을 거부했을 때 이를 주도한 그룹이나 이유등 북한정권의 내부결정구조를 모르고 있다.

사견이긴 하지만 김정일(金正日)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金日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내부의 긴장이나 다른 징조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군부를 장악,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세계일보 1996. 2. 24

"北정권 붕괴가능성"

도이치 CIA국장 경제난 악화… 反轉시킬 능력없다

【워싱턴=申相鎭특파원】존 도이치 美CIA국장은 22일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現북한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美안보상황 청문회에 출석, 북한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붕괴가 평화적으로 이뤄질지 과격한 방식을 택하게 될지에 대해선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도이치국장은 이어 연전히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이치국장의 이날 발언과 관련, 워싱턴의 북한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내부상황에 대한 미국정부의 시각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면서 그의 발언도 미국정부의 기존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 국장은 이어 對北 구호 문제 등에 관한 참스 롭 상원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경제 여건이 매우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기아 등으로 인해 그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북한 지도부에 관한 질문에 도이치 국장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해 만족할만한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이치 국장은 金正日 書記가 주석직을 공식 승계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것이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아버지(金日成)가 그랬듯이 그가 권력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1996. 2. 24

"北정권 붕괴가능성" 美CIA국장 발언

"金正日리더십 취약" 판단한듯

美정보책임자 언급… 국무부와 견해달라 주목
駐美 한국대사관 "통상적얘기… 큰의미 없다"

존 도이치 美CIA국장

존 도이치 미중앙정보국(CIA)국장은 22일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붕괴가능성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예측이 미국의 최고 정보책임자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 이같은 도이치국장의 발언은 북한정권이 불안하지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존 미국무부의 입장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주미(駐美) 한국대사관측은 도이치국장의 발언에 어떤 의미부여도 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북한에 무슨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국장이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정확한 어구는 『꽤 가능성이 있다』(quite possible)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사용하는 「있을법하다」(probable)에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도이치국장의 이날 증언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金正日이 金日成이 가졌던 것과 같은 권력을 갖기 위해 자신의 손안에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 이 대목은 金正日이 金日成 사후 2년이 다 되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권력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CIA가 확인해 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권붕괴의 양상을 위로부터의 붕괴와 아래로부터의 붕괴(민중봉기)로 나눈다면 북한의 경우 위로부터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주민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제대로 민주주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다가 철권통치로 인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갈망하는데 전혀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

金正日의 불안한 리더십의 예는 최근 그의 생일 축하행사와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해마다 金日成의 생일때면 간단한 축하파티를 갖는다. 그러나 올해 金正日의 생일(2월16일)에는 어떤 공식적인 축하파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북한통은 『金正日의 취약한 리더십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도이치의 증언은 이런 각도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成혜림등의 모스크바 탈출이나 북한군 하사의 평양주재 러시아대표부 충격전 사건은 경제난에 이은 북한지도부 리더십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李載昊〉

▽ 경향신문 1996. 2. 24

美 "문선" 북한 정세문의

▽ 조선일보 1996. 2. 24

국무부선 "北체제 안정"

【東京=聯】 신각수 외무부 북미국장은 2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북한 체제는 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2. 24

"北 정권 붕괴 바라지 않아"

美 CIA국장 예멘방문

존 도이치 美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19일 예멘 아덴에서 「美국가안보위원회 관계자들과 북한 붕괴 가능성 등 북한 정세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 국장은 이날 예멘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북한 붕괴 가능성 등 북한 정세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이곳 정부 관리들이 전했다. 이들 관리들은 도이치 국장이 북한 붕괴 가능성 등 북한 정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멘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도이치 국장은 이날 예멘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북한 붕괴 가능성 등 북한 정세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이곳 정부 관리들이 전했다. 이들 관리들은 도이치 국장이 북한 붕괴 가능성 등 북한 정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멘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무부·CIA 北평가 왜 다른가

美정보당국 "급변사태 가능성 있다"

美·CIA·국무부 "北붕괴 가능성 있다"

金正日 권력승계 지연 국부와 마찰 때문인듯

▽ 경향신문 1996. 2. 24

▽ 서울신문 1996. 2. 24

韓·美、北「잠정協定」제의 거부

"새협정 불필요… 停戰委 복귀" 촉구

【워싱턴=羅潤道특파원】미국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전단계로 제의를 해온데 대해 22일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맹방인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북한과의 협정은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제의해온 북·미잠정평화협정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원대변인 논평

통일원 金京雄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대미 잠정협정체결 제의와 관련 『정전협정체제를 무실화시키려 하면서 평화체제구축 문제를 미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규정에 따라 현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에 하루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1996. 2. 25

"亞洲 미군주둔 불가피"

美페리국방, 北정세등 불안요인많아

【도쿄=田賢一특파원】윌리엄 페리 美 국방장관은 23일 냉전후 동아시아지역에선 북한정세 등 불안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미군병력 10만명의 전진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이 본도했다.

페리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불안정요인에 대한 「예방방위정책」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페리장관은 예방방위정책의 주내용으로 미군병력의 전진배치에 더해 △아시아지역 국방장관회의 등을 통한 지역안보 대화 △중국과의 「건설적 관여」정책 지속 △핵개발동결에 관한 북한과의 합의를 들고 『이 4가지가 미국의 태평양전략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2. 24

美, 北「잠정협정」제의 거부

"한국배제 협상불가" 단호

北·美관계 근본변화없다" 재확인

우회적 對美접근에 강력한 대응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의 돌발사태 해결을 위한 도문제를 놓고 동맹국인 체결하자고 제의한데 대한 군사공동기구설치 등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 정에 앞서 잠정협정을 미국의 구미를 당길만한 할 수 없음을 강조한 뒤 해 미국이 즉각적이고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 을 수없이 위반해왔음을 밝힌 것은 최근 北·美간 해. 美국무부는 니컬러스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 이지 北·美관계가 근본 은 아님을 강조한 것 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최근의 北·美관계를 한 것은 아직도 북한이 표명은 최근 北·美간에 있어 온 적지않은 대화 한 채 北·美간 관계개선 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이번 對美제스처로 미국 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확인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 됐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번스대변인이 『유사한 제안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보다』고 강조, 북한에 명기보다 北·美간 새로운 화협정을 들먹이지 말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는 속셈의 발로라는 점을 알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北·美 어떠한 제의도 필요없겠다는 의지에서 나왔다 침만 달리 포장해서 평 상까지 시도해 보려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맹방인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북한과의 협정은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제의해온 북·미잠정평화협정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스대변인을 통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응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제안을 외교부대변인 담화라는 무게를 실어 발표했다. 또 이 제안에는 비무장지대 관리와 휴전선에서 분위기로 볼 때 주목할 점이 적지않다.

번스대변인은 북한의 제의를 일축하는 이유로 ▲53년의 정전협정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한반도문제를 놓고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 위한 北·美제네바협상 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 강조해 왔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거부입장 표명은 북한이 협의도 북한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것』임을 강 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조하면서 보려는 데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은 미국이 제네바협상 기회에 北·美간 평화협 대화의 끝을 연결해보겠다는 의지에서 나왔다 는 것을 충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워싱턴=鄭炳鎭파원】

▽ 서울신문 1996. 3. 2

美·日 "北韓軍 영향력 증대 주시"

脫北사태는 체제붕괴 조짐 간주

美태평양사령관-日합참의장 회담

【도쿄=姜錫珍특파원】일본을 방문중인 조지프 프루에 신임 미태평양군사령관은 29일 니시모토 데쓰야(西元徹也) 일본통합막료회의 의장(합참의장에 해당)과 회담을 갖고 북한 내부정세를 논의, 「북한군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일본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그러나 니시모토 의장은 『군사적 행동을 일으킬 것 같은 특이한 행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으로부터 망명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서 『동유럽 여러나라와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망명사태를 체제붕괴의 조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루에 사령관은 한편 이날 가진 내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태평양지역 안정에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최근의 홍수와 기근으로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폐쇄성이 장래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3. 7

한반도안보 매우 위험 페리 美국방 上院증언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5일 『식량 및 에너지 부족으로 북한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한반도는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페리장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97회계연도 국방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이에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리장관은 지난 2년동안 한·미 양국군은 현대화 추진과 협동작전 능력 강화에 주력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북한의 군사력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저지력 및 방어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1996. 3. 3

"한반도 평화확보 3국서 할수 없다"

"평화협정 체결" 北, 美에 재촉구

【東京=姜成輔특파원】북한은 미국에 휴전협정을 대신할 잠정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2일 재촉구했다.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관영 로동신문의 보도를 인용, 『관대함은 관대함으로, 선의는 선의로 응답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도덕과 관례』라고 전제하고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최근 북한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받아들이지 말라는 충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미국은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확보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있으며 이는 어떠한 제3국에 의해서도 대신 행해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같은 책임을 더이상 피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3. 10

北, 停戰체제 파기 위협

美서 「잠정협정」 거부땐 일방조치"

판문점비망록 발표

【서울=內外】북한은 8일 「판문점대표부」 비망록을 발표, 미국이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체제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9일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이 지난달 22일의 잠정협정체결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같은 비망록을 발표했다.

비망록은 미국이 잠정협정체결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존의 정전체제 유지가 한반도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를 『평화에 대한 구걸』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택권은 결코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2월22일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 목적을 내세워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의 단계적 조치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바 있다.

▽ 경향신문 1996. 3. 13

駐泰 북한대사

"北-美 평화협정 체결땐 한국 옵서버참가 검토"

【방콕=연합】북한은 12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이 제의한 잠정평화협정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북·미간에 잠정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은 앞으로 열릴 평화회담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주재 이삼로 북한대사는 이날 방콕의 북한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난 53년 한국전을 중단케 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첫 조치로 지난달 26일 북한 외교부가 제의한 잠정평화협정을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의 일환으로 제의한 잠정평화협정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하고 협정이행을 위한 朝·美 공동군사위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북·미간에 열린 장성급 회담에 옵서버로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북·미간에 잠정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예비회담 단계에서 옵서버로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3. 9

정부, 北전쟁능력-식량난 재검토

北 148곳에 비밀 군량미 창고 郡단위마다 5천톤 비축추정

북한은 전국의 1백48개 郡단위마다 지하비밀 군량미 창고를 1개씩 보유, 오래전부터 전쟁준비를 해온 것으로 정부관계당국에 의해 최근 밝혀졌다.

북한의 비밀 군량미 창고의 정확한 규모와 비축곡물량은 현재 관계당국이 파악중이나 대략 1개소당 5천t을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식량난등을 재검토하는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군량미 창고가 인민군 군단급에만 1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해왔으나 최근 지하 비밀군량미 창고가 郡마다 한개씩 마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민간용 곡물창고는 지상에 있으나 군량미창고는 지하갱도 속에 비밀로 만들어져 있다』면서 『비축된 곡물량은 1개소에 5천t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밀 군량미창고가 새로 밝혀짐으로써 북한의 비축군량미는 그동안 추정치 약 1백만t보다 훨씬 많은 2백만t정도로 예상돼 군량미를 풀 경우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당국은 이와함께 전쟁비축용 유류 저장탱크도 郡단위마다 비밀리에 설치돼 있을 것으로 보고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趙敏皓기자〉

▽ 중앙일보 1996. 3. 15

"北체제 붕괴징후 안보인다"

최근 訪北 해외소식통 食糧難도 지역별로 차이 커

배명복 기자

식량난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붕괴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한 해외소식통이 밝힌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근 북한을 방문, 북한정부 관리들과 함께 평양·남포등을 둘러본 이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경제위기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관찰 결과를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상주중인 국제기구 관계자들과도 접촉, 지역에 따라 식량난 차이가 큰 것은 지역별 자급자족 체제에 따라 식량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동아일보 1996. 3. 17

"北韓붕괴 시기-방법의 문제"

게리 럭사령관 병력 휴전선 전진배치 도발우려

【워싱턴=李載昊】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국 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증언에서 북한의 붕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럭사령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도발적 행동과 말도 훨씬 더 위협적이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제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냐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 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럭사령관은 『북한이 대규모의 병력과 무기를 비무장지대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해 미군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에는 청와대나 주한미군사령부까지 6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매우 짧은 시간내에 붕괴되거나 혹은 내정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절박한 필요성때문에 한국공격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평양의 지도부가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결집력을 갖고있지 못하거나 앞으로 이를 상실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럭사령관은 이같은 이유때문에 한국에 장거리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17

북한 위협 완화되면 동아시아 미군 감축

미 국방대 보고서 제의

【워싱턴=교도 연합】 미국 국방대학은 북한의 안보위협 완화를 전제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2백24쪽 분량의 '전략평가 96'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제의하고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경우 미 행정부가 이 지역 미군 주둔을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의 안보정책 입안자들이 방위태세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세계일보 1996. 3. 22

美 평화협정 체결거부땐 "北 모종조치" 위협

安保理에 공한

【유엔본부=AP연합】 北韓은 지난주 유엔안보리에 공한을 보내 美國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새로운 장치」로 대체하기 위한 최종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현재의 정전협정이 무용하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휴전선 일대에서 도발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북한의 공한은 이달초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논평과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을 배제한 北-美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 공한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끝내면서 지난 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의 기반을 침식했다고 비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감시하기 위한 체제는 이미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선택권은 미국에게만 있는게 아니다』며 『만약 미국이 평화협정 제의에 응하길 거부하고 시일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우리는 정전협정을 「새로운 장치」로 대체하기 위한 최종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익명을 요구한 美외교관들은 이번 공한은 미국정부가 그동안 계속 거부해온 북한의 「기본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3. 14

美서 평화협정 不應땐 北 무력시위 가능성

日紙

【東京=裵仁俊】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의 崔漢春참사관은 북한이 지난달 제의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北-美잠정협정 체결」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북경(北京)발로 보도했다.

崔참사관은 12일 요미우리신문등과 가진 회견에서 또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측이 지난8일에 이어 또다시 이같은 경고를 표명한 것은 잠정협정체결을 둘러싼 초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병력이동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996. 3. 25

주한美軍 "北 붕괴중" 평가

7단계 시나리오 작성 本國보고

"이미 2~3단계" 대책 강구

<붕괴 7단계>
① 식량난 ② 자원공급 차별화
③ 지역독립 ④ 중앙정부 억압
⑤ 저항 ⑥ 균열 ⑦ 권력의 재편

주한미군이 최근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해 페리 美국방장관 등 美 국방부와 백악관의 고위관계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고갈 단계로부터 권력 재편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주한미군이 만든 것은 처음으로, 주한미군측은 현재의 북한이 「자원공급 차별화 단계」와 「지역적 자구책 마련 단계」 사이로 이미 3단계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평가는 美 정부가 북한의 붕괴문제를 「가상」이 아닌 「현실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주한미군의 한 고위소식통은 『주한미군은 지난달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서 밟을 7단계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이 시나리오는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고위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美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보고서는 李養鎬 국방장관과 金東鎭 합참의장 등 한국군 수뇌부에도 최근 통보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측은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단계별 북한 붕괴 대응방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하부구조 붕괴유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전쟁발발 가능성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붕괴가 ①식량난 등 자원고갈 단계로부터 시작돼 ②대상을 선별해 자원을 공급하는 차별화 단계 ③생존을 위협받음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지역독립 단계 ④중앙정부의 억압단계 ⑤(내부)저항단계 ⑥폭력을 수반한 균열단계 ⑦권력 재편 단계 등 7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붕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 이미 북한의 초기붕괴과정이 시작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 붕괴과정을 담고 있으나 탁상공론식의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 美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庚龍源기자〉

▽ 세계일보 1996. 3. 30

北 "휴전선 긴장고조" 위협

金光鎭차수 "南군사적 움직임 대응책강구" 경고

러외무부 "北경고성발언 유감"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金光鎭차수는 29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연습에만 볼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민군대는 응당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金제1부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방송을 통해 이례적인 「담화」를 발표,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대응책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이상 유지할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휴전선 부근의 긴장고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우리 軍이 최근 「호국96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 의례적인 위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李在承·趙敏皓기자〉

【모스크바=연합】러시아외무부는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을 현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는 북한 인민무력부부장 金光鎭차수의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9일 논평했다。

▽ 한국일보 1996. 3. 30

"北 조기붕괴 예상"

위기관리 실패 도발가능성"

럭駐韓美사령관

【워싱턴AP=연합】북한은 아마도 매우 빠른 시일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이 28일 주장했다。

럭 사령관은 이날 美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아주 빠른 시일내에 식량부족 등 내부 상황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한국을 공격하거나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폭력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그같은 상황이 잘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정권의 종말이 폭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쿠데타 등과 같이 외부세계에 위협을 주지 않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방위 미사일방어체제(TMD)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1996. 3. 30

美"화학무기공격땐 核반격"

北韓등 5國 겨냥 경고

페리國防 「사용금지 협약」 상원비준 촉구

【워싱턴=AP·연합】화학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상대국가에 대한 핵보복을 고려할 것이라고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이 28일 밝혔다.

페리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미국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무모한 국가가 있다면 우리는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방법으로 반격할 것』이라면서 『모든 종류의 무기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증언은 화학무기 생산및 사용금지협약에 대한 상원의 비준을 얻어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49개국의 비준을 얻은 이 국제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8개국이 더 비준해야 한다.

제시 헬름스 외교위원장은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추정되는 16개국중 북한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등 5개국이 협약서명 1백60개국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협약에 대한 자신의 반대입장을 되풀이했다.

헬름스위원장은 또 5천t을 제외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자는 美-러협정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의 공개를 거부해온 러시아는 화학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1996. 3. 31

北도발책등 단호대처

국방부 인민무력부간부 전쟁위협발언 경고

국방부는 30일 북한 金光鎭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휴전협정 폐기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언동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체제내부 문제를 호전적 도발하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엔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경고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朴炳玉 국방부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증진이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인데도 북한은 군 고위책임자의 입을 빌려 호전적 발언을 해 국내외에 불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朴실장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불바다 발언 등 호전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어떠한 책동과 도발을 해오더라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在承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

□ 한반도 '전쟁위기론' 왜 다시 나오나

이상기 기자

또다시 한반도 전쟁위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쪽에서 북한체제 붕괴 위기에 따른 전쟁도발 가능성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서도 '전쟁은 시간 문제'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러나 남쪽은 물론이고 북한이나 미국 어디에서도 위기감은 체감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이런 극단적인 '말 전쟁'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발적 발언은 먼저 미국쪽에서 나왔다.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데 있다"고 경고했다.

듣기에 따라선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이나 국방부 등 남쪽 관계당국의 분석은 매우 냉정하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지원을 하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덧붙인다면 정전협정 폐기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접촉 길을 열기 위한 의도와 대내적으로 체제내부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라는 설명

북, 외교전술용 미, 예산확장용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아주 이른 시일 안에 내부상황에 대한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한국을 공격하거나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도이치 미 중앙정보국장도 지난 2월22일 상원 정보위에 나가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지극히 단호했다. 인민무력부 김광진 제1부부장(차수)은 지난 29일 "인민군대의 사명은 침략행위를 방어하는 데만 국한돼 있지 않다"며 "문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럭 사령관 및 도이치 국장의 '북한 붕괴 또는 전쟁도발' 발언에 대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부와 정보기관의 고위간부로서 '언제든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제쳐둔다. 이와 함께 4월 중 실시되는 미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국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며 또 습관적으로 그래왔듯이 한국에 무기판매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이건 미국이건 남쪽으로서는 몹시 불쾌한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 동아일보 1996. 3. 31

"한반도 전쟁가능성 희박"

美-中 日선 北위협 분석작업

【東京=李東官】일본 정부는 북한의 金光鎭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휴전상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위협 발언을 한데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고 정보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관방장관은 29일 金의 발언에 대해 「긴장에 몰린 상황에서 전의(戰意)를 드높이려는 의도가 곳곳에 보이는 과격하고 충격적인 표현」이라며 「가능한한 정확한 정보를 빨리 수집,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李載昊】미국 국방부는 29일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바뀌지 않을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金光鎭차수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한반도 상황은 안정돼 있다」는 말로 논평을 대신했다.

니컬러스 번스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논평하고 金차수의 한반도 정전체제 개편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그같은 주장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으며 정전위원회는 계속 열려야 한다」고 답했다.

【워싱턴聯】중국은 북한이 휴전문제, 연료부족과 내부불안 삼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미국 군사정보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군이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을 상대로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중국측의 견해로 보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한반도 팽팽한 긴장상태"

▽ 동아일보 1996. 4. 3

孫成弼 北대사 러議會서 주장

"人民軍 궐기않을수 없다"

【모스크바=文明憲】孫成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2일 『조선반도에는 지금 전쟁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이 조성돼 있으며 이같은 긴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과 미국 우익 보수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孫대사는 이날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지정학위원회(위원장 알렉세이 미트라파노프)의 「金光鎭차수(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 이후의 한반도정세」를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 金의 담화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孫대사는 『긴장상태가 조성돼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는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조국의 보위를 위해 궐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金光鎭 부부장이 말한 것처럼 적들이 우리 강토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면 우리 군대는 적들을 짓뭉개 놓고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

孫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金正日 배지를 양복 왼쪽 깃에 단 孫은 이어 지정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金光鎭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측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아마 상대측도 金부부장의 담화를 연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조선과 대화와 접촉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金泳三정권은 문제를 북반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대화와 접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대화하려는 것은 조선과 미국간의 완전한 외교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다만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조·미간의 완전한 외교관계를 위한 회담도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4. 1

"北韓軍 긴장·초조감 고조"

日訪北團회견 金正日 최근 전선 3회 시찰

【도쿄·北京=姜錫珍·李錫遇특파원】일본 외무성 외곽단체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방북단(단장 나가이 신야 소장대행)은 31일 북한군에 긴장감이 확연히 고조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외교부 산하단체인 군축평화연구소의 초청으로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이들은 『북한의 金正日비서가 최근 3번이나 전선을 시찰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북한군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행중 복수의 소식통은 『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방문으로 북한 외교부 군축평화연구소의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양측이 외교 담당부서의 외곽단체 등을 통한 협의채널을 가동시켜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들은 또 북한도 변화와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방에 따른 체제불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외곽이 다소 흔들릴지 모르지만 권력핵심은 아주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 일행 4명은 30일 北京의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단원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교수(본지 해외필진)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金光鎭이 「한반도의 휴전상태는 한계점에 달했다」고 위협한데 대해 ▲한국에 대한 경고 ▲휴전협정을 파기해 미국과의 사이에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싶다는 기대감 ▲국내 단속 등 3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1996. 4. 4

러, 한반도 「정전협정」지지

외무차관 北관리에 평화체제반대 밝혀

【모스크바=연합】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은 金光鎭 북한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협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재의 (한반도) 정전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파노프 차관은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공통된 입장은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체제가 마련된 뒤 기존의 협정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대화의 방법에 있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한반도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소집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II. 북한, 정전협정 위반

2. 판문점 무력 시위

北 "비무장지대 불인정"

정전협정 따른 모든임무 포기 出入者-차량 식별표식 않겠다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

북한은 4일오후 조선인민군대표부 판문점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일부를 포기하고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담화는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전협정의 일방적 파기선언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한 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더 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 비무장지대 남측은 완충지대로서의 고유한 의무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는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와 새로운 공격출발진지로 변했다』면서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행동질서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이날 담화에서 지난달 29일 金光鎭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인민군대가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식별표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北 담화문

지난 3월29일 발표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는 우리인민군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완충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충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답화에서는 우리인민군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완충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충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제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북침격발기를 당김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더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하였다.

남조선의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안에 핵무기와 자동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며 천명이상의 군사인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땅크와 각종구경의 포, 핵무기들을 대량반입하고 수많은 무장인원들을 끌어들여 전개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이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100미터거리에있는 비무장지대안의 경계초소에 대규모 군사시설물을 공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의무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는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하나의 새로운 공격출발진지로 전변되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 정전협정에 규제되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더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공포한다.

첫째로 조선인민군측은 비무장지대는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하나의 새로운 공격출발진지로 전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상기 조치로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제정된 모든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孫成弼 주러시아대사 발언 요지

"한반도 전쟁前夜… 군 궐기 불가피"

조선반도에는 지금 전쟁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 긴장상태가 조성돼 있는 이런 조건하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조국의 우리 군대는 적들을 짓뭉개 놓고 말것이다.

처럼 적들이 우리 강토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면 보위를 위해 궐기하지 않을 수 없다. 金光鎭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말한 것 같은 긴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과 미국 우익보수세력에 의한 것이다.

남조선과 대화와 접촉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金泳三정권은 문제를 북반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않고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하기 때문에 대화와 접촉을 할래야 할 수 없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위해 대화하려는 것은 조선과 미국간의 완전한 외교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일·모스크바)

美"심각사태 아니다"

【워싱턴·평양·도쿄외신=종합】 美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북한의 정전협정 의무포기 선언을 『심각한 사태의 진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선언은 경고성 이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4월16일로 예정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주재 외국관측통들은 이날 북한의 이같은 성명발표가 미국측에 압력을 넣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도출하려는 기도라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 1996. 4. 5

도발대비 軍태세 강화

政府 심야 통일안보대책회의

정부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이 정전체제를 전면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판단,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일밤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날 선언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소규모 도발은 물론 전면적인 군사작전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군의 대응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이같은 행동이 北·美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미국에 대해 북한의 책동에 대한 경계를 요청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韓美양국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키로 했다.

朴庸玉국방부국방정책실장은 정부 대책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 성명을 발표,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하여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실장은 『이번 북한측 발표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朴실장은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남북군사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도발 가능성은 별로 큰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4. 5

통일안보회의 표정

北측 기습발표에 놀라움… 이례적 장시간 숙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 일본의 대북접촉에 대응, 남북관계 개선방향을 모색하던 통일원 외무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발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비롯, 향후 대책을 긴급 숙의했다.

○…4일 밤8시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긴급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權五琦통일부총리 孔魯明외무장관 李燮鎬국방장관 權寧海안기부장 등은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었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위협이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비무장지대 지위불인정은 비무장지대에서 무장을 하겠다는 군사행동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석장관들은 이같은 북한 책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전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두 시간 가량 계속됐는데 회의장주변은 긴장된 분위기였다.

통상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발표는 통일원차관이 맡아왔으나 이날은 朴庸玉국방정책실장이 발표했으며 「국방부성명」형식을 취했다.

▽ 세계일보 1996. 4. 5

러, 北에 대표단 곧 파견

停戰협정파기 관련 南北韓 충돌 우려 전달

【모스크바=신영】러시아는 한반도 상황 악화및 남북한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한다고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이 4일 밝혔다.

파노프차관은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정전협정과 관련,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보고 있으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노프차관은 오는 10~12일중 평양에서 개최되는 러시아와 북한간 무역-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및 외무차관급 정치협의회의에 비탈리 이그나텐코 부총리가 이끄는 러시아대표단을 파견, 이같은 러시아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정전협정 포기성명 평화조약체결 압박용

【도쿄=연합】남북한간의 비무장지대(DMZ)의 유지 및 통제에 관한 정전협정상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DMZ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같다』고 일본의 한 북한전문가가 4일 말했다. 일본언론기관인 라디오프레스의 스즈키 노리유키씨는 북한측이 이날 미국에 직접 평화조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그같이 논평했다.

▽ 한국일보 1996. 4. 5

◇金泳三대통령이 4일 중부전선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申翔淳기자】

"北도발땐 파멸 자초"

金대통령 전방시찰

金泳三대통령은 4일 상오 중부전선의 ○○사단을 시찰, 전방지역의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경계근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金대통령은 최전방 ○○관측소에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튼튼한 안보태세의 유지가 국가발전의 초석』이라고 말하고 『최근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나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 스스로가 파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金光鎭인민무력부부부장과 孫成弼駐러시아대사의 전쟁위협발언을 삼기시키며 『북한은 언제든지 발악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만큼 군이 최전방을 지키는데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평화는 힘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군은 물샐 틈 없는 경계와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장병 여러분의 피눈물나는 훈련이 있어 후방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申載旻기자】

▽ 경향신문 1996. 4. 5

여야 「즉각 철회」 촉구

與 北책동에 공세적대응 필요
野 "정전협정 일방파기" 유감

신한국당은 4일 북한의 정전협정효력 파기선언과 관련, 金哲 선대위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신한국당은 정부가 1차적으로 북한의 이같은 책동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통일외무위 소속 徐廷和의원도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방태세를 공고히하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시행위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와 한·중·러의 삼각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회의 김한길 선대위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정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근간으로서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파괴할 수 없는 협약이라면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梁權模 李琪洙기자〉

▽ 서울신문 1996. 4. 5

對北감시수준 1단계 강화

국방부 군사도발 감행땐 단호히 응징

국방부는 4일 북한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임무포기 선언과 관련, 대북감시활동(워치콘)의 강도를 한단계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측 발표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만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어떠한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의거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北경비병 완장 안해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정전협정파기위협 선언이 나온 1시간 뒤인 이날 하오 6시부터 판문점 북한군 경비병력이 완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서는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현행 정전협정은 북한군은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경무」라는 완장을, 우리 군은 검정 바탕에 흰색 글씨로 「헌병」이라는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黃性淇기자〉

▽ 경향신문 1996. 4. 5

韓·美연합훈련 15일부터 실시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수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RSOI」 연습이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한·미연합사는 4일 이 연습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될 속규모의 미군이 참가하게 되며 이 훈련의 목적은 연합사 사령관과 예하 구성군 사령관이 미국에 주둔하는 병력의 증원에 대한 사령부의 수용능력을 훈련·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훈련은 94년 4월에 처음 실시됐으며 이후 연간 1회씩 실시되고 있다.

〈李仲根기자〉

▽ 중앙일보 1996. 4. 5

김일성 사망이후 3발령

◇워치콘=한·미 양국군의 대북(對北)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평상시 4수준으로 있다가 위기가 고조될수록 단계가 3,2,1로 높아진다. 이는 한·미 양국 정보당국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이 워치콘은 지난 94년 7월 김일성(金日成)사망 후부터 3단계로 격상됐다가 최근 북한의 이상 동향으로 강화된 3단계로 돼 있었다. 이에따라 U-2기와 RF-4C정찰기의 정찰 횟수가 늘어났으며, 레이더기지에서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중앙일보 1996. 4. 5

"北 협정파기 不容…즉각 철회해야"

국방부성명 전문

북한은 4일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및 관리와 관련된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며 이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공동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한인원과 차량이 모든 식별표지를 착용치 않도록 할 것임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곧 정전협정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북한측 발표는 지난달 29일 북한 인민무력부 차수 김광진이 휴전협정은 한계점에 달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언동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재차 분명히 한다. 북한은 또한 자신의 입장이 국제적으로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무모한 정전협정 파기행위를 중지하고 정전협정관리기구에 복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일보 1996. 4. 5

「北 비무장지대 不인정」 관련성명

韓美연합사 발표 (全文)

북한군은 4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군의 성명은 여러가지 모호한 점이 있지만 한국전쟁에서의 적대행위를 끝내게 한 53년 정전협정을 파기하려고 북한측이 계속 취해온 일련의 조치로 분명히 위협한 조치이다.

유엔 사령부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북한측에 정전협정은 42년 동안 사고를 예방하고 진행중인 사고를 중단시켰으며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군사적 기능을 해옴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성공적으로 유지시켜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 조치는 북한측이 94년 4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한 이래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련의 조치들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북한측이 취한 조치는 군사대화과정의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측이 취한 이 부적절한 조치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다.

▽ 경향신문 1996. 4. 5

정전협정일지

▲53·7·27 정전협정 조인

▲91·3 정전위 유엔군수석대표 黃源卓소장으로 교체

▲91·3·27 북한 군사정전위 불참 발표

▲91·9·18 북한 延亨默총리 유엔연설에서 북·미평화협정, 유엔사해체, 미군 철수 주장

▲94·4·28 북한 외교부대변인,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위한 대미직접협상요구. 정전위대표 일방철수

▲94·10·28 중국, 정전위 철수

▲95·2·28 폴란드, 중감위 철수

▲95·5·3 북한, 중감위 사무실폐쇄 발표

▲95·5·19 유엔사 스미스 소장, 북에 판문점 군장성회의 개최제의

▲95·6·22 북한, 유엔사측과의 영관급접촉에서 정전협정 파기선언 계획통보

▲95·6·30 북한 외교부 비망록, 평화협정·유엔군사령부 해체주장

▲95·8·25 한국, 군사정전위원회 새 수석대표로 李釋馥소장 지명

▲95·10·18 북한외교부대변인, 평화보장체계 협상거부시 정전체제 완전청산경고

▲96·2·22 북한외교부, 北·美 평화협정 이전단계로 잠정협정체결 제의

▲96·3·8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비망록, 미국이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 취하겠다고 경고

▲96·3·29 金光鎭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른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

▲96·4·4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임무 일방 포기선언

▽ 중앙일보 1996. 4. 5

停戰체제 준수 정부입장 不變

국방부 朴정책실장 일문일답

김민석 기자

박용옥(朴庸玉)국방부정책실장은 4일밤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전협정 파기위협과 관련한 북한의 저의와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나.

『지난달 29일 북한 인민무력부 김광진(金光鎭)차수가 발표한 대로 정전협정이 한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을 북·미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전술로 보인다. 북한은 이처럼 항상 다목적 전술을 써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대응책은.

『이미 우리 군은 김일성(金日成)사망 이후 워치콘 3의 경계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경계수준 강화등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남북이 합의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기존의 정전체제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북한도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우리측과 합의한 것이다.』

—북한의 조치가 4·11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가.

『북한의 대남(對南)전술은 항상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과도 연결돼 있고 특히 대미(對美) 협상 측면이 강하다. 대남 공작측면도 당연히 내포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전협정을 흔들어 보려는 책동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 중앙일보 1996. 4. 5

정전협정관련 日誌

▶1994. 4. 28 북한 외교부대변인, 정전협정 대체 위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필요성 지적. 대미(對美)직접협상 요구
▶4. 28 북한 군사정전위 대표 일방철수
▶5. 24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일방발표
▶9. 2 정전위 중국군대표단 철수결정.
▶10. 28 정전위 중국군대표단 철수
▶10. 31 중국,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요구
▶12. 17 미군헬기 군사분계선 월경(하일먼 사망, 홀 준위 생존)
▶12. 22 하일먼 유해 판문점 통해 송환
▶12. 30 홀 준위 북한억류 13일만에 판문점 통해 송환
▶1995. 2. 28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철수
▶5. 3 북한, 중감위 사무실 폐쇄 발표
▶5. 4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등 중감위 3국 대표 서울회의
▶5. 19 유엔사 스미스 소장, 북한 이찬복 중장에 23일 판문점 군장성회의 개최 제의서한 전달
▶6. 22 북한, 영관급 접촉에서 정전협정 파기선언계획 통보
▶6. 27 손성필 주 러대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시까지 정전협정 불(不)파기 언명
▶6. 30 대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주장하는 외교부 비망록
▶7. 4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이찬복대표, 유엔사 스미스에게 북·미 군사당국자간 접촉 요구 편지 판문점 실무접촉 통해 발송
▶7. 20 유엔사, 북·미 장성급접촉 갖자는 북측제의 거부하는 스미스 명의 편지 중령급 일직장교 접촉 통해 전달
▶7. 20 유엔사 정전위 미군측 대표로 에디슨 워킨스3세 해군준장 대신 넬슨 러닝 공군소장 임명
▶8. 25 한국 국방부, 정전위 신임 수석대표로 이석복(李釋馥)소장
▶9. 25 중국 북·미 단독평화협정 반대. 새평화체제 수립시까지 현행 정전협정 유효하다는 공식입장 천명
▶10. 18 북한 외교부대변인, 평화보장체제 협상 거부시 정전체제 완전 청산조치 경고
▶1996. 1. 10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북·미 군사대표단 회담
▶2. 22 북한 외교부, 대미 평화협정 전 「잠정협정」체결 제의
▶3. 8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비망록, 미국이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경고
▶3. 29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로 「비무장지대 지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된 데 따른 조치」경고

▽ 조선일보 1996. 4. 5

평화협정 겨냥 美에 압력속셈

휴전선부근 중화기배치로 긴장
총선앞두고 韓-美공조체제 시험

北「DMZ규정 준수거부」배경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불인정한다는 북한측의 선언은 그동안 북한이 진행시켜온 정전협정 무력화 공세를 한단계 높이면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실현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94년 4월이후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무력화해왔다. 인원과 장비의 「비무장지대」식별 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북한은 행동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표로 곧바로 정전협정이 파기됐다고 볼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정전협정의 파기는 주요 도발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북한도 위협의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은 제1조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로 돼 있다. 그만큼 양지대는 정전협정 준수 이행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곧바로 유명무실화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정전협정 체제 유지를 위해 비무장 지대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비무장 지대를 자유 출입하며 무장 지대와의 차별화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앞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전차 및 장갑차, 대구경포 등 중화기나 많은 병력을 배치하는등 비무장 지대를 공개적으로 무장화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越境(월경)하거나 군사 시설물의 구축도 예상된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서해5도 등에서의 도발도 예상된다. 북한의 이같은 계산된 위협은 우선 미국을 지향하고 있다. 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대화의 장이 거듭된다면 북한이 원하는 미북간 고위 군사위원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한국내에 불안 심리를 심어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를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맥락에서 이번 위협을 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지난 94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 이후 중립국감독위원단 철수,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사무실 폐쇄에 이어 정전위원회 중국측 대표단까지 철수시킴으로써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는 일련의 조치에 점차 강도를 높여 왔다. 또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안한 뒤에도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협정의 유효성은 인정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결국 북한은 이번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의 와해를 위한 강도높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정전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며 『클린턴의 제주도 방문시 확고한 한미 방위 태세를 강조하는 성명을 공동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庾龍源·宋義達기자〉

▽ 경향신문 1996.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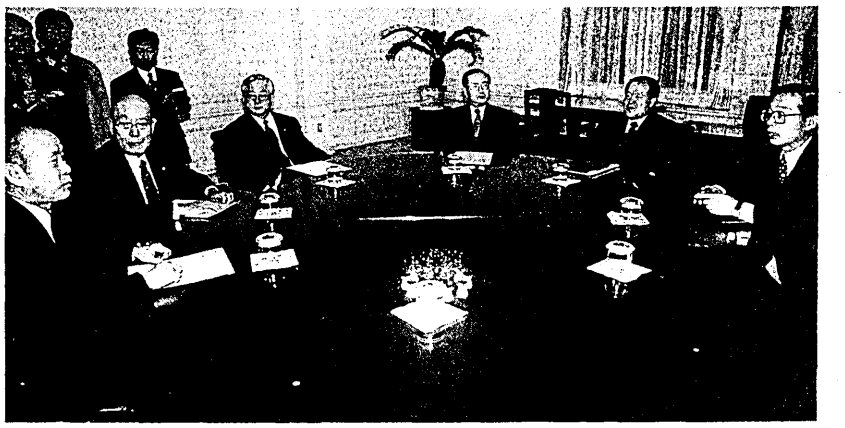
美에 「평화협정체결」 압박

北 「DMZ 임무포기」 의미

북한이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힌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 임무 포기」 선언은 「정전협정체제 무력화」라는 기존조치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담화는 『북측이 먼저 비무장지대에 탱크·포·핵무기등을 반입, 공격발진기지로 삼았다』면서 이에 대응해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임무포기, 북측 인원·차량에 대한 식별표지 미착용등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담화는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 임무중 어느 것을 포기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일부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정전협정체제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군과 유엔군 양측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문과 각종 부속합의문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이 수많은 합의문중 북한이 준수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한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식별표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일단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 포기」란는 선언을 통해 정전체제의 유명무실화를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로 우선 식별표지부터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도발성격의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은 1단계 가시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통행차량에 달아야 하는 황색기와 통행인이 착용해야 하는 황색완장 및 비무장지대 출입자가 달아야 하는 「민정경찰」이라는 완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장 판문점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판문점 운영문제가 예민한 사안인 만큼 판문점 관리·유지에 적지 않은 장애를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측과 유엔측간 인원·차량의 공식적 구별이 안되고 이로써 판문점내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소한 시비가 큰 사건으로 비화할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측의 이러한 정전체제 무력화조치는 91년 3월25일 유엔군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 權五琦통일부총리(左)에서 3번째)등 안보관계고위당직자들이 4일 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급통일안보조정회의를 갖고 심각한 표정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효력파기 선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金貞根기자〉

북한은 94년 4월28일 일방적으로 군정위에서 철수함으로써 군정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14일에는 일방적으로 군정위 북한측 대표를 대신하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임의기구를 신설했다.

북측이 정전협정 무력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북·미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데 있다. 북한은 정전체제로는 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북·미간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논리에 대해 『평화협정은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2일에도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의 중간조치로 잠정협정을 맺자고 제의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달 29일 金光鎭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처,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차 경고한 뒤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공세수위 높여…도발까진 안갈듯

총선앞둔 韓國사회 불안감조성 속셈도

따라서 이번 담화는 평화협정 공세를 미국이 거부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 단계 높은 정전체제 위반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총선을 앞두고 남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선거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李大根기자〉

▽ 조선일보 1996. 4. 5

DMZ규정 내용

지난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의 유지등 협정 당사자들에게 주요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중 북한이 준수거부를 선언한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를 규정한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개의 군사분계선을 획정하고 쌍방이 이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군사분계선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지물을 세운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 세계일보 1996. 4. 5

청와대 반응

체제불안 희석 노린 고육책 분석

청와대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등을 분석하는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청와대측은 일단 북한의 이번 선언이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지난달 29일 金光鎭 인민무력부부장과 지난 2일 孫成弼 駐러시아대사의 전쟁위협 발언으로 예상됐던 「상징적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측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배경을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제스처인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측은 북한이 내부불안을 희석시키려는 대내적 고육책일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식량난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들어 춘궁기가 시작된데다 최근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지원 추가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내부불안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강경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일지도 모른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북한측이 미국과의 잠정협정 체결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위해 군사분계선 불인정 조치에 이어 단계적인 추가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비무장지대의 무장병력 투입이나 무력시위등을 벌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金起弘기자〉

▽ 한국일보 1996. 4. 5

北, 정전체제 무력화 또 "술수"

「비무장지대 不인정」 배경 정부 시각

북한의 비무장 지대 관리인력 포기선언은 정전협정 체제 파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가 최근 계속된 대남 위협 발언에 이어 나온데다 정전협정 파기를 알리는 구체적 경고라는 점을 감안, 하오 8시 긴급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전략이 복합된 담복적·다면적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대미 잠정협정 체결 제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의결과를 발표한 국방부의 朴庸玉정책실장은 『종전의 정전위 무력화 신도와 대미 잠정협정 체결제의, 지난달 29일 인민무력부제1부부장 金光鎭차수의 전쟁위협 발언 등을 모두 일관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충돌 가능성과 관련, 朴실장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상식적 전제를 달면서도 『기존 방위태세에서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도 『이번 담화가 기본적으로는 대미 잠정협정 체결을 위한 지속적 압박전술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외교의 기본 방점은 對美, 對日 관계의 개선이다. 따라서 이번 담화는 한반도의 긴장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 명분을 더해 보자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북한은 북·미 미사일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총선 후 가속화할 대미 대일관계개선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도 남한이 비무장지대에 군사시설물을 공개적으로 구축했다고 비난하는 등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걸 잊지 않았다. 대화상대는 결국 미국이라는 입장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외교부 비망록을 유엔에 전달한 적이 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의 전면 파기를 이행할 경우 쏟아질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정전협정 전체가 아닌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에 관한 제1조만을 문제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우리측 인원들과 차량들에 대한 식별표지를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식별 표지를 안하더라도 군복이나 계급장, 또는 차량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구별이 가능하다』며 『비무장지대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겠다는 절도의 시위용 의사표시로 본다』고 말했다.

【金炳讚기자】

최근 잇단對南위협 연장선에 美·日접근위한 압력전술 분석

잇단「심야 極秘회의」긴장감

▽ 경향신문 1996. 4. 5

北「정전협정 파기」정부·해외 반응

정부는 4일 오후 북한이 정전협정 효력 파기를 선언하자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權五琦부총리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앞서 통일원은 이날 북한 방송의 발표가 있자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보고 宋榮大 차관 주재하에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북측의 의도를 분석하는등 분주한 모습.

대책회의는 북측의 담화가 군사적도발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보다는 평화협정 체제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대책수립을 위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소집필요성을 제기.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있다』고 설명.

○…외무부도 북한의 조치내용이 『예상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앞으로 취할 후속조치 내용에 촉각. 孔魯明외무장관은 이날 저녁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장관실로 관련 정책실장실에서 관계자들 부서 간부들을 소집, 북한의 조치에 대한 외무부의 지 대응책을 논의.

○…국방부는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관련 일부 일방포기 선언이 나온 직후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움직임.

국방부는 이날 李龔鎬장관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북한의 무장관은 이날 저녁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리한 데 이어 주무부서인 정책실장실에서 관계자들 련에 부심. 〈李承哲·李大根 李仲根기자〉

北 돌발행동 眞意파악 부심

강온 양동작전 분석…美·日서도 사태추이 촉각

입장을 정리하고 주요 해외공관에도 긴급훈령을 보내 북한 공관의 움직임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

외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경수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하게 희망했다는 崔英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차장의 방북보고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강온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분석.

○…국방부는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관련 일부 일방포기 선언이 나온 직후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등 부산한 움직임.

국방부는 이날 李龔鎬장관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북한의 무장관은 이날 저녁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리한 데 이어 주무부서인 정책실장실에서 관계자들 련에 부심. 〈李承哲·李大根 李仲根기자〉

특히 정책실 회의는 기자들의 회의장 주변 접근이 전례없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극비리에 진행돼 국방부의 긴장도를 반영.

또 합참의 작전부장이 이날 밤 국방부 지하 벙커로 들어간 것이 확인됨으로써, 우리 군이 북한군 동태파악에 돌입했음을 입증.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도 다른 설명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설명해 이를 뒷받침.

한편 비무장지대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임무를 맡고 있는 주한유엔군사령부도 곧바로 회의를 열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유엔사 측은 이날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이 앞서 통일원은 이날 북한 방송의 발표가 있자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보고 宋榮大 차관 주재하에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북측의 의도를 분석하는등 분주한 모습.

대책회의는 북측의 담화가 군사적도발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보다는 평화협정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94년 4월28일 북한 군사정전위대표의 일방적인 철수를 시작으로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줄곧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정전협정 전체가 아닌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에 관한 제1조만을 문제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우리측 인원들과 차량들에 대한 식별표지를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식별 표지를 안하더라도 군복이나 계급장, 또는 차량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구별이 가능하다』며 『비무장지대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겠다는 절도의 시위용 의사표시로 본다』고 말했다.

【金炳讚기자】

해외반응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북한의 정전협정 의무 포기 성명과 관련, 이번 성명이 미국측에 압력을 넣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유지 체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美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정전협정 의무 포기 선언을 『심각한 사태의 진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임하는 게리 럭 駐韓美軍사령관이 최근 美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對韓 미사일網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의 붕괴가 시간문제라고 거듭 강조한데 대해 북한 군부가 「전쟁 불사」란 강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번 선언도 『같은 맥락의 경고성 이상은 아닌 것으로 관단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차인철특파원】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성명이 지난 29일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金光鎭의 담화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金의 담화가 「비무장지대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번 발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군사문제 관련 성명은 첫째 한국에 대한 경고이며 두번째 미국에 대해 잠정협정을 수용하도록 재촉하는 압력이고 세번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이 회답에서 논의될 3국의 대북한 정책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되도록 유도하려는 「김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東京=姜成輔특파원】

○…중국은 북한의 정전협정 포기 선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의 현 정전협정 체제가 유효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경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4일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반응을 꺼리겠지만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정전체제와 관련한 발언을 증폭시켜온 점을 중시하면서도 이번 발표는 군사적인 실제 행동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

【北京=愼榮樹특파원】

北, 병력 또 판문점 투입

5일 130명-어제 2백60명… 수시간뒤 철수

박격포·무반동총·기관총 重무장 공동경비구역서 진지구축 훈련

중무장한 북한군 2백60여명이 6일 오후 7시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 북측지역에 재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은 지난 5일 저녁 박격포 등 중화기로 무장한 1백30여명의 북한군이 진지를 구축했다가 철수한 데 이어 연일 계속된 것이다.

이들 북한군은 이날 오후 7시쯤 트럭 9대에 나눠 타고 판문점 서쪽의 「72시간 다리」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왔으며 오후 8시쯤 82㎜ 무반동총 1정과 박격포 4문, 기관총 5정 등으로 진지를 구축했다가 오후 10시20분쯤 「72시간 다리」를 통해 모두 철수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에 앞서 무장한 북한군 1개중대 1백30여명은 5일 오후 6시쯤 박격포 및 무반동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채 판문점에 투입된 뒤 2시간30분만인 오후 8시30분쯤 철수했다고 유엔군사령부가 6일 오전 발표했다.

북한군이 정전협정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반입이 금지돼 있는 박격포 또는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이 지역에 투입된 적은 작년에도 3차례 있었으나 이처럼 대규모 무장병력이 투입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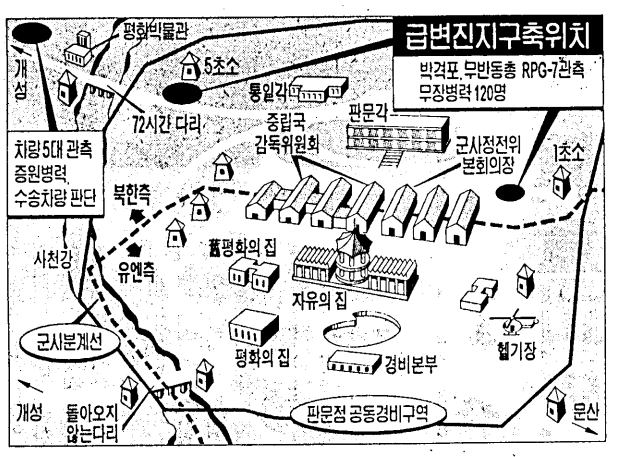
유엔사에 따르면 북한군은 5일 오후 6시쯤 판문점 북측 지역의 판문각 부근 제1, 2초소 사이에 60㎜박격포 1문을 설치한데 이어 오후 6시50분쯤 개인소총과 對전차무기인 RPG-7 2정, 경기관총 4정 등의 중화기로 무장한 1개 중대 규모 1백10여명의 병력을 이틀 동안 진지에 투입했으며, 또다른 북한군 20여명도 개인소총과 82㎜ 무반동총 등으로 무장한 채 판문점 서쪽지역 「72시간 다리」 부근의 제5초소에 투입됐다.〈그림〉

이어 이들 북한군중 30여명이 오후 8시쯤 「72시간 다리」를 통해 판문점을 빠져나갔으며 8시30분쯤 나머지 병력이 반입한 중화기와 함께 모두 철수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측은 이날 오후 6시40분쯤 판문점 경비대대에 비상을 발령했으며 인근 한국군 1사단의 3개 전방초소에 編制(편제)병력 전원을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북한측은 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래 총 42만여차례나 정전 협정을 위반, 하루 평균 27건을 위반했다.

〈庾龍源기자〉



"전쟁은 기정사실 시기가 문제일뿐"

평양방송 보도

【東京=AP연합】북한 최고인민회의(의회격)의 楊亨燮의장은 5일 한반도는 위협한 상황에 있으며 전쟁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도쿄에서 수신한 平壤방송이 보도했다.

楊의장은 故金日成주석의 한반도 평화안 발표 3주년을 맞아 연설하는 가운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라면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北 판문점 무력시위와 우리측 대응 日誌

▲3월29일 북한=金光鎭 인민무력부 부부장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가 아니라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하는 데 있다』는 담화 발표.

▲4월2일 북한=孫成弼주러시아대사 『조선반도는 지금 전쟁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인민군대는 궐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

▲4월4일 하오5시 북한=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다』고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

▲4월4일 하오8시 정부=긴급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 어떤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의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발표.

▲4월4일 밤 주한유엔군사령부=성명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괴하려는 분명히 위험한 조치』라고 유감 표명.

▲4월5일 북한=楊亨燮최고인민회의 의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평양방송 통해 연설.

▲4월5일 정부=대북정보감시태세를 「워치콘(WATCH CONDITION)3」에서 「워치콘 2」로 15년 만에 격상.

▲4월5일 북한=하오6시쯤 북한군 1개중대 1백20명을 박격포와 기관총 등으로 무장시킨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으로 투입, 2시간30분만에 철수.

▲4월6일 정부=金泳三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라』고 지시.

停戰협정준수 촉구

정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내 군사적 긴장고조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선이후 밝힐 예정인 쌀제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對北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전협정 무력화를 계속하면 총선후 대북지원등 획기적인 대북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어진다』면서 정전협정 위반을 중단해야 쌀제공등을 할수 있음을 밝혔다.

〈趙敏皓기자〉

러 외무차관 평양急派

한반도사태 논의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키 위해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차관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날 『파노프차관이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파노프차관외에 금명간 비탈리 이그나텐코 부총리가 이끄는 사절단도 평양에 파견, 정전협정을 둘러싼 일련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려전달과 함께 경제·과학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外】

▽ 중앙일보 1996. 4. 7

北 무력시위 "1回性 아니다" 판단

金대통령, 安保회의 소집 배경

김두우 기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6일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의 휴전협정 폐기 움직임등을 『고의적이고 장기적인 구도하에서 취해진 의도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윤여준(尹汝雋)청와대대변인의 발표문 형식으로 발표된 이 말속에 金대통령과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함축돼 있다.

金대통령은 최근들어 부쩍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 자주 언급해왔다. 북한의 군부가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증거와 징후들이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데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대미(對美)평화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만을 국제긴장으로

汎정부차원 대응책 점검
주도권잡은 北군부 경계

돌려야 할 긴박한 내부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 경우 북한의 동향을 우발성내지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본이 수교협상을 진전시키기도 어렵다』면서 『북한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취임후 세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점검하고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내부정세와 군사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비책을 점검했다는 것이 尹대변인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문은 의외로 차분했다. 북한의 움직임을 「의도적 도발행위」로 규정했을 뿐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용어는 피하는 수위조절을 했다. 『金대통령이 더 이상의 공격적인 발언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때문이었다』고 한다.

▽ 세계일보 1996. 4. 7

金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소집

北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

긴장 계속조성땐 쌀등 지원중단
「워치콘2」 발동… 北동향 감시강화

金泳三대통령은 6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과 관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장병력 투입등과 관련, 『북한이 이번에 취한 일련의 조치는 종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장기적인 구도하에서 취해진 의도적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 孔魯明외무 李龔鎬국방부장관과 權寧海안기부장 金東鎭합참의장등으로부터 북한의 도발배경과 군사동향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최근 노골적인 도발위협을 하고 있는만큼 더욱 철통같은 對北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우리 군은 韓-美간의 확고한 군사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은 북한의 어떠한 협박이나 도발에도 흔들림없이 정부와 군을 믿고 생업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내부정세와 군사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비책을 깊이있게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회의로 이날 회의 소집은 北核문제가 증대고비를 맞았던 94년 6월과 金日成사망 직후인 같은해 7월9일에 이어 취임후 세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李壽成국무총리와 羅雄培경제-權五琦통일부총리, 孔魯明외무 金錫友내무 李龔鎬국방 朱燉植정무1장관, 權寧海안기부장, 朴益浮비상기획위원장, 金東鎭합참의장등이 참석했다.

▽ 동아일보 1996. 4. 7

헌법기구… 93년이후 3차례 열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회의체다. 현행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는 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통일부총리, 외무 내무 재무 국방 정무1장관, 안기부장, 비상기획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합참의장은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3공화국출범 때인 63년 헌법기구로 만들어진 이 회의는 대북 긴장이 고조됐을 때 주로 열렸다.

金대통령 취임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핵사찰거부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고조됐던 94년 6월8일과 한달뒤 金日成사망이 발표된 7월9일등 두차례 열렸으며 이번이 세번째다.

▽ 한국일보 1996. 4. 7

美·日, 北동향 우려속 주시

DMZ不인정등 中·러는 北조치 반대-유감

【워싱턴 = 李相石특파원】 美국무부 글린 데이비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에 이어 무장 군인들을 공동경비구역에 일시 진입시킨 데 대해 『북한은 정전협정 조항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매뉴얼 국방부 대변인은 『그들은 총을 겨누거나 위협하는 등의 호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다시 나갔다』면서 『그들이 보여주려는 것은 더 이상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쿄 = 朴榮基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사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무장관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하며 향후 사태진전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京 = 宋大洙특파원】 중국은 5일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모스크바 = 李進熙특파원】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의무 포기선언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獨도 "협정준수해야"

【본=RP연합 = 특약】 독일의 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은 6일 북한은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켈장관은 이날 평양이 비무장지대(DMZ)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4. 7

北, 對美 안보조약 촉구

楊亨燮의장 北관리 "평화협정체결" 또주장

【평양 = 楊亨燮특파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한반도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끝내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안전보장에 관한 상호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美행정부에 촉구했다고 북한 언론이 5일 보도했다.

그는 4일 평양에서 『남한과는 92년 화해 불가침 교류및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특히 北·美간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중요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 朴榮基특파원】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유지관리 의무를 포기키로 한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6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 관리가 『우리는 그동안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이 관리가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으며 이번 결정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1996. 4. 7

美 "평화협정 논의 불가"

한국에 입장전달

【워싱턴=朴斗植기자】 美정부는 오는 19-20일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美·北 미사일회담과 관련, 이 자리에서 북한측이 美·北간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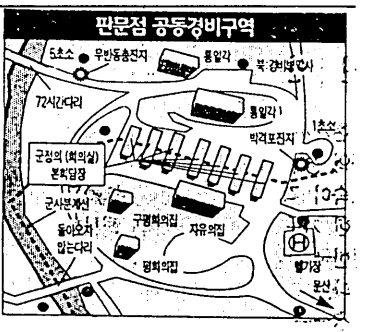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한국시각 6일), 『아직 美·北 미사일회담에 대한 韓美정부간 공식입장 조율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외의 의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글린 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도 4일(한국시각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키 위한 美·北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사일 회담과 북한의 DMZ 규정 준수거부 등 평화협정 공세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란

유엔-북한군 가장 근접 경계석 사이 분할경비



이상기 기자

이번에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무장군인을 투입시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좌우 너비 8백m로 유엔군과 북한군이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 54년 11월 유엔군쪽과 공산군쪽의 합의에 따라 쌍방 35명씩의 군인들이 공동경비해 왔으나 76년 '도끼살인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한 가운데를 지나는 휴전선 위에 폭30㎝, 높이 10㎝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만들어 분할 경비체제로 바뀌었다. 이 구역 안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정전위 본회의실, 공동일직장교 사무실,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돼 있으나 94년 이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또 남쪽 지역에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있으며, 북쪽에는 판문각과 통일각이 각각 경비막사를 옆에 두고 있다.

또 북한이 지난 4일 이 지역 안에서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제1조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떨어진 지점에 설정됐다.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군인 등 인원과 차량들은 일정한 표지와 함께 수적으로 제한을 받아 적대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비무장지대 무효화 선언 이전에도 지난 74년 3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91년 3월 군사정전위 불참발표 △93년 4월 중립국감독위 체코대표단 철수를 비롯한 94년 10월 중국대표단, 95년 2월 폴란드 대표단 철수 등의 조처를 취해왔다. 북한은 올 들어서도 지난 2월22일 정전협정의 파기를 의미하는 '잠정협정' 체결 제의, 3월 29일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한반도 전쟁전야' 발언 및 연성필 주러시아 대사의 북한군 총궐기 위협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남한과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끊임없이 압박해왔다.

▽ 세계일보 1996. 4. 7

北, 停戰委접촉 거부

駐韓유엔사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5일 북한측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 북한군 중무장병력을 투입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6일 오전부터 군사정전위원회 일직장교 채널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앞서 5일 북한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및 관련의무 포기선언과 관련, 對北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3」을 「워치콘-2」로 격상시킨다고 발표했다. 워치콘-2가 발령된 현재 군은 정보수집시스템 투입량을 전보다 훨씬 격상시켜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북한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가능하게 됐다(李在承기자)

▽ 조선일보 1996. 4. 7

北병력 움직임 정밀감시

총선후 본격도발 가능성 주목

◇안전보장회의 金泳三대통령주재로 6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초긴장 DMZ

정부 대응책

일단 주요국의 對北압력 유도주력

局地도발 감행할때 지체없이 응징

정부는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및 정전협정 위반 도발에 대해 일단 정치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와 대책 점검, 군사적으로는 경계태세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6일 金泳三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는 「깊이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나, 구체적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 일단은 金대통령이 평소 좀처럼 열리지 않는 이 회의를 2년만에 소집했고 관계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까지 전원 배석토록 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국민들과 북한 및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뿐이다.

회의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문도 4일의 국방부 성명보다 더 강하거나 급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없이, 절제된 수준을 지켰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는 「과잉 대응」을 피하고 신중히 대처하려는 자세가 이 「전쟁 발발은 시간 문제」라고 한 말을 「대수롭지 않은 발언」 정도로 해석했던 안보관계자들을 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진다. 金대통령은 북한측의 4일 오후 선언이 있기 전인 그날 오전에도 경호실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중부전선의 북한군 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AWACS)를 한반도에 출동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북한측이 도발을 하더라도 「확대 응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은 국가운데는, 북한측이 4·11 총선을 앞둔 한국 내부상황을 감안, 당분간 큰 도발은 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에 도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金昌基기자〉

정부는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및 정전협정 위반 도발에 대해 일단 정치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와 대책 점검, 군사적으로는 경계태세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6일 金泳三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는 「깊이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나, 구체적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 일단은 金대통령이 평소 좀처럼 열리지 않는 이 회의를 2년만에 소집했고 관계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까지 전원 배석토록 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국민들과 북한 및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뿐이다.

회의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문도 4일의 국방부 성명보다 더 강하거나 급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없이, 절제된 수준을 지켰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는 「과잉 대응」을 피하고 신중히 대처하려는 자세가 이 「전쟁 발발은 시간 문제」라고 한 말을 「대수롭지 않은 발언」 정도로 해석했던 안보관계자들을 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진다. 金대통령은 북한측의 4일 오후 선언이 있기 전인 그날 오전에도 경호실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중부전선의 북한군 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AWACS)를 한반도에 출동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북한측이 도발을 하더라도 「확대 응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은 국가운데는, 북한측이 4·11 총선을 앞둔 한국 내부상황을 감안, 당분간 큰 도발은 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에 도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상황 전개가 주목된다.

〈金昌基기자〉

▽ 중앙일보 1996. 4. 7

美·中·러·日등 4強채널 국제적 압력 강화 力點

외교적 대응

배명복기자

외무부는 사실상 정전협정의 파기를 의미하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이 총선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일간 관계개선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각종 외교채널을 동원, 정전체제 유지 필요성에 동조하는 미·중·러·일등 주변강국을 통해 대북 외교적 압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중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비이성적 행위에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단계에서 「눈에는 눈, 귀에는 귀」로 맞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외교적 대응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심각한 체제불안과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과의 수교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잠정협정 체결을 실현할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거부라는 극한 카드까지 들고나온 북한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 4강과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외무부의 판단이다.

외무부는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가 나온지 하루만인 5일 미·중·러·일 외교당국이 일제히 정전체제 유지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만일의 사태 가능성을 경고하는 성명·논평을 발표한 것도 정부의 이같은 외교적 노력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무부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유엔안보리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보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외무부는 북한과 미·일간 관계개선 협상에 북한측의 이번 조치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북·미간 미사일및 유해송환협상, 북·일간 수교교섭 협상재개를 북한의 향후 동향과 연계시켜 한·미·일 3국이 공동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일 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역력하다. 金대통령도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 국내 정치적 상황(총선)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말고 사태 그 자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金대통령 자신은 상황을 좀더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4일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보고받고는, 지난 3월말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金光鎭 기계화부대 남침로에 해당되는 최전방을 방문함으로써, 평소 북한 내부사정의 「심각성」과 우리의 대비를 강조해 온 그의 시각을 다시 나타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군부가 춘궁기를 앞두고 식량난등 궁핍한 대내 경제사정과 사회적 逸脫(일탈)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오키도 등 외교적 노력을 펴는 데 주력하고, 만일 북한측이 제한적인 局地(국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히 응징하되 최소한의 규모로 국한시킨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이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하면 우리도 응사를 하고, 서해 5도를 점령한다면 즉각 탈환작전을 펴 原狀回復(원상회복)을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위기가 상승·악화되는 일은 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제 여론의 비난과 주요국들의 對(대)북한 압력 유도 등 외교적 노력을 펴는 데 주력하고, 만일 북한측이 제한적인 局地(국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히 응징하되 최소한의 규모로 국한시킨다는 것이다. 가령 북한이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하면 우리도 응사를 하고, 서해 5도를 점령한다면 즉각 탈환작전을 펴 原狀回復(원상회복)을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위기가 상승·악화되는 일은 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

대규모 병력 2차투입「초긴장」

北「DMZ파기」 휴전선 상황

한국군 장성급 비상호출 긴급대응
어둠-비-안개… 상황파악 애로겪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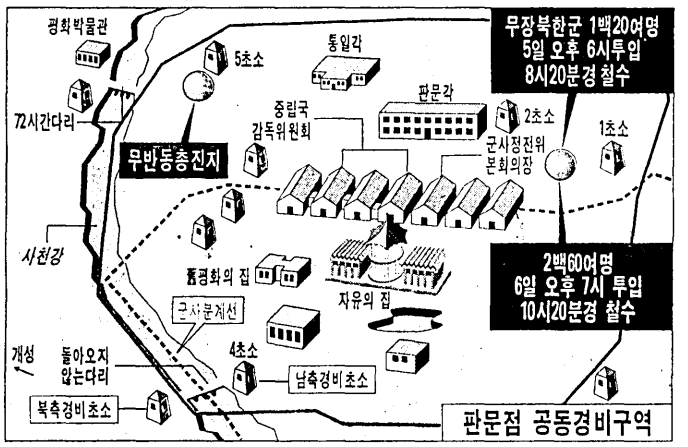
북한군이 지난 5일에 이어 6일 저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중무장한 병력을 2차 투입,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미 양국군은 5일밤 북한군이 일단 철수한 뒤에도 비상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경비와 관측을 계속하다가 6일저녁에 또다시 2백60여명의 대병력이 투입되는 것을 포착, 즉각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5일의 1차 투입에 비해 6일의 2차 투입은 병력규모도 많아졌고 훈련시간도 길어졌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두차례나 병력을 투입한 이후 모든 휴전선의 북한군 동향을 파악했으나 판문점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이한 움직임은 일단 발견되지 않았다.

군당국은 북한군이 다른 지역에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비상경계근무태세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획



유엔司 "정전협정 위반"
주한유엔군사령부 대변인 존 라이츠대령이 6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姜秀寬〉

세를 강화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6일저녁7시경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2차 투입됐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위기조치반」을 가동, 전날 철야근무한 뒤 일단 귀가한 정보 및 작전부서 장성급 관계자들을 비상호출하는 등 긴급 대응조치를 취했다.

합참은 무장한 북한군이 5일오후에 투입됐던 특력 5대보다 많은 9대에 분승해 공동경비구역에 2차 투입됐다는 첫 상황보고를 1사단으로부터 받고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을 경비하는 아군 1개 대대병력과 1사단에 비상을 발령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2차 투입된 6일저녁은 어두운데다 비가 오고 안개도 끼어 아군은 상황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아군측은 처음 북한군이 판문점서쪽 「72시간 다리」를 건너는 것만 관측할 수 있었고 어둠 때문에 무장북한군 1백20여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중무장병력을 1차 투입한 것이 아군에 포착된 것은 훨씬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중무장병력을 1차 투입한 것이 아군에 포착된 것은 식목일인 5일 오후6시경.

북한이 이날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공동경비구역에 병력을 투입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출입시킬 수 있는 병력은 장교 5명, 사병 30명으로 투입된 북한군은 규정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다.

이들은 △61㎜ 박격포 1문 △대전차로켓무기인 RPG7 2정 △82㎜무반동총(무반동포) 2정 △경기관총 4정 △AK소총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우선 인원과 무장규모가 과거와 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군은 지난해 2월20일 새벽 6시5분부터 20분까지, 2월22일 같은 시간 등 두 차례 위반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30여명의 1개 소대병력이었고 박격포를 들여온 것도 2월22일 한 차례뿐이었다.

○…공동경비구역에 나타난 북한군은 오후6시50분경 남북회담이 열려온 북한측 판문각 오른쪽 지점의 1초소와 2초소에 임시진지를 설치하고 박격포와 기관총 등을 설치한 뒤 모종의 자체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군 투입병력은 이어 날이 어두워진 밤8시경 1개 소대병력 20~30여명이 판문각 왼쪽 5초소옆의 「72시간 다리」로 철수하고 8시20분경 나머지 병력이 2차로 철수했다.

병력투입 2시간 20분만이었다. 〈黃有成〉

北軍 판문점 2차투입서 철수까지

박격포등 중무장 2백60명 전술 훈련
유엔司, 北 1차진입후 즉각 비상경계

중무장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다시 나타난 시각은 6일 하오 7시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5일 있었던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 비상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경계병은 다시 2백60여명의 북한군 병력이 중무장하고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이 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9대도 목격됐다. 이들은 박격포, 기관총, 무반동총 등 공용화기와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종의 훈련을 실시한 뒤 하오 10시20분부터 철수했다.

이에 앞서 비슷한 공용화기로 중무장한 북한군 1백30여명은 식목일인 5일 하오 6시쯤 판문점 북한경비구역에 투입됐다.

이날 북한군이 투입한 병력은 축소된 1개 중대규모인 1백30여명.

게다가 권총만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은 개인화기인 AK소총은 물론 대전차화기인 60㎜박격포 1문, 82㎜ 무반동총 2정, 40㎜ RPG-7 2정과 기관총 4정을 지니고 있었다. 유엔사는 6시40분쯤 비상을 발령했다.

6시50분쯤 북한군은 남북회담이 열려온 북한측 판문각 오른쪽 지점의 1초소와 2초소에 임시진지를 구축하고 날이 어두워진 8시쯤 북한군 30여명이 판문각 왼쪽 5초소 옆 「72시간 다리」를 통해 철수하고 30분 뒤인 8시30분쯤 나머지 병력도 철수를 다쳤다. 〈黃性淇기자〉

▽ 중앙일보 1996. 4. 7

한반도 全面戰 가능성은 희박

北 정말 전쟁 일으킬까

김민석 기자

북한이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1백30명의 중무장 병력을 투입한데 이어 6일에도 2백60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쟁가능론과 불가론이 엇갈리고 있다. 또 가능론은 전면전과 국지전으로 나뉜다.

전면전 가능론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극심한 식량난등 경제난과 김정일 권력승계에 따르는 내부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면전을 말하는 사람은 소수다.

한·미연합군사력을 뻔히 알고 있는 북한이 섭사리 전면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화학무기등으로 대량 기습할 경우 초반의 우세를 차지할 수 있으나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한·미연합전력이 월등히 우세하다는 사실은 북한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등을 들어 전면전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들도 국지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문점공동경비구역 사태에서 보듯 북한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긴장사태를 촉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병력(만명)	65.5	104
군단	11	19
사/여단	71	152
전차	2,050	3,800
야포	4,650	10,850
함정	250	764
전투기	520	870

* 자료95~96국방백서

내부갈등 해소위한 局地戰 우려

전문가 "군사도발 불가능"

주한유엔군사령부 대변인 존 라이츠대령이 6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발표하고 있다. <박순배 기자>

북한이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을 월경하거나▶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푯말 제거▶비무장지대내 아군 민정경찰 임무 방해등에서 부터▶해상경계선(NLL, NBL)을 월경한 우리 어선의 총격납치▶백령도등 서해 5개도서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일선 지위관에까지 위임돼있는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보복하겠다는게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고 따라서 부분적 군사충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외교관계자등은 국지전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군사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당면 최우선 과제는 미국·일본등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체제유지에 있으며 따라서 무모한 군사도발은 안하리라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대변인 지적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4년의 「서울불바다」발언 때처럼 긴장을 통해 실속을 챙기려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지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하다.

▽ 조선일보 1996. 4. 7

현저한 위협징후 보일때 발동…평상시는 「워치콘4」

「워치콘2」

「워치콘(Watch Condition)은 韓·美 양국군의 對北 정보감시태세를 말하는 용어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과는 다른 개념이다。

「워치콘은 평상시엔 4수준에 있다가 위기가 높아질수록 韓·美 양국 정보당국간 의 합의에 따라 3→2→1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이에 따라 오산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U-2 및 RV-1D 정찰기、한국군 RF-4C 정찰기 등의 출차와 활동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레이더 기지도 보다 정밀하게 북한지역을 감시하게 된다。

「워치콘 2」는 우리 국가이익에 현저한 위협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동되며 「워치콘 1」은 사실상 전쟁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내려진다。 우리 군은 지난 92년 10월 북한이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準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따라 對北 정보감시태세를 평상 수준인 「워치콘 4」에서 「워치콘 3」으로 격상、5일 저녁까지 「워치콘 3」 수준이 지속돼 왔다。한편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도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평상시의 4에서 3→2→1로 높아진다。「데프콘 3」가 되면 휴가、외출이 금지되고 「데프콘 2」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면서 부대편제 인원이 1백%로 충원되며、「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戰時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1953년 휴전 이후 데프콘이 가장 높게 올라갔던 것은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로 판문점과 1사단 지역에 「데프콘 2」가 발령됐었다。

<庾龍源기자>

▽ 동아일보 1996. 4. 7

서해 5島

유사시 北의 첫 공격목표 가능성

옹진반도-해주등 北진출봉쇄 전략거점

北 73년부터 관할권주장 어선나포 잦아

서해5도중 백령도북위 37도58분) 대청도(〃37도50분) 소청도(〃37도46분) 등 3개섬은 북한 옹진반도의 돌출부인 장산곶과 동만쪽으로 우회하도록 하 대동만을, 연평도(〃37도38분) 우도(〃37도36분) 한 서해함대와 동해함대가 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북 L)이 중간지점에 그어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해주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 통제하고 있던 연해도서및 해면(海面)으로부터 철수 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 2조13항은 협정발효후 10일이내에 쌍방은 50년6월24일 상대방이 점령한 연해도서 및 해면을 철수하도록 하도록 했으나 서해5도만은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도록 예외를 두었다.

그러나 북한은 스지난 55년 내건 결의로 영해12해리를 결정했고 스68년 미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계기로 영해12해리를 공선선포한뒤 스73년 정전위를 통해 서해5도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또 78년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50해리 「군사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실제로 북한은 73년이후 경비정이 간헐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왔고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등 도발을 자행해 왔다.

이번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이후 서해5도를 방어하고 있는 해병6여단은 해안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또 해군구축함과 공군전투기의 초계활동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이 서해5도에 대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방위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는 별도로 서해5도 공격에 대비한 「작전계획 5047」에 따라 대응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관계자는 『북한이 서해5도 또는 기타 특정지역에서 발해를 경우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강력한 응징 보복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한 북한이 군사도발을 자행할 경우 1차 목표가 될 것이라는 서해5도가 북한군의 적에 대해 군사적분쟁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위도상으로 황해도 옹진반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서해5도는 북한군의 해상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거점이기 때문이다.

2개섬은 해주항을 봉쇄하고 있다. 거리상으로는 백령도에서 장산곶까지 17㎞이며 남북간에 무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상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

서해5도로 인해 완전 고립분리되는 전략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서해5도는 정전협정상 독특한 지위가 규정돼 있으나 북한은 이를 인정하

▽ 한겨레신문 1996. 4. 7

'계산된 위협' 화·전 양면전략

북 '비무장지대 불인정·병력증강' 파장

대미 평화협정 체결 위한 분위기 조성용
남북관계·북-미·일 대화 연쇄악화 우려

강태호 기자

얼마전까지도 4월에는 총선 이후로 예정된 북한-미국 유해협상과 미사일 협상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정전협정 불이행 문제가 전체 국면에 영향을 주는 돌발변수로 작용하면서 눈앞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4일 판문점 대표부의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 의무이행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5일 일시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병력을 증강배치해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에 맞서 국방부는 '워치콘 2'의 대북 경계태세 강화와 6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발사 및 군사훈련 위협과 마찬가지로 북한쪽의 이런 움직임을 매우 계산된 행동으로 보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취해 온 정전체제 무력화 조처들처럼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이번 판문점 대표부 담화는 정전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정전협정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 의무 불이행의 근거도 남쪽지역이 완충지대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북침을 위한 공격 출발진지가 됐다는 데 두고 있다. 이는 남쪽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은 같은 시간인 5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통해 미국에 대해 '안전보장에 관한 상호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양방송〉을 통해서는 남북간 베이징 4차접촉에 남쪽이 응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화와 계산된 위협의 '양면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이 보이는 미묘한 차이다. 미국은 국무부의 공식성명 대신 주한미군사령부 이름의 성명을 통해 '모호하지만 위험한 조처'로 규정했으며, '심각한 사태진전'으로는 보지 않는 듯하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같은 이는 이틀 오는 16일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에 와 열게 될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과시적 위협'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화·협상쪽에 무게를 둔 과장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일본쪽 생각도 비슷하다. 이케다 외상은 '미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쪽으로 해석하면서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이번 비무장지대 무효화 조처가 전반적인 북-미 협상과 북-일 수교협상 재개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반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응징조처를 경고하고 있는 남쪽의 대응은 매우 단호하고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조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북한쪽의 선전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한 일종의 '무시전략'이었던 점에 견주어 보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북한의 '실제적 군사위협'을 부각시키는 이런 강도 높은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물론 4·11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베이징 4차접촉이라는 대화공세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가 남북대화에 큰 기대를 두고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일시적 긴장고조로 그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론 총선 이후에도 북한 위협론 내지는 붕괴론이 득세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이로 하여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국면이 거듭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유력하다.

▽ 한국일보 1996. 4. 7

내부단속·對美압박 다목적

식량난·권력층망명등 체제위기 돌파구
韓美日공조 와해·외부지원 확대도 노려

北 연속적 도발 속셈뭔가

관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의도적인것으로 다목적이 중무장 병력 재투입으로까지 확산된 북한측의 정전협정 불인정선언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북한이 노해서는 정전협정 위협이 린 계산된 행동으로 파악 보다 극단화한 지난 2월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북한 내부 단속, 北·外적 문제를 검토해야한 美미사일회담에 앞서 北·다. 이 시기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및 경제난, 金美잠정협정 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미압박, 대 正日권력승계지연 등에 따 북정책에 있어서 韓·美·른 정세불안 등은 북한 권 日등 주변국 공조체제 와 력층의 연이은 탈북으로 해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이어졌다. 또 北·美미사 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은 난 수년간 이어온 정전체 일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제 무력화시도와 맥락을 이어져 있다. 그 후 북한이 직면한 대내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이 어 북한측 군사정전위대표 단을 일방 철수하면서 사실상 정전협상 무력화시도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이 번 사태는 크게 볼 때 지 난 등의 조치는 없다. 북한은 94년 4월 北·美 美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한 후부터로 볼 수 있다. 북측은 3월 8일 『미국이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고 극단적인 양상으로 정전체제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22일 北·美 미사일회담 무력화시도 이달 29일 金光鎭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이제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문제인 상황이라고 극언하는 수준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번 조치는 전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정세불안 등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이달로 예정된 北美미사일회담을 잠정협정체결 국면으로 이끌려는 계산과 함께, 미군 유해협상 및 北日수교협상 재개 움직임 속에서 보다 많은 대북지원책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국내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張寅鐵기자】

▽ 서울신문 1996. 4. 7

北停戰機능시험소셈

2월에도 2회 투입… 전화접촉 거부당해

유엔司대변인 회견 문답

존 W 라이츠유엔사대변인은 6일 상오 국방부 기자실에서 5일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불법 무장병력투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전에도 1백명 이상의 중대급 무장병력이 판문점에 투입된 일이 있는가.

▲이전에는 20~30명 규모의 소대급이 투입된 적이 있다.

—북한군과 접촉을 시도했는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곤 전선엔 특이동향은 없다. 한미연합사가 워치콘을 1단계 격상시킨 것말고는 데프콘을 올린다는 등의 조치는 없다.

—강화된 대북 정보감시태세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5일의 사건은 처음 있어난 것이 아니며 지난해 2월에도 2차례 비슷한 불법적인 무장병력 투입이 있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이같은 행동이 군사정전 기능에 대한 시험을 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내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쪽지역에는 5명의 장교와 30명의 사병만이 들어올 수 있으나 이날 북한군은 1백명 이상을 경비구역에 무장한 채 투입시켰다. 이날 투입된 정확한 인원과 장비는 감시장비로 포착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 뒤 밝히겠다.

—북한군의 의도는.

▲북한군이 정전위에서 철수한 이후 유엔사의 전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상오 판문점 일직장교를 통해 우리의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으나 역시 전화접수를 거부했다.

—유엔군의 조치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

—북한군이 정전위자를 통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대안은.

▲유엔사는 정전위 틀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黃性淇기자〉

▽ 조선일보 1996. 4. 7

日 "韓·美와 정보교환 北동향 주시"

북한의 비무장지대 규정 준수거부 선언과 관련, 日 외무성은 6일 韓美 등과 협조태세를 강화,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宏)외무부 대변인은 『관련국간에 수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북한의 이번 행동은 미국과 직접 군사교섭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日외무성이 이같이 보는 이유는 북한이 작년부터 비무장지대에서 폴란드 등 중립감시원을 추방하는 등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기존 휴전협정 기구의 해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점을 지적하고 있다.

日언론들도 일제히 5, 6일 이틀간 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2의 협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북한의 발표후 한국내 반응, 金泳三대통령의 전선시찰 모습 등을 크게 보도했다.

신문들은 또 한국이 북한에 대한 감시태세(워치콘)를 기존 「3단계」에서 15년만에 「2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한반도내 긴장 조치는 ▲오는 11일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훈련 조장▲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월드컵 유치 방해▲망명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보도했다.

【東京=李濟기자】

▽ 서울신문 1996. 4. 7

美·日의 안방과 共助 긴밀협의

공조 확인 孔魯明외무부장관(오른쪽)이 6일 외무부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대한 한미공조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朴榮君기자)

「北 판문점시위」 각부처 표정

"단순한 시위 넘어섰다" 철저대비 강조

긴장속 「쌀회담제의」등 양면전술 주시

청와대

정부는 북한측이 5일에 이어 6일에도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자 긴장속에 철저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부와 합참 정보및 작전부서들은 철야근무하며 북한측 화협정 체결을 위한 단순한 무력시위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면서 『내부 갈등이 심각해 그를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 긴장조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때문에 정부는 돌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穆熙기자)

통일원

통일원은 북한이 판문점 일원에서 의를 받고 수용여부를 검토하다 청와대측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취소했다는 후문.

통일원은 북한이 한편으로는 무력시위를 하면서도 5일 북경쌀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全今哲명의의 팩스를 보내 거듭 제4차 북경접촉을 제의한 것을 「교란전술」로 분석. 金京雄대변인은 북한이 대남비방 중지, 한반도내 남북당국간 회담개최 등 우리측 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은 점을 중시, 『북한이 우리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한 4차 북경 분석. (具本永기자)

국방부

국방부와 합참은 6일 저녁 북한군이 판문점에 2백60여명의 무장병력을 재투입하자 즉각 위기조치반을 가동, 관계자들을 비상소집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국방부, 합참 청사에는 관계자들이 군복을 입고 속속 도착했으며 곧바로 상황실에 집결, 상황파악과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 그러나 이날은 때마침 비가 내리고 어두워지는 바람에 판문점 북측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의 정확한 병력과 반입된 무기종류를 파악하기 북한군은 이날도 5일과 마찬가지로 박격포 등의 중화기를 설치하는 임시진지 구축훈련을 한 뒤 3시간 20분만에 철수했는데 투입된 병력의 규모가 5일의 두배에 달해 한때 매우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후문.

이에 앞서 李養鎬국방부장관은 이날 상오 조찬간담회를 통해 『동계작전태세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 (黃性淇기자)

외무부

외무부는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임무 포기 및 판문점 무력시위와 관련,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가는데 중점. 외무부는 6일 孔魯明장관이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와 긴밀한 협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양국 공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낙관.

외무부는 또 이달 중순이후에 개최될 미·북간의 미사일·유해송환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

외무부는 이와 관련, 이날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책협의회에 참석중인 趙源一외교정책실장에게 판문점 상황 등을 설명하고, 미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최근의 사태를 감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수교교섭 속도를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 (李度運기자)

▽ 동아일보 1996. 4. 7

"北韓 2、3년내 붕괴"

美WP紙 특집기사

【워싱턴=李載昊】 북한의 붕괴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조기 붕괴를 전망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6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날로 더해가는 북한의 붕괴 전망」이란 서울발 국제면 특집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하고 최근까지 美중앙정보국(CIA)의 아시아분석관으로 일했던 하버드대학의 에즈라 보겔교수는 『북한이 향후 2、3년내에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포스트지는 또 존 카시빌리 美합참의장도 이번주 워싱턴 포스트지 편집진들과 가진 오찬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안으로 폭발한다냐 아니면 밖으로 폭발하느냐만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가 단지 시간문제일 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金正日 정권 정통성 없다」 영국 외교관

金日成후광 탈피 "군사전문가" 부각 필요성

권력승계이전 對美관계개선…능력과시 겨냥

北 이상매수 내막 살펴

북한 김정일(金正日)의 정통성 없다는 것이 영국 외교관의 시각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일의 정통성 없다는 것은 김일성(金日成)의 후광을 벗어나 군사전문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승계 이전 대미(對美)관계 개선 등 능력과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의 정통성 없다는 것은 김일성의 후광을 벗어나 군사전문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승계 이전 대미(對美)관계 개선 등 능력과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정통성 없다는 것은 김일성의 후광을 벗어나 군사전문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승계 이전 대미(對美)관계 개선 등 능력과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정통성 없다는 것은 김일성의 후광을 벗어나 군사전문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승계 이전 대미(對美)관계 개선 등 능력과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다.

〈평양=김광덕 특파원〉

한국인 보지만 찬 개의 숫자 북한체육계 관심지수 자유권 발동

북한 체육계 관심지수 자유권 발동

북한 체육계 관심지수 자유권 발동은 북한 체육계 관심지수 자유권 발동은 북한 체육계 관심지수 자유권 발동은

▽ 조선일보 1996. 4. 8

北, 판문점 3차 무력시위

어젯밤 무장軍 230명투입 진지구축훈련

全지휘관 부대內 대기령

북측지역 진입 2시간뒤 철수

국방부

2백3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중무장 병력이 7일 오후 8시쯤 대-소형 트럭 12대에 분승해 또다시 판문점 북측지역에 투입됐다。 북한군의 이같은 판문점 투입은 5일과 6일 판문점 진지 구축훈련을 벌인 데 이어 사흘째 연속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판문점 서쪽 「72시간 다리」를 통해 판문점에 진입했으며 이들은 지난 5일과 6일 구축해 놓은 임시 진지에 60㎜ 박격포 2문、82㎜ 무반동총 1정、기관총 1정을 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병력과 차량은 이날 밤 10시20분에서 10시35분 사이에 「72시간 다리」를 통해 또다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안개와 어둠으로 인해 정확한 병력 규모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판문각 부근 제1-제2초소에 90여명이、「72시간 다리」 부근 제5초소에 60여명이 각각 투입된 것으로 목격됐다고 밝혔다。

李養鎬국방장관은 『최근 판문점에서 진지구축 훈련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은 개성에 있는 판문점 경비대대 소속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지난 76년 8·18 도끼만행 사건을 자행한 부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판문점 경비대대에 곧바로 비상을 발동하는 한편 인근 1사단 기동타격대 1개 소대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쪽 입구에 출동시켰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합참을 비롯한 각급 부대에 위기조치반이 가동됐으며 全지휘관을 부대에 대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庾龍源기자〉

◇긴장의 合參본부 李養鎬국방부장관이 7일 밤 9시쯤 국방부 청사 지하 벙커의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북한군이 3일째 무력 시위를 벌인 판문점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聯合】

▽ 조선일보 1996. 4. 8

「DMZ긴장」 안보리소집 추진

美등 상임이사국과 막후협의

정부

정부는 북한이 판문점에 중화기와 무장 병력을 진입시키는 것과 같은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를 앞으로도 적어도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것이며 긴장의 점도도 점차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이 보는 것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그들 사회 내부의 긴장 고조를 통한 결속 강화를 노린 對內用(대내용)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북한측이 이처럼 긴장을 장기화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고조시킬 경우、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정식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 등 주요 상임이사국들과 막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昌基·具聖宰기자〉

▽ 서울신문 1996. 4. 8

조기경보기 투입 검토

韓-美연합사

韓美연합사는 최근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불법진입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현재 오키나와에 있는 E3C 조기경보관제기(AWACS)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李養鎬국방장관은 7일 밤 韓美연합사의 정보감시 태세가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격상됨에 따라 조기경보관제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유엔군司와 협의、양국은 판문점에서의 북한군 동향을 유엔군사를 통하지 않고 국방부가 인지하는 즉시 발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경보관제기는 敵대공포의 사정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고도까지 올라가 반경 3백50㎞이내의 항공기와 차량을 비롯한 모든 군사목표의 움직임을 샅샅이 포착、즉시 아군 공격부대에 전달해 이를 파괴토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李在承기자〉

▽ 조선일보 1996. 4. 8

駐韓美軍도 경계강화

【워싱턴=金昌均기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이틀째 무장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주한미군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美국방부 대변인이 6일밝혔다。북한군이 무장 시위를 시작한 5일 이후 주한미군은 경계 수준을 상향 조정했으며、『이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측도 북한의 비무장 지대 무장 병력 투입과 관련、『북한군의 동향을 정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 한국일보 1996. 4. 8

정부, 安保理상정 得失저울질

理事國지위로 議題채택 자체는 쉬워

"긴장 公式化" 北속셈 말려들까 신경

판문점내 중무장군 계속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정전체제 도발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방안이 공식,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비공식적인 대응으로는 北·美미사일회담, 北·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북한측의 도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북한측의 도발을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사태의 추이에 따라 앞서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대응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7일 『우리는 현재 안보리 공식적인 대응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이번 사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북한측의 도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북한측의 도발을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사태의 추이에 따라 윤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보리의제 제안은 현재 유엔사무총장, 안보리이사국, 유엔일반회원국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일반회원국의 경우는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는 비교적 쉬운 입장이라며 『북한측의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조차 현 정전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인 만큼 안보리로 회부키로 결정하면 이번주에라도 안보리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

문제는 안보리회부 자체가 이번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한반도 긴장의 현실화』라며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北·美잠정협정 및 北·美군사협의채널 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게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안보리회부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한반도긴장의 확대로 공식화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판문점에서 각별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보리회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대신 7일 끝난 하와이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北·美미사일회담을 앞두고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련국간 비공식적 입장조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張寅鐵기자】

▽ 한국일보 1996. 4. 8

"北 전쟁도발땐 파멸"

NYT 보도

【뉴욕 = 연합】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약 한국과 개전을 하게되면 파멸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美뉴욕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도쿄(東京)발 기사에서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을 무시한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한 사건으로 촉발된 남북한간의 긴장과 관련, 이같이 전하고 그러나 韓美일부 정보분석가들은 전쟁이 오판으로 시작되거나 혹은 북한이 절망상태에서 헤어나기위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화력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를 내기 위해 화학무기의 대량 사용을 유혹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시행위와 관련,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6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하고 金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북한이 이번에 취한 일련의 조치는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1996. 4. 8

주변4強 北에 외교압력

美·러·中·白 도발중지·停戰준수 촉구

판문점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무장병력 투입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등 주변4강국들이 북한에 도발행위를 중지하도록 강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7일 『북한에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주변국들이 외교채널을 통해 정전협정 파기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적극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일본과 중국등 다른 국가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기존의 제프리 골드스타인 북한담당관과 북한 유엔대표부의 韓성렬공사간의 접촉채널을 가동, 즉각적인 정전협정 파기행위 중지와 함께 추가적인 도발행위가 일어날 경우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난 4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선언이 나오자마자 반대입장을 명백히 했으며 오는 10일에는 알렉산드르 파노프 외무차관을 파견, 북한과 정전협정 파기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 겉으로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표명한뒤 침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접촉창구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행위가 북한에 전혀 이익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민당과 노동당 접촉채널을 통해 도발행위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承哲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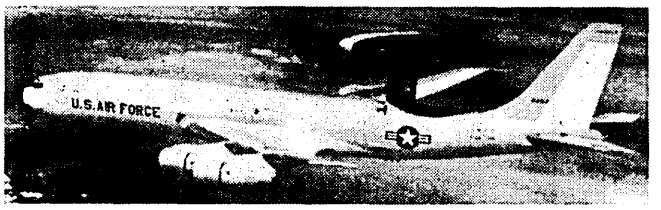
▽ 동아일보 1996. 4. 8

韓-美 「對北첩단감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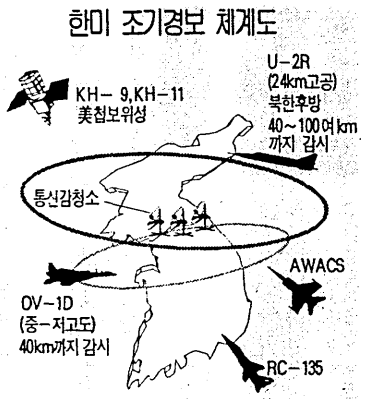
첩보위성 정찰기 통신감청

日배치 조기경보機 출동 계획

전면남침 징후 4~5일전 포착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때 출동,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밀 관찰했던 미공군의 E3C공중조기경보관제기(AWACS).



북한이 판문점에 중무장병력을 잇따라 투입하고 韓美연합사령부의 대북정보감시태세가 「워치콘2」로 격상됨에 따라 하루 24시간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한미양국군의 조기경보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당국은 대북 정보감시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보감시활동은 스사진정찰 첩보위성 스정찰기 스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세가지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사진정찰 첩보위성은 KH9 KH11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상 2백~5백㎞ 상공에서 하루 몇차례씩 북한 영공을 통과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첩보위성의 정밀촬영 수백㎞ 상공에서 30㎝~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다。

정찰기에 의한 첩보수집은 주로 전략정찰기인 U2R와 팬텁전술정찰기 RF4C에 의해 이뤄진다。오산에 기지를 두고 있는 U2R는 24㎞ 상공에서 휴전선을 따라 돌면서 휴전선 북쪽 40~1백㎞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또 중저고도 정찰기인 OV1D는 휴전선 북방 40㎞까지를 감시한다。

이들 정찰기는 북한의 통신내용을 엿듣거나 각종 주파수정보를 수집하는 신호정보 수집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또 전방지역의 높은 산에 설치돼 있는 통신감청소에서는 북한군의 무선교신을 감청하고 있다。

이밖에 미군은 일본 오키나와기지에 배치돼 있는 E3C공중조기경보관제기(AWACS)를 수시로 한반도에 출동시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최근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조만간 E3C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E3C는 반경 3백50㎞이내의 항공기나 차량의 움직임을 샅샅이 포착할 수 있다。

이같은 한미연합 정보감시활동을 통해 우리군은 북한군의 전면남침 조짐을 최소한 12~16시간 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면남침에 필요한 기계화군단의 전방이동 등 병력이동감시를 통해 4, 5일 전에는 전면남침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黃有成〉

▽ 세계일보 1996. 4. 8

韓國 안보회의 긴급보고…사태주시

「北 정전협정파기 각국 言論 반응

중국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人民日報는 7일 처음으로 북한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관리유지임무 포기선언과 이에 대한 한국측의 반응을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2면(要聞란)에 북한측의 답화내용을 전한 자체 특파원의 4일자 평양발 기사에 이어 한국측의 긴급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사실 및 국방부 성명내용에 관한 신화통신의 5일자 서울발 기사를 뒤늦게 게재했으며, 광명일보도 2면(종합뉴스란)에 신화통신 5일자 서울발 기사를 주요뉴스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중무장한 북한군이 5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된 사실은 전하지 않았으며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解放軍報는 이번 사태에 관해 아직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독일 영 ARD TV, DPA통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등 독일 주요 언론들은 6일 비무장지대 상황을 주요뉴스로 전하면서 통일안보조정회의 한편 독일정부도 외무부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中、北韓軍 판문점 무력시위 언급안해
佛 "평화질서 위협 유럽 적극간여"촉구

영국 영국 BBC방송은 6일 북한이 전날에 이어 두번째로 중무장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 투입했다면서 한국측은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대책을 숙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러시아 언론들은 6일 북한 소집등 한국내 대처상황과 워싱턴측의 반응을 상세하게 다루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 언론은 북한의 4일자 평양발 기사로 본보하면서 북한은 이번 군사위협을 이용해 『미국과 직접 접촉하려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러시아의 공영텔레비전과 민간방송들은 이날 시간별 뉴스를 통해 북한의 무장병력 투입사실을 비교적 상세히 본보하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유럽사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 94년 북한은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을 핵회담장으로 끌어내 협상을 성사시킨 전례가 있다고 이 텔레비전은 전했다.

프랑스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몽드는 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무시등 최근 한반도사태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나쁜 소식」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에 의한 기존의 평화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유럽이 적극 간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몽드는 최근 중국-대만사태와 외부세계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金正日 마지막 전술」등 지역전략상의 근본적인 질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외신종합〉

"체제 내부갈등 극복노린 전략" 이집트

【카이로聯】 이집트 주요 언론들은 6일 북한의 정전협정 의무이행 포기선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병력 투입사실을 일제히 본보했다.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알 아흐람은 「한반도 긴장 재연, 전쟁발발 위기라는 제목의 외신머리기사에서 북한이 최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 지위와 관련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병력을 투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소련과 동구의 붕괴와 체제 내부 변화로 인한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고 대미(對美)외교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 1996. 4. 8

北 「작전교범」따라 훈련강화
「3차례도발」 어떻게 다르나

3차에 걸친 북한의 판문점 도발은 고도의 군사적 계산에 따른 작전이라는 것이 군 및 정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1차부터 3차까지의 판문점도발을 군사작전의 「FM」(작전교범)에 따라 진행해 왔다.

북한은 우선 1、2차에는 진지구축훈련을 벌였고 3차는 진지투입훈련을 전개했다. 1、2차 훈련때 구축한 진지에 3차 훈련에는 병력을 투입하는 전쟁상황을 가상한 훈련방식이다. 투입병력은 △1차 1백20명 △2차 2백60명 △3차 2백30여명이었다. △1、2차에 걸쳐 특히 2차훈련에 2백60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진지구축을 마무리짓고 3차 진지투입때는 「실제상황」과 비슷하게 트럭과 함께 기동성이 강한 소형차량을 투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훈련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군의 훈련은 1차(저녁6시) 3차(저녁8시)로 정확하게 한시간씩 늦게 실시됐다.

북한의 훈련이 야간화될수록 실제상황에 가깝다. 전쟁상황의 작전은 야간에 이루어지는게 통례다.

북한이 또 판문점 도발을 증폭하고 있는 것은 판문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때문에 전시효과가 크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다는 풀이도 있다. 〈朴濟均〉

전쟁상황 가상 야간에 훈련실시
3차땐 소형차동원 기동성 높여

▽ 한국일보 1996. 4. 8

北韓軍 이상동향
美、큰우려 안해

【워싱턴聯=합】 미국은 6일 중무장한 북한군 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두차례에 걸쳐 투입되면서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사태를 중시하지 않는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행정부는 이번 사태가 문제는 되지만 비상경계령을 내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날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美 국방부의 한 대변인은 국방부가 5일 북한군의 제1차 판문점 무장병력투입 이후 對北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것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역시 북한의 이같은 행동이 전례없는 것이기는 하나 『북한측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파기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제2차 병력투입이 정전협정을 와해시키기위한 또다른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4. 8

美 「억제된접근」 대응

【워싱턴·東京=朴仁奉·姜成輔특파원】 미국은 중무장한 북한군 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2차례에 걸쳐 투입된 사건에 대해 「억제된 접근방식」(Low-key Approach)을 취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6일 밝혔다. 美행정부는 이번 사태가 문제는 되지만 비상경계령을 내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날 두번째로 이뤄진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美국방부의 한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지난 5일 북한군의 제1차 판문점 병력투입 이후 對北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것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1996. 4. 8

치밀한 도발「긴장 日常化」

北 무장軍 3일째 투입

두차례 나눠 도보철수「實戰연습」

軍1사단「기동타격대」기민대응

북한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연속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중무장병력을 투입, 남북한간에 고조된 긴장이 일상화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투입병력을 늘려가는 한편 훈련시간대도 점차 야간으로 옮겨가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비무장지대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군은 앞으로 판문점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병력과 무기를 더욱 증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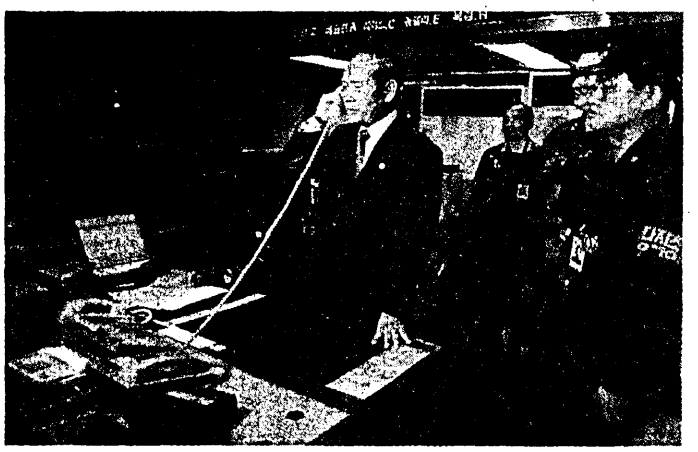
○…북한군은 7일 저녁 8시경 판문점 서쪽에 12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72시간 다리」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목격됐으나 야간 정확한 병력수와 반입무기 과 안개가 낀 상황이어서 확인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아군은 북한군이 5, 6일보다 훨씬 많은 차량에 분승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된 것으로 미뤄 당초 4백여명의 병력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으나 1초소 10여명, 5초소 60여명, 2초소 80~1백여명만이 식별 가능해 인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밤 10시20분경 70여명이 도보로 「72시간 다리」를 통해 빠져나갔고 밤 10시35분경 1백60여명이 철수하면서 일단 2백30명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당초 진입한 차량 12대중 9대의 철수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7일 저녁 8시15분경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된 직후 비상경계태세를 갖추고 이어 저녁 8시20분경 사단 군단 군사령부 합참까지 연결되는 전제대의 위기조치반을 소집, 만약의 사태에 대비.

○…북한군 중무장병력이 연 사흘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투입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비무장지대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군은 앞으로 판문점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병력과 무기를 더욱 증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李국방 상황점검 북한이 연 3일째 판문점지역에 중무장병력을 투입한 7일저녁 李養鎬국방부장관이 국방부지휘통제실에서 판문점지역을 경계하는 육군 1사단장으로부터 긴급 전화보고를 받고 있다.

▽ 세계일보 1996. 4. 8

停戰협정 당분간 "불안한 유지"

한반도 분단관리체제 어떻게되나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관리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정전협정은 6·25전쟁 이후 분단된 남북관계를 관리해온 유일한 법적 문서다. 정전협정내용중 특히 지금까지 유효하게 준수돼온 것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및 운영분야였다. 북한은 그러나 이제 비무장지대를 불인정, 정전협정의 마지막 보루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남북한이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남북한간의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등에서 양측간에 무력충돌이 발생,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남북 대치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작위적인 남북대치상황을 연출, 미국을 북-미간 장성급 군사채널로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군사채널이 구축되면 이를 통해 북-미간 잠정협정및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체결 목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분단관리체계인 정전협정체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및 중국등 북한을 제외한 관련 당사국들이 여전히 현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로서 정전협정을 준수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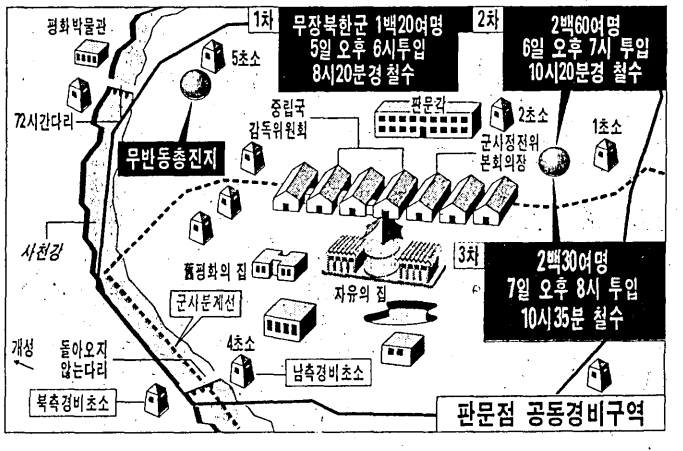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정전협정은 협정체결의 일방 당사자가 무시한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 현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협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현 분단관리체계 파기를 위해 극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북한 군인들에 의한 군사분계선 침범이다. 북한군이 북한측 비무장지대를 지나 군사분계선까지 넘어온면 이는 곧 교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對南선전포고를 의미하는 군사분계선「불인정」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그 전단계로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중화기를 배치한는등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예상이다.

남북한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를 위한 도발이 계속될 경우 남북한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정전협정체제 와해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앞으로 상당기간 불안정한 분단관리체계를 간신히 유지해가면서 이의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鄭貞然기자〉



李장관은 이날 저녁 8시경 지휘통제실에서 철야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렀다가 때마침 북한군 3차 투입보고를 받고 직접 1사단장과 통화, 현장상황과 아군의 대응조치 등을 확인.

이어 밤 9시경 金의장도 공교에서 급거 지휘통제실에 들러 사태추이를 주시하는 등 긴장한 모습.

○…李장관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북한의 판문점 병력투입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일본에 있는 미군 조기경보기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이는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이 3에서 2로 강화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李장관은 10여분간 이번 사태에 대한 전말과 대응책에 대해 『북한군은 현재 고도의 계산하에 이같은 책동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형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

李장관은 또 『북한은 판문점에서는 강경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경 쌀회담 재개를 제의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이날도 서부전선 모사단 지역에서는 북한군 12명중 9명이 완장을 차고 나머지 3명은 차지않는 등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과는 다른 행동을 취한 것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黃有成〉

北, 일방파기… 韓-美등 "有効여전" 고수

분쟁예방 별도장치없어 치열한공방 불보듯

계속 무력시위땐 南北긴장만 고조

▽ 동아일보 1996. 4. 8

北「강공」에 外交戰 모색

정전협정 폐기경우「2+2」카드 활용검토

北-美 장성급회담 실현가능성 대안 골몰

「DMZ파기」정부 대응책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목표로 한 북한의 정전협정파기 책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가 남북대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될 때까지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다시 정전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접촉 필요성을 차츰 인정하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수동적 입장에서 정전협정체제 준속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수립방안을 연구,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광복50주년을 맞아 정부가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하나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2+2」 방식의 한반도평화보장방안을 대안으로 재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 현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논의하자는 것으로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시켜 「2+4」방식의 다자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판문점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파기를 국제여론을 통해 알리고 제동을 걸기 위한 외교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에 북한의 판문점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성명을 내달라고 주문해놓고 있다. 정부의 주문은 북한의 정전협정파기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됐을 때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다. 한편 군당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중무장병력 투입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장성급 군사접촉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판문점 병력투입뿐 아니라 스1백55마일 전 전선에 걸친 병력증강 스천차 장갑차 등 중무기배치 스군사분계선 월경등 군사도발행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韓起興·朴濟均〉

▽ 중앙일보 1996. 4. 8

對北 유화방침 白紙化 검토

정부, 訪北·經協확대 방안 재고

최원기 기자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일방파기에 이은 판문점 중무장 병력투입이 장기적인 대남 강경전략 구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남북경협과 민간인 교류확대등 4·11 총선이후 취할 것으로 예상돼 온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북한이 남북대립정책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을 대남정책의 기조로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상당기간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1차적 이유는 워싱턴과 서울을 겨냥한 평양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가 워낙 거칠기 때문이다.

북한 외교부가 지난 2월22일 평화협정 중간단계로 잠정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늘상 해온 말이려니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달이 지난 지금 평양은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도높은 대남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의 핵심인 비무장지대 폐기를 선언한데 이어 5일부터 세차례나 대규모 중무장 병력을 판문점에 투입,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우리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이에앞서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金光鎭)과 최고인민회의(국회)의장 양형섭(楊亨燮)등은 『전쟁발발은 시간문제』라고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잠정협정 체결주장 수락을 강요했다.

이렇듯 북한은 대미 잠정협정 체결을 위해 군사·외교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입맛이 쓰다』는 말로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 대한 정부내 분위기를 전하면서 『모든게 원점에서 재고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일원을 중심으로 정부 관련부처는 그동안 4·11 총선 이후에 대비한 일련의 대북포용 정책을 준비해왔다.

경협과 민간인 방북 등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기술 전수 등 경제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남북대화채널의 개설 등을 추진하려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보따리를 풀어놓기 힘든 상황이 됐다. 북한이 계속 대남 초강수(超強手)를 두는 바람에 정부의 생각도 달라졌고 운신 폭도 좁아졌다는 설명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선회에는 미국의 북한 연착륙(소프트랜딩)정책등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밀리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대북유화론이 자리할 여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가해오는 공세에 수세적으로만 대처해서는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경고다.

계속 도발땐 강경책 선회

'유화입장' 美설득이 관건

당분간 적극자세 힘들듯… 中長期접근

李국방 동향파악 7일 오후8시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또다시 북한군 중무장 병력 4백여명이 투입되자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후 상황실에 들러 북한측 동향을 보고받고 있다.

北투입軍은 도끼만행부대

매일 1시간간격 늦추며 중화기동원 똑같은 훈련 반복

北움직임·정부대응 안팎

DMZ 긴장波高

각부처, 긴박감속 정밀추적 대비분주

정부는 일요일인 7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던중 북한군이 3일째 중무장을 한채 또다시 판문점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새삼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태세를 한층더 긴밀하게 강화했다.

○…청와대는 연3일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북한군 무력시위가 계속되자 일요일인 이날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국방부 안기부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갖추며 북한의 동향을 살폈다. 비상근무중이던 柳宗夏의

◇李養鎬국방부장관이 7일 밤 북한의 중무장병력이 판문점에 3일째 투입되자 비상근무중인 합참 상황실에 들러 상황을 청취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철저한 감시체제를 가동, 만일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군은 지난해 12월 휴전선 전역에서 낮에는 자고 밤에만 나와 진지구축을 하는등 야간훈련을 한바 있다"며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판문점에서의 야간 무력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앞서 柳수석과 車基文국방비서관은 아침일찍 출근, 3교대로 24시간 철야근무중인 안보상황실로 들어오는 각종 보고상황을 종합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방부는 이날 저녁 북한군이 5, 6일에 이어 어김없이 판문점 북측지역에 중무장병력을 투입시키자 이번 사태가 교안보수석은 이날밤 북한군의 판문점 투입사실을 관저에 있던 金泳三대통령에게 직보했으며 金대통령은 경계근무태세강화를 거듭 지시했다.

柳수석은 "북한측이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3일째 계속된 판문점 중무장병력투입은 사실상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柳수석은 또 "우리는 이같은 북한군의 무력시위에 대해 이미 강경대응입장을 밝힌 이상 일일이 과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판문점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李養鎬국방장관과 金東鎭합참의장은 하루종일 공관에서 대기하다 하오 8시 30분께 북한군의 3차 투입 보고를 받고 곧바로 9시께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했다.

북한군은 5일 하오 6시께 1개 소대 1백30여명을, 6일 하오 7시께 1개 중대 2백60여명을, 그리고 이날은 하오 8시께 2백30명을 투입하는등 3일동안 매일 1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늦추고 있을 4백여명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2백30명이라고 정정했다.

우리측은 이날 하오 6시께부터 이미 비상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북한군들이 출현하자 하오 8시15분께 1사단기동타격대를 투입하고 합참 이하 전체대에 긴급조치반을 소집하는등 대응태세를 갖췄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같은 조치가 고도의 작전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화하는 것은 물론 판문점 이외의 지역에서 또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에 대비, 다양한 분석작업과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동안 계속 투입되는 병력은 개성에 위치한 판문점 경비부대원들로 추정된다"며 "이부대가 바로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던 부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하오 1시께는 우리측 3사단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2명이 출현, 이중 9명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경무완장」을 차고 있는 장면이 관측돼 북측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에 따라 이날 밤부터 다시 정보수집체계를 총동원해 북측의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1사단을 비롯한 전방부대들은 위기조치반을 운영하며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무부는 북미1과 특수정책과 등 주요과 직원들이 정상 출근, 해외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는등 이번 사태에 대한 외교대응을 준비했다.

이번 사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李樑국제연합북장은 상오부터 나와 각종 검토자료를 분석하는 등 유엔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통일원은 文武烘통일정책실장과 1정책관실 직원 등 몇사람만이 하오에 나와 상황을 점검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남북회담사무국과 판문점 전방사무소에선도 일부 간부와 당직근무자들이 나와 근무했다. 金煉哲전방사무소장은 북한군 동향파악을 위해 상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갔으나 특이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申載旻·洪潤五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8

□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남한 군사활동'

북 "팀스피리트 변형" 비난
남 "통상적 군대훈련" 일축

한미해군훈련·호국훈련 등…북, "긴장조성" 민감반응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행동은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접촉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의도 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이 이번 돌출행동에 앞서 한국에서 실시하던 군사훈련을 문제삼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군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렇지만 '남한의 군사활동'은 지금까지 단순한 우려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이라는 극한적인 행동을 가져온 한 요인 혹은 핑계가 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시비를 건 훈련은 한-미 연합해군기동훈련, 한국군 2개 군단이 참가한 '호국 96' 훈련과 앞으로 미 본토 병력과 연합으로 실시될 한-미 연합기동훈련 등이다.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 차수는 특히 호국훈련이 진행되던 지난 29일 "남쪽에서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강력한 경계심을 보였다. 이들 훈련은 결국 지난해부터 중단된 팀스피리트훈련의 변형된 그러나 그 양과 질에서 차이가 없는 '북침전쟁 놀음'이라는 것이었다.

합참은 그러나 이들 훈련에 대해 '군대의 통상적 훈련'이라고 북쪽의 우려를 일축한다. "군대라면 통상적으로 야외기동훈련을 해야 한다"며 "호국훈련은 동계작전 태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동 전술훈련의 방법을 개선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에 탱크 대포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기 성능, 살상 범위, 보관 관리 등을 감안할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며 또 군사시설물 구축 역시 "과거에도 비무장지대에 총격전이 있어 인명살상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라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초의 한-미 연합해군기동훈련이나 94년 이후 B-1 전략전폭기까지 동원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미 본토의 병력과 한국군의 기동훈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없다. 북한은 이런 훈련들을 팀스피리트훈련의 재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7일 저녁에도 무장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여보내 연사흘째 무력시위를 했다.

이런 북한의 돌출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먼저 북한의 무력시위가 머지않아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북한이 판문점 무장병력 투입으로 △정전협정의 무력화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달로 예정된 북-미 미사일 협상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더는 행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총선 막바지로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인 한국에 더 이상의 긴장을 조성할 경우 남북 쌀 협상이나 경수로 지원사업 등에서 차질이 올 것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무력시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길어지리라는 분석도 만만찮다. 미국과 한국 사이를 계속 벌어지게 하기 위한 '강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판문점 무장병력 투입→군사분계선 월경→서해 섬 지역 침범 등 행동의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걸 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8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될듯

'판문점 긴장' 외교적 파장

김-클린턴회담 주의제…일 역할확대 계기로
"북-미·일 협상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분석

강태호 기자

북한의 계속된 판문점지역 병력투입 훈련은 기존 정전협정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파고는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비롯해 북-미, 북-일 관계 등의 외교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사태는 16일의 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뒤이어 열릴 미-일 정상회담과 이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신안보공동선언에도 어떤 형태로 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6일 공로명 외무장관과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북한의 비무장지대 의무이행포기 선언을 비롯해 식량난 등 최근의 북한정세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일본에서는 최근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고조 등을 배경으로 '극동 유사시'에 대응한 미-일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번 '판문점의 긴장'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한 일본의 개입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78년에 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78년의 이 지침은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한 극동 유사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선 조금 모호한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문점의 긴장'은 옛 소련의 위협소멸이라는 목표 상실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요구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미-일 안보체제에는 반가운 소식이 되리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판문점 사태' 전에 이미 한-미는 페리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에 와서 북한의 식량난 등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응해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협의할 예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페리-이양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전진배치 병력문제에 대한 대응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판문점 사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등 군사적 대응의 강경론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구도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군사적 대응 중심의 봉쇄전략과는 다르다. 지난 2월의 대북식량지원, 대북여행경고 대상국 제외를 비롯해 북-미 미사일협상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개입전략이 주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판문점의 긴장'이 뉴욕-베를린-베이징 등에서 이뤄질 북-미, 케도-북한, 북-일 협상에 미칠 영향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 부처 안에서도 외무·통일 쪽에서는 경계태세 강화 등 군사적 대비책은 단기 처방전일 뿐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문점에서의 위기관리체제라는 긴급 '현안'에 대응한 외교·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전협정 고수라는 우리의 입장을 공격수 없는 축구팀에 비유했다. 북한은 계속 우리 골문을 향해 공을 차고 있는 데 우리는 수문장 하나만 믿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판문점에서의 북-미 군사접촉 문제를 비롯해 정전협정 체제를 대신할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뭐가 보이나" 북한군의 잇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진입으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7일 오전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과 대학생들이 전망경을 통해 군사분계선 북쪽을 관측하고 있다. 문산/연합

▽ 서울신문 1996. 4. 8

北對南협박발언 3人

楊亨燮

孫成弼

金光鎭

金光鎭 인민무력부 副부장… 6·25 참전경력

孫成弼 러大使로 해외문제에 밝은 사상선전가
楊亨燮 인민회의 의장… 주체사상 정립한 이론가

金光鎭(인민무력부 제1부부장)=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발표에 앞서 지난달 29일 『한반도는 전쟁전야』라며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고조 가능성을 맨먼저 비춘 혁명 1·5세대 출신의 차수(次帥)급 보수적 성격의 주인공인 金光鎭(67)은 지난해 9월 金正日국방위원장 추대 5주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최신무기 생산도 가능하다』고 강성발언을 한 바 있다。

신설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지만 인민무력부가 다른 부처보다 한등급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급이라는게 전문가의 해석。 1929년 평양산。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소련군 포병기술학교를 졸업했으며 한국전에도 참전했다。

孫成弼(러시아주재대사)=지난 2일 『인민군 총궐기』 가능성을 비춘 孫成弼(69)은 핵문제나 평화협정체결·대미수교 등 첨예한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이와 관련한 북한입장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혀온 「해외용 대변인」으로 체제와 사상선전가다。 인민경제대학장·적십자위원장·고등교육부장·최고인민회의부의장 등을 지낸 학자출신으로 지난 90년부터 러시아주재 북한대사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楊亨燮(최고인민회의 의장)=지난 5일 『한반도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전쟁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楊亨燮(71)은 주체사상을 정립시킨 북한의 1급이론가이자 金日成의 고종매부。

25년 함남 길주산으로 김일성대학 졸업후 金英柱부주석과 함께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했으며 인민경제대 교육학부장·중앙당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주의이론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모스크바 유학중에 만난 처 金信淑은 김일성 고모의 딸。

〈張秀根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조선일보 1996. 4. 8

단계적 긴장고조… 치밀한 수순

초긴장 DMZ
北 잇단시위 속셈

투입 1시간씩 늦춰… 병력數도 의도적
정전협정 와해술책 장기·다양화 조짐

◇북한땅 망원경 관찰 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최근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지역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坡州=李起元기자】

중부장한 북한군이 3일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돼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가 장기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북한군은 이날도 박격포와 무반동총, 기관총으로 중부장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측 초소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며 「훈련」을 한 뒤 철수해 지난 5、6일과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판문점 3차 군투입은 정전협정 무력화와 관련해 고도로 계산된 수순을 밟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북한군은 투입 시간을 1시간씩 늦추고 있다。 지난 5일엔 오후 6시에 투입됐으나 6일엔 오후 7시、7일엔 8시로 늦춰졌다。 병력은 지난 5일엔 1백30여명에서 6일엔 2백인 2백60여명으로 늘었다가 7일엔 2백30여명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한 지난 4일 저녁까지만 해도 일부 군 관계자들은 북한측의 발언이 엄포용이라고 평가했으나 이제 그같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사라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측을 상대로 일종의 「게임」을 시작한듯 하다며 「군은 판문점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예상되고 있는 도발 형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고 말했다。

휴일인 7일엔도 국방부 청사엔 朴炳玉정책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출근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무력시위」가 계속되자 국방부 청사도 종전에 비해 더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밤 지휘통제실에 들른 李養鎬 국방장관은 「현재 판문점에 투입된 북한군은 지난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때 미군들을 살해했던 그 부대」라며 비상태세에 들어간 1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卽應(즉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또 오키나와의 공중조기경보관제기(AWACS)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방안을 미군측과 협의중이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연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여러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정전협정 파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美北 장성급 접촉 등 미국과의 직접 군사접촉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판문점을 제외하곤 특이한 군사동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대규모 전면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러나 북한이 치밀한 계산을 갖고 「長期戰(장기전)」을 벌이려고 하는 만큼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庾龍源기자〉

II. 북한, 정전협정 위반

3. 우리측 대응

▽ 한국일보 1996. 4. 9

판문점관광 계속실시

유엔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판문점 중무장병력투입과 관계없이 내외국인의 판문점 관광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4. 9

北도발땐 현장서 응징

軍, 지침시달 "수칙따라 즉각조치"

서해 북방한계선도 포함 국지적 交戰상황 가능성

金대통령-軍수뇌부 청와대 회의

우리 軍은 북한군이 만일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거나 군사분계선 이남쪽으로 사격을 가하는 등의 도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부의 지휘를 기다릴 필요없이 현장에서 즉각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이미 지침이 하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침은 남북간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뿐만아니라 특히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

우리 軍의 이같은 대응태세는 북한측의 최근 도발 행위 이전부터 마련돼 있는 것이지만 최근 사태 이후 재확인 하달된 것이란 점에서 북한측이 일정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가해올 경우 남북한 사이에 비록 局地的(국지적)일지언정 즉각 交戰(교전)상황이 벌어지게 됨을 뜻한다.

李養鎬국방장관과 金東鎭합참의장 등 軍 지도자들은 8일 아침 청와대에서 있은 조찬 회의에서 金泳三대통령에게 『만약 북한이 우리의 땅을 한 치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국민의 생명에 危害(위해)를 가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가 돼 있다』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李장관과 金합참의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 회의를 갖고, 5일부터 3일간 계속된 판문점에서의 북한군 도발 등, 휴전선 전반의 상황과 예상되는 북한의 모든 도발 사태, 그에 대한 각군별 대응조치 등에 관해 보고받고 우리의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金昌基기자〉

尹龍男 육군참모총장은 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릴 야전군 주요지휘관 및 육본 주요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긴급회의에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越境(월경)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고 육군측이 8일 밝혔다.

交戰(교전)수칙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경하면 경고한 뒤 발포하게 돼있어 육군의 이번 지시는 곧 발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은 작년 4~5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세 차례 월경했을 때 발포하지 않고 경고방송을 통해 모두 철수시켰었다.

〈庾龍源기자〉

▽ 한국일보 1996. 4. 9

日、北우발사태 우려

北정전협정준수 촉구

【도쿄 = 朴榮基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는 8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사태와 관련, 『북한은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인 것 같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며 『우발적인 사태가 우려된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하야시 사다유키(林貞行) 외무성 사무차관도 이날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중조기경보관제기(AWACS)의 한반도 배치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韓·美양국군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庾龍源기자〉

▽ 조선일보 1996. 4. 9

"잇단 北무력시위 불구 전투발발 징후 안보여"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AP聯合】 백악관은 8일 남북한을 분리하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새로운 병력침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전투의 발발을 예고하는 무엇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맥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전쟁행위를 의미하는 병력증강을 시사하는 아무 것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북간의 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맥커리 대변인은 미국이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에 제한적인 방법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4. 9

韓·美軍 공동대응 협의

다양한 도발유형 점검

국방부는 8일 李養鎬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 소회의실에서 金東鎭합참의장과 국방부 국장급 이상 간부, 합참 차장(소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사흘째 계속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 등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치밀한 사전계획에따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서해5도 도발등 예상되는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李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우리땅을 침범하거나 국민의 생명을위해할때는 즉각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金東鎭합참의장도 이날 오후 용산 美 8군기지에서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과 회동을 갖고 韓·美양국군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金의장과 럭사령관은 북한의 잇단

▽ 한국일보 1996. 4. 9

中、北조치 논평유보

【北京 = 宋大洙특파원】 중국정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과 뒤이은 일련의 무장병력 투입에 대해 공식 논평을 유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駐中한국대사관이 8일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4. 9

"北 한국자극 말라"
比라모스대통령

【마닐라=AP聯】 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은 8일 북한에 대해 최근 비무장지대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함으로써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전협정 의무 지키라
이집트, 北대사에 촉구

【카이로=聯】 이집트정부는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 북한측에 정전협정의 의무조항을 준수하고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집트 외무부의 사이드 아부 제이드 동아시아 담당 차관은 지난 7일 장승길 駐이집트 북한대사를 만나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호 자제해줄 것과 정전협정의 준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4. 9

"南北 긴장완화 겨냥 갈리총장 긴밀 노력"

【유엔본부=연합】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현재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해 「조용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아마드 파지 유엔대변인이 8일 밝혔다.

파지대변인은 『갈리총장은 지금 한반도사태를 매우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로 간주하고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갈리총장이 조용한 외교방식을 통해 사태해결 노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지대변인은 그러나 갈리총장이 북한측과 접촉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갈리총장이 조용한 외교노력을 펴고 있다는 사실만 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9

북 '판문점 시위' 한·미 시각차

정부 추가행동 비상경계속 미군선 "찻잔속 태풍"

정전협정 고의위반·연합강화등 원론수준서 공감

김성걸 기자

북한군 무장병력이 사흘 연속 판문점 경비구역 북쪽지역에서 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주한미군의 이에 대한 시각차가 현저해 주목된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대통령과 군수뇌부와의 회동, 전군경계령 발동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반해 연합사쪽에서는 '추가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예의주시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물론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을 고의로 하고 있다"는 원론에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미 연합준비태세 강화 등 원론적인 대책에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행동에 대한 분석 및 전망에서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또 다른 행동의 예고편'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한미군쪽은 '별다른 징후는 없음'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군의 행동과 관련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에 이은 판문점 무력시위 등은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의도로 예정된 수순"이라고 기본적인 분석틀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앞으로 다른 비무장지대에서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서해 5도 부근의 해상을 침범할 가능성도 있다"는 위기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군의 확대된 행동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 차수가 지난달 29일 한국군 호국훈련을 겨냥해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발언을 국방부는 "항상 있었던 내용의 수준"으로 무시했다가 나중에 청와대의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행동에 대해 지난 7일 "정전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특별한 경계를 할 원인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한미군은 이어 "한미 연합사 예하부대의 '경계' 단계가 높아졌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고까지 '친절히' 설명했다. 한국군쪽의 대응에 미군이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판문점 행동에 대해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우리는 판문점 상황에 관심을 두지만 그보다는 전체 전선에 걸친 종합상황에 오히려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또 북한군의 진지구축 훈련과 관계 없이 하루 8~9회의 내외국인의 판문점 관광을 평소와 다름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판문점을 비롯한 군사분계선 부근에 긴박한 상황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유엔사쪽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상황이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해석된다.

▽ 세계일보 1996. 4. 9

군사정전위 틀안에서 美-北 장성회담 추진

韓-美방침 北의 별도 군사채널요구는 수용않기로

韓-美 양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무력시위와 관련, 군사정전위내의 미국과 북한간 장성급 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하고 판문점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북-미간 장성급 군사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그러나 군사정전위 틀을 벗어난 북-미간 군사 채널 가동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되 군사정전위를 대표한 미군 장성과 북한측 장성간의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사와 북한간에 현재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은 군사정전위대표회담 외에 비서장회의나 일직장교회의등이 있으나 비무장지대 존속문제 등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와 북한간 군사정전위대표회담을 개최하야 된다는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엔사측 군사정전위대표는 한국의 李鐸敏소장이 맡고 있으나 북한이 한국측 장성과의 접촉을 극구 회피하고 있는 만큼 군사정전위의 유엔사측 대표의 한 사람인 美 조지 노우드소장을 북한과의 회담 대표로 내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간 장성급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이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간 군사채널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노우드소장은 어디까지나 군사정전위의 유엔사측 대표 자격으로 북한과의 장성급회담에 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엔사의 군정위 대표는 수석대표인 李소장을 비롯해 노우드소장, 영국의 파르준장, 한국의 張亨구공군소장, 태국의 아들대령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은 94년 5월부터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鞠貨然기자〉

▽ 국민일보 1996. 4. 9

"美서 「北도발」 가볍게 다룬다"

WP紙지적 백악관 "交戰 발생할 징후없다"

NYT紙 "韓國 조기경보기구매 논의"

【워싱턴·뉴욕=외신종합】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8일 북한이 중무장 병력을 비무장지대에 투입한 것은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페리장관은 워싱턴 소재 하워드 대학에서 연설을 마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은 병력을 투입한 뒤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으나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북한정부가 권력과 정권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문제들에 모종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美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무장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 내부에서 병력이동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티브 마누엘 대변인은 『북한내 어느 곳에서도 병력이동은 없다』면서 『북한측은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을 인정치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최근 사태는 이를 과시하려는 그들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한국에서 교전사태가 발생할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용 병력증강과 같은 남침준비를 시사하는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미군 당국자와 외교관들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정치적인 공세로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紙가 8일 서울發 기사로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紙는 연사흘째 중무장 병력을 판문점 북측지역에 진입시킨 북한측의 행동이 휴전선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나 韓·美관리들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우롱함으로써 실제 전쟁을 준비하기 보다는 외교적인 책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韓·美당국이 조기경보기(AWACS)의 한국 배치와 한국이 구매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라면서 짐 콜스 유엔司 대변인이 (양국간의) 논의가 수개월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4. 9

러, 北무력시위 자제촉구

訪北앞둔 파노프차관 "한반도사태 더 악화" 경고

【모스크바=李進熙특파원】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8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위 포기와 관련한 무력시위는 『더 나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파노프차관은 10일부터 12일까지의 방북을 앞두고 이날 이타르 타스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러시아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노프차관은 이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기전까지 정전협정은 유지돼야 한다는게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1996. 4. 9

北, 청년 軍입대 탄원행사

평양서 "조선반도엔 전쟁발발 정세 조성"

북한의 판문점 무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평양에서는 청년 학생들의 군입대 탄원대회가 열렸다.

내외통신에 의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들과 참전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청년 대표-대학생 대표 등은 『현재 조선반도에는 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어 있다』면서 『김정일의 군대에 입대하여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쌓이고 쌓인 분노와 원한을 풀고 조국을 통일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準전시상태」에 돌입하면 이러한 청년들의 군입대 탄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북한군 출신의 한귀순자는 『청년학생들의 군입대 행사가 많아지면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金仁杭기자>

▽ 문화일보 1996. 4. 9

"戰時작전권 환수 필요"

北, 美와 협정 담판시도 南北합의서 위반

朴庸玉국방부정책실장 일문일답

국방부 朴庸玉정책실장(차관보급·육군소장)은 9일 『한국군에 전시작전권이 있었더라면 북한이 판문점에서 중무장한 병력을 투입하는 군사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군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것이 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 관심을 끌고 있다.

朴실장은 특히 『북한이 군사정전위를 무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92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朴실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판문점에서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였는데.

△한국군에 평시작전권은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없는 상태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있었더라면 북한이 이같이 섣부른 군사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환수될 경우 통일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정보수집능력과 전투력이 배가된 상태에서 명실상부하게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경우 한국군의 힘이 그만큼 배가돼 북한이 오판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朴庸玉실장

―전시작전권의 환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는가.

△시기는 못박기 어렵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의 성원,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다.

―최근 북한의 판문점 사태를 우리 군이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군사정전위에서 항의를 통해 처리됐으나 이번에는 군사정전위가 무력화한 상황인데다 4일 북한이 정전협정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대하다.

―이번 사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경우 북한이 내세운 평화협정에 대한 부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북한이 군사정전위를 무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지난 92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적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제5조와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의 제20조에서 「남과 북은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합의를 어긴 것이다.

<李宗勳기자>

▽ 문화일보 1996. 4. 9

"전마리 藝術祭 때에요" 전어

연출 스스로 "보는 것보다 참여를"

北 지문전 開催 추가 보류 통보

내달 10일 오픈 예정 "평양연극

▽ 경향신문 1996. 4. 9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보류"

한미 관계자 지적 다수

문화계 반응

○…문화계 안팎 관심 자는 관광지나 8월 중 문수교과가 세계청년대축전 전후에 개최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 이후 북한이 문수교과 개최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고 지난해 10월 이후 지방에서 문수교과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문수교과 개최 보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문수교과가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문화계에서는 이번 문수교과 보류가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수교과 개최 보류 이유로 북한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수교과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 10월 이후 한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올해 들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문수교과 개최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문화계는 이번 문수교과 보류가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수교과 개최 보류 이유로 북한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수교과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 10월 이후 한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올해 들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문수교과 개최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문화계에서는 이번 문수교과 보류가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수교과 개최 보류 이유로 북한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수교과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 10월 이후 한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올해 들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문수교과 개최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문화계에서는 이번 문수교과 보류가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수교과 개최 보류 이유로 북한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한미 관계 등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수교과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 10월 이후 한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올해 들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문수교과 개최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李穆熙기자>

▽ 서울신문 1996. 4. 9

「적하이 차해」 문화계도 내재적요소

「線」끊기고 해외동포 관광이전 對北접근

북사교과 적하는 해외

▽ 조선일보 1996. 4. 9

문화교류 조선측 문호 개방 "韓國 동포 관광 전면 허용"

북사 문화부 사절

<李穆熙기자>

▽ 세계일보 1996. 4. 9

"安保理상정" 對北압박 모색

DMZ 도발 정부 외교적대응

일단 北동향주시 「견제카드」활용
北 선전장으로 역이용 가능성도

정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북한의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안보리를 통해 對北제재를 추진하는 것이 북가피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그러나 작금의 북한 도발문제를 즉각 안보리에 상정하기보다는 북한의 향후 도발내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남한측 군사정전위를 대표하고 있는 유엔사(UNC)가 북한의 정전협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유엔사는 북한이 세차례에 걸쳐 중무장한 병력을 판문점에 파견, 무력시위를 한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내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보리 회부는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등을 지켜본뒤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한 행위만을 놓고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내부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무력시위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국등 안보리 이사국의 제재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이나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도발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미칠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장 성명보다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가 동반될 수 있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할 생각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가지고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됐을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 남북한은 당분간 돌이키기 힘든 대결국면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전협정위반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되면 북한이 안보리를 국제적인 선전장으로 역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에게도 안보리에서 자국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북한이 정전협정의 사실상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對美평화협정체결 공세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안보리 제재카드 사용에 앞서 명분을 쌓아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鞠賢然기자〉

▽ 한국일보 1996. 4. 9

공중조기경보기

조기경보·지휘기병행
370~470㎞ 범위 탐색
최대600개 목표 추적
1대 가격 4~5억弗線

韓美양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중인 공중조기경보관제기(AWACS:AIRBORNE WARBORNE COMMAND POST)는 「나는 지휘소」로 유명한 E3 SENTRY를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공중조기경보기(AEW)와 공중지휘기(ACP)의 두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 대당 가격이 웬만한 구축함 1척 가격인 4~5억 달러에 달하는 이 항공기는 현재 주한미군에는 배치돼 있지 않고 오키나와 미공군기지에 3~4대가 배치돼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때나 8·18 도끼만행사건등 한반도 위기때마다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

동체 위에 달린 원형레이더가 「트레인드마크」인 E3는 저고도 비행 항공기는 3백70㎞, 고고도 비행 항공기는 4백70㎞까지 탐색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함정의 움직임을 정확히 잡아낸다. 공중전의 경우 적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 아군기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휘를 한다. 최대 6백개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으며 91년 걸프전에서 맹위를 떨쳐 진가를 발휘했다.

보잉사가 77년 개발, 현재 미국이 34대, NATO가 18대, 사우디아라비아 5대, 영국 7대, 그리고 프랑스가 4대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洪潤五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9

□ 정부 대북정책 기본방향

"예견된 심리전" 대화기조 유지

여론악화로 추진 걸림돌…북 돌출행동 지속여부 변수

이상기 기자

북한의 잇따른 판문점 '도발' 이후 겉보기에 긴장 혹은 위기로 치닫는 듯한 남북관계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다. '접촉을 통한 변화유도"라는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들의 전망은 이번 사건이 지난 91년 북한이 군사정전위 불참선언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처음 기도한 이후 충분히 예견돼 온 것이고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벌이고 있는 무장병력 투입 역시 심리전 차원을 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상적인 남북직통전화 시험통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돼 왔으며 8일 아침에도 있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비일상적인 것이라 해도 우리의 기존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만한 상황과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총선 뒤 대북유화정책을 통해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내부 방침에 일정 수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대남비방중지, 한반도내 당국자간 회담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총선 뒤 대북지원 및 대화재개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총선에 끼칠 영향 때문에 당분간 중단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경색된 국민여론은 정부가 이런 내부방침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단계씩 발전된 형태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남북관계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우려했다. 이럴 경우 정부는 민간인 방북허가 중단, 경제협력 확대 취소 등 강경조처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나아가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맞대결론자보다는 "남북관계가 사건·사고의 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양쪽에 도움이 안된다"는 전제 아래 남북관계 진전에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어정쩡한 자세로 북-미 관계 진전에 끌려가기보다 우리가 주도하는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라며 "남북상호 감군이 전제된 평화협정체결 제의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4. 9

"北, 판문점 집중도발로 관심끌기"

DMZ 긴장波高

국방부 분석·대응책

국방부는 판문점에서의 북한군 움직임을 치밀한 각본에 따라 취해지는 고도의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판문점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다른 형태의 또다른 도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한뒤 5일 곧바로 중화기로 무장한 1개 중대 병력을 투입했을 때 만 해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는 이번 사태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했었다.

국방부가 보는 특이동향은 북한군의 투입시간대가 지난 5일에는 하오 6시 2백60여명을, 6일 하오 7시께, 7일 하오 8시께로 3일 동안 적어도 2백30여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에 곡괭이와 삽 등 병력수송 차량까지 투입하는 등 병력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반입부는 기도 82㎜무반동총과 60㎜ 박격포, 기관총 등 중화기 들인데다 이들 무기로 진지를 구축했다는 점이 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판문점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도발징후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태가 북한의 내부균열을 은폐하기 위한 「시선끌기」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과 는 별도로 북한이 만에 하나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연합군은 92년 에 수립된 이른바 「新작계

對美시위·내부균열 은폐用 판단

무모한 행동땐 공세적 보복응징

지원과 평화협정체결등 對美관계개선에서 협상의 우인 응징보복을 할 계획이다. 【洪潤五기자】

▽ 세계일보 1996. 4. 9

金正日, 「軍고삐」 놓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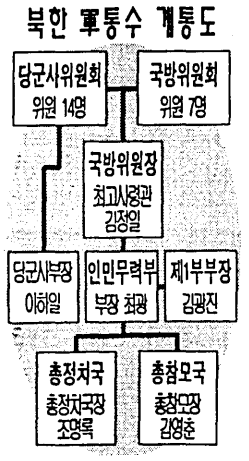
日전문가들 「北 내부」진단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고의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金正日도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정세연구소인 「겐다이(現代)코리아」의 사토 가쓰미(佐藤勝巳)소장은 「군부의 긴장 주도론」을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담화나 성명의 주어(主語)가 「金正日」도 「당」도 「정부」도 아니고 「軍」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는 『종래 북한은 대남, 또는 대외관계 성명을 발표할 때 주로 당이나 정부의 이름을 사용했고 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번에는 각종 담화, 성명에서 군의 이름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토 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군의 전면진출 현상은 얼마전부터 나타난 주요한 변화다. 지난 1월 초순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이례적으로 「군이 반대하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에 응할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 2월 중순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기자회견에서 군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징후라는 것이다.

사토 소장은 『군이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한 온건세력을 제치고 북한체제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으며 金正日도 이에대한 견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도력과 결단력 문제로 金正日에 대한 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최소한 이번 사태의 경우 군이 金正日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주도하고 있지않으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식량난등으로 통제력 약화 조짐

최근 對外성명 軍명의 잦아 주목

사토 소장은 金正日이 미국과 일련의 접촉으로 실적을 쌓은 뒤 올해안에 주석취임등 정치일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은 北·美 대화등이 군의 약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金正日과 군부와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사토 소장외에도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도쿄의 외교관측들은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다.

金日成사망후 경제난등으로 북한노동당의 무력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군이 당의 실책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金正日과의 사이에 알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작년 4월 함북 청진 주둔 제6군단의 쿠데타 미수사건 소문이나 최근 金正日일가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총국의 金正日 암살미수사건등의 소문도 진위여부를 떠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암살미수사건은 북한의 통신을 24시간 방청하는 美CIA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그럴듯한 방증까지 덧붙여 나돌고 있다.

金正日과 군부의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부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정세분석은 거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정전협정 폐기에 관한 담화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金光鎭차수는 실질적인 군부내 제1인자로 관측되고 있다.

【東京=姜成輔특파원】

北남침땐 5단계「5027작전」

초긴장 DMZ

韓·美 대응태세

「징후」단계 첫조치로 美軍 2만증원

도발90일내 50만명 투입 北進·상륙

8일 오후2시 국방부청사 2층 소회의실. 李養鎬 국방장관과 金東鎭합참의장을 비롯, 국방부 국·실장과 합참의 참모부장(중장) 및 차장(소장) 등 20여명의 군 고위관계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예정에 없던 국방부 및 합참긴급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는 이날 아침 열린 金泳三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조찬 회동배경을 설명하고 金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한 뒤 군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鄭和彦합참작전차장(소장)과 朴賢鎭정보본부2차장(소장)의 북한군 동향관련 보고가 있은 뒤 李장관의 지시가 이어졌다. 李장관은 이날 『북한이 우리 땅을 침범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군간부 및 전장병은 어느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고 말했다.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가 계속되자 국방부와 합참은 국지전을 포함,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작전계획을 재점검하는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한 韓·美 양국군 작전계획의 핵심은 「작전계획 5027」이다. 북한군이 전면전을 도발했을 경우 韓·美 양국군은 이 「작전계획 5027」에 따라 5단계로 단계적인 대응을 한다. 현재의 「작전계획 5027」은 지난 92년 수립됐으며 작년에 다소 보완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韓·美 양국군은 1단계로 美전투력증강(FE·Force Enhancement) 및 신속전개억제전력(FDO·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한반도에 배치해 전쟁을 예방하도록 되어있다.

전투력증강 및 신속전개억제전력은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를 막기 위해 항공모함 전투단 및 공격용 항공기, 지대지미사일 등 최신무기를 한반도에 긴급투입한다는 것. 특히 신속전개억제전력은 1개항모전투단, 스텔스전폭기를 비롯한 2백~3백대 규모의 항공기, 2만여명 규모의 1개 해병원정 투입된다.

로, 신속전개억제전력에 앞서 에이태킴스 地對地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북한의 남침을 견제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美 增援軍(증원군)이 한반도에 파견돼 휴전선 이북으로 北進(북진)할 준비에 들어간다. 「작전계획 5027」은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미군 병력 50여만명, 항공기 1천6백여대, 5개 航母전투단을 포함한 함정 2백여척을 한반도에 파견토록 하고 있다. 美 증원군의 한반도 파견으로 전력이 대폭 강화되면 韓·美 양국군은 3단계로 북한의 주요 전투력을 격멸하면서 전선을 돌파, 북진하고 북한 후방지역에서 대규모 상륙작전도 벌인다는 것이 5027의 핵심. 이어 4단계로 평양을 고립시킨 뒤 북한내 점령지역에 대한 군사통치를 실시하며 마지막(5단계)으로 한국군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

한국군은 이와함께 서해5도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해 韓·美 연합 작전계획과 한국군 독자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庾龍源기자〉

北남침시 韓-美 연합작전계획
〈연합사 작전계획 5027〉

1단계: 전쟁억제책 시행 (美 신속전개 억제전력 배치 등)
↓
2단계: 서울 북방에서 북한저지 북한 전략목표 파괴
↓
3단계: 북한 주요전투력 격멸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
4단계: 평양(북한정부) 고립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
↓
5단계: 한국정부주도하 한반도 통일

◇완장 뗀 北韓軍 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병사가 정전협정에 따라 착용했던 「경무」라는 완장을 차지 않은채 근무하고 있다. <사진 AFP제공> 왼쪽은 종전에 완장을 차고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

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4~72시간내에 한반도로 출동토록 돼있다.

전투력증강은 신속전개억제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이후 발전시킨 것으 이같은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韓-美 양국군은 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북한후방 시설을 파괴하는 2단계 작전에

▽ 중앙일보 1996. 4. 9

'평화체제' 실질代案 갖고 정면대응 해야

北 판문점 도발… 우리정부 카드없나

배명복 기자

북한의 계획적인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연일 되풀이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대미(對美)공세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이후 연일 계속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론 미국과의 장성급 군사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현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북한측 구역으로 한정돼 있고, 발포등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피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경계태세 강화,외교채널을 통한 정전협정 준수압력 행사 이외에 달리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停戰협정 준수"만으론 北주장 못꺾어
'2+2'든 '2+4'든 확고한 태도 급선무

정부가 이처럼 손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상지역과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게 뻔하다.이를 통해 북한은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다.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북한은 미국과의 장성급 군사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내 우발적 충돌과 북한의 서해 5도등에 대한 제한적 국지군사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측의 군사대화채널 구축 제안에 유혹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전협정 준수만을 외치며 단기적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보면 자칫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공론화함으로써 북한의 대미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의 남북한 당사자간 평화체제 구축 주장은 미국이 한국 안보의 상당부분을 떠맡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이상론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중국이 보장하는 형식의 「2+2」구상이 나왔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돼있는 상태다. 「2+2」든, 「2+4(러시아·일본 포함)」든, 아니면 「2+1(미국)」이든 확고한 대안을 갖고 북한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되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속에서 공허한 「단호한 대응」강조는 자칫 이의 기정사실화와 우리국민의 안보불감증만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 1996. 4. 9

美 신속대응 戰力 강화에 주력

"방관고란" 클린턴訪韓때 모종조치 검토
對北경고-확고한 安保의지 천명할듯
막후채널 가동… 北과 장성급접촉 시도

북한의 계속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무력 시위와 관련, 美정부의 반응은 일정한 틀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첫째, 현재 북한의 행동은 정전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둘째, 당장 북한의 도발징후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美측은 일련의 북한측 행동이 美-北간 직접 평화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적 도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도 없다는데 美정부의 고민이 있다. 우선 지금 북한의 무력시위가 단지 시위에 그치고 있다고 해서 방관할 경우, 앞으로 제2-제3단계의 도발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美정부는 한반도 휴전선 처럼 아주 민감한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 「작은 사고도 당장 군사분쟁으로 무력화를 위한 무장시위의 장시위가 앞으로도 일정한 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전협정 힐를지만, 이번 사태를 그 행동을 정확히 점치기는 힘들지만, 이번 사태를 그 냥 넘길 경우 보다 더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의 대응은 강경한 對北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한 반도 안보에 대한 美측의 우선 예상되는 美정부의 반도 안보에 대한 美측의 성간 접촉을 군사정전위의 틀 속에서 재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 등에서는 美-北 대화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韓-美정부 차원에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강화 노력 美-北 대화채널을 봉쇄하는 것은 자칫 위기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장시위와 같은 북한측의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美-北 대화채널을 기존 계획대로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다. 자칫하면 북한측이 자신의 어떤 행동도 용인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만큼, 현재 「북한을 국제사회에 軟着시킨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對北 협상을 진행시키는 美측의 태도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위해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 반대로 美측은 정전체제의 유지를 모든 美-北대화의 선결과제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美정부의 對北정책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수주일 동안 드러날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朴斗植기자】

▽ 한국일보 1996. 4. 9

위싱턴의 對北전략
초긴장 DMZ

전문가들이 보는 「판문점 도발과 군부역할」

"軍部 독자행동 보기어려워"
金正日이 의사결정·명령계통상 頂點
兵力투입등 실제 주도권 행사는 확실

북한의 계속되는 판문점 무력시위가 있자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부의 역할과 위상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군부가 여파가 일선부대에 파급되는 등 불만이 누적돼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북전문가들은 金正日이 군부에 발적 강경조치나 군부와 비군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나 내부 이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 등에서는 美-北 대화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韓-美정부 차원에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강화 노력 美-北 대화채널을 봉쇄하는 것은 자칫 위기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장시위와 같은 북한측의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美-北 대화채널 대화 채널을 부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중반기 美측이 북한에 제의했던 장성급 접촉을 군사정전위의 틀 속에서 재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 등에서는 美-北 대화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韓-美정부 차원에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강화 노력 美-北 대화채널을 봉쇄하는 것은 자칫 위기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장시위와 같은 북한측의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美-北 대화채널 대화 채널을 부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중반기 美측이 북한에 제의했던 장성급 접촉을 군사정전위의 틀 속에서 재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 등에서는 美-北 대화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韓-美정부 차원에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강화 노력 美-北 대화채널을 봉쇄하는 것은 자칫 위기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장시위와 같은 북한측의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美-北 대화채널 대화 채널을 부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중반기 美측이 북한에 제의했던 장

▽ 서울신문 1996. 4. 9

北韓軍 지휘체계 "異常징후"

긴박의 DMZ

北천방부대의 엇갈린 행태

국방부 긴급회의 李養鎬국방장관과 군수뇌부가 8일 하오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군의 지휘체계에 균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하오 5시 관영 중앙방송을 통해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서의 유지관리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1시간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북한군은 「선언」에 따라 정전협정에 의무화된 「경무」라는 완장을 떼내고 근무를 서는 것이 목격됐다. 정전협정 파기와 관련, 북한군이 행동에 돌입했음을 뜻하는 첫 표시였다. 이후 5일부터 사흘동안 하루 1차례씩 북한은 JSA에 중무장한 병력을 투입, 무력시위를 했다.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각본에 따라 군 조직이 움직이는 듯했으나 「이변」이 생겼다.

7일 낮 1시쯤 서부전선에서는 북한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병 12명이 초소에서 나와 우리측을 향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외쳤다. 이들 사병 가운데 9명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대로 「경무」라고 씌어진 완장을 착용한 것으로 목격됐다. 내부통제가 어떤 나라보다도 철저한 북한에서, 특히 최전방 초소의 경비병이 북한군의 지침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은 북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추정을 제기하게 했다.

李養鎬국방부장관은 이날 『북한군 전체에 정전협정 파기선언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군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도부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최근 유엔에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군부의 반대로 외부의 식량지원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한 종전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金正日과 군부의 갈등인지 또는 군부 내부의 갈등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균열이 상당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거로 보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黃性淇기자〉

최전방 일부 초병 「경무」 완장 계속 착용

부대따라 다른 행동…"지도부 균열" 관측

▽ 경향신문 1996. 4. 9

「엉뚱한 곳」 도발 가능성

판문점에 시선 모은후 "聲東擊西"

우리측 자극…대응유발 노림수도

DMZ 긴장 전지구축 속셈

중무장한 북한군의 판문점투입이 각기 다른 행태로 연사흘째 이어져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북한군의 노림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갈수록 병력투입시간이 조금씩 늦춰지고 비무장지대안에 머무른 시간과 진지투입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일간의 상황을 점리해 보면 첫날인 5일 1백30여명이던 병력이 이튿날인 6일에는 2백60여명으로 배가 됐고, 7일에는 약간 줄어든 2백30여명이 투입됐지만 잠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차량인 소형트럭 6대가 7일 처음으로 관측됐기 때문인데 시간40분으로 돌쨋날이 가장 길었다는 점이 이튿 뒷 1백30여명이던 병력이 이 튿날인 6일에는 2백60여 명으로 배가 됐고, 7일에는 약간 줄어든 2백30여 명이 투입됐지만 잠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차량인 소형트럭 6대가 7일 처음으로 관측됐기 때문인데 대한 제반 조치는 이미 끝로 예상돼 사태가 장기화 할 것이라면서 『훈련은 아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북한측이 투입시간을 점차 발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측의 관측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긴장 문제에 모든 시선을 모아놓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려는 것이다. 북한이 늘 강온양면책을 펴왔듯이 이번에도 성동격서(聲東擊西)할 가능성이 주된 공격대상은 미군측 병사일 개연성이 높다.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외쳐대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직접 협상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군을 갈등하는 행위가 돌출될 수 있다는 게 우리 군당국의 분석이다.

이때문에 판문점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 소속 미군과 우리 군은 여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李仲根기자〉

단기적 훈련의도는 2가지로 예상된다. 첫번째는 판문점에 모든 시선을 모아놓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려는 것이다. 북한이 늘 강온양면책을 펴왔듯이 이번에도 성동격서(聲東擊西)할 가능성이 있단고 군당국은 내다봤다. 여기에는 비무장지대 내 전방관측소(GP)의 대거 구축에서부터 테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또다른 노림수는 판문점에서 「모종의 일」을 저지르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에 진지를 구축해 놓고 훈련을 하면서 우리측을 자극하다가 대응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을 유도하는 것이다. 판문점은 북한측의 지형이 높아 우리측 지역을 손쉽게 내려다볼 수 있는데도 굳이 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 서울신문 1996. 4. 10

오늘 韓美 4者회담 北도발 대응 논의

孔祥明외무부장관 내일 귀국

李義鎬국방부장관 내일 귀국

외무부 孔祥明외무부장관과 국방부 李義鎬국방부장관은 10일 한국시간 오후 귀국, 제네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의 등 주한미군사령관 주최 한미연합사 창설 10주년 기념 행사 등 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주최 한미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의 등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한

美·日「北압박」가시화

▽ 경향신문 1996. 4. 10

미사일협상 중단 경고
수교논의 걸림돌 시사
美·日

【東京=연합】美정부당국자는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와 관련, 북한의 도발행동이 계속될 경우 오는 19일부터 베를린에서 개최될 북·미 미사일협상을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9일 워싱턴發로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협상에 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당국자는 특히 미사일협상 중지에 대해 『선택방안 가운데 하나이며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행동이 계속될 경우 북·미 관계에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미 미사일협상과 관련해 실무자급 의견교환을 가졌다.

【東京=姜成輔특파원】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는 9일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이 北·日간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시모토총리는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 사태가 북·일교섭에 주는 영향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감이지만 (북한과) 서로 신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영향을 줄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지야마(梶山靜六)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동아시아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지야마 장관은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조선일보 1996. 4. 10

中·러, 北정전협정 준수 촉구
中외교부대변인 "韓國배제한 평화협정 반대"
러 외무차관 평양 급파

【北京=朴勝俊기자】중국은 9일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 군사행동과 관련, 『정전협정이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또 북한이 한국 정부를 제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陳健(천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사태 진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종료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새로운 평화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나, 그전까지는 정전협정이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陳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는 응당 관련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聯合】러시아는 9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 북한과 회담하기 위해 알렉산데르 파노프외무차관을 평양에 파견했다. 파노프차관은 『러시아무역대표단과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북한에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노프차관은 또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쟁발발시 소련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지원토록 한 舊소련과 북한간 군사조약이 93년 폐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미하일 데무린 러시아외무부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유지에 관한 의무를 지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한반도 안보체제 해체를 향한 조치로 간주한다』며 『러시아는 이에 불안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4. 10

權통일부총리 판문점 방문 "不發"
"北 불필요한 자극" 당초계획 돌연 연기
통일원 "정황 파악 여유 없었다" 변명

통일원은 9일로 예정됐던 權五琦통일부총리의 판문점 방문을 하루 전날인 8일 하오 6시께서야 『여건이 좋지 않다』며 무기연기했다.

통일원은 이날 상오 간부회의에서 權부총리의 판문점 방문 문제를 논의한 뒤 하오에는 언론에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수행취재 기자 명단까지 확인했다. 그러다 곧바로 간부회의를 재소집해서 결정을 취소하고 방문을 무기연기한 것이다.

權부총리의 판문점 방문은 남북회담사무국 전방사무소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행정순시로 이미 지난주에 예고된 사안이었다.

통일원측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판문점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의 방문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통일원측은 또 미처 부총리의 판문점 방문이 미칠 여파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령부측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10일부터는 사태의 민감성때문인지 내국인에 한해 관광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5일전인 4일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을 했고 판문점에 3일째 계속해서 중무장병력을 투입하는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부총리의 방문일정이 변경된데 대해 일부에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일찍 취소를 해야지 출발을 불과 24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허둥대는듯한 통일원측의 처사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통일원측의 업무자세를 나무랐다.

【金炳讚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0

"북 무력시위 중단-정전협정 복귀 안할땐

남북대화-지원 없을것"

정부 고위당국자

정부는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장군인 투입 중지, 정전협정 준수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무력시위 중단과 정전협정 복귀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관계를 풀어가는 기본이며 정도"라며 "북한의 무력시위 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대화 대신 강경대응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군사적 긴장상태에서는 남북대화나 대북 지원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

▽ 서울신문 1996. 4. 10

北판문점 병력투입 식량문제 해결 수단

美관리들 인식

【뉴욕=李健永특파원】 미국 관리들은 북한측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정확한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 당혹하고 있지만 대부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행동은 부족한 식량사정을 국제사회에 호소, 원조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하고 식량문제에 관한 한 북한에는 4월이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4. 10

"北군부 위상 급속강화

정부당국자 DMZ긴장 주도…경제도 간여"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최근 북한군부가 사회통제를 담당하고 한반도의 군사위협도 주도하는등 군부의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군부가 사회안전부의 기능인 평양출입자 통제권을 넘겨 받은 것은 물론 경제분야에도 상당부분 간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또 『金日成생일(4월15일)기념행사 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대신 군입대촉구 행사등 군부위주의 행사는 늘고 있다』면서 『이는 긴장조성을 통해 이완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한 정부는 남북대화나 대북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大根기자〉

▽ 한국일보 1996. 4. 10

北서 군사분계선 침범땐 交戰규칙따라 즉각 조치

3軍총장 긴급회의서 지시

육·해·공 3군참모총장은 9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이나 영공·영해를 침범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

尹龍男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상오 제1, 2, 3야전군사령관 및 육본참모부장들을 긴급 소집, 『각급 부대 지휘관은 소신있고 단호하게 부대를 지휘하라』면서 『특히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한발짝이라도 들여놓을 경우 교전규칙에따라 즉각 조치토록하라』고 지시했다.

安炳泰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해군본부회의실에서 확대참모회의를 갖고 『북한이 해상으로 도발하면 즉각 철저히 응징하라』면서 『함정들은 조업중인 어선이나 민간 여객선에 대한 보호 및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安총장은 이어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서해5도를 발문,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한 즉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李光學공군참모총장도 이날 金전투비행단에 지휘서신을 내려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응징 할수있는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한군은 판문점에 진지구축훈련을 하면서 진지와 제1, 2초소및 72시간다리 부근 5초소를 잇는 길이 4백m 가량의 교통호를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군은 또 5일에도 당초 알려진 1백30여명이 아닌 2백40~2백60여명의 병력을 투입한것으로 파악됐으며 5, 6, 7일 3차례 모두 2개중대급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洪潤五기자】

▽ 동아일보 1996. 4. 10

유엔司 對北경고 검토

"北軍투입 심각한 사태"규정

게리 럭 주한유엔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판문점내 중부장갑력 투입사건과 관련, 강력한 대북(對北)성명 또는 경고서한을 북한측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측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이번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럭사령관이 직접 대북경고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은 유엔사의 육지임은 북한측의 판문점 병력 투입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과거에도 유사한 불법훈련들을 자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행위를 특별한 경고를 요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육군은 9일 오전 尹龍男총장 주재로 야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전선지역 각급지휘관은 적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 중앙일보 1996. 4. 10

北韓의 또다른 도발에 쐐기

軍事분계선 침범 즉각대응 지시 배경

김민석 기자

육·해·공 3군 총장이 9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북한의 도발의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다.

군당국은 북한이 판문점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 처음 시위를 벌인 5일에도 즉응을 강조했지만 그때와는 강도나 실천의지등에서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는 경고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제는 실제사격등을 마다 않으리라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분명하면 전쟁도 불사할 도발에 대해선 경고수준을 넘어 무력으로 부딪쳐 보겠다는 것이다. 북측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해오면 우리도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4~5월에 10명의 북한군이 고의적으로 군사분계선(DML)을 세차례나 월경했을 당시 우리 군은 경고방송만 하고 북측으로 복귀할 때까지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DML을 월경해도 아군측에 대해 명백한 위해(危害)행위를 하지 않는 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무력충돌은 가급적 피하자는 생각이었다.

춘궁기 타고 DMZ이외 확대 가능성
경고 수준넘어 무력저지도 불사 의지

수 있다는 각오다. 이런 것들은 윤용남(尹龍男)육군참모총장의 9일 주요지휘관회의 지시에서 잘 드러나 있다. 尹총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한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尹총장은 당초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의미로 비치게끔 『전원 사살하라』고 지시문을 작성했다가 자칫 유엔군의 교전규칙을 위반했다는 시비를 우려, 수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당국이 교전(交戰)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이같은 즉각 응전(應戰)을 전 예하부대에 시달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을 방치할 경우 세차례에 걸친 판문점 무력시위에 그치지 않고 비무장지대(DMZ)와 동·서해상및 공중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만만하게 보이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내재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지금은 마침 북한군이 겨우내 무너진 진지를 보수하고 비무장지대내 통로도 개척하는 시기다. 또 춘궁기여서 나물 채취및 수렵 등으로 비무장지대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같은 행위를 용인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군수뇌부의 판단이다.

유사행동이라도 과거의 것과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이 나온 지금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군고위관계자는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무장지대는 북한군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될 것』이라는 말로 군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 동아일보 1996. 4. 10

「육군 발표문」 폐기소동

8일 밤 9시경 국방부기자실에서는 육군이 배포한 한장짜리 발표문을 놓고 소동이 벌어졌다.

발표문은 『尹龍男육군참모총장이 7, 8일 양일간 최전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결전의지」를 독려한데 이어 9일 오전 야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 「적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한발짝이라도 들여놓을 경우 전원 사살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하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발표문 내용중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월경시 전원사살이란 부분은 유엔사가 정한 「교전규칙」을 넘어선 지시로 자칫 북한과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북한군 분계선 넘어오면 사살」 내용
교전규칙-軍令權 위반-뒤늦게 취소

이때문에 국방부기자실 주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밤 12시경 朴熺太국방부정책실장이 황급히 기자실로 달려왔다. 尹총장과 통화해 진의를 알아봤더니 『교전규칙에 의해 철저히 대응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육군발표문의 폐기를 요청했다.

다음날 회의 지시 내용을 한밤에 미리 검토한 것이다.

지난 89년 군조직개편과 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육참총장은 인사 군수의 군정권(軍政權)만 담당하고 정보 작전 등 군령권(軍令權)은 합참의장 권한으로 돼 있다. 〈黃有成〉

▽ 조선일보 1996. 4. 10

긴박한 3軍 움직임

비무장지대 각종도발 긴급조치 방안 재점검

9일 오전11시반 충남 논산 鷄龍臺(계룡대) 2층 육군회의실. 尹龍男육군참모총장을 비롯, 吳榮祐1군사령관, 趙成台2군사령관, 육본본부 인사·정보작전·군수를 비롯한 각급 참모부장(소장) 등 육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10여명이 모였다.

우,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하라며 『예상되는 비무장지대내 각종 도발양상에 따른 긴급조치방안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점심을 늦춰가며 낮12시40분까지 계속됐다.

8일 오후 중부전선 3사단지역을 방문했던 尹총장은 간담회가 끝난 이날 오후에도 경기도 주한미군 정보부대를 방문, 韓·美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尹총장과 각 군사령관들은 당분간 전방부대순시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安炳泰해군참모총장도 이날오전 제2함대사령부를 비롯, 서해5島지역을 방문해 북한의 국지도발때 최우선 대상지역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이곳을 경계하는 장병들을 격려한 뒤 『북한의 도발시 즉각 현장에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李光學 공군참모총장도 경기도의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 『공군의 경우, 유사시 가장 우선적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선봉군임을 명심해 군사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각군 순시는 북한의 육지일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즉각 응징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군사분계선 월경시 즉각 조치하라』는 尹총장의 9일지시는 북한군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그의 지시는 외형상 유엔군 交戰규칙을 원래 규정대로 준수하라는 修辭的(수사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다.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경할 경우,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발포를 할 수도록 돼있다.

또 적으로부터 소총·자동화기·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소총은 소대장, 기관총은 중대장, 야포는 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자위권을 발동, 응사토록 돼있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종전의 관행을 들어 尹총장의 이날지시에 군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한다.

종전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경우에도 대부분 경고를 해 되돌려보냈으며, 발포까지 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무력충돌가능성을 우려, 각급 지휘관들이 군수뇌부에 의견을 물은 뒤 신중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尹총장은 이날 앞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越境(월경)하는 상황이 생기면, 각급 지휘관들이 군수뇌부에 묻의하지 말고 규정대로 경고를 한 뒤 발포하라고 지시, 『법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3軍총장, 서해5島-전방비행단-주한미군 방문격려

이에따라 북한군이 정전협정무력화를 위해 의도적인 도발행위를 할 경우, 우리측의 발포에 따른 국지적 交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尹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우리군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만 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단호한 결의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尹총장의 이날 지시가 자칫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수뇌부의 잇단 강력한 입장표명이 앞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庾龍源기자〉

▽ 세계일보 1996. 4. 10

北, 판문점 전투진지 구축

병력 인폐용 교통호 마련

도발행위 예상보다 장기화 가능성

유엔司 항의전문 北 접수거부

지난 5~7일 판문점에 투입된 북한군 중무장병력은 공동경비구역 북측에 박격포진지를 만들었으며, 진지와 진지를 연결하는 교통호까지 구축하는등 전투진지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9일 북한의 중무장병력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 투입돼 판문각 부근 제1, 2초소 사이에 박격포진지를 구축했으며 이 진지와 제1, 2초소를 연결하는 길이 약 4백m, 깊이 1~1.2m의 교통호까지 파놓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밖에도 「자유의 다리」 북서쪽에 있는 「72시간다리」근처 제5초소에도 박격포진지를 구축했으며 이 진지에도 제1, 2초소에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규모의 교통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병력의 은폐·엄폐·비밀이동이 가능한 교통호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 만든 것은 이번 판문점투입 훈련이 전투목적을 띠고 있으며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러 駐韓유엔군사령관 게리 명의 대북 항의서한 또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사는 지난 6일 오전11시 전화통신문으로 북한측 일직장교에 5일의 불법행동을 항의하려 했으나 북한군이 접수를 거부했으며 이에앞서 지난 4일 북한군 「4·4성명」과 관련해서도 군정위 유엔사 수석대표 李釋馥소장 명의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역시 북한측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李在承기자〉

▽ 한국일보 1996. 4. 10

DMZ 긴장波高… 美국무부 부대변인 브리핑

"평화협정보다 南北韓대화 우선"

글린 데이비스 美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측의 정전협정 파기 움직임과 관련한 미국측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오고간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장병력 투입과 관련해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는가.

『한미연합사의 경계태세를 한단계 높였다. 그러나 (북한측으로부터) 적대위협이 증가한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직접 평화협정 체결협상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휴전선을 침범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살지시를 내린데 대해 논평해 달라.

『남북한간에는 정식 평화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휴전선은 위험하다. 그 지역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북한군이 종전의 상태로 복귀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무장병력의 공동경비구역 투입과 4·11 총선과 연관관계가 없나.

『북한측의 논리나 동기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여러가지 이론이 만발하고 있지만 논평하지 않겠다』

-미국측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화해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군은 한국과의 안보공약과 유엔의 일원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및 미국등 6·25참전 3자간의 회담 가능성을 미국은 배제하나.

『우리의 이해에 합치되거나 한반도의 평화에 부합되는 역할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담당할 준비가 돼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측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되는 정전협정체제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추측에 대해 논평해 달라.

『문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워싱턴=李相石특파원】

南·北·美등 3者회담 가능성도 배제안해

北 정전협정 조속 복귀 한반도평화 기초

▽ 조선일보 1996. 4. 10

노동신문 "銃聲만 남았다" 대남 격렬비난

「전시 주민무장」강조… 내부단속 애쓴 흔적

"총선 때맞춰 南서 도발" 책임 떠넘기기도

북한은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과 판문점 무력병력 출동으로 對南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각종 관영 언론매체를 통해 격렬한 대남비방을 펼쳐 주민들에게 현 시점이 전쟁위기상황임을 강조, 내부단결과 체제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9일자 1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백전백승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점들의 책동은 이미 實戰(실전)에 들어섰으며 이제 물리적 충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적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하게 짓부셔버리자』며 강도높은 대남비방과 전시체제에 대비한 주민무장을 주문했다.

이는 전날 사설에서 『한반도는 (한국의)위험스런 군사활동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는 전쟁전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서 水位를 한층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5일 중앙방송 논평에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발표(비무장지대 불인정 내용)는 음탕한 자위적 도발이다」며 이 진지에도 제1, 2초소에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규모의 교통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병력의 은폐·엄폐·비밀이동이 가능한 교통호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 만든 것은 이번 판문점투입 훈련이 전투목적을 띠고 있으며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 경향신문 1996. 4. 10

유엔군 초소4곳·GP서 감시

유엔군 야간관측장비로 숫자파악 용이

G P 최근접거리서 차량이동 잘보여

북한군 어떻게 관측하나

판문점에 투입되는 북한군의 숫자와 투입 후 행동을 우리측은 어떻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북한군의 판문점내 움직임이 야간에 이뤄짐에도 육안이나 야간망원경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측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현재 판문점내 북한군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은 크게 2곳.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유엔군초소와 판문점 주변에 있는 우리측 1사단 전방초소(GP)다.

유엔군 초소는 북한초소와 마찬가지로 판문점내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북한측의 동태를 낮시간의 경우 거의 파악해낼 수 있다. 여기서 관측된 사항은 판문점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미군측 부대(캠프 보니파스)를 통해 유엔사령부로 보고되고 다시 한국군측에 통보된다.

이와함께 우리군측이 파악하고 보고하는 채널이 있다. 판문점내 유엔군 초소는 모두 4곳으로 몇개의 초소는 우리 사병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군과 우리측 양쪽에 보고를 한다. 그러나 「유엔사의 위임」에 의해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는 1사단 GP병력은 순수하게 우리 계통으로만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미군측은 판문점 내에 있는 경비병력에 의해서만 관측을 하지만 우리측은 미흡한 수준이긴 해도 1사단 GP관측이라는 채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 GP들은 판문점 밖에 있으나 판문점 서쪽에 있는 GP에서의 관측이 더 용이하다. 우선 앞쪽이 탁 트인 곳에 있는데다 북한쪽 병사가 넘어오고 있는 「72시간 다리(76년 8·18도끼만행 이후 72시간만에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앞쪽에 있어 북쪽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다. 사람수는 몰라도 차량 이동상황은 쉽게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유엔군측의 관측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관측 장비」 때문이다. 현재 유엔군은 판문점내에 야간 관측장비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우리군이 관할하는 초소에는 이같은 장비가 없다.

지난해 임진강변으로 투입됐던 무장북한군중 1명이 북한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것도 바로 이 장비이다. 2일째 투입병력에 대해 우리측이 230명이라고 한 데 비해 유엔사가 240명이라고 다소 엇갈린 내용을 발표한 것은 바로 이 장비의 사용여부로 인한 것이다.

유엔사와 우리측이 지금까지 판문점 투입 북한군의 숫자와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한 결과, 3차례 모두 2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숫자를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사진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북한측의 행동은 우리측에 의해 거의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李仲根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0

"북 무력시위는 자위조처"

유엔 북대표부 외교관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외교관은 8일 최근의 판문점 사태에 대해 "연속적인 북조선 붕괴 발언, 한미 합동군사훈련, 군사력 증강 등 줄곧 계속되어온 대북 위협에 대한 북조선의 자위적 조처"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이러한 대북 위협은 전쟁 전야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징조들"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 조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취한 조처가 남한 총선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이 외교관은 "남조선의 총선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면서 "현재의 급박한 정세에서 볼 때 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남 기본합의에 의해 구성된 북남 군사위를 열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남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조미(북미)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4. 10

記者 수첩

알수없는 북한

8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 「북한의 비무장 지대(DMZ)규정 위반과 한국 總選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글린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 동기나 논리를 적치는 것은 북가능하다고 입을 떼었다. 「북한이 왜 이러는지, 북한이 왜 이 시점을 선택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紙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은 金泳三 대통령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무장 지대에서의 북한의 도발은 총선을 앞둔 金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미사일 실험이 李登輝 대만 총통의 선거 앞승을 도왔던 것과 같은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전개 뒤에는 역시 「왜라는 의문부호가 숨어 있다.

북한에 대한 유화조치를 주장하는 美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런 넋두리를 늘어 놓았다고 한다. 「북한을 끌어 안아 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분위기였다. 美北간의 현안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도 준비돼 가고 있구….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 겉으로 누그러뜨려 놓은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다시 시작해야할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준비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다수說이긴 하지만, 북한이 내부 결을 해소를 위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이론도 그럴듯하게 대두되고 있다. 8일 페리 국방장관의 발언도 이같은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지도부 전체의 합의 사항인가, 아니면 군부의 강경 노선에 따른 것인가」, 「북한은 韓美진영의 어떤 대응을 예상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 기도는 어떤 단계까지 발전할 것일까…」 의문점을 꼽아 보자면 열 손가락도 모자라지만, 이에 대해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상의 자신있는 답변을 내놓는 권위자는 찾아볼수 없다.

얼마전 북한관련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탠리 로스 前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안보보좌관은 북한문제를 다루는 美관계자들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북한정세에 대한 어떤 예언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얼마나 많은 예측들이 모두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됐는가. 對北정책 수립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클린턴 정부내에서 3년동안 북한문제를 담당했던 최고 책임자가 도달한 결론은 「북한 붕가지론」이었던 셈이다. 【金昌均·워싱턴특파원】

▽ 동아일보 1996. 4. 10

北내부 움직임

"南서 전쟁준비" 주민에 선전

"식량난 불만 밖으로 돌리려는 수법" 관측

학생등 軍입대 선동·軍部입김 강화된듯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북인정을 선언한 뒤 고조책임을 떠넘기는 등 적으로 전쟁발발이 임박한 위를 일으킨 목적의 하나 석을 놓고 있다.

판문점에 중무장병력을 잇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 북한은 관문점에서 무력 억지를 쓰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내 있어 최근 일련의 도발행 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분 시위를 벌인 뒤인 지난 6

달아 투입 하는 정전 협정과 기책 동을 자행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 응태세를 대비 오히려 북 침전쟁준비 라고 주장 하며 긴장

일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金泳三대통령이 지난 4일 중부전선 최전방부대를 시찰, 군에 완벽한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을 「전쟁도발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이라고 덤터니없이 비방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 우리의 대응책을 비난하며 「우리는 결코 위협적인 언사로 그 누구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려는게 아니며 한단면 하고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고 말해 그들이 언급한 「자위적 조치」를 계속 행동에 옮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중앙방송은 이날 밤 시사논평을 통해 한국과 주한미군이 대북경계태세를 위치콘3에서 위치콘2로 강화한 것은 「임의의 시간에 전쟁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방송은 이어 金대통령이 「전쟁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신한국당의 장기집권을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의 역선전을 늘어놓았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일 평양 전승광장에서 5만명의 청년학생을 동원, 「군입대 궐원대회」를 열고 「현재 조선반도에는 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돼 있다」며 청년들이 군에 입대할 것을 선동했다. 북한은 이밖에 최근 판문점도발행위 등과 관련, 「이번 조치를 취하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행동질서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주민들에게 마치 북침전쟁이 임박한 듯이 허위선전을 함으로써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에 찌든 주민들의 불만을 한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처럼 허무맹랑한 선전전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각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 앞으로 위기가 심화할수록 더욱 적극적인 도발과 함께 남북관계경색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역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金대통령이 지난 93년 4월9일 북한헌법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된지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심상치 않은 군사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남정책에서 군부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韓起興〉

▽ 세계일보 1996. 4. 10

和-戰전략 병행 신축대처

DMZ 도발 韓-美대응책

현단계선 양국 共助과시 北견제

北「오판」차단 외교-군사조치 강구

韓·美 양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과 관련해 和戰 양면의 대응책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향후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되 북한측이 판문점 내 무력시위에 그치고 있는 현 단계에선 외교적 대응방안에 무게를 두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과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양국의 외교및 국방부처들이 다단계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은 오는 16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한국의 孔魯明외무, 李養鎬국방장관과 미국의 외무장관 국방장관 2+2회동을 갖고 외교및 군사적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제임스 레이니 駐韓美대사, 게리 럭 駐韓미군사령관은 1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이지만 북한이 국지전 도발등 전쟁을 일으킬 의도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정치적 파만큼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도발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한 것은 북한이 한단계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정전협정 위반문제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리 회부안을 협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외교적 대응방안의 하나다. 미국은 북한의 뉴욕 유엔대표부등의 채널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북·미 관계개선 작업이 중단되고 對北 경제제재 추가강화조치도 유보없이 수반해 엄단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예측불가능한 북한 정권의 속성상 예기치 못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거나 무력을 동원한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인 응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韓賢洙기자〉

판문점 北중화기 진지 국방부는 9일 중무장한 북한군이 지난 5~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불법투입돼 박격포및 기관총 진지(건물 왼쪽 흙이 패어진 부분)를 구축한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 동아일보 1996. 4. 10

"北 정전협정 위반 여당 總選에 도움"

獨紙보도

【본=金昶熙】북한의 최근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선거전에서 집권당을 도와주는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고 9일 독일의 유력지 쥐드 도이체 차이퉁(SZ)이 논평했다.

이 신문은 『평양측은 남북대화를 북한 미국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기존입장을 바꾸기 위해 현재와 같은 도발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의도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신문은 북한측의 도발행위가 11일 총선에서 한국의 집권당에 큰 「지원」이 될 것이라면서 『평양측의 이같은 행위는 이미 「자살골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1996. 4. 10

北 판문점투입軍은 「도끼만행」부대

경비부대 아닌 개성에 본부둔 보병

北 인민무력부 직할…兵力 400여명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투입한 부대는 북한측 판문점경비부대가 아닌 외부증원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5, 6일 이틀동안 1, 2초소 중간지점과 5초소부근에 각각 박격포진지를 구축하고 1, 2초소를 잇는 길이 4백m, 깊이 1~1.2m의 교통호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대는 개성에 본부를 두고 있는 보병대대이며 병력은 4백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 판문점 경비대대는 박격포 대전차화기 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투병력도 정전협정에 따른 장교 5명, 사병 30명에 불과하고 행정 지원병력까지 합쳐 2백~3백명 규모다.

군당국은 최근 판문점에 투입된 부대가 판문점 경비대가 아닌 외부증원부대로서 개성방향인 판문점 서쪽 「72시간 다리」를 통해 이후 판문점 경비대대를 증원하기 위해 편성됐으며 지휘관이 상좌(아군의 중령과 대령사이 계급)이며 북한 인민무력부의 직접 명령을 받는 「직할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대는 지난 76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절단을 둘러싸고 도끼로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하고 미군 4명과 카투사 4명에게 상처를 입힌 「도끼만행사건」을 저지른 부대로 알려졌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을 경비하는 경비대대의 이름은 「캠프 보니파스」이며 미군과 카투사가 4대 6 비율로 편성돼 있으며 유엔사의 직접지휘를 받고 있다. 3백20여명 규모의 캠프 보니파스는 지난 52년 5월 군사정전위 지원을 위해 「캠프 킴튼호크」란 이름으로 창설됐으나 도끼만행사건으로 희생된 미군 보니파스대위를 추모하기 위해 부대이름을 바꿨다.

〈黃有成〉

▽ 경향신문 1996. 4. 10

北 DMZ침투땐 「경고방송」 먼저

불응하면 사격…휴전후 유엔군 제정

「敵性선포권」은 한국군 장성에 위임

유엔사 「交戰규칙」이란

육군이 9일 야전군 사령관회의를 통해 내리려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경우 전원사살하라』는 명령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은 「유엔사 교전규칙」이었다. 이 명령이 시달돼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바로 이 교전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명령문구를 고치도록 했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한마디로 『비무장지대에서 적과 마주쳐 전투가 불가피해졌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고 53년 휴전과 동시에 유엔군이 만들어 한국군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즉 평소에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비무장지대 수칙」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다 북측이 규정을 위반해 도발할 때를 대비한 대응 지침이다.

교전규칙은 기본적으로 「자위권 발동」 개념에서 출발한다.

교전규칙의 주요 내용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올 경우 경고방송과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사격을 하며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일선지휘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권총 및 개인화기 응사의 판단은 소대장이, 기관총 사격은 연대장이 내리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박격포 야포 등 포 사격 허가 판단권은 야전군사령관에게 위임돼 있다. 미사일은 유엔군사령관이 허가해야 발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군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적대행위에 대한 아군의 자위권행사로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한·미연합군중 누가 최종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94년말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수정됐다. 이전에는 미군이 지상군 및 해군 한·미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았으나 이때부터 한국군이 사령관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군과 해군이 북한과 심각하게 전투를 벌일 경우 이른바 「敵性선포권」은 최종적으로 한국군 장성들에게 주어진다. 이때 적성선포는 미군측과 신속한 협의하에 이뤄진다.

그러나 공군은 순간적인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7공군사령관이 구성군사령관에 임명돼 있어 미군에게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

한편 이날 수정돼 시달된 육군의 명령만으로도 일선 지휘관 및 병사들에게는 대단한 대응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 군내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종전에는 군사분계선 월경이 이뤄지면 상급부대에 보고한 뒤 지침을 받던 관례와는 달리 「교전규칙에 의거한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토록 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판문점 투입 등으로 전선에서 우발행위가 우려되는 시점이어서 교전규칙 준수는 더욱 중요해졌다.

<李仲根기자>

▽ 동아일보 1996. 4. 10

北 DMZ 무장진입 美언론 보도

【뉴욕=李圭敏】미국 뉴욕타임스지는 9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동을 1면과 국제면에 서 울발과 워싱턴발로 각각 상세히 보도하고 한국정부는 이번 사태가 여당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선거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에 요청했으며 유엔 안보리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李載昊】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8일 사흘 동안 계속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진입이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9일 1면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부 한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군의 움직임은 잘 통제된 일련의 전술적 가부키와 같다』고 말했다。

포스트지는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찰과 감시를 강화했으나 휴전선 일대의 미군 수(數)나 경계태세의 강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포스트지는 『美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동기에 대해 여러가지 이론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 이론들은 모두 추측과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군의 진입은 단지 하나의 사실, 즉 북한은 트럭 한대 분량의 군인만으로도 워싱턴과 서울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정부 선거때까지 관망" NYT

"군사목적 아닌 정치적의도" WP

▽ 경향신문 1996. 4. 10

하늘에 뜬 「지휘통제소」

▩ 한반도 파견 美조기경보기

이상징후땐 바로 요격명령 가능

4대 1개조 편성…걸프전서 맹위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미군측이 조만간 한국에 파견할 공중조기경보기(AWACS)는 현재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E3A와 E3C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AWACS는 공중조기경보기로 통칭되고 있으나 엄밀하게는 「공중조기경보 및 지휘통제기(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이다。 조기경보기능뿐 아니라 공중지휘통제의 능력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명칭대로 기능을 충족시키는 기종은 E3(별칭 센트리)밖에 없다。 C형은 A형을 보강한 최신형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기체 위에 넓은 원반모양의 회전식 레이돔을 장착하고 있다。

기체높이 12.9m, 기장 46.6m, 기폭 44.4m, 레이돔 지름 9.14m, 최대이륙중량 14만7천kg에 최대속도가 마하 0.8, 작전행동반경 1만2천35km, 임무고도 9,100m이며 11시간 30분동안 공중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레이돔 안에는 감시레이더 안테나와 피아(彼我)식별기 등이 장착돼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함재용인 E2C(호키)도 레이돔을 장착,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자료를 지상지휘소로 보낸 뒤 거기서 비행단 등에 지시할 수 있는 데 비해 E3기는 바로 지상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어 공중지휘통제소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로 4대가 1개조로 움직이며 1대는 지상에 예비로 대기하고 나머지 3대가 8시간마다 교대하게 돼 있다。 E3기는 걸프전에서도 맹위를 떨쳐 현대전의 필수 전력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 AWACS의 한반도 파견이 「임시 배치」인지 단순한 「출동」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AWACS가 오키나와 기지에서 발진해 한반도 인근상공에서 활동하다 다시 기지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 오산기지 등에 당분간 배치돼 작전을 펴는 2가지 방안이 있다。 현재로선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군당국은 보고 있다。 <李仲根기자>

▽ 서울신문 1996. 4. 10

각국지도자 "北韓 DMZ도발 중지" 촉구

美·日·佛·러·獨등서 平壤의 停戰협정 위반 규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8일 북한이 남북한간의 휴전선비무장지대에서 벌인 중무장병력의 무력시위를 규탄하는 한편 평양측에 자제를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일본·프랑스·러시아 및 독일등은 이날 북한이 정전협정상의 의무이행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무장병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을 비난하고 북한측에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세계 주요 국가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미국=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중무장한 병력을 판문점의 비무장지대에 투입한 것은 정전협정의 위반이며 「도발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페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하워드대학에서 연설을 마친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그같이 말하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은 「내부에 엄청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은 「북한정부가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투입함으로써 한국을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신은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외무부의 자크 뤼멜 아르트 대변인은 「북한측의 태도와 그들이 촉발한 휴전선의 긴장」을 개탄하고 「프랑스는 정전협정이 남북한간의 대화와 더불어 한반도평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양측은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알렉산드르 파노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가 남북한간의 무력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력시위는 「더 나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남북한 양측이 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소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외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남북한이 긴장상태의 악화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엇 보다도 평양측이 자제할 것과 새로운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독일=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은 이날 본에서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냉전의 마지막 유물인 이번 사태가 새로운 무력충돌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필리핀=피델 라모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현 상황은 「한국민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포함한 역내 다른 이웃 국가 모두에게 안보 및 정치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투입,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북한측에 촉구했다。

라모스 대통령은 또 필리핀은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평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 특히 북한당국이 현 사태를 전적으로 정전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긴장상태 해소하게 南北대화 재개 마땅

관련국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 소집을

〈워싱턴 모스크바 AFP·연합〉

▽ 동아일보 1996. 4. 10

「韓-美 대응」 타진 속셈

北 「추가도발」 왜 안하나

"정전협정 무효화 성공" 판단한듯
美화답 없을땐 병력재투입 예상
판문점外 다른전선서 허찌를 가능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사흘연속 야간훈련을 했던 북한군이 8일 추가행동을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 군당국은 그배경을 몇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노린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 추가행동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둘째로 한미양국의 반응을 지켜본 뒤 다시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위반행위에 들어간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른 전선으로 도발행위를 옮겨갈 가능성이다.

군당국은 이중 앞의 두가지 해석에 대해 비슷한 비중을 실으면서 마지막 가능성에 대해선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과 판문점에서의 「군사시위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과 이를 위한 북-미장성급회담 실현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한국군이 맡고 있는 휴전선이 아닌 유엔사가 관장하는 판문점지역에 국한했다는 점이 첫번째, 해석을 뒷받침한다.

판문점은 주한미군이 주축인 유엔사가 관장하고 있고 국제시선이 집중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서 군사시위를 벌임으로써 정전협정이 무효화됐음을 기정사실화, 평화협정체결 입장을 강화하고 특히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북-미장성급접촉 필요성을 미국측과 국제사회에 강하게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판문점에서 취했던 군사시위는 고도로 계산된 사전각본에 따른 것이라는게 군당국의 시각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측은 그들이 취한 행동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북한은 미국측이 당초 의도한 것과 달리 별다른 제재에 강하게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화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도관철을 위해 판문점에서의 추가행동에 들어가리라는 것이 두번째 해석이다. 이럴 경우 북한측은 미국과 한국의 반응에 따른 시기조절과 함께 상당히 장기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군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판문점외에 다른 전선에서의 예측불가능한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다. 시선을 판문점에 고정시켜놓고 허를 찌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군의 대응의지가 단호하데다 북한측으로서도 위험부담이 많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앞둔데다 미국과의 미사일협상 유해송화협상 등을 앞두고 명백한 도발행위를 자행, 자신들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국제비난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풀이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측의 정보탐지로도 다른 지역에서의 북한군 움직임에 아직 이상동향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黃有成〉

▽ 경향신문 1996. 4. 10

■ 무장군투입 8일엔 「중단」

北 「무력시위」 전략 바꿨나

연일 판문점에 대규모 중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초강경 행동을 벌여오던 북한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처음으로 감지된 것은 판문점 병력 투입 3일째인 지난 7일 낮 1시 중서부전선에서였다.

당시 비무장지대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인민군 12명중 3명은 완장을 차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4일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파기선언을 하면서 「인원과 차량들의 식별표지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8일이다.

"소기성과 달성…다음단계 준비중" 비관론
"美 눈길끌기 실패·각국 비난에 단념" 낙관론

일요일을 포함해 연3일동안 판문점에 병력을 투입했던 북한이 이날은 별다른 군사적 도발 행위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당초 계획된 진지투입훈련이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첫 이틀동안 약 400m가량의 교통호와 박격포 진지를 구축한 뒤 3일째는 병력을 진지에 투입하는 훈련만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지표시로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제한된 훈련을 실시한 만큼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중단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이 앞으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판문점보다는 비무장지대 다른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외교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국제적 외교압력과 부정적 세계 여론에 밀려 북한이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무력시위를 통해 정전협정이 사문화됐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미국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신들과의 평화협정 교섭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산이었으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자 무력시위를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수물자 공급의 젖줄을 쥐고 있는 러시아가 특사 파견을 추진하는 등 강도높게 정전협정 준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태도변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남한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나 오히려 국민들의 안보의식만 높여줘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여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태도변화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론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북한의 태도가 변화됐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북한 전략에 변화기미가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훈련도중 일시적인 중단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며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북한이 다음 단계의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판문점에 대한 북한의 무장병력 투입이 중단되든 속개되든 상당기간 한반도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李承哲기자>

▽ 세계일보 1996. 4. 10

北, 엉뚱한곳서 局地戰가능성

야음틈타 공동경비구역 진입 我軍납치 할수도
무장軍 해안침투 주요시설 파괴등 테러 우려도

북한군이 지난 5~7일 중무장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연속 투입, 박격포진지및 교통호까지 구축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정전협정 불인정행위를 전지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측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지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정전협정 불인정행위를 장기적으로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4백m가 넘는 길이의 교통호구축은 여러가지 추측을 가능케 한다. 교통호는 스톱상 1~1.2m깊이로 구축하며 소전지와 전지사이를 오가는중 상대방의 직사화기 사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스때로는 소총수들의 저항진지가 되기도 하지만 스상대방 관측을 피해 은밀히 이동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야음을 틈타 중무장한 북한군 대병력이 아군 관측을 피해 은밀히 판문점경내로 진입, 경우에 따라서는 일전을 불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유엔군측 공동경비구역 근무자들 북시에 납치, 이를 볼모로 잡고 北-美장성급회담 등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환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측이 판문점이 아닌 다른 비무장지대(DMZ)에서 국군초소 와여금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육지전을 도발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7일처럼 판문점에서는 「경무」완장을 차지 않은 북한군 무장병력이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면서도 중부전선 국군초소 와에서는 북한군 12명이 「경무」완장을 차고 초소에서 나와 국군쪽을 향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외치는 등 엉뚱한 행동으로 아군을 혼란시키는 것등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무장병력이 해안으로 은밀히 침투, 주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요인납치 등 테러를 자행하는 일이다. 북한이 우리측 4·11총선기와 시기를 맞춰 판문점에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점으로 보아 또다른 측면에서 우리측의 虛(허)를 찌르는 사건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경우 국민들은 이를 선거와 관련된 테러사건이나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로만 판단해 정부를 비난하는 등 민심이 크게 동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李在秀기자〉

향후도발 어떤형태로 할까

▽ 한국일보 1996. 4. 11

安保理、파문조사 태도 오늘 토의

"정전협정 준수" 議長성명 추진

【유엔본부 = 趙在鏞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태를 공식토의한다.

안보리는 이 토의 결과를 토대로 의장성명, 또는 의장의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한 한반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전협정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계속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정전협정 유지를 지지하면서도 이 문제를 안보리가 토의하는 데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장성명 채택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로 회원국들간 의장성명에 대한 문안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언론발표문 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朴銖吉 駐유엔대사는 이와관련, 『안보리 결의의 최종 형식은 당일의 토의내용과 각국의 관심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중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1996. 4. 11

"南侵땐 초토화 北도 알고있다" 美전문가

【워싱턴 = 레이건】 북한이 비합리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만약 남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 고립된 북한이 (한미의 반격으로)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로이터통신과 접촉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10일 만약 북한이 기계화부대를 남한에 침투시키면 남한측은 수만명의 희생자를 낳고 수도 서울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겠지만 결국 美軍과 韓國軍이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1996. 4. 10

"한반도전쟁 시간문제 전투훈련 적극참가를"

北 金光鎭차수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金光鎭차수는 9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하고 전주민은 동원태세를 견지하고 전투훈련에 적극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金光鎭은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金正日의 국방위원장 추대 3주 중앙보고대회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실전을 작정했다는 것은 명백해졌다』면서 『미제와 남조선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침범한다면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쓸어내겠다』고 말했다.

金光鎭은 이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정치사상적 준비와 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도 전투훈련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韓玟洙〉

▽ 경향신문 1996. 4. 11

北에 심리적 압박효과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 전망

도발행위 적극대처 의지

中 유보입장 불구 "정전협정 준수" 재천명

북한의 「난폭한 행동」이 국제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안보리는 9일 한반도 문제를 비공개회의의 의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전협정 의무불이행을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안보리에서의 이 사태에 대한 논의는 탈냉전후 국제평화와 질서유지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가 한반도의 긴장사태에 적극 개입해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안보리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외교적 측면에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줄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가 「결의문」 채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장성명」이나 의장의 「언론발표문」 채택을 통해 한반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가 이같은 결집된 의사 표명을 통해 ▲안보리 상임및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을 접촉한 朴銖吉유엔대사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안정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수일간 모든 안보리 상임및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한국의 입장을 의석상에서의 발언을 통해 『안보리가 이번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반드시 사태 호전에 기여할 것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않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할 기본적으로 다른 이사국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휴전협정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안보리에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미묘한 입장이 앞으로 안보리의 한반도사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여실히 표현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유엔 관측통들은 중국이 결국 『북한을 크게 비난하지는 않으면서도 관계당사국들이 휴전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의장성명 채택에 기권할 것으로 보고 있다.

朴대사는 만약 중국이 끝까지 의장성명 채택을 반대하더라도 의장이 언론발표문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관측통들은 이번 결과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결의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본부=姜琪錫특파원】

▽ 경향신문 1996. 4. 11

안보리 어떤조치 취할수있나

결의 대상국에 물리적 강제도 가능

의장성명 결집된 의사표명…구속력 없어

언론발표문 토의과정 공개…가장 약한조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다 모여 의제를 논의하기 전에 사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다.

곧바로 공개회의에서 사태를 논의할 경우 각국의 경직된 입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최근 각종 국제문제 논의에 자주 이용되는 회의의 한 형태이다.

한국정부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위법행위를 비난하는 의장 성명이나 의장의 언론발표문이 나오도록 추진중이다.

안보리는 회의결과를 결의나 의장성명 등의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한다. 이중 결의가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가질 수있는 의견집결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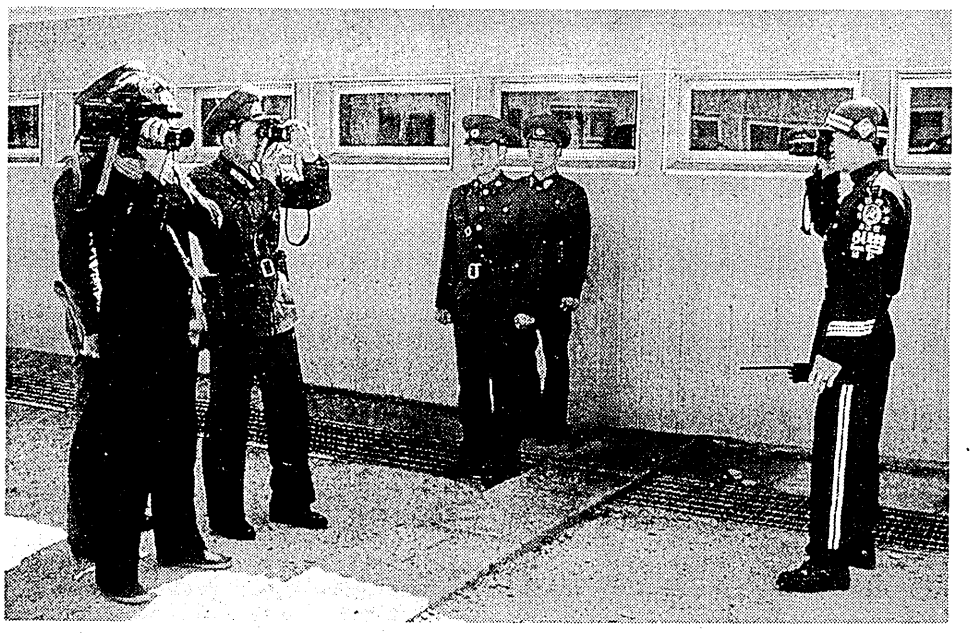
안보리 결의는 특정 국가에 대해 특정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강제력을 동원하겠다고 할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는 결의다.

결의안는 달리 의장성명은 일단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있는 구속력을 결여하고 있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집된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대상국에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보다는 좀더 낮은 차원의 의사표현인 의장의 언론발표문은 토의과정에서 나타난 이사국들의 입장을 모은 것으로 각국의 입장이 설명된다는 점에서 대상국에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 〈薛原泰기자〉

▽ 한국일보 1996. 4. 11

국제사회 공동대응 유도 "수확"



◇10일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실 옆에서 우리측 경비병과 북한측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감시하며 사진을 찍고있다. 북측 요원들은 이날도 경무완장을 차지 않았다.

한국관련 安保理 논의

북한의 정전체제 도발사태가 유엔안보리에서 논의 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93년 북한핵사태 이후 3년여만에 또다시 유엔차원의 논의에 부쳐지게 됐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안보 및 중요사태가 안보리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경우는 모두 5건이다.

6·25 전쟁 발발 당일인 50년6월25일 북한의 남침에 대해 안보리가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결의 82호를 채택한 것이 우리나라문제의 안보리논의 시발이다.

6·25서 93년 北核까지 광복이후에 모두 5건

이어 안보리는 3차례에 걸쳐 한국지원결의 등을 채택했으나 그해 7월부터는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 한국사태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과 관련한 논의가 유엔에서 계속돼왔고 안보리는 91년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을 결정했다.

80년대 들어서는 대한항공 007기 격추사건과 대한항공여객기 폭파사건이 안보리에서 각각 논의됐다.

가장 최근의 안보리논의는 93년 북한핵 문제에 관한 것이다. 안보리는 93년 안보리의장 성명 및 안보리결의, 94년 안보리의장 성명등을 통해 북한측의 NPT잔류 및 IAEA핵사찰 등을 촉구했다. 【張寅鐵기자】

〈한국관련 安保理 일지〉

- ▲50·6·25 북한남침 관련 안보리결의 82호 채택
- ▲50·6·29 유엔군활동관련 안보리결의 83호 채택
- ▲50·7·7 유엔군 조직 등 관련 안보리결의 84호 채택
- ▲83·9·2 대한항공 007기 격추 관련 안보리 긴급소집.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안보리결의 채택 실패
- ▲88·2·10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관련 일본과 함께 안보리 긴급소집. 안보리결의 없이 대북 규탄촉구
- ▲91·7·8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신청서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 ▲93·4·8 북한 NPT 잔류 권고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지지 의장성명 채택
- ▲93·5·11 북한 NPT 잔류 권고 관련 안보리결의 825호 채택 이후 94년까지 4차례 관련 안보리의장성명 채택

DMZ 긴장波高

「정전협정위반」 安保理상정

토의일정 확정 방향도 잡힌셈

결의안채택엔 中國태도가 최대 관건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 될 가능성

북한의 정전협정위반사태가 결국 유엔의 공식 무대에 오르게 됐다. 안보리가 11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위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관심과 우려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통일된 견해를 최대한 도출, 논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적으로 강안, 직권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북한 정전협정위반사태의 토의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에 대한 대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때문에 11일 회의는 북한의 위법행위로 인한 한반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정전협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입장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를 다룰 11일의 안보리회의는 비공식회의이다. 비공식회의의 안건은 의장이 안보리 회원국들의 견해를 전반 상정, 직권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북한 정전협정위반사태의 토의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에 대한 대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때문에 11일 회의는 북한의 위법행위로 인한 한반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정전협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입장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이같은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약해 공식화할 것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측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회의의 결론을 의장성명, 내지 의장의 언론발표문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안보리의 공식적인 의사표현방식은 결의안, 의장성명, 의장의 언론발표문등 세가지이다. 이중 결의안은 투표를 거친다는 점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방식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전제되지 않는한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측을 가장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측은 8일 朴銖吉대사 국대표를 상대로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北京(베이징)에서 중국정부를 향한 직접 절충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처럼 유동적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의장성명채택도 어렵게 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장성명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의장의 언론발표문 발표를 배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경우 의장의 언론발표내용은 의장의 「신의 판단」에 맡겨지며 의장은 회의석상의 각국입장을 그대로 전하게 된다.

우리측이 회의당일의 안건명칭을 별도로 정할 것인지 「기타안건」으로 두루뭉수리하게 올릴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유엔본부=趙在鏞특파원】

▽ 조선일보 1996. 4. 11

北의 초강경수 軍部 주도한듯

과도체제 입김강화…식량구걸에 잇단 반발

"유화적으론 얻는것 없다" 강경으로 선회

최근 10여일동안 이어진 북한의 긴장고조 조치들에서 군부가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는게 아닌가 여겨진다. 對美평화협정을 요구하면서도 주무부서인 외교부 차원의 성명이나 기자회견도 없다. 또 긴장조성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면서도 대남전쟁주인 핵문제는 전혀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군부가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음은 특히 김정일 후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94년 12월23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기념보고회에서 당시 총참모장인 崔光은 이례적으로 경제부분도 언급, 앞으로 경제과업 완수를 강조했다. 94년말 격주로 미군 헬기 조종사 송환도 군부의 양보로 지연됐으며 얼마전 의교대변인은 식량지원과 관련해 군부가 반발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연말사소개 김정일의 주변에 당 정관 玄哲海 조직 부국장, 박재 부국장, 金英春 장, 金英春 총참모장, 李 부장, 金光鎭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金明國 작전국장, 원동희 보위국장 등 측근 초강경수를 두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제기된다. 〈金仁杭기자〉

▽ 조선일보 1996. 4. 11

韓美, 전투력 과시키로

"도발 단호응징" 재확인

孔외무-李국방-레이니大使-럭사령관 회동

韓美 양국은 최근 북한의 잇단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와 관련, 향후 북한측이 한단계 높게 무력도발해 올 경우 韓美 연합방위차원에서 즉각적이고도 단호히 응징키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오판 방지와 도발 억제를 위해 확고한 韓美 연합전투력을 과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10일 오전 한덕동 외무장관공관에서 孔鍾明외무, 李燮鎬국방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駐韓美대사, 게리 럭 駐韓美軍사령관등이 참석한 4者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북한측의 도발이 계산된 행동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 도발적 상황에 대해서는 연합방위능력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응징키로 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말했다.

양국은 북한측의 더이상의 무력적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韓美 연합방위능력이 다져져있다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주기로 했다며 추후 적절한 방법이 양국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정전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사태에 따른 공동대처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달말 열리는 미북미사일회담 개최문제와 관련, "(이번 사태에도 불구)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 추진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이는 "이 미사일 회담은 군비 통제 차원에서 미국측 요구에 의해 열리는 것으로 북한도 미북관계 진전을 열두에 두고 이 회담에 끌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具聖宰기자〉

▽ 경향신문 1996. 4. 11

北, 對南정보수집 강화

정전협정 위반도 늘어

북한군은 비무장지대내 정전협정 의무규정 파기선언 이후 서부전선 지역에서 우리측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내 정전협정 위반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육군은 이날 李燮鎬국방장관의 1사단순시 보고에서 『사단 맞은편 북한병사들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내 의무규정 파기선언 이후부터 관측등 안군복에 대한 정보감시활동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는고 밝혔다.

육군은 이어 비무장지대내 완장 미착용등 북한측의 전협정 위반사례도 4월들어 1일부터 9일까지 모두 3백10건으로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李장관은 이에대해 『북측은 우리측을 자극해 위험한 사태를 일으키려고 유도하고 있다면서 『절대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말고 교전규칙을 지키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李仲根기자〉

▽ 동아일보 1996. 4. 11

군입대 탄원대회 확산

北 「전쟁결의」 잇답아

【서울發】 북한은 각계각층 주민들을 내세워 이들의 「전쟁결의」 발언을 방송을 통해 반복 보도하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청년학생들의 잇단 「군입대 탄원대회」를 연일 소개한 데 이어 10일에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전쟁결의」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중앙방송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잇단 발언을 소개했는데 이들은 방송에서 『만약 적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한 치의 땅이라도 건드린다면 삔을 총대로 바꾸어 매일 산악같이 떨쳐나 침략자들을 단매에 쳐부술 것』이라는 등의 선동적이고 호전적인 용어를 구사했다.

▽ 동아일보 1996. 4. 11

러 「한반도 국제회의」 제의

외무차관 訪北 停戰협정유지 거듭강조

【모스크바聯】 북한의 판문점내 정전협정 위반사태와 관련, 10일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데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도착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정전협정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파노프 차관은 이날 이타르타스통신 평양특파원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반도 문제에 관해 관련국간 「한반도 국제회의」 소집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측의 시각과 제안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평양에 왔다』고 밝혔다.

한편 비탈리 이그나텐코 러시아부총리(이타르타스통신사장 겸임)를 단장으로 한 러시아 고위무역대표단도 제1차 러북한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도착 직후 이그나텐코 부총리는 『이번 방문은 북한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 1996. 4. 11

北, 대남위협 강화 움직임

軍입대 탄원대회 北전역 확산

"전쟁위험 눈앞에 닥쳤다"강조

[서울=내외] 북한은 각종 행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대남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추대 3주년(9일)을 계기로 이완되는 사회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와 대외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인민무력부 군인들의 경축야회를 갖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북한은 또 지난 7일 평양에서 시작된 「군입대 탄원대회」를 전국 각지 대학·고등중학교에서 잇따라 개최, 김정일을 옹위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중앙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9일 시사논평에서 『전쟁위험은 현실적인 것으로 눈앞에 박두했다』면서 「남측이 북을 건드린다면 짓뭉개 버릴 것」이라는 말은 결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자에서 김정일의 「군사적 영도」를 선전하는 가운데 『우리 혁명무력은 당과 수령을 위해 한목숨 바쳐 싸우는 충성의 전투대오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무력으로 자라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광진(金光鎭)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은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주년 중앙보고대회 연설에서 『우리의 혁명무력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어도 일격에 소멸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장성 강화됐다』고 호언했다.

▽ 동아일보 1996. 4. 11

"韓-美공조 군건" 對北 과시

외교-국방 4者회담 의미

10일 오전의 韓美외교국방 4자회담은 그동안 한두달에 한번꼴로 계속돼온 얘기는 하지만 북한의 판문점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긴급히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한국의 외무 국방장관과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 4인은 각자의 공식을 돌아가며 회동해왔다. 그러나 회담개최 일시나 장소는 물론 회담 개최여부조차도 비밀에 부쳐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양측은 회담개최사실 및 일

추가도발 즉각 응징태세 재확인

우발충돌-군사오판 사전에 차단

시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었던 정전협정과기 책동 고 10일 언론의 카메라앞에 섰다. 양측의 이같은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대(對) 언론 공개는 물론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을 의식한 조치다. 한 과거의 군사정전위회의 미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 거부나 군정위대표단철수, 으로 철저한 공조체제를 중립국감독위 대표단축출 등은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정전협정 파기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고도의 군사적 계산에 따른 군사작전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그 위협도가 높다고 본 것이다.

양측은 특히 북한의 이 발사고만으로도 국지적인 군사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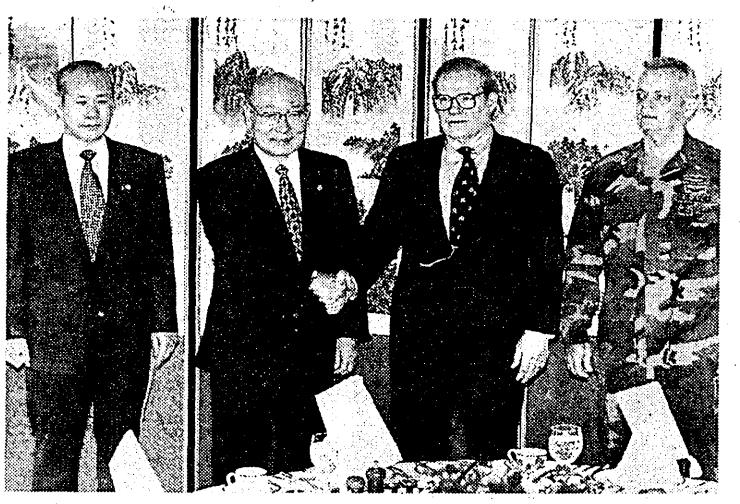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측도 우발적 충돌을 원치 않을 것으로 같은 군사행동이 자칫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군이 중무장한 상태에서 판문점남입 및 진지구축작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오 관측했다.

그러나 만의하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날 경우 한미와 북한 어느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이날 양측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미의 막강한 연합방위력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오판에 대한 철저한 응징태세 과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한미의 연합방위태세 강조는 오는 15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의 한국방문과 16일 클린턴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朴濟均〉



북한의 판문점도발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한미 외교국방 4자회담에 참석한 李養鎬국방장관, 孔魯明외무장관, 제임스 레이니주한미국대사, 게리 럭주한미군사령관(왼쪽부터)。〈金徹翰〉

▽ 중앙일보 1996. 4. 11

安保理 '北 停戰위반' 논의 의미

유엔 北韓사태 실질적 개입

뉴욕=이장규 특파원

11일 유엔 안보리 비공식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문제를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일단 유엔의 실질적인 개입이 시작된 셈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은 안보리 「의장성명」채택을 목표로 하는 한국 유엔대표부는 그것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언론 발표」정도는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결

中 어정쩡… 거부권 위험부담

최소한 '언론발표' 끌어낼듯

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은 거부권 행사에 부닥칠 위험부담 때문에 애당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장성명 채택 여부도 비록 비공식회의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전원 합의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고집한다면 곤란하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토의내용이 요약된 언론발표문 채택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마침 비상임이사국인 덕분에 이 문제를 안보리에 끌고 들어가는 준비작업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틀동안 이사국들과의 개별접촉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한국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심지어 비동맹국가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대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이 걸림돌이다.

결국 안보리에서의 중국의 입장은 어정쩡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보리 비공식회의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기까지에도 미국측과의 조율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문제를 다룰 때도 한·미간 상당한 간극이 있었던 것처럼 정전협정 위반문제를 안보리에 끌고 들어가는 것 역시 미국이 훨씬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비록 2년동안의 한시적 비상임 이사국이긴 해도 한국이 안보리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엔 외교에 상당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중앙일보 1996. 4. 11

南 한반도긴장 유도땐 강력한 자위조치 대응

노동신문 논평

북한은 11일 최근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남한측에 돌리면서『남한 당국이 계속 사태를 위험한 국면으로 끌고 간다면 천백배의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등 대남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조선반도에서 조성된 예측할 수 없는 긴장 사태 발단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있다』고 비난했다.

▽ 국민일보 1996. 4. 11

美 停戰협정이행 촉구

"北무장군 투입 감지안돼"

美국무부 對北식량 추가원조 계획없다"

【워싱턴=AFP연합】美국무부는 10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새로 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측에 대해 정전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이후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장병력 투입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과 이에 따른 의무와 요건을 준수하도록 북한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美관리들이 북한의 기아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북한측에 추가원조를 제공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4. 11

美軍 분쟁지역 신속投入 美국방부 新전략案 준비

現규정보다 기간 대폭 단축 韓半島유사시 조기대응 가능

워싱턴=김용일 특파원·김민석 기자

미 국방부는 주요 분쟁 지역에 미군을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는 신전략안을 준비 중이라고 8일 의회에 보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하원 국가안보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육·해·공군의 경우 현재 규정된 병력 신속 투입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 국제군사력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신전략안이 확정되면 미군의 작전 상한기간 역시 재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운영해온 작전 상한기간은 ▶육군 1백79일 ▶해군 1백80일 ▶공군 1백20일 ▲해병 1백80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구상 중인 「국제군사력정책」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투입시간이 단축된다면 우리 안보는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5~7일만에 한반도를 석권하는 전쟁개념을 가지고 있어 개전초기에 화학무기와 전차 등 대규모 기동부대로 우리 전방을 유린할 수 있다』며 『미 증원 전력 도착시간이 단축되면 전쟁초기에 북측의 기습으로 불리한 전세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계획인 「시차별 전개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간대별로 미군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투입된다.

▽ 한국일보 1996. 4. 12

英、北협정준수 촉구

【런던AFP=연합】영국정부는 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북한군이 침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에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협정협상이 열릴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신문 1996. 4. 12

미, 북에 정전협정위반 중단 촉구

타노프 미 국무차관

【워싱턴=정연주 특파원】미국 국무부의 피터 타노프 차관은 9일 저녁 미국 공영방송인 〈PBS 텔레비전〉 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접협정 위반이 매우 심각한 사태임을 경고하고,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이러한 의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달됐다"고 말했다.

타노프 차관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공동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미 기본합의 뿐만 아니라 국제협정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북한이 국제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모든 관계는 위험스럽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자신이 한반도 사태의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북한 김정일 비서와 김영남 외교부장에게 보냈다고 유엔 대변인이 9일 밝혔다.

▽ 중앙일보 1996. 4. 11

北, D데이 4일로 잡은 미스터리

최원기 기자

"클린턴 訪日겨냥… 總選묵과" 통일원

최근 판문점 사태의 미스터리중 하나는 「평양이 왜 4월 4일을 D데이로 택했을까」하는 것이다. 시점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의 총선 때문이다. 한마디로 4·11 총선 스케줄과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잘 알만한 평양이 왜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일을 벌였는가 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파악하듯 이번 도발이 우연한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적 책동이라는 데서도 그들의 시기선택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투표함을 열어봐야겠지만 북한이 4일 정전협정 파기선언을 하고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연 사흘동안 무력시위를 벌인 결과 여당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여당을 돕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아니면 여당이 대북 쌀지원으로 곤욕을 치른 지난해 6·27 지방선거때처럼 골탕을 먹이기 위해 도발을 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것인가.』 유치한 듯하면서도 의미있는 이런 의문은 비단 정치권 뿐 아니라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북 전담부서인 통일원은 이번 사태가 평양의 경직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롯됐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사태는 인민무력부 작품』이라고 단언한다. 남한 사정을 손금보듯 들여다 보는 대남사업 부서인 노동당 3호청사가 처음부터 일을 꾸몄으면 결코 4일을 D데이로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통일원 관계자들은 김일성(金日成)사망 후 급격히 위상이 강화된 인민무력부가 3월말께 김정일(金正日)에게 북한내부의 어려움도 호도할 수 있는 「정전협정 파기계획」을 올렸으며, 클린턴 방일(16일)과 북·미 미사일협상(19일)을 염두에 둬 D데이를 4일로 잡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남부서인 3호청사가 개입할 틈이 없었다는 것인데 김정일이 인민무력부가 올린 계획을 수표(재가)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3호청사는 재고를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처럼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무오류성(無誤謬性)을 강조하는 체제에서 「지도자 동지」가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하급기관이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원은 북한이 판문점 무력시위를 중단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추론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이 조성한 비무장지대(DMZ)긴장상태가 결과적으로 남한 집권여당을 돕는 「이적(利敵)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그것도 자체 분석이 아니라 한국언론을 통해서)병력 투입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통일원의 이같은 추론은 북한의 도발이 내부문제 해결과 대미(對美)관계등을 의식한, 한국총선과는 관계없는 순전히 「비정치적」인 행동으로 파악하는 것이지만 한국유권자 표의 향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총선변수가 됐기 때문에 남북문제가 아닌 국내 정치문제로서도 한동안 입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對南전담 '3호청사' 빠져
'利敵' 알고 무장시위 중단

▽ 한국일보 1996. 4. 11

"클린턴 訪韓前 추가도발할듯"

판문점南쪽지역 침범 우려… 대비 만전

국방부 사태전망·대응방향

북한은 사흘 연속으로 중무장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해 무력시위를 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 도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행위가 총선투표일인 11일까지는 더이상 없다 하더라도 15일부터 예정된 RSOI(美지원군 수용·순환 협상)를 앞두고 1~2차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국대통령 선거가 있는 오는 11월까지 비슷한 무력시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위반이나 추가도발을 해올 경우 그 위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판문점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3차례의 진지투입훈련과 박격포 진지를 잇는 교통호의 송환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배제한 北·美간 군사접촉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북한이 기습적으로 판문점 남측지역의 유엔군을 납치, 북측으로 협상는을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4년12월 주한미군헬기 조종사 보비 홀 준위의 송환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배제한 北·美간 군사접촉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기 위해서이다.

판문점 이외의 비무장지대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나타내는 나무팻말을 제거하거나 ▲나무나 잡초를 제거한다면서 남측으로 월경하거나 ▲우리군의 정상적인 비무장지대내 수색정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사해 5도 지역에 대한 국지도발이나 우리나라 후방지역 침투 또는 對人, 對시설 테러행위등의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韓美양국은 이날 상오 「4者회담을 갖고 韓美공조와 방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워치콘」(대북정보감시태세)이나 「데프콘」(대북방어태세)등의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연합훈련과 무기체계의 감도를 높여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洪潤五기자】

"美和答없을때 무력시위반복"

속도·수위 완급 조절… 지속적 긴장 유도

北韓 다음행보 어떻게될까

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노린 시위에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것 같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연사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병력을 투입한 뒤 이틀간 시위에서 속도를 조절해가며 협상을 이끌어나갔다. 이 경우 16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 때 북미 잠정협정체결 등 앞으로 북미관계의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이번 판문점 사태를 내부 결속용으로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강경일변도 일장은 위협부담도 크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북미 핵협상 당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 의 다음 행보를 놓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도발 속도에 완급을 가함으로써 긴장 효과를 제고하려 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자는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을 노리거나 미국의 和答이 없을 경우에는 북미대화·북미관계 개선을 노리는 자신들의 입장을 또다시 과시하려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김으로써 9일 金正日의 국방위원장 추대3주년 기념보고회를 효과적으로 치렀다』며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 역시 분위기 조성이 우리보다는 미국을 겨냥 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자는 『북한은 어차피 북한의 움직임은

▽ 세계일보 1996. 4. 12

安保理、北DMZ도발우려

의장언론발표 채택 中반대로 「의장성명」무산

【유엔본부=연합】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오전(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위협과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시위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일방 파기선언 등 판문점사태를 심도깊게 논의한 후 이같은 내용의 안보리의장 對언론발표를 채택했다.

후안 소마비아 안보리의장(유엔주재 칠레대사)은 언론발표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의무 포기선언과 중무장병력의 판문점 투입사건이 정전체제에 의해 지난 43년동안 유지돼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다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보리의장의 이날 언론발표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 북한당국에 정전협정의 의무 준수등을 강력히촉구한것으로보여진다.

한국은 이날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가능한 한 엄중한 對北 경고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이 채택되기를 기대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에 부닥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朴銖吉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이와 관련, 『안보리가 한반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정전협정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최근 북한의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4. 11

美"對北 새조약 협상 않을것"

美국무차관 "南北당사자 원칙 준수" 강조

【워싱턴AP연합】최근의 북한군 동향은 한반도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에 관해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터 타노프 미국무차관이 9일 말했다.

타노프 차관은 이날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기존 정전협정을 위반, 중무장병력을 판문점 비무장지대에 투입한 행동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새로운 조약에 관해 협상하자는 신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새 조약에 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은 어떠한 것이든 남북한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남북한간의 비무장지대에 병력 파견을 중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직접적 응답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4. 12

美、北에 정전협정 이행 촉구

국무부 "식량 추가원조 계획 없다"

【워싱턴AP연합】미국무부는 10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새로 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측에 대해 정전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이후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장병력 투입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과 이에 따른 의무와 요건을 준수하도록 북한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관리들이 북한의 기아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북한측에 추가원조를 제공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12

한·미 군사력 북 압도

주한미군 탱크·헬기 등 최신형으로 교체

북 장비낙후·연료 부품 부족…열세 확연

'워싱턴 포스트' 보도

【워싱턴=정연주 특파원】〈워싱턴 포스트〉는 10일 한국군의 현대화와 특히 90년 이후 집중돼온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자세히 다루면서 한·미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짐 콜츠 주한미군 대변인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5년 전 주한미군의 장비와 지금의 장비를 "75년형 쉐비 자동차와 95년형 최신식 스포츠카 페라리"에 비교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최신식 페라리' 격인 주한미군의 장비 현대화 내용은 탱크, 헬리콥터, 장갑차, 그리고 북한을 압도하는 최신 기술 등이다. 먼저 탱크의 경우 주한미군의 1백40대 탱크가 모두 걸프 전쟁에서 사용된 최신형 에이브러햄스 M1A1로 대체되었다.

주한미군의 헬리콥터와 장갑차도 91년 이후 모두 최신형으로 완전 대체됐다.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된 휴이 다목적용 헬리콥터는 대당 8백만~1천2백만달러의 UH-60 1백60대로 바뀌었으며, AH-1 코브라 헬기는 대당 1천4백만달러짜리 아파치 헬기 1백20대로 완전 교체됐다. 그리고 30~40대의 아파치 헬기가 올해 안에 더 배치될 예정이다. 장갑차도 60년대형인 M-113에서 최신 브래들리 장갑차 1백80대로 바뀌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장비 현대화에 더해 미군이 개발한 최신 위성기술도 갖추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장비 현대화에 못지 않게 한국군도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국방비의 3분의 1을 투입하면서 현대화 작업을 해왔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그 결과 신형 탱크가 1~2년 안에 실용단계에 들어서고, 현재 생산단계에 있는 1백27대의 F16 전투기 가운데 일부가 올해 안으로 실용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장비 현대화를 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의 노력과는 달리 북한은 70년대 기술이 주종을 이루는 낡은 장비에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료와 외화 부족으로 군사훈련은 사실상 중단상태이고, 부품 공급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우열이 분명하게 갈라진 남북의 군사력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군사적 패배는 자명하다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 동아일보 1996. 4. 12

유엔총장 北에 "긴장우려" 서한

갈리 金正日에 한반도문제 중재용의 전달

【유엔본부=AP聯】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한반도 긴장고조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유엔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실바나 포아 유엔 대변인은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金正日과 金永南 외교부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포아 대변인은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사태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1996. 4. 13

北 도발때 安保理개입 명분마련

의장 구두발표문 채택 의미

이사국 한반도상황 공감대 확인

美北대화 한국배제 의도에 제동

외교력 미숙… 실무처리 손발안맞아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의장의 구두발표문을 채택한 것은 일단 15개 이사국이 한반도 상황에 공감대를 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만장일치가 필요한 의장성명이나 발표의 문건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 진출후 그 지위를 활용해 한반도 안보리를 어떤 식으로든 유엔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짚어보아야 할 외교적 변수와 사후문제가 많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앞에 놓고 방치할 정까지 며칠이 걸린 것이다.

또 朴銖吉대사는 지난 9일 오전8시 관저에서 현재 안보리 공식제기 계획을 밝혔는데, 같은 시각 외무부에선 논의중일 뿐이라고 해명한 부분도 개운치 못하다. 또 안보리 실무담당 직원과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결국 북한문제 안보리 제기는 이루어졌으나, 기자회견장에서 대사와 대표부직원들간에 『안보리 상정』, 『안보리 논의요청 제기』 등 용어조차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장성명 채택은 물론, 안보리 논의조차 유보하자는 중국을 다루는 「테크닉」에서도 서툰 면을 보였다. 한국이 논의요청을 제기한 9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장에는 秦華孫대사 대신 참사관이 참석,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에는 동조하지만 안보리 논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사 대신 참사관을 통해 남북한을 한마디씩 거들어주면서 양쪽에 생색을 낸 인상이 짙었다. 그리고 끝내는 의장성명 채택을 원하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국은 94년 對북핵 결의안 채택시에도 유보 태도를 보여 한국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유엔본부=尹熙榮기자】

▽ 중앙일보 1996. 4. 13

中 반대로 議長성명 채택 不發

北 停戰협정위반 다룬 安保理 비공식회의

북한 정전협정 위반 사태를 다룬 11일의 안보리 비공식회의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처음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우리가 원했던 의장성명 채택은 이사국 전원 합의로만 가능한 것이므로 중국의 반대에 걸려 이루지 못했다. 의견이 절충되기까지의 다음과 같은 각국 대표 발언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각국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뉴욕=이장규 특파원

▶한국=북한은 정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의장성명을 채택,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제의한다.

▶폴란드=95년 폴란드도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쫓겨났었다. 비무장지대문제는 심각하다. 한국 제안을 지지한다.

▶중국=휴전협정은 준수돼야 하고 한국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의장성명 채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들이 자제하고 냉각기를 가지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참사관만 남고 중국 대사는

▶독일=한국 주장대로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이집트=한반도 정세가 매우 우려된다. 한국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인도네시아=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크게 걱정한다.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미국=안보문제로 미국이 북한과 쌍무협상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대사는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상응하는 조치」라는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본국 정부가 이미 우려성명을 냈다.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러시아=의장성명이든 대언론 발표든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안보리 의장=각국의 시각은 모두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확인, 북한의 위반행위 중지 촉구, 남북한 직접대화 필요성 강조등 네가지로 요약된다. 절차에 관한 토의로 넘어가자.

▶독일=반대가 없는 것같으니 한국 제안대로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영국·프랑스=만장일치가 아닌가.

▶한국=모두 지지하니 빨리 매듭짓자.(이때 중국대사가 다시 입장)

▶중국=아침에 한국 대사와 개별회담을 갖고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의장성명 채택은 반대한다.

▶의장=한국은 중국과 아침에 무슨 합의를 보았나.

▶한국=구체적 합의를 본 것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보 후퇴할 용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그러면 의장성명 대신 대언론 발표로 합의하자.

▶의장=반대가 없으니 침묵을 찬성으로 간주, 그렇게 결정하자.

폴란드·獨·佛·英·伊·印尼등 거의 聲明 지지

美만 '상응하는 조치' 표현… 어물쩍 넘어가

이렇게 해서 3시간가량의 회의는 끝나고 의장이 대언론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 회의 직전, 중국대사와 만난 박수길(朴銖吉)주유엔대사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한발짝 물러설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중국대사는 확답을 피한 채 미소로만 응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회의 막판에서야 한국측과의 「사전합의」카드를 들고나오는 방법을 썼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태도다. 모든 나라가 구체적 의사표명을 했으나 미국만이 「상응하는 조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1996. 4. 13

北、美와 「평화협정」 고수

北·러 정무협상 DMZ 긴장완화 이견 못좁혀

訪北 파노프, 옐친 구두메시지 전달

【모스크바=金鐵雄특파원】러시아와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러·북한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와 병행해 열린 양국간 정무협상에서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12일 평양發로 보도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과 이인규 북한 외교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국간 정무협상에서 북한측은 『제3자나 중재자는 필요없으며 단지 미국과 직접 대화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북한측은 또 유엔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유엔사무총장의 대리인도 북한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노프 차관은 『의견접근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한반도에서 심각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통신은 평양을 방문한 비탈리 이그나텐코 러시아부총리가 이날 金正日에게 보내는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李鍾玉 부주석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옐친대통령은 이 구두메시지에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과 상호 호혜에 입각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4. 13

北 "美國과만 대화"

【모스크바=연합】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 미국과 직접 대화해야 하며 유엔사무총장 등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타르 타스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평양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과 李仁奎북한외교부부부장간의 정무회담에서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파노프차관은 『양국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반도에서 심각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판문점사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北、「停戰」무력화 재확인

외교부 대변인 담화

【도쿄=연합=특약】북한은 12일 유엔안보리가 의장의 「언론발표문」을 채택한 것을 비난하면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교부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한반도의 현재상황은 전쟁전야와 비슷한 위험선에 다가가고 있다』며 『남조선이 비무장지대를 공격준비를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남조선과 미군』이라며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미국은 현시점에서 문제를 바로보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4. 13

새 韓美안보체제 협의 뜻비춰

클린턴 訪韓앞둔 백악관 브리핑 내용

워싱턴=길정우 특파원

오는 일요일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일본·러시아 방문길에 오르기 앞서 요즘 워싱턴에선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일제히 나서서 정례 브리핑등을 통해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열심이다.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클린턴의 외유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실히 해두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클린턴이 3국과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최근 비무장지대 사태와 관련, 「새로운 한·미간 안보체제」에 관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크리스토퍼 장관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한반도 불안정과 핵물질 유출등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도전들은 미국이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판문점사태 등이 한반도 안정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공약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고 언급했다.

◇일본 관련=크리스토퍼 장관과 로드 차관보 모두 오키나와 사태로 촉발된 일본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전진 배치와 현 수준의 미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일 정상간 체결될 「신안보선언」이 미결(未決)상태의 경제문제와 함께 방일(訪日)의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미·일 안보동맹이 양국 관계뿐 아니라 역내 안정과 평화의 중추임을 새삼 강조했다.

비무장지대 사태관련 北 정전협정 준수 촉구

세계적 지도자 구실할때 韓半島 불안정 해결

정상회담을 갖고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중국의 첸치천(錢其琛)외무장관과 헤이그에서 별도 회동하는 다음주는 미국 외교의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안보, 주일(駐日) 미군의 역할 변화등과 관련, 우리의 관심을 끄는 브리핑 대목을 발췌한다.

◇한국 관련=윈스턴 로드 국무부 차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면담때 역내(域內) 모르나 미국은 평양측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11일 재확인 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날 14일 출국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및 러시아 순방을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도발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그들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북한간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윈스턴 로드 미국 무부 동아태차관보도 클린턴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과 관련, 별도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서울신문 1996. 4. 13

"北·美평화협정 不可

「南北대화 우선」 입장 不變"

美국무, 클린턴訪韓 앞두고 회견

【워싱턴=羅潤道특파원】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판문점에 군사력 도발을 시도했던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것이었을지

▽ 동아일보 1996. 4. 14

北 안보리성명 비난

북한은 13일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유엔이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준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고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 입장을 절대로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과 미국의 호전적 우익보수계층 등 불순세력들이 외교적 압력전술 등 사태수습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황당한 여론을 돌리고 있다』며 『정전협정을 파괴시킨 책임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北、평화협정 고수"

中신화통신

【北京=聯】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는 무장한 북한군병력이 수일전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 진입한 후 한국과 미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중아일보 1996. 4. 14

EU, 北에 정전협정 준수 촉구

의장국 伊 성명발표

[로마 외신=연합]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이탈리아는 12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세계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전협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EU는 북한 당국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EU는 정전협정이 평화와 안보 유지에 유효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1996. 4. 14

옐친, 金正日에 서한

南北대화촉구…긴장완화 중재표명

【도쿄=田賢一특파원】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12일 북한 金正日비서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한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중개역할에 의욕을 표시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평양발 이타르타스통신을 인용, 13일 보도했다.

옐친대통령의 서한은 북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참석차 북한을 방문중인 이그나텐코 러시아부총리를 통해 李鐘玉부주석에게 전달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 경향신문 1996. 4. 14

北 "정전협정 유효"

북한은 1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의장 발표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미국은 사태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를 바로 보고 신중하게 처신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담화는 이어 『유엔이 뒤늦게나마 [redacted]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무력화시킨데 대해 문제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파괴된 정전상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안이 실현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할 용의를 공식 표명했다』면서 『이는 현 정전협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해 정전협정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

▽ 조선일보 1996. 4. 14

아시아 긴급사태 경우 美軍에 민간시설 제공

이케다外務

【東京=聯合】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日외상은 14일 美-日 양국 안보관계 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美軍에 민간시설 이용 등의 편의제공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1996. 4. 14

한반도 새 평화체제 中서 참가 표명

남북한·美 3자회담 촉구

【東京=姜成輔특파원】중국 외교부 寧賦魁(영부괴) 아시아국 부국장은 북한이 휴전협정 대신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한, 미국의 3자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新평화체제에 중국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寧부국장은 12일 北京에서 요미우리 취재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휴전협정에 대신해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북한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이 조기에 북한과의 협상에 응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국이 참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남북한, 미국 어느쪽으로부터도 정식 제의를 받지 않았으나 제의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新평화체제에 중국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2+2」및 「2+4」체제 등이 거론돼 왔으나 중국이 이 새체제에 대한 참가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中입장 확인중"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3일 중국의 평화체제논의 참여 시사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중』이라며 논평을 회피했다. 〈李承哲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4

북, 판문점 대남 정보감시 강화

비디오카메라 작동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남쪽에 대한 정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12일 저녁 8시부터 판문각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 3대를 작동하기 시작해 남쪽 지역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과거 판문각과 초소 등 판문점 북쪽 지역에 비디오 카메라 7대를 설치했으나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른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22

"북한 당분간 붕괴않을것

지도부 안정적…대외개방 현실주의자 존재"

일 국제문제연 방북보고

【도쿄=연합】 일본 외무성 산하단체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방북대표단은 20일 북한 방문 및 정세분석 결과를 외무성에 보고하면서 김정일 체제는 당분간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방북대표단은 이 보고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은 극히 악화돼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극한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최고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지위는 안정돼 있어 김 체제가 가까운 장래에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지도부 안에는 시장경제화와 대외개방화를 추진하려는 현실주의자가 존재하며 보수주의자와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단장 나가이 신야 소장대리)은 북한 외교부 산하의 군축평화연구소 초청으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 조선일보 1996. 4. 17

"北 전쟁도발 가능성 15%"

美정보기관들 예상 워싱턴타임스

【워싱턴=金昌均기자】美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을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국무부의 한 정보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포자기적으로」 한국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15%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美 정보기관들간의 「한반도 전쟁위기 평가회의」를 위해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계속 대화할 가능성은 70%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군사적 균형이 韓美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만일 미국이 美北합의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 약속을 거스르거나, 한국이 북한의 정권 전복을 유도하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북한은 호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조선일보 1996. 4. 19

美、北붕괴 대비책 수립

태평양사령부 美軍증파등 세부안 마련

美태평양사령부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 대규모 美軍증파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은 북한붕괴 대책에는 기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규모의 미군을 증파하는 세부적인 군사계획 이외의 조치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紙가 본토한 것을 미군 성조지가 18일자에서 전재, 보도했다.

성조지는 지난 1월31일부터 美태평양 사령부를 지휘하게 된 프루에르 사령관의 말을 인용, 미군은 현재 위성과 정찰비행, 전자정보 수집체계 등을 통해 북한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조지에 따르면 프루에르사령관은 북한 붕괴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들(북한)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최대의 관심은 북한과 서방간에 통신상태가 갖추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庾龍源기자〉

▽ 세계일보 1996. 4. 16

北, DMZ불인정 철회 시사

"잠정협정 수용땐 停戰체제 골격유지"

駐泰북한대사 회견

【방콕=연합】북한은 15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의 중간 이행단계인 잠정협정으로 대체되면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문제도 「현실에 맞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주재 북한대사 李三晉는 이날 방콕에서 자청해 가진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및 관리에 관한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은 남쪽 비무장지대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장지대로 轉變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北-日수교협상의 북한측 대표단장과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한 후 지난해말 태국대사로 부임한 李대사는 「현실에 맞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느냐는 물음에 『정전협정이 잠정협정으로 대체되면 이 잠정협정에서 정전협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조항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사는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미국과 남한측은 협정을 유린하고 비무장지대를 북에 대한 공격전초기지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뒤늦게나마 정전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우리의 평화협정 제의에 응해 온다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완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기존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대전제하에 잠정협정 체결을 천명해 왔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잠정협정 체결을 수락할 경우 북한이 지난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을 철회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 중앙일보 1996. 4. 19

한반도 有事時 美軍 43만명 투입

美 태평양司 시차별部隊목록

김민석 기자

미국은 북한체제 붕괴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리 럭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미하원 소위에 참석, 북한의 붕괴가능성과 전쟁발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문제는 북한이 해체될 것인가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체되느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붕괴는 시간과 양상의 문제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반경에 한반도를 포함하는 미태평양사령부가 이런 상황 발생시 미군의 대규모 증파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월31일부터 태평양사령부를 지휘하는 조지프 프뤼에 사령관이 최근 참모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붕괴조짐을 보일 경우 주한미군을 엄청나게 증강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것도 사태가 간단치 않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태평양사령부는 이후 정보위성등 각종 수단을 동원, 북한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작성, 운영중인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우선 파견되는 신속전개전력(FDO)을 비롯한 미본토의 동원예비군 등 최대 43만명이 투입되는 것이다. TPFDL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군부대를 날짜별로 지정한 목록.

1단계 航母전투단-조기경보機 발진

2단계 B-52 동원 군사시설 초토화

1단계로 일본 미사일기지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15, F-16전투기가 곧바로 증원되며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전중인 미항모전투단이 이어 투입된다. 이와함께 조기경보통제기(AWACS) 3대와 E-2C 2대가 한반도 상공을 통제한다. 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특전사 요원과 오키나와 해병 2만여명이 출동한다.

2단계로는 미본토의 2개 군단 약 10만명과 3~4개 항모전투단이 추가로 투입되고 필요시에는 B-1및 B-52 장거리 폭격기가 태평양을 횡단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폭격, 전쟁지속능력을 마비시킨다.

이같은 절차로 병력 12만명, 전투기 3백대, 공격헬기 등이 투입된다.

미국방부는 한반도와 같은 주요전장지역(MRC)에▶5개 항모전투단▶1개 해병원정군▶5개 육군사단▶10개 전투비행단▶폭격기 1백대▶특전부대등 최대 43만명의 병력등을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일보 1996. 4. 20

美 "DMZ 지뢰 계속사용"

페리국방 北韓공격 방어위해 불가피

〔워싱턴=연합〕 미군은 한반도와 걸프만을 제외한 지역에서 對人살상용 지뢰를 폐기할 준비를 마쳤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美행정부는 당초 2010년까지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제적인 反지뢰단체들이 지뢰 사용중단 시기를 크게 앞당기라고 압력을 가해왔었다.

한편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지난 18일 조지타운대학의 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지뢰사용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는 한국방어와 관련한 긴급대책에는 지뢰사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전세계에서 지뢰사용으로 많은 불구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피해는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방지, 수천명의 희생자의 발생을 미리 막는다는 군사적가치와 이해득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4. 18

美"유사시 北지하포대 궤멸"

B-52폭격기 DMZ인근 집중공습

美誌, 비공개 上院청문회 증언 보도

【워싱턴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B-52폭격기를 집중투입해 비무장지대 인근의 『몇백개소 지하에 감춰진 북한 포대』를 와해시킨다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군사전문지가 갓 공개된 미의회 대외비 증언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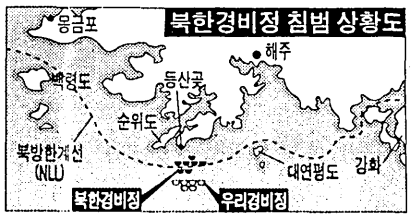
디펜스 위크지 15일자는 미합참의 정보부국장인 윌슨제독과 작전국장인 호웰에스테스 공군중장이 지난해 5월10일 열린 상원군사위 비공개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윌슨제독 등은 이같은 작전계획이 『지리전문가도 투입된 면밀한 검토끝에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것이 유사시 북한이 배치한 1만기의 포대와 2천3백기의 로켓발사시스템을 분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돼있다.

▽ 조선일보 1996. 4. 21

北경비정, 西海한계선 침범

2척 훈련90분후 철수 해군 긴급출동 경계



북한 경비정 2척이 19일 서해 연평도 서남쪽 16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남쪽 1km지점까지 침범, 1시간반 정도 머물다가 되돌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11시40분쯤 서해 연평도 서남쪽 해상에서 북한의 2백t급 고속경비정 7척이 북방한계선 북쪽 6km지점에서 기동훈련을 벌이다 이중 2척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1km쯤 넘어 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이날 오전 11시42분쯤 고속정 6척과 호위함 및 초계함 등 모두 9척의 군함을 출동시켜 북한 경비정 10km 해역까지 접근, 북한 경비정의 남하를 차단하는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북한 경비정은 남쪽으로 내려온 지 1시간30분만인 낮 1시20분쯤 북쪽으로 복귀했다. 〈그림 참조〉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북한 경비정의 越線(월선)행위는 일단 북한 해군이 기동훈련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康龍源기자〉

▽ 조선일보 1996. 4. 21

북한 정전협정 위반 안보리에 조치 요청

駐韓유엔군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최근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와 관련, 유엔 安保理(안보리)에 제출된 특별보고서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측의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에 정통한 한 고위소식통은 20일 『유엔사는 북한의 최근 판문점 무력시위와 관련해 지난주말 안보리에 게리 럭 사령관명의의 특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여기엔 판문점 무력시위 진상뿐 아니라 안보리에서 정전협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명시, 종전의 보고서보다 단호한 입장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지금까지 북한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있을때 위반행위 내용을 기술한 특별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 왔으나 이번처럼 정전협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와 관련, 지난 11일 북한의 무력시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전협정이 계속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 對언론발표」를 채택했었다. 〈庚龍源기자〉

▽ 동아일보 1996. 4. 21

"판문점도발 연장아니냐" 촉각

北경비정 한계선침범 파장

이번엔 바다선택 계산된 무력시위 가능성

軍 일단 "우발" 판단속 「만약의 사태」 대비

북한경비정이 19일 서해 5도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기동훈련을 실시한 배경과 저의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에 이어 판문점 무력시위를 벌인지 12일밖에 안된 시점인데다 특히 4자회담이 제의된지 사흘만에 경비정 월선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군당국은 북한의 이번 월선행위가 일단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한편으론 파급효과를 치밀하게 계산한 무력시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측의 이번 행위를 군당국이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북한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지점이 해주만에서 옹진만쪽으로 빠지는 등산곶 인근해역으로 북방한계선과 등산곶과의 해역폭이 10㎞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로 북방한계선은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과 달리 식별가능한 표지물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서해상의 기상이 좋아지는 매년 4, 5월경 서해5도 인근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다 간헐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3, 4차례 월선행위가 있었다.

셋째로 북방한계선은 지난53년 유엔군사령관이 아군함정의 북방작전한계선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며 북한경비정의 월선지점도 한국이 영해로 선포한 해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밖에 북한경비정이 1백50~2백t급의 소형함정으로 북한 옹진반도의 레이더기지와의 교신에 따라 황해한만한 장비를 완벽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당국은 북한이 판문점 무력시위의 연장선상에서 서해5도 인근해역에서 해상시위를 벌임으로써 심리전차원의 압박전술을 구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 무력시위로 국제 비난여론이 가중되자 정전협정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북방한계선 월선행위를 고의로 자행, 한반도 군사긴장은 고조시키면서 비난여론은 피하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한미양국의 4자회담 제의에 이어 미국과의 미사일협상 및 고위급회담을 앞두고있어 강온양면의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했다는 관측도 있다.

아무튼 군당국은 북한측의 이번 행위가 도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5도 인근해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 해상초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도발시 교전규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黃有成〉

▽ 세계일보 1996. 4. 21

DMZ도발후 첫 해상시위 주목

北경비정 북방한계선 월선안팎

미사일협상 앞두고 돌발… 저의 있는듯

軍 강경파 주도 가능성 실수 배제못해

북한 경비정의 지난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월선은 해마다 몇차례씩 있어온 사건이지만 현재 美-北미사일협정이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해 놓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판문점에서 3차례의 무력시위를 벌인지 불과 12일만에 나온 행위이므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지난 84년 우리 측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소형함정 훈련에 적합한 4~5월께 연례적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해 왔다. 북한해군이 전방에 배치해 놓은 함정들이 대부분 수재물자를 화물선에 실고와 북방한계선에서 우리측에 넘겨주는 등 북관한계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이 틀을 지켜왔다. 우리 해군은 지금까지 북한선박이 이 한계선을 넘어올 경우 군함을 출동시켜 돌아가도록 경고하면서 이 해역을 지켜왔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군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해군함정들은 서해 5도해역의 기상조건이 올 계속 지켜왔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군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해군함정들은 서해 5도해역의 기상조건이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고속정들이므로 파고가 높을 때는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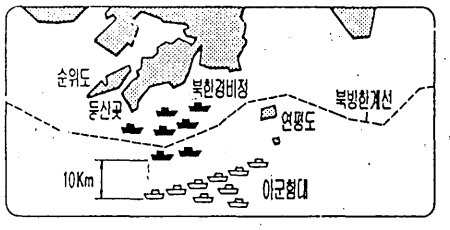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고 다만 P-급, PC급들로 2백t 내외의 경비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해군이 이에 대응키 위해 파견한 함정은 6척의 고속정(3백t급)말고도 순찰수 1천6백t, 만재톤수 2천2백t, 소주급 유도탄정(만재톤수 2백20t), 세르센급 어뢰정(만재톤수 1백t)이나 되는 큰 함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북한해군이 지난 2백t급 함정이 오사급 유도탄정(순톤수 1백65t, 만재톤수 70t) 등 비록 작지만 강한 공격력을 지닌 함정들이며 경우에 따라선 북한군의 실크웜 地對艦미사일 및 해안포의 공격에도 대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함정과 조우했을 경우 우리 해군 교전규칙에는 일단 함대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적성(敵性)선포권」은 함대사령관에게 있지만 긴급상황에선는 함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사격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경비정이 월선한 이유를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를 형성하고 있는 군부가 미사일회담 등 군비축소 분위기에 반감을 품고 저지른 내부용 시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李在承기자〉



▽ 세계일보 1996. 4. 24

北韓, 또 전쟁위협

잠정협정 거듭 촉구

한국과 미국이 4자회담을 제의한지 7일이 지났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답변은 회피하면서 여전히 한반도평화협정을 위한 종전의 「잠정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2일 평양방송을 통해 "지난 2월22일 낡은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면서 "2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미국은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방은 "잠정협정체결 문제에 대한 태도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23일 노동신문에서 최근의 한반도정세에 언급, "조선반도는 안보상 위험한 공백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정전체계가 파괴됨으로써 정전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제동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길로 간다면 전쟁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위협했다.

〈趙敏皓기자〉

▽ 조선일보 1996. 4. 27

한반도 「미사일체제」 완료

페리美국방 밝혀

【워싱턴=金昌均기자】미국은 한반도와 중동 등 분쟁지역에 전역(戰域)미사일 방어체제를 이미 구축해놓고 있다고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25일 말했다.

페리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大가 개최한 핵확산 관련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이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는 걸프전에서 사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리장관은 『북한이 개발중인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천㎞에 달해 東京을 공격할수 있으며 리비아에 수출될 경우 유럽이 사정권내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페리 장관은 『미국이 현재 배치한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의 기술로는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할당해 놓고 있다』면서 『미국이 개발한 차세대 패트리어트 및 해군 미사일 방어체제가 오는 99년초까지는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28

北、또 전쟁위협

총참모장 "開戰은 시간문제"

【도쿄=AP연합】북한은 24일 인민군 창건 64주년을 맞아 최고지도자 金正日의 명령만 떨어지면 전쟁에서 이길 태세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金영춘은 이날 인민군 창건 64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집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시간문제"라는 최근의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북한군과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지도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단번에 적을 격퇴할 전의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李鍾玉·金平植부주석 등이 참석했으나 金正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1996. 4. 26

"北 궁정혁명으로 붕괴될듯"

日방위청 분석 金正日암살-軍部반란가능성

【도쿄=연합】일본방위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대중폭동보다는 軍반란이나 金正日비서 암살에 의해 붕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日TBS방송이 25일 보도했다.

TBS에 따르면 이같은 분석은 방위청이 발행하고 있는 홍보지 「세큐리타리안」 4월호에 게재된 것으로 방위청은 북한붕괴 가능성과 관련, "만일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중폭동보다도 권력중추의 궁정혁명적인 것이나 군반란 또는 돌발적인 金正日비서 암살에 의한 붕괴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위청은 특히 북한이 쌀지원 요청을 둘러싸고 혼란스런 대응을 보인 것과 고위인사들의 망명이 눈에 띄고 있는 점을 들면서 권력중추에 혼란이 일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방위청이 이같은 분석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 중앙일보 1996. 4. 29

北 전시체제준비 지시
군복입기등 의식 고취

북한 노동당은 최근 각급 지방당 조직에 「전시체제를 갖출데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내 전쟁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양강도와 자강도를 다녀온 조선족의 말을 인용, 『북한은 최근 군사위원장 명의의 지시문을 각 도당(道黨)및 시당에 내려보내 주민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시문은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자들이 곧 쳐들어온다」며 ▶조기출근 ▶군복착용 ▶당간부 비상대기 등을 지시하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사이에서는 「전쟁에 대비해 청진에 주둔한 군부대가 함흥으로 이동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1996. 4. 30

美、한반도 유사시 지원책 日에 타진

산케이신문 보도 보급-수송등 9백개항목 답변요청

【도쿄=田賢一특파원】주일미군은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미-일 양국이 합의한 직후 일본정부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지원책을 9백개항목에 걸쳐 타진해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일본국내 민간공항및 항만 사용 △보급 수송 정비 의료 위생 숙박 식량 등 분야에서 對미군 후방지원 △주일미군기지 경비등 항목에 대해 일본측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줄 것을 日외무성과 방위청측에 요청했다.

미군측은 한반도등 동북아지역 유사시 일본이 미군에 대해 시설및 구역을 제공한다는 미-일안보조약에 규정된 내용이외에 어떤 지원책이 가능한지 분명하지 않아 유사시 작전계획을 강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민간항공및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간 의견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對미군후방지원이 헌법으로 금지된 집단자위권 행사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군측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II. 대 북 정 책

▽ 한국일보 1996. 2. 4

"北 쌀轉用안해야 지원"

「安목사 원상회복」 촉구

韓·日 韓·中 연쇄 외무회담

【푸케트(태국)=高泰成 기자】 孔魯明외무장관은 3일 태국 푸케트에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日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지원식량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도 할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미국의 국제기구를 통한 對北식량지원 결정과 관련, 이같이 합의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가시화 하기 전에는 日정부차원의 對北 수교교섭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어 日연립여당의 방북대표단 파견계획도 현시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孔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 日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케다장관은 이에대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日신임총리가 최근 무리한 대북접근정책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고 수교전 경협불가 등 무라야마 도미이치前총리(村山富市)가 제시한 대북정책 3원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孔장관은 이어 錢其琛(첸지천) 中외교부장과 韓·中외무장관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安承運 목사 남북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중국측이 安목사의 송환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錢외교부장은 회담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로,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계획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신문 1996. 2. 2

"이산가족교류 적극 지원"

권 부총리 "국제기구·3국통해…남북 시범경협 지속"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1일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서신교환, 가족상봉 등을 적극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회견에서 "남북회담이 다시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제의해 실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경수로 공급에 따른 우리 분담액은 올 하반기께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경수로 비용의 적정부담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성일 잠비아 주재 북한 3등서기관 망명과 관련해 "그 자체만으로 체제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식량난에 대해 "금년 추수기까지의 부족량은 2백33만여t으로 보며 6월 중순까지 지탱할 수 있다는 게 전문적 평가"라며 "올 북한 식량사정은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당장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남북경협에 대해 "현재의 시범적 경협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수로 지원사업 진전추이 등을 봐가며 경협확대를 탄력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도 연말가지 3천억원으로 늘릴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김정일은 당·정·군을 장악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권력승계에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올 하반기 북한의 탈상절차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기철 기자

▽ 서울신문 1996. 2. 4

韓·日·中 외무 연쇄회담 안팎

孔魯明외무부장관은 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를 위한 아시아 10개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리는 태국 푸케트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3국은 북한의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관련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한일회담 孔장관은 우한 하시모토 내각이 양국간 합께 새로 임명된 이케다외상은 이날 오찬회담에서 북·일수교 교섭 과정등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재다짐했다.

韓·日 對北정책 긴밀협조 재다짐

韓·中 고위급대표단 교환 정례화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일본 외상,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양국간현안을 협의했다.

孔장관과 올해초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의 연립내각 출범과 이후 한발짝 더 다가선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등을 협의했다.

한·일, 한·중으로 나뉘어 孔장관은 또 錢其琛부장과의 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 江澤民국가주석의 방한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정직하고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케다 외상에게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케다외상은 공감을 나타냈다. 두 장관은 이달 안에 양국의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국제정치 전문가·양국관계에 정통한 지식인·언론인등 각각 10명 내외가 참여하는 역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다음달중 첫 회의를 열어 정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중회담 孔魯明장관과 錢其琛외교부장은 북한의 현 정세에 대한 양국의 분석과 입장을 교환하는 것으로 회담을 시작했다.

孔장관과 錢부장은 북한이 현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孔장관은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는데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했다.

錢부장은 『북한과의 특수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에 대해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관보급의 고위대표단 상호 교환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푸케트=李度運특파원〉

▽ 서울신문 1996. 2. 2

현재론 對北지원 不可 내한 美레이크에 전달

정부, 北식량난 관련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북한의 대남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3일 방한하는 앤터니 레이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레이크보좌관은 방한 기간중 權五琦통일부총리, 孔魯明의 두장관 및 柳宗夏청와대 외교안보수석등 우리측 고위관계자와 만나 양국 현안을 협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북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정부 방침을 집중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현재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하에서 미국측의 대규모 지원은 자칫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国政 이렇게

통일정책 權五琦부총리 인터뷰

"北 개방등 체제변화 유도 힘쓸터"

北주민 생활개선 포함 巨視的 입장 중요
경수로 분담규모 국민적 합의 바탕 결정

분단 반세기를 막 넘기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는 96년 새해를 맞아 대북 정책 관련부서의 좌장인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을 만났다.

權부총리는 1일 서울신문 黃炳宣정치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관계를 우리 전래의 설화 「콩쥐 팥쥐」로 풀어 나갔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올해 통일정책의 주안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우회적 답변이었다.

權五琦통일부총리는 북한에서 억압받으며 살고 있는 「콩쥐」(압박부민)들의 삶의 질까지도 배려하는 폭넓은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柳在林기자〉

대담=黃炳宣정치부장

통일 후유증 최소화

權부총리는 올해가 쥐띠 해인 점을 염두에 둔듯 『북한에는 팥쥐(당간부 등 기득권 계층)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콩쥐(피억압자로서의 일반주민)들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팥쥐어머니(북한당국)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콩쥐들의 상황을 시야에 넣고 북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어느 외국인에게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용했다는 이 콩쥐 팥쥐 비유는 북한당국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그가 취임초 정의한 「복안(複眼)」적 대북 정책 추진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통일 후유증을 미리 최소화하는 등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시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새겨질 수 있을 듯하다.

—최근 식량난 등 북한내부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들의 돌발적 행동을 걱정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경제가 저렇게 어려운 북한이 감히 어떻게 전쟁을 도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상식적 추론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전쟁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 관찰자들의 공통언어는 「불가측성」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 50년간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우리 나름의 선은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푸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안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 생각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우리 뜻대로 대응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지요.

—잠비아 주재 북한외교관이 망명하는 등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내부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金日成 사후 군부가 득세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북한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면 군사비를 좀 줄여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군부의 입김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金日成 사후 북한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일부에서 얘기하듯 북한이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또 최근 일련의 탈북사태가 관심을 끌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체제동요가 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不可測" 공통의견

—취임사에서 북한당국 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시야에 넣는 「복안(複眼)적 시각을 강조했는데, 종교·학술·문화·언론·체육 등 민간부문의 남북 교류를 확대시킬 방도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콩쥐 팥쥐」얘기로 비유하자면 북한의 콩쥐(주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무엇인가를 지원하고자 할 때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투명성」을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질서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다면적·기능적 접촉 확대 방안들을 개발해 내고 학술·문화 등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남북교역이 3억달러에 이르렀는데 교역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일본·중국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또 대북 직접 투자의 물꼬도 텄습니다. 앞으로 경수로 지원사업의 진전 추이 등을 봐가며 경협확대를 탄력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사업은 사람과 재화가 함께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만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경협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면 당국간에 절차와 방법 등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당국에 설득할 생각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미·일 등 국제사회의 시각과 우리 정부의 평가가 다르게 비쳐지고 있는데….

투명성 보장이 전제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해선 대체로 견해가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정보가 명확치 않은데다 평가기준이 다른 탓인지 서방의 국제기구들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반면 사회주의권인 러시아·중국은 다른 의견입니다.

정부로선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3백45만 t 인데 비해 올해 수요량이 사료·종자용을 포함해 6백73만 t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애국미」라는 이름으로 22% 정도 줄여서 배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추수기까지 2백33만 t 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급기준량대로 하루 1만5천 t 을 배급하더라도 6월중순까지 지탱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북 곡물지원에 대한 정부의 원칙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공식적 지원요청, 한반도내 회담, 대남 비방 중지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도 북한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 관찰 자세를

—대북 경수로 사업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리측 재정분담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로 총공급비용과 우리의 분담액은 금년 하반기에나 윤곽이 잡히리라고 봅니다. 경수로 비용의 적정부담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선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요원과 장비의 왕래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측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공세에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측이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요.

▲남북기본합의서 5조는 현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노력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이미 합의한 사항부터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金正日의 공식 권력승계가 늦어지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金이 현재로선 당·정·군을 장악,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승계에 장애는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올하반기쯤 북한에서 金日成 탈상절차를 밟는다고 하니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權부총리는 『남북관계는 스냅사진으로 보지 말고 비디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때그때 한 국면만을 볼것이 아니라 장기적 연속적 시각으로 관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남북 경색국면도 통일로 가는 긴 여정속의 한 정거장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듯 했다.

〈정리=具本永기자〉

주요정책 심층보도: 국민과 정부를 잇는 기획

北녘 변화 유도 어떻게 할까

경수로 이행사업 주민접촉 확대
「자유의 집」 개축, 출입국센터 활용

「접촉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한다」.

벽돌을 한장씩 쌓아가듯 상호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확대로 점진적, 평화적으로 통일 대장정을 이룩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캐치프레이즈이다. 우리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오늘의 남북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기도 하다.

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도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에 올해 통일원 업무 추진계획의 최우선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테면 종교·학술·문화·체육 등 남북간 각종 민간교류 지원 및 경협 확대 방침 등이 그것이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등 「이산가족 찾기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체제동요를 염려해 북측이 이산가족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우회적 인적 교류 확대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올들어 구체화될 경수로 사업 이행과정에서 남북주민간 접촉을 통해 남북간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우리 기술진과 북한 근로자들간의 접촉 과정에서 신뢰분위기를 구축,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해소에 주력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수로사업 이외의 다른 「민족공동발전계획」도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북한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우리측의 기술지원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북경제공동위 가동에 호응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다.

물론 이같은 방안들은 접촉 기회 확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이같은 소프트 웨어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념비적 「하드웨어」 건설을 개시한다. 지난 1월말부터 설계 공모에 들어가 오는 7월께 첫삽을 뜨게될 판문점 「자유의 집」의 증·개축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연건평 1천5백평에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로 오는 97년말에 완공될 이 건물은 앞으로 남북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출입국종합관리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북 경협확대와 경수로 지원사업,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등으로 남북은 물론 제3국인의 왕래가 잦아질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옛건물이 완전히 헐리고 새로 단장될 「자유의 집」에는 ▲이산가족 면회소실▲남북 연락사무소▲통관-검역시설▲프레스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북분단의 상징적 명소였던 흰색 팔각정 지붕을 가진, 기존의 「자유의 집」은 오는 6월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65년 우수 국산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졌던 이 건물은 71년 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서 70년대 이후 남북접촉 장소로 25회 정도 이용된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89년 「평화의 집」이 준공되면서 이 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폐기됐다. 그러나 「자유의 집」은 바야흐로 본격적인 남북교류 협력시대 개막을 앞두고 올들어 새로운 면모로 거듭나게 되는 셈이다.

〈具本永기자〉

韓美 대북정책 조율

北정찰총재 추가회담 파견결정

▽ 세계일보 1996. 2. 5

美, 쌀지원 자제-클린턴 訪韓요청 거절

▽ 한국일보 1996. 2. 6

美 "한국민 北정찰기 항의"

韓美공조 훼손 않기 강조

▽ 조선일보 1996.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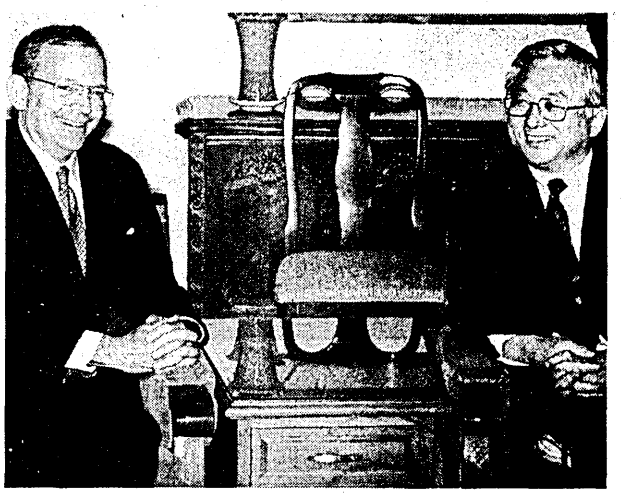
韓·美공조 "약속따로 현실따로"

美、大選앞두고 對北 유화 제스처

한국지지 재확인불구 內實결여

金대통령、한때 면담취소 지시… 불쾌감 표시

양국관계 「北韓변수」



◇權부총리 예방 방한중인 앤서니 레이크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5일 오후 權五琦 통일부 총리를 예방, 對北 쌀지원문제등 한-미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鄭良均기자>

權五琦 통일부총리、孔泰明외무장관 등 정부내 통일외교안보팀은 5일 앤소니 레이크 美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연쇄회담을 보보좌관과 연쇄회담을 했다。우리측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다시 한번 「韓·美 공조체제」를 다진 셈이다。

韓·美 양국은 지난달 24일 앤서니 레이크 보좌관 이 방한 때 재차 강조했다。레이크 보좌관은 이번 방한 때 정부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문제 등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서울신문 1996. 2. 24

金대통령 오늘 3國순방 出國

印度·星港 국빈방문… 泰 ASEM 참석

金泳三대통령

金泳三대통령은 부인 孫命順여사와 함께 24일부터 29일까지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3월1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상오 특별기편으로 출국한다.

金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 나라시마 라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등 양국간 실질협력관계증진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金대통령은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 고촉통총리와 만나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조방안에 대해 협의 한다.

金대통령은 이어 29일 태국 방콕에 도착, 중국·일본·동남아국가연합(ASEAN) 7개국과 유럽연합(EU) 등 25개국 정상및 EU집행위원장등이 참석하는 ASEM 회의에 참석 한다.

ASEM 참석차 방콕에 머무르는 동안 金대통령은 李鵬중국총리, 존 브루튼 아일랜드총리와 개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金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방문및 ASEM에는 각각 12명의 공식수행원이 수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싱가포르 방문에 42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수행한다.

공식수행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孔魯明외무장관▲朴在潤통상산업장관▲金東鎭합참의장(인도·싱가포르)▲金光石경호실장▲具本英경제수석▲柳宗夏외교안보수석▲尹汝雋공보수석▲金錫友의전수석▲潘基文외무부 1차관보(방콕) ▲文東錫외무부 의전장▲金夏中외무부아·태국장▲蘇秉用주(駐)인도대사내외(인도)▲孫明鉉 주(駐)싱가포르대사내외(싱가포르)▲鄭泰東 주(駐)태국대사내외(방콕).

▽ 동아일보 1996. 2. 24

"北 예측어려운 상황" 안보태세 강화 지시

金대통령, 閣議주재

金泳三대통령은 23일 "북한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첨통감은 안보태세를 유지, 국민들이 정부와 군을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李壽成총리 등 전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즉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항상 갖춰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尹汝雋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점부가 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은 휴일에도 근무를 철저히 해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신문 1996. 2. 16

"귓신 脫北者 가급적 전원 수용"

孔외무 本紙회견 北변화 없으면 쌀지원 안해

KEDO 후속협정 체결 협상중

孔魯明외무부장관은 15일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동포도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귀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원 국내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孔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북한 정국과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인해 탈북자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孔장관은 또 대북경수로사업 추진과 관련, "올 상반기중에는 부지조사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도 경수로의 조기공급을 희망하기 때문에 올해중 초기단계 공사가 착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孔장관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KEDO 법적지위, 특권·면제, 영사보호, 부지인수등에 관한 후속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孔장관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대북 쌀지원과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대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직접지원이든, 우리 정부차원의 추가지원은 고려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李度運기자)

▽ 한국일보 1996. 2. 26

金대통령 기자간담회 北 우려상황 만일사태 철저대비

【뉴델리 = 申載旻기자】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金泳三대통령은 2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수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안정속의 중단없는 개혁"을 남은 2년 임기의 국정운영 기본목표로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하오(이하 한국시간) 뉴델리 아쇼카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북한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북한이 그런 불행한 종말을 맞지않기를 바란다"면서 "국방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비할 것이며 韓美관계도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협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1996. 2. 26

◇대북관계 = 남은 임기동안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작정이다.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이고도 실효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델리 = 金學淳특파원】

▽ 서울신문 1996. 2. 26

수용소 탈출기도 정치범 공개처형

통일원「北韓인권백서」내용

정치범 수용소
5~10곳…매년 1곳서 40명사망

시베리아벌목공
혹한·중노동속 月 10명꼴 숨져

강제납북자실태
55년이후 3천7백38명 납치

金日成·金正日체제의 북한이 인권의 완전한 사각지대임이 거듭 확인됐다.

통일원산하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정보자료센터」가 25일 펴낸 「북한인권백서」는 구체적 방증자료를 통해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 백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처음 발간된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자료집이다. 귀순자들과 제3국을 통해 수집한 북한인권실상과 국제인권단체에 흩어져 있던 북한인권관련 자료를 집대성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으로 매년 이를 보완, 국내인권단체는 물론 유엔고등판무관실·국제사면위 등 국제인권기관들의 인도적 차원의 북한인권개선 캠페인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당국도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인권유린실태를 호도하기 위해 우리측에 대해 각종 역공작을 펴고 있다고 민족통일연구원측이 이날 밝혔다. 이를테면 지난해부터 북한노동당의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서기국 명의로 남한인권백서를 펴내 국제기구들에 보내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백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정치범수용소 실태 ‖ 북한의 함남·함북·평남·평북등지에 5~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되어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수용대상 및 죄질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완전통제구역」에 수용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출소가 불가능하다. 각 수용소규모는 수용인원이 약 5천명에서 5만명으로 일부 수용소는 외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감옥형태로 설치돼 있다.

金日成부자체제 위해분자와 당정책 위반자 및 자유주의 성향자, 불순 북송교포들이 주요 수용대상이나 최근 식량난등 경제난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해외탈출기도자, 해외실정 유포자들도 포함된다. 수용자들은 일상적인 구타·고문 등을 당하고 있고 명령불복종자나 탈출기도자, 규율위반자 등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간혹 열악한 수용소환경을 참지 못해 탈출하다 체포된 자는 재판없이 공개처형되는데 그 숫자는 매년 1개소에 15~20명정도 된다. 수용소의 중노동을 이겨내지 못해 별도로 격리, 방치되어 죽는 사람도 매년 1개 수용소당 40~50명에 이른다.

◇시베리아벌목공 인권실태 ‖ 북한은 한때 1만5천명선의 벌목공들을 러시아에 주재시켰으나 95년말 현재 약 5천명의 벌목공이 남아 있다. 동절기의 경우 영하40도 이하로 내려가는 혹한속에서 하루 12시간의 중노동을 받으며 북한으로 송환시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도록 무릎 위까지 족쇄를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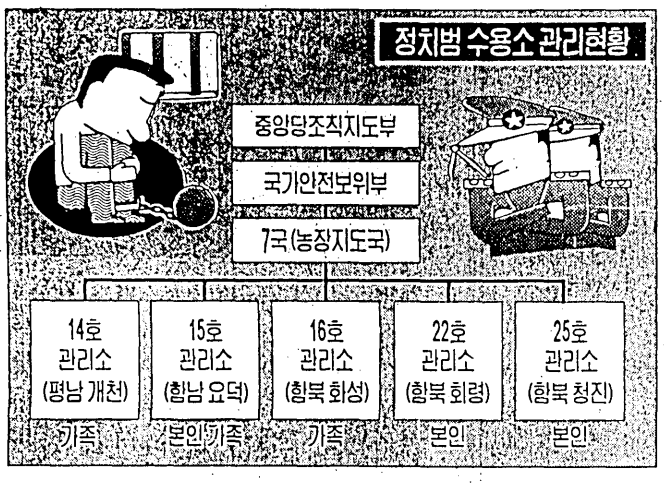
◇북송교포 인권실태 ‖ 북송 재일교포들은 일본의 친지로부터 송금을 받는 일부를 제외하곤 일반 북한주민들보다 더 열악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다. 지난 74년 1백여가구 6백여명이 요덕수용소에 처음 수용된 이후 많은 북송자들이 소원이나 항의를 제기하다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공개처형됐다.

북한당국은 조총련 간부나 상공인출신 북송가족을 인질로 삼아 이들의 재일 가족들을 「자금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북송교포들이 재일 친척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5천만엔이상의 헌금이나 물품이 필요하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인사의 석방을 위해서는 5천만~1천억엔이상의 기부금이 요구된다. 북송 일본인 처들을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가 매년 4백50~6백여상자의 구호품을 보냈으나 88년 약 70%가 이를 받았다는 답장을 보내왔으나 90년이후 답장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납북억류자 실태 ‖ 자난 55년이후 지금까지 강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남한인은 모두 3천7백38명으로 이중 3천2백96명은 송환됐다. 그러나 지난 79년 노르웨이 연수중 북한 공관원에 의해 납치된 高相文씨와 95년7월 중국 연길에서 선교활동중 강제납치된 순복음교회 安承運목사등을 포함해 현재 총 4백42명이 억류돼 있다. 억류자의 대종은 동진호 선원등 4백7명의 어부들이다.

이들중 KAL기 스튜디어스였던 성경희와 정경숙등 일부 납북자들은 대남방송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대부분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具本永기자)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연 도	억류자수	누 계
1955	10	10
1957	2	12
1958	23	35
1964	16	51
1965	22	73
1966	2	75
1967	43	118
1968	131	249
1969	21	270
1970	38	308
1971	16	324
1972	66	390
1973	6	396
1974	28	424
1975	(1)	425
1977	(1)	426
1979	1	427
1980	(1)	428
1987	13	441
1995	1	442

*( )수치는 미확인 사항임

▽ 조선일보 1996. 2. 26

北정치범 20여만명 수용

강제납북 미송환자 4백42명

민족통일硏 인권백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매년 15~20명을 공개처형하는 등 가혹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민족통일연구원이 25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1996년」에서 밝혔다.

인권백서는 북한이 동구권 붕괴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인 「특별독재대상구역」을 대폭 늘려왔으며 이곳에 수용된 정치범의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이 80년대 이후 자신의 비판자 1만5천여명을 「반동선동선전죄」「조국반역죄」등의 죄명으로 특별대상구역에 수감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또한 지난 55년부터 납북된 사람들은 모두 3천7백38명이며 이중 미송환자가 4백42명이라고 밝혔다.

미송환자들의 신분을 보면 대부분이 어부들로 지난 87년1월 납북된 동진호 선원12명을 포함해 모두 4백7명이다.

그밖의 미송환자는 대한항공 승무원12명, 해군1·2정 승무원 20명과 지난 78년 노르웨이에서 납북된 前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 87년 오스트리아에서 납북된 이재환씨, 그리고 지난해 조국에서 납치된 안승운 목사 등이다.

이 북한 인권백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처음 발간된 것이다. <金演光기자>

▽ 조선일보 1996. 2. 27

韓·印 교역량 50억弗로

兩國 정상회담 합의 봄베이에 총영사관 신설

【뉴델리=金昌基기자】印度(인도)를 방문중인 金泳三대통령은 26일 오후 나라시마 라오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95년에 20억달러에 못미친 양국간 교역량을 2000년에는 50억달러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크게 확대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양국간 투자보장협정과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하고, 봄베이에 한국 총영사관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金대통령과 라오 총리는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서울~뉴델리간 新(신)실크로드」를 열기 위해 21세기를 앞둔 「미래지향적 韓·印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간 공동위원회를 설치, 해마다 양국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담에서 金대통령은 인도의 「新경제정책」에서 역점이 두어진 전력, 통신, 도로망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위한 인도 정부의 협력을 담부했고, 라오 총리는 한국의 진출을 적극 환영한다며 협력을 다짐했다.

라오 총리는 향후 비동맹 그룹의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고, 金대통령도 적극 협력 의사를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2. 29

"韓·아세안 21세기委 설치"

한국기술·星港마케팅결합 제3國진출

金대통령·吳作棟총리 정상회담

【싱가포르=申載旻기자】고촉통(吳作棟)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과 외교공조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韓·아세안(ASEAN)협력관계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비춰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韓·아세안21세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吳총리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金대통령과 吳총리는 건설 통신 전자 정보산업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생산기술과 시공능력, 싱가포르의 정보 마케팅능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제3국 공동진출에 양국정부가 본격 지원키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양국정상은 또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金대통령과 吳총리는 양국이 그동안 유엔, 亞太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아세안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제1차방콕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제외교사회에서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세계일보 1996. 3. 1

"北 공식대화 요청땐 수용"

權부총리 최근訪北 CNN부사장 "北도 희망" 밝혀

북한은 남한과 남북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케이블 TV CNN社의 이슨 조던 부사장 일행이 29일 밝혔다. 조던 일행 4명은 이날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의 金容淳노동당 대남비서를 만났더니 대화의사를 밝히더라"며 북측의 비공식 대화의사를 전달했다.

權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94년 7월 金日成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중단됐고 또 작년 10월 北京 3차회담에서 한반도내 회담개최등 3개조건을 내걸었으나 북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측의 공식대화 요청이 있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조던 일행은 "북한은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96애틀랜타 올림픽에 선수 50명과 임원 30명등 80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趙敏皓기자〉

▽ 세계일보 1996. 3. 2

2000년 ASEM 한국개최

방콕會議 오늘 폐막 金대통령, 亞-유럽 초고속통신망 제의

【방콕=金弘烈특파원】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오는 2000년 한국에서 열린다.

태국 방콕에서 1일 열린 제1차 ASEM 첫날 회의에서 金泳三대통령은 ASEM 3차회의의 한국개최를 희망했으며, 의장국인 태국 반한총리 제의에 따라 아시아 유럽 25개회원국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3차회의의 한국개최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반한총리는 이날 1차회의에서 『방콕 제1차회의에 이어 2차회의는 98년 런던에서, 그리고 3차회의는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金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당국자는 제3차 ASEM 한국개최와 관련,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 ASEM을 한국이 주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 세계 중심국가들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ASEM 주최국으로서 자유무역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자는 『ASEM 3차회의의 한국개최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참석국들간 고위급실무회담(SOM)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콕 퀸 실리킷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1, 2차회의에서 『ASEM국가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종합수송망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金대통령은 또 아시아-유럽 경제협력 3원칙으로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해 고도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할 것 등을 제의했다.

金대통령은 2일 회의에선 아시아와 유럽관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아시아-유럽 비전그룹」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유럽의 지역협력 개발성이 ASEM을 통해 확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아시아경제권에 대한 유럽자본의 과감한 투자는 양지역의 경제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활동에 ASEM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기업인과 학자, 문화예술인 교류를 확대하고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젊은 세대간의 교류증진방안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는 아시아-유럽연구소 설치를 奬作棟싱가포르총리는 무역투자유화센터 설립을, 반한태국총리는 환경공학센터설치를 각각 제의했다.

제1차 ASEM은 2일 오후(한국시간) 회의의장인 반한태국총리의 성명발표를 끝으로 폐막한다.

▽ 한국일보 1996. 3. 2

韓·中, 한반도안정 긴밀협력

金대통령-李鵬총리 회담 민간항공기 合作사업 年內착수

오늘 韓·日정상회담, 獨島문제 주목

【방콕=申載昊기자】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콕을 방문중인 金泳三대통령은 1일 하오 10시30분(현지시간) 숙소인 쉐라톤호텔에서 李鵬(리펑)중국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반도정세를 비롯한 양국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측면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李鵬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하며 남북 당사자간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중국어선의 우리 어업자원보호수역에 대한 위반조업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정부가 중국어민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조기에 어업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金대통령과 李鵬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 韓中협력관계를 동북아와 亞太지역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 그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金대통령과 李鵬총리는 또 지난 93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중형 민간항공기 공동개발사업이 연내에 조기 착수될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金대통령은 2일 하오에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총리와 하시모토내각 출범후 처음으로 韓日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문제, 對북한문제, 對日무역적자문제, 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특히 하시모토총리와의 회담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알려져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 서울신문 1996. 3. 2

金대통령 ASEM 기조연설 〈요지〉

우리는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상호교류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북한측은 아무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인내와 성의를 다하여 남북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ASEM 회원국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보다 더 큰 관심으로 KEDO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아일보 1996. 3. 3

韓-日 "경제수역 조속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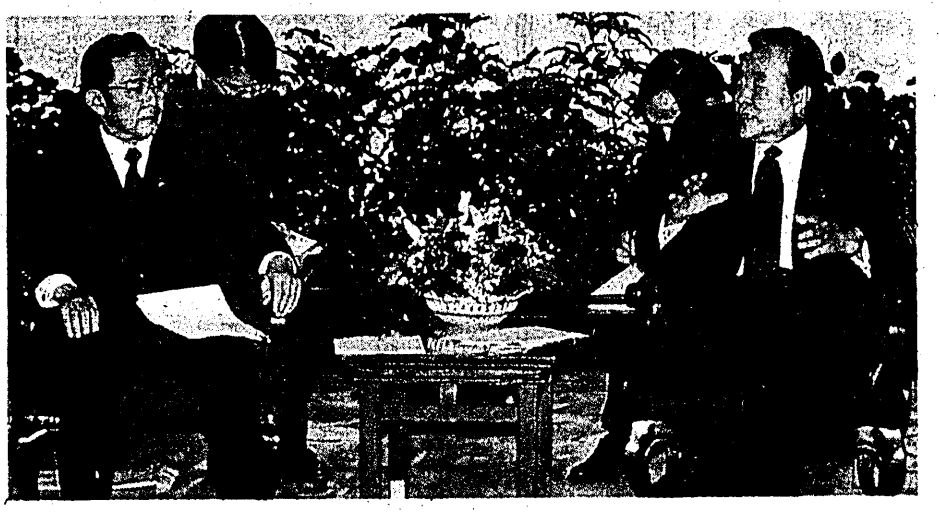
頂上회담 합의 어업협정 개정 상호노력

독도는 한국땅… 타협안돼

金대통령

對北문제 양국 긴밀협조

하시모토



韓-日정상 金泳三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2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방콕=金學万〉

【방콕=金東哲】 金泳三대통령은 2일 오후 숙소인 태국 방콕의 셰러턴호텔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영토문제와 무관하다는 전제 아래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자는데 합의했다.

金대통령은 대북한문제에 대해 『일본의 대북한관계는 남북관계와 조화와 병행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하시모토총리는 『앞으로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종전 이상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정상은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활동지원에 임하는 양국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한편 金대통령이 이날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하면서 양국간 EEZ 경계획정문제를 조속히 협의키로 합의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EEZ설정방침을 유지하는한 양국간 EEZ협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고 金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당국자가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3. 3

亞-유럽 동반관계 구축

ASEM폐막 의장성명 「비즈니스 포럼」창설 교역증진

金대통령 「비전그룹」설립제의

【방콕=金弘烈특파원】아시아와 유럽의 26개국 정상 및 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난 제1차 방콕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2일 오전 회의에 이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는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여건의 형성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의 유지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이를 위해 보다 큰 성장을 위한 새롭고 포괄적인 아시아-유럽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연내 체결, 화학무기 협약의 조기 발효 등을 촉구하며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가국들은 또 경제적 측면에선 개방적 다자무역 체제, 비차별적 자유화및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다짐하면서 양지역 민간기업간에 무역-투자 증대를 위해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또 『아시아-유럽간 과학기술 교류 증대가 양지역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환경관련 기술의 이전, 마약문제 돈세탁, 불법 이민문제 등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金泳三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21세기의 아시아-유럽간 관계를 좀더 조화있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실제적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양지역의 민간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아시아-유럽 비전 그룹」을 설립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金대통령은 이 그룹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 학술 등 모든 분야를 검토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견을 도출, 각국 정상들에게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3. 4

汎아시아 관통철도 건설

金대통령 ASEM합의 발표 남북한~中~인도차이나~星港

아일랜드총리와 회담… 오늘 귀국

【방콕=申載旻기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중인 金泳三대통령은 3일 『이번 ASEM에서 한국-북한-중국-인도차이나-싱가포르를 잇는 범아시아 관통철도를 건설해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철도망으로 연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상오 숙소인 오키드 쉐라톤호텔에서 수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당사국 모두가 합의하고 북한만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이는 시간문제이며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및 차량제조업체등이 대거 참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2000년의 제3차 ASEM을 서울로 유치한 만큼 귀국하는 대로 「ASEM준비기획단」을 구성, 국제회의시설 및 호텔의 건설을 포함한 제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 관해 『로드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땅이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평소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며 『로드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고 앞으로도 그같은 원칙 아래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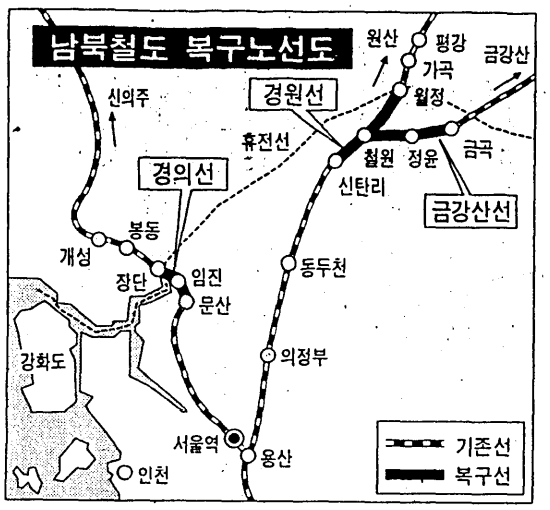
金대통령은 이에 앞서 존 부르톤 아일랜드총리와 양국간 최초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및 한-EU협력증진 방안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金대통령은 이날로 9박10일간의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과 ASEM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 하오 귀국한다.

▽ 한국일보 1996. 3. 5

南北합의땐 2년內복구가능

汎아시아관통철도 한반도구간



3일 폐막된 제1차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국-북한-중국-인도차이나 반도-싱가포르를 연결하는 「범아시아 관통철도(TRANS ASIAN RAILWAY) 건설에 각국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복구 연결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 사업의 주체는 제3국인 말레이시아가 맡기로 했고 가장 큰 난관은 미연결 상태인 한국과 통일대비를 위한 국가의 평양-서울구간이 관심의 초점이다.

남북철도연결 계획은 정부가 이미 지난 80년대초부터 「21세기 선진국 진입 축등을 결합한 사다리형 부선을 연결하는 노선과 동해북부선을 원산까지 연장하는 남북 2개축과 ▲경전선과 동서고속철도 및 북한의 평양-원산을 잇는 평원선등 동서 6개 축을 포함한 총 12㎞ 복구를 위해 3백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85년-1월부터 2개월간 실시설계를 마친데 이어 86년 10월부터 87년7월까지 임진강 교량보수공사를 마쳤다. 또 92년12월부터 용지매수에 착수, 전체 4만1천1백43㎡중 2만7천3백13㎡를 사들였고 94년 8월에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이미 94년10월 남북간 합공사를 완료할 사업실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금강산선 철원-금곡간 24.5㎞는 5백47억원을 투입, 91년에 실시측량을 마쳤으며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동해북부선 강릉-군사분계선 1백24.5㎞는 총 4천7백61억원을 투입해 남북간의 합의가 끝나는대로 5년정도 걸려 복구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범아시아 관통철도 계획은 당초 지난해 10월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당사국 회의에서 북한측이 긍정반응을 보여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러시아는 광궤철도이고 동남아는 협궤철도로 운영되는등 방식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勝容기자】

정부, 80년대초부터 기본조사·용역

경의선등 설계완료·용지매수 단계

인 북한의 경우 李鵬(리펑) 중국총리가 설득을 장담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만 세워지면 조기 성사될 전망이다.

현재 범아시아 관통철도 계획중 쿤밍-양곤-방콕 구간의 장거리 미개설 구간외에 군사분계선 간설철도망을 구축키로 했었다.

건교부와 철도청은 이와 병행해 경부, 경원, 금강산 철도및 동해북부선 복구계획을 확정, 추진해 오고 있다.

경의선은 문산-장단간 12㎞ 복구를 위해 3백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85년-1월부터 2개월간 실시설계를 마친데 이어 86년 10월부터 87년7월까지 임진강 교량보수공사를 마쳤다. 또 92년12월부터 용지매수에 착수, 전체 4만1천1백43㎡중 2만7천3백13㎡를 사들였고 94년 8월에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이미 94년10월 남북간 합공사를 완료할 사업실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금강산선 철원-금곡간 24.5㎞는 5백47억원을 투입, 91년에 실시측량을 마쳤으며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동해북부선 강릉-군사분계선 1백24.5㎞는 총 4천7백61억원을 투입해 남북간의 합의가 끝나는대로 5년정도 걸려 복구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범아시아 관통철도 계획은 당초 지난해 10월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당사국 회의에서 북한측이 긍정반응을 보여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러시아는 광궤철도이고 동남아는 협궤철도로 운영되는등 방식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勝容기자】

▽ 조선일보 1996. 3. 5

南北韓간 철도 연결 복구사업 4곳 추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합의한 汎아시아철도망 건설에 대비, 남북한간 철도의 연결을 위해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 4개철도망의 남측구간에 대한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의선(서울~신의주) 남측구간인 문산역에서 남북한계선의 장단역을 잇는 12㎞구간과 경원선(서울~원산) 신탄리역부터 군사분계선인 월정역까지의 16.2㎞ 구간에 대한 선로주변 용지매수 절차가 올해중 마무리된다. 〈薛完植기자〉

▽ 동아일보 1996. 3. 5

南北철도연결 제의 방침

정부, ESCAP통해 北 긍정적… 성사가능성 높아

金대통령 "ASEM서 汎아시아 철도부설 합의"

정부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반도와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를 잇는 범아시아 관통철도를 부설키로 합의함에 따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를 통해 북한에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 구간 연결을 제의할 방침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한 철도연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종래의 태도와 달리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한 철도연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정부측은 보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범아시아 관통철도 부설의 중요한 관건인 남북한 철도연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관계 당국 협의에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ESCAP를 통한 우회적인 제의가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3. 5

"汎아시아철도 적극참여"

金대통령 귀국

金泳三대통령은 4일 하오 인도및 싱가포르 방문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참석등 10일간의 해외순방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金대통령은 귀국인사를 통해 『방콕에서 열린 제1차 ASEM에서 합의된 범아시아 철도망 건설계획에 적극 참여해 이 철도를 한반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00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3차 ASEM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순방성과에 언급, 『인도방문은 우리나라의 서남아시아 경제진출과 비동맹권 외교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뒤 『하시모토 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두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는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1996. 3. 5

南北철도 특별추진반 구성

통일원·외무·건교부·철도청 참여

정부는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원과 외무부, 건설교통부, 철도청이 참여하는 특별추진반(Task Force)을 구성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범아시아 관통철도의 건설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특별추진반을 구성,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별추진반이 구성되는 대로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를 통해 북한측에 미연결구간인 서울과 평양간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의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방콕에서 열린 ESCAP 정책담당자회의에서 ESCAP이 추진중인 부산과 유럽을 잇는 범아시아 관통철도 건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중국도 ASEM이 합의한 범아시아 관통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북한측을 설득하겠다고 밝혀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북한이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특별추진반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 동아일보 1996. 3. 5

"「서울 ASEM」 준비단 곧 구성"

汎아시아철도 건설 한국기업 참여할것

金대통령 기자간담회

金泳三대통령은 3일오전 방콕의 오키드 세러틴호텔에서 수행기자들과 30분간 간담회를 갖고 9박10일간의 아시아3개국 순방성과를 설명한뒤 일문일답을 나눴다.

△金대통령=2000년 제3차 ASEM의 한국유치는 한국의 민주개혁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격려다. 세계화, 유엔안보리 진출, OECD 가입, ASEM개최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가역량의 확대는 바로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전략이자 과정이다.

ASEM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희망과 도전의 21세기를 앞두고 끊임없는 개혁과 선진화를 통해 국력을 신장시켜나가야 한다. 구시대의 낡은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

ASEM에서 범아시아 철도를 건설키로 했다. 싱가포르와 인도지나 중국을 거쳐 유럽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인도지나와 중국을 지나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잇기로 한 것이다. 당사국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가 모두 양해해 남은 것은 북한뿐인데 이것은 시간문제다. 이 철도건설에 한국 건설업계 뿐만아니라 모든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000년 ASEM 개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귀국하자마자 ASEM 준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국제센터가 필요하다. 설계까지 생각할때 남은 4년은 너무 짧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건설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메콩강유역개발과 동시에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존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안되면 다른 방법이 강구될 것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북한에도 철도가 연결돼야 하는데 북한과의 교섭은 우리가 맡는가.

『우리와 EU, 아시아가 합동해서 하는 것이다. 어느 한나라에만 맡겨진 게 아니다』

-러시아등 일부 국가들이 ASEM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데….

『ASEM에서 세나라 정상이 추가가입 문제를 거론했지만 다른 정상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2000년에는 회원국이 30개국은 될 것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소 생각을 말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 땅이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영토에 대해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화제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나갈 것이다』

-귀국후 공명선거문제를 논의키위해 여야대표들과 만날 계획은….

『국내문제는 해외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는게 좋다』 〈방콕=金東哲〉

▽ 한국일보 1996. 3. 5

통일원, 전직원 대상 전문분야갖기 운동

통일원은 6일 통일에 대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갖기」를 추진키로 했다.

통일원은 이에 따라 1차년도인 올해 핵문제, 주변4강, 金正日연구등 38개 분야에 5급이상 69명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기능직을 제외한 3백40여명의 직원을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통일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분야 갖기」운동에 투입된 직원들은 자료지원은 물론 관련분야 해외연수및 출장, 세미나참석 등에 우선권을 줘 통일분제 전문가로 양성할 예정』이라고말했다〈趙敏皓기자〉

▽ 세계일보 1996. 3. 8

北인권개선 촉구 국제사회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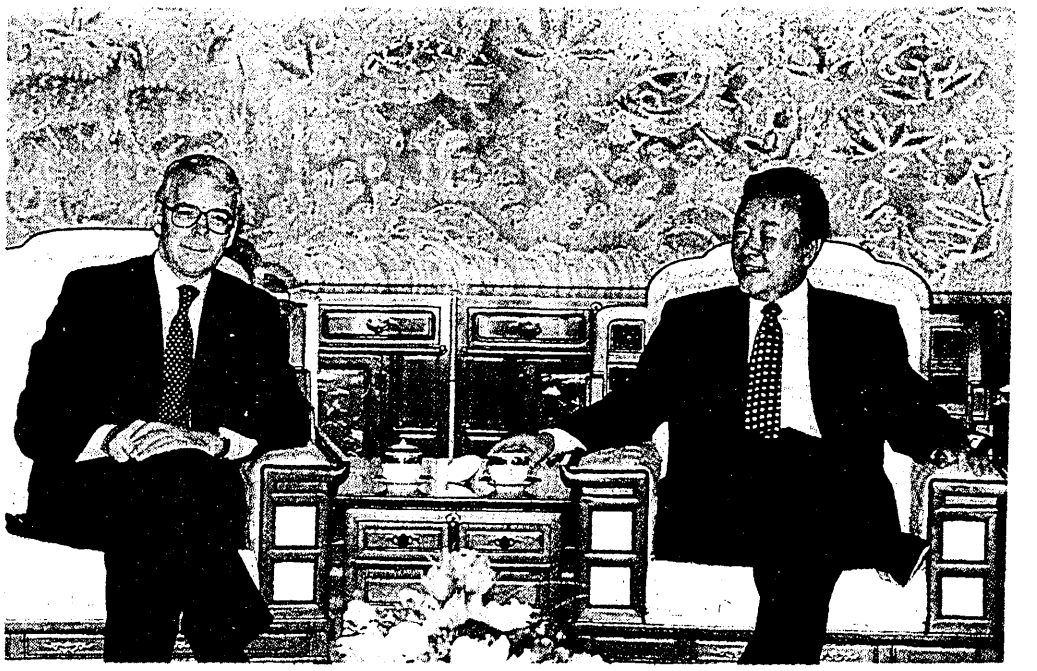
외무부

정부는 7일 美국무부가 금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초보적인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실종 사고, 반체제인사에 대한 가혹한 형벌, 강제노동 및 강제이주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이 동족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鞠貿然기자〉

▽ 세계일보 1996. 3. 6



韓-英 頂上대좌 金泳三대통령과 존 메이저 영국총리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朴柄祐기자〉

韓-英 經協확대 합의

金대통령-메이저회담 ASEM 성공개최 共同委구성

金泳三대통령과 존 메이저 영국총리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영국의 제2차 및 한국의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향후 회의의 입장과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韓-英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22개 항목의 발표문을 통해 무역및 투자분야의 장애를 제거, 양국간 무역신장 추세를 더욱 촉진하고 다자무역자유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민간분야의 투자증진을 위해 상호노력키로 했다.

金대통령과 메이저 총리는 한반도내 현 협정체제는 평화협정 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금년중에 각료급 수준의 韓-英과학기술위원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회담에서 메이저 총리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한 지지입장을 거듭 밝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金起弘기자〉

▽ 세계일보 1996. 3. 15

연내 「南北철도회담」 가능성

복원구간 용지매입 착수

북한도 亞洲횡단철도 원칙적 동의

건교부, 平統토론서 밝혀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남북한은 끊어진 철도복원을 위해 연내 남북철도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한을 잇는 철도를 복원하기 위해 용지매입에 이미 착수했으며 북한측도 철도연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咸大榮 건설교통부 종합계획과장은 이날 민주평통 자문회의(사무총장 朴相範)가 주최한 「범아시아 철도건설 구상과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에 참석, 『끊어진 남북한 철도 1백26㎞를 복원하기 위해 설계를 이미 마치고 용지매입에 들어가 내년중 완료할 것』이라면서 『북한도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TAR)연결과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철도연결공사에 착수할 경우 남북철도가 금세기내 완전히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철도개통시 2000년쯤에는 하마다 50만개의 컨테이너가 통과하게 돼 북한은 운송수수료만 7천만달러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趙敏皓기자〉

▽ 서울신문 1996. 3. 15

"분단 극복·통일韓國의 위상 설정

주변4强과 협력 필수적"

孔외무, 외교협회 강연

孔魯明외무

孔魯明외무부장관은 15일 『한반도 주변국과의 기존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孔장관은 이날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교협회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일·중·러 4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이후의 한국위상을 설정해나가는 데는 이들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孔장관은 또 『북한의 군사력에 의한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 불안정으로부터 오는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안정적인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孔장관은 대만해협의 긴장사태와 관련, 『지난 1일 푸케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金泳三대통령이 중국과 대만의 긴장 첨예화를 예견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李鵬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고 밝히고 『다음주 중국 방문시 양국 외무장관 회담등의 기회에 중국측과 대만해협의 긴장사태에 관해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李度運기자〉

▽ 세계일보 1996. 3. 21

中, 北-美잠정협정 반대

錢其琛외교부장 한반도문제 당사자 해결

내달 어업협정 실무회담

孔외무 北 在中한인납치막게 安全 촉구

北京서 韓中외무회담

【北京=鞠賢然특파원】중국은 20일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北-美간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남북한이 먼저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한국측에 공식 전달했다.

錢其琛외교부장은 이날 중국 北京 조어대에서 孔魯明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이 북한의 평화체제 전환방식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이날 회담에 배석했던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말했다.

孔장관과 錢부장은 이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남북한을 포함한 당사국간 접촉과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양국 외무장관간의 이날 합의는 한중 양국이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관해 남북한이 먼저 협의하고 추후에 미국 중국등 관련국이 이를 추인하는 소위 「2+2」 또는 「2+4」방식을 추진할 것임을 강력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孔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만사태와 관련해 대만사태의 악화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 대만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측에 공식 전달했다.

錢부장은 대만의 독립을 결코 허용할수 없는만큼 한국정부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孔장관과 錢부장은 양국 어업협정 체결문제와 관련, 오는 4월 서울 또는 북경에서 양국이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한-중 어업실무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孔장관은 북한이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사건과 관련, 중국내 한국인에 대한 테러-납치를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는 만큼 중국이 한국인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북한으로 납치된 安承運목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 경향신문 1996. 3. 16

北군사모험 포기 촉구

金대통령 空士졸업식 참석 치사

金泳三대통령은 15일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불안정한 체제속에서도 군사력의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하루빨리 군사모험주의를 포기하고 민족공영의 길로 나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44기 공사졸업및 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북한은 폐쇄의 빗장을 풀고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하며 이것만이 북한이 오늘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최근 공군력을 휴전선 부근으로 전진배치해 순식간에 남쪽을 기습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태세에 들어갔다』면서 『우리군은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어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또 『미래의 전쟁은 정보와 첨단 무기체계가 승패를 좌우하는 정보전쟁, 과학기술전쟁이 될 것이며 바로 공군력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공군의 정예화를 위해,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金學淳기자〉

▽ 한국일보 1996. 3. 18

南北국어학자 교류 검토

정부 통일大사전 집필 개시따라

정부는 남북한간 언어의 이질화를 막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온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사업의 하나로 남북 국어학자간 교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17일 『92년 시작된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사업이 올해부터 집필에 들어갔다』며 『사전편찬작업을 위해 남북한 국어학자간 교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북한 학자들과의 학문교류및 인적왕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작업에 들어가 표제어 선정을 마친 상태』라며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배제, 민족 정서를 집필에 최대한 반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炳讚기자】

▽ 서울신문 1996. 3. 12

통일고문회의 고문

金憲前부총리 위촉

金憲 전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통일고문회의 고문으로 위촉됐다고 11일 통일원이 밝혔다.

이로써 통일고문회의 고문은 모두 28명으로 늘어났다.

▽ 중앙일보 1996. 3. 19

"北 무모한 군사모험 경계해야"

金대통령 경찰大 졸업식 치사

김두우 기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8일 경기도용인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12기 경찰대학졸업식에 참석, 치사에서 『북한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그들이 체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미하원에서 『북한의 붕괴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이며 내정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절박한 시도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증언을 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졸업식에서 법학사 60명과 행정학사 59명등 1백19명이 학사학위 수여와 함께 경위로 임용됐다.

이날 대통령상은 여개명(呂開明·23·대구경상고졸)경위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최종혁(崔琮赫·22·대구덕원고졸)경위가, 내무장관상은 김상우(金相佑·23·광주문성고졸)경위가, 경찰청장상은 채용재(蔡鎔在·22·광주진흥고졸)경위가 받았다.

▽ 한겨레신문 1996. 3. 21

□ 공외무 중·미 연쇄방문 의미

베이징/강태호 기자

공로명 외무장관이 20일부터 10일동안 중국,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한-중,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주된 일정이 될 이번 방문에서 이른바 '뜨거운 현안'은 없다.

특히 중국의 경우 첸치천 외교부장과는 최근 두달도 채 안되는 동안에 세번째 회담을 하게 된다. 이번 회담이 외견상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대만해협에서의 중국-대만 중 실무회담을 열기로 해놓은 상태다.

이런 점들만을 보면 다분히 이번 공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장관 취임 이래 첫 방문이라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동북아와 주변 4강이라는 시야에서 보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의 이번 중국, 미국 방문을 주변 4강의 활발한 양자 외교 가운데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이 19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31일엔 첸치천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한다. 뒤이어 4월 16일에는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24~26일에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일본 방문을 마친 클린턴 대통령은 곧바로 옐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

주변 4강의 이런 정상외교는 그동안 정체상태를 보여온 동북아질서 재편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 중순 이후는 4·11 총선도 끝나게 돼 북-미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북-일 수교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한-중 외무회담이 그동안의 양국관계를 정치·외교 나아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안보차원의 확대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외무부 관계자들의 평가는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방문에 이어 24일부터 시작되는 공 장관의 미국 방문은 4월 이후 전개될 두나라간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이 주된 과제다.

활발해진 4강외교 적극대응

한-중협력 한차원 강화…미와 대북정책 사전조율

-미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 새로운 상황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재'에 나설 처지는 아니며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지켜왔다.

이날의 회담에서도 대만해협 위기를 낳고 있는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이 지역의 긴장고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론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또 한-중간의 어업협정 체결 문제는 공 장관의 방중 전에 양쪽 농림수산부 관리들 사이에 4월 중 실무회담을 열기로 해놓은 상태다.

이런 점들만을 보면 다분히 이번 공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장관 취임 이래 첫 방문이라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동북아와 주변 4강이라는 시야에서 보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의 이번 중국, 미국 방문을 주변 4강의 활발한 양자 외교 가운데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이 19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31일엔 첸치천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한다. 뒤이어 4월 16일에는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24~26일에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일본 방문을 마친 클린턴 대통령은 곧바로 옐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

주변 4강의 이런 정상외교는 그동안 정체상태를 보여온 동북아질서 재편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 중순 이후는 4·11 총선도 끝나게 돼 북-미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북-일 수교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한-중 외무회담이 그동안의 양국관계를 정치·외교 나아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안보차원의 확대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외무부 관계자들의 평가는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방문에 이어 24일부터 시작되는 공 장관의 미국 방문은 4월 이후 전개될 두나라간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이 주된 과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4월 이후 '연착륙'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는 북한간의 협상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로명-크리스토퍼 회담은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4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3자 고위협의회에서 협의하게 되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 서울신문 1996. 3. 23

"北軍備70%최전방배치"

휴전선 3개비행장에 미그機百20대"

金대통령, 상이군경회 간부와 오찬

金泳三대통령은 22일 "북한의 붕괴는 시기와 방법만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견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에 공헌해온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尹在喆회장을 비롯한 간부 1백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력결집으로 이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안정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10월11일부터 비행기가 없던 휴전선근처 3개 비행장에 미그17및 19기 1백20여대를 배치하고 미사일 등 군비의 70%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있다"면서 "북한은 또 하루에도 1백30차례 이상 우리나라를 뒤엎으려는 비방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穆熙기자〉

▽ 조선일보 1996. 3. 22

"식량難 북한 도발가능성"

韓美 군사정보 교류 강화키로

金대통령, 美태평양사령관 접견

韓-美 양국은 북한 내부 사정이 식량난 등 경제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일탈 현상의 만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며, 그같은 내부 위기의 결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 갈래의 대응체제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金泳三대통령이 21일 오전 조셉 프루어(Prueher) 신임 美태평양사령관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韓-美간 협력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눈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韓-美 양국은 첫째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도 신속히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韓-美간 군사적 정보 교류 체제를 더욱 긴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둘째로, 韓-美 양국은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해올 경우 이를 격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측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하고,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韓-美 양국은 이를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도록 연합 전력을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昌基기자〉

▽ 동아일보 1996. 3. 22

"경수로사업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기대"

權부총리 간담회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1일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북한의 대남태도변화 여하에 따라선 남북이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權부총리는 이날 울진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경수로지원사업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신뢰분위기가 축적되기를 기대하며 제네바 북-미 합의의 실천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지난해 12월 북한과 체결한 경수로공급협정의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달중 북한측과 연사보호 및 통행, 통신의정서 등 세부적인 후속 의정서체결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3. 22

中 "南北직접대화 지지"

李鵬총리, 孔외무에 北美잠정협정 반대 재확인

【北京=張寅鐵기자】李鵬(리펑)중국총리는 21일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이날 하오 北京(베이징)의 中南海(중난하이)에서 중국을 방문중인 孔鵬明외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동북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총리의 이 발언은 최근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北美잠정협정체결에 대한 중국의 반대입장을 명백히 한 것으로,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있어서 남북한이 먼저 협의하고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이 이를 추인하는 식의 「2+2」또는 「2+4」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孔장관은 李총리에게 『한반도문제 및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바란다』는 金泳三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한 뒤 『제3차 ASEM의 한국 개최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지원과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3. 26

통일 고문회의 초청 북한정세-안보 논의

金대통령

金泳三 대통령은 25일, 사회 각계 원로인사들로 구성된 통일관련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의 閔寬植(민관식) 의장을 비롯한 고문 25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최근 북한 정세와 통일-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金 대통령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너지난으로 인해 그들의 「주체」「자력갱생」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고 지적하고, 『북한의 어려움은 공산주의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군비우선시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金昌基기자〉

▽ 세계일보 1996. 3. 23

江澤民, 南北대화 중재사사

孔외무에 한반도문제 당사자해결 강조

【北京=柳賢然특파원】중국을 방문중인 孔鵬明외무장관은 22일 북경 中南海로 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을 예방,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江주석은 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들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대화를 중재할 용의가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孔장관은 정전협정 유지문제와 관련, 『북한은 현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미국과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있으나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남북한이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게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고 江주석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江주석은 대만 사태와 관련,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인만큼 한국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으며 孔장관은 『兩岸간의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孔장관은 또 2002년 한국이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국이 측면 지원을 해줄것을 요청했다.

▽ 중앙일보 1996. 3. 22

南北韓 환경정보 교류 촉구

金대통령 환경공동체 건설 5원칙 제시

김두우 기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1일 『나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 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를 비롯, 환경관계 장관·각계 대표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복지구상 발표회를 갖고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원칙을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금수강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남북한 환경정보·기술 교환과 환경감시체제 강화 등에 북한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또 『녹색 국민총생산 개념을 도입하고 교통·에너지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오염의 제거및 복구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정부 수범(垂範) ▶환경과 경제의 통합 ▶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 ▶사전예방및 오염자 부담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全)지구적 공동노력등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원칙을 발표했다.

▽ 서울신문 1996. 3. 25

韓·中 軍事교류 확대

"軍部지도자 왕래 정례화"에 北京측 긍정반응

中장성 5월訪韓… 구체 협의

【北京=李度運특파원】 정부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잠정평화협정 체결의도가 무산되어감에 따라 휴전선부근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확대, 이를 견제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중국을 방문중인 孔魯明외무장관은 江澤民국가주석과 李鵬총리·錢其琛외교부장등 중국 지도자들에게 한·중군사지도자간의 정기적 교류를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가 중국과의 군사적 교류를 강화하려는 것은 북한 견제와 함께 최근 대만해협사태로 중·미간의 대립이 확산,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한·중간의 군사채널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이는 또 다음달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일본방문기간중 발표하게 될 미·일 신안보협력방안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도 감안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의 고위군장성이 5월중 한국을 방문해 우리 국방부및 군관계자와 한·중군사교류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孔외무, 뉴욕거쳐 워싱턴으로

한편 孔장관은 24일 4박5일간의 중국방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떠나 미국 공식방문일정에 들어갔다.

孔장관은 25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26일 워싱턴에서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윌리엄 페리국방장관·앤터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보좌관등 클린턴 미행정부 고위안보관계자와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유지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신문 1996. 3. 26

"美 對北 외교·군사 접촉 南北韓관계 고려 추진을"

訪美 孔외무, 외교·국방에 입장 전달

【뉴욕=李度運특파원】 정부는 오는 4·11총선 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북한간 외교, 군사분야의 접촉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반드시 조화,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강조하기로 했다.

중국 방문에 이어 미국을 들른 孔魯明외무부장관은 26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안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孔장관은 이에 앞서 25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가 주최한 오찬 강연회에서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한반도의 확고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통일과정을 관리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과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인 면에서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3. 23

「한반도 문제」 韓·中협력 재확인

孔외무 訪中결산

南北대화 필요·「평화협정」 반대 일치

北京측도 美·中마찰 거중조정 기대

孔魯明외무부장관은 22일 江澤民국가주석을 예방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중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孔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江주석과 李鵬총리, 錢其琛외교부장등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정, 경제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중국측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 접촉이 긴요하다는 우리정부의 기본인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중국의 중재 역할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북한이 지난달부터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잠정(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중국은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배려에 부쩍 신경쓰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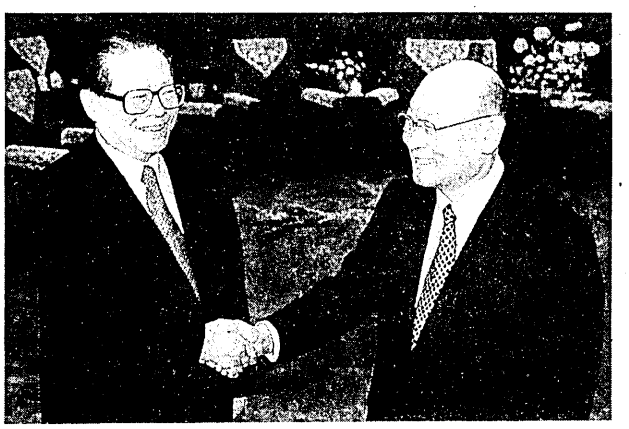
錢其琛외교부장관은 孔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적절한 원조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난해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남·북한과 중국의 3자 관계에 대한 정책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같은 다자간 기구 내에서의 협력관계는 매우 굳건하게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孔장관의 예방을 받은 江주석은 APEC을, 李총리는 ASEM을 화두로 꺼냈으며,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다자기구 내에서의 양국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함께 江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孔장관에게 대만해협의 긴장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원칙을 매우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孔장관의 방중기간 동안 미국은 니미츠 함음모함을 대만해협에 접근시키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사를 시사하는등 양국간에 최고의 긴장 국면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지도부가 孔장관에게 중국의 입장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밝힌 것은 孔장관이 방중이후 곧바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이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孔장관이 미국정부와 의회의 고위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孔장관이 그 같은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면, 다음달로 예정된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간의 이해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중국간의 대립에 한국이 거중조정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孔장관의 방중기간 동안 양국의 경제 협력 분야의 협의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李鵬총리는 한중기사업협력을 협의할 때 삼성등 우리나라 기업을 거명하고,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설명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 당국자는 『한중간에 경제교류가 확대될수록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도 커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양국간의 실질관계는 저절로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경제분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孔魯明외무장관(오른쪽)이 22일 상오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 양국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통신)

▽ 한겨레신문 1996. 3. 27

북-미 유해송환·미사일 수출제한 협상

남북대화 연계않기로

한-미 외무회담

【워싱턴=강태호 기자】 4월로 예정된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공로명 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정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개선은 남북한 관계 진전 및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따라 진행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한-미 공조를 전제로 두 나라 외무장관은 북-미간의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 송환협상과 북한의 대중동지역 미사일 수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은 남북대화와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4월부터 미군 유해와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회담에서는 4월 이후 북-미 관계를 비롯해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미-일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5월13~14일 한국에서 차관보급 3자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며, 공 장관과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런 긴밀한 공조체제 틀이 계속 강화 발전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미간의 협상이 예상되지만 이는 유해문제와 미사일 금수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어 협상 시기와 장소 문제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1996. 3. 28

對北 경수로 지원 사업 美에 재원부담 정식요청

孔외무-美국무 회담

【워싱턴=宋義達기자】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孔魯明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등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미국측이 기존의 重油(중유)는 물론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서도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징적일지라도 미국의 일정한 財源제공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재원부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수행중인 외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양국은 오는 4월중순 美-日 도쿄정상회담시 발표예정인 「美-日 신안보공동성명」 등과 관련, 페리 국방장관이 4월15~16일 이틀간 공식 訪韓해 한국측과 협의하기 했다.

▽ 세계일보 1996. 3. 28

美, 北붕괴대비 「군사준비」 착수

B52폭격기-核잠수함 이미 한반도배치

페리국방 내달15~16일訪韓… 연합방위력 강화 논의

【워싱턴=鞠賞然특파원】 韓-美 양국은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따른 북한의 對南도발에 대비, 군사적 측면에서의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중인 孔魯明 외무장관은 이날 美국방부에서 윌리엄 페리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현재 직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의 방위능력을 대폭향상시켜나가기로했다.

孔장관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페리장관이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문제와 美-日신안보선언문제등을 협의키위해 다음달 15,16일 이틀동안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비한 한-미간 구체적인 대응방안 내용이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지난해 7월 이후 북한의 붕괴와 대남 도발에 대비, 美 본토로부터 B52(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등을 한반도에 배치해 對한반도 전쟁 억지훈련을 실시해왔다』면서 『주한 미군은 이들 장비를 철수시키지않고 북한 도발에 대비한 가상 훈련을 계속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孔장관과 페리장관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와 관련, 주요 미군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소단계에서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보고 다음달 15일 페리장관 방한시 한-미간 SOFA개정문제를 집중 협의키로 했다.

孔장관은 또 경수로 비용분담문제와 관련, 『미국이 대북 중유 제공비용 부담금을 증액하고 경수로 건설자금의 일부를 부담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 세계일보 1996. 3. 28

"北붕괴 대책마련 시급" 공감

孔외무-페리국방 평양정세등 논의

식량난으로 체제이완… 예측불허 상황

對中정책 공조-「韓美行協」개정엔 이견

孔鐘明외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간의 26일(현지시간) 회담에서는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한-미 양국 공동 대응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미 양국이 對北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심각한 식량난과 체제 이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날 한-미 양측의 정세 분석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정세가 극히 불투명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측은 다만 한국측의 평가와 비교할 때 북한의 현상황이 심각하다는 쪽에 비중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른 남침 도발을 가상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美 하원 증언을 통해 "북한의 붕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북한의 조기 붕괴를 기정사실화 했다. 美국방부는 이 날 孔장관 일행과 회담에서도 대체로 럭 사령관과 대동소이한 평가를 했다는 후문이다.

孔장관 등 우리측은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자생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완돼 급작스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孔장관과 페리장관은 북한의 상황이 예측불허인 만큼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두 나라 장관은 또 북한 정세 파악의 어려움을 서로 토로했다. 페리장관은 "미국이 북한 관련 정보를 얻기위해 사람, 위성, 도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북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과 접촉이 쉽지않아 결여된 정보를 갖고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孔장관은 "한국의 경우 북한 탈출자나 중국을 무대로 한 대북정보 및 북한 노동당 간부 등의 외국에서의 언행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나 여러 갈래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孔장관과 페리장관은 이 날 대만 사태및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孔장관은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페리장관은 이와 달리 "중국은 대만선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등 이번 사태로 인해 얻은게 없다"고 반박했다.

孔장관과 페리장관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에도 장시간의 회담 시간을 할애했으나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한국측에 인계하는 시기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워싱턴=鞠賢然특파원〉

▽ 한국일보 1996. 3. 30

"한국 安保理이사국 책임 충실"

金대통령, 갈리접견

金泳三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오찬을 함께 하며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유엔의 역할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유엔안보리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대단히 긴요한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27

□ 워싱턴 한-미 외무회담 내용·성과

불협화음 조율 '공조'재확인

'남북관계 진전 우선' 일치…북-미회담 입장도 조정 순조

워싱턴/강태호 기자

이번 워싱턴의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4월 유해협상과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앞둔 사전조율 성격을 띤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정부 자세는 "우방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설적인 관여여야 한다"는 공로명 장관의 지난 15일 외교협회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일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의 하원 청문회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지만, 한-미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화답했다.

공 장관이 미국쪽에 대해 북한이라는 비행기의 추락을 막기 위한 '연착륙' 정책에 이해를 표시했다면, 미국 역시 남북대화 우선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이는 지난 1월 하와이 한-미-일 3자협의회를 전후해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삐그덕거리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두 나라 외무장관은 양국의 협력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회담은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체제가 탄력적이고 부드럽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그동안 한-미-일 공조체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난 데는 북한의 남한 배제전략이라는 측면과 함께 정부의 이른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갖는 경직된 자세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정부가 이런 남북대화 연계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대화 우선원칙이 북한의 고립 내지 고사전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의 자세 변화는 지난해 대북 쌀지원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실종됐던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 외무장관의 앞서 외교협회 연설과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있었던 25일의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체제의 불안정에 따른 위험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이 경수로 건설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며 △대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대북 쌀지원을 한 것 등은 이런 정책기조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미국의 유해협상과 미사일 협상이 남북대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협상의 '주고받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에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잠정협정 체결과 대북 추가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잠정협정의 절대불가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제재의 추가완화는 "미사일 기술 수출중지, 미군유해 송환,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처 등 미국의 관심사에 대한 북한의 생산적 대응과 연계돼 있으며, 동시에 남북대화와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쪽은 이들 가운데 남북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미 협상이 한-미 공조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번 회담의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 세계일보 1996. 3. 29

總選후 획기적 對北제의

정부검토 댐건설-농업기술지원등 골자

경색된 南北관계 개선돕게 식량제공 재개도 포함될듯

北、쌀회담 제의… 내달 北京서 접촉가능성

정부는 4·11총선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對北 제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의 대북 제의에는 북한의 미국 일본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심각한 식량난등 경제난을 해결할수 있도록 북한의 농업부조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제의내용에 북한의 홍수와 가뭄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천준설 △댐건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기술제공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중단해온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와관련, 중국 北京에서 남북당국자간 쌀회담을 재개할 것을 한국측에 제의해온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9월 제3차 남북당국자간 접촉이후 중단된 쌀회담이 빠르면 4월중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1996. 3. 31

北 작년 군사비 22억달러 지출

통일원 분석

북한은 지난 94년 예산 집행 결과、수입 1백93억5천만달러、지출 1백92억8천만달러로 7천3백51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사비 지출총액은 예산편성시 11.6%보다 다소 줄어든 11.4%로 22억달러가 쓰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원은 30일 북한은 지난해 4월 제9기 8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못해 94년 결산및 9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같은해 12월30일 발행한 「조선중앙연감 95년판」을 통해 94년 예산집행 결과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통일원 李浩제2분석관은 「7천3백51만달러인 재정흑자 규모는 93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북한 경제가 더욱 침체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具本永기자〉

▽ 동아일보 1996. 3. 30

클린턴 내달16일 訪韓

濟州서 韓美정상회담 최근 韓半島정세등 논의

클린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일 오후 발표했다。

金泳三대통령은 방한하는 클린턴대통령을 제주도에서 맞아 취임후 다섯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최근의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 경제 등 韓美간 협력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정상은 회담에서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에다 권력승계조차 확실치 않아 내부정세가 유동적인 북한의 정세를 분석하고 전개가능한 제반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또 최근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가 동북아정세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동북아의 전반적 지역정세도 협의할 예정이다。

클린턴대통령은 16일 오전 제주도에 도착、정상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떠난다。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일본(4월16~18일)과 러시아방문(18~21일)에 앞서 이뤄지는 것이다。

▽ 서울신문 1996. 3. 31

클린턴의 訪韓결정 韓國역할 중시때문

백악관대변인 논평

【워싱턴협】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배역을 하기 때문에 (일본방문을 위한) 4월15일 출발시간을 조정、『짧지만 중요한 방한』을 결정했다고 마이클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이 29일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4. 10

韓·美정상 DMZ 집중논의

16일 濟州회담 北도발 공동대처방안 강구

▽ 문화일보 1996. 4. 9

"金正日, 軍장악 못한듯"

權五琦부총리 "北기술자들 경수로 南주도원해"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防産학회 특별강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의 金正日이 총사령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말해 金正日이 북한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權부총리는 『金正日이 수시로 군부대를 방문, 시찰하는 것을 북한언론이 집중 보도, 선전하는 것도 金이 북한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말이다』고 밝혔다。

權부총리는 이와함께 『對北 경수로 사업을 위해 방북했던 韓電 부지조사 요원들을 만난 북한기술자들은 한국을 정말로 칭찬했으며 북한이 한국이 아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상대하지만 가급적 많은 기술자들이 남한서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긴장고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權부총리는 특히 KEDO사무총장단의 말을 인용, 『북한사람들은 우리 부지조사단이 일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점심식사를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먹거나 물건을 뛰어다니며 옮기는 것에 대해 매우 놀라며 뭔가 배우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상적이라는 얘기도 들었으나 북한 어딘가에도 우리와 같은 정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얘기가 통하는 바깥소식이 들어가면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북한이) 바뀔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산업촉에서 남북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金承炫기자>

▽ 국민일보 1996. 4. 4

「자유의 집」 신축 설계案 확정

지상4층 천5백평… 평화광장도 조성

판문점 자유의 집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형상화한 건물로 새롭게 지어진다。

조달청은 자유의 집을 새로 짓기로 한 통일원의 방침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담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吳平國)의 남북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형상화한 설계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담건축에 따르면 연건평 1천5백평 규모에 지상 4층으로 세워질 새 자유의 집은 1층에 남측 출입구와 이산가족 면회실, 2층에 남북 통로 및 자유왕래를 대비한 출입국 사무소, 귀빈대기실, 3층에 남북연락사무소와 다목적 예비실, 4층에 90평규모의 전망대 등을 갖추게 된다。

담건축은 이와함께 새로운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의 공터에 평화광장이라는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두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높이 20m의 기둥에 지붕만 얹어 놓은 파골라를 설치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담건축이 3~4개월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安秉宣〉

▽ 서울신문 1996. 4. 7

韓-美、北도발 대응책 논의

孔외무-레이니 要談

孔魯明외무부장관은 6일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 임무를 파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는등 정전체제를 파기하려는 도발을 하는데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孔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판문점에 자동화기를 소지한 군인을 투입한 것은 정전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며, 미국측도 북한에 대한 경고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레이니 대사도 최근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전협정체제의 변화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度運기자〉

▽ 동아일보 1996. 4. 16

南時旭씨등 4명 새통일고문 위촉

통일원은 15일 南時旭문화일보사장 孫在植전통일원장관 董勳전통일원차관 李世中한경운동연합공동대표 등 4명을 통일원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의 고문으로 새로 위촉했다。

두차례 회담·공동기자회견

클린턴 滯韓시간 크게 늘려

金泳三대통령

클린턴대통령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오는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측의 정전협정 무력화 도발에도 불구, 한국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천명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및 판문점 무장병력 투입사태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클린턴대통령의 체한시간을 당초 3~4시간에서 9~10시간으로 늘리고 정상회담도 단독및 확대오찬회담등 두차례 열어 한·미 공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尹汝雋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尹대변인은 클린턴대통령이 당초 16일 낮으로 검토된 도착일정을 앞당겨 16일 새벽 제주에 도착, 레이니 주한미대사및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金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긴박한 판문점 사태를 비롯, 한반도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李穆熙기자〉

▽ 조선일보 1996. 4. 9

"국군 최신무기무장 막강"

金대통령 「신문의 날」리셉션 참석

金泳三대통령은 8일, 최근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 등 군사적 도발 행위와 관련, 『최신무기로 무장한 우리 군은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사기도 매우 높다면서 『우리 국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신문 100주년 및 제40회 신문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연설을 통해 그같이 말하고, 『우리 軍은 韓·美간 확고한 공조체제 위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격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굳건한 안보의식과 합심단결』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켜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언론이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金昌基기자〉

▽ 국민일보 1996. 4. 18

南北국회회담 촉구
IPU참석 韓대표단

제95차 국제의원연맹(IPU)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중인 한국대표단(단장 鄭在文)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효화 선언및 무장병력 투입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대표단(단장 李몽호)에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와 남북국회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대표단은 또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국 및 아시아·태평양그룹 대표단등 30여개국 1백80여명의 대표들을 초청, 오찬을 베푼 자리에서 『월드컵 본선에 4회나 진출했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이 반드시 2002년 월드컵을 주최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鄭在湖〉

▽ 한국일보 1996. 4. 13

韓·美, 남북대화再開 논의

16일 정상회담때 한반도 安保협력강화 재다짐

【워싱턴=李相石특파원】 美국무장관이 11일 말했다.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美대통령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워런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클린턴대통령의 한국 일본 러시아 순방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약속을 강력하게 재다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판문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韓美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윈스턴 로드 美 동아태담당 국무차관보도 이날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대통령은 韓美 동맹관계를 재다짐할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 촉진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남북한간에 진실한 대화가 없는 한 미국은 북한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한간 대화가 진전된다면 美·北, 日·北 관계의 급속한 진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4. 11

권오기 통일부총리 옛 동독총리 면담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는 10일 방한중인 드 메지에르 옛 동독 총리의 예방을 받고 독일 통일과정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오찬을 겸한 이 면담에서 메지에르 총리는 權부총리에게 ▶종교기관(교회)의 역할 ▶통일이후의 문제점 ▶남북대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통일원측이 전했다.

메지에르 전총리는 90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독일 통일 때까지 옛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역임했다.

▽ 중아일보 1996. 4. 15

韓·美, 對北 지원 막후절충

당국간 대화통해 "판문점도발은 경제협력도 노린것" 판단

진로 朴부회장 訪北때 메시지 전달 가능성

안희창기자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통한 경협문제를 놓고 남북한과 미국간에 막후절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14일 한·미 양국정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를 어느정도나마 회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총선전 판문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미압박 전술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북한 의중을 파악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지난 6일부터 1주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진로그룹 박영수(朴永壽)부회장은 14일 중앙일보 기자에게 『당국의 허락을 받고 방북했다』는 말로 모종의 정부 복안을 북한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른 대북 관계자는 『북한이 당국간 회담에는 철저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설득 여하에 따라선 응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지원의 정도와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朴부회장은 이날 저녁 본지 기자와 만나 『이번 방북은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 사업협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 1996. 4. 15

「日 군사大國化」 다각대응

정부, 「美-日 新안보선언」 우려

▽ 중앙일보 1996. 4. 16

한국에 對北유연성 요구

총선전 韓·美이간 北비난태도와 달라

美의 對韓정책 변화

워싱턴=길정우 특파원

클린턴대통령 방한의 의미를 안보공약 재확인에 두고 북한의 한·미 이간 책동이 성공치 못할 것임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던 워싱턴 정가와 미국 주요 언론의 논조가 한국 총선 이후 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보다는 총선 이후 다소 편한 입장에서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게된 김영삼(金泳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한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새로운 목소리다. 남북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한다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지만, 한국 총선을 전후한 이같은 미묘한 논조 차이는 한·미 정상 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총선 직전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는 없다고 여러번 강조, 관문점 사태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조심스레 차단하려 했던 흔적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예상외로 선전(善戰)하자 총선 직후 미 국무부 윈스턴 로드 동아태 차관보는 클린턴 방한 관련 회견에서 북한의 책동이 계속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해 「폭넓은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목할 것은 이같은 발언에 대한 워싱턴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해석이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도 새로운 발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예컨대 작년말까지 백악관 동아태담당 안보보좌관으로 있다가 올해 미 평화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스탠리 로스는 일요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대화를 목표로 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보다는 한·미가 우선 논의한 한반도 평화 구체 방안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자문에 수시로 응하며 미 행정부의 정책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인물중 하나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과 주변 관련국들이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한 로스의 견해는 미 행정부 관리들 뿐아니라 워싱턴 북한 전문가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美·日선언 한국 양해 구해

北 국지전 도발땐 단호대처 의견모아

韓·美 국방장관 회담

서귀포=김민석·김성진 기자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당초 미·일 양국정상의 「신안보 공동선언」에 앞서 이 선언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측의 양해를 구하는데 있었다.

미·일 공동선언의 기본중 하나가 동아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하는 데 있는 만큼 인접 한국으로서는 이같은 변화가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외에 해양 수송로의 일본의존등 부담스런 점도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라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군국화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독도(獨島)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의제가 추가됐다. 총선 직전 있은 북한군의 관문점 도발사태가 그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에 따라 우선 북한의 도발 의도·재도발 가능성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안보공동선언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전쟁불가피론·전쟁불사론과 관련, 북한이 한·미 연합방위력의 위력을 익히 아는 만큼 전면 도발 가능성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내부의 어려움을 호도하는 차원에서 국지전등의 도발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단호히 공동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유엔사는 정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페리장관은 우발적 군사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다룰 북한과의 채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이양호(李養鎬)장관은 군사대화 채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북·미 장성급 접촉등은 한국 배제를 노린 북한의 술책이라며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보 공동선언과 관련해 李장관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노력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촉발될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李장관은 미국의 새 아태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한국의 능동적 협조가 절대 요구된다고 전제, 한국에 대해 지상군 중심의 군사건설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대일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기능분담에서의 조정필요성을 역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신문 1996. 4. 16

內일 韓·美정상회담서 논의

지역安保협력체 결성 추진

對韓 방위공약 확인 韓·美 고위회담

【서귀포=李度運기자】 한미 양국은 16일 金泳三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15일 저녁 제주 신라호텔에서 외교·국방 고위당국자간 회담을 갖고 정전체제 파괴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孔泳明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李養鎬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각각 가진 고위실무협의에서 최근의 판문점 사태와 관련, 한미 군사공조체제를 과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정전체제 준수를 강조하고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가 17일 美日정상회담에서 발표할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韓美정상회담을 비롯,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미일신안보공동선언에 따라 △자위대의 미군지원 활동범위가 「필리핀 이북(극동)」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늘어나고 △일본의 전시개념이 「일본유사시」에서 「극동(한반도 포함)유사시」로 확대되며 △유사시 주일미군이 자위대기지와 민간공항 및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군사력 확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동북아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지역안보협력체제 결성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4일 『탈냉전이후 대(對)蘇방어전선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미일안보협력체제의 효용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발사 등 패권화 경향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일본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꾀하려 하지만 인접국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金泳三대통령은 16일 제주도에서 일본방문에 앞서 방한하는 클린턴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미일신안보공동선언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정세 및 양국간 현안 등을 논의한다.

▽ 서울신문 1996. 4. 24

4者회담전 日·北협상 자제

金대통령, 日연립여당대표단에 당부

"韓半島안정 노력 지지"

日총리 親書

金泳三대통령은 23일 하오 청와대에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정조회장 등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방북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총리가 남북한 관계의 진전보다 일·북한 관계가 앞서가는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 만큼 일·북관계는 우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우리가 제안한 4자회담이 성사되기전 일·북협상을 자제해주도록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4자회담제의에 대해 하시모토총리가 즉각 찬성을 표시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尹汝雋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또 『한·일관계는 옳바른 역사인식의 토대위에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한·일간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역사연구위에 민간인도 참여해 양국 역사를 연구한다면 두나라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마사키회장은 『일·북관계를 남북한 관계보다 앞서 진전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마사키회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정부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지지하며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길 바란다는 등 우리의 4자회담제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시모토 총리의 친서를 金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孔魯明외무부장관은 이날 낮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을 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남북대화가 없으면, 한반도에 안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다음달 한중간의 어업회담이 끝난 뒤,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문제를 포함한 어업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李穆熙·李度運기자〉

▽ 동아일보 1996. 4. 25

"北-日국교정상화 남북관계와 병행"

權부총리

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4일 방한중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일본자민당정책조사회장을 단장으로 한는 일본연립여당대표단과 만나 대북정책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權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北-日 수교협상 등 북일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남북관계개선과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배석했던 金景雄통일원대변인이 전했다。 權부총리는 韓美의 4자회담제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제안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4자회답을 수용하도록 일본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신문 1996. 4. 27

"北 4者회담 결국 수용할것"

金대통령 獨신문 회견

【베를린·본】金泳三 대통령은 북한이 결국 한반도 4자회담 제의를 수용할 것이며 한국도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가 26일 보도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전날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미관계를 이간질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이 현재 지연작전을 펴고있으나 결국 4자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대북 원조제공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도움을 줄 용의가 있으나 북한이 자신과 한국정부에 대한 비방과 폭력혁명 선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원조제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43년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4자회담 구상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당초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때 제의하려 했으나 제의에 무게를 싣기 위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때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일본에 4자회담 제의를 미리 알렸으며 북한에도 제의 이틀전 인도네시아를 통해 사전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4자회담 제의를 검토해보겠다는 북한측의 입장 표명과 관련,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 제의를 수용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확약에 비춰볼 때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단독협상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金대통령은 또 『고립정책을 펴고 있는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1백%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북한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으며 정치도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북한군의 도발행위도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은폐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도발행위가 지속되는한 북한에 대한 원조제공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金泳三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해 정부가 종교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의 방북을 지원하고 있으나 남북한 국민들간의 교류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孔魯明 외무장관과 權五琦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한국내 과격세력, 특히 과격학생들에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공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金대통령의 한 정치보좌관은 한국내에 북한 체제에 호감을 갖고 있는 국민이 10~15%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게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보안법 규정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Ⅳ. 대북 식량지원

▽ 한겨레신문 1996. 2. 1

□ 미 식량지원 방침 배경

북 핵동결 이행 따른 '응답'

강태호 기자

미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나선다는 방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방식까지 결정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대남자세 변화를 조건으로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 남한 정부엔 '나쁜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쪽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미국의 대북지원 방침이 남한쪽의 정책에 '타격'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만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내용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게다가 미국으로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의사를 밝혀왔고 예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하와이 3자협의회를 앞두고서 미국은 구체적으로 잉여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주요한 대외원조수단인 미 공법-480호에 따른 지원을 대북식량지원의 한 방안으로 갖고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미국이 대북지원에 나서더라도 지금 시점은 곤란하며 미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안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쪽이 "이번 협의회에선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한 것은 미국쪽의 대북지원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좀더 기다리지 않고 한국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는 시점에 대북지원 방침을 결정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지난 하와이 협의회에서 대북식량문제와 함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된 것은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핵동결 이행조처의 유지였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이 미국의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중유제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일반사찰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선적돼야 할 1월분 중유 4만t이 전달되지 않고 있음에도 30일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과 임시·일반사찰에 합의했다. 지난 93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그 뒤 이행을 유보한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해 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완전복귀를 뜻한다. 미국 이번 식량지원 방침은 북한과의 주고받기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 세계일보 1996. 2. 1

美、對北쌀 추가지원

「세계식량계획」통해 2백만弗 규모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구를 통해 약 2백만달러 규모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세계식량계획은 이에따라 지난해말 잠정 폐쇄했던 평양사무소를 조만간 다시 개설, 미국 등이 對北식량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을 쌀 등 현물로 바꿔 북한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리 정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의 대북 지원을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의 규모와 시기 및 재원마련방안 등에 관해 공식 결정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할 경우 그 규모는 수백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鞠賢然기자〉

▽ 조선일보 1996. 2. 2

日도 北쌀지원 추진

日紙보도

【東京=李革宰기자】 日정부는 유엔을 통한 對북한 쌀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日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쌀지원은 자제하는 대신,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기구를 통한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1996. 2. 3

세계식량정상회담 11월 로마서 개최

【로마 외신종합】 세계식량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식량정상회담이 지난 74년이후 처음으로 오는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일 발표했다.

이번 식량정상회담에는 1백74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크 디우프 FAO사무총장은 이날 로마의 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식량부족과 곡물가격 급등이 지구촌을 기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아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우프 사무총장은 오는 11월의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는 인구증가, 식료품 가격상승,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2. 3

國赤 北식량 담당자

"對北 식품원조 중단땐 3개월내 영양실조 사태"

【제네바 외신종합】 국제적십자연맹의 한 북한 식량문제 담당자는 2일 북한은 식품원조가 중단될 경우 2、3개월내 심각한 영양실조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연맹과 赤十字社의 평양사무소 소장 피에로 칼비-파리세티씨는 제네바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북한이 작년 대홍수로 유실된 농지를 복구하지 못해 올해 추수가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비-파리세티 소장은 『먹을 것이 충분치 못해 주민 전체가 위험한 지경』이어서 『지금 식품원조가 중단된다면 2、3개월 내에 대규모의 심각한 영양실조 사태가 발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제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 의사」가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의하면 작년 12월말 의학적 영양실조 상태의 어린이는 15명이었으나 1월 중순에는 90명으로 늘어났다.

▽ 동아일보 1996. 2. 1

종교계등 대표 百여명 北 수재파악 訪北신청

종교계 민족단체 학계 문화계 등 각계 대표 1백여명으로 구성된 통일광복민족회의(의장 宋月珠조계종총무원장)는 31일 낮 공동대표단 회의를 갖고 북한의 수재현실 파악과 남북 종교교류 실현을 위해 대표단이 전원 방북키로 결정, 빠른 시일내에 통일원에 방북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교계 宋조계종총무원장, 천주교 朴弘서강대총장, 개신교 趙喜祿범종단남북교류추진협의회회장, 유교 崔根德성균관장, 천도교 金載中교령, 대종교 金善積총무원장, 韓陽元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朴英俊독립유공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대표중 한사람인 원불교 趙正勤교정원장은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방북신청서는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1996. 2. 2

주변4強 對北지원 속셈 제각각

배명복 기자

대북(對北)식량지원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4강의 입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부터 서로 다르다. 미국은 올춘궁기를 내다보며 「위기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일본도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며 느긋하게 보고 있다.

북한식량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강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입장차는 북한과 관련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데서 비롯하는 측면이 크다. 각자 자기 잣대로 북한의 식량난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원내용이나 방식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명분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란 점에서 일치하고 있지만 지원을 통해 노리는 속셈은 제각각인 것이다.

주변4강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세나라가 정부차원의 직접지원을 했다.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유상15만t과 무상15만t등 1차로 쌀 30만t을 제공한데 이어 10월 2차분 20만t을 유상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모두 45만t이 선적돼 북한내 각 항구로 실려나갔다. 북한과의 수교교섭재개를 앞두고 보상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완화를 노리는 측면이 크다. 수교협상용인 셈이다.

중국은 수재구호 차원에서 3백60만달러어치의 곡물을 직접제공하는 것으로 일단 입막음을 했다. 러시아의 경우는 더욱 보잘 것 없다. 지난해9월 담요·의약품·생필품 등 20만달러어치를 성의표시하는 것으로 끝났다. 최근 중국이 20만~40만t규모의 곡물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설에 불과하다. 북-중관계나 중국자체의 식량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게 외무부 분석이다.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북지원은 혈맹으로서의 옛정을 무시하지 못한 체면치레용인 셈이다.

한국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은 지난해10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2만5천달러를 간접지원한데 이어 금명간 1백만달러 정도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체제를 개방사회로 이끌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 유지에 대한 성의표시며 관계개선을 앞둔 선물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선거를 앞두고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미국내 비정부기구(NGO)관계자들의 압력을 무시하기 힘들거라는 내부 이유도 물론 있지만 재선을 노리는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다독거리기」란 측면이 강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美·日 식량難 걱정하며 관계개선용 '선물'

中·러 "아직 여유"… 옛情 생각 체면치레

▽ 세계일보 1996. 2. 3

北홍수피해 원조 독일에 공식요청

【베를린=연합】북한이 독일정부에 대해 홍수피해 원조를 공식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독일녹색당(DPK) 전당대회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인 북한노동당 대표단(단장 당중앙위원 임성필)은 지난달 31일 독일당국에 대해 홍수피해 실상을 설명하고 이같은 공식원조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 1996. 2. 3

"北 50만수재민 식량 의존"

외부 원조에만

세계식량기구 북한담당관 밝혀

【워싱턴=申相鎭특파원】북한은 작년 8월의 대홍수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 50만명의 식량을 전적으로 외부원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세계식량기구(WFP) 북한담당관이 2일 밝혔다.

작년 11월4일부터 북한 현지에서 식량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WFP의 북한담당관인 트레틀 페이지씨는 북한의 식량난이 수해지역뿐 아니라 전지역에 걸쳐 심각하며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페이지 담당관이 본사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황해남북도와 평안도등 수해지역은 북한의 곡창지대중 하나로, 이 지역 집단농장 소속 수재민들은 1인당 1년분치 식량인 2백kg의 식량을 수확기에 한꺼번에 지급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배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페이지씨는 이어 수재민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데다 땔감을 구하지 못해 혹한기에 폐렴 천식 인플루엔자가 만연하고 있으나 의약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페이지씨는 『외부에선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나 북한은 현재 수재민들의 식량을 전적으로 외부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반주민들도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는데 필요한 쿠폰을 가지고도 물건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작년 11월 WFP의 중국담당관에서 북한식량지원을 담당하는 북한담당관으로 자리를 바꾼 페이지씨는 WFP가 작년 11월 쌀 5천1백40t을 지원한 이후 스국제적십자사 3천7백59t 스카리타스 자선단체 1천4백t 스스위스 8천t 스러시아 20t 스시리아로부터 밀과 보리 4만t이 북한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平壤에 상주하고 있는 4명의 WFP 직원이 피해지역 식량배급시 현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북한현지에서 실시된 영양실태 조사자료가 로마의 WFP본부에 전달됐다면서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구조적 문제와 홍수피해로 야기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WFP의 평가가 과장됐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그런 보고는 들은 바 없다』면서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 1996. 2. 3

"北, 기아상태 아니다"

日외무성 대변인 발표

【東京=聯合】일본은 북한이 飢餓(기아)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으며 재정원조나 긴급 식량지원을 할 새로운 계획은 없다고 日외무성이 2일 발표했다.

하시모토 히토시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식량사정이 심각하나 그것으로 기아가 야기되었다고 말할수 있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2. 4

식량 추가지원

北韓, 日에요청

【東京=연합】북한의 李成大대외경제위원장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서 일본이 추가로 식량을 원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미국도 경제제재를 하루빨리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중인 李위원장은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쌀 50만t은 수재민에게 대부분 무사히 배급됐다면서 가능한한 많은 쌀을 추가로 원조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국간 지원보다는 일본이 직접 지원해주는 2국간 지원확대를 북한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金正日의 국가주석 및 당총비서 취임과 관련,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우나 金日成사망 2주년인 올해 탈상이 끝난 뒤가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이르면 오는 7월 취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조선일보 1996. 2. 3

국제기구 통해 北지원

美, PL480은 배제

【워싱턴=聯合】美국가안보회의(NSC)는 미국의 對北 식량지원과 관련해 美公法(PL) 480호를 활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 美소식통이 2일 전했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이 美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되 한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PL-480은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PL-480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美잉여농산물 제공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세계일보 1996. 2. 4

美, 對北 식량지원 강행

정부차원 한국자제 요청 거부…2백만 弗 규모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무상제공 방식

【워싱턴=申相鎭특파원】美 국무부는 2일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호소에 따라 북한수재민 구호와 관련, 2백만달러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클린 데비스 임시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홍수로 농경지의 상당부분이 유실돼 광범위한 식량부족과 영양실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홍수로 기존의 심각한 식량난이 더 악화돼 WFP는 금년도 부족분을 1백만t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지원은 美국제개발처(USAID) 소속 외국재난지원국(OFDA)이 식량구입을 위해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3일 미국이 韓·日 두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2백만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키로 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은 미국측 결정이 1일 양국정부에 통고됐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996. 2. 4

對北독자정책 "신호탄"

美 추가 식량지원 의미

北끌어안기 가속…한국반대 불구 강행

미국정부의 이번 對北지원 결정 발표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본격화됨을 알린다는 신호탄이라 할수 있다. 특히 『대북지원은 한국정부와의 협의하에 결정하겠다』던 미국이 한국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원 결정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북한 끌어안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추가지원은 지난달 한순부터 예견돼 왔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예상보다 일렀고 한국정부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미국정부는 발표 하루전인 지난 1일(미국시간) 한국측에 지원방침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측은 지난 1월 24,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韓·美·日 대북정책조정협의에서 美공법(PL)480에 따라 2백만달러 상당의 잉여농산물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로 우방국을 지원해 왔던 PL480에 근거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간접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미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달 27일 駐美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한국이 PL480에 근거한 대북지원을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한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처럼 대북지원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미국 나름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訪韓중인 앤서니 레이크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미 정부및 외부의 한반도전문가 10여명을 불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가졌다.

이들은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핵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식량난·경제난 등으로 북한정권 자체의 위기가 발생한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책임자를 핵전문가인 로버트 갈루치 대사에서 아시아통인 로드 차관보로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미국관리들은 북한경제의 추락보다는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하여 북한 핵동결 및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북 추가지원은 바로 이같은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추가 경제제재 완화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朴仁奎특파원】

▽ 동아일보 1996. 2. 5

美, 北식량 추가지원 시사

WP紙 보도

【워싱턴=李載昊】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2백만달러어치의 식량은 상징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별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차관보가 『북한에 대한 2백만달러어치의 식량제공은 북한이 오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만큼의 대규모의 식량 제공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로드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식량제공은 (앞으로) 한국 일본 미국이 완전히 합의해야 할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드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2백만달러어치의 식량제공은 『아직도 「땅콩」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그것은 상징적이고 인도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로드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추가 식량제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명한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세계일보 1996. 2. 6

민간단체 對北지원 자제요청

통일원 "韓赤으로 창구단일화" 공문발송

정부는 국내 일부 종교 및 사회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최근 80여개의 종교및 사회단체들이 대북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창구단일화정책에 반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부 종교 및 민간단체들이 최근 중국등 제3국에서 북한측과 접촉을 갖고 각 단체가 소속한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직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종교인 및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을 위해 북한측과 관문점에서 접촉을 갖거나 방북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趙敏皓기자〉

▽ 동아일보 1996. 2. 4

北외교부 美강경비난

"식량원조 구실 內政간섭"

【東京 AP聯】미국은 북한에 현재의 대해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체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북한 외교부가 2일 비난한 것으로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하와이에서 최근 韓美日간에 열린 회담에 언급하면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식량부족은 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발언한 것을 비난했다.

이 통신은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만일 미국이 인도적 원조의 구실아래 북한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북한중앙통신 보도

北정부-軍部 분열 시인

▽ 동아일보 1996. 2. 9

외국 식량원조 받지말자

軍때문에 여러문제 난관

軍강경파 외교부

뉴욕타임스 보도

【뉴욕=李圭敏】북한은 군부내 강경파의 주장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외부 구호기구들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원조를 받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8일 보도했다.

타임스지는 북한내부의 이같은 결정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뉴욕과 제네바의 북한 외교관들은 올 하반기에 다시 식량제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주 평양에서 북한외교부 崔수헌부부장(차관)이 국제구호기구 대표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군부의 이같은 결정을 전달했다며 북한내부에서 정부와 군부의 분열을 시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최부부장이 「안팎의 군대」 때문에 문제들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며 여기서 내부군대는 북한군부를 말한 것이고 외부군대란 한국군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전했다.

작년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외부 구호기구의 북한내 시찰을 허용했었는데 조사요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이 현재 극도로 심각한 식량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최악의 기근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세계일보 1996. 2. 1

泰國쌀 50만톤 北韓, 구매타진

【방콕=聯合】북한은 작년 여름 홍수로 인한 식량위기의 해소를 위해 태국에 50만t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고 상무부의 한 관리가 8일 말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지난달 태국으로부터 쌀을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구매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1996. 2. 6

"北韓, 국가적 기아상태"

소말리아-앙골라보다 열악

홍콩紙 보도

【北京=金星踏특파원】지난해 홍수로 「국가생존능력」에 치명타를 맞은 북한은 현재 국가 자체가 「기아」 상태에 처해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4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 국가의 기아」라는 제목의 전면 집중보도를 통해 『2천3백만 북한주민은 올 겨울 식량과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혹한과 싸우고 있으며 그들은 잔혹한 권력층의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라면서 최근 북한을 여행하고온 스웨덴 언론인의 말을 인용, "사실상 모든 산업이 정지돼 있는 북한의 실정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모잠비크 등보다 더 열악한 상태"라고 본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최근 平壤시민들도 식량배급이 심각하게 삭감돼 지속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으며 연료가 절대부족해 일부 절망적인 주민들은 성역화된 金日成 生家의 나무껍질까지도 벗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식량자급자족능력은 지난 8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이 북한에 식량대금 등을 硬貨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은 절망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특히 「테러국」으로 낙인찍힌 국가이미지와 부채상환능력 부재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차관이나 지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랫동안 적국으로 간주해온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원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2. 7

"유엔, 對北 추가 지원검토"

1차 25개국서 2천8백만 달러 모금

【워싱턴=聯合】유엔을 주요 통로로 한 국제사회의 對북한 추가지원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관여하는 한 美관계자는 5일 유엔이 지난해 9월 착수한 구호계획에 따라 지난달 23일 현재 전세계 25개국 정부 등으로부터 모두 2천8백만달러 상당을 모은데 이어 『2차 구호 프로젝트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이 이미 대북 추가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본도 식량재도 처음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趙敏皓기자〉

▽ 동아일보 1996. 2. 9

美, 北쌀지원 예정대로 추진

국무부 "北중단요청 진의 파악"

【워싱턴·東京聯】美정부는 8일 북한이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식량지원사업을 더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최근 발표한 2백만달러의 대(對)북한 식량지원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대북한식량지원을 위한 그동안의 북한측 호소에 대해 국제적 반응이 별로 없다는 점이 제2라운드 지원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이유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측이 국제원조의 중단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언급, 『북한의 식량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는 양동작전인지, 또는 군부의 반대때문에 나온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현재 관련국과 국제기구들을 통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2. 10

北군부 식량원조 반대 박길연 유엔대사 밝혀

도쿄=이철호 특파원

박길연(朴吉淵)유엔주재 북한대사는 8일 북한이 최근 각국에 식량지원 요청을 더이상 하지 말도록 유엔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중단요청이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朴대사는 북한군부가 지난해 여름 수해이후 국제원조를 받아들이는데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이 통신은 뉴욕발로 전했다.

▽ 한겨레신문 1996. 2. 10

□ 북 식량원조중단 요청 배경

남한정부 '방해' 부각전략 추정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지난해 가을 북한이 바깥 세상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당시 평양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교부 중심의 온건파와 군부 중심의 강경파 사이에 심각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온건파들은 이제 김정일 새 정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부에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면 커다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강경파들은 별 소득없이 자신들의 어려운 부분만 노출하게 된다면서 이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8일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북한의 한 고위외교관은 북한이 다시 군부의 반대로 추가식량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 뒤에 전개된 사정들을 보면 군부 강경파들이 주장한 대로 돼 버렸다"면서 "북조선에 대한 식량지원이 말들만 요란했지 별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밝힌 이 외교관은 특히 남쪽 정부가 계속 '방해'해왔다며 심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내부적 이견까지 거론하며 식량지원중단을 요청한 것은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2백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미국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남쪽 정부를 격렬히 비난한 북한의 태도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식량지원 문제가 또다시 남북관계의 냉각에 커다란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가을 쌀지원 문제로 남북이 협상을 벌이고, 그 뒤 상당한 화해기운이 돌다가 쌀 수송선의 인공기게양 사건과 우성호 납북사건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차가워졌던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현 상태로 지속될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남한은 총선정국에 대북 화해무드를 이끌기 어려운 형편이고 북한 역시 외부의 비판을 유연하게 수렴할 여유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1996. 2. 10

北, 美와 직접대화 속셈

「군부 식량거부」 발언 왜 나왔나

군부 앞세워 韓美 압박

관리들 군부에대한 불만 있을수 없어

수해이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방위 「구걸외교」를 펼쳐온 북한이 쌀문제도 미국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군부가 외부원조를 거부해, 국제기구의 구호물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崔수헌 북한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은 북한의 이런 자세변화를 공식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보관계부서들은 9일 뉴욕타임스 8일자가 전한 崔의 발언 진의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한미·일 3국의 지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崔의 발언은 「클린턴 이 직접 나오라는 소리없는 외침을 달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우리 군대는 수해지원문제가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불순세력들에 역이용된다고 우려했다」며 「인도적인 지원을 정치화하면 자체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우리가 할 바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국제지원거부 움직임은 곧 가시화할 전망이다.

북한은 세계식량기구(FAO),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식량계획의 수해조사단에 신의주 희천 은파등 수해지역을 공개했고, 구호품이 전달되는 전과정을 감시토록 허용했다.

그러나 金日成시대엔 상하기 어렵던 「굴욕적인」 양보를 통해 얻은 국제기구의 지원규모는 2천만달러에 그쳤다. 북한의 숱속 군부의 태도를 비난한 사실은 의혹스러운 대목으로 보인다.

崔부부장이 공공연하게 「군부」를 내세워 양보를 받아내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개설협상에서는 「군부가 외교행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외교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군부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金正日이 군을 확실하게 장악했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崔부부장의 발언은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군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방과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의 불만이 언제 불거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위협성발언은 북한내 온건파의 입지강화,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의도」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다. 북한은 쌀문제에서 북한체제의 위기를 담보삼아, 미국을 지렛대로 한국을 움직이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金潢光기자>

▽ 세계일보 1996. 2. 11

"北, 해외식량원조 계속희망"

세계식량기구 北담당관 밝혀

【워싱턴=申相一특파원】북한정부는 현재 수재민들의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해외원조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구호단체에 더 이상의 지원노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서방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세계식량기구(WFP)의 트레블 페이지 북한담당관이 9일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平壤에 상주해온 페이지담당관은 이날 본사에 해외원조를 바라는 북한당국의 입장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서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식량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뉴욕 타임스등 세계 주요언론들은 5일 구호단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외교부 최수헌副부장이 평양에서 구호활동을 진행중인 국제기구 책임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원조노력을 중단해달라는 북한정부의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해외원조를 요청해온 북한정부의 정책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일 최부부장과의 면담에 직접 참석했다고 밝힌 페이지담당관은 당시 최부부장이 일부 구호단체들이 북한당국과 사전협의도 갖지 않고 구호캠페인을 벌이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약간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구호노력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은 한 바 없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996. 2. 13

캄보디아, 北에 쌀지원

50톤…泰선 요청거부

【프놈펜·방콕=AP연합】캄보디아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50t의 쌀을 제공했다고 국영 TV가 12일 보도했다.

국영 TV는 캄보디아의 이같은 행동은 북한이 과거 캄보디아에 제공한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동시에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국은 지난해 북한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13만8천t을 포함, 63만8천t의 쌀을 제공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이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1996. 2. 11

국제기구원조 北 "선별 수용"

유엔주재 北대표부 밝혀

【뉴욕=연합】북한은 식량원조와 관련, 『국가간의 쌍무적 지원은 종전과 같이 받아들이되 국제구호단체들의 원조는 그 규모나 성격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구호단체들의 원조 수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외부에 식량지원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군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적대국가와 불순세력이 식량지원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려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치제도의 파괴를 기도하려 하는 것도 원조 중단을 요청한 이유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1996. 2. 13

泰, 對北쌀지원 검토

수마코사무총장 "인도적 차원에서"

【파리=특】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데 대해 태국정부가 지난해 태국쌀 수출 제한 물량 중 13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마코 사무총장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93년에 수출한 쌀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태국쌀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해 쌀 수출 제한 물량 중 5만톤을 이미 북한에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이 실현되면 북한에 지원되는 쌀은 모두 18만톤에 이르게 된다.

▽ 조선일보 1996. 2. 16

北에 2백50만톤 지원

식량난 심각… 지원

【워싱턴=특】식량난이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2백50만톤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이 14일 밝혔다. 마이클 모시 WFP 대변인은 식량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WFP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양이 지난해에 지원했던 6백50만톤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주민 중 1백60만명이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2. 15

美, 對北식량지원 전제 대북 간소화

「미지원」론 불식 노력

6개분야 해소

【워싱턴=특】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과정의 6개분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등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밝혔다.

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하되 지원된 식량이 북한 군부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방법=지원된 식량이 북한 군부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된 식량을 북한 주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북지원 현황=지난해 북한에 지원된 식량은 모두 93만톤이며 이 가운데 미국이 지원한 것은 2만톤이다.

▶대북지원 전제조건=미 정부는 지원된 식량이 북한 군부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협의 방법=미 정부는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 대상=미 정부는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 내용=미 정부는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 결과=미 정부는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화일보 1996. 2. 16

北주가지원 호수할 기로

國赤-赤新月社

【제네바=聯】북한 수재민을 위한 非정부차원의 원조활동을 조정해온 국제적십자연맹(IFRC)과 적십자사(赤新月社)는 15일 앞으로 북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의 제공을 호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FRC와 회원국의 적십자사인 적십월사는 북한측이 아직도 기타 인도주의기구와 대해 더 이상 국제적인 원조를 요청하지 않도록 요청한 후 북한적십자사와 평양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IFRC는 작년 가을 홍수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 외국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북한정부가 당장 이로 기아퇴는 구호물품과 기금은 상임필로 처리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IFRC에 적십월사가 2주 전 평양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전달받은 북한측의 추가원조호소 소문은 지역적인 여파의 지원이 적십월의 북한지를 알려지길 것이라는 북한 정부내 강경파들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로 보여지고 있다.

외국관들은 IFRC 등이 추가 원조를 모색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 새로운 변화가 없을 것이로 확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IFRC는 1백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북한수재민에 북기 위한 4백30만달러의 모금운동을 전개, 금년초까지 약 3백40만 13만명의 기금을 모아 약 게 북한 식량 회구부 등을 제공했다.

▽ 세계일보 1996. 2. 16

북한 식량부족 심각

아키시 사마코장 "北韓서 지원중단 요청"

【도쿄=田鎭一특파원】유엔 인도주의국장을 겸임한 아키시 아사코(明石康) 아키시사마코장은 15일 아키시 사무총장이 북한측 요청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키시 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에서 "아직 북한측으로 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것이로 판단되지만 북한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키시 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에서 "아직 북한측으로 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것이로 판단되지만 북한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이 현재 아직 지원을 전제조건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요청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아직도 지원을 전제조건로 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군부가 아직도 인도주의 원조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2. 21

홍수피해 전년·가뭄 80% 복구

金國淳 "80% 복구"

【北京=聯】북한은 지난해 홍수로 파괴됐던 상당한 수준을 이미 가뭄과 전년 80%를 재건했다고 최근 평양을 방문한 일본 사회당 소속 후카다 하지메 의원이 20일 밝혔다.

후카다 의원은 이날 북경 기차 도중 기자들에게 밝혀 기간중 만난 金國淳 북한 부총리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북구한정에 신중한 전의 진전이 이루졌다"고 말한 것이로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2. 25

"北식량난은 失政"

아태 FAO본부서

【아태본부=聯合特】아태지역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식량난이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자연재해 보다는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FAO는 최근 아태지역 본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수급사정은 이미 예년보다 훨씬 악화한 상태였다며 이것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식량수급을 위해 농지의 전산화를 서두르는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2. 23

"北, 지원식량 軍에 분배"

日 적십자 휴전선 인근 강원도 집중배급

【東京=李海기자】 북한이 지난해 식량난을 명목으로 일본 등에서 지원받은 쌀을 일반 주민보다는 군용으로 우선 분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日적십자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日적십자에 따르면 작년 10월 일본이 북한에 2차로 지원한 쌀 15만t의 분배지역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4만1천3백t ▲자강도 2만8천5백t ▲함경남도 2만3천t ▲평안북도 2만5백t ▲평양 1만1천t ▲평안남도 1만t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군사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병력이 대치중인 강원도에 쌀을 집중 분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일반 주민보다 군사 목적에 우선 분배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일본 등 외국에 쌀지원을 요청하면서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우선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표적인 수해피해지역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등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 조선일보 1996. 2. 23

北 2백50만명 餓死위기

FAO 분석 올 식량부족량 1백91만t

【東京=李革宰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1백91만t에 달하고, 주민 2백50여만명이 아사 영양실조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日아사히신문이 22일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FAO와 WFP가 지난해말 북한의 수해 및 식량사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수요는 5백99만t이나, 제도적인 결함으로 부족분은 1백91만t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어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어린이 2백10만명, 임산부 45만명이 아사의 위협에 처한 상황이며, 자강도-평안북도 황해북도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1996. 2. 27

北赤, 현금지원 요청

韓赤에 쌀이외 라면-담요는 거부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는 26일 북한적십자회가 남한이 제공하는 대북(對北)수재구호물자중 라면등 가공식품과 담요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북적(北赤)은 이와 함께 한적(韓赤)이 희망하는 수재물자의 육로수송과 한적 대표단의 북한방문은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적은 북한측이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수재민에게 전달하는데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고 담요는 많은 양이 분배된데다 북한당국이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지원을 사양했다고 밝혔다.

한적의 한 관계자는 『북한측이 우리가 제공하는 라면등에 부착된 남한 제조회사의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일일이 제거하기가 번거로워 인수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적은 그러나 쌀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건축자재는 자금이 확보되면 북한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혀 쌀과 금전 지원은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북적은 또 지난해 12월 우리측이 2차 구호품으로 제공한 담요 3천장을 자강도 희천과 평북 신의주 등 13개 수해지역에 분배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3차로 제공한 라면 10만개 등의 분배내용은 곧 통보하겠다고 전해왔다.

한편 한적측은 대북수재지원을 구호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1996. 3. 1

平壤체류 國赤관계자 北서 출국요구

북한은 최근 수재지원을 위해 평양에 체류중인 국제적십자사연맹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9일 『북한측이 국제적십자사연맹측에 요원들을 철수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제적십자사연맹측은 아직 철수하지 않은채 북한측 진의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3. 1

北 큰 기아위험 없어 수해가옥 재건 착수

國赤 亞·太부국장

【런던=연합】 북한은 작년 여름 대홍수로 식량난을 겪고 있으나 조만간 대규모 기아의 위험에 직면할 조짐은 없다고 국제적십자 및 붉은 초승달 연맹(IFRC)의 사이먼 미시리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29일 말했다.

미시리 부국장은 또 『국제적십자사는 홍수로 파괴된 북한의 가옥들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3. 2

인도적 쌀 원조 北韓 "계속수용"

【도쿄=朴榮基특파원】 북한의 方大玉(방대옥) 대외문화연락협회 참사는 29일 북한이 군부의 반대로 국제적인 식량원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민간교류단체 초청으로 방일한 方참사는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원을 거절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에도 추가 식량원조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1996. 2. 26

對北 水害지원 중단 國赤, 北측 요청따라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 주민 13만명을 긴급구호하려던 대북(對北) 2차 수해지원 계획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가 2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십자연맹으로부터 최근 대북 2차 수해지원 계획을 중단키로 했다는 연락이 왔다』며 『대북 지원 중단조치는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당초 오는 8월까지 북한주민 13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수해지원비상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제적십자연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도 중단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은 적십자 창구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모포·라면·의류를 북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 서울신문 1996. 3. 1

北韓, 1월 "水害지원회담 갖자" 팩스 보내와

정부, 비공식제의 간주 묵살

통일원대변인 밝혀

북한은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대해 대북 수해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자고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우리측은 이를 공식적인 제의로 인정하지 않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29일 뒤늦게 밝혀졌다.

통일원 金京雄대변인은 북한의 남북정치회담 제의설과 관련,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2일 발신인이 북한측 인사명의로 돼 있고 수재지원문제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팩스가 통일원에 들어온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金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이 팩스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대화제의로 평가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측 인사명의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CNN방송사의 이슨 조던 부사장 일행은 29일 하오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방문, 『북한관리들이 언제 어디서든 남북대화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일원의 金대변인은 북한 노동당 金容淳대남담당 비서가 미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당국을 배제한 대화추진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지난 1월 31일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도 『북·미 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과 이에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金대변인은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3. 1

北, 南北회담 재개요청

지난1월 한국 "공식제안 아니다" 신중대응

아사히신문보도

【도쿄 = 黃永植특파원】 북한은 1월 한국정부에 남북회담 재개를 요청했으나 한국측이 공식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회담에 응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美행정부소식통 및 관련소식통의 말을 인용,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우성호 선원 5명을 7개월만에 송환한 후 북수의 한국계 미국인을 통해 한국정부에 남북회담 재개의사를 전달했으며 한국측은 보다 공식적인 형태의 제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주장을 北·美관계 개선의 전제인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있지 않은 책임을 한국측에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지지(時事)통신도 이날 金容淳 북한 노동당비서가 美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장소 시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996. 3. 2

北韓, 교묘한 南北대화 공세

외국言論 통해 "再開요청" 흘려

對美·日관계 개선 겨냥한 포석

최원기 기자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경웅(金京雄)통일원 대변인은 29일 『지난 1월 12일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북한측 인사 명의의 팩스가 통일원에 들어온 사실이 있다』며 『정부는 이 팩스의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묵살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도 같은날 미국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지난 1월 한국계 미국인을 통해 남한측에 남북대화 재개를 요청했으나 남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달 26일 북한 노동당 김용순(金容淳)대남담당 비서를 만나고 돌아온 미국 CNN-TV 이슨 조르단 부사장도 『북한이 대화 재개 용의를 보였다』고 전했다.

통일원은 북한의 이같은 물밑 남북대화 공세를 「평양의 공 넘기기」 전술로 파악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대화 의사도 없으면서 중단책임을 서울로 슬쩍 돌려놓고 자신들은 워싱턴 또는 도쿄(東京)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기만술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남북대화는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 앞서 북한이 풀어야만 하는 사실상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평양으로서는 비공식 제안을 흘린후 남한이 거부하면 이를 구실삼아 남북대화라는 걸림돌을 건너뛰자는 속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당국자들은 『워싱턴과 도쿄가 북한의 이같은 얕은 꾀를 잘못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또 평양의 이같은 움직임이 우리의 4·11 총선을 겨냥한 대남 정치공세 성격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연초부터 우리의 총선 교란을 목적으로 「남북정당·단체간 연석회담」과 대남 편지공세를 가해왔는데 이번 공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식적인 남북대화 요건에 미달하는 평양의 대화 제의는 앞으로도 일축한다는 입장이다. 통일원의 한 간부는 『우리는 이미 지난해 베이징(北京) 3차회담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 한반도내 회담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1996. 3. 2

"北 260萬 餓死상황"

올여름 최악식량난 직면

식량위기로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북한은 식량지원이 없을 경우 올 여름 대량 아사(餓死)상황을 맞게될 것이라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2월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은 기근상태에 놓여 있으며 여름쯤에는 수백만명이 아사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백10만명의 어린이와 50만명의 임산부및 노령여성들이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평양에 상주하며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WFP는 올해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6백만t에 이르고 있으나 공급량은 외부의 지원 등을 모두 합해도 4백80만t에 그쳐 1백20만t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북한당국은 최근 주민들에게 쌀·채소 등의 배급량을 현저히 줄였으며 특히 자강도나 평안및 황해도 북부지역 등 기근이 심한 곳에서는 어린이들과 임산부, 노약자들의 3분의1가량이 질병에 걸린 채 옥수수죽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재까지 WFP의 호소로 식량및 재정지원을 한 국가는 26개국, 비정부기구는 25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외부지원은 대단히 한정적이어서 한때 WFP가 활동을 중지해야할 상황에 몰리기도 했으나 올들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WFP는 1월중에 50만명의 난민들을 2개월간 먹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으며 2월중에도 WFP가 목표로 한 지원모금액의 75%에 이르는 6백40만달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3. 2

북한주민 金正日체제 불만 고조

식량난악화…일부도시 배급끊겨

최근 訪北조선족 밝혀

【北京=金星路특파원】지난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올들어 더욱 악화돼 북한주민들의 정부와 金正日에 대한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올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한 소식통이 1일 밝혔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열흘간 북한의 철광도시인 함경북도 金策市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소식통은 『도시근로자들이 강철공사에 출근해도 몇개월째 월급을 못받자 농촌에 내려가 품을 팔아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무단이탈해 도시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3. 2

北韓 식량난 위기경보 수위

주민들 먹을것 찾아 탈출사태

지난 여름 대홍수로 악화된 북한의 식량사정이 겨울을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져 식량난의 파장으로 사회안정이 와해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량난을 북한당국의 배급에 의존해온 도시주민들의 식량난은 집체농사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온 농촌지역보다 더욱 심각해 농촌으로 「탈출」한 도시근로자들이 급증, 가동을 중단한 공장이 늘고 산업전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식량을 전해주기 위해 함흥과 청진 중간지점에 있는 함경북도 金策市를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주민들은 예전과는 달리 金正日과 중앙정부의 무능및 失政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당국 또한 민심이탈과 사회혼란 방지에 부심하면서 延邊조선족자치주등 중국내 연고지에 대한 주민들의 친척방문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마저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도시에서는 농촌으로, 농촌에선 국경지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떠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북한주민 개개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전국화될 경우 사회혼란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열흘동안 직접 관찰한 이 소식통은 『도시주민들은 농촌에 가서 일해주고 노

"국민고통 외면" 정부失政에 노골적비판

「생존투쟁」 확산땐 사회안정 와해가능성

히 양말이 없어 헝겊으로 발을 싸는 이른바 「발싸개」를 하고 다닌다. 그러다 이웃집 방문시에는 발싸개를 풀고 맨발로 방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옷은 문제가 아닌데 배가 고파 못살겠다」며 의복과 추위보다는 배고픔을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북한간 국경무역으로 한때 「조선의 홍콩」으로 불리던 함경북도의 국경도시인 회령이 지금은 황폐해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회령에서 두만강을 넘어 중국마을인 三合으로 탈출해온 북한주민 일가족 3명이 모두 중국세관원에 의해 북한측 세관원들에게 넘겨져 쇠사슬로 묶인채 다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회의참석차 北京에 온 몇몇 북한관계자들은 『지난해 홍수는 몇십년만에 처음 닥친 큰 물난리여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으며 1백만t의 비축미가 떠내려갔고 추수를 앞둔 농지의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량이 3백만t가량 될 것』이라면서 『올농사가 잘돼야 우리공화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부터 한창 농사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北京=金星路특파원〉

▽ 한겨레신문 1996. 3. 3

북한동포 쌀 보내기 추진본부 확대 결성

이북 수해 동포 돕기 쌀보내기 운동 성남추진본부(본부장 정형주)는 2일 오후 5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성도신협 대강당에서 성남 지역 정치·종교·노동·학생 등 각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본부 확대 결성식을 열었다.

이날 추진본부에 새로 가입한 단체는 경기동부총학생회연합 소속 9개 대학 총학생회와 성남청년단체연합의 5개 단체, 성남노동조합총연합 산하 14개 노조, 성남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5개 교회, 전교조 성남지회 및 성남노동운동단체 대표자회의 소속 단체 등 37개 단체이다. 또 민주당 분당지구당 성유보 위원장과 국민회의 나필열 위원장 등 정치인과 기독교·불교 등의 종교계 인사, 그리고 의료인 등 12명이 참석해 북한 수해 동포 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 서울신문 1996. 3. 7

"北주민 한국구호품 고대"

국제 지원단체 연료·식량난 심각한 상태"

【런던=연합】지난해 여름 극심한 수해를 겪은 북한은 현재 주민 수백만명이 아직도 추위와 배고픔을 겪고 있으며 한국이 제공한 의복과 담요, 라면 등 구호품이 배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의 한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및 붉은 초승달연맹(IFRC) 대표로 평양에 파견된 왕샤오후아씨는 로이터와의 전화회견에서 북한이 여전히 심각한 연료및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현재 기온은 영하 15도를 밑돌았던 수주 전보다 많이 포근해진 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한국측이 보내온 라면에 대한 통관·검역 절차로 인해 3~4주씩이나 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은 그러나 수일내로 국제사회가 보내온 1만2천장의 모포, 의류와 함께 이 라면을 주민들에게 배급하도록 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3. 9

시리아, 對北 식량지원

9백만弗상당 밀·보리등 남포항 도착

【서울AFP연합】북한은 시리아로부터 9백만달러 상당의 구호식량을 지원받았다고 8일 밝혔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이날 시리아정부가 제공한 밀 2만t, 보리 2만t 등 약 9백만달러에 상당하는 구호식량이 지난 1월 26일과 3월 6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시리아가 제공을 약속한 구호식량이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현재 북한에선 『위대한 지도자 金正日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수해복구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996. 3. 8

北식량난에 食人사태까지

3차례 발각…金正日도 보고받아

워싱턴타임스 보도

【워싱턴=외신종합연합】북한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식인만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보고서가 최근 美행정부 관리들 사이에 배포됐다고 워싱턴 타임스지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지도자 金正日이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사건을 보고받고 즉각 단속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타임스는 익명의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 내에서도 식량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북동부지방에서 3차례의 식인행위가 있었으며 이 사실이 곧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보고서는 지난주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에게 배포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국민일보 1996. 3. 6

"北, 韓國구호품 배급늑장"

IFRC 밝혀

【런던=로이터연합】지난해 여름 극심한 수해를 겪은 북한은 현재 수백만명이 아직도 추위와 배고픔을 겪고 있으며 한국이 제공한 의복과 담요, 라면 등 구호품이 배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의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사 및 붉은초승달연맹(IFRC) 대표로 평양에 파견된 왕샤오후아氏는 북한이 여전히 심각한 연료 및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이미 한국측이 보내온 라면 등이 통관·검역절차로 인해 3~4주씩이나 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원조할 태국産 쌀 5천6백35t을 현재 선적중이라고 이 기구의 방콕 주재 요원 앨런 메휴氏가 5일 말했다.

메휴氏는 『쌀을 실은 선박이 주말께 북한의 남포港으로 출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1996. 3. 13

북지원 쌀 2차분 방콕출항

세계식량계획 성명

【유엔본부=연합】세계식량계획(WFP)은 11일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로 타이에서 산 쌀 2차분 5천6백36t과 원조기구인 '카리타스'가 맡겨온 9백3t 등을 실은 배가 방콕에서 북한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로마에 있는 유엔산하기구인 세계식량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화물선이 앞으로 10일 내지 12일 안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대북 지원을 위한 3차분 쌀 7천3백t을 오는 4월까지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1996. 3. 9

유엔, 北에 農政개선 권고

"식량난 재해보다 구조적 결함서 비롯"

【워싱턴연합】유엔은 북한의 식량난이 농업의 구조적 한계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평양 지도부가 현재의 농정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권고했다.

유엔은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해 12월 9~16일 공동으로 북한을 현지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초안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 식량위기가 지난해 여름 이 나라 전역에 걸쳐 평균 3백㎜나 내린 폭우 등 천재지변에 크게 영향받았다』면서 그러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농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경작가능 지역이 전국토의 5분의 1에 불과한 절대적 농지부족 ▲단일재배 ▲집약농및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지력 약화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계속된 홍작및 홍수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현재 1백80만t의 곡물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분석하고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엔 등을 통해 구호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식량난이 계속 악화될 조짐』이라고 지적한 보고서는 『95년 수확분이 바닥나는 오는 8~9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문화일보 1996. 3. 14

南서보낸 라면10만개 北韓주민에 배포시작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월 북한에 보낸 라면 10만개가 지난주부터 북한주민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라면을 그동안 세관에 쌓아놓고 있었으나 지난주부터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평양에 파견되어 있는 국제적십자연맹(IFRC) 요원이 알려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李秉璿기자〉

▽ 국민일보 1996. 3. 11

"北식량 百만t 필요 한국교회서 도움을"

방북 朴庚緖목사 귀국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국 장인 朴庚緖박사는 11일 『북한은 오는 4, 5월 춘궁기까지 최소한 1백만t 이상의 쌀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교회협의회의 북한수재 국제조사위원으로 지난 2일부터 1주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9일 일시 귀국한 朴박사는 이날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교회지도자들과 만나 『올 가을 추수기까지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4백만t 정도이며 이 가운데 약 1백만t 정도가 있어야 춘궁기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朴庚緖 목사

朴박사는 『현재 북한 주민들은 쌀이나 잡곡 대신 고구마등으로 하루 두 끼의 식사를 근근히 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민족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쌀 지원 문제가 재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朴박사는 또 『북한의 피해마을 이장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난번 한국의 쌀지원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민간차원에서 쌀을 다시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수해복구와 관련, 朴박사는 『장비와 연료가 없어 순전히 주민들의 손으로 하고 있으며 30%정도밖에 복구되지 않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朴박사는 12일 스위스로 돌아가 세계교회협의회 차원에서 북한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李昇翰〉

▽ 중앙일보 1996. 3. 14

北韓 노동자들 집단 결근사태

혜산소재 임업사업소만 800명

식량배급 중단에 항의

최원기 기자

북한 양강도 임업사업소 노동자 8백명이 지난주 식량배급 중단에 항의, 집단 결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해외소식통의 말을 인용, 『혜산소재 임업사업소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직장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지도원급 중간간부들이 이번 보이콧 사태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자의 집단적 직장 거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보다 규모가 작은 수십명 단위의 직장 결근사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청진에서는 지난달말 대학생 2백여명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소요를 일으킨 바 있다.

▽ 서울신문 1996. 3. 15

中, 對北 식량지원 극비 再開

쌀·옥수수수십만t 제공

정부당국자 北의 對美관계개선 저지 의도

지난해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중국이 최근 은밀히 수십만t규모의 대북 곡물공급을 재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국이 최근 비밀리에 북한에 옥수수와 쌀·밀가루등 식량공급을 재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 규모는 유상과 무상을 합쳐 수십만t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지난해 자국의 흉작과 식량소비증대로 인한 곡물수급불균형을 빌미로 전인대(全人大)상무위 결의를 통해 대북 곡물무상지원은 물론 수출까지 금지키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94년 동북3성의 수해등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과 경제개방 이후 지속적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로 모자라는 일부 곡물을 동남아등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해 왔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북 곡물지원을 재개했다면 다목적 정치적 계산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지나친 대미경사를 막아 계속 영향권내에 묶어두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의 식량난이 상상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金正日체제가 무너지면 탈북자의 대량발생등으로 인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具本永기자〉

▽ 중앙일보 1996. 3. 14

"北수용땐 2億臺 물품 제공"

韓赤 현금지원 방안 고려 안해

최원기 기자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는 13일 북한이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구호물자를 받아들일 경우 2억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날 『국내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대북 수재민 구호용으로 기탁해온 성금이 2억3천만원 가량 확보돼있다』며 『북한이 국제적십자연맹 채널을 통해 외부 구호를 받아들일 경우 빠른 시일내 구호물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측에 물품 대신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3. 15

北수해성금 1억여원 한국천주교 韓赤전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朴石熙주교)는 15일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에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억7천8백여만원을 전달한다.

▽ 서울신문 1996. 3. 21

"北 붕괴상황 아니다"

식량난 외부지원 없이 극복 가능

유엔 訪北대표단장 기자회견

【제네바AFP연합】북한은 지난해 여름의 홍수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있기는 하나 정치적 격변이나 체제붕괴 직전에 몰려있지는 않다고 유엔 인도지원국의 방북대표단장 크엘 마드센이 20일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5개월여에 걸친 북한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마드센 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해 심각한 변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이 극도로 심각한 지경"이라면서도 북한당국이 대외원조를 모색하고 있고 내핍생활을 견뎌온 전통을 갖고있다고 지적, 북한이 외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동아일보 1996. 3. 16

北변경지역 군인-주민 中국경 침범 식량약탈

【北京=黃義鳳】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변경지역의 주민과 군인들이 최근 중국 길림성지역으로 넘어와 식량을 약탈해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을 든 북한군인들의 식량구걸및 절도 약탈행위가 최근 부쩍 늘고 있어 중국국경수비대가 삼부에 감시병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일 북경에서 열린 길림성전인대대표와 遲浩田(지호전) 국방부장과의 토론회에서 張恩祥(장은상)혼강(渾江)시장에 의해 밝혀졌다.

▽ 동아일보 1996. 3. 17

北, 군량미 일부 주민배급

구호활동 국제기구 확인 식량난 반영… 安保이유 숨겨

【워싱턴=李載昊】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군사용으로 보관중인 식량의 일부를 이미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군량미의 일부를 수재민 구호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은 안보상의 이유로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군량미를 구호용으로 전용한 사실은 대(對)북한 식량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들에 의해서도 이미 확인됐다』고 말하고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지난 12일 북한 큰물피해(수재)대책위원회의 대표 이정화가 「북한 군부도 인도적인 목적의 식량지원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북한 식량사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전하고 『북한은 노동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던 식량배급도 이미 3개 등급으로 줄여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공보담당자인 마이클 로스는 15일 『군사용 식량이 수재민 구호용으로 전용됐는지 WFP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3. 20

세계식량기구 北에 쌀5천t 지원

이달말 3차분 제공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달말 북한에 쌀 5천t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통일원의 한 소식통은 이날 『로마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기관인 WFP가 이달말 태국산 쌀 5천~6천t을 구입해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과 스웨덴이 이 구호성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산하기관인 WFP는 지난해 11월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쌀 1만1천5백t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다.

▽ 한국일보 1996. 3. 21

北한行 유엔 쌀배 침몰

中선박 대만해협서 6천여톤 水葬… 지원 차질

선원등15명 실종

【로마AP연합=연합】유엔의 원조식량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중국 선박이 대만해협에서 악천후로 침몰, 15명의 승무원이 실종됐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20일 밝혔다.

로마에 본부를 둔 WFP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홍수 피해자들에게 쌀을 전달하기 위해 유엔이 전세낸 쳉다號(2천8백19톤급)가 19일 폭풍우에 휩쓸려 침몰하면서 이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9명의 다른 승무원들은 구조됐다고 말했다.

미국 스위스 호주 등에서 기부된 5천6백35톤 및 가톨릭 자선기구 카리타스가 기증한 9백3톤의 쌀을 운반하고 있었던 이 선박은 11일 발목을 떠났으며 23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작년 11월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계획을 시작한 이후 『이번 쌀 수송이 두번째였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19일 대만 관리들은 대만이 해군함정등을 동원해 대만해협에서 침몰한 중국 선적 컨테이너선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선박이 WFP가 세낸 선박이라고 확인하지는 않았다.

▽ 세계일보 1996. 3. 20

"이집트 對北지원계획 없다"

무사외무 離韓회견

아무르 무사 이집트외무장관은 19일 이집트정부의 對北정책과 관련,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나 이집트정부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사장관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증진돼 무역 및 투자규모가 2~3년내에 각각 10억달러에 이르기를 희망한다』며 『도로, 통신, 전력, 관광산업, 농업 등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鞠貴然기자〉

▽ 서울신문 1996. 3. 22

세계식량계획 "北원조 쌀 다시 보낼 예정"

【워싱턴연합】북한에 구호용으로 보내는 쌀 6천5백여 t 을 싣고가다 대만해협에서 지난 19일 침몰한 쳉다호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세계식량계획(WFP)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쌀을 다시 구입,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글린 데이비스 미국무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존슨 백악관 공보담당 보좌관도 이날 미국 공보원이 외신기자들을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보험절차에 따른 쌀의 재구입 등 WFP를 지원할 것이며 후속조치가 크게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2. 23

北 "식량 추가원조 수용"

제네바 北대표부 밝혀 국제기구선 47億 기금 마련키로

[제네바 聯=연합] 북한은 지난해 가을의 대홍수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외국의 원조를 추가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북한 관리들이 22일 말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북한의 식량부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많은 외국 기관들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국제적십자사와 회교권의 적십자사격인 「붉은 초생달회연맹(IFRC)」이 북한 적십자사로부터 대북 식량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범세계적인 호소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IFRC는 이날 북한의 요청에 따라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 13만명을 돕기 위해 6백만달러(약47억원) 상당을 모금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유엔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원조기관들에 대해『더이상의 원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군부가 외국의 원조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 세계일보 1996. 3. 22

對北쌀지원 경비 千8백54억 완불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추진한 15만t 對北쌀지원경비중 미지급분인 내륙운송비및 선적비 30억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 쌀지원경비 1천8백54억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대북 쌀지원경비는 양곡대금으로 1천7백56억원, 수송 선적 보험 등 부대경비로 98억원 등 모두 1천8백54억원이 소요됐다.

〈趙敏皓기자〉

▽ 동아일보 1996. 3. 23

北식량난 여전히 심각

유엔대변인 일부주민 草根木皮로 연명

【유엔본부·워싱턴AP AFP聯】 북한의 식량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변인은 21일 북한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으며 일부 주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흐마드 파우지 유엔 대변인은 북한에서 5개월 동안 유엔의 구호활동을 지원하다 돌아온 유엔 관리 크렐리 메드센이 20일 제네바에서 북한 식량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다면서 유엔이 인도적 대(對)북한 비상지원을, 마무리 지을 것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한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우지 대변인은『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수개월 전 아주 심각했던 사태는 지금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하고『일부 지방 주민들은 사정이 너무나 나빠 상록수 잎을 먹고 살아갈 정도』라고 밝혔다.

파우지 대변인은 이어 지난 18일 북한으로 가는 쌀을 실은 중국 화물선이 대만 해협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면서 유실된 6천5백38t의 쌀을 충당할 대체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1996. 3. 23

北韓에 영농물자 첫지원

한국선명회 벼종자·비닐하우스등 50t 美서 선적

北요청 곡물5천t도 9월제공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해소를 위한 근본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벼종자와 비닐하우스 자재등 영농물자를 대량 공급한다.

한국선명회(회장 李潤求)는 23일 국제선명회를 통해 북한에 씨앗과 비닐하우스 자재등 50t 이상의 농업 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이달 중순미국에서 선적을 시작했으며 다음달초 남포항을 통해 제공된다고 밝혔다.

통일원의 한 담당자는 「농산물종자 및 농약비료의 부족, 영농기술의 낙후등이 북한 식량난의 원인이란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이번 선명회의 종자와 영농물자 지원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명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씨앗과 비닐하우스자재등의 선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음달 중순에는 북한 농촌에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의 대부분은 국내 민간단체의 모금에서 충당된다」고 말했다.

선명회는 또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 호주와 캐나다, 중국 등지로부터 구입한 쌀을 포함한 곡물 5천t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선명회 구호담당 부총재인 러스커氏가 지난달 평양에서 북한당국과 앞으로의 구호사업을 위한 기본합의를 했다」며 「이때 북한측이 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명회는 씨앗 제공과 함께 수해지역주민들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등이 포함된 3t 분량의 의약품도 지원한다.

선명회는 또 식량 이외에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생필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운동화와 의류, 학용품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韓玟洙)

▽ 중앙일보 1996. 3. 21

北, 쫄쫄굶어도 겉으론 티 안내

스티브 린튼 美 유진벨재단 이사장 見聞記

전기·연료 없고 학생 출석률 30%그쳐

외부지원 物品은 190곳서 제대로 분배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북한의 최근 식량 부족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미국 민간구호기관 책임자로 지난달 20~24일 북한을 방문했던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은 북한 사회가 「총체적 궁핍 상태」라고 전했다.

19일 워싱턴에서 북한 식량사정 설명회를 가진 린튼 이사장은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고 79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북한을 다녀왔으며 김일성(金日成)도 3차례나 만났던「한국통」이다.

다음은 그의 견문기 요지.

북한에는 지난해 수해 이후「30년대 고난의 행군 정신을 되살리자」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김일성의 빨치산 활동 당시의 어려움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북한이 현재 최대 시련기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하루 수십명씩 굶어죽는다는 소문도 있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아프리카같은 기아민들은 없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 전체가 극도로 궁핍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도, 연료도 없다. 농촌에서 볍씨를 발육시킬 보온 못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비닐을 구할 수가 없다. 학교는 땔감이 없어 난방이 안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감기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못먹고 못입는 것이 원인이다.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 학생들의 출석률은 30%에 불과하다고 북한 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데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적 특성도 작용한다. 북한 사람들은 국제기구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할 때 굶주리고 있어도 깨끗이 청소를 한 채 굶는 티를 안낸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다보니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난민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북한 당국은 뾰족한 묘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외부로부터 손길이 없으면 앞으로 상당한 희생자가 날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군부가 원조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북한은 국제적 도움을 구하면서 1백50억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목표 모금 규모는 그 1천분의1인 1천5백만달러였으며 실제 걷힌 돈은 5백만달러에 불과하다.

구호사업을 위해 개설된 국제기구 사무소는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기구 종사자들은 현장 답사를 위해 북한 곳곳을 다니고 있어 폐쇄적인 북한 군부는 「받는 것도 없이 서방인들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니 북한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이다. 북한에 전달된 지원품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느냐에 대해 의심이 많지만 본인은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에는 외부 지원물품을 나눠주는 곳이 1백90군데다. 분배가 무리없이 진행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한 식량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북한의 실상은 국제기구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아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이다. 현재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는 2백10만명, 임산부가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 경향신문 1996. 3. 24

北 자폐증 장애자 41%

84년이후 격하

지난해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 비율이 41.5%로 나타나 84년 이후 격하의 자폐증 장애자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 장애 재활센터(대표 김지수·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소재)는 북한의 정신 장애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 방문 중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8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4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80년 이후 5년간 5배 증가하였고 이후 4년간 2배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41.5%로 나타났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50년대 이후 10년간 2.5%를 나타내었으나 60년대 이후 자폐증 장애자는 계속 증가하여 80년대 이후 3배 증가하였고 지난해 4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80년대 이후 5년간 5배 증가하였고 이후 4년간 2배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4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지난해 1월 2일 현재 10만명, 2월 1일 현재 3만명, 3월 1일 현재 2만명, 4월 1일 현재 3만명, 5월 1일 현재 3만명, 6월 1일 현재 3만명, 7월 1일 현재 3만명, 8월 1일 현재 3만명, 9월 1일 현재 3만명, 10월 1일 현재 3만명, 11월 1일 현재 3만명, 12월 1일 현재 3만명이라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지난해 1월 2일 현재 10만명, 2월 1일 현재 3만명, 3월 1일 현재 2만명, 4월 1일 현재 3만명, 5월 1일 현재 3만명, 6월 1일 현재 3만명, 7월 1일 현재 3만명, 8월 1일 현재 3만명, 9월 1일 현재 3만명, 10월 1일 현재 3만명, 11월 1일 현재 3만명, 12월 1일 현재 3만명이라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李大鎬기자〉

▽ 조선일보 1996. 3. 22

北 자폐증 장애자 41%

하루 3명꼴로 증가…… 주민 부양 의무 포기

북한의 지난해 자폐증 장애자 비율이 41.5%로 나타나 8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 방문 중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8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4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50년대 이후 10년간 2.5%를 나타내었으나 60년대 이후 자폐증 장애자는 계속 증가하여 80년대 이후 3배 증가하였고 지난해 4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80년대 이후 5년간 5배 증가하였고 이후 4년간 2배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4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폐증 장애자는 지난해 1월 2일 현재 10만명, 2월 1일 현재 3만명, 3월 1일 현재 2만명, 4월 1일 현재 3만명, 5월 1일 현재 3만명, 6월 1일 현재 3만명, 7월 1일 현재 3만명, 8월 1일 현재 3만명, 9월 1일 현재 3만명, 10월 1일 현재 3만명, 11월 1일 현재 3만명, 12월 1일 현재 3만명이라고

▽ 동아일보 1996. 3. 28

北, 남북회담 再開제의

"總理級 빨리 만나자"

"곧 실현 전망" 日소식통 확인

시기·장소 한국제안 기다리겠다

공식채널 통해 지난주에 통보

【東京=裵仁俊】북한 당국이 중단된 남북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지난주 정부간 공식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제의한 사실이 일본의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해 27일 확인됐다.

북측은 고위당국자를 통한 이 제의에서 남북회담의 재개시기 및 장소에 대한 한국측의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측이 제의한 남북회담은 총리급 고위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소식통은 한국정부가 4월11일의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 이전에 북한측의 제의 내용및 이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제안을 공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소식통들은 『북한이 이번에 남북회담 재개를 먼저 제의한 것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임하지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북측에 대해 美日 양측은 최근 각각의 채널을 통해 『남북회담의 재개를 우선적으로 가시화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한 관측통은 『北-美, 北-日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한국의 총선 이후 빨라질 조짐이어서 이와 연계, 남북회담의 재개가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전망』이라면서 『장소는 판문점 평양 서울 등 한반도내의 어느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문화일보 1996. 3. 28

南北해빙 "물밑교감"

「고립벗기」 平壤 부축전략

對北전향적조치說등 왜 나오나

남북회담 재개를 촉구한 金泳三대통령의 3·1절 축사이래 남북 해빙무드를 예상케 하는 조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특히 4·11총선 이후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자들도 이같은 흐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당국이 지난주 중단된 남북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정부간 공식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제의했다는 說도 서울 및 일본 미국등지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일단 『아직 공식적인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각급 대책회의를 갖는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남북대화 공식제의說에 대해 통일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총리급은 아니다』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간의 「물밑교감」이 없지는 않다는 분위기를 비쳤다.

지난달에도 통일원측은 남북대화를 제의한 팩시밀리 전문문이 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통일원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발신인이 불분명해 공식적인 당국간 제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었다.

현재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를 제기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구조적 경제난과 식량난을 탈피하기 위해 율 외교 최대목표인 北·美및 北·日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측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대신 「잠정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위해 장애물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종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도 이같은 흐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이 우리의 총선정국을 겨냥, 우리 정부를 흔들어 보기 위해 위장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총선국면인 우리 정부를 흔들기 위해 계속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承炫기자>

政府 北京 접촉 "불허방침"

北제의 따라

▷ 동아일보 1996. 3. 29

金수석 "韓-北 비공식 접촉 「議題」 구체적 이견 좁혀가고 있다"

지난주

政府 "체육대회 회담 지원할 것"

과학원이 지난달 6일 3월 8일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남북체육교류 실무접촉」에 대한 북한 측의 제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수석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체육교류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하면 남북체육회담(KOTRA)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이날 『남북체육회담 지원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남북체육회담 대표들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이번 남북체육회담 지원 방안은 남북체육회담 대표들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체육회담 지원방안 '주목'

김수석은 『이번 남북체육회담 지원 방안은 남북체육회담 대표들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일보 1996. 3. 29

정부「당국자회담」추진

北韓의 수차례 비공식접촉제의는 거부

정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의 대화제의를 인정하지 않고 당국자간 공식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은 최근 방북한 우리 기업체와 비공식 단체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의사를 수차례 전해왔으나 정부가 당국자간 접촉이 아니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9일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간헐적으로 방북중인 우리 기업체와 당국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기관들을 통해 남북접촉의사를 전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식채널을 통하지 않은 이같은 제의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당국자간 대화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지난해 북경쌀회담 북한측 대표 全金哲단장 명의로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李錫采 당시 재경원 차관(현 정통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북경접촉의 사도 같은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한측에 △한반도내 회담개최 △공식채널을 통한 당국자의 공식제의 △대남비방중지등 대화재개 3원칙을 받아들이도록 재차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통일원에 출처가 불분명한 팩스를 보내 남북접촉의사를 밝혔었다.

(韓玟洙)

▽ 세계일보 1996. 4. 3

北지원국제회의 오늘소집

유엔 美·日 추가식량원조 계획없어

【제네바·워싱턴=외신종】유엔은 2일 북한이 지난 1월 내세웠던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원조 거부의사를 철회하고 「긴급」지원요청을 재개함에 따라 3일 뉴욕에서 북한지원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엔 인도문제국(DHA)의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홍수로 인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는 북한이 유엔의 추가적인 원조를 모색해왔다며, 북한은 유엔 유럽사무소를 통해 DHA 책임자인 아키시 야스시씨에게 식량등의 지원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朴덕훈대변인은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말에 제네바의 DHA에 국제사회의 식량원조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접수시켰다고 말하고, 북한이 현재 국가적인 긴급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해 9월 시작된 유엔및 비정부기구들의 추가지원이 아직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원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美국무부가 1일 밝혔다.

일본정부도 2일 지난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키로 합의한 쌀선적을 이번주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對北 추가식량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3. 29

정부、北접촉재개 제의 거절의미

"南北대화 한반도內서 이뤄져야"

"北京통한 회담 비정상적" 입장
"총선앞두고 흔들기전략" 분석도

북한이 최근 북경 접촉을 재개하자는 제의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데대해 우리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를 거절했다. 우리정부가 설정해놓은 남북대화의 조건은 한반도내에서 당국간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조건을 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화재개를 놓고 남북간에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현재의 경색국면에서는 의미를 가질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북한은 이번에 북경 쌀접촉 라인의 재가동을 시도했다.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조선삼천리총회사의 중국 지부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북경사무소에 팩스를 보냈다. 발신인도 쌀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였던 全金哲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회담은 처음부터 북한은 비당국 성격으로 규정한 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당국의 성격을 부여하는 상호 편의주의를 택한 기형적 성격이었다. 북한은 이를 계속 하려는 반면 우리는 북경회담을 더이상 정상적 대화방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담을 제의한 북한측 의도는 분명치 않다. 북한은 그동안 총선등 우리쪽의 정치적 변혁기에서는 우리쪽을 한번 흔들어 보기 위해 이같은 제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돌파구를 美日쪽에서 찾으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지만 미·일은 대북관계 진전을 남북 관계와 병행시킨다는 조건을 내세우고있다. 북한은 이 고리를 풀기 위해 남북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려 할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댈 곳은 남쪽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북한 식량난이 출구기를 맞고 있어 쌀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남북 대화를 제의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대남·비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8일 평양방송은 우리 정부에 욕설을 퍼부어가며 『북남 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장벽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런 점때문에 정부는 문을 북한측에 돌려보내놓고 있다. ▲한반도내에서의 당국자간 회담 ▲대남 비방·중상 중지등이 북한이 수용해야할 조건이다.

북한이 우리의 조건을 수락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북한의 한국 배제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식량사정이 절박하다는 사실등으로 인해 북한 지도부가 제한적 참여쪽으로 대남 전술을 새롭게 시도해볼 가능성도 희박하게나마 점쳐지고 있다. 〈具聖宰기자〉

▽ 중앙일보 1996. 4. 7

'南北 베이징접촉' 北제의 거부

정부 對南비방 중지·當局間회담 돼야 수용

최원기 기자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0일에 이어 5일 다시 제의해온 제4차 베이징(北京)남북접촉 재개를 거부키로 했다.

김경웅(金京雄)통일원 대변인은 6일 『북한이 5일 지난달 20일과 같은 통로로 베이징접촉을 재차 제의해왔다』고 밝히고 『한반도내 공식적인 당국간 회담으로 열려야 하며 대남 비방·중상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우리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한 4차 베이징 접촉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金대변인은 『우리는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전쟁위협을 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변칙적인 대화를 갖자고 제의하는 양면전술을 구사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5일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제4차 북남 베이징 접촉을 갖는 문제와 관련해 5일 북측단장(전금철)은 두번째로 남측 수석대표(이석채)에게 모사문(팩스)을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다.

▽ 세계일보 1996. 4. 4

國赤, 2차北지원 추진

13만명 구호…韓赤협조 요청

北韓이 국제사회의 수해지원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제2차 지원계획을 수립, 대한적십자사 등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지난달 22일자로 보내온 보고서에서 4월부터 추수기에 접어드는 10월까지 7개월동안 2만6천가구(약 13만명)를 대상으로 2차 구호활동을 펼 계획이라면서 대한적십자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趙敏皓기자〉

▽ 중앙일보 1996. 4. 11

泰國서 쌀 구입 논의 北, 고위관리 또 파견

[방콕=뫼]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장 현준극(玄峻極)이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대(李成臺)대외경제위원장이 11일 방콕에 도착, 태국관리들과 쌀 구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李는 지난 1월에도 태국을 방문해 태국정부 고위관리들과 지난해 중단된 쌀공급재개및 추가지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태국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이성록(李成祿)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태국을 방문, 추칩 한사왓 상무장관을 만나 태국이 지난해 9월말 이후 중단시킨 13만8천t의 쌀 공급을 재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추가로 50만t을 더 공급해줄 것을 제의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태국으로부터 30만t의 쌀을 수입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9월말까지 16만2천t을 가져갔으나 93년에 이미 수입한 10만t(총대금 2천3백만달러)에 대한 잔여 쌀값 약 1천5백만달러를 연체함에따라 이후 나머지 13만8천t에 대한 선적이 일체 중지됐다.

▽ 중앙일보 1996. 4. 5

北韓 곡물작황 위성으로 파악

美농무부 잠재적 쌀수출 대상국 지정

워싱턴=진창욱 특파원

미국 농무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북한 곡물작황에 대해 인공위성 탐사를 시작했다.

미 농무부는 3일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주요 잠재 쌀 수입국으로 지정, 미국 쌀 수출전략을 세우기 위해 인공위성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 해외농업국(FAS) 소속 해외곡물작황분석실(CCAB)의 폴린 샌딘 곡물분석관은 『최근 위성탐사 자료를 입수, 북한 곡물작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곡물작황 분석 결과는 앞으로 2~3년동안 정확한 자료 축적이 이뤄진후 나오지만 빠르면 올 가을 수확기 작황 결과는 그 시점에서 즉각 파악할 수 있다고 샌딘 분석관은 말했다. 샌딘 분석관은 위성탐사에는 랜드샛(LandSat)위성과 미 기상청(NOAA)첨단 고밀도 파장측정위성(AVHRR)이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1996. 4. 7

北 특권층은 穀物로 술만들어 마셔

美의회 입법조사국 보고서 분석 요지

집단농장制·비료 부족등으로 식량難 더해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북한의 식량부족은 지난해 발생했던 수재(水災) 말고도 곡물의 과도한 군용 비축, 비효율적 식량 분배, 비료와 농약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미국 의회 입법조사국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과다한 군량미 비축을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군용 외에 산업용으로도 곡물 생산량의 17%가 소비돼 일반의 식량부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산업용 용도를 국수등 가공식품 제조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일정량 이상은 술이나 인공감미료 등과 같은 기호품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기호용품들은 평양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평양 등과 같은 대도시와 지방에 대한 곡물의 차등공급 정책이 농촌이나 오지(奧地)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극심한 식량난에 떨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집단농장제 폐해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80년대 후반 북한의 일부 농업 전문가들이 집단농장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숙청당한 전례가 있는 데다 김일성(金日成)사망 이후에도 이 제도가 온존돼 곡물 생산성이 떨어지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비료와 농약 부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용 유류 부족으로 인한 농기구의 가동률 저하도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중앙일보 1996. 4. 7

對北 人道的지원 불가피

美, 유엔제출 보고서

정치 불안·억압적 政府체제로 20國 4,200만명 생명위협 느껴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북한이 이라크와 함께 「해당 국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태의 나라」로 분류됐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억압적 정부체제 등으로 인한 기아·질병 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포함, 전세계 20개국에 걸쳐 4천2백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을 「생명위협 정도」에 따라 ▶최악의 상황(아프가니스탄·부룬디·시에라리온)▶여전히 심각한 상태의 위험지역(소말리아·르완다·수단)▶인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태(북한·이라크)▶해결 국면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절박한 상황(보스니아·아이티·앙골라) ▶위기는 넘겼으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태(캄보디아·모잠비크 등)등으로 분류했다.

이같은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수효는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이 각 4백만명으로 가장 많고 보스니아(3백70만명)·에티오피아(3백만~4백만명)·앙골라·르완다(각 2백50만명)·이라크(1백30만~4백만명)등의 순이다.

▽ 조선일보 1996. 4. 11

"北韓은 초근목피 상황

유엔관리 먹을 풀 찾는 주민 목격.

【도쿄AFP연합】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평양 주민들은 현재 먹을수 있는 풀뿌리라도 찾기 위해 공원을 헤매고 있다고 평양에 있는 한 유엔관리가 10일 밝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의 트레버 페이지 단장은 지난해 여름 홍수로 북한이 식량위기에 처한 이래 쌀 등 곡물 27만t이 지원됐으나 북한은 오는 10월 추수 때까지 1백20만t의 식량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이지 단장은 한 TV 인터뷰에서 『오는 10월의 추수 때까지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4. 11

北제의 北京접촉 정부, 묵살키로

정부는 北韓이 지난 5일 우리측에 팩스를 통해 제의한 제4차 北京남북접촉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한반도내 당국간 회담, 對南비방·중상중지 등 우리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거부하면서 기록용, 선전용으로 접촉제의를 내놓았다』며 『정부는 북한측 회담제의 진실성을 의심해 이를 묵살키로 했다』고 말했다.

〈宋義達기자〉

▽ 경향신문 1996. 4. 12

北、日에 3차쌀지원 요청

日자민당선 즉각 답변 회피

【東京=姜成輔특파원】 북한이 일본에 대해 제3차 쌀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訪日중인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金容淳)의 姜鐘勳씨 등 중견간부 3명이 10일 자민당을 방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 대리 등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金容淳위원장이 쌀 추가지원과 관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및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 등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나카의원은 지금까지 당이 주도해온 대북 쌀지원사업이 정부로 이관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1996. 4. 19

쌀 8천여톤 北韓도착 세계식량계획 2차분

[로마 AP=연합] 북한에 제공될 쌀 8천2백65t을 실은 화물선이 18일 북한의 한 항구에 도착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혔다. WFP는 이 쌀이 북한에 보낸 두 번째 구호식량으로 북한주민 90여만명에게 배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4. 19

北 특권층까지 식량난

WFP, 내달부터 2차지원 모금

【워싱턴=李載昊】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대한 제1차 식량지원이 최근 목표량에 도달함에 따라 다음달중으로 제2차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모금에 들어간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WFP의 1차 목표량(8백80만달러)은 지난 2월 미국이 2백만달러를 지원하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등 유럽국가들이 상당 규모의 지원을 약속해옴에 따라 목표선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WFP는 이미 2차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초 현지 조사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WFP 평양책임자 트레버 페이지가 최근 알려온 바에 따르면 식량난은 더 악화돼 이제는 특권층만 산다는 평양 근교의 주민들까지도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로 미루어 2차 지원규모가 1차 지원규모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WFP의 2차 지원계획이 발표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 다시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美정부도 대(對)북한 추가식량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유엔 인도문제국(DHA)유럽사무소를 통해 추가 식량원조를 공식 요청했었다.

▽ 조선일보 1996. 4. 19

南北접촉 있나없나

北京실무접촉 라인 가동說 기업인 메신저역할 관측도

4차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간의 祕密(비밀)접촉 여부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7·4공동성명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큰 물꼬를 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배후에는 남북한간의 물밑 비밀접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6공시절에는 숱한 密使(밀사)들의 활약이 定說로 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돼 94년 남북정상회담과 지난해 북경 남북쌀회담을 전후해서는 8~9개의 비밀라인이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비밀접촉이 일부 있었지만 대북쌀지원과 북경 3차회담 이후 정보의 부정확성같은 부작용과 역효과 등을 우려해 완전히 중단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무력시위 등으로 전쟁위협이 고조된 최근에도 남북한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밀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지난해 쌀회담을 성사시켰던 북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인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와 국내 기업인, 在美교포 C씨, J씨, 在中-호주교포 등 최소 6~7개가 나름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說들이다. 이들은 북한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위원회 고위 간부들을 주로 만나고 있으나 일부는 인민무력부나 정무원 다른 분야 등의 인사와도 접촉, 상당한 수준의 북한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3월에도 북경에서 일정 수준의 실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주된 의제였다』고 전했다. 지난 4월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기업 임원들도 정부차원의 접촉은 아니지만, 남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意中을 전하는 메신저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 6~7월경에는 북한에 최악의 식량위기가 겹치는데다 金日成 3년喪이 끝나는 시점인만큼, 비밀접촉이 지속될 경우 남북한관계에 모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宋義達기자〉

▽ 한국일보 1996. 4. 24

日、3차 對北쌀지원 추진

7월께 金正日권력승계 앞두고 北日수교 막후교섭 연계된듯

일본은 북한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0만~30만톤 규모의 3차 對北쌀지원을 7월께 재개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소식통은 『일본이 金日成사망 2주기이자 3년상이 끝나는 7월 8일부터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10일 사이에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권력승계 전인 7월을 전후해 3차 對北쌀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측 우호친선대표단(단장 姜鐘勳노동당중앙위원)은 6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쌀지원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앞서 일본은 지난달 하순 외무성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식량실태를 조사 한 바있다.

방한중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정조회장 등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은 이날 孔魯明외무장관과 만나 對北추가쌀지원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 뒤 『지난해 일본의 1、2차 쌀지원때 양국 관계가 난항을 겪었던 점을 교훈삼아 한국과 쌀지원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의 대북추가 쌀지원문제가 북일못수교 막후교섭과 맞물려 있으며 北京(베이징)의 채널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張眞鐵기자】

▽ 세계일보 1996. 4. 28

北、國赤에 식량지원 요청

"추수까지 13萬명분 필요"밝혀

韓赤、식용유18만ℓ지원 계획

북한은 올가을 추수기까지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쌀 콩 식용유 등의 지원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에 따르면 북한적십자회는 최근 국제적십자연맹에 보낸 구호물자 요청에서 2만6천가구 13만여명에 이르는 수재민들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동안 생활하려면 쌀 1만2천2백85t과 콩 2천7백30t、식용유 36만4천ℓ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적십자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연맹은 세계각국 적십자사에 대북식량지원을 촉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식용유(옥수수기름) 18만ℓ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보내기로 한 식용유 18만ℓ는 시중에 판매되는 1.8ℓ짜리 식용유 10만병으로 2억5천만원어치이며 북한 수재민이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달걀 1만장、라면 10만개、양말 2만켤레등 3억1천만원어치의 구호물자를 북한에 보냈다. 〈趙敏皓기자〉

▽ 조선일보 1996. 4. 24

中、北韓에 곡물지원

70만t… 원유도 年1백30만t

【東京=李革宰李濟기자】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기위해 곡물 70만t 지원을 약속했으며、이중 50만t이 지난달말까지 제공됐다고 일본의 절통한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이후 북한이 원조받거나 수입한 곡물량은 2백20t에 달해、국제기구 및 한국·일본에 대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요청」은 명분을 상실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이 매년 원유1백30만t을 북한에 공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정부 고위관리가 지난달23일 북한을 방문했던 日외무성 외곽단체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인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對北 곡물지원은 韓·美·日 3국과 국제기구의 지원뒤에도 부족한 분량을 메워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 30만t、일본 50만t、국제기구 40만t、북한이 태국에서 구입한 30만t 등 총1백50만t을 바탕으로 중국이 북한의 곡물부족분이라 판단한 70만t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4. 23

北、곡물20% 軍事用 비축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도쿄=辛允錫기자】 美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식용 곡물의 약 20%를 군사용으로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족분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美의회조사국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백60만톤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올 여름부터 시작되는 96양곡년도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군부의 군량미비축 ▲매년 20%에 이르는 감미료와 술 등 곡물의 산업전용 ▲도시 우선의 쌀 공급 ▲곡물의 국내유통 결여 등을 들었다.

▽ 한겨레신문 1996. 4. 27

"대북 쌀지원 4자회담 연계"

재경원 당국자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29일 "쌀지원이나 남북경협 확대는 현재 제기된 4자회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쌀지원은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의 하나로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4자회담 진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두만강 개발관련 5개국 회의에서 우리에게 쌀 추가 지원의사를 타진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쌀만을 위한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곽정수 기자

Ⅴ. 대북 경수로지원

▽ 중앙일보 1996. 2. 2

EU 對北 重油비용 분담땐 KEDO 집행理事國 허용

정부 "기여에 걸맞은 지위 보장"

배명복 기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이 대북(對北) 중유공급비용의 안정적 기여를 확약할 경우 EU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 참여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일 『연간 5천만달러에 이르는 대북 중유공급비용 가운데 적지않은 액수를 EU가 매년 부담한다고 확실히 약속한다면 기여에 걸맞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EU에 대한 KEDO 집행이사국 허용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EU측이 2천만달러를 중유비용으로 부담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앞으로도 매년 부담할 것인지는 확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또 『EU가 KEDO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더라도 한·미·일 3국과 똑같은 지위를 갖는데는 반대한다』면서 『집행이사국중 한·미·일 3국만 거부권을 갖는 안보리방식으로 EU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유비용은 미국이 책임지기로 돼 있으나 올해 중유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1천9백만달러에 불과하며 그나마 미정부와 의회의 대립에 따른 예산동결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KEDO는 올 1, 2월중 북한에 제공해야할 중유 8만t 비용 8백만달러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급자신용방식에 의한 단기외상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1996. 2. 1

北, 주요核시설 사찰 거부

IAEA대변인

【빈(維)연합】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신고된 모든 핵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IAEA대변인이 30일 말했다.

IAEA는 북한이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3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찰은 허용했으나 대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AEA대변인은 『내가 알기로는 동결대상인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4년 다량의 플루토늄생산이 가능한 2개의 대규모 흑연원자로건설을 포함한 핵계획을 동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었다.

▽ 세계일보 1996. 2. 7

日, 北중유대금 분담 美요구 수락

1천2백만弗 제공 결정

【도쿄=연합】일본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자금을 부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우선 올 2, 3월분 1천2백만달러를 제공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日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또한 연간 5천만달러에 이르는 對북한 중유공급을 미국만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4월분 이후도 일본이 일부 떠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혼돈틀부에서 열린 韓-美-日차관급회담에서 중유대금 일부를 일본이 부담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이날 일본을 방문한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도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日외상에게 자금부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소식통은 중유공급이 지연돼 북한의 핵개발의혹 해소를 목적으로 한 美-北 韓합의가 이행되는데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일본정부가 최종적으로 중유대금 부담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과 경수로가 지원될때까지 약 7~8년간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공급키로 했으나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연간 2천2백만달러밖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

▽ 조선일보 1996. 2. 3

94년 제네바 核협상 타결직전

韓·日정상, 美에 「각서」전달

韓 경수로費 70%이상·日 중유비용 분담 골자

【워싱턴=朴斗植기자】韓-日 양국정부는 94년 10월 美-北간 제네바 核합의문 서명 직전, 金泳三 대통령과 무라야마(村山富市) 당시 총리 명의의 비밀 親書를 클린턴 美대통령에게 전달, 각각 「적어도 70% 이상의 경수로 비용 분담」(한국)과 「경수로 및 중유 비용에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일본)를 각각 이면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韓-日 정상의 친서 다짐을 받은 뒤, 클린턴은 94년 10월21일 북한측에 경수로 건설 및 대체에너지 지원을 약속하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이 1일 전했다.

그간 韓-日 정부는 이면약속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美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日정부가 중유비용 분담을 과거에 약속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日정부가 약속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 일본측이 이면약속의 이행을 독촉해 온 美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곧 중유비용 분담에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70% 이상의 경수로 건설 비용 분담 약속을 했던 만큼, 일본이 중유에 참여하는 비용만큼 한국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韓-日 양측은 서로 비밀친서의 내용을 확인키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2. 12

美, KEDO 재편 추진

EU 中東 참여 확대

對北중유자금 절반 부담 요청할듯

【워싱턴聯】 미국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에 제공할 중유공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재편할 계획이라고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10일 밝혔다.

이 관리는 『EU가 KEDO에 대한 출연금 확대 전제조건으로 발언권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에 매년 지원키로 약속한 중유선적 분 5천만달러 중 절반을 미국이 담당할 계획이며 나머지 50%는 EU와 중동 상유국들이 부담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리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미세출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북(對北) 중유 공급자금을 대신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KEDO 재편 이후 일본에 더이상의 추가 자금부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1996. 2. 8

한국, 경수로 용역비 떠맡아

600만弗 기탁결정

배명복 기자

한국이 경수로사업을 위한 사전 용역비 명목으로 6백만달러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기탁키로 함으로써 한·미·일 3국간에 논란거리가 돼온 중유비용 조달문제는 유럽연합(EU)의 기여를 기다리며▶일본이 일부를 분담하고▶한국은 일본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잠정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당장 필요한 중유비용(1천2백만달러 예상)을 일본이 부담하되 한국은 다른 명목으로 6백만달러를 냄으로써 급한 불을 끄게 된 것이다.

연간 5천만달러에 달하는 대북 중유공급비용은 원래 미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올해 중유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1천9백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의회의 지출승인 절차에 묶여 오는 4월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다. EU가 KEDO 집행이사국 참여를 조건으로 2천만달러를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닌데다 낸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돈이 들어올지 막연한 상태다.

그러나 당장 매달 4백만달러가 중유비용으로 필요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외상으로 공급한 중유비용의 만기가 도래한데다 당장 2,3월분 공급비용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급전 1천2백만달러 정도를 일본이 부담해달라는 것이 미국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핵동결 유지의 중요성에 비춰 일본은 결국 미국의 요청을 수락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40억달러 이상에 이르는 경수로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이미 KEDO운영비와 부지조사비로 5백80만달러를 냈다.

반면 중심적 역할을 맡은 한국이 낸 돈은 1백8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일본내 여론이 문제삼을 가능성에 대비, 일본이 중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한국은 사전용역비조로 6백만달러를 KEDO에 낸다는 것이 3국간 양해사항인 셈이다.

중유공급비 日에 떠넘긴 대가

▽ 중앙일보 1996. 2. 23

北 중유費 5,000만弗 美, 日등에 분담추진

최원기 기자

미국은 5천만달러가 소요되는 대북(對北)중유 제공 비용을 일본을 포함한 5개국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22일 밝혔다.

미국이 관계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비용조달 방안은 미국이 2천만달러를 부담하고 일본·EU·호주·뉴질랜드·중동 산유국이 나머지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대북 원유 공급에 1천9백만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 23일 각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일본 연립여당 관계자들이 22일 밝혔다.

▽ 중앙일보 1996. 2. 21

EU 집행이사국 가입 KEDO,來14일 논의

한·미·일 3국은 다음달 14일께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 중유공급 재원확보와 유럽연합(EU)의 KEDO 집행이사회 가입문제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절충을 벌인다.

▽ 문화일보 1996. 2. 17

"獨, KEDO에 8億지원"

렉스로트 경제부장관

『독일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금으로 1백55만마르크(한화 약 8억4천7백만원)를 내놓을 것을 약속합니다』

독일의 귄터 렉스로트 연방경제부장관(55)은 15일과 16일 이틀동안의 방한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렉스로트장관은 이어 독일의 동아시아협의회 평양사무소 설치 후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에 관한 說을 일축했다.

그는 『북한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우선 핵사찰 문제가 명백히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돕기 위해 렉스로트장관은 독일이 KEDO에 이같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할 것이라는 독연방외무부장관의 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다른 수교조건으로 인권개선문제를 꼽았다. 최근 북한 하사관의 망명사건등을 고려한 듯 북한의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제3국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만일 독일·북한간에 수교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북한내에서의 투자활동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尹性憲기자〉

▽ 세계일보 1996. 2. 13

KEDO 집행이사회 3월中으로 연기개최

【뉴욕=연합】韓·美·日 3국은 이달중순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를 연기해 오는 3월에 열기로 했다고 KEDO의 한 관계자가 12일 전했다.

▽ 서울신문 1996. 2. 12

核폐연료봉 건식보관 감독

美담당관 北 도착

케네스 키노네스 미국 무부 북한담당관이 11일 폐연료봉 건식보관 작업을 지휘하기 위해 기술진들과 함께 북한 영변에 도착했다고 정부의 당국자가 밝혔다.

키노네스 담당관은 북한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지난 94년 5월 5MW 실험용원자로에서 꺼내, 봉산이 채워진 냉각수조에 습식보관해오던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철제용기에 넣어 밀봉한 뒤, 특수콘크리트로 제작된 2차 용기에 보관하는 작업을 감독하게 된다.

건식보관 작업은 4개월가량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키노네스 담당관도 최소한 수주일 동안 북한에 머무를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李度運기자〉

▽ 조선일보 1996. 2. 24

경수로 후속협상 차질

日서 "핵심부품 제작 참여" 요구

▽ 한국일보 1996. 2. 21

「北경수로사업」 절차 간소화

정부, 특례규정추진 승인요건등 南北경협 간주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화할 對北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으로 규정, 협력사업 승인요건과 물자및 인원의 왕래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등 관련법규및 조항에 대해 경수로사업의 특례규정을 명시하는 「경수로사업 지원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對北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간주, 경협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라며 「이를위해 통일원등 관련 부처및 주계약자인 韓電측과 논의해온 특례규정 제정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인원과 물자의 반출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해 경수로 사업 시행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金炳贊기자】

▽ 동아일보 1996. 2. 23

日, 對北원유 지원액 확정

內閣 오늘의결 1천9백만달러 KEDO 예탁

【東京聯】 일본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위해 1천9백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日연립정당 관계자들이 22일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날 원유비용 부담계획이 집권 연립정당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으며 23일 하시모토 총리 내각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측이 제공할 비용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내에 마련된 특별기금에 예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94년 10월의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 대가로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완공시까지 매년 무상으로 50만t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돼있으나 예산 파동을 이유로 일본의 비용부담을 요청해왔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한국에도 원유공급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희망했지만 한국의 경우 이같은 제의를 거부한 바 있다.

KEDO-韓電 계약 지연

일본이 對北(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에서 자신들이 참여할 사업분야를 사전 확정해 줄 것을 요구, 경수로 후속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주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본의 사업참여 분야를 확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왔다」며 「이로 인해 KEDO와 한국전력간의 주계약자 계약 체결과 올 상반기중으로 예상했던 韓電의 부지인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原電(원전)의 상업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자가 하청업체 선정권을 갖고 있으나, 대북 경수로 사업의 발주자인 KEDO는 집행이사국인 한-미-일 3국의 전원합의체로 운영돼 일본은 주계약자 선정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정부는 일본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동경에서 1차 실무자협상을 벌인데 이어 오는 3월로는 국민과 의회에 10억달러 이상의 비용부담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중요부품」 제작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며 「한국형 원전의 상징성을 갖는 원자로-터빈-제너레이터 제작을 일본에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金演光기자〉

▽ 국민일보 1996. 2. 23

KEDO 美새대표 클리블랜드 大使

【워싱턴=연합】 美국무부는 폴 클리블랜드 대사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새로운 美대표로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부는 클리블랜드 대사가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가 맡았던 KEDO 집행위의 美측 이사직도 자동적으로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996. 2. 25

北경수로 부지조사비 6백만弗 정부, 전액부담 방침

정부는 앞으로 계속될 함남 신포지역에 대한 경수로 부지조사비 6백만달러를 전액 부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4일 『일본이 지난해 출자한 3백만달러로 4차례의 부지조사를 마쳤다』며 『3차, 4차 부지조사를 한국전력이 주도한만큼 앞으로 있을 5차 이후의 부지조사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演光기자〉

▽ 한국일보 1996. 2. 27

EU, 케도에 6백25만弗 지원

공식결의 ASEM서 발표키로

【브뤼셀UPI=연】 유럽연합(EU)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6백25만달러를 지원하기로 26일 공식 결의했다.

EU관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15개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6백25만달러 출연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내달 1일부터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EU가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경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거시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동아일보 1996. 2. 28

北 경수로부지 新浦 확정

KEDO 내달중순 예비조사단 파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최근 북한 신포지역에서 네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수로 부지조사를 마무리짓고 경수로부지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경수로기획단이 27일 밝혔다.

경수로기획단은 지난해 8월부터 80여명의 국내 전문가들을 투입, 이 일대의 3개지역에서 실시한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리 해변에서 1.5㎞ 떨어진 지역 1백만평을 경수로건설부지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수로기획단은 이에 따라 경수로 건설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 관계자들을 다음달 중순 현지에 보내 해양 기후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4차부지조사에 사용된 우리측의 대형 시추장비와 물리탐사기는 이번 주중 신포항을 통해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조선일보 1996. 3. 2

EU, KEDO참여 공식발표

韓-EU, 경제-정치협정 서명

【방콕=金昌基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일 역사적인 경제-정치 협력협정에 서명, 협력의 신기원을 열었으며 EU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의 孔魯明 외무장관과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병행해 가진 회담을 통해 9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경제및 정치 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의 리언 브리턴 副위원장 겸 무역담당 위원은 서명후 가진 회견에서 『이는 유럽과 한국이 무역 파트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무역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치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협정이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했다.

협정은 경제에서 정치, 사법 협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최혜국대우, 통상협력, 농업 및 어업, 해운, 조선, 지적재산권, 표준, 산업 협력, 마약및 돈세탁, 과학기술협력, 환경, 에너지, 문화 협력, 제3국 개발협력, 정치대화,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韓-EU 외무장관들은 EU의 KEDO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EU는 북한의 2개 원전을 2개 경수로 원자로로 대체해 주기 위한 KEDO의 사업에 1차로 5백만 유럽통화(ECU)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1996. 2. 25

北중유 지원비용 日, 추가부담 불응

하시모토 총리

【도쿄=田賢一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日총리는 23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對북한 중유 제공과 관련, 일본 정부는 앞으로 재정부담을 하지않을 방침임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하시모토총리는 이날밤(한국시간 24일 오후) 美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에서 빌 클린턴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해 첫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일본측이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공급 대금의 일부인 1천9백만달러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한뒤 『중유제공은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 더 이상 재정부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 세계일보 1996. 3. 3

경수로 韓國중심역 재확인

KEDO총장 美기업 PC 기술자문역 한정

【워싱턴=申相一특파원】 對北 경수로사업과 중유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은 1일 미국기업이 맡게될 프로그램코디네이터(PC)의 역할은 기술적 자문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혀 주계약자인 한국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보스워스 총장은 이날 KEDO의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한 자리에서 사업의 전반적 감리는 북한에게 경수로제공을 약속한 주체인 KEDO가 담당하며, PC는 이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만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워스의 이같은 발언 내용은 對北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가 될 한국기업이 설계에서부터 시공 건설 인력훈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스워스 총장은 이어 중유제공문제와 관련, 『금년분 50만t의 중유를 확보하기에는 KEDO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자금이 없어 북한에 기름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3. 8

"월말께 경수로 후속협상"

KEDO 北과 통신·통행보장등 집중논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이달말쯤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張瑄燮 경수로 기획단장이 7일 밝혔다.

張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양측은 아직 회담장소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회담장소와 관련, 경수로 건설 예정지역인 신포지역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KEDO측은 뉴욕이나 북경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張단장은 『후속협상에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해 우선 영사보호문제와 KEDO의 법적 지위 및 특권부여 문제, 통신 및 통행보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KEDO는 오는 18일께 뉴욕에서 張단장과 세키 히로모토(瀨木博基) 일본 경수로담당대사와 폴 클리블랜드 미국 경수로 담당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이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협상대책과 ▲경수로부지 선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역할 및 선정기준 ▲경수로 비용분담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폴 클리블랜드 미국 경수로 담당대사는 오는 9일 취임인사차 한국을 방문하고 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등 우리측 당국자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具本永기자〉

▽ 중앙일보 1996. 3. 8

北경수로 분할계약 추진

KEDO 한국 核心공사 놓칠 우려

최원기 기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최근 40억달러 상당의 대북(對北)경수로 상업계약을 일괄계약이 아닌 분할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KEDO내 중심역할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잘못된 구도의 분할계약에 말려들 경우 터빈·제너레이터등 경수로 사업의 핵심 공사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으로 돌아갈 공산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할계약이란 KEDO가 주계약자인 한전측과 경수로 계약을 부지정리·원자로·시공·연료공급 계약등 3~4개로 세분화해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일괄계약 방식 입장을 취해왔다.

경수로기획단의 한 소식통은 7일 『KEDO의 계약·기술자문역인 잭 멀리건을 단장으로 한 멀리건 조사팀이 최근 방한(訪韓), 한전측과 두차례이상 만나 분할방식에 의한 상업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내 대북관련부서 일부 관계자들은 『일괄계약을 할 경우 주계약자인 한전이 하청업자 선정권과 발주권을 확보하지만 분할계약을 할 경우 한전의 역할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오는 18일 뉴욕에서 KEDO 집행이사회를 열고▶계약방식▶KEDO·북한간 세부약정 협상▶추진 일정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신임 KEDO 집행이사 폴 클리블랜드 대사가 9일 신임인사차 방한,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 등을 예방한다.

▽ 한국일보 1996. 3. 9

韓電 北경수로 주계약자 확정

月末 합의문작성

KEDO-韓電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은 이달 말께 미국 뉴욕에서 열릴 KEDO집행이사회에서 대북경수로공급 주계약자로서 한국전력의 법적 지위를 확정짓는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해 KEDO 집행이사회에 의해 경수로공급사업의 주계약자로 내정만 된 상태』라며 『1년이상 걸릴 상업계약체결과 사업추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최근 한전을 주계약자로 확정짓는 합의문 마련에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한전을 주계약자로 명시하고 공급방식을 턴키베이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무부측은 합의문이 국제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지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1996. 3. 8

경수로 日입김 커질 가능성

KEDO 분할방식 계약 맺으면…

터빈·제너레이터 한국受注 차질 우려

정부선 "크게 신경쓸것 없다" 여유부려

최원기 기자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폴 클리블랜드 미대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40억달러 상당의 경수로 사업을 분할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자체가 워낙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94년10월 북·미 제네바 핵협상 타결 뒤 경수로를 단순히 에너지 공급 차원이 아닌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때문에 경수로 공급을 책임진 KEDO로서는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게됐다.

북한이 통신·통행등 순수한 경수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마저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은 결과 경수로 사업 자체가 예정 시간표보다 이미 1년가량 지연됐다.

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 도저히 예정 공기안에 경수로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게 KEDO의 판단이다.

KEDO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분할계약 방안이다.

경수로 사업을 통상적인 관례대로 일괄계약할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늦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예 계약자체를 3~4개로 세분화해 하나씩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계약은 부지정리·원자로·시공·연료공급등으로 나눠 하나씩 추진되며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측은 KEDO의 이러한 분할계약 추진에 대해 「크게 신경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어차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천명해놓은 이상 계약을 한뭉치로 하든 여러 조각으로 나누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한국이 KEDO와 잘못된 구도의 분할계약에 말려들 경우 중심적 역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터빈·제너레이터등 경수로 사업의 핵심공사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으로 돌아갈 공산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분할방식이 채택될 경우 결과적으로 터빈·제너레이터 사업수주를 바라는 일본의 운신의 폭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일괄계약 방식을 채택하면 40억달러에 달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하청권과 발주권은 일단 주계약자인 한전이 확보하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방식을 채택할 경우 KEDO 집행이사국으로 비토권을 가진 일본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만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상한 구도의 분할계약 방식이 채택될 경우 한국은 굉도 잃고 매도 잃는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결들여 사소한 듯 하지만 북한 중유공급비용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곡절을 살펴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분할계약방식이 나중에는 헤어나기 어려운 교묘한 「함정」일 수 있다는 얘기다.

▽ 서울신문 1996. 3. 9

北경수로 인력 陸路통행 추진

政府, 平壤에 제의 방침

기술진등 板門店왕래 검토중

海·空路보다 경비·시간 절약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 인력등의 이동및 운송 경로등과 관련, 기존의 해·공로 수송방식 이외에 판문점을 통한 육로 통행을 추가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3월말께부터 본격화될 경수로 공급 후속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리 기술진과 장비의 북한의 경수로 건설부지로의 왕래가 급증할 경우 현재처럼 ▲장비는 남북간 동해안 항구를 활용하는 해로 수송▲기술인력은 중국 북경공항을 경유한 항공로를 이용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되면 북한에 상주하는 우리 인원이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술인력의 통행로 추가확보가 안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이같은 통행방식 추가방안등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연말 타결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은 북측이 지정하고 KEDO가 합의하는 해·공로를 통행로로 허용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체제동요를 우려한 북한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판문점을 통한 육로 수송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필요할 경우 추가 통행로가 고려된다는 조항으로 추후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북경을 통해 비행기로 평양으로 들어가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북한 신포 경수로 예정지까지 가는 방식으로 4차에 걸친 부지조사작업에 참여한 한 실무 관계자는 『평양에서 신포까지 기차로 10시간 이상이 걸리는데다 그나마 기차를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기술인력이 중국을 경유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간 육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 절약이나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는 경수로지원사업의 취지에도 걸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具本永기자〉

▽ 중앙일보 1996. 3. 12

경수로 한국중심 추진
訪韓 美國대사 재확인

한·미 양국은 1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위상강화를 위해 KEDO를 확대개편하고 대북(對北)경수로사업을 한국의 중심적 역할 아래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폴 클리블랜드 경수로담당 대사는 이날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KEDO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국제기구로 KEDO의 위상을 높이고 대북경수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확대, 기여금 확보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했다.

▽ 중앙일보 1996. 3. 11

北 핵사찰 거부 논의
18일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집행이사국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데이비드 키드 IAEA 대변인은 1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IAEA 집행이사회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 경위와 문제점을 담은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3. 13

경수로 주계약자 韓電선정

18일 뉴욕KEDO회의서 공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2일 빠른 시일내 (주)한국전력이 對北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 위치를 보장받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폴 클리브랜드 KEDO집행이사회 의장과 李宗勳한전 사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18일쯤 뉴욕에서 열린 KEDO집행이사회에서 한전을 주계약자로 공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韓電이 법적 주계약자로 확정되면 하청계약 체결, 북한의 신포부지 조사등 후속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원활한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계약(PPS)과 주계약을 나누어 실시키로 하고 작년 9월 콸라룸푸르 합의에 따라 한국형원자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중인 클리브랜드의 장은 13일쯤 이한한다. 〈趙敏皓기자〉

▽ 한겨레신문 1996. 3. 17

북한행 중유 이달중 4만t
호남정유

호남정유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로부터 대북한 중유 공급권을 따냄에 따라 이달중 모두 4만2천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호남정유는 최근 국제입찰에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으로 t당 1백30달러에 5백46만달러어치의 원유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급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남정유는 1차로 19일 2만2천~2만3천t의 중유를 전남 여천의 전용부두에서 선적하고, 26~28일에 나머지 1만9천~2만t을 북한 선봉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정유는 지난해 1월11일 국내 최초로 북한에 중유를 공급했었다. 신현만 기자

▽ 한국일보 1996. 3. 14

北, 경수로지원 마지막 제의

아국 전수로지원단 철수 상대지구로

북한은 한국전력의 자지 계획 추진하여 북지구(KEDO)가 추진 중인 대북경수로 공급사업의 실무 조정이로 아국의 경수로지원단의 해외파견을 가정 「남북(남북 신뢰)회전수로지원단」을 구성할 것이로 13일 밝혔다.

정부의 한 대북전문가는 『경수로사업이 북한 신뢰를 전제로 KEDO 북지원사업의 핵심이 마무리되면 아국 전수로지원단의 역할이 없어진다』며 『그러나 대북 여러분의 상호 이해 아국 전수로지원단의 실무적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아국 전수로지원단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경제협력 전지원단이 북한에 파견되면 전수로지원단은 북한에 여러분의 해지원을 주, 남북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가 주축이 될 것이라는 해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KEDO에의 파견을 여러분, KEDO 북지원사업의 북한 내 활동을 해지원 해지원을 선 전제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KEDO 북지원사업의 북한 내 활동을 해지원 해지원을 주, 남북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KEDO에의 파견을 여러분, KEDO 북지원사업의 북한 내 활동을 해지원 해지원을 선 전제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KEDO에의 파견을 여러분, KEDO 북지원사업의 북한 내 활동을 해지원 해지원을 선 전제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3. 19

北, 경수로지원 해외파견 제의

핵문제 해결 전제 조건 아국 전수로지원단 파견 요청

IAEA총장 밝혀

핵문제 해결 전제 조건 아국 전수로지원단 파견 요청

【빈=연합】北韓이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외 전수로지원단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

한국 정부는 IAEA 사무총장이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외 전수로지원단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5일 북한을 방문한 IAEA 해외전수로지원단 파견 요청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외 전수로지원단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때 북한은 해외전수로지원단 파견 요청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외 전수로지원단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3. 27

北-KEDO 경수로협상 새달 재개

뉴욕서

【뉴욕=李健永특파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경수로 공급 협상을 북한과의 1차 협상이 있은 지 4개월 만인 4월 8일 뉴욕에서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미·일 3국 정부가 19일 하와이(현지시간)에서 밝혔다.

KEDO 집행이사회에 참석중인 한국 측 대표인 한·미·일 3국 정부가 이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3. 19

경수로협상 진전 보여

뉴욕 KEDO집행이사회

【뉴욕=李健永특파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이달 18일 뉴욕(현지시간) 뉴욕 KEDO사무국에서 개최된다.

19일까지 이틀간의 협의는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對北 KEDO의 지원계획과 對北 경수로협력협정체결 문제 등 협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 등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사무국에서 밝혔다.

유럽원자력공동체(EU)의 KEDO 집행이사회 가입문제 등 이날 협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 등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사무국에서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3. 18

EU 거부권없는 理事國으로

〈유럽연합〉

韓·美·日 접근 오늘 KEDO이사회서 확정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유럽연합(EU)의 지위와 관련, 「비토권이 없는 집행이사국」으로 참여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미·일 세나라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한 비공식협의에서 이와 같이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18일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KEDO집행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유럽연합을 한·미·일과 동등한 자격의 KEDO집행이사국에 넣자는 주장을 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집행이사국이 너무 많을 경우 KEDO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미국측의 주장에 난색을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도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 이번 뉴욕 집행이사회에서 EU를 새로 KEDO집행이사국에 넣되 한·미·일 3국에만 비토권을 부여한는 방안을 수용할 뜻을 비치고 있으며 일본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KEDO집행이사회에서는 EU의 참여문제와 함께 한전의 주계약자 지위 결의, KEDO요원에 대해 준외교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협약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특히 북한이 경수로 건설 예정부지인 신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5천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KEDO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대응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경수로부지의 북한 주민들을 소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북한측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가재도구 등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李穆熙·李度運기자〉

▽ 세계일보 1996. 3. 20

경수로 주계약자 韓電 확정

KEDO 오늘 서명식 사무총장단 26일 訪北

【뉴욕=柳惠珠특파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시내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韓·美·日 3국 등 총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집행이사회를 열고 韓國電力을 對北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韓電은 앞으로 對北경수로 사업에 있어 포괄적이고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KEDO와 한전은 이에 따라 20일 오후 뉴욕시내 헨슬리호텔에서 주계약자 공식지정 서명식을 가진후 앞으로 7~8개월동안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업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측에서 張瑄燮 경수로 기획단 단장, 미국측에서 폴 클리블랜드대사, 일본측에서 세키히로모토대사가 각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의정서 협상을 4월중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유럽연합(EU)의 집행이사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EU의 지속적인 KEDO지원 약속 표명이 있을 경우 가입에 따른 제반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崔英鎭사무차장 포함

【뉴욕=柳惠珠특파원】스티븐 보스워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총장과 崔英鎭 우메즈 이타로 사무차장 등 KEDO 총장단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북한을 방문한다고 KEDO사무국이 18일 발표했다.

KEDO에 따르면 보좌관 3명과 함께 총 6명의 KEDO방북팀은 이번 주말 北京으로 향발 26일 평양에 도착한 뒤 경수로부지로 예정돼 있는 함경남도 신포지역을 돌아볼 예정이다.

▽ 한국일보 1996. 3. 21

KEDO집행이사회 EU 추가참여

【뉴욕 = 趙在鏞특파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는 유럽연합(EU)을 韓美日 3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에 추가로 참여시켜 집행이사회를 4개국으로 확대키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KEDO와 韓美日은 이날 상오 이사회 폐막에 앞서 가진 4자회담에서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재정적 참여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1996. 3. 21

韓電「경수로」주도 轉機

「주계약자」지정받아 法的지위 확보

訪北기술자 문제등 후속협상 관심

對KEDO「합의서」서명 안팎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20일 「주계약자지정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북한에 턴키베이스로 제공되는 1천MW용량의 경수로 2기건설사업을 한전이 주계약자로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주계약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수로사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韓·美·日 3국이 지난해 6월13일 한국전력을 주계약자로 내정한 지 10개월여만이다.

「한국형경수로」 한전 主계약자는 對北경수로사업에서 「한국중심」을 강조해온 한국의 사활적 이해였다. 하지만 93년이후 진행된 北核-경수로협상과정에서 韓·美·日 3국이 공식문서를 통해 「韓電 主계약자」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그동안 『경수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한전이 사업을 주도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美·日양국을 집요하게 설득해온 결과이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들은 ▲美-日 양국이 상업적 이해와 관계없이 한전 主계약자지정에 원만히 합의했고 ▲북한이 한국외교관인 崔英鎭사무차장 등 KEDO사무총장단의 訪北을 허용한 사실을 들어 『경수로건설사업이 정치논리보다는 상업성과 국제관행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韓電은 1~2년이 소요될 KEDO와의 상업계약 체결전까지는 「사실상의 主계약자」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때까지는 KEDO와 필요한 사업마다 「사업전 용역계약(PPS)」을 체결하고, KEDO의 승인하에 부분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북한에 파견되는 기술자들의 영사보호, 부지인수작업 등을 협의할 KEDO와 북한간의 후속협상이 4월 둘째주중에 뉴욕에서 개최된다.

〈金濱光기자〉

▽ 경향신문 1996. 3. 20

"訪北허용은 한국중심역 인정"

崔英鎭 KEDO사무차장 일문일답

경수로공사 6개월뒤 착공예상

26일 북한을 방문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崔英鎭사무차장(대사급)은 형식상으로는 한국관리가 아니며, 방문지가 신포지역으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새정부들어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崔사무차장은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8월 KEDO사무국이 발족한 후 총장단 방북계획을 세웠다가 북한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인가.

『상황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총장단 방북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당시에도 내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때 추진했던 방북계획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은 어디까지나 부지선정 작업과 관련된 실무적인 것이다』

—이번 총장단 방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구체적으로는 이미 확정단계에 있는 부지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경수로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崔차장이 한국 국적이라는 점이 문제되지 않았는가.

『북한은 한국이 중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KEDO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4번 부지조사단이 갈 때마다 한국측 기술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이 없으면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받아들인 것이다』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한전과 매달 서울과 뉴욕에서 번갈아 주계약협상을 갖기로 했다.

북한과의 후속협상은 4월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약 6개월걸릴 것 같다. 그러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하다』

【뉴욕=姜琪錫특파원】

▽ 중앙일보 1996. 3. 22

"8~9월께 경수로 부지정리 착수"

KEDO 北 신포지역 추가조사실시

뉴욕=이장규 특파원

스티븐 보스워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이 경수로 부지로 제안한 신포지역에서 오는 8월말 또는 9월초께 부지 정리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워스 총장은 이날 한국전력을 대북(對北)경수로 사업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하는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KEDO는 신포지역 부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측과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른 후속 의정서 교환 협상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3. 27

KEDO대표단 6명 訪北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崔英鎭·우메즈 이타루(至梅津)사무차장등 KEDO대표단 6명이 북경을 경유해 26일 방북했다.

경수로 기획단측은 『KEDO총장단이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함경남도 신포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26일 방북했다』며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북한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스워스 총장은 부지시찰후 북한측 경수로 관계자들과 만나 다음달 8일부터 뉴욕에서 예정된 KEDO와 북한간의 후속협상문제와 부지조사단 추가파견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기획단측은 밝혔다.

KEDO 총장단은 또 방북직후 서울에 들러 우리 정부측 인사들과 만나 방북결과에대해설명한다.

▽ 세계일보 1996. 3. 30

韓電、내달초 조사단派北

경수로부지 환경조사등 실무작업 착수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전력을 북한원전 건설의 주계약자로 공식지정함에 따라 한전은 원전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李壽成총리, 權五琦통일부총리, 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인사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EDO로부터 북한 원전건설의 주계약자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이에 따라 다음달초에 10여명의 기술자로 구성된 부지조사단을 2차로 북한에 파견, 기상 인구분포 도로등에 대한 환경조사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전은 또 지금까지의 현지조사결과와 KEDO-북한간 별도의정서 협상결과를 토대로 1백㎿급 한국표준형원전 2基가 세워질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리 일대 30만평에 대한 부지인수작업에 나서게 되며 부지가 인수되는대로 현장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文成龍기자〉

▽ 한국일보 1996. 3. 30

北경수로 의정서협상 내달8일 뉴욕서개최

【뉴욕 = 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다음달 8일부터 對北경수로공급협정 체결에 따른 첫 의정서 체결 협상을 뉴욕에서 갖는다고 KEDO측이 29일 밝혔다.

KEDO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의 의제는 KEDO 직원의 특권문제 및 영사보호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3. 21

韓國 중심역할 시비 일단락

경수로사업 全權… 法的지위 보장받아

정치적 이해관계 매듭 실무단계 돌입

뉴욕 KEDO집행이사회 결산

18일부터 사흘동안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가장 큰 결실은 (주)한국전력이 對北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로 공인받았다는 사실이다.

작년 6월 발라톤루르 회의 이후 韓電이 주계약자로 내정은 됐지만 비공식적이었으나 이번에 법적 문서상으로 공인됨으로써 한국의 중심적 역할과 한국표준형원자로 건설문제는 완벽히 매듭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전이 주계약자로 공식 등장해 이제 對北경수로 건설사업은 한국형보장문제나 韓-美-日 3국과 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실무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한-미-일 3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핵문제 경수로제공문제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없지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은 남한배제 전략의 일환으로 崔英鎭KEDO사무차장이 포함된 총장단의 방북을 거부하는등 경수로사업이 순탄치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전이 주계약자가 되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KEDO총장단 방북을 북한이 허용한 것은 의미가 깊다 하겠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KEDO와 북한간 의정협정등 후속협정체결을 비롯, 한전-KEDO간 상업계약체결, 경수로비용분담, 對北중유제공, 신포부지조사 문제등이다. 한전은 주계약자로서 5~7년 정도 걸리는 원자로 설비(NSSS), 터빈-제너레이터(T/G), 종합설계(A/E)등 핵심기기를 발주, 협상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 과제들은 「難題」가 아니어서 경수로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될 후속협정은 오는 4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며 △KEDO의 법적지위 △경수로 건설 물자수송및 기술자 방북 경로문제등을 다루게 된다. 이 협상에선 물자육로수송과 건설인력의 만문점 통과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정부는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 점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KEDO가 벌여온 북한의 신포부지 조사는 5차부터는 사업전용역계약(PPS)에 따라 한전이 주도하며 공사 착수에 필요한 용수 도로 숙소 전기등 기반공사도 뒤따를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일정은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안들이다. KEDO-한전간 상업계약이 체결될 무렵부터 재개될 한-미-일 3국의 경수로 비용분담문제가 다소 골칫거리이긴 해도 사실 이 문제는 3국간에 어느정도 타협점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비용분담에 따른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경수로기획단측의 주장이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연내 신포부지에 삽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趙敏皓기자〉

▽ 조선일보 1996. 3. 31

"北" 경수로 굴뚝건설기구 불도

新濟지역 주민이주-학교移轉 진행

崔英鎭 KEDO차장

북한은 경수로건설현장에 굴뚝건설기구를 투입, 진행하였다고 신포지역의 주민이주와 학교이전 등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로 30일 알려졌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단의 30일현재 지난 26일부터 5일간 경수로건설예정지인 함남 신포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 崔英鎭 KEDO 사무차장은 『북한은 경수로 상업화공을 앞에 두고』 이중냉각탑 5백여 가구중 1백40여 가구를 7백여평으로 이주시키고, 학교 1개를 이미 이전했다면서 『경수로완공의 목표시기 내년말까지 이중냉각탑 철거작업을 끝내고 경수로 관련 굴뚝기구도 철거시킬 것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측은 경수로사업에 적극적이란 인상을 보였다』면서 『북한은 4월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흑연감속로 해체 의제 부 평상과 관련한 협의로 12명의 대표를 파견할 것임이라고 전했다.

崔 차장과 동행했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우메모토 이쿠루(梅基郁) 사무차장 등 KEDO 대표단은 30일 북경을 경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宋義漢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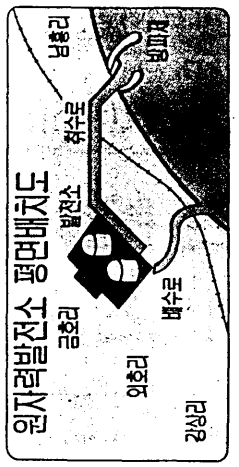
▽ 세계일보 1996. 3. 30

北 경수로 부대시설 공사 시작

전력-용수등 부대시설부터 설치후 시운전

2000년 경수로핵심작업…3년후 시운전

工期,약10년…연인원 1천만명 달할듯



북한이 경수로건설현장에 부대시설 공사를 시작한 것이 30일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확인되었다. 북한은 지난 19일 KEDO 관계자 일행이 방문한 함남 신포지역 경수로 현장에 전력 및 용수 등 부대시설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부대시설은 경수로 완공 3~4년 전에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KEDO 관계자는 "북한이 경수로 부대시설 공사를 시작한 것은 경수로 공사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KEDO와 협력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수로 공사는 올해 4월 기초공사를 시작, 2000년 경수로 핵심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3년 경수로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KEDO는 경수로 부대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 현재 1백~150명 수준인 KEDO 직원 수가 3백~50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들 가족 등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이 북한 신포 인근지역에 체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DO는 경수로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 북한 측에 전력 용수 등 기초시설 공사를 요청했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 시작 전에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설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가 본격화되면 KEDO와 협력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KEDO는 경수로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 북한 측에 전력 용수 등 기초시설 공사를 요청했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 시작 전에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설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가 본격화되면 KEDO와 협력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KEDO는 경수로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 북한 측에 전력 용수 등 기초시설 공사를 요청했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 시작 전에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설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가 본격화되면 KEDO와 협력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KEDO는 경수로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 북한 측에 전력 용수 등 기초시설 공사를 요청했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 시작 전에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설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경수로 공사가 본격화되면 KEDO와 협력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宋成鎭기자>

▽ 세계일보 1996. 3. 31

KEDO와 '한지붕 세가족'

대북 경제협력 본격화 기대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사무총장 일행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함남 신포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 것은 북한과 KEDO 사이에 경수로 사업 이외의 다른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KEDO 사무총장 일행은 이번 방문 때 북한 측과 경수로 사업 이외의 다른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KEDO 사무총장 일행은 이번 방문 때 북한 측과 경수로 사업 이외의 다른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KEDO 사무총장 일행은 이번 방문 때 북한 측과 경수로 사업 이외의 다른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KEDO 사무총장 일행은 이번 방문 때 북한 측과 경수로 사업 이외의 다른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崔英鎭기자>

▽ 중앙일보 1996. 4. 8

對北경수로 후속의정서 첫 협상

KEDO-北 뉴욕서 시작

뉴욕=이장규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제1차 후속의정서 체결협상에 착수한다.

지난해말 KEDO와 북한이 경수로 공급협정에 서명한 후 첫 번째 공식대좌인 이번 협상은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한 채 중무장 병력을 판문점에 투입하는등 일련의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KEDO와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대북(對北) 경수로 공급사업과 관련, 북한에 파견되는 KEDO및 한전(韓電) 직원의 법적지위와 특권, 면제및 영사보호 의정서 체결에 관해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은 또 오는 16일부터 뉴욕에서 통신및 통행보장에 관한 의정서 체결협상을 벌이며 추가 협상은 북한의 묘향산지구에서 가질 계획이다. 이번 북한 대표단의 여비및 체재비는 KEDO측이 부담하게 된다.

▽ 경향신문 1996. 4. 4

北 경수로 6~7월 착공

崔英鎭 케도차장 도로등 기초공사 서둘러

이르면 오는 6~7월부터 해안진입도로공사등 대북 경수로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崔英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차장은 3일 『북한은 조속한 경수로사업을 강력히 원했다』면서 『부지확정전이라도 영사문제등 최소한의 필수적인 문제만 합의되면 2~3개월내에 도로공사등 기초적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崔차장은 『북한은 경수로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양화부두와 신포간의 8㎞ 도로공사, 인부숙소 건설, 산을 깎기위한 중장비 반입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영사보호, 통행 및 통신 서비스, 부지인수 등에 관한 부속 의정서가 마련되는대로 이들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KEDO간의 후속협정에 관한 협상은 『뉴욕과 북한의 묘향산지역을 번갈아 가며 열기로 합의했다』며 『첫 협상은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承哲·李大根기자〉

▽ 세계일보 1996. 4. 14

北, 경수로기술자 면책특권 거부

"국제관례 어긋나…신변안전만 보장"

1차후속협상

【뉴욕=연합】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2일 오후 (현지시간) 5일째 뉴욕시내 KEDO 사무국에서 對北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1차 후속의정서 협상을 속개하고 KEDO 직원및 경수로 사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될 기술인력의 법적지위, 면책특권, 영사보호 문제등을 논의했다.

KEDO의 한 실무관계자는 『양측간 법적지위및 면책특권에 관련된 의정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면책특권 대상의 범위』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은 경수로 주계약 사업자로 내정된 한국전력의 순수 기술인력에 대해 면책특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북한측은 특히 『경수로 사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되는 기술인력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그대신 파견 기술인력에 대해선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세계일보 1996. 4. 4

"北, 경수로 준비 열성"

KEDO관계자가 밝힌 현지상황

光케이블 깔고 주민-학교도 이전

빠르면 6~7월쯤 공사시작될듯

북한은 요즘 경수로 건설 사전준비에 한창이다. 경수로가 들어설 신포지역의 5백가구 중 이미 1백40가구를 이주시킨 것을 비롯해 지역내 학교도 옮겼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북한을 방문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함흥~신포간 60㎞의 光케이블도 이미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KEDO 崔永鎭사무차장은 3일 『신포에서 뉴욕, 도쿄와 직통전화-팩스 통화를 했는데 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전하면서 『시돈는 안해봤지만 아마 서울과도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구소련이 신포부지조사 때 사용했던 30~40명 규모의 숙용시설도 최근 90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특히 우리의 경수로기획단과 비슷한 기구를 만든 것 같다고 崔차장은 전하면서, 이 기구는 정부-원자력총국이 주축이 돼 9개부서 실무자로 편성됐고 책임자는 북-미 핵회담의 북측대표인 許鍾대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은 예상외로 경수로 건설 준비에 열성이다. 오히려 왜 경수로 건설의 「삽질」을 늦추느냐고 KEDO 총장단을 다그치더라는 후문이다. 북한측 한 관계자는 『파종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확한 원자로 설치위치를 알려줘야 논밭 땅과 농토를 구분하지 않겠느냐』며 속을 태웠다고 崔차장은 전했다.

崔차장은 북한의 이같은 발빠른 준비에 맞춰 평양에 대북창구를 개설했다고 일본측 KEDO 사무차장 우메즈(梅津至)가 밝혔으며, 4월 중순 5차 부지조사를 하고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면 빠르면 6~7월쯤 최종 부지가 결정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로 건설 예정지는 현재로선 해발 1백m의 금호리 C지구가 낙점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로 설치지역이 최종 결정되면 30m로 깎아 원자로를 설치하게 된다.

신포발전소 건설에 앞선 예비조치로는 스도로 건설 스경수로 정지작업 스대규모 임시숙소 설치 등 3가지. 북한측은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표준형을 놓고 「유령」이라 했는가하면, 한국형 경수로 건설을 「트로이 목마」라면서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다.

〈趙敏皓기자〉

▽ 중앙일보 1996. 4. 16

濠 "경수로費 160만弗 추가 지원"

다우너 외무 밝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회원국인 호주는 지난해 KEDO에 5백만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1백60만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다.

경수로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15일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외무장관이 14일 KEDO집행이사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장, 폴 클리블랜드 미 경수로담당대사, 세키 히로모토 일 경수로 담당대사 등 KEDO 집행이사단은 KEDO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재정기여를 권유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호주·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 4개국을 방문하고 있다.

▽ 중앙일보 1996. 4. 15

경수로 비용 北, 20억달러 더 요구

KEDO와 타결된 45억달러와 별도

3월말 외교경로 통해 美국무부에 전달

안희창 기자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명목으로 20억달러를 추가제공해 줄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3월말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요구를 미 국무부측에 전달했으며, 미국은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20억달러는 지난해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타결된 경수로 공급협정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건설비용(45억달러 추정)과는 별도의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발전소가 들어서는 신포지역 주민의 이주및 정착비용등을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보브 칼린 정보조사국 부과장등 미 국무부 관리 2명이 오는 20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의 방북(訪北)은 미사일 협상, 미군유해 송환협상 문제등 일련의 북·미 협상에 대한 사전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나 경수로 추가비용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1996. 4. 16

경수로 의정서협상 난항

KEDO-北 韓電기술인력 면책특권 이견

【뉴욕=李圭敏】지난주부터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 의정서 협상이 기술인력에 대한 지위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KEDO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8일부터 경수로 공급사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될 인력의 법적지위 면책특권, 영사보호문제 등을 협의해 왔으나 이중 기술인력의 면책특권 부여문제에 견해 차이를 보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KEDO측은 경수로 공급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측은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변보장만 해 주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EDO와 북한 양측은 16일부터 통신과 통행보장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시작한다. 이 협상에서도 인력 및 물자의 수송을 위한 수송로 선택을 놓고 육로에 많은 비중을 두려는 KEDO측과 해로를 통한 우회로에 치중하려는 북한간에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번 뉴욕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 북한의 묘향산 지구에서 추가협상을 열어 협의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 경향신문 1996. 4. 18

對北경수로 협정 의정서협상 착수

【뉴욕=연합】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6일 오후2시(현지시간) 뉴욕에서 지난해말 서명된 對北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통신과 통행보장에 관한 의정서협상에 착수했다.

첫날 협상에서 KEDO측은 미첼 리이스 사무총장 보좌관을 수석대표로 朴仁國 경수로 기획단 국제협력부장등 7명이, 그리고 북한측에서 수석대표인 이명식 원자력총국 고문(61)과 통신전문가인 정종력(56)등 7명이 각각 참석했다.

▽ 세계일보 1996. 4. 18

4者회담 성사 노력 KEDO 막후역할

印尼 외무장관

【자카르타=AP연합】인도네시아는 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16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4者회담 제의를 북한측에 전달하는등 회담성사를 위해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리 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17일 말했다.

알라타스장관은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요청받거나 수행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보다 안전한 원자로 공급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에 막후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4. 16

新浦주민 이주비 요구

北, 경수로 관련… KEDO에 5백만弗

북한이 경수로 원전 건설예정지의 주민 이주 및 보상비용으로 5백만달러 상당의 추가지원을 요청해 온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원자로가 설치될 함남 신포시 금호리 어인봉 일대의 주민 5백가구가 이주 대상이며, 현재 절반가량의 주민이 이주를 마친 상태』라며 『북한은 이주경비와 이주민들의 6개월분 생활비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수로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KEDO가 부지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할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지만, 원전 건설회사가 원전주변 주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며 『뉴욕 경수로 후속협상에서 곧 북한의 요구를 놓고 절충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7백m 이내에서는 주민을 완전 철수시키고, 반경 8㎞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원전의 비상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金演光기자〉

▽ 조선일보 1996. 4. 20

北"러 KEDO참여" 訪北 러차관에 제의

【서울=聯】북한은 러시아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 金永南 외교부장 등과 회담을 가졌던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8일 러시아방송과 회견을 갖고 『평양에서의 정치회담 도중 북한측은 러시아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4. 20

KEDO에 3년간 30만달러 추가지원

싱가포르

【싱가포르=PA연합】싱가포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위해 매년 10만달러씩을 3년 동안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싱가포르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KEDO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이익을 되돌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KEDO는 이 지역의 핵확산을 억제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4월 KEDO에 30만달러를 출연한 바 있다.

▽ 국민일보 1996. 4. 20

케도 후속협상 終結될듯

北 "韓電기술자도 特權부여" 신축태도

의정서 최대걸림돌 제거

【뉴욕=연합】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9일 경수로공급사업을 위해 KEDO직원과 북한에 파견될 한국전력 등 한국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지위 및 특권, 면제, 영사보호의정서 협상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뉴욕시내 KEDO 사무국에서 속개된 2주째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에서 특권 및 면제문제와 관련, 경수로 주계약사로 선정된 한전 등의 순수 기술인력에 대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다소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KEDO의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KEDO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 특권과 면제부여 불가입장에서 이처럼 후퇴함에 따라 양측 협상의 최대의 걸림돌이 사실상 제거된 셈』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양측의 의정서 협상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1996. 4. 21

新浦지역에 '남한타운'

北, 우리측 기술자 격리 목적 추진

김용호 전문기자

북한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내 경수로건설 부지로 선정한 신포지역에 한국인 기술자전용 거주지역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북한당국이 경수로 건설기간중 신포에 상주하게 될 남한기술자들을 북한주민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용거주지역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포에 건설될 울진3,4호형 경수로의 실질적 건설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적지않은 수의 남한 기술자가 건설기간중 현지에 상주하게 된다.

이 소식통은 약 5백명 수용규모로 알려진 이 전용거주지역에는 거주시설 외에 최소한의 위락시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경수로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1~2년후부터 완공시점인 2000년대 중반까지 남한기술자들의 거주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1996. 4. 23

5차부지조사단 파견

케도, 27일 北신포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함남 신포지역에 5차 부지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경수로기획단의 한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李大根기자〉

▽ 경향신문 1996. 4. 21

北核연료봉 재사용 위협

美하원 예산거부로 「밀봉」 지연에 반발

【뉴욕=姜琪錫특파원】美에너지부가 의회와 마찰을 빚어 4백10만달러의 예산을 추가집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NAC 인터내셔널사는 95년 에너지부와 계약을 맺고 영변 핵발전소 근방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해 왔으며 현재 8천개에 이르는 핵폐기봉을 처리, 3백60개의 봉(캐니스터)속에 저장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북한 핵폐기물 처리작업에는 당초 1천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작업이 시작된후 규모가 늘어나 현재는 총2천만~2천5백만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의회는 이미 1천3백6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최근 하원의 에너지 및 수자원개발에 관한 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인 존 마이어의원(인디애나주)이 이중 4백10만달러에 대한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전체 작업이 난관에 부딪쳐 있다는 것이다. 핵폐기봉 밀봉작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연료봉의 부식이 가속화되고 결국은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북한마저도 최근 밀봉작업이 지연된다면 자신들의 재처리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 세계일보 1996. 4. 24

경수로 통신-통행협상 난항

北, 국가안보 이유 독자통신망 사용 반대

【뉴욕=柳萬珠특파원】對北 경수로 공급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통신및 통행에 관한 의정서 체결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KEDO의 한 관계자는 22일 오후(현지시간) "대북경수로 공급을 위한 통신및 통행에 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고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통신 부분에서 독자적인 위성통신망(무궁화위성)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KEDO에 반해 북한은 자국 위성망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팽팽한 입장 대립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통행과 관련한 협상에선는 KEDO는 경제적 이유에서 최단거리 통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로는 일부분을 경유하고 해로는 군사수역(해안에서 25~26마일)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EDO직원과 KEDO가 파견한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지위및 특권, 면제,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협상도 북한이 KEDO가 파견한 기술인력에 대해 신변안전은 보장하나 외교관 특권은 인정치 않으며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노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 중앙일보 1996. 4. 23

서울~新浦 위성통신망 구축

KEDO, 北에 제의 "무궁화 위성 활용 바람직"

최원기 · 이원호 · 채병건 기자

정부는 무궁화위성을 이용, 경수로 부지인 함경남도신포와 서울 한전본사를 연결하는 위성통신망 구축을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에 위성을 통한 통신망 연결이 시도되기는 분단이래 처음이다.

한 정부소식통은 2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현재 뉴욕에서 진행중인 통신및 통행 의정서 협상에서 무궁화위성을 활용하는 남북위성통신망 구축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수로 건설을 위해서는 2백회선 가량의 통신망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남북이 새로 통신케이블을 깔지않는한 무궁화위성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신포에 위성용 접시 안테나를 갖춘 소규모 지구국을 세워 신포→무궁화위성→용인지구국→서울 한전본사를 연결하는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북측이 우리의 남북위성통신망 구축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북한측은 그간 중국을 통한 기존의 간접통신 방안을 주장해왔었다.

한편 무궁화위성 소유주인 한국통신은 북한측이 정보 유출을 우려, 무궁화위성 이용에 난색을 표할 것에 대비해 정보보안시스템 지원을 약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 경수로 자체 통신시스템 운용을 맡을 데이콤은 건설현장인 신포에 전문인력을 파견, 제1단계로 음성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2단계로 동(動)영상등 멀티미디어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준비해 놓고 있다.

▽ 중앙일보 1996. 4. 24

北경수로費 1,700만달러 美, 日에 재정지원 요청

미국정부는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일본정부가 1천7백만달러의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정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중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정조회장등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은 먼데일 주일 미대사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23일 오전 김수한(金守漢)한·일친선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개했다고 배석한 지철민(池鐵敏)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이 전했다.

▽ 세계일보 1996. 4. 25

美국무부관리 訪北 廢연료봉 밀봉 지원

美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북한경제담당관이 북한 영변의 사용후 폐연료봉 밀봉작업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 북한을 방문, 내달 10일께 귀임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鞠貴然기자〉

▽ 중앙일보 1996. 4. 23

무궁화위성 北에도 가려나

이원호 기자

對北 경수로통신망 제의 배경과 전망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경수로 세부약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북한 경수로 통신망은 남북한 전지역에 걸친 위성통신·방송서비스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수로 건설 주무기관인 한국전력 본사와 경수로가 들어설 북한의 신포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 통신망계획에서 정부는 북한 체제의 폐쇄성을 감안, 당장은 무궁화위성의 북한지역 전파 송수신을 경수로 지역으로 제한하고 경수로 자체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접속시스템에 검색장치를 만들어 검색을 북한측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남북한 잇는 첨단 통신大路 개설 가능성

북한 경수로 통신망체제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으로 나뉜다. 내부 통신망은 경수로 내에서 각종 자료를 교환하는 데이터 교환망·전화망·원자로 등 주요 시설의 작업에 필요한 원격조종망 등이 있다.

우리측은 초기에는 데이콤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문자및 음성데이터만 교환되는 음성전화망을 구축할 생각이다.

데이콤은 그러나 북한 경수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 북한측과 협의해 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전송되는 초고속망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외부통신망은 북한 경수로의 각종 데이터중 미·일 등 관련 국가와 교환이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해주는 통신체제다.

▽ 중앙일보 1996. 4. 26

회원국에 北核문제 적극개입 촉구

EU 財政출연 조건 KEDO 참여 제의

[브뤼셀 DPA·교도=뗑]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북한 핵문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의 군사적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북한 핵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EU 산하기관인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재정 출연을 조건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KEDO참여에 5년동안 매년 1천5백만 유럽통화단위(ECU·약 1천8백90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외무장관들은 다음달 13,14일 열릴 EU외교위원회 회의에서 이 제의를 논의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EU지원 평가 상응하는 지위 보장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천9백만달러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제공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대(對)KEDO 재정지원 제의를 높이 평가하고 지원규모에 상응하는 지위를 EU에 보장해 줄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EU는 한·미·일 3국과 같은 집행이사국으로 KEDO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되 거부권은 갖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일보 1996. 4. 27

경수로費 최소60% 분담 검토

정부 韓國 중심적 역할 확보위해

배명복 기자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비율과 재원조달방법 등을 강구중인 정부는 총비용의 60%이상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5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건설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해야할 비율로 정부는 55~70% 선에 이르는 다양한 안을 놓고 적정 분담률을 산정중인데 한국의 중심적 역할 확보를 이유로 최소한 60% 이상은 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조만간 협상을 개시한다는 방침아래 실무차원의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 서울신문 1996. 4. 28

KEDO 조사단 어제 평양 도착

【瀋】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제5차 경수로사업 부지조사단이 2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존 멀리건 KEDO기술고문을 단장으로 한 부지조사단은 한전기술자 7명과 KEDO관계자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통신은 조사단의 방북사실만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다음달 7일까지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함남 신포지역에 머물면서철도, 도로, 통신 및 전력현황 등 인프라건설을 위한 기초설계 조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서울신문 1996. 4. 27

北경수로 "新浦지구로 결정"

日紙 보도 "건설 입지 최적…北韓서도 희망"

KEDO조사단 오늘 現地 향발

【도쿄=姜錫珍특파원】 북한의 경수로 건설예정지가 동해안 연안의 금호(琴湖)지구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6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금호지구는 신포의 교외지역이다.

북한은 과거 구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 건설예정지로 선정했던 금호지구를 경수로 발전소 건설장소로 희망해 왔으며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측도 4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입지로서 부적당 요소를 발견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됐다.

KEDO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5차 입지조사단을 금호지구에 파견한다.

입지조사단은 금호지구를 건설지로 상정, 건설사업에 필요한 통신, 도로, 항만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 1996. 4. 29

KEDO제공 중유 北, 사용처 확대요청

북한이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체에너지로 제공되고 있는 중유의 사용범위 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이에따라 KEDO는 내달초 담당기술자를 파견, 유량계를 설치한후 이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KEDO측에 연간 50만t씩 제공키로 한 중유의 사용범위를 늘려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KEDO는 전용발지장치를 마련한후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美·北제네바합의에 따라 KEDO가 제공하는 중유를 나진·선봉화력발전소에 한해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평양과 청진발전소에서도 이들 중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趙敏皓기자〉

Ⅵ. 탈북자 관련

1. 귀순자 대책

▽ 조선일보 1996. 2. 1

귀순타진 脫北者 1천2백명

정부 中·러 체류…현지 수용소 설치 추진

귀순자관련 포괄적 立法 검토 黨政

정부와 신한국당은 중국-러시아 등지에 체류하면서 우리측공관에 망명의사를 타진한 북한탈출자가 1천2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등 탈북자가 급증추세에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북한의 중러국경인근에 수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중국-러시아정부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탈북자는 『러시아한국대사관과 접촉한 북한 시베리아벌목공이 약 1백50명, 駐中한국대사관을 찾은 탈북자가 약 1천명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공관을 찾지 않고 몸을 숨긴 탈북자를 감안하면, 전체탈북자규모는 2천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귀순자들의 직업교육과 국내정착 등을 다루기위해 귀순동포보호법의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입법조치를 검토중이며, 북한체제의 급변에 대비해 마련한 「통합대비계획」을 각 부처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탈북자는 『북한공민권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최근의 법원판결과,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반영한, 독일의 「연방수용법」과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난민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면 곧 입법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金民培-金演光기자〉

▽ 동아일보 1996. 2. 1

北 귀순자들 고달픈 남한살이

"자유는 얻었지만…"

총5百61명…절반이 생활苦

직장 적응못해 막노동 전전

최근 북한체제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면서 외교관에서 벌목공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북한인들이 잇달아 귀순해오고 있으나 국내에 정착한 대다수의 귀순자들이 남한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귀순자들이 남한생활이후 귀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9평규모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7백만원△월 최저임금액(28만8천1백50원)의 30~1백배 수준의 정착금뿐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천6백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매년 책정된 예산보다 귀순자 수가 많아 94년과 95년에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긴급전용해 부족분을 메우는등 귀순자대책과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귀순자들의 모임인 송의동지회(회장 吳襲錫)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순자는 5백61명.

이들 귀순자의 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19명 △국영기업 13명△은행 24명△의사 4명 △교인 1명 △회사원 2백3명△상업 44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백53명은 모두 막노동 등을 하거나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은 월평균 수입이 40만~80만원으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4년 7월 아내와 딸 한명을 데리고 홍콩을 경유, 귀순한 李철수씨(40)는 2천3백50만원의 정착금과 2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고급식당에 취업, 월 평균 수입이 40만~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87년과 89년에 생활고를 비관, 자살하기도 했다.

북지방에서 정착했으나 지병인 골수염이 악화돼 최근 보훈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 생계가 막연한 상태다. 李씨의 아내도 자궁암 후유증으로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난 55년 귀순한 洪성선씨(사망당시 54세)와 54년 귀순한 金원기씨(사망당시 63세)는 지난 87년과 89년에 생활고를 비관, 자살하기도 했다.

북지방는 귀순자들의 남한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학교와 직장을 주선해주고 있으나 별목공을 비롯한 상당수의 귀순자들이 문화의 차이등으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사무직으로 채용된 귀순자들도 서류작성 등 일반업무수행에 필요한 식과 영어 등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업무를 마련치 못하고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3년 이전에는 매년 10명 안팎이던 귀순자는 9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 93년 7명, 94년 47명, 95년 26명을 기록했고 금년들어도 북한동포 귀순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원등 전문직은 큰어려움없이 定着

〈鄭星姬〉

▽ 한국일보 1996. 2. 6

北, 모스크바서 망명방지 교육

거물 黃長燁 이례적 파견 집안단속 나서

【모스크바=李進熙특파원】 북한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고위 외교관들의 망명사태를 막고 체제안정을 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집안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러시아주재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은 3~5일 사흘간 모스크바 국립대학 사회과학관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이 세미나에 북한에서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거물급 인사인 黃長燁(황장엽) 비서를 파견했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이번 세미나에 동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외교관들이 다수 참석한 점을 들어 북한당국이 외교관들의 망명사태를 막고 金正日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黃비서가 이례적으로 모스크바에 온 것은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 조선일보 1996. 2. 1

北 체제붕괴「前奏曲」인가

고위층 가세… 작년 70여명 귀순

식량부족등 근본적인 체제 위기

조만간 폭발적 증가…· 대비책 시급

「脫北(탈북)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지난 93년 시베리아 일대 북한 벌목공들의 대거 탈출로 불붙기 시작한 북한주민들의 엑서더스가 한층 가속도를 얻고 있다。최근에는 북한 내 소외계층은 물론 평범한 중산층 주민과 장관급 고위층 가족들까지 탈북, 망명사태에 합류, 북한체제 붕괴의 전주곡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90~92년의 경우 매년 10여명 미만에 불과했던 귀순자는 93년 80~90명, 94년 1백10여명, 지난해에는 70여명에 달했다。이들은 그러나 모두 현지 常駐(상주) 우리 공관과 주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이며, 직접 한국으로 탈출해 온 인원을 합하면 숫자는 훨씬 많다는 것이 정부측 얘기이다。북한을 탈출, 러시아·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면서 「한국行」을 대기중인 인원은 1천2백명정도로 파악되고 있다。중국의 경우, 연길·심양·장춘 등에 1백여명씩, 하얼빈 등 흑룡강성 일대와 내몽골 대련항에 2백여명씩 등 모두 1천여명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또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서는 1백50여명의 탈북자들이 유랑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이와 관련, 『이들은 최소한 한번이상 우리 공관이나 관계 기관에 탈출의사를 밝히고 한국으로 가기위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 또는 타진해온 사람들이라며 『베트남, 홍콩같은 제3국에 있는 일부 탈북자들까지 지 합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대책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점이다。현지 대사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은 탈북자들이 찾아올 경우, 주재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먼저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 같은 국제기구를 찾아가 직접 난민판정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붙잡기위해 파견된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가 하면 심각한 생계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또 작년말 통일원 주도로 외무·내무·국방·보사부·경찰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북한주민 탈출대비계획案(가칭)을 마련했다。이 계획안에는 육로·해상·제3국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대거 탈출사태를 상정, 수용소 설치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비책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계획안 집행을 뒷받침하는 예산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紙上(도상)연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탈북자들이 한국땅을 밟게 되면 국내정착을 위해 생활상담, 직업교육, 보험 및 의료보호제공 등 각종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주민의 탈북사태는 앞으로 북한체제가 얼마만큼 오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사회 전 계층으로 번지고 있는 현재의 탈북사태는 식량·에너지같은 주민들의 기본생활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체제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 숫자가 조만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대한 관심과 대응책마련도 그만큼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오고 있다。

〈宋義達기자〉

▽ 경향신문 1996. 2. 5

90년대들어 3國통한 망명 급증

교육수준 높아지고 동기도 다양

▩ 귀순추세 변화

90년대 들어 귀순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과 망명동기도 다양해지고 있다。

60년대 귀순자는 65명, 70년대 15명, 80년대 49명으로 모두 129명을 기록했다。그러나 90~95년 짧은 기간동안 107명으로 급증했다。

90~95년 6년간의 귀순자수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30년간 귀순자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90년대 들어서도 90년 10명, 91년 9명, 92년 8명, 93년 7명 등이던 것이 94년 47명, 95년 26명 등 9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귀순자들의 사회적 신분도 다양해지고 있다。

군인·농민·선원 등에서 90년대 들어 노동당·정무원 간부, 외교관, 유학생, 무역상사 간부, 연구원, 법목공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 외교관, 전문인, 노동당과 정무원간부 등 북한에서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망명이 늘고 있다。

통일원이 조사한 자료는 60년대 귀순자 65명은 군인 20명, 농어민 15명, 선원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0년대는 벌목공 25명을 빼면 당·정원 17명, 학생 13명, 기술자 6명 등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교육수준도 높아져 60년대 국졸·중졸 등 저학력자가 주류였으나 90년대에는 고졸 34명, 대졸 40명으로 고학력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자는 6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유학생의 망명이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한 80년대 말부터 늘어 80년대 12명, 90년대 13명을 기록했다。

출신지도 60년대는 절반가량이 휴전선에 가까운 황해·강원도였으나 80년대부터는 중국·러시아 인접지역인 함경남·북도가 많았다。

이는 탈북경로가 휴전선에서 제3국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90~95년 4월 귀순자 80명중 77명이 제3국 경유자였다。

탈출동기도 60년대에는 주로 「남한동경」「북한체제 불만」이었으나 90년대는 처우불만, 성분불량, 처벌우려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념적 문제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동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같은 변화는 접경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방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몰락 등 외적 요인과 북한 내부적인 상황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중앙일보 1996. 2. 1

北, 최수봉씨 사랑亡命 오판 느슨한 감시틈타 남편 탈출

현성일씨, 30일 아내 만나

최원기 기자

부인 최수봉에 이어 지난달 30일 망명에 성공한 북한의 잠비아 대사관 3등서기관 현성일은 여러차례 망명시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씨는 부인이 망명하기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귀순을 시도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그러다가 부인 최씨가 망명에 성공하고 태권도 사범 차성근씨가 곧이어 망명하자 대사관측에서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것으로 판단, 자신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명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김포공항에 내린 현성일은 이날 저녁 부인 최수봉과 감격의 상봉을 했다。관계당국의 전언에 따르면 현씨는 모처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부인 최씨와 잠깐동안 만났다는 것。그러나 두 사람은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잠비아 북한 대사관 직원 3명의 망명 사건을 조사해온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을 경제부처 출신의 김웅성 대사와 대사관 직원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개별 망명사건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 16일 망명한 최수봉과 차성근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이 사건이 사전공모에 의한 집단망명이 아니라 개별망명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2. 6

北、駐잠비아대사 소환

현성일씨등 亡命문책 파면후 수용소 수감될듯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 김응상이 3등서기관 현성일부부와 공작원 차성근의 서울 망명에 대한 문책으로 소환돼 지난 25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김대사는 당초 현성일 3등서기관과 함께 평양으로 소환될 예정이였다』며 『그러나, 현이 우리 대사관으로 망명하자 혼자 23일 소환됐다』고 말했다。

김응상은 현씨등의 연쇄 서울망명으로 『현직에서 파면, 수용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具聖宰기자〉

▽ 한국일보 1996. 2. 7

脫北者수용소 2백70곳 마련

韓赤、초중교 시설활용 北수해복구 건축자재 지원

대한적십자사는 북한동포들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 한강 이북의 초·중학교 시설 2백70개를 임시 수용시설로 활용하고 탈북자들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등의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李柄雄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朴相範) 주최로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북한탈출동포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韓赤은 대형천막 30여개와 한번에 6백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배식차 1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총장은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정부와 협의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李총장은 북한 수재지원과 관련, 북한이 국제적십자사연맹측에 수해로 파괴된 가옥 3천5백채 건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韓赤의 제4차 대북지원품목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건축자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申榮錫 평화문제연구소장은 지난해말 현재 국내 거주 귀순자 5백61명중 2백53명이 무직이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일원선 부인

한편 金京雄 통일원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의 탈북자수용대책과 관련, 『정부안을 검토한 바없다』면서 『정부는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탈북자문제에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규모 난민수용소 설치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金炳讚기자】

▽ 조선일보 1996. 2. 7

"脫北者 자립교육 시급"

半이상 생계곤란-제도적 장치 필요
民間지원 유도… 기업도 관심 가져야

平統자문委 대책 토론회

북한주민의 脫北(탈북)망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사무총장 朴相範)는 6일 북한탈출동포 대책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골무원·고위 軍간부·외교관 등 북한내 핵심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최근의 탈북 현상은 북한이 심각한 체제위기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국민적 차원의 탈북자 수용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李慶淑숙명여대 총장은 『탈북동포 증가는 우발적 요인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특히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再사회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북한동포 기금』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거주 탈북동포들의 절반이상은 그러나 무직 또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申榮錫 평화문제연구소장은 귀순자들이 93년 제정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라 ▲9평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7백만원 ▲월 최저임금액(95년 28만8천원)의 30~1백배 수준의 지원금 ▲북한에서 가져온 정보 및 물자에 따른 기여금(귀순자의 95%는 전혀 받지 못함) 등을 받고 있지만, 전체 귀순자의 절반에 가까운 2백53명은 무직이거나 막노동으로 국내적응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문에 귀순동포들의 모임인 숭의동지회는 지난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국회앞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李相禹 서강대교수는 탈북자들을 수용, 적응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서독의 긴급수용법같은 제도를 정비하고 이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내 주무 부처를 지정 또는 신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또 대한적십자사나 이북5도청, 종교단체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탈북자 지원에 나서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을 대표해 南柱洪평통사무차장은 『북한은 최근 탈북자 발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安承運교수 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응징보복과 對南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앞으로 탈북자는 북한체제위기에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며 『탈북자수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 북한내 잔류주민대책, 국제 여론형성 등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宋義達기자〉

▽ 서울신문 1996. 2. 7

"바라진 않지만 脫北사태 대비는 해두자"

韓赤의 「임시 수용소 계획」 안팎

정부선 北자극 우려…민간차원 준비

「귀순자 보호」등 관련법 손질 시급

최근 잠비아 주재 북한 외교관 玄성일씨를 비롯해 귀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탈북자 수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6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이날 개최한 통일문제토론회에서 李柄雄한적사무총장이 『한적이 대량 탈북자 발생시 한강 이북의 초·중학교 시설 2백70개를 임시수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한적측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차원』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정부측도 『민간기구인 한적차원에서 탈북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자체 구호대책일 뿐 정부 방침과는 무관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자세의 저변에는 북한당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깔려있다.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표방한 정부로선 자칫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사의 대세에서 낙오, 스스로 붕괴하는 사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그 단초는 대규모 탈북사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을 넘어선 범국가적 수준의 사전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적측이 밝힌 탈북자 수용대책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수순일 수 있다.

과거 서독측도 베를린 도시에 긴급수용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 이 수용소에서 2~7일간 머무르는 동안 간단한 정착안내를 받아 서독내 11개 주로 분산 배치됐던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탈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등 관련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

93년에 제정된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현재 70명 정도이나 앞으로 귀순자가 급증할 경우 당장 재정부담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具本永기자〉

▽ 조선일보 1996.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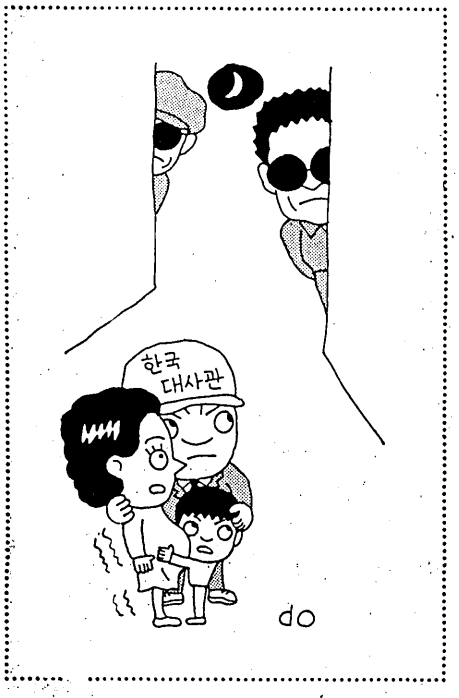
北대사관 상호감시 강화

긴장계속 잠비아 현지표정

"납치우려" 韓國대사관 매시간 가족점검

北공관원 감시… "장보러 가는것도 겁난다"

잠비아 정부, 北韓의식 현지취재 일절 차단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현성일 3등서기관부부등 3명을 현지에서 무사히 서울로 귀순시키기위한 「작전의 암호명은 「회망봉」이었다. 이 작전은 玄서기관의 서울도착으로 막을 내렸지만, 현지 잠비아분위기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이다.

잠비아주재 우리대사관의 金鎭浩대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공관장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우리직원들에 대한 북한인들의 감시망은 여전하다. 공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북한공관에 파악된다고 정부소식통은 말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아직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잠비아주재 우리대사관의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요원들에 의한 신변위협이다. 특히 가족들을 납치해갈 가능성이 가장 커 매시간마다 가족들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현지채용 대사관직원들도 「신경쇠약」에 걸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대사관의 한 현지여직원은 기자가 한국말로 이야기하자마자 영어로 『여기는 한국대사관이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동안 북한의 협박전화에 시달린 탓이었다.

김응상 북한대사의 소환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육로를 통해 에티오피아로 갔다가 비행기로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北京으로 연결되는 비행기편이 있다.

평양의 외교부는 이번 사태로 해외공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 ▲사사로운 외출금지▲週1회의 생활총화 강화▲상호감시제 재점검▲망명경로의 확인·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잠비아정부는 이번 일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언론의 현지취재 등을 일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잠비아외무부는 최근 金鎭浩대사를 불러 한국언론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잠비아가 남·북한의 전쟁터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金대사가 전했다.

〈具聖宰기자〉

▽ 국민일보 1996. 2. 7

귀순자 2명 出國기도 적발

康明道·金亨德씨 당국 「再入北의도」 여부조사

康 "중국 연변서 사업하려 했다"
金 "平南 아버지 만나고싶었다"

94년9월 귀순했던 金亨德씨(22)가 북한으로 밀항하려다 적발됐다. 또 북한 姜成山정무원 총리(65)의 사위 康明道씨(38)도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채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 및 출국동기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중국국적 화물선을 타고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려다 울산항에서 체포됐다.

귀순당시 북한사로청 청년돌격대지도국 산하 평남돌격대 소속 군인이었던 金씨는 6일 서울로 압송돼 모 정보기관에서 공안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94년5월 귀순한 북한 정무원총리의 사위 강명도(康明道)씨가 출국을 시도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무역업에 종사했던 康씨는 국내에서 신우교역이라는 무역업체를 설립해 중국을 통한 수산물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화밀반출 혐의가 잡혔을 뿐이다. 관계당국은 康씨가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직접 비행기를 타려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康씨는 94년5월 북한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산하 「릉영유전합영회사」 부사장으로 중국출장을 갔다가 귀순했다. 〈金錫雲〉

▽ 중앙일보 1996. 2. 8

김형덕씨 왜 출국 기도했나

歸順 2년째… 한국생활 적응 못한듯

北 탈출→中國→베트남→홍콩거쳐 入國

1만5천弗 소지…새생활 찾으려 한듯

강명도씨는 出國 아닌 外貨밀반출 혐의

강영진 기자

귀순자 김형덕(金亨德·22)씨의 밀항기도가 적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金씨는 북한에서도 살기 어려운 자강도 출생으로 90년 평남개천에서 영복고등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 출신.

金씨가 귀순을 결심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북한에서 장물아비로 체포돼 「교양소」(우리의 교도소)에 수용된 것. 그러나 金씨는 고등중학교 졸업후 대학진학을 위해 「속도전 돌격대」에 들어가 힘든 노동을 했음에도 출신성분이 좋지 않아 교양소로 가게된 것이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

교양소에 들어간 그는 자신을 고발한 속도전 돌격대 대대장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양소를 탈출했다가 다시 체포돼 재수감됐다. 이곳에서 그는 혹독한 구타 등 짐승같은 대우에 못이겨 재탈출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붙잡혔다.

상습적인 탈출범으로 찍힌 그는 상습범관리소(우리의 보호감호소)에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이송도중 탈출에 성공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김씨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북한 국경지역에 도착, 야밤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북한탈출과정에서 건강을 해친 그는 조선족 주민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金씨는 곧바로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에 귀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톈진(天津)으로 옮긴 金씨는 한국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 베트남으로 밀항했다.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에 다시 귀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金씨는 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 베트남 군병영에 수용돼 조사받던 金씨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 톈진에서 생활하던 金씨는 한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혔으며 그뒤 홍콩으로 잠입했다. 홍콩에서 다시 경찰에 체포된 그는 마침내 한국으로부터 귀순허가를 받아 94년9월 비행기 편으로 입국했다.

귀순후 1년반 가량 金씨가 살아온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金씨는 일반적인 귀순자처우관례에 따라 정착금과 주거보조비를 받는 한편 직업교육을 받는 등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떠돌이 생활이 몸에 밴 金씨는 한국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이 몸에 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金씨가 재출국을 시도한 연유도 그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관계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다.

金씨가 출국을 시도한 직접적인 동기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애시당초 특수한 임무를 띠고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생활적응이 안돼 새생활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 또 재월북 시도 등 세갈래다.

67년 위장귀순해 69년 탈출하려 했던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에 비춰 金씨의 출국 시도가 같은 성격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수근과 金씨의 출신성분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또 귀순이후 한국에서의 대우나 활동도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 특히 金씨가 출국 시도때 1만4천7백여달러(약 1천1백50만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의 출국 시도는 이수근처럼 위장간첩이기 때문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金씨가 울산해경에 체포됐을 당시 「아버지가 보고 싶어 북한으로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재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金씨는 북한에 돌아가 4시쯤 인천항에서 울산항과 베트남등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후아홍」호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수사기관에서 「평남개천에 거주하는 아버지 金종철씨를 만나고 싶어 밀항선을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康씨도 지난해 12월 미화3만달러를 소지하고 김포공항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려다 적발돼 모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康씨가 먹고 지속에 지폐를 교묘히 숨긴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된 뒤 「자유국가에서 여행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느냐」며 「돈은 중국 연변에서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진술을 하자 일단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康씨를 「보호조치」한 뒤 자세한 출국기도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사 관계자는 「康씨 사건직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려 康씨에 대한 대공용의점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체사상 대체 시급하다

▽ 조선일보 1996. 2. 8

귀순자 제들 충격

脫北·망명자 대부분 "김정일 신뢰 잃어"

93년 이후 정치·사회 동요 확산 전망

이번 「귀순자 대량발생」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93년 이후 귀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다. 93년 이전 귀순자들의 경우, 「혁명적 수령관」을 부정하는 발언은 거의 없었으며 「김정일 체제 붕괴」를 예견하는 사람도 극소수였다. 그러나 93년 이후 귀순한 사람들은 「김정일 체제 붕괴」를 예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김정일 체제 붕괴 후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일성 주석 시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귀순자들이

▽ 경향신문 1996. 2. 9

귀순자 7百52명

분단이후 직업교육 강화 절실

분단이후 귀순자는 모두 7백52명이며 이중 사망자, 신원미확인자 등을 제외한 생존자는 5백6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宣翰承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보훈처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한 「북한노동자의 적응력실태와 인력활용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귀순자중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전체의 35%수준인 1백99명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2백57명이 현재 실업상태이며 나머지 3백8명은 각종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순자 8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직장생활자의 소득은 50만~90만원, 90만~1백30만원이 각각 33%를 차지, 가장 많았고 1백50만~2백만원은 27%로 드러났다.

또 북한에 체류할 당시 노동당원이었던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90%에 이르렀으나 비당원은 60%에 불과했다. 당원출신은 자본주의적 국가관에 90%가 긍정적인 반면 비당원출신중 60%나 남한의 이데올로기 수용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반응을 나타내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과거 당원출신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전선 등을 통해 직접 귀순한 사람의 50%는 직장내 인간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을 한 반면 동구권 등을 통한 간접 귀순자는 37%만 긍정적으로 응답, 귀순방식의 차이가 남한사회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宣위원은 귀순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약간의 물질적 보상과 무분별한 직장알선보다는 체계적인 직장정보제공, 적성과 희망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북한난민청 신설 등을 제시했다.

▽ 문화일보 1996. 2. 10

중국, 北난민流入 저지

WSJ紙보도 수용자 포화상태… 되돌려보내

한국 中에 인도적대우 공식요청

【뉴욕=연】중국은 심각한 식량사정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 자국으로 유입하는 북한 난민들을 되돌려 보내는등 난민유입을 억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美 월 스트리트 저널紙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쿄發 기사에서 北京, 서울, 도쿄주재 서방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한국은 이와관련, 중국정부에 북한 난민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외교관들은 중국으로 유입한 북한의 난민자 수가 중국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중국은 이들 북한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물자등 자원마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저널紙는 말했다.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당국은 장래 잠재적인 자치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吉林省등에 조선족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상당히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관한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마이클 브린씨는 『북한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할경우 이들은 중국으로 가게될 것이며 그것은 중국당국이 바라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이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역사탐방 관광단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민족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자제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996. 2. 11

"脫北 터무니없이 날조"

北, 한국정부 대책 비난

북한은 11일 정부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대량 脫北사태에 대비, 난민수용소 설치와 「귀순동포보호법」의 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데 대해 비난했다. 북한 적십자회(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 『남조선이 적십자와 언론을 통해 우리 주민들의 대량 脫北사태가 예상되는 것처럼 사실을 터무니없이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북한에선 『영도자—主—주민이 혼연일체가 돼 잘 살고 있어 우리에게 난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남조선이 대량 脫北과 그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內外】

▽ 조선일보 1996. 2. 13

北, 함남도책 玄철규 해임

아들 玄성일씨부부 귀순 문책인듯

지난달 30일 함북으로 귀순한 잠비아주재 북한 대사관 3등서기관 玄성일씨의 부친인 함남도당 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 玄철규가 최근 해임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중앙방송은 10일 李升基박사 빈소를 조문한 李泰淵 前남포시 행정경제위원장을 「함남도당책겸 인민위원장」으로 호칭함으로써 玄철규가 경질됐음이 확인됐다.

李는 30명으로 구성된 李升基박사의 장의위원 명단에도 29번째로 포함돼 있다.

북한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귀순자는 『북한에서는 간부자제가 경제-형사범인 경우 간부를 문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망명 등 정치-사상범인 경우 반드시 경질-숙청한다는 말했다.

또 처가쪽이나 사위-며느리등에 대해서는 이 흔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들의 경우는 예외가 없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姜成山 총리는 94년5월 사위인 康明道씨의 귀순 이후에도 현직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玄철규가 다른 사유로 해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玄이 며느리 崔수봉씨의 망명이 밝혀지기 며칠전인 지난 1월 초 각도별로 진행된 새해총진군 군중대회에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중대회에 김영득 함남도 행정경제위원장도 나타나지 않아 玄이 해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玄이 金과 함께 당시에 이 리 崔수봉씨의 망명이 밝혀지기 며칠전인 지난 1월 초 각도별로 진행된 새해총진군 군중대회에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중대회에 김영득 함남도 행정경제위원장도 나타나지 않아 玄이 해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玄이 며느

Ⅵ. 탈북자 관련

2. 성혜림 일가 망명

▽ 조선일보 1996. 2. 13

金正日본처 西方탈출

成惠琳、언니母女·수행원 함께

모스크바 거주중… 스위스서 잠적

언니、귀순한 아들과 수차 국제전화

제3國에 망명 타진 가능성

북한 최고 권력자 金正日의 본처 成惠琳씨(59)와 언니 成惠琅씨(61)、해랑씨의 딸 李남옥씨(30) 등 3명과 성혜림씨 수행원 1명 등 4명이 지난 1월 20일쯤 모스크바를 떠나 스위스로 나온 후 잠적했다。

成씨 일가는 잠적중 제3국에로의 망명을 타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成惠琳씨는 金正日의 장남 金정남(26)의 생모이며、공식적으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4개월간 成惠琳씨 일가의 동향을 추적해 온 月刊朝鮮의 취재에 의해 확인됐다。

신병치료를 위해 1983년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나와 언니 혜랑씨와 함께 모스크바 바빌로바街 아파트에 살던 成惠琳씨는 언니와 언니 딸、그리고 「명순이 아줌마」라 불리는 수행원 1명을 대동、모스크바를 떠난 후 그녀의 스위스 별장에 도착해 2월 초까지 머물다 종적을 감췄다。

月刊朝鮮은 4개월 전인 작년 10월20일、서울에 귀순해 미공개 상태로 살고 있는 성혜랑씨의 아들 李한영씨(36)와 모스크바의 성혜랑씨 사이에 국제전화를 주선하면서 이번 사건의 주역인 성혜랑씨의 모스크바 「탈출 의도」를 파악、계속 추적해 왔다。

성혜랑씨는 서울~모스크바간에 여러 차례 계속된 국제 전화를 통해 『96년 1월 말쯤 모스크바를 떠나 제3국으로 나간다』고 말하고、모스크바 출국 직전 전화에서는 『모스크바를 떠나면 그 신호로 내방 전화코드를 뽑아놓겠다는 최종 신호를 남기는 등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禹鍾昌기자〉

月刊朝鮮、4개월간 추적… 詳報 3월호 게재

◇언니成惠琅씨의 외아들

82년에 귀순한 李한영씨. 金正日 본처의 언니 成惠琅씨의 외아들이다.

▽ 한국일보 1996. 2. 14

金正日전처 3國탈출 日언론 중대의미평가

【도쿄 = 黃永植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13일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惠琳씨(59)등의 3국 탈출 사실을 일제히 전하면서 『成씨가 북한 최고위층 인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엄청나다』고 평가했다。

金正日후처들이 괴롭혀 결행

成惠琳의 모스크바탈출서 스위스잠적까지

成、金正日장남의 생모… 공식이혼 안해

平壤서 설쇠고 1월말에 돌아와 감행

"金의세째妻 高영희가 날 못살게했다"

94년 모친사망·서울오빠 만난후 결심

출국·잠적 배경

金正日 본처 成惠琳씨가 모스크바 출국 및 잠적을 결심한 결정적 동기는 金正日 주변 여인들의 견제이며,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94년말에 사망하면서 심적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갈등의 시기에 이 사건의 주도자인 成惠琅씨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李한영씨)이 14년만에 서울서 국제전화를 걸고, 서울의 친오빠가 모스크바로 찾아오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정된다.

「온정원」「한 자위단원의 운명」등 1960년대 북한에서 인기를 끈 영화의 주연 여배우로서 북한 청년들의 우상이 됐던 성혜랑씨는 월북작가 李箕永의 아들 李평과 결혼했으나 金正日의 눈에 드는 바람에 강제이혼 당하고 19 67년부터 金正日과 살아왔다. 71년에는 金正日과의 사이에 金정남을 낳았다.

成惠琳씨는 金正日이 집 무실 타자수 金영숙을 총애하고 金영숙이 74년 金 正日과의 사이에 딸 金설송을 낳자 충격을 받아 심신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 그해부터 여행 겸 치료를 위해 평양과 모스크바를 수시로 오가다 병세가 악화된 1983년부터 외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성혜랑씨를 말동무 겸해 수발을 들게 하고, 스위스 여행을 위해서는 제네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백만달러짜리 별장을 사주었다. 작년 12월 초, 평양을 다녀온 뒤 서울의 아들과 가진 국제전화에서 성혜랑씨는 『밭치코(코가 맞지날처럼 생긴 세가 더욱 악화돼 동행키로 마음을 돌렸다』고 서울의 아들(李한영씨)에게 전했다.

평양 金正日공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30상자씩 보내주던 쌀 고추장 된장 생수 과일 건어물 인삼 등 부식물도 수행원의 조그만 잘못을 빌미로 공급 중단됐다. 성혜랑·성혜림 자매는 또 아버지 成有慶씨가 82년에 사망하고 정신적 기둥으로 삼았던 어머니 金源珠씨마저 94년11월초 사망하자 북한생활에 미련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성혜랑씨는 아들과의 전화에서 金源珠씨 사망원인을 『속이 상해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머니(金源珠) 생각이 날까봐 평양에는 의식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획·결행

본처 成惠琳씨 일가의 모스크바 출국 및 잠적을 주도한 사람은 언니 成惠琅씨였다. 서울에서 이화고녀를 다니다 1948년 부모를 따라 월북한 성혜랑씨는 김일성大 물리수학부를 나와 북한 核연구기관인 평성과학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한편, 출판사 기자를 지냈다. 작가동맹 회원이며 「인민반장」이란 책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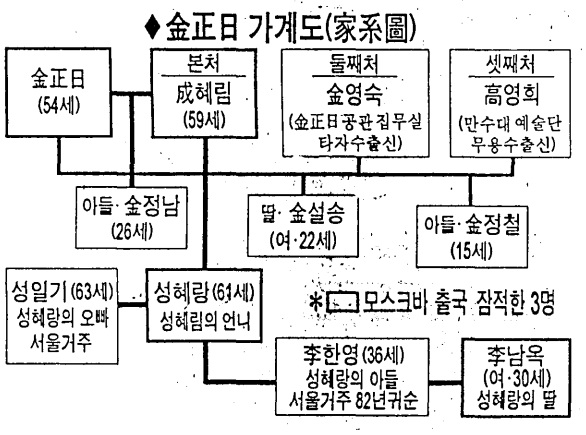
성혜랑씨는 첫 국제전화에서 아들이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자, 『볼 수 있어. 우리 볼 수 있다. 볼 수 있게 지금 하려고 그래』라고 말했고, 엄마를 만나러 모스크바에 가겠다고 하자 『기다려라. 이제 내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출국 후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체험했던 북한생활을 작품으로 발표하면 먹고 사는데는 불편이 없다』며 작가생활을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작년 12월초 모스크바 코스모스호텔에서 서울에 살고있는 친오빠 成日書씨(63)를 만난 성혜랑씨는 한국에 갈 경우의 처우문제와 신변안전에 대해 물어보고 『평양의 남목이(자신의 딸)를 데려와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평양에서 설(신정)을 쇠라는 金正日의 요청에 따라 12월 말쯤 평양에 들어가 설을 쇠고 내년 1월20일쯤 남옥이를 데리고 모스크바로 나가 1월말쯤 제3국으로 가겠다는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成惠琳씨의 오빠는 가족이 北으로 떠난 이들해 자진 월북, 갑동정치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6·25동란 하 투전에 낙파돼 경남·북 일대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1953년 체포돼 전향했다.

〈禹鍾昌 月刊朝鮮部기자〉

◇스위스별장의 成씨어머니 金正日이 본처 成혜림씨를 위해 구입한 스위스 별장 내부. 사진속의 여자는 成혜림씨 어머니 金源珠씨(1994년 사망). 이 사진은 성혜랑씨가 모스크바 코스모스호텔에서 서울의 오빠 성일기씨에게 준 것이다.



"엄마보러 모스크바로 갈께요" "오지마, 나 지금 무슨계획 있어"

——月刊朝鮮 95년말 국제통화 수차례 주선

모스크바 成혜랑 서울 출하명목 14년만에 "전화상봉"

어머니, 처음엔 "동무 누구요" 경계심 여권용 이름등 확인후 "나 엄마맞아"

『엄마…。엄마야? 엄마 맞어?』

『응…。나야…。 엄마야。 맞지 않구!』

어머니는 목이 메었다。 아들도 소리죽여 흐느꼈다。 14년 만에 나눈 모자간의 대화。

1995년 10월20일 오후 4시 朝鮮日報社 출판국。 月刊朝鮮 주선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아들 李한영씨(36)와 모스크바 바빌로바街에 사는 어머니 成惠琅씨(61)간 국제전화는 서로의 피맺힌 부름이었다。 비록 서로 얼굴은 마주하지 못했지만…。

열세살 때인 1948년 부모를 따라 월북해 50년을 북한체제에서 살아온 성혜랑씨。 그리고 14년 전 스위스에서 자취를 감춘 후 한국에 귀순, 생사를 알수 없었던 아들。 두 사람의 감격적인 대화는 어머니와 아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말들을 몰고 또 물은 후 비로소 혈육임을 확인했다。

이 전화는 서울의 아들이 평양에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모스크바의 이모(金正日 본처 成惠琳) 아파트에 같이 살 줄은 꿈에도 모른채 이모 成씨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사모님(아파트 내 成惠琳씨의 호칭)을 찾는 첫 번째 통화에서 어머니 혜랑씨는 『동무, 도대체 누구요。 소속을 대라요』라며 아들을 몰아세웠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동무 괴퇴구만! 동무 괴퇴야!』 하고는 사정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모자의 「만남은 세번째 통화에서였다。

아들이 『우리 엄만가? 우리 엄마하고 목소리가 비슷한데!』 하자, 어머니는 『그럼, 이름을 대보세요』 하면서도 냉정을 잃지 않았다。 『성혜랑』。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대자 그녀는 갑자기 침묵했다。 마지막 질문이 모스크바로부터 날아왔다。

『(내) 여권 이름은?』

『원동숙。』(해외에서 활동중인 북한사람들은 본명과 가명으로 된 여권 이름을 갖고 있다)

그제서야 신음하듯 『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야』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녀는 소리죽여 한동안 울었다。 흐느끼는 소리는 전화선을 타고 서울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金正日 본처 成惠琳씨 일가의 모스크바 출국, 잠적은 언니 成惠琅씨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데다가 月刊朝鮮이 주선한 이 국제전화에서 아들의 생존을 확인한 것이 결행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엄마, 삼촌(서울에 거주하는 혜랑씨의 오빠 성일기씨)은 꼭 할아버지야。 걷는 걸보 할아버지고。 그 집 아이들도 다 나처럼 새끼 손가락이 휘었어。 삼촌이 내 손가락 휘어진 것 보고 금방 알아 보셨어。』

『응, 그래。 흑흑흑。』

아들이 『엄마 보러 모스크바로 가겠다』고 하자,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지마。 나, 지금 무슨 계획이 있다。 오지마。 계획 있어』라며 모스크바 「탈출의 사」를 내비쳤다。

서울의 아들과 모스크바 어머니는 95년 10월20일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모스크바 시각 새벽 5시에서 6시(한국시각 오전 11시에서 12시)사이에 수십 차례 국제전화를 가졌다。 月刊朝鮮이 주선한 이 국제전화가 金正日 본처 일가의 귀순결행에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禹鍾昌·月刊朝鮮部 기자〉

成惠琳씨 어린시절

경남 창녕태생… 서울서 유년생활

부친 成有慶씨는 남로당 자금책

金正日의 본처 成惠琳씨(59)와 언니 惠琅씨(61) 자매는 양친이 모두 일본 유학을 한 당시에 보기 드문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

부친 成有慶씨는 경남 창녕 만석군 집안의 아들로 일본 법정대 출신。 成씨는 경남 창녕에 첫 부인을 남겨두고 해방직전 고향을 떠나 서울 종로에서 「종로회관」이라는 카페를 하며 큰 돈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40년 연희전문을 중퇴한 미모의 신여성 金源珠씨를 만나 惠琳·惠琅 자매를 낳았다。

成씨는 해방직후 呂運亨 밑에서 일을 하다 남로당에 입당, 자금책으로 활동했으나 趙炳玉 張澤相 등 우익인사들과도 두터운 교분을 쌓아 좌익검거 선풍속에서도 살아 남았다。 이들이 살던 명륜동 자택에는 朴憲永、李冀永、林和、韓雪野 등 거물 사회주의자들이 수시로 출입하기도 했다。 惠琅씨는 연구원 근무 중 함북 북청 출신의 李태극럴 중앙당 작전국장 등과 함께 공부한 엘리트。 모스크바大에서 역학을 전공한 李씨는 귀국후 체무기 연구기관인 평성과학원에 근무하던 중 惠琅씨와 결혼, 60년 아들 李한영씨를 낳았다。

成有慶씨의 첫 부인의 아들인 日奢씨는 부친의 월북당시 보성중 3학년생이었으나 서울에 그대로 혼자 남았다가 49년 자진 월북했다。 그는 강동정치학원에서 대남 유격대원 교육을 받은뒤 6·25전쟁 하루 전 태백산을 거쳐 빨치산으로 남파됐다 53년 12월 국군에 체포돼 전향했다。 〈洪憲杓기자〉

惠琳씨는 월북후 평양 국립영화연극대를 나와 영화배우가 됐으며 언니 惠琅씨는 김일성대 물리수학부로 진학해 평성과학원 물리수학부 연구원이 됐다。 惠琅씨는 연구원 근무 중 6·25때 소위로 참전, 철원전투를 치렀고 종전(終戰) 무렵 모스크바 유학생 1기로 선발돼 연철욱 前 북한총리, 허담 前외교부장, 김영남 외교부장, 오순을 만났다。 李태순은 6·25때 소위로 참전, 철원전투를 치렀고 종전(終戰) 무렵 모스크바 유학생 1기로 선발돼 연철욱 前 북한총리, 허담 前외교부장, 김영남 외교부장, 오순을 만났다。 李태순은 서 가까운 서울사대부국을 졸업했다。 48년 서울사대부중, 이화고녀를 각각 다니고 있던 자매는 부친 成씨와 어머니 金源珠씨를 따라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 金正日 妻 "신변안전"

정부「成씨 一家대책반」

유럽급파 확인

탈출前 제3國 망명타진

韓國行희망땐 수용

北선 本報보도前 전혀 눈치못채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스위스로 탈출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金正日의 본처 成惠琳씨(59)일가의 유럽내 소재지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신변 안전 및 향후 행선지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특별대책반」을 유럽에 파견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朝鮮日報에 成씨 일가 3명의 탈출이 보도되기 하루 전인 12일 제3국의 협조로 成씨의 소재지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미 이들이 서방 어느 국가의 당국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거나, 그 경찰력 등의 보호 아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관계자들은 『현재 西歐(서구)에서는 비자(VISA)가 없이도 국가간 여행이 자유로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成씨 일가는 모스크바를 탈출하기 전에 이미 제3국 정보기관에 망명의사를 타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또 『북한 정보기관이 成惠琳씨 일가의 탈출을 朝鮮日報 보도전까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들의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成씨 일가의 향후 행선지와 관련, 그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할 경우 적극 받아들인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들의 한국행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내부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成씨 일행의 향후 행선지는 그들 자신의 의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전제, ▲프랑스나 영국 등 西歐의 한 나라나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과거 최은희-신상옥 부부의 경우처럼 일단 제3국을 거쳤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禹鍾昌-宋義達기자〉

◇배우시절 成惠琳씨 서방으로 탈출한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일의 본처 成惠琳씨가 배우로 활동할 당시의 모습. 【YTN】

"망명요청 없어"

스위스정부 대변인 밝혀

【제네바=UPI聯】 스위스정부의 한 대변인은 13일 최근 스위스로 탈출한것으로 알려진 金正日의전처 成惠琳이 스위스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관광비자를 신청한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成惠琳과 그녀의 언니, 수행원들은 모스크바에서 스위스로 탈출했으며, 제3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메신저 작년10월 첫「홍콩접촉」

「成씨일가 탈출」4개월드라마

10만달러-반지-시계등 선물교환

金正日의 본처 成惠琳(성혜림·59)씨 일가의 모스크바 탈출은 한편의 국제 첩보 드라마와 같이 치밀한 각본 아래 홍콩, 모스크바, 스위스 등 국제도시에서 4개월여에 걸쳐 숨막히게 펼쳐졌다。 이번 탈출극을 주도한 成씨의 언니 成惠琅(성혜랑·61)씨 측과 지난 82년 서울에 귀순해 살고 있는 그의 아들 李한영씨측간의 1차 접촉이 이뤄진 것은 95년 10월 말。 李한영씨가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어머니 성혜랑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모스크바 탈출계획을 확인한지 1주일 후였다。

그달 김포공항 발 홍콩행 비행기에 李씨의 부인이 몸을 실었다。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는 시어머니(성혜랑)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였다。

비슷한 시각 지구 반대편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도 오스트리아人 남녀가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 오스트리아인들은 성혜랑씨의 딸이자 李한영씨의 연동생인 李남옥씨의 외국인 친구들。

남옥씨는 파리에 유학해 영어와 불어가 유창했고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고 성씨는 이점에 착안, 서울의 아들과 첫 접선할 메신저로 이들 오스트리아인들을 선택한 것。 그로부터 하루 뒤。 홍콩의 어느 호텔。 李씨의 부인은 미리 약속한 객실을 찾았고 「메신저」는 미리 들은 인상착의와 표시를 한채 기다리고 있었다。

긴 말이 필요 없었다。 메신저들은 성혜랑씨가 건네라고 준 물품과 돈을 건넸다。 미화 10만달러와 다이아몬드 반지 오메가 금시계。 반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었고 시계는 이모(성혜림)가 이한영씨에게 준 선물이었다。

이한영씨가 서울로 오기 전 북한과 모스크바에 머물 때 갖고 있던 몇가지 소지품도 들어 있었다。 金正日이 하사한 만년필, 커프스 버튼, 북한산 손목시계, 李씨가 모스크바 유학시절 찍은 사진 등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 탈출계획이었다。 『평양에서 설을 쇠라는 金正日의 요청을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아 12월 중순쯤 다시 평양으로 들어간다。 설쇠고 이듬해(96년) 1월20일쯤 남옥이를 데리고 모스크바로 나오겠다。 그후 제3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95년 12월중순。

예정대로 모스크바에 다시 나온 성혜랑씨는 아들 李한영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예정대로 3국에 도착한 후 연락하겠다。 연락을 받는대로 며느리를 보내라。 내가 모스크바를 떠났다는 신호로 전화코드를 뽑아 놓겠다』고 말했다。

96년 1월 하순。 우리 정부는 이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한 별장에 묵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별장은 金正日이 2백만달러를 들여 본처 성혜림씨에게 사준 것。 우리 정부가 성혜랑씨의 오빠 成日鎔(성일기·63·서울 거주)씨와 李한영씨를 비상 대기시켜 놓고 스위스 별장과 계속 전화 접촉을 해 오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3국 탈출을 결행했다는 신호였다。 정부는 현재 이들과 제3국에서 접촉중이다。

"北韓人들이 「귀부인」 항상 감시"

金正日처 西方탈출 모스크바 「거처」 포정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떨어져 있는 레닌스키 프로스펙트 바빌로바 85번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모스필림모프스카야」에서는 자동차로 약 10분거리. 이곳에는 엷은 노란색 14층 고급 아파트 3동이 서 있다.

주변은 줄지어 이하의 거주지역이나 이 아파트만이 철책담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돼 있다. 자동차가 들어가는 입구에는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말투와 같은 수위실이 있으며, 또 총을 찬 수위 및 청원경찰이 출입차량을 일일이 경비하고 있었다. 철책담 앞에는 각종 외제 고급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D 087」로 시작되는 북한대사관 번호판을 단 승용차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은 일명 「우페데카」(UPDK)아파트라 불리는 외교관 전용 아파트 단지로, 모스크바의 주택사정으로 볼때 아파트 한채에 최소한 한달 1만달러 이상의 고급아파트로 보였다. 이곳 아파트 3동 가운데 2번째 동이 金正日의 전처 成惠琳이 살고 있던 아파트다.

수위의 말에 따르면, 1년 전에는 북한대사관이 1층, 2층, 3층을 통째로 임대했는데, 지금은 3층만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3층은 11호에서 15호까지 5채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데 3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대전차포로도 깨지지 않을 두꺼운 육중한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으며 초인종은 없었다.

또 3층 발코니는 유리창문으로 밀폐돼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단지 한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유라」라고 이름을 밝힌 수위는 『스캔들이 발생, 출입할 수 없다』며 저지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가 발행한 기자증을 부여한 취재의 자유를 제대한 철문이 가로막고 있어 물론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안으로 들어갔다.

1층 현관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려 한 번 눌러 보았으나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자 거기에 그녀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느낌을 와 마침 현관입구를 지나가는 청소부 할머니(60대 가량)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할머니 말에 따르면, 『약 6개월 전 귀부인으로 보이는 북한 여자가 살았던 것이 확실한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건강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소부 할머니는 『외모상으로는 건강해 보였다. 산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만나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곤 했다.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면서, 『왜지 주변 북한인들이 그녀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73년 9월 비공개리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조직및 선전선동담당 비서와 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金英淑(49)이 본처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영화배우나 「기쁨조」로 불리는 무용수들과의 관계 등 金의 여성편력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북송교포 출신 무용수 高영희와 동거하면서 아들·딸 하나씩을 두는 사이 孫成惠(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의 여동생 孫희림과 북한의 이름난 여배우 洪영희와의 염문설 등이 대표적이다.

(具本永기자)

청소부할머니 "6개월전부터 본적이 없다"

외교관 전용 고급아파트 거주 北대사관, 3층15채 모두 임대

한하면, 국제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신 뜻네 일을 대라고 말자, 우리 할 수 없이 다시 내려 왔다. 철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대화가 이쯤 진행됐을 때, 다른 청소부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그런 말 하면 큰 일 난다』고 말해 대화가 중단됐다. 몇명의 북한인이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밀스럽게 드나들어 진짜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수위 등 주변인물들은 한결같이 출입하는 북한인들이 외부인사들과의 접촉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들은 베일에 가린 「귀부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고 했는데, 「귀부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행동거지가 매우 바르고 품위있으며, 다른 북한인들이 합부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에 혼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준덕(북한 1등서기관)은 천화통화에서 50대 점도의 목소리로 새벽잠을 깨워서인지 쉰 목소리였다. 그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았으며, 집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했다.

【모스크바=黃晟準기자】

"나는 成惠琳 모른다… 괴롭히지 말라"

北韓대사관 1등서기관 최준덕 電話문답

—안녕하십니까. 최준덕씨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준덕인데…』

—成惠琳씨 아시죠?

『(잠시 대답이 없었다) 누구요. 그런 사람 몰라요. 당신 누구요?』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입니다. 조선일보 13일자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기사내용을 조금 읽어주었다) 成惠琳씨와 함께 계셨던 것이 맞죠.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나는 무역업자입니다. 성혜림이 누구죠?』

—金正日의처 成惠琳을 모른단 말입니까.

『몰라요. 그런 것은 대사관에 문의해 보시오.』

—언제 모스크바에 오셨습니까.

『(또 잠시 말이 없은 뒤) 6일 아니 7일쯤 됐소. 나 몸이 아파요. 괴롭히지 마시오.』

—무역업자라고 하셨는데, 무슨 물건을 거래하는지요. 그리고 회사명은…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찾아 가겠습니다.

『와도 소용없습니다. 몸 아픈 사람잡고 왜 이러십니까.』

1시간20분후 다시 통화를 시도했다.

—왜 문을 안 열어 주셨습니까.

『글쎄, 할말이 없어요.』

—무역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외교관 전용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북한 대사관 명의로 임대됐던데….

『전화 끊어요.』 【모스크바=黃晟準기자】

金正日의 여인들

成惠琳 만난뒤 첫부인 洪일천과 파경

73년 혁명가 딸 金영숙과 공식결혼
무용수 高영희와 사이엔 아들·딸 둬

북한 金正日(54)의 전 동거녀 成惠琳(59)의 서방 망명 타진설이 전해지면서 金의 여자및 가족관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金正日의 부인이 누구이며, 자식이 몇이나 되는 지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안에서 그의 여성편력을 거론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되는 까닭이다.

다만 관계당국과 귀순자 등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金正日의 첫 결혼 상대자는 洪일천으로 추정된다. 金正日과 지난 66년 결혼한 洪은 金日成종합대학 노문학부를 나온 혁명가 유자녀로, 金正日과의 사이에 딸 한명(惠敬·28)을 두었다.

물론 金正日과 洪일천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70년대초부터 노동당 문화예술부·선전선동부 등 요직에서 2인자 수업을 받기 시작한 金이 영화배우·무용수 등과 무분별한 염색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이 파경에 이른 주원인은 이번 망명설의 주인공인 成惠琳의 존재였다. 姜成山정무원총리의 사위였던 귀순자 康明道씨의 증언에 따르면 金은 북한의 유명 영화배우였던 유부녀 成惠琳과 동거, 장남(正男·26)까지 낳았다.

成은 월북문학가 李箕永의 아들인 李평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둔 상태였으나, 영화광인 金正日이 이혼까지 시켜가며 동거에 들어갔다는 뒷얘기다. 하지만 金이 그녀에게 본처 대접은 하지 않았다는 게 귀순자들의 귀띔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도 金正日이 73년께 혁명가 유자녀인 金英淑과 두번째 공식 결혼을 하면서 사실상 끝났다고 한다. 이때가 바로 金이 공식 후계자 반열에 오르기 직전이었다.

그는 73년 9월 비공개리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조직및 선전선동담당 비서와 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金英淑(49)이 본처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영화배우나 「기쁨조」로 불리는 무용수들과의 관계 등 金의 여성편력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북송교포 출신 무용수 高영희와 동거하면서 아들·딸 하나씩을 두는 사이 孫成惠(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의 여동생 孫희림과 북한의 이름난 여배우 洪영희와의 염문설 등이 대표적이다.

(具本永기자)

"成씨 서방탈출 완전 조작보도"

모스크바 北대사관

【모스크바聯】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은 최근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惠琳씨가 서방으로 탈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이며 기만전술이라고 13일 밝혔다.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관의 尹명진 참사관은 이날 이타르타스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成씨가 모스크바에 거주해 왔는지, 최근 서방으로 탈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정하면서 신문보도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차례 전화설득 마음돌아…밝혀"

成璂琪씨 아들 서울시내 모처서 기자와 만나

「金正日 지시」 부인 말에 충격…지지하며 눈물 흘리셨다

「金日成 사이로 피눈물 흘리셨다」 가족 증언

서울의 조카 成璂琪씨의 아들인 李한영씨(왼쪽)가 13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본사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이모인 金正日의 전처 成璂琪씨등의 행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수차례 전화를 해 전향을 하자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아버님 生前에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는지요?

『아버님이 먼저 연락을 줄 지 않았다. 먼저 편지를 받아보고 답장을 드리는 정도였다. 만리성 다녀온 얘기를 주로 하고 끝에 가서 부탁을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모와 아버님가 얼굴 얼굴하고 편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향 전에는 안 왔었나.

『5,6년 만에는 서울에는 한두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10월에 처음 전화를 했다』

-전화 이유 얘기를 하던가.

『북한이 어려워 폐쇄하고 왔다는 얘기였다』

-나누어 주신 편지 얘기를 할 수 있나.

『처음에는 전향을 해 전향을 하자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다. 수차례 전화를 해 전향을 하자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다』

-아버님 生前에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는지요?

『아버님이 먼저 연락을 주

▽ 경향신문 1996. 2. 14

"이모가 10만달러 빌려주었다"

成惠琳씨 조카 李漢榮씨 본지와 단독인터뷰

"자필은 해외 머시기 보내라"

李漢榮씨 "조카 성혜림 만나지 못했다"

야당과 接觸 여러차례 韓國선

李漢榮씨 부부가

金正日의 전처 成惠琳씨의 조카 李漢榮씨.

李漢榮씨는 成惠琳씨가 지난 80년 평양에서 숨지기 전 평양 옥류관에서 만나 10만달러를 빌려주었다고 말했다.

李씨는 『지난 10월 성혜림씨가 평양 옥류관에서 만나자고 해 이모와 함께 나가 만났다』고 말했다. 李씨는 『성혜림씨가 2일 밤 평양 옥류관에서 만나자고 해 이모와 함께 나가 만났다』고 말했다.

李씨는 『성혜림씨가 자필로 쓴 편지를 보여주면서 해외 머시기 보내라고 했

▽ 조선일보 1996. 2. 14

金正日 여성편력에 가슴앓이

▽ 동아일보 1996. 2. 14

"딸이었다면 모택동 소녀와 보내요 나"

만경대 김씨 가문의 사랑

(생략)

〈본문〉

金正日 편력 피해자 나아가 보아주며 나라 배려해 하고 허다여함

하늘 정남이 26세… 평양 여자 대학 나서

(생략)

▽ 세계일보 1996. 2. 14

北, 공관에 구호외교 독려

玄성일씨 부부-車성근씨 회견

金正日 7월께 권력승계

◇지난달 귀순한 북한 잠비아주재 외교관 玄성일,崔수봉씨 부부와 공작원 車성근씨(맨 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상류층인사들의 실상을 폭로한뒤 꽃다발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徐相培기자〉

북한은 金正日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수해피해상황을 사실보다 과장보도하는 한편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수재물자 구호를 빙자한 특별구루빠」를 결성, 각국을 상대로 구호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또 해외주재 공관에 『남조선이 국제적 지원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니 해당 주재국들에게 협대 수재상황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라』는 내용의 전문을 한달 주재국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외교관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귀순한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玄성일씨(37)와 崔수봉씨(36)부부, 공작원 車성근씨(28)는 1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교관들의 경우 외화부족으로 일급도 받지 못한채 마약밀매등 외화벌이에 대거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金正日의 권력승계와 관련, 『金正日이 오래전부터 북한 전 부문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승계는 형식에 불과하지만 3년상이 끝나는 오는 7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때도 승계를 하지 않으면 북한주민들로부터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金正日이 정치를 하고나서부터 더욱 못살게 됐다거나 문화 예술분야에 모르고 경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남공작부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증명서및 잠비를 공급하는 작전부 산하 314연락소가 여권은 물론 남한화폐까지 위조, 공작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위조화폐및 여권을 이용, 중국교포를 이용한 우회침투와 직접침투를 병행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와함께 『북한은 93년말 인민무력부에 대남정보수집부서인 문화연락실을 신설, 대남 군사정보수집및 한국인 납치공작임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重鎭기자〉

▽ 동아일보 1996. 2. 14

北대사 전횡에 심한 모욕감

귀순동기-탈출과정

「崔씨 망명」 보복두려워 玄-車씨 뒤따라

잠비아주재 북한외교관 玄성일 崔수봉씨 부부와 공작원인 車성근씨의 귀순동기는 대사관내 외교관 부인들끼리 빚은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대사의 전횡과 횡포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崔씨의 귀순에 이은 玄씨와 車씨의 탈출에는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귀순한 부인 玄씨를 따라 부임한 崔씨 질시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심한 구타。 金대사는 여성이며 출신성분이 좋다 는 이유로 金대사로부터 대사관내 유일한 대학출신 『왜 대사의 지시를 즉시 집행하지 않느냐』며 『이는 金正日지도자동지의 지시를 집행하지않는 것과 같다』고 이를잡을 놓았다。

崔씨는 대사가 개인적 갈등을 빚고 있는 자신에 대해 상이 불온한 사람으로 몰아붙여 북한으로의 소환을 추진하자 「소환=사회적 매장」을 직감, 고민 끝에 지난달 7일 대사관을 벗어나 망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玄씨는 부인 崔씨가 우리 대사관에 찾아와 망명을 요청하자 이를 북한에 보고하고 잠비아정부측에는 부부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탁자나이에 주재하고 있던 북한의 보위부원이 玄씨에게 찾아와 『부인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되 듣지 않으면 권총을 구해줄테니 부인을 처리(살해)하라』고 지시, 玄씨는 갈등에 빠졌다。

玄씨는 권총까지 주며 아내를 처단할 것을 종용하자 아내를 데리고 와봐야 자신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임을 직감, 탈출을 결심하게 됐다。

며칠간 식음을 전폐, 고민했던 玄씨는 돌도 없는 친구인 공작원 車씨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껴오던 車씨의 동조를 얻어냈다。

玄씨는 이때부터 車씨와 함께 탈출의 기회를 엿보았으며 車씨가 먼저 공작원 신분을 이용, 대사관을 빠져나갔다。 그러던중 金대사와 玄씨의 귀환을 촉구하는 전보가 평양에서 날아오자 초조해진 玄씨는 때마침 북한과 잠비아간의 보석합영회사 설립건을 위해 북한대표단 10여명이 잠비아를 방문, 대사관 직원들이 출타한 틈을 타 대사관 뒷문의 울타리를 넘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郎星姬〉

▽ 경향신문 1996. 2. 14

마약밀매등으로 운영비 조달

북한 해외공관 실태

대사 월급 400~450달러線
빈민층 시장이용 헌옷 구입
91년부터 5년간 27곳 문닫아

玄성일·崔수봉씨 부부와 車성근씨 등은 할동기자회견에서 북한외교관 생활을 『북한에서 상류층이지만 외국에서는 비참하다』고 한마디로 압축했다。

『외교부 자체로 잔돈을 조달하라』고 지시, 외교부에 「자금관」를 신설토록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따라 아프리카·유럽등 각지역의 북한외교관은 외교관면책신분을 이용해 술·담배·전자제품을 밀수하거나 마약거래에 나서고 있다。

玄씨는 94년 탄자니아에 어학실습생으로 파견된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姜성국이 마약밀매 등으로 분기당 5만~10만달러를 「자금관」에 송금, 95년 12월 탄자니아 경제참사로 승진한 것을 예로 들었다。

잠비아대사관의 경우 1년 운영예산은 불과 6만달러이며 그나마 최근 2년간의 지원액은 3만달러밖에 안된다고 玄씨는 밝혔다。

잠비아주재 외교관들의 경우 세계적 희귀동물로 보호받고 있어 거래가 금지된 코뿔소 뿔과 상아를 밀매하려고 시도했다。 또 지난해 5월 일시적으로 버스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자 탄자니아에서 사온 중고버스를 잠비아에 판매, 그 대금으로 택시를 사서 운영해 월 1천2백달러씩 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들은 외교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조를리자 잠비아 주재 외교관 부인 4명이 「식료품비 50달러 쓰기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도 1、2주일에 1번 간는 게 고작이며 주로 잠비아 빈민들이 이용하는 지저분한 시장을 찾는다고 한다。 이곳에서 10센트를 절약하기 위해 흑인장사꾼과 값을 깎는라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 일쑤라고 崔씨는 전했다。

주로 중고시장에서 중고품을 사들이는데 이런 행위가 외교관으로서 창피하다고 생각,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옷차림을 일부러 남루하게 한다고 崔씨는 전했다。

이같이 북한공관이 자금난에 허덕이자 현재 아프리카 주재 공관을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 15개 국가로 축소했으며 91년 9개 공관을 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년동안 무려 27개국 공관의 문을 닫았다。

북한은 95년 12월말 현재 상주 대사관 50개, 영사관 3개, 대표부 11개등 모두 64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관폐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李大根기자〉

북한은 재외공관 운영비를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비를 자체조달해 쓰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玄씨는 94년초 金正日이 북한 노동당의 핵심구성원인 중앙위원 1명이 최근 중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北京외교가의 소식통들이 14일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2. 15

北중앙위원 中망명

【北京=朴勝俊기자】 북한 노동당의 핵심구성원인 중앙위원 1명이 최근 중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北京외교가의 소식통들이 14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노동당 중앙위원 1명이 최근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지대를 넘어 중국에 망명을 요청, 중국당국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노동당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기구로서 정위원 1백40여명, 후보위원 9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 한겨레신문 1996. 2. 15

남북관계 고려 사후처리 고심

이상기 기자

'성혜림씨 일가 탈출' 정부대책

망명유도·신변보호 대책 숙고
제3국거쳐 데려오는 방법 검토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고 있는 성혜림씨 일가의 사후처리 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망명을 적극 유도할 것인가가 첫번째 문제이다. 또 탈출에 성공한 성씨 일가에 대한 신변보호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다. 여기에다 망명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신변보호의 경우 우리 정보 당국이 성씨 일가의 탈출을 처음부터 적극 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일가가 북한 최고위층의 가족인 점으로 미뤄 북한 당국에 의한 위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기부는 이날 공식 논평에서 "현재로서는 이들의 신변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이들의 망명을 유도할지 여부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망명 유도와 관련해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도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안기부가 이날 "성혜림 자매가 조만간 서울에 올 것이다"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현재 체류지 및 향후 행선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은 서울 망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무부가 이날 오전 공로명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들의 망명 신청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외무부가 망명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 것도 정부의 이들에 대한 망명 유도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는 만약의 경우 이들의 망명 절차에 대해 북한이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경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고 제3국에 일단 망명토록 한 뒤 시간이 지난 다음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들이 남한에 망명해 있는 성혜랑씨와는 달리 성혜림씨의 경우 김정일 비서와의 사이에 난 것으로 알려진 아들이 북쪽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남쪽으로의 망명을 쉽게 결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한국 당국의 공작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아예 '없었던 일'로 되거나 망명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에서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든 이들의 망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부가 여러가지 고려 끝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생전의 성혜림씨 어머니

북한 김정일 비서의 옛 동거녀인 성혜림씨의 어머니 김원주(1994년 사망)씨가 생전에 스위스 별장 안에 서 있는 모습.(조선일보 제공)

▽ 경향신문 1996. 2. 15

"北韓권력층 스위스서 불법조직"

成씨자매 증언 金正日 전용기 24시간 발진채비

고위층 거액 달러 해외밀반출도

북한 최고권력층은 최근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예치중인 거액의 달러화를 동남아 각국으로 분산시키고 있으며 평양근교 순안비행장에는 金正日 전용기가 발진 채비를 갖추고 늘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 최근 스위스를 거쳐 네덜란드에 체재중인 成惠琳·成惠琅씨 자매는 14일 현지에 파견된 한국정부관계자에게 이런 사실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국제정세 분석가들 사이에 북한 체제붕괴조짐의 하나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成씨 자매는 북한 최고권력층이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들을 일부 정리·통합하고 있으며 이같이 모은 자금을 마카오·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 은행에 예치시키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成惠琳씨의 언니로 지난 연말 딸 李南玉씨(30)를 데리고 나오기위해 평양에 들렀던 成惠琅씨는 『최근 외화자금 계좌이동이 대폭 늘어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언니 成씨는 외환계좌 정리·유출은 金正日의 직접지휘하에 이뤄지고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창구인 금강산무역회사와 삼천리총공사가 주관하고있다고 설명했다.

成씨는 또 『북한측이 현재 평양에 보관중인 비자금도 이에 합류시키고 있다』며 『전체 금액으로 보아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成씨는 『올해 들어 평양근교 순안비행장의 金正日 전용기에 대해 「상시 발진 채비를 갖추고 24시간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는 『현재로선 金正日의 외국방문 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金正日 전용기는 金日成 생존시 구입한 것으로 金日成이 유로이동을 고집한 탓에 별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또 成씨 자매는 북한 권력층이 혹수로 인한 북한 주민의 기아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권력은 아무리 오래가도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姜皓植기자〉

▽ 조선일보 1996. 2. 15

成씨일행 佛에 있다

美망명 가능성…정부"희망지 존중"

모스크바를 탈출한뒤 스위스에서 잠적한 金正日의 前妻(전처) 成惠琳(성혜림)씨 일행은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으며, 곧 프랑스에서 망명을 신청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成씨 일행은 그러나 체류 희망지를 프랑스로 하기위해 프랑스 당국에 망명을 신청할지, 아니면 제3국서 체류하기 위해 타국 공관에 망명신청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成씨 일행의 망명희망지가 어디든 이들은 망명신청을 한 뒤에는 프랑스 당국의 주선으로 유엔고등판무관(HCR)을 만나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成씨 일행 4명이 프랑스엔 안전하게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成씨 일행은 조만간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成씨 일행의 망명 희망지가 프랑스가 될지, 아니면 제3국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제3국이 유럽나라가 아닌 미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成씨 일행의 신변 보호와 향후 행선지 처리 문제 등과 관련, 프랑스 당국과 긴밀한 실무 접촉을 하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成씨 일행의 향후 행선지가 우선적으로 이들의 의지를 존중해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모든 검토를 통해 이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成씨 일행의 의사가 어떤지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 내에서는 成씨 일행의 한국행 유도에 관해 찬반론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 그러나 찬반론 모두, 成씨측이 스스로 한국행을 선택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演光·宋義達기자〉

▽ 동아일보 1996. 2. 15

「成惠琳 亡命작전」 잇단 대책회의

정부당국 긴박한 움직임

언론보도로 「安全」에 신경곤두
南北관계 미칠 영향 면밀분석

정부당국이 金正日의 전처 成惠琳씨일행의 「한국망명작전」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처인 외무부나 통일원등은 공식적으로 그 진행과정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는 成씨가 金正日의 전처이자 金正日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金正男(26)의 생모인데 따른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부는 14일 오전 孔炯明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成씨일행의 잠적및 한국망명대책등을 숙의했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成씨 일행이 네덜란드에 은신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네덜란드가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북한공관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成씨건은 잠비아에서 망명한 玄성일씨부부건과 성질이 다르다』며 『玄씨부부의 경우 처음부터 한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해와 외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이번일에 대해서는 외무부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모른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成씨 일행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원은 成씨의 입국이 다른 귀순자의 경우와 달리 북한최고권력자인 金正日을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成씨 일행이 입국할 경우 金正日이 해외 한국인 보복납치나 테러를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굳이 한국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成씨일행을 일단 미국등 제삼국으로 데려갔다가 잠잠해지면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관계자는 成惠琳씨가 한국에 들어와도 북한이 成씨를 金正日의 전처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북한은 단 한번도 金正日의 부인에 대해서, 심지어 본처로 알려진 金英淑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成씨 일행의 잠적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관계당국은 14일 언론사들의 문의에 대해 『成씨 일행의 현재 체류지및 향후 행선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특히 한국이 「공작」을 통해 成씨 일행을 데려온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당국자는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우리측과 북한공작원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濟均〉

北 돌발행동등 중대변수 부상

金正日전처 탈출

南北관계 영향

대화재개·관계개선 후퇴 예상

"현재 최악 큰영향없다" 관측도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일행이 만약 서울을 망명지로 최종결정하고 서울行을 감행한다면 이는 교착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돌발변수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일단 이들 일행이 북한 여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成씨는 金正日이 북한에서 후계자로의 위치를 공인받은 다음해인 75년이후 영화출연을 중단하는등 공식석상에서 모습이 사라졌다. 公人으로서 적절치 않은 여자관계를 청산한 것이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북한측의 대응은 음성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 될 확률이 높다.

북한은 이와함께 설마 成씨가 망명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金正日의 前妻 거녀라는 신분과 모스크바 북한측의 방응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아웅산폭발사건, KAL기 폭파사건등을 자행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과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成씨의 서울行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관계자들 사이에는 대북관계개선 일정이 겹토돼왔다.

成씨일행이 곧바로 서울에 들어올 경우 이같은 일정은 무산되지 않더라도 크게 지연될 것은 분명하다.

특기할만한 것은 金日成 사망이후 남북관계에 논리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문파동 이후 북한은 金泳三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강화해왔고 金正日은 서서는 4·11총선이 끝난뒤 대북지원, 그리고 10월께 로 점쳐지는 북한의 권력승계 공식화 이후 남북당국간 대화재개로 이어지 成씨의 귀순을 자신에 대한 「흔들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

【柳承宇기자】

◇成蕙琳씨 문제가 경색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새삼 주목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남북이 北京에서 대북쌀지원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언론들 반응·분석

"北에 엄청난 타격… 붕괴조짐"

뉴욕타임스 "前妻 탈출도 못막은 北측 무능력은 굴욕적"

日本經濟新聞 "최고위층 망명 큰 의미… 권력투쟁등 원인"

세계 각국언론들은 成蕙琳씨 탈출사건은 북한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美 뉴욕타임스는 14일 현재 서방에 잠적중인 것으로 전해진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의 탈출은 『북한에 대한 타격』이라며 『북한정부의 비용으로 사치스러운 유배생활을 누려온 전처의 충성을 유지 못한 북한 정부의 무능력은 굴욕적』이라고 본도했다.

이 신문은 『탈출한 成씨가 경애하는 지도자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격상된 그녀의 남편인 金正日에 대한 정보의 寶庫(보고)일 수 있다』며 『金은 서방인사를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의 목소리가 라디오와 TV방송으로 단 한차례 방송됐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망명자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을뿐 아니라 식량부족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북한이 수년내 붕괴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문제 전문가 金正源박사는 이 사건과 관련 『북한체제의 와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지도체제가 인민들로부터의 두려움을 계속 누르고 있으며 이는 붕괴를 앞당기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 = 趙在鏞특파원】

○…일본언론들은 『成씨가 북한 최고위층 인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엄청나다』고 본도했다.

닛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4일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 특권층의 탈출은 경제난이나 권력투쟁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 = 朴榮基특파원】

○…AP 로이터등 세계 주요외신들은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탈출사건을 서울발로 크게 본도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권력과 부, 배신이 얽히고 멜로적 요소도 가미된 마치 추리소설과 같은 미스터리 드라마라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어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 냉랭하게 될 가능성이

▽ 조선일보 1996. 2. 15

大使도 손못대는「金正日 분신」

최준덕은 누구인가

모스크바서 成씨一家 보위책임

실제이름은 최용호

成蕙琳씨 일가를 모스크바에서 돌보아온 최준덕은 어떻게 됐것인가.

그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주재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의 직책을 갖고 활동해 왔지만 실제로는 김정일의 측근중의 측근으로 확인됐다.

최준덕은 그의 여권상의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최용호」이며 김정일 서기실(비서실)의 제2인자이다.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관내에서는 그가 사실상 최고 실력자로 대사도 그를 지휘할수 없었다.

그러나 崔는 성혜림의 모스크바 생활을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온 까닭에 이번 탈북사태의 1차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는 성혜림의 「보호자」라는 역할때문에 김정일의 현재 처인 고영희의 견제를 받아 사소한 부식비 횡령을 이유로 成씨 탈북전에 이미 평양으로부터 소환령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서기실 2인자

성혜림 일가의 탈북사실이 보도된 다음날인 13일 조선일보 모스크바특파원

이 성혜림이 살던 아파트로 전화를 걸었을때 「최준덕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그는 사건후에도 일단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용호는 김정일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다니다가 모스크바로 유학, 러시아통이 됐으며 러시아어에도 능통하다.

나이도 김정일(54)과 같거나 비슷해 과거에 두사람만 있을때는 서로 반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일성의 개인고문으로 활약하다 김정일을 보필하게 돼 2대에 걸쳐 최고급 물품들과 영화필름을 정기적으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한편 성혜림 일가가 사용할 식료품 등을 북한에서 박스단위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김정일이 그의 분신과도 같은 최용호를 성혜림에게 보내 보살피게 한 것은 전처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다.

모험감행 가능성도

최용호가 아무리 김정일과 특수한 관계일지라도 이번일의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그가 자구책을 찾아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金孝浩기자〉

과거 서로 반말하던 사이

脫北사태 책임…거취관심

北,「成씨일가 탈출」무반응

"조작극" 러주재 대사관 회견만

잇단 귀순… 비밀 유지책인듯

북한은 김정일의 妻 成蕙琳씨 일가의 서방탈출에 대해 14일오후까지 공식보도기관을 통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13일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이 成씨의 탈출 보도에 대해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이며 기만전술』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의 윤명진 참사관은 이날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成씨가 모스크바에 거주해 왔는지, 최근 서방으로 탈출했는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면서 『신문보도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成씨사건이 보도된 13일 오후 북경에서 북한의 경제간부들과 접촉을 가진 국내 한 기업인도 『북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상담과정에서도 별로 달라진 점을 못 느꼈다』고 전했다.

북한은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玄성일씨 부부와 공작원 車성근씨의 망명에 대해서도 『아내를 돌려달라』는 玄씨의 망명전 회견내용이 한차례 보도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연말 귀순한 前 북한군 상좌 崔主活씨나 외환딜러 崔세웅씨 일가족의 귀순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 姜成山 총리의 사위인 康明道씨의 귀순에 대해 『사위가 아니다』며 인신공격성 비난보도를 내놓은 이후 고위인물의 탈북사건이나 귀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점차 늘고 있는 고위층의 탈북사태에 대해 매번 공식반응을 보이면 혹여 주민들에게 새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金仁杋기자>

▽ 중앙일보 1996. 2. 15

스위스의 김정일 집과 아들

아파트·별장등 3채이상 소유

셋째처 아들 운전수아들 위장

제네바=고대훈 특파원

당초 지난달 20일께 모스크바를 탈출해 스위스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金正日)의 전 동거녀 성혜림(成蕙琳)씨일행이 14일 현재 스위스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스위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成씨가 입국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일』이라며 『하물며 망명 운운은 금시초문』이라고 成씨의 스위스 체류설을 일축했다.

베른 주재 한국대사관측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스위스외무부 및 경찰청에 조회한 결과 成씨 일행이 망명을 신청한 바 없다』며 스위스 당국에 成씨 일행의 출입국 여부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네바의 북한대표부는 13일 成씨 일행의 망명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한뒤 『한국 안기부에서 만든 거짓말』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정일은 스위스내에 적어도 3채 이상의 집을 소유,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成씨 일행이 김정일이 사줬다는 제네바 시내 「클로 벨몽」34번지의 호화별장에 은둔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클로 벨몽은 1번지부터 20번지까지 밖에 없으며 주민들은 成씨 일행과 비슷한 행색의 동양인을 마주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대사관이 상주해 있는 베른에도 집 한채가 있어 김정일의 셋째 처가 낳은 김정철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되지는 않으나 김정철은 북한대사관의 운전수 아들로 신분을 위장한 채 베른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몇년전 일본의 한 잡지에서 월급 6백달러 밖에 받지 못하는 운전수가 연간 수만달러씩 하는 외국인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모스크바의 김정일同居女 성혜림씨 母子

83년온뒤 외부접촉 없이 은둔

아들은 카지노서 돈쓰며 방탕

모스크바=안성규 특파원

김정일(金正日)의 동거녀 성혜림(成蕙琳)씨가 83년 모스크바에 온뒤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동안 두사람의 맏아들 김정남은 모스크바에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 카지노 업계에선 지난해 『북한 고위관리 자제가 거액을 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문제의 고위관리 자제가 바로 김정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정보관계자들은 전했다. 모스크바의 어머니 성혜림씨를 가끔 만나러 와서는 카지노를 전전하며 거액의 노름판을 벌였다는 것.

그는 특히 고급호텔인 메주드나로드나야호텔 2층에 있는 카지노 「포천(행운)」에서 하루 1만달러(7백90만원)씩 노름하면서 돈을 잃어도 내색조차 하지않아 「카지노의 큰손」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업계관계자들이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2. 16

北 노동당간부 망명신청 否認

中외교부

【도쿄=연합】 중국 외교부 沈國放 부부보도국장은 15일 북한 노동당중앙위원이 중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 한국일보 1996. 2. 15

"두동생 무사하길 간절기도"

오빠 成日耆씨 애타는 심정

『16일이 金正日 생일인 기를 바란는 희망 만큼이데 이번 일로 인해 두 동나 두 여동생의 무사를생이 무사할 수 있을 지 기도했다。

蕙琳이 몸도 불편한데… 北자극 우려도

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동생들을 만난다는 일념 47년간 두 여동생을 가으로 지난해 11월 생명의슴에 묻어 왔던 成日耆씨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러시(성일기·63·서울 은평구 아를 찾은 成씨는 『蕙琳이갈현1동)는 두 여동생이 가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서울에서 함께 살 수 있 통원치료를 해 만나지도 못하고 수십통의 전화로 대신했다』면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의 서슬퍼런 공작원들을 피해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14일 집에서 기자들과 만난 成씨는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코스모스호텔에서 蕙琅이를 만나 「같이 살자」고 말을 건넸을 때만 해도 蕙琅이는 아닌 공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같이 살자는 얘기는 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成씨는 또 『파란만장했던 가족사를 정리해 역사적인 사료로 편찬하고 싶었지만 두 여동생의 안전 때문에 못했다』며 여동생들의 안전을 계속 걱정했다。 成씨는 『북한으로 건너가 어학공부를 열심히해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월북을 결행한 49년 2월16일 종로4가에서 「부디 몸건강히 다녀오라」던 두 여동생의 간곡한 권고가 기억에 선명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成씨는 『동생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金正日 생일을 앞둔 북한당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정부의 신변보호노력을 바랄 뿐』이라며 말을 맺었다。 【尹太亨기자】

▽ 국민일보 1996. 2. 15

망명 절차

"나는 망명을 원한다" 선언필수

체류중인 국가 또는 외국공관에 신청
「유엔난민 고등판무관」등 확인후 승인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成惠琳씨 일행의 망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들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 成씨 일행의 망명의사와 최종 망명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의 망명지가 우리나라 또는 제3국으로 결정돼도 마찬가지다。

成씨 일행이 망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정치적인 망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체류중인 국가나 그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에 신변보호요청과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도 망명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정부는 對北쌀지원문제로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成씨 일행의 우리나라로의 망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의 소재파악과 함께 의사확인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자칫 일이 잘못됐을 경우 이들의 신변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망명지를 달리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망명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등이 나서 최종 망명 희망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우리나라로의 망명을 희망하면 잠비아 주재 북한외교관 현성일씨 부부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이다。 해당국가의 승인과 UNHCR를 활용해 이들의 망명의사를 객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들이 제3국 정부나 외국공관에 망명신청을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해당국가가 망명허용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成씨 일행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망명의사 확인에 앞서 신변안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관련국가의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成씨 일행이 관련국의 보호아래 있게되면 신변안전뿐 아니라 자유의사를 확인하는데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李興雨)

▽ 중앙일보 1996. 2. 15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92년8월 보도한 김일성의 「숨겨진 여인」 김송죽(당시 30세·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다섯살된 딸 백연(오른쪽 끝). 이들은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호텔에 머무르며 피서겸 쇼핑을 했다. [중앙포토]

성혜림씨 一家

김준현 기자

부친은 新幹會 활동으로 獄苦
언니 혜랑씨 北작가동맹 회원

김정일(金正日)의 동거녀 성혜림(成蕙琳·58)씨와 언니 혜랑(蕙琅·60)씨는 서울 계동에서 태어나 월북할 때까지 줄곧 서울에서 생활했다.

이들 자매는 서울사대부국을 졸업했으며 성혜림씨는 풍문여중, 혜랑씨는 진명고녀를 거쳐 이화고녀를 다니던중 9·28 수복때 아버지 성유경(成有慶·82년 사망)씨를 따라 월북했다.

아버지 成씨는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 고쿠시칸(國史館)중학을 졸업하고 신간회 활동 등으로 잦은 옥중생활을 했다.

성유경씨는 해방후 남로당 중앙위원과 재정부장을 맡으며 북한정권 창출에 큰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김원주(金源珠·94년 사망)씨는 일본고등잠사(蠶絲)전문학교를 졸업, 48년 김일성·김구등이 참가한 남북협상에서 여성동맹 대표로 참가했다가 북한에 머물며 6·25가 터질 때까지 강동정치학원 강사를 지냈다.

성혜림씨는 월북뒤 북한에서 『분계선 마을에서』등의 영화에 출연, 유명 배우가 돼 김정일과 동거하면서도 영화에 출연했다. 혜랑씨는 김일성대 물리수학부에 진학해 평성과학원 물리수학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이태순(68년 사망)과 결혼했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혜랑씨는 북한작가동맹 회원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成씨의 오빠 일기(日耆·62)씨는 사대부국을 졸업, 보성중 3학년때 아버지의 권유로 모스크바 유학을 결심하고 49년 2월 단신월북했다. 그러나 유학이 좌절된 일기씨는 오진우가 교장으로 있던 함북 회령의 제3군관학교에 입교했다.

이후 강원도사창리에 주둔하던 연선빨치산에 소속돼 50년 6월25일 새벽 강원도 해안으로 상륙했다. 이어 일기씨는 경상도 일원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 54년 1월 경남창녕군 본가에서 체포돼 두달만에 전향, 단국대영문과를 다니다 중퇴하고 성균관대사학과를 졸업했다. 일기씨에 따르면 성혜림씨는 어린 시절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며 학교성적은 썩 우수한 편이 아니었다. 혜랑씨는 통솔력이 뛰어나고 학업과 문학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일기씨는 『남앞에 나서면 수줍어하던 혜림이가 영화배우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2. 15

러주재 北대사관 전화두절

제네바 주민들 "成씨별장 금시초문"

北대표부 직원 "망명모른다" 신경질

모스크바·제네바 현지표정

北한 金正日의 전처 成慧琳씨가 망명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잠적한 뒤 스위스로 들어왔다가 다시 자취를 감췄다는 국내보도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북한 고위인사용 아파트가 있는 제네바는 떠아닌 「성혜림파동」에 휩싸여 있다.

○…현재 스위스 정부는 물론 한국 외교소식통들과 정보관계자 및 제네바 주재 국제기관 등은 사전에 입이란도 맞춘듯 한결같이 成씨 일행의 입국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成씨 일행의 출입국여부를 확인한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고위인사나 관련출입은 본명과 여권명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출입국 일자를 확인한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成씨 일행이 김정일이 사줬다는 제네바 시내를로 벨롱쉬의 호화별장에 은둔했다는 국내의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를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행이 클로 벨롱가 34번지에 있는 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체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클로 벨롱가는 1번지부터 20번지까지밖에 없으며 마을 주민들도 成씨 일행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마을 주민 도미니크 에게르(55)는 『16년 동안 이곳에 살았으나 동양인을 본 적은 없다』며 한국 취재진들을 신기한듯 쳐다보았다.

반면 김정일은 자신의 부인들을 위해 레만호수를 끼고 있는 제네바 근교에 별장을 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스위스를 방문하는 북한 고위인사들을 위해 입이란도 맞춘듯 한결같이 급하과트에 成씨 일행이 묵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94년 北 美고위급회담 당시 북측 대표인 姜錫柱 외교부제1부부장 일행이 묵기도 했던 이 아파트는 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일종의 「특별관저」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부 숀월수 참사관 명의의 문패가 붙어 있었다.

13일 오후 이 아파트에는 북한대표부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 1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살고 있느냐』고 한국 취재진들이 묻자 『대사관의 아파트에는 현재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일까지만 해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1등 서기관 崔준덕이 모스크바 거주 북한 건물들의 집단숙소격인 이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4일 현재 이 아파트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아파트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한편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13일 成씨 일행의 망명 여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면서 『안기부에서 조작한 거짓말이니 그곳에 가서 알아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成씨 일행의 망명설로 인해 제네바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 및 정보관계자들도 정혜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치열한 정보수집전을 벌이고 있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치고 북한 최고권력자의 부인이 망명했다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제네바=孫東佑특파원】

○…成慧琳씨 사건이 돌고돈 파장은 그녀가 머물렀다는 모스크바에서도 의혹과 궁금증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成씨가 거주하던 모스크바 아파트에는 현재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成慧琳씨 사건이 돌고돈 파장은 그녀가 머물렀다는 모스크바에서도 의혹과 궁금증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成씨가 거주하던 모스크바 아파트에는 현재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일까지만 해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1등 서기관 崔준덕이 모스크바 거주 북한 건물들의 집단숙소격인 이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4일 현재 이 아파트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아파트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러시아 내부부 산하 「비자 및 국적문제국」(OVIR)의 한 관계자는 「성혜림이란 이름으로 비자가 발급되거나 거주등록이 이뤄진 일은 없다」고 아예 성혜림이란 존재를 부인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成씨는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채 80년대 중반에 입국했으며 북한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본명으로 거주등록을 할 때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은 成씨 일행에 대한 지속적 취재를 주고 있는 사람을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당국이 함구로 일관하자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러시아 언론은 성혜림 사건을 보도하거나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이 몰고온 파장을 전하고 있다.

ORT 등 국영러시아 방송이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민영 NTV방송은 13일 저녁 『한국대사관 직원의 말에 의하면 成씨는 곧 서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북한대사관은 외부전화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출입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러시아에게 북가 승용차 몇대만이 들락거리는 것이 목격될 뿐이다.

【모스크바=金燉雄특파원】

▽ 한국일보 1996. 2. 15

유럽國 한결같이 "모른다"

안개속 成씨 소재

지난달 모스크바를 탈출, 스위스에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成慧琳씨 일행은 현재 유럽의 제3국에 은신하고 있는 게 확실시되지만 제3국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스위스에서의 일행의 행적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스위스를 비롯, 인접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및 영국 독일등 유럽북의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해당국 한국공관들은 한결같이 成씨 일행의 소재에 대해 『출입국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위스 베른주재 한국대사관측은 14일 『스위스 외무부와 경찰청에 成씨 일행의 출입국 여부를 조회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네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망명의 일행이 클로벨롱 35번지에 있는 별장에서 묵었다는 것이나 클로벨롱은 1번지부터 20번지까지 밖에 없으며 동네주민들도 成씨 일행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동네주민 도미니크 에게르씨(55)는 『16년동안 이 곳에 살았으나 단 한번도 동양인을 본적이 없다』며 북한사람들의 별장이 없다고 단언했다.

제네바에서 멀지 않은 니옹지역에 金正日 여인들의 별장이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측은 이날 한국기자들이 몰려가 成씨 일행의 잠적및 망명기도설을 물어보자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며 『날조한 거짓말이니 당신네 정부에 물어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네바시내에는 또한 북한대표부가 본국의 특별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구입한 「김철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한국기자들이 이 아파트를 찾아가 인터폰을 통해 「김철수 참사관댁이냐」고 묻자 한 여자가 북한말투로 「대사관에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고 퉁명스레 끊어버렸다.

○…유럽 각국이 成씨 일행의 입국이나 체재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유럽내 한국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층들은 대개 본명과 여권명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유럽지역의 특성상 한나라에만 입국비자를 받으면 다른 인접국가로의 이동은 거의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정부의 경우 한국대사관측이 成씨의 입국여부를 조회하자 『여권번호와 정확한 영문성명을 제시하지 않는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유럽의 첩보기관들 역시 成씨 일행의 소재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지역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成씨의 행적과 향후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북한최고권력자의 전처인 만큼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네바=宋大權특파원】

체류說 스위스별장지도 "무근"

국경넘기쉬워 추적에 어려움

▽ 한국일보 1996. 2. 15

成씨일행 탈출과정 "미스터리"

감시망 어떻게 뚫었나
서울과 자유롭게 전화
오빠와 모스크바 만남

金正日의 전처 成慧琳씨 일행이 북한의 감시망을 피해 어떻게 모스크바를 탈출했는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북한당국은 체제붕괴 위협을 막기 위해 해외 거주 주요인사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 대부분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면 成씨 일행이 어떻게 감시망을 뚫었는지 혹은 북한당국이 아예 감시조차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의 대상이다.

모스크바에서 成씨와 같이 살았던 언니 慧琨씨는 오빠 成日출씨와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들의 접촉과정에서 북한당국이 이들과 成씨 등과 李한영씨와 지난해 10월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했고 이어 12월에는 6·25때 전향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에 귀순해 살고 있는 국의 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들과 成씨 등과 접촉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成씨 등을 순한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부부장 출신의 崔주활씨(47)는 이에 관해 『成慧琳씨는 「지나간 한 때의 여인」으로 정보당국에 노출돼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金炳旗기자】

"北측 成씨 과신·감시人力 자금 부족"분석

"정보가치 적다" 판단 감시해제 했을수도

지나치게 믿었거나 아니면 미행 등 감시 비용과 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난으로 미뤄 실질적인 활동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成씨는 아이까지 낳은 金正日의 여인이었던만큼 「감시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대상」으로 봐야한다』며 『成씨일행은 오랫동안 모스크바에 살아서 웬만한 행동으로는 의심받지 않았고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成씨 일행의 여행이나 쇼핑활동이 우리측으로 간여했는냐는 관심의 초점이다. 정보당국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현재까지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전인지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成씨 일행의 여행이나 쇼핑활동이 우리측으로 정보당국에 노출돼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金炳旗기자】

성혜림 사건이 돌고돈 파장은 그녀가 머물렀다는 모스크바에서도 의혹과 궁금증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成씨가 거주하던 모스크바 아파트에는 현재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일까지만 해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1등 서기관 崔준덕이 모스크바 거주 북한 건물들의 집단숙소격인 이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4일 현재 이 아파트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아파트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러시아 내부부 산하 「비자 및 국적문제국」(OVIR)의 한 관계자는 「성혜림이란 이름으로 비자가 발급되거나 거주등록이 이뤄진 일은 없다」고 아예 성혜림이란 존재를 부인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成씨는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채 80년대 중반에 입국했으며 북한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본명으로 거주등록을 할 때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은 成씨 일행에 대한 지속적 취재를 주고 있는 사람을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당국이 함구로 일관하자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러시아 언론은 성혜림 사건을 보도하거나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이 몰고온 파장을 전하고 있다.

ORT 등 국영러시아 방송이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민영 NTV방송은 13일 저녁 『한국대사관 직원의 말에 의하면 成씨는 곧 서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북한대사관은 외부전화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출입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러시아에게 북가 승용차 몇대만이 들락거리는 것이 목격될 뿐이다.

【모스크바=金燉雄특파원】

숨막힌 5개월 「국제첩보 드라마」

成蕙琳추적 관계당국 극비작전

작년10월 첫통화후 「특별반」구성
北 강제납치 주장우려 철저보안
12월 평양行 소환아닌가 긴장도

「成蕙琳을 추적하라」

지난해 10월20일 82년 서울로 귀순해온 李한영씨(35)가 러시아로 국제전화를 시도, 어렵사리 어머니 成蕙琳씨와 통화한 직후부터 관계당국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통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李씨 어머니는 물론 그의 이모이며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이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고 모스크바를 벗어날 것 같다는 「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관계당국은 러시아쪽 사정에 밝은 요원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만반의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대가 북한 최고 권력자인 金正日의 전처이며 북한 관계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마찰」등 만약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했다. 일을 그르칠 경우 「강제 납치극」이라고 억지를 쓸 북한의 역공세 등에 대비하면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했다. 마치 한편의 국제첩보드라마를 방불케하는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李씨가 어머니와 통화에 성공한 1주일 후 李씨는 부인을 홍콩으로 보냈다. 부인은 홍콩의 어느 호텔에서 시어머니 成蕙琳이 보낸 오스트리아인 중개인을 통해 李씨 자매의 한 명과 접촉, 시어머니 자매의 북한탈출 의사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미화10만달러와 다이아몬드반지, 오메가금시계등 시어머니의 선물을 받았다.

관계당국 대책반은 이때부터 成씨 자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에 나선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成씨 일행이 갑자기 지난해 12월20일 평양으로 귀국하자 당국은 일시 긴장했다. 모스크바 탈출 계획이 노출돼 소환돼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들 李씨도 어머니의 평양행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成씨 일행이 올 1월초순께 다시 모스크바에 나타났다.

대책반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보다 확실한 탈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신도를 하던 중 成씨 일행의 종적이 다시 사라졌다. 당국은 「어머니가 제3국으로 탈출할 경우 신호로 모스크바 아파트의 전화코드를 뽑아 놓기로 했다」고 전한 李씨의 말대로 成씨가 머무르던 아파트의 전화가 불통임을 확인하고 일단 본격 탈출에 앞서 몸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대책반은 스위스에서 成씨가 매년 서너차례 머무르던 제네바의 별장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별장은 金正日이 2백만달러를 들여 成蕙琳씨에게 사준 것이었다. 당국은 북한측이 成씨 일행의 거사를 눈치채고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망을 치고 이들 일행을 관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해 이들 일행의 한국행이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때문에 대책반은 노심초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尹勝容기자】

특히 스위스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행적에 각별한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사이 李한영씨와 成씨의 오빠 成日善씨는 스위스 별장의 成씨 일행과 전화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로부터 1주일후 成씨 일행은 별장을 나와 제3국으로 잠적했다. 물론 대책반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보호작전은 계속됐다. 대책팀은 현재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成씨 일행의 행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행에 앞서 여러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해 이들 일행의 한국행이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때문에 대책반은 노심초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尹勝容기자】

▽ 한국일보 1996. 2. 15

成씨일행 향후 처리 어떻게

체류國 베일속 당국 긴밀접촉

은신처 네덜란드·프랑스등 추측분분
국제적인 亡命의사 확인거쳐 한국올듯

스위스에서 잠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일행 4명이 14일 현재 유럽의 제3국에서 서울망명을 위한 최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제3국이 어느나라이며 어떤 경로로 서울에 들어올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들의 망명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과 국내언론의 본도현황을 현지에 수시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한 우리측 현지대책반이 제3국의 보호 아래있는 成씨일행과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거나, 이미 우리측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의 망명자 처리과정을 감안할 때 이들은 현재 거처로 삼고있는 제3국에서 서울망명이 객관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국제적 확인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서울행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또 다른 3국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행을 위한 일시적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제3국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들이 북한이 네덜란드의 보도현황을 현지에 수시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제3국 현지대책반이 제3국의 보호 아래있는 成씨일행과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등 최종 망명지를 향한 행로를 위해서도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비공식적인 정보채널을 통해 흘러나온 네덜란드 체류설은 우리측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對북한교란책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들이 쫓기는 입장에서 제3국행을 감행했을 경우 비행기 대기시간등 공항의 보안요소를 감수하는 대신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를 수시로 왕래하는 TGV를 타고 프랑스행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제네바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TGV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등도 현재 체류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북측의 공작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張寅鐵기자】

▽ 세계일보 1996. 2. 16

대규모脫北 대책강구

통일안보회의 급변 北韓정세 다각 분석

귀순자처리 통일원주도로 일원화

獨島분쟁 강력대처 재확인

정부는 1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李壽成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의 북한정세가 불안정하다고 판단,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李총리를 포함, 權五琦통일부총리 孔魯明외무 李養鎬국방장관과 權寧海안기부장 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宋榮大통일원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北韓정세와 독도문제 등 한반도안보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했다』면서 『북한정세는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부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며 최근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등 북한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탈북자대책 문제와 관련,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13개부처에 흩어져있는 귀순자처리 사안을 통일원 주도로 일원화하고 북한붕괴에 대비, 「북한주민탈출 대비계획안」(일명 평화계획)을 빠른 시일내 보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는 귀순자들의 수용심사 기준, 수용시설 생계지원을 포함한 생활보호, 직업훈련과 정치·사회교육 등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독도문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영토라는 점을 들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엄격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趙敏皓기자〉

▽ 세계일보 1996. 2. 16

成씨 CIA서 보호

정부 제3國망명희망땐 적극지원

정부는 15일 최근 金正日의 동거녀 成蕙琳씨(59) 일행이 북한 감시망을 벗어나 서방으로 탈출한 사건과 관련, 망명국 결정은 본인들의 희망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成씨 일행의 망명과 관련, 宋榮大통일원차관은 이날 李壽成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현재 유럽의 제3국에 피신중이며 신변안전을 우려, 체류중인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成씨 일행이 한국망명을 희망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나 美國등 제3국 망명을 원할 경우 당사국과 협의해 이를 적극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成씨 일행은 현재 유럽의 한 국가에서 美CIA의 보호 아래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망명국과 망명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趙敏皓기자〉

▽ 조선일보 1996. 2. 16

제3國에 「안전체류」 타진

정부 成씨일행 美·유럽國 희망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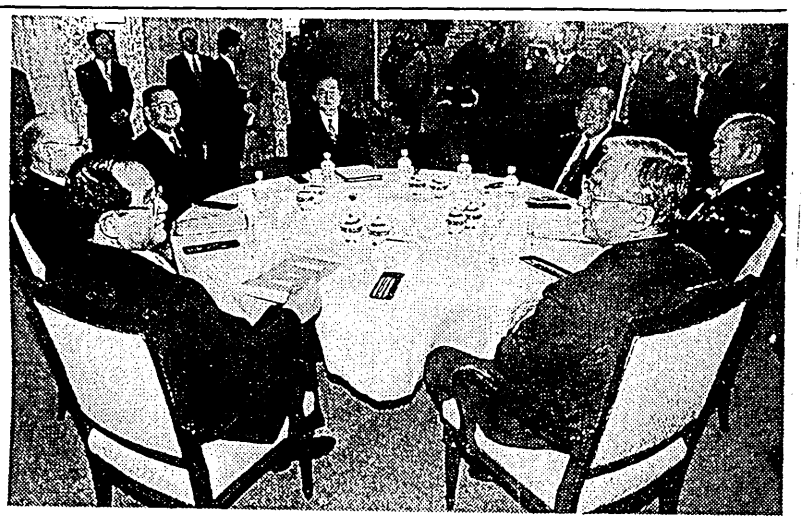
한국망명 인위적유도 않기로

정부는 모스크바를 탈출,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成蕙琳(성혜림)씨 일행의 한국 망명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 제3국에서의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유럽 몇나라 정부에 대해 成씨 일행의 안전체류 보장방안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15일 『成씨 일행의 행선지 문제는 그들 자신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들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든, 우리 정부로서는 이들이 어떠한 危害(위해) 가능성으로부터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최우선을 두고 몇몇 나라 정부와 예비적 접촉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成씨 일행의 행방은 당장 어느 나라로 망명을 결정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나, 당분간은 일단 제3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최종 망명지를 결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이같은 대안을 놓고 成씨 일행의 의사를 타진중임을 시사했다. 〈金昌基·宋義達기자〉

▽ 한국일보 1996. 2. 16



◇정부는 15일 李壽成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의 북한사태및 독도문제 등에 관해 대책을 협의했다。 【李鍾哲기자】

"成씨일행 신변안전이 제일중요"

宋통일원차관 成씨관련 일문일답

15일의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한 宋榮大통일원차관은 成慶琳씨 일행 서방탈출에 대해 「신변안전의 중요성」만 거듭 강조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宋차관은 成씨일행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成慶琳씨 대신 「成慶琅일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들 자매가 망명희망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成慶琳씨의 소재는 파악하고 있는가。 또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成慶琅씨 일행이 제3국에 피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하고 있다。 북한의 위해가능성과 언론의 추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의 신변안전이 극 중요하다고 여겨 언론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는 의 협조와 자제를 요망한다』

北韓측의 위해공작우려 소재지 함구

망명지싸고 成씨자매간 異見 관측도

-이들과 접촉은 이뤄졌는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이들의) 신변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금주중으로 한국에 올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웃으며) 말한 것을 음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成씨 일행이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들이 제3국의 보호를 받고 있나。

『더 자세한 얘기는 (이들의) 신변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

-이들은 현재 안전한가。

『말한대로 이해해 달라』

-成씨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의 신변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들의) 신변안전을 해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들은 현재 안전한가。

『소재가 노출되면 위해공작이 있을 수 있다』

-成씨가 프랑스에 있다는 설이 있는데。

(웃으며 대답회피)

-成慶琳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않고 成慶琅일행이라고 말한 의미는 뭔가。

(宋차관은 金京雄공보관을 통해 『成慶琳과 成慶琅은 무슨 차이인가』라고 반문한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金炳讚기자】

▽ 동아일보 1996. 2. 16

北 통제기능 이완 판단

軍-정권핵심부 동요조짐은 없어

통일안보회의 논의 내용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최근 북한에서 「이상징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잠비아에서 玄성일씨부부등 고위층 자제가 망명하는 징후 비롯, 최근 탈북사태가 이어진데다 △金正日의 전처 成혜림씨 자매의 잠적 △북한정권의 심장부인 평양중심가 러시아무역대표부에서 북한 사회안전부소속 조명걸등사의 무장망명요청 및 자살사건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날 논의의 핵심은 과연 이같은 사건들을 돌발적인 북한붕괴의 전주곡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단 최근 일련의 사건이 곧바로 북한붕괴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붕괴의 대표적 징후로 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이같은 체제 이완작용에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북한 정권핵심부가 아직까지 비교적 단단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근거였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金成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통한기능이 급격히 이완됐다。 따라서 북한이 점점 위험수위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대책마련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成씨 일행의 한국 망명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成씨 일행의 잠적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상 이들의 한국입국은 남북관계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데 의견이 접근됐다。

이날 회의에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2배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대책도 주요의제였다。 일본이 내주 이후로 EEZ발표를 연기했지만 발표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EEZ 발표내용에 독도문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만일 독도를 포함시킬 경우 전면대응한다는 기존 전략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정례참석자가 아닌 李총리가 주재한 것도 북한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朴濟均〉

▽ 한겨레신문 1996. 2. 16

투시경

'통일안보' 조율권 왔다갔다

이상기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4년 4월22일 이회창씨를 국무총리직에서 전격 경질했다.

당시 이 전총리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회부·조정된 안건은 관계장관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에 도전한 행위로 간주돼 경질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안보문제는 총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북한핵 문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던 같은달 7일 김 대통령이 "통일부총리가 중심이 돼 최소한 주1회 이상씩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라"고 지시한 지 꼭 보름 만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22개월여가 지난 14일 김 대통령은 이수성 국무총리로 하여금 15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이를 주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일을 바라보자면 어떤 때는 총리가 안보문제에 관여하면 안되고 또 어느 때는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대통령 자신이 금지시킨 행위를 아무 설명없이 뒤집은 것은 한때 잘못 판단했다는 반증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물론 최근 독도문제, 성혜림씨 탈북사건, 평양 주재 러시아무역대표부 총격사건 등 큰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부총리 대신 총리가 주재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과거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맞는 일이다.

대통령의 말과 지시는 곧 법률 이상의 효과와 힘을 가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 만큼 그의 말과 지시는 신중함과 함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 동아일보 1996. 2. 16

成씨 92년 亡命타진

러 교포접촉… 여건안좋아 포기

조카 李한영씨 밝혀

金正日의 전처 成혜림씨와 언니 成혜랑씨 자매가 지난 92년 모스크바에서 현지거주 교포와 접선, 망명의사를 내비쳤다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포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成혜림씨의 조카 李한영씨에 따르면 당시 成씨자매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망명한 교포 H씨와 만났으며 H씨를 통해 82년 모스크바에서 사라졌던 成혜랑씨의 아들 李씨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때 成씨 자매는 망명할 의사를 살짝 비치고 망명결심이 서면 H씨에게 전화를 걸기로 약속했으나 결국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李씨는 「어머니가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92년도에 움직이려 했으나 중간에 낀 사람(H씨를 지칭)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李씨는 또 「최근까지도 이모는 망명에 소극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어머니가 「나하고 남옥이(혜랑씨의 딸)만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몸이 불편한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설득, 이모의 마음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모는 또 자신이 한국으로 망명할 경우 아들 金正男(26)의 북한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金日이 正男이를 총애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승계할 만한 사람은 正男이밖에 없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한편 成씨일행의 망명지 결정등과 관련, 현재 우리 정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成혜랑씨의 딸 李남옥씨(30)로 그녀는 제네바종합대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를 전공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成씨 자매는 우리정부측에 한국으로 올 경우 △단독주택제공 △3명정도의 보좌관배려 △유대하고 입국하는 외화의 제한없는 사용 △成혜림씨에 대한 성의있는 치료 △테러에 대비한 완벽한 경호경비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우리정부측은 이들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1996. 2. 16

成씨자매 韓國行 주저

"잠적報道로 신변위험" 이유

스위스에서 잠적한 金正日의 전처 成혜림씨 일행은 현재 유럽지역의 한국가에 머물면서 한국측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국망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成씨 일행은 한국에 망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었으나 이들의 잠적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변위험 등을 이유로 한국망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成씨 일행은 관계당국과의 접촉에서 망명조건으로 △한국입국사실을 보도하지 말고 △입국뒤 단독주택 및 수행원을 제공하며 △소지한 돈을 압수하지 말고 △원하는 시기까지 경호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다른 조건은 들어줄 수 있으나 언론 비보도문제는 한국과 같은 개방사회에서 계속 유지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며 설득을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잠적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평양에 있는 아들 金正男(26)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당초부터 한국망명을 다소 주저했던 成혜림씨가 망명에 난색을 표시하는데다 成혜랑씨 등도 안전문제를 들어 망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成씨 일행의 한국망명추진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 망명지선택은 成씨 일행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1996. 2. 16

成씨 헤이그 체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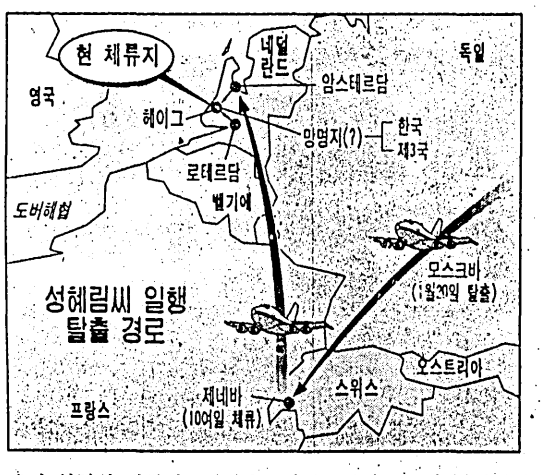
美 외교소식통 언니만 韓國行희망… 정부 意思타진중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모스크바를 떠나 스위스로 갔던 김정일(金正日)의 전동거녀 성혜림(成蕙琳)씨 일행 4명은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머무르며 망명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成씨는 망명지로 미국을 원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흔들리기 시작, 북한에 되돌아가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언니인 성혜랑(成蕙琅)씨는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성혜랑씨의 딸 이남옥씨와 성혜림씨 수행원은 成씨 자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成씨 자매간의 의견이 엇갈려 망명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과 네덜란드 당국자들은



成씨 일행의 정확한 의향을 타진중이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들의 최종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위스를 떠나 당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렀으나 국제사법재판소(ICJ)등 국제난민문제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 헤이그로 옮겨졌으며 신변안전및 본인들의 의사 확인을 위해 현재 개인별로 분산 보호조치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현시점에서 이들의 거취가 어디로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한국이나 미국, 또는 제3국에 머무르는 방안을 포함해 각자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해당국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의외로 장기화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현재로서는 행선지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 국민일보 1996. 2. 16

脫北者대책위 구성

정부 대규모 유입대비 관련법개정

사회적응 훈련등 지원강화

제3國통한 入國者도 대상포함

정부는 탈북자의 대량 유입에 대비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탈북동포보호법으로 개정하고 탈북자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탈북자의 송환대책, 사회적응훈련 등 탈북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난 89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방치돼 온 통합대비계획(일명 평화계획)을 수정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귀순자의 보호에 국한되어 있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탈북동포보호법으로 개정해 송환과정에서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통일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3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탈북자대책위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귀순이라는 용어 자체도 냉전시대의 잔재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부적합한 표현이라면서 「단순 귀순자뿐만아니라 제3국을 통한 입국자 등 모든 종류의 탈북자가 보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 송환과 수용시기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수의 귀순자에 국한되어 있던 보호개념을 다수의 탈북자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통합대비계획의 수정배경 및 방향에 대해 「일련의 북한사태 변화를 종합적 준, 생계지원,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수의 귀순자에 국한되어 있던 보호개념을 다수의 탈북자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계획에는 대규모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지난해부터 각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통합대비요원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朴一燮)

▽ 경향신문 1996. 2. 16

"80년 金正日 제거 모의"

혈족·측근들 金日成에 투서

"술·도박 탐닉 사생활 문란 새벽까지 裸體미녀와 파티"

李漢榮씨 보사 단독인터뷰

지난 80년 金正日의 일부 측근과 혈족이 모의해 金의 방탕한 생활내용을 金日成 당시 주석에게 투서, 金正日을 실각시키려 했던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당시 金正日은 이미 공식적으로 「지도자 동지」 칭호를 받고 있던 때여서 이같은 사실은 북한 권력층은 물론 친족 사이에서도 金正日에 대한 반감이 일찌감치 팽배해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金正日의 전처 成愍琳씨의 조카로 金正日의 「15호 관사」에서 함께 생활한 적이 있으며 지난 82년부터 서울에 살고있는 李漢榮씨(36)가 15일 본사 기자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李씨가 밝힌 내용은 우리정부나 미국정부는 물론 북한의 관계자들 대부분도 몰랐던 사실이다.

李씨에 따르면 80년 9월 금수산의사당에 金正日의 투서가 金주석에게 배달됐다.

「주말 측근파티」는 金正日이 매주말 가장 가까운 측근 30명을 엄선, 평양 창광거리 85호 집무실옆 행사장 건물 2층에서 새벽 4시까지 벌이는 파티다.

투서에는 술을 비롯한 당 군 고위간부들이 나체의 미녀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추며 도박까지 벌이는 방탕한 행동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또 투서 말미에는 「위대하신 수령동지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해야 할 고위급들의 부화방탕한 행동에 인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술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엄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 투서는 그러나 정치보위부 검열에 적발되는 바람에 金주석의 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李씨는 밝혔다.

이 사실을 안 金은 즉시 정치보위부 2국에 투서 작성자및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金正日의 특명에 따라 정치보위부는 吳振宇 인민무력부장을 제외한 측근파티 참석자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李씨는 「당시 북한의 고위간부들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조사를 받느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2개월간의 조사끝에 정치보위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李명재의 부인 金모씨를 체포했다.

金씨는 고문끝에 교묘히 밀정을 위조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배후세력은 밝히지 않았다.

보위부 검열과정 적발 노동당간부 부인 체포 남편 손으로 공개射殺

金正日 충격 동생 平一 감시강화

金씨는 당시 金日成대학 상업교원(교수)이었으며 金씨와 연관된 친척·친지 전원이 2차조사를 받았다.

정치보위부는 또 투서가 金正日의 여동생인 敬姬(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의 집에서도 발견됐다는 보고를 金正日에게 했다.

金正日은 혈족이 관련됐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았으며 그뒤 金平一등 친족에 대한 감시를 확대했다.

李씨는 「金正日은 다음날 측근 파티의 참석자들을 평양시 룡성구역에 있는 정치보위부 본부청사 뒤편 사격장에 집합시킨 뒤 李명재 부부장에게 金씨를 처단할 것을 지시, 李가 金씨를 권총으로 사살했다」고 말했다.

李씨는 또 「아내 金씨를 사살하고 충성을 확인받은 李명재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몇달 뒤 金正日의 중매로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고 전했다. 한편 金正日은 투서행위와 관련된 여동생 敬姬를 한때 공식직위에서 배제시키고 감시를 강화했다고 李씨는 설명했다. 〈蔡皓植기자〉

「주말 측근파티」와 「특각(特閣)행사」등의 내용을 담은

성혜림씨 亡命地 못정해 고심

成씨사건 展望·관계국 입장

일행 異見땐 各者 선택할수도

"납치"逆攻우려 한국行 강행못해 韓國

北-美관계 장애될까 소극적 관망 美國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스위스를 떠나 네덜란드에 체재중인 성혜림(成蕙琳)씨 일행 4명의 탈출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워싱턴 관계자들에 따르면 成씨 일행이 미국행을 원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복잡해지자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태도도 보이는등 복잡한 심리상태를 보여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선지 고민

스위스에 도착한 成씨 일행은 당초 모스크바를 떠날 때와는 달리 망명지 문제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역」이라 할 수 있는 成씨는 처음엔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잇따르자 북한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포함,마음을 못정하는등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언니 성혜랑(成蕙琅)씨는 한국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두사람의 결정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에 따라 당초 이들이 스위스에 도착하는 즉시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던 추측은 어긋났으며 결국 이들의 의사를 확인,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성혜림씨가 미국행을 원하는 이유나 최종 행선지에 대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등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관측통들은 다만 『성혜림씨가 특별히 한국을 선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혜림씨는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모스크바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에따라 굳이 한국으로 가서 여론의 초점이 되는 부담을 안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언니는 한국에 아들이,있어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계국 입장

한국은 이들의 한국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이에따라 1차로는 스위스에서,또 네덜란드로 옮겼을 때도 현지에서 즉시 한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다 갖추어 놓았을 만큼 강력히 한국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한국이 마구 밀어붙일 수 없는 까닭은 만의 하나 성혜림씨가 나중에라도『한국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식의 입장을 표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 이렇게 되면『한국이 납치 공작을 벌였다』는 북한의 대대적인 역공을 받을 수 있어 한국은 매우 난처해진다.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의사표시보다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적극성을 안보이는 가장 주요한 이유중 하나는 成씨를 받아들이는데 따른 부담에 비해 소득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 즉 成씨 일행이 가지고 있을 정보 정도는 이미 다른 경로로도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成씨를 받아 들이기가 부담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같은 망명수용이 현재 별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미·북한 관계에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익만을 고려, 마냥 외면만 할 수 없다는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현행 국제관례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명백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피난처를 찾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세계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미국망명 요청을 외면하는 것 역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워싱턴의 또 다른 정치분석가는 『이같은 형태의「대의론」이 주로 대외적인 창구를 맡고 있는 국무부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처럼 제3의 당사국들은 망명요청자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함께 망명신청자와 해당국간에 의견이 수렴되도록 지원하는 정도다.

향후처리 전망

이들의 거취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만약 의견이 통일된다면 일행 전부가 같은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의견일치가 안된다면 각개인이 독자적으로 선택하도록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 한국이나 미국 모두가 현시점에서 부담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3국, 예를 들면 네덜란드 등에 남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그러나 이경우 당사자들이 나중에라도 이의를 제기, 새로운 망명처를 원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재개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하나 만약 이들중 일부가 망명의사를 번복하려 할 경우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일행의 행적

이들은 첫 기착지인 스위스를 떠나 네덜란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곳을 택한 이유는 북유럽국 중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네덜란드이기 때문.

일행 4명은 네덜란드에서는 당초 암스테르담의 모 호텔에 묵었으며 이후 각기 분산해 이곳에서 멀지않은 인근 소도시로 이동하며 신원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이들은 최근 헤이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으며 이곳과 로테르담을 오가는 식으로 체류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들의 신변안전과 신원노출방지를 위해 이들을 분산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동구권 외교관계자들을 동원,이들의 신병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 4명 分散보호

성혜림씨 安全한가

北공작원 入國 가능… 테러 대비 友邦과 共助

김영진 기자

스위스 제네바를 벗어나 네덜란드 헤이그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김정일(金正日)의 동거녀 성혜림(成蕙琳)씨 일가는 현재 안전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네덜란드 당국의 보호아래 있는 그들의 신변은 일단 안전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4명을 각각 분산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어느 곳에 누가 있는지를 감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우리 정보당국은 네덜란드 보안당국및 미국 정보기관과 국제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해 둔 것으로 전해진다.

네덜란드는 북한과 수교관계가 없는 나라다. 따라서 북한 공작원들이 네덜란드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는 일단 쉽지않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국경통제가 거의 없는 나라여서 인접국을 통한 북한 공작원들의 입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成씨 일행의 도피사실이 보도되기 전까지 도피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러나 도피사실이 전해지자 벌집쑤신듯 난리가 났다고 한다. 成씨 일행을 찾아내라는 김정일의 호통이 국가안전보위부와 대남 및 해외공작을 담당하는 노동당 3호청사에 떨어졌고 해외공작조를 다수 파견하는 등 긴급대응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남북한간에 치열한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보활동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의 전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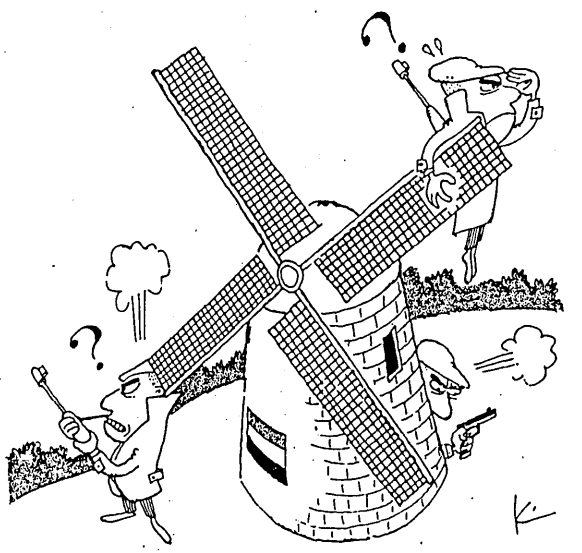
成씨 일행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네덜란드나 앞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인접 유럽국들은 북한보다 우리와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정보전은 일단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불호령을 받은 북한 공작요원들은 기를 쓰고 成씨 일행을 쫓고 있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나라다.

또 成씨 일행의 최종 망명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망명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조의 추적·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3국 보안당국등의 엄중한 보호조치가 따르겠지만 이동중에는 테러 등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밖에 성혜림씨가 아직 망명국가를 정하지 못해 이들의 행선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위험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어차피 소재지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안전기획부가 成씨 일행 도피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건이 공개됨으로써 그들의 신변안전이 우려되며, 그에따라 현 시점에선 그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바로 북한의 테러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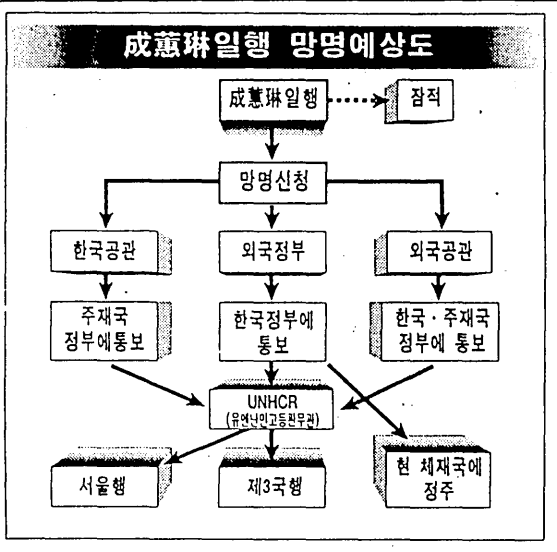
▽ 중앙일보 1996. 2. 16

▽ 조선일보 1996. 2. 16

한국보다 제3國선택 가능성

成蕙琳일가 어디로

成蕙琳일행 망명예상도



성혜림(成蕙琳)씨 일행의 정치 망명 가능성이 구체화하면서 추후 망명 신청절차와 이에 따른 처리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成씨 일행중 언니 성혜랑(成蕙琅)씨는 아들이 있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成혜림씨등은 한국이 아닌 서방의 제3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약간 복잡해지고 있다.

韓國대사관에 신청땐 네덜란드와 협의 결정

亡命 절차

제네바=고대훈 특파원

망명문제는 成씨등이 현재 잠적해 있는 나라와 망명 희망국에 따라 절차와 처리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제3국에 체류하면서 그곳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한국과 체류국간의 양자협의를 거쳐 망명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협의때에는 한국측이 납치나 공작이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망명신청자의 신병을 체류국 정부에 인계, 체류국이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 망명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체류국이 북한과 정치외교적 관계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 UNHCR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UNHCR는 망명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유의사를 검증하고 난민여부를 판정, 받아들일 의사만 있다면 한국에 인도한다.

잠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도피,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던 현성일씨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로 成씨 일행이 서유럽의 한 국가에 있으면서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할 경우 한국정부의 개입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

이 경우 망명희망자는 체류국에 주재해 있는 망명희망국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게 보통이다. 망명희망국의 대사관은 체류국에 일단 신병을 인도하고 마찬가지로 양자협상을 벌여 망명수용 여부를 가름한다.

그러나 망명희망자가 원한 국가가 망명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을 경우 책임이 UNHCR로 넘겨지면서 약간 복잡해진다.

UNHCR는 망명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 협송환 원칙 준수 여부, 제3국으로의 주선여부등을 확인한다.

UNHCR가 인도적 차원에서 직접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 북한벌목공의 예가 이에 해당되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에 망명희망을 해오는 벌목공들은 러시아 당국에 신병이 넘겨진 뒤 UNHCR가 주도적으로 난민과 망명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있다.

체류국이 결정할수 없으면 유엔 難民기구 개입할수도

제3국行 희망땐 한국 관여 못해

우선 成씨 일가가 프랑스를 일시 경유국으로 택했는지 아니면 최종 망명국으로 택했는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 현지에서 成씨측과 접촉,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하지만 본인들은 아직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로 成씨 일가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제3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이 불편한 蕙琳씨는 또 어떤 경로를 밟아 4개월여에 걸친 「대탈주극」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우선 成씨 일가는 프랑스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成蕙琳씨 일가의 최종 행선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들은 국가중 한 곳이 유럽한 후보지로 점쳐진다. 유럽국가 가운데는 프랑스와 독일이 최우선 대상국가로 꼽힌다. 특히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프랑스는 19세기 이래로 정치적 망명 사건에 관한 처리관행과 전통이 체계적으로 확립돼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蕙琅씨의 딸이 프랑스어와 독일어에 모두 능통해 독일도 일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崔銀姬·申相玉씨 전례

그러나 제3국중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은 단연 일행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들이 진정으로 한국행을 원한다면 이를 적극 추진하겠으나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잘못하다간 60년대말 「납북배틀」처럼 납치나 공작 의혹을 낳게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 외교적 마찰과 국익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망명절차 중시"

정부 당국자들은 成씨 일행이 망명을 신청하게 될 경로로 ▲유럽국가내 한국공관 ▲현지체류국 정부 ▲체류국가에 있는 다른 외국공관 등 세가지로 보면서 어떤 경우든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망명절차를 지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해외 주재공관에 확인한 결과, 15일 오후까지 成씨 일행이 우리 공관이나 유럽 국가들에 망명을 신청해 오지 않았다며 『만약 신청해오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같은 국제적 공인절차를 밟아 後患(후환)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成씨 일행이 우리 공관에 망명신청을 해올 경우, 주재국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함은 물론 외국 정부-공관을 경유할 때도 해당 국가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되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成씨 일행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망명지를 달리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成씨일행의 망명의사 확인에 앞서 이들의 신변안전 및 보호에 진력하고 있다면서 『이들 일행이 관련국의 보호아래 놓이게 되면 신변안전과 함께 자유의사확보에 상당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宋義達기자〉

北韓 영향력 약한 美國行 "유력"

망명에 관대한 佛-獨도 배제못해

북한의 成蕙琳씨 일행에 대한 추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서울 소식통들의 얘기는 14일까지 파리에서 직접 확인이 어렵다.

한국 공관의 모습은 겉으론 평온하다. 긴장감은 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공관들은 최고 책임자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유럽에 거의 없다. 다만 그들이 센겐조약 가입국 영역내에 들어온다면 이론적으로 그 안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15회원국중 7개회원국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한다는 것이 센겐조약의 내용이다.

프랑스는 센겐조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쇄테러 이후 조약과는 무관하게 철저한 국경검색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 성씨가 입국했다면 이들 행방불명자는 기관으로 두 곳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국방부 산하의 대외방첩국(DGSE), 그리고 또하나는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찰국(DST) 등이다. 협의상 장관 밑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 局長들이 총리나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만약 成씨 일행이 애초 프랑스가 아닌 제3국에서 있으면서 프랑스로 입국할 경우 프랑스 입국 뒤 계속 기다리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佛외무부 대변인실에서는 14일 오후 늦게 『성씨 일행이 프랑스에 없으며 그들이 망명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서울 소식통들이 성씨의 프랑스 입국을 확인하고 있다고 외무부 대변인실에 말해주자 그쪽에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佛외무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佛정부와 우리 공관의 정보담당자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어떤 나라의 외무부가 정 반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는게 관례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에컨대 성씨 일행이 프랑스에 있는데도 佛외무부가 『그가 프랑스에 없다고 확인한다』고 말하긴 힘들다.

『그러나 우방국과의 정치적 협조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유지가 진행되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파리=金洙日·崔宇哲기자】

北, 소재추적 혈안 한국공관 긴장감

間諜

15일 현재 DGSE를 관할하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는 성씨의 입국확인을 요구받자 『외무부로 문의 창구를 바꿔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성씨 일행의 프랑스 입국에 대한 『확인도 부인도 아니다』는 그런 성질의 답변은 아닌 것같다. 다만 소관사항이 아니다는 뜻으로 보인다.

DST를 관할하는 내무부 측에서는 문의에 대해 『내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통보해주겠다』고 말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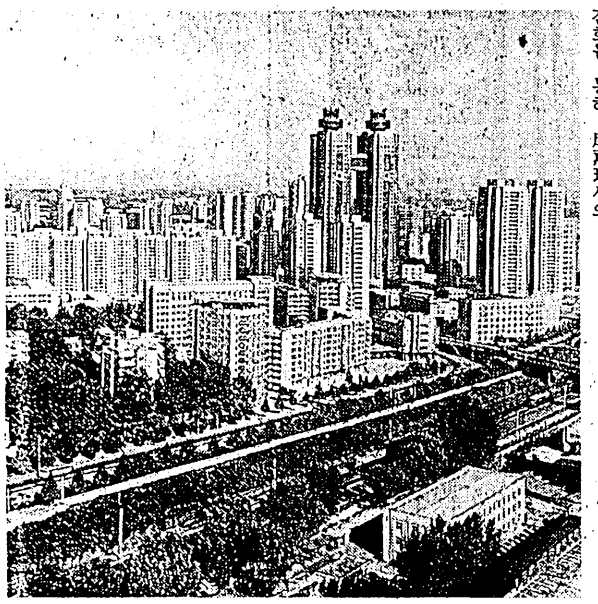
「신변안전」고려 몇차례 報道연기

月刊朝鮮 禹鍾昌기자 「成씨탈출」 특종記

12일 제3국 소재 확인후 게재결정

국제통화로 탈출결심 알고 안기부에 통보

4개월간 추적… 13년만의 母子통화 주선



◇창광거리 평양의 중심가인 창광거리의 모습. 유혈망명극이 벌어진 러시아대사관도 이 거리에 있다.

2월12일 오전, 정부가 成蕙琳씨 일가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제3국 정부와 협의를 위한 대책반을 유럽에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변안전은 확실하다고 판단됐다.

그날 밤 8시. 朝鮮日報 간부회의는 거듭된 회의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내일 아침 신문에 보도합니다. 전 세계가 놀랄 겁니다.』

회사 안에서도 「최고의 보안을 유지했던 기사와 관련 사진이 밤 9시쯤 月刊朝鮮을 떠나 朝鮮日報 편집국에 전달됐다. 제작 간부들은 전원 비상에 들어갔다. 4개월간의 비밀 작업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기자는 수십차례의 국제전화를 통해 成蕙琳씨의 모스크바 탈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성혜랑씨가 아들 李한영씨와 오빠 成日晳씨로부터 국내 언론의 「2월중」 보도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마음의 짐을 덜었다. 2월13일 0시, 윤전기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禹鍾昌기자

사실, 이번 취재의 첫 출발점은 93년 9월이었다. 金日成 연구 전문가인 성균관대 李命英 교수로부터 들은, 『金正日의 본처 성혜림이 신병치료차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는 한 마디가 단서였다. 이듬 추적해 94년 1월20일자 週刊朝鮮에 「金正日 처남 서울에 살고 있다란 기사를 썼고, 이 기사가 인연이 되어 지난 82년 귀순해 미공개 상태로 서울에 살고 있던 성혜랑씨의 외아들 李한영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가 95년 10월 18일.

李씨는 사업에 실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는 기자를 만나기 전, 모 신문사를 찾아가 자신의 북한 체험 일부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해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그를 도와줄 길은 없었다. 그의 귀순 과정과 귀순 후 서울 생활을 들으면서 기자는 똑바로 한 번 만나자고 요청했다. 기자와 李씨는 조선일보에서 서울~모스크바간 국제전화를 계속 가졌다. 새벽 2시부터 깨어나 서울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어머니 성혜랑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자도 울었다. 2시간짜리 녹음테이프 4개에 통화내용을 담았다.

서울~모스크바간 국제전화에서 이번 탈출 드라마의 주역인 成蕙琳씨의 모스크바 탈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안 기자는, 이 얘기를 흔자 힘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 판단하고 안기부의 對언론창구인 공보관을 만났다. 통화 녹음테이프도 전달했다.

기자는 작년 11월 초, 정부 관계자를 만나 成씨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成씨 일가가 모스크바를 탈출해 신변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기자가 보도하지 않고 보안을 지키며, 그 대신 정부의 움직임은 기자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작년 12월 들어서 기자는 『1월20일경 모스크바를 탈출한다. 우리의 「당초 계획」은 1월 말쯤 달성된다. 제발 1월 말까지는 보도를 막아달라. 그 후는 「날려도」(기사를 보도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성혜랑씨 모습이 눈에 선했다.

2월8일 기자는 趙甲濟 月刊朝鮮 부장과 함께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 관계자는 『成蕙琳씨 일가가 스위스에서 잠적했다. 현재 배방으로 행선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왕 기다리는 김에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는 별로 라인을 통해 정부가 스위스에서 잠적한 성혜림씨 일가의 행적을 다각도로 추적중인데 2월11일쯤이면 소재파악이 끝난다는 얘기였다.

月刊朝鮮 기사의 최종 마감시각은 2월11일. 시중 판매는 2월16일이다. 기사 작성도 그렇지만 통화녹음 테이프 제작 등 준비할 일이 많았다. 金正日 본처의 시빈 탈출이 보도될 경우, 북한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날치기」 머신트집을 잡을 것이다. 이를 감안한 朝鮮日報는 기사와 별도로 서울 모스크바간 국제전화 통화내용 녹음을 네이프로 제작해 공개키로 작정하고 있었다. 이들의 탈출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증명한 카드가 국제전화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보도시점을 놓고 연일 회의를 가졌던 朝鮮日報는 지난 2월8일 대책회의에서 기자의 건의에 따라 2월11일까지 기다리고 다음날, 2월12일(월요일)자 신문에 보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밤까지 구체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좀 더 확인하라』는 지시와 함께 보도가 또 하루 연기됐다.

다음날인 12일, 마침내 정부 관계자로부터 成씨 일가의 소재지를 알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관계자는 또 『신변도 안전하다』며 『일단 제3국과 협의를 거쳐 한국에 데려오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잠적중인 成씨 일가가 우리 정부의 가시권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젠 탈출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12일 밤의 결정대로 朝鮮日報 13일자 신문에 「세계적 특종」이 실렸다.

2월13일 새벽 6시, 기자는 깨자마자 TV부터 켰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오전 8시까지 KBS와 MBC TV채널을 번갈아 돌리면서 기자는 속이 탔다. 이날 아침 朝鮮日報가 1면(金正日 본처 서방탈출) 3면(金正日 후처들이 괴롭혀 결행) 사회면(모스크바 成혜랑-서울 李한영 母子 14년만에 전화상봉) 등 3개 지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단 한줄도 언급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일순간 침묵했지만 기자가 회사에 도착한 13일 오전 9시부터 난리였다. 月刊朝鮮部의 7대 전화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다. 각 언론사들이 기자를 찾는 전화였다. 이 기사는 아마도 늦잠자는 버릇이 있는 金正日을 깨운 가장 큰 뉴스였을 것이다.

成蕙琳씨 제3국- 蕙琳씨는 서울行 희망

씨가 『서울에서 오빠와 같이 살겠다』고 강력히 희망해 이들의 서울行은 기정사실로 보여졌다.

이때부터 기자는 보도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작년 12월 들어서 기자는 『1월20일경 모스크바를 탈출한다. 우리의 「당초 계획」은 1월 말쯤 달성된다. 제발 1월 말까지는 보도를 막아달라. 그 후는 「날려도」(기사를 보도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성혜랑씨 모습이 눈에 선했다.

2월8일 기자는 趙甲濟 月刊朝鮮 부장과 함께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 관계자는 『成蕙琳씨 일가가 스위스에서 잠적했다.

▽ 경향신문 1996. 2. 17

成씨 딸가족 4명도 탈출

李韓永씨 밝혀 제3國서 합류위해 대기

사위는 北歐주재 외교관

자매간 의견차로 망명지 지체

현재 프랑스에서 망명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일행은 4명이 아니라 8명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추가로 확인된 4명은 成蕙琳씨가 金正日에 의해 강제이혼당하기전 첫남편과 낳은 딸과 외교관인 사위 및 손자, 손녀 등이다.

이같은 사실은 成蕙琳씨의 조카 李韓永씨가 전날에 이어 이날 잇따라 본사기자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李씨에 따르면 이모인 成蕙琳씨와 李씨의 어머니(成蕙琅씨), 동생 南玉, 수행원인 「명순 아줌마」외에 成蕙琳씨가 첫 남편 李평씨와 낳은 딸 李옥돌씨(40), 사위 王송림씨(47), 외손자, 외손녀도 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李씨는 『그러나 이들 4명은 현재 유럽의 제3국에서 이모 일행과의 합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李씨는 『나에게 이종사촌인 옥돌누나의 가족은 그 소재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같이 4명씩 따로 분산 잠적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李씨는 이들의 망명과정에 최근까지 북유럽국가 주재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해온 成씨의 사위 王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成씨 일가 8명의 망명지 결정이 예상밖으로 늦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李씨는 『이들이 떨어져 있어 의사소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의견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옥돌씨는 외교여권상 金옥순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李韓永씨는 『외교관인 매형 王씨는 장기간의 해외근무를 통한 견문으로 자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진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한편 李씨의 첫 이모부로 李옥돌씨의 부친인 李평씨는 현재 평양에 살고 있으며 成蕙琳씨와 강제이혼당한 뒤 억지로 시작했던 해외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인이 돼 있다고 李씨는 전했다.

〈姜皓植기자〉

▽ 세계일보 1996. 2. 17

脫北者 「사후관리」 강화

적성맞는 직업 적극알선

金복지장관 보상금지원보다 사회적응 역점

金良培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탈북자대책과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기존의 보상금지원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개인의 자질에 맞는 직업을 선정해 주는방식으로 전환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귀순북한동포 절반가량의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장관은 또 귀순북한동포후원회를 활성화시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귀순자들을 상대로 직업재알선과 상담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李敦成기자〉

▽ 한겨레신문 1996. 2. 17

성씨 한국망명 추진않기로

정부, 남북관계-국내외 여론등 고려 최종방침 확정

정부는 16일 북한 김정일 비서의 옛 동거녀 성혜림(59)씨 일가의 북한 탈출사건과 관련해 앞으로의 남북관계 진전 및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해 이들의 한국 망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한국 망명은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세우고 성씨 등이 자유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망명을 희망하지 않는 한 이들의 한국 망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성씨 일행이 북한 등에 의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보 당국이 제3국에서 최근 보호하고 있던 성씨 일행이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북한인들의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해 통일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공식 기구로 '탈북자대책위원회'를 곧 발족시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대해 지난 15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부처별로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기 기자

▽ 조선일보 1996. 2. 17

「成씨 사건」 보고받은 金正日

"남조선에 복수" 위협

北京소식통 밝혀

【北京=朴勝俊기자】 金正日은 자신의 전처 成蕙琳의 서방망명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 『남조선에 대해 무정하게 복수하겠단』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北京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金正日은 成蕙琳망명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면서 『남조선이 내 가족과 내 주변일로 그렇게 한다면 남조선에 무정하게 복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北京소식통들은 김정일이 이같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평양권력층내에 즉각 전파됐으며, 16일 北京의 북한관계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그러나, 자신이 말한 「복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의사표시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경향신문 1996. 2. 17

「成씨 망명」 고심하는 정부

정부가 成蕙琳씨 일행의 망명처리문제를 놓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成씨 일행의 망명이 최종 마무리가 되기전에 그들의 행적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成씨 일행의 망명국이 한국이 되어야할지, 미국 등 제3국이 되어야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成씨 일행이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는데 우선 원인이 있다.

이들이 한국행이든 제3국행이든 행선지를 확실히 정했다면 정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이들의 처리에 정치적 고려가 없을 수 없지만 본인의사에 입각해 국제적인 망명절차대로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成씨 일행이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언니인 成蕙琅씨는 한국으로 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월북한 부모가 북에서 사망한 상태로 북한에 연고가 없어진데 반해 남쪽에는 유일한 아들 李韓永씨와 오빠 成日耆씨 등 혈육들이 살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이기도 했던 蕙琅씨는 한국 망명후 저작활동이라는 계획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成씨 일행 망명지 선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동생 蕙琳씨는 다르다. 그녀는 당초 내심 한국행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도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니와는 달리 金正日의 처였다는 자신의 특수한 신분과 북한에 아들 金正男이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녀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심리적으로 북한의 위협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렇다고 고혈압·당뇨·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蕙琳씨를 놔두고 언니 惠琅씨만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蕙琳씨의 건강 때문에 이들은 어차피 「일가」로서의 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점은 설사 이들이 한국행을 결정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金正日이 연내 공식 권력 승계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행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북한은 15일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成씨의 한국망명에 대해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득될게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成씨 일행의 한국행 의사가 확실해지면 그대로 따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일단 제3국에 머무르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申相玉·崔銀姬부부의 6개월에 걸친 미국망명후 귀국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李大根기자〉

蕙琅씨 한국 蕙琳씨는 주저

남북관계 악영향…제3國行 가능성도

▽ 한국일보 1996. 2. 17

北, 成씨일행탈출 첫 공식반응

북한은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일행의 서방탈출에 외부에 공개된지 3일만인 15일 중앙통신을 통해 공식 반응을 보였다. 중앙통신은 成씨 일행의 서방탈출 사건을 한국측의 모략비방이라고 매도하면서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중앙통신은 「대단히 악랄하게 헐뜯는 전대미문의 대죄」 「우리의 보복은 무자비하고도 철저한 것」이라는 등 초강경 용어를 구사해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난 입장」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金正日과 成씨의 이름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막연하게 「우리 최고지도부」라고만 지칭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었겠지만 대신 반응의 강도가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초강경 용어 비난·위협

金正日언급없이 「최고지도부」 지칭

통일원 "중대상황 아니나 동향주시"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북한의 반응은 의례적인 한 나 용어구사는 이례적으로 강경하다』며 『북한 강경파의 동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에서도 成씨 문제에 대해 북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成씨가 金正日의 여인이었던 만큼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해 입장표명을 하기에는 다소 껄끄럽고 내부합의를 거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成씨 일행의 서방탈출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경우 스스로 북한체제가 지도층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인식을 외부에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영어 불어 등 외국어로만 작성되는 해외타전용 중앙통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평양의 러시아대사관 총격 사건도 북한이 내부문제로 여기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일원은 북한의 태도와 관련,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중대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다소 영향은 끼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중앙통신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등의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당장 보복조치가 이뤄진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원은 최근 북한이 군부의 강경반응을 이유로 쌀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31일 중앙통신이 金容淳당비서의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비정상적인 사건은 무력분쟁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한 바 있어 북한동향의 이상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金炳讚기자】

▽ 경향신문 1996. 2. 17

"金正日 주석취임 큰의미 없다"

경향신문 모스크바특파원은 15일 북한외교관들과 만나 金正日전처 탈출및 북한정변의 망명소동등 최근의 북한사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한외교관의 이들은 그들의 신원보호를 위해 실지 않는다.

<편집자 註>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북한외교관들과 직접 접촉해 본 결과 이들은 평양 러시아무역대표부 총격사건은 미치광이의 짓이었으며 成蕙琳씨 일행의 잠적에 대해서는 「완전 날조」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는 15일 저녁(서울시간 16일 새벽) 모스크바 남쪽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대사관 영사등 2명의 북한외교관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약 1시간 30분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메뉴는 보신탕과 보트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흔들리는 北韓 모스크바 北영사 인터뷰

成蕙琳탈출사건 南측 꾸며낸것

총격사망 조명길하사는 범죄자

—무역대표부에 군인이 들어가 망명을 요구하다 사살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거 뭐, 미친 사람이 한 짓이지요. 죄를 짓고는 남의 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리고 金正日의 본처가 모스크바에 살다가 어딘가로 탈출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남조선 신문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단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金正日의 본처가 모스크바에 살기는 했습니까.

「모두 다 조작입니다. 만약 이곳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살았다면 그게 왜 진작부터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남조선에서 온 분에게 이런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그쪽 신문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씁니다. 내일(16일)이 金正日 생도자 동지의 생일인데 거기에 맞춰 괜히 북조선을 헐뜯려는 거지요.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그런 짓 못합니다. 곧 거짓말인 것이 드러날테니까요」

(이들은 이 대목에서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돈을 먹고 쓸데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며 섭섭해 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成씨 사건에 대해 러시아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이기 때문이다)

—金正日에게 다른 부인이 있긴 합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는 金正日의 생일에 모스크바에서도 대사관 주최로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 올해는 안한는 겁니까.

「올해는 그런 행사를 안합니다. 금년 7월이면 金正日成 주석의 3년상이 끝나니까 내년에는 할 것 같아요(이들은 3년상이란 金의 사망일로부터 만 3년이 아니라 만 2년을 말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열었던 파티와 공연등 축하행사를 금년에는 취소하게 된 이유가 최근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탈북사태등 어수선한 국내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나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럼 그 후 金正日이 주석에 취임합니까.

「그야 뭐…. 그건 「니체보 니예트 즈나체니야지요」(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의 러시아말로 자신들이 이미 지도자로 받들고 있는 金正日이 주석에 취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곳 북한대사관 외교관의 월 급여는 한화 28만원선인 3백50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소련시절에는 교통경찰의 차량단속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의 러시아인들이 뇌물에 맛을 들여 지나치게 단속을 한다면서 러시아 사회가 너무 돈만을 중시한다고 개탄하기도 했고 러시아 마피아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대사관내 숙소로 돌아가 봐야 한다며 총총히 자리를 떴다. 【모스크바=金鐵雄특파원】

▽ 중앙일보 1996. 2. 17

성혜림씨와 함께 있는 이남옥은 누구인가

이한영씨 친동생… 英·佛語 능통

88년부터 김정일비서로 통역·번역

탈출전 약혼자 처형 당할까봐 파혼

김태진 기자

김정일(金正日)의 전동거녀 성혜림(成蕙琳)씨와 함께 있는 成씨의 외조카 이남옥(李男玉·30·여)씨는 66년 1월17일생으로 83년 귀순한 이한영(李韓永·35)씨의 친동생이다.

한영씨에 따르면 남옥씨는 키 1m60cm에 호리호리한 몸매로 지난해 북한 고위 당간부와 약혼을 했다. 그러나 이번 탈출을 위해 지난해말 파혼했다. 약혼자가 李씨의 탈출 때문에 처형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한영씨는 설명했다.

출신성분이 뛰어난 남옥씨는 한영씨가 다녔던 평양 대동문인민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78년에는 다른 북한 고위층 자녀처럼 동유럽에 유학하는등 특수교육을 받았다. 영어외에 불어도 완벽할 정도로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 일찍부터 동유럽등을 자주 여행하면서 서방세계에 눈을 떴고 이번 탈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혜림씨와 어머니 성혜랑(成蕙琅)씨 일행의 통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옥씨는 이같은 어학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을 졸업한 88년부터는 김정일의 비서로 영어 통역과 번역을 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영씨와 남옥씨의 전화통화 테이프중에는 정남씨와 N 전국무총리의 큰아들이 조우하는 장면을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네바종합학교 입학식장에는 당시 제네바주재 한국대사 N씨의 큰아들도 함께 있었다. 식장에는 각국에서 온 모든 입학생들이 자국 국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정남씨만 국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N씨의 큰아들이 『너는 왜 국기가 없냐; 아버지가 누구야』라고 묻자 정남씨는 『내 아버지는 김정일이다. 니 아버지는 누구냐』며 당차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성혜림 아들 김정남은 누구인가

'왕자' 행세하며 특별수업받아

최근 후계자서 탈락…현재 북한 거주

成씨 일가 함께 망명 모색하다 포기

김태진 기자

김정일(金正日)과 성혜림(成蕙琳)사이에 태어난 김정남(25)은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가정교사로부터 특별수업을 받았으며 김정일이 수시로 데리고 다니면서 현지 시찰을 시키는등 한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으나 최근 후계자에서 탈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成씨의 외조카 이한영(李韓永·35)씨는 16일 『정남이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면서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영」이라고 부르는등 「왕자」행세를 해왔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제네바국제학교로 유학가 고교과정과 제네바 종합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으며 지금은 세계 공산주의 각국의 지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직책은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성혜림씨 일가는 서방으로 탈출하기 직전 김정남도 함께 데리고 제3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추진했다고 이한영씨가 밝혔다.

또 성혜림씨가 언니 혜랑(蕙琅)씨를 따라 망명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신변위협과 현재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합류결정을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영씨는 『지난해 전화통화에서 어머니(성혜랑)가 이모의 뜻이라며 「정남이를 같이 데려갈 수 없겠느냐」며 동반망명의사를 여러차례 물어왔다』고 밝혔다.

李씨는 『그들이 북에 있는 정남이와 함께 망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이모가 아들에게 동반망명 의사를 밝힐 경우 계획이 김정일에게 새나갈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고 전했다.

李씨에 따르면 김정남은 지난해 가을에도 김정일의 선물과 돈·옷 등을 갖고 모스크바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등 매년 2~3차례씩 모스크바로 어머니를 찾아왔었다는 것이다.

성혜림씨도 명절때면 평양으로 가 관저에 묵으면서 김정일과 식사도 함께 하는등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한영씨는 어릴적 김정일이 집무실 총회의실에서 주석단 자리에 앉히면서 『빠빠(아버지)자리에 앉아봐라』『이 다음에 네가 큰 소리칠 자리다』는 등의 말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2. 18

北韓 보복테러 대비 '非常'

政府, 成씨 탈출 관련 대통령 亞洲순방 경호 재점검

해외 외교관·상사원·여행객에도 防備 지시

김두우·민국홍·하지윤 기자

정부는 최근 북한외교관 귀순과 김정일(金正日)동거녀였던 성혜림(成蕙琳)씨 일행의 탈출등으로 북한의 보복테러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순방에 경호를 강화하는등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또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외교관·상사원은 물론 유학생 등에 대한 북한의 납치기도에 대비하고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해외공관에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한이 함께 진출해 있는 중국·러시아등 대치공관 소재국가의 경우 기업인과 고위층 자제는 물론 우리기관원들에 대한 테러·납치 기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成씨 사건이 터진 후 정부안에서는 金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제시됐지만 일단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하고 『현재 방문대상국인 인도·싱가포르·태국등 3개국에 대해 경호강화와 재점검을 당부하는 한편 외부에 노출되는 행사를 가급적 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G·대우그룹등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지사 근무자들에게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외출시 독자행동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관광협회·일반여행업협회등 여행관련 단체들도 해외여행객 안전대책을 마련, 여행안내원과 여행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 조선일보 1996. 2. 18

「成씨 망명」이번週 매듭

정부 방침… 재외공관 「北보복」대비 지시

모스크바를 탈출해 프랑스에 체류중인 成蕙琳(성혜림)씨 일행은 북한이 보복 조치를 선언하는 등 신변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중 망명절차를 끝낼 예정이며 관계국간 실무 협의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들은 17일 『成씨 일행의 안전보장이 긴요해짐에 따라 망명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망명지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成씨 일행의 탈출 사건과 관련, 「무자비한 보복」을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이날 전 재외공관에 긴급 훈령을 보내 현지 공관원과 상사 주재원, 교민, 유학생, 여행자 등 재외국민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宋義達기자〉

▽ 경향신문 1996. 2. 18

成씨 91년에도 亡命시도

당국자 밝혀 "서울行 희망" 정부와 접촉가져

일가족등 7명과 함께 망명길을 걷고 있는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59)는 지난 91년에도 북한을 탈출, 망명을 계획했었던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또 成씨는 당시 망명지로 한국을 원했으며 망명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당시 成씨와 우리정부의 접촉을 위한 중개는 현 유라시아 국제대학교 이사장인 許眞씨(69)가 맡았었다』고 말했다.

당시 成씨의 망명의사 타진과 망명대책수립 업무에 간여했던 이 관계자는 『成씨의 망명 기도는 지난 90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0년 중반 모스크바 시내 모스크바강변의 「메주드 나로드나야호텔」에서 成씨와 許씨가 첫 접촉을 가졌으며 망명논의가 본격화된 91년 이후에는 10여차례 접촉했다고 밝혔다.

당시 成씨는 許씨에게 자신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뒤에 『앞으로 나 외에 나의 가족이 망명할때도 한국정부가 도와줄수 있느냐』고 질요하게 물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엔 成씨가 언니인 成蕙琅씨등 가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면서 『아마 그때엔 金正日과의 사이에 난 아들 정남이를 염두에 둔것 같았다』고 말했다. 〈姜皓植기자〉

▽ 경향신문 1996. 2. 18

成씨 모로코등 은거 가능성

이즈베스티야紙 보도

【모스크바=金鐵雄특파원】모스크바에서 잠적한 成蕙琳씨는 러시아의 보로네즈나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이즈베스티야紙가 17일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成씨 친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중 처음으로 成씨 사건을 다룬 이즈베스티야는 이날 「바빌로바街 최초의 북한여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成씨의 망명설과 관련, 成씨 친지들이 전화인터뷰에서 『잠적한 成씨가 평소 변덕이 날때 가끔 들르는 돈강유역의 보로네즈나 카사블랑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996. 2. 21

「成씨일가 망명」개입 원치않아"

러韓人 許眞씨 밝혀

【모스크바=文明彬】金正日의 전처 成혜림씨의 망명에 개입,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재 러시아 한인 許雄倍씨(68·일명 許眞)는 17일 『이 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許씨는 이날 오후 모스크바 시내 자택에서 본보 17일자에 게재된 成혜림씨와 아들간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나는 이 사건에 관해 어떤한 언급도 할 것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한국일보 1996. 2. 18

成씨 서울行여부 일주일이 고비

金正日전처 탈출

정부 조기매듭 방침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일행의 국내송환은 앞으로 일주일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成씨 일행의 서울행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이들의 유럽현지 체류국 정부및 미국등 관련 우방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成씨 일행의 망명의사가 일단 체류국 정부등에 의해 확인된 만큼 향후의 망명절차는 체류국 정부의 고유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정부 관계당국은 체류국 정부에 의한 절차가 마무리 되기 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송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관계자는 그러나 실무적인 망명절차의 완료시점과 成씨일행의 실제 국내송환시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보복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상황변수를 감안해야 하고 전반적인 국내외 정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체류국 정부 사이의 협의과정에서 成씨일행의 망명의사에 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한 재확인 절차를 거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成씨 일행에 대한 망명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망명의사 확인 체류國절차 진행

北보복위협·국내외정세등 변수

蕙琅씨 딸일행 합류대기說 사실땐 또다른 상황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 이 최종망명지 결정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신변노출과 북한내 가족들에 대한 보복위협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일정기간 제3국 경유를 택한다면 이들의 망명 완료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엔 정부가 제3자적 입장으로 물러서고 체류국 정부와 망명희망국간의 협의과정이 추가돼야 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관심이 成씨 일행의 서울행에 우선해서 이들의 안전한 망명성공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3국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있다.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은 유럽현지의 망명절차가 끝나더라도 成씨 일행의 국내송환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점이다. 송환시점에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제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자포자기식 도발과 이와 연계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미국등 관련 우방국의 의견도 참작해야 한다.

이와함께 成씨 일행외에 成蕙琅씨의 딸 李옥돌씨 일행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망명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의 국내송환 시점은 또다른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成씨 일행의 망명절차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더라도 시기는 향후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高泰成기자】

▽ 세계일보 1996. 2. 18

金正日정부… 후계자자리 위태

아버지 총애로 안하무인 행동… 그동안 황태자수업

成씨망명-이복동생 정철측 견제로 몰락가능성도

成蕙琳아들 金正男 어떻게 될까

모스크바를 발발해 망명길에 오른 成蕙琳과 金正日시이에 태어난 金正男(28)은 어릴때부터 金正日의 후계자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正男의 이종사촌으로 지난 82년 한국으로 망명한 李韓永씨(36)에 따르면 「김정일이나 이미(성혜림)가 정남이를 나무라는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金正日은 계획과 81년 스위스 국제학교로 유학을 보냈으나 2년만에 귀국, 평북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아버지를 빼닮은 모습인 金正男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황태자」로 군림하면서 고급 벤츠자동차를 타고 고위간부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중절동 관저에서는 남한TV를 즐겨 시청했는데 주로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겼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金正日의 지시로 중국을 나들이하는 등 그는 金日成가계의 특전에 힘입어 해외나들이를 자주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金正日의 애첩 高영희가 생모 成蕙琳이 없는 빈자리를 10여년간 메워오는 동안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능을 휘두르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高영희의 시샘에다 이복동생 金정철(15)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황태자 자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이 포악한 高는 成蕙琳을 「꼬투리가 잡히면 수용소에 잡아넣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正男이 마저 아들의 대권경쟁자로 여겨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지난 90년 평양의 귀빈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문제로 상대편에게 권총을 난사,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어머니 成蕙琳이 金正日과 사실상 정이 떨어져 83년부터 장기간 모스크바에 머물고 高영희의 목조르기가 계속되자 正男은 평양에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어머니 成蕙琳의 망명으로 그는 아마도 이복동생이자 高영희의 소생 金정철에게 「황태자」자리를 내놔야 할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趙敏鎬기자】

▽ 한겨레신문 1996. 2. 18

□ 북 강력보복 위협…정부 대책분주

"혹시 모른다" 국지적 도발 대비

김대통령 경호 비상·해외공관에 훈령…북 실행 여부는 미지수

이상기 기자

북한 김정일 비서의 옛 동거녀 성혜림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쪽의 대남테러, 국지적 도발 등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유엔 유럽본부에 전달한 논평에서 "한국이 우리의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헤치는 등 음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보복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응징의사'를 전날에 이어 강한 어조로 밝힌 대목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인도, 타이 등 서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김영삼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런 보복 운운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과연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이 테러를 감행할 경우 최근 몇년간 쌓아온 이미지 변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막바지에 이른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최고권력자 주변인물의 탈북·망명사태에 접한 북한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국을 겨냥해 보복차원의 테러·납치, 더 나아가 서해5도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테러 납치 등은 국제사회의 여론악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국지적 도발 등 한반도 안에서의 불행한 사태는 성씨 자매, 특히 혜림씨의 한국망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경우 얼마든지 우려된다는 데 정부당국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 아래 지난 15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북한의 우발적, 또는 계획적인 각종 도발에 대비해 안보·치안상의 미비점을 이른 시일 안에 적극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재외공관에 훈령을 보내 북한의 테러 및 근무직원과 상사원 등의 납치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한미연합군의 공조체제를 통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토록 했다. 17일 미국의 폴 카니스키 국방차관이 "한국에 미사일 요격용 첨단 미사일 40기를 배치키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 국민일보 1996. 2. 21

북,해외 대남·대미공작 사례교육

「김씨 유훈 관철」 강조…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 소개

북한 외교자들 「김씨 유훈」 과제 …대미공작 등 3개 방법 소개

북한이 최근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북한 외교자들은 『북한이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외교자들은 『북한이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외교자들은 『북한이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외교자들은 『북한이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樂敬洙〉

▽ 조선일보 1996. 2. 21

成씨 망명여부 결정 지연

북한 김정일 후계자 성혜림씨 모녀 신변처리 문제 등 3개 문제가 성혜림씨 모녀 신변처리 문제 등 3개 문제가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북한 외교자들은 『북한이 성혜림씨 모녀 신변처리 문제 등 3개 문제가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金光洙〉

▽ 조선일보 1996. 2. 22

「해외 내통자」 숙청자 변모

北,해외 고위층자녀 소환

사상전문가…「지명제외시」 등 문책 …대남·대미·대일 3개 방법 소개

북한이 최근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북한 외교자들은 『북한이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외교자들은 『북한이 대외공작 지침서로 이른바 김씨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대남·대미·대일 공작 방법을 소개한 것이 북한 외교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金光洙〉

▽ 경향신문 1996. 2. 22

전비서 북사 訪北

〈京大學〉

▽ 조선일보 1996. 2. 21

『CIA 조작 주장』 美 『조선 와전』

「成씨 입술」 만평 어떻게 돼가나

부 고

成璟燮씨 지난 5일 사망

成璟燮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영면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1926년 경북 의성군 춘산면 출생으로 195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2년 고등문관 행정과 시험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1960년 4·19 직후 민주당 정권 때 내무부 치안국장 등을 지냈고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 당선되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때 내무부 치안국장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원내총무 등을 맡아 활동하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재선되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3선 의원이 되었다. 1972년 유신 때 정계를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하다 1979년 10·26 사태 직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겸 신민당 총재에 취임, 1980년 5·17 쿠데타 때 김대중 씨 등 재야 인사들과 함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당했다. 1985년 정치활동 금지 조치가 풀린 뒤 신민당 고문 등을 맡아 활동하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씨 지지 성명을 내고 김대중 씨 측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아 활동하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1990년 3당 합당 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겸 민주당 총재 직을 맡아 민주자유당 창당에 참여,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겸 민주당 총재 직을 맡아 활동하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겸 민주당 총재 직을 맡아 활동하다 1995년 민주당 총재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고문 등을 맡아 활동하다 1996년 2월 5일 사망했다. 유족은 부인 김정숙 씨 등 1남 3녀. 빈소는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의성군 춘산면 선영. 문의 ☎ 02-2260-5000.

美와 安기부 등의 조작 문건 파문

미국行에 「成씨 입술」 만평 등 와전

권선미 기자

成璟燮씨 「조작 주장」 보도 파문

成璟燮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영면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1926년 경북 의성군 춘산면 출생으로 195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2년 고등문관 행정과 시험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1960년 4·19 직후 민주당 정권 때 내무부 치안국장 등을 지냈고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 당선되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때 내무부 치안국장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원내총무 등을 맡아 활동하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재선되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3선 의원이 되었다. 1972년 유신 때 정계를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하다 1979년 10·26 사태 직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겸 신민당 총재에 취임, 1980년 5·17 쿠데타 때 김대중 씨 등 재야 인사들과 함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당했다. 1985년 정치활동 금지 조치가 풀린 뒤 신민당 고문 등을 맡아 활동하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씨 지지 성명을 내고 김대중 씨 측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아 활동하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1990년 3당 합당 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겸 민주당 총재 직을 맡아 민주자유당 창당에 참여,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겸 민주당 총재 직을 맡아 활동하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겸 민주당 총재 직을 맡아 활동하다 1995년 민주당 총재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고문 등을 맡아 활동하다 1996년 2월 5일 사망했다. 유족은 부인 김정숙 씨 등 1남 3녀. 빈소는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의성군 춘산면 선영. 문의 ☎ 02-2260-5000.

▽ 경향신문 1996. 2. 22

成씨일가 일단 美망명

정부관계자 "신변불안 감안…주말께 向美"

【파리=孫東佑특파원】프랑스에 체류중인 成蕙琳씨 일행의 망명국이 미국으로 결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주말쯤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成씨 일행은 모두 8명으로 成蕙琳씨 및 동행중인 언니 蕙琅씨, 蕙琅씨의 딸 李南玉씨, 수행원인 「명순이 아줌마」등 4명외에 이들과 별도로 행동하고 있는 成蕙琳씨의 딸 李옥돌씨 가족 4명이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成씨 일행의 망명국이 일단 미국으로 결정됐다』고 전하고 『망명국 결정은 成씨 일행의 신변을 보호중인 「보호국」과 「망명국」인 미국, 그리고 우리정부등 3자가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망명지 결정 과정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테러위협이 있었으며 이에따른 成씨 일행의 불안·긴장감 등이 예상외로 컸다』고 전하고 『이것이 당초 서울로 정했던 목적지를 미국으로 변경시키는 주요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결정은 망명당사자인 成씨 일행의 자유로운 의견을 최대한 보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成씨 일행의 이동일시와 이동수단등은 극비에 부쳐질 것이며 成씨 일행 4명과 成씨 딸가족 4명은 출발지점에서 합류, 한꺼번에 목적지로 향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成씨 일행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한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들이 86년 崔恩姬·申相玉씨부부의 탈북·망명절차를 원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미국측은 지병을 앓고있는 蕙琳씨에 대한 신병치료와 일행전원의 체재기간중 안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1996. 2. 22

▨ 成씨일가 망명지 최종결정 안팎

成蕙琳씨 일가족이 향할 망명국은 「제3국」인 미국과 「보호국」, 그리고 우리 정부당국간의 긴밀한 토론과 협상의 결과로 정해진 것이다.

成蕙琳씨는 이미 조카 李韓永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3국행」을 예고했었다. 당국에선 이를 여과없이 「한국」으로 단정했었다.

成씨 가족은 그러나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복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물론, 한국도 아닌 제3국과 망명을 위한 이었다.

정작 문제는 成씨 일가족 전원의 의사결정 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명씩 두 그룹으로 분산돼 있는 成씨 가족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 가족전원의 의견이 「제3국」에 전달되는 과정도 「보호국」을 거쳐야 하는 바람에 시일이 걸렸다. 우리 당국 역시 이같은 「3포인트 연결식 연락체제」때문에 애를 먹었다.

또다른 문제는 成씨 일행에 대한 북한의 공공연한 위협이 중도에 터

당국도 成씨 가족이 현지에서 곧바로 서울로 향하는 일정에 일말의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망명지 결정 상황이 급선회했다. 망명자 일행과 3개국 당국은 成씨 일가족이 현지에서 직접 서울로 향하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북한, 특히 金正日을 자극 할 우려가 있고 ▲북한측의 노골적인 테러위협에 따른 신변안전보장문제 ▲1차적으로 와병중인 成蕙琳씨에 대한 의료조치가 시급한 점을 들어 「당장에는 부적

설연휴 지나면서 美로 급선회

사위 王송림씨 내세워 「제3국」과 비밀협상

北 철저보복 위협에 "신변안전" 최우선 고려

사전 상담을 벌였던 것이다. 상담은 成蕙琳씨의 사위 王송림씨가 맡았다. 현직 외교관 신분인 그는 탈출과 잠적, 망명에 관한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成씨의 망명의사가 서울에서 파악되기 훨씬 이전부터 王씨는 「제3국」과 비밀 협상을 벌였고 잠적이후로도 그의 존재·신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초동단계에서 成蕙琅씨의 딸 李南玉씨가 망명지협상의 전면에 나선 것처럼 보인 것도 모두 王씨를 은폐시키기 위한 3개국 당국의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국이 成씨의 안착지를 파악한 이후 1주일이 넘도록 成씨 일행의 여권사진만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도 「보호국」의 철저한 보안조치 때문

져나온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중앙통신을 통해 成씨 일가에 대한 망명관련보도를 놓고 「최고지도부에 대한 대죄」 「전면적인 도전」등 강경용어를 구사하며 비난했다. 북한은 「무자비하고도 철저한 보복」을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成씨가족이 잠적한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인데 전에 없이 격렬한 것이었다.

이는 成씨 자매를 비롯한 현직외교관인 사위 王씨등 망명자들의 위상을 가늠할 척도이기도 하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즉시 成씨 가족에게 전해졌다. 成蕙琳·成蕙琅 자매와 王송림씨등은 긴장과 불안에 떨었다. 한때 「복귀후 납치 주장說」이 제기된 것도 이 시기다.

합 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 결과 成씨의 미국행이 결정된 것이다.

成씨 일가족 전원의 안전과 이동보장을 책임질 능력을 믿은 것. 이들 가족의 이동수단과 일시등은 극비사항이며 유럽주둔 미군의 협조를 받아 「군 작전 개념」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成씨 일가족은 지난 86년 3월13일 파리와 부다페스트를 거쳐 빈에서 망명, 3년간 미국에 체류한뒤 89년 한국으로 돌아온 崔恩姬·申相玉부부의 전례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당국 관계자는 成씨에게 이미 약속한 한국정부의 보장내용은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파리=孫東佑특파원】

▽ 조선일보 1996. 2. 23

"成씨 망명 朝鮮日報가 큰 영향"

美타임誌 "전화상봉 주선… 대특종"

美주간지 타임은 26일자 최신호에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 망명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朝鮮日報가 『成씨의 망명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朝鮮日報의 특종기를 보도했다.

타임은 「사랑하는 金正日: 그대가 이 글을 읽을 때면, 나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82년 이후 연락이 두절된 成씨의 조카 李한영氏와 어머니의 눈물나는 전화상봉을 朝鮮日報가 주선, 이 통화 과정에서 李씨의 어머니는 여동생인 成씨와 함께 망명할 것이란 언질(Hint)을 줬다』고 보도했다. 타임은 이들의 전화상봉이 있는 뒤 『成씨 자매는 지난달 成씨의 전 남편이 2백만달러를 들여 사준 제네바의 빌라를 떠나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타임은 또 『李한영氏가 82년 서울로 망명한 사실을 확인한 朝鮮日報기자가 成씨와 그의 언니(李씨의 어머니)가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지난주 朝鮮日報가 이 사실을 전격 보도, 서울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成씨의 잠적은 북한의 경제적인 붕괴 보다 金씨 세습정치와 관련이 깊다』며 외교안보연구원 관련자의 말을 인용, 『이들의 망명이 북한의 급격한 붕괴와 관련은 없으나 북한 지도층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鮮于鉦기자〉

▽ 서울신문 1996. 2. 23

「脫北者정착特法」추진

黨政 급증추세 맞춰 法체계 정비

사회적응 훈련·직업 알선 생계보호대책 우선 수립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탈북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이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단순 귀순자 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모든 종류의 탈북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하나 현재로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법의 제정에 앞서 귀순자들의 생계보호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具本永기자〉

의 호성일씨 부부등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탈북자들을 국내로 데려올 것인지, 제3국에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미흡한 데다 귀순자들의 원활한 관리와 정착유 위한국내법체계가 부실하다는관단에 따른것이다.

「탈북자 정착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탈북자들을 송환과정에서 부터

지원하고 사회적응 훈련 직업알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신문 1996. 2. 22

□ '성혜림 사건' 정부 손익계산

북한 자극 '악재중 악재' 공작모양새 비칠까 걱정 당쪽선 총선호재 평가도

이상기 기자

북한 김정일 비서의 옛 동거녀 성혜림씨 일가의 처리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성씨 사건이 세간에 처음 알려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제3국 또는 한국 망명, 그리고 북한의 대응 등 문제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안기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적잖이 드러나고 있다.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줄곧 사건에서 배제된 통일원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김영삼 정부가 주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악재중의 악재'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열린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이 앞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할 '호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서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에 힘쓰는 북한과 대비돼 자칫 이번 일이 '공작적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처럼 이 사건으로 정부 당국의 처지가 어려워지는 한편, 여권에서는 총선거 국면과 맞물려 호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92년 대선 전에 이선실사건이 터져 당시 여권에 엄청난 플러스가 됐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이같은 공안류의 사건은 여권에는 여전히 호재"라고 말했다.

한편 성씨 일가는 현재 유럽의 한 나라에 머물며 미국 등 제3국으로의 망명을 타진중이나 미국의 경우 북-미 관계 개선이 상당히 진행중인 만큼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이들의 분리망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즉 성혜림씨의 경우 북한에 있는 김 비서의 장남인 정남(25)씨의 안전과 장래 등에 대한 그의 우려와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악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선택이 맞물려 한국망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혜림씨와 나머지 일행은 일단 제3국에 망명해 일정기간 머문 뒤 한국으로 영구 망명하는 방안 등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1996. 2. 23

"金日成 숨겨논 아들있다"

正日·平一외 26살 張現…사위 아들 위장

간호원과 사이 71년출생

李韓永씨 밝혀 成蕙琳사건후 모스크바서 잠적

북한 金日成 前주석에게 正日(54), 平一(43)외에 알려지지않은 아들이 있으며 그는 최근까지 모스크바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金日成의 아들은 지금까지 金의 사위이자 현재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인 張成澤과 金正日의 여동생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경제정책 검열부장인 金京姬(50)부부의 아들로 신분을 위장한채 양육돼온 張現(26)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북한을 탈출, 현재 유럽에서 미국 망명을 추진하고있는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의 조카인 李韓永씨(36)가 22일 본사와 또다시 가진 단독회견에서 밝혔다.

李씨는 『張現은 金前주석이 환갑을 맞은 지난 71년 태어났으며 모친은 당시 金日成관저담당 간호원이었던 尹모씨(51)』라고 말했다.

李씨는 또 『金前주석이 아들의 출생직후 이름을 現이라고 지어줬으며 尹씨와 아들 現을 별도의 간호사·요리사하녀가 있는 평양인근 철봉리 초대소에서 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金日成이 아들 現의 출생사실을 감춘 이유에 대해 李씨는 『그해 초에 자신의 맏아들 金正日과 나의 이모인 成蕙琳씨 사이에 장남 정남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많은 자신이 아들을 본 사실에 대해 참피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李씨는 그러나 『金前주석이 늦자식인 現을 무척 귀여워했으며 1개월에 한번씩 비밀리에 철봉리를 찾아 尹씨와 現을 돌보곤 했다』고 밝혔다. 李씨는 이어 金日成은 부인 金聖愛가 現의 출생사실을 눈치채는 기미를 보이자 딸 金京姬를 불러 『네 아들로 삼아 잘 키우고 있으라며 사위인 張成澤의 아들로 입적시켰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張現으로 바뀐 金日成의 마지막 아들은 7세때인 77년 모친 尹씨와 함께 모스크바로 건너갔으며 국교과정부터 줄곧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다고 李씨는 덧붙였다. 李씨는 『張現의 거주지는 모스크바 분누코보소재 외교관 사택단지이며 이들의 생활비도 북한 호위총국에서 관리했다』고 말했다.

李씨는 또 金正日이 80년 여름방학을 맞아 평양에 간 이복동생 現을 중성동 관저로 불러 동갑내기인 맏아들 정남이와 함께 놀도록 배려하기도 했으며 이들을 위해 관저 뒤쪽 3백여평에 세계 각국의 오락기를 모아놓은 「전용 놀이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분누코보소재 외교관 사택단지에 살고있던 尹씨와 아들 現은 成蕙琳씨의 망명후 진사실이 알려진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姜皓植기자〉

▽ 동아일보 1996. 2. 24

"金正日전처 접촉한적없다"

美국무부 대변인발표

【워싱턴聯】 美국무부는 일부언론에 보도된 金正日 전처의 미국망명 시도설과 관련해 『金正日 가족의 어느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대변인은 金正日의 전처가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한국에서 나온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특파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번스 대변인은 『그 부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망명건)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996. 2. 25

"北韓, 마카오副대표 소환"

他國망명 우려

현지소식통 밝혀

【홍콩 = 연합】 북한은 마카오 주재 북한대표부격인 조광무역의 부대표 안진우가 다른 나라로 망명할 것을 우려, 평양으로 소환했다고 마카오의 북한 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이번 소환소식은 북한이 해외주재 고위 관리와 그 가족의 망명이 급속히 늘어나자 이들에 대해 소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조광무역의 한 관계자는 그가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확인하면서도 망명이 아니라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그가 마카오로 돌아올 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 동아일보 1996. 2. 24

3월 방콕 亞-유럽정상회의때

"北, 韓國지도자「危害」설"

테러용의자 6명 이미 잠입 泰경찰 "8명 추가入國 예정"

日요인 암살기도혐의 음眞理敎 신도2명 검거

【방콕聯】태국의 데일리 뉴스지는 23일 북한이 오는 3월초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중 한국지도자에 대한 위해계획을 갖고 있다고 크게 보도했다.

태국어 신문인 데일리 뉴스는 이날 경찰특수대 소식통을 인용, 「공갯덩어리가 되고있는 ASEM」이라는 제하의 1면 중간 머리기사에서 『북한이 한국지도자에 대한 위해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테러용의자 4명과 한국계 일본인 2명등 6명이 이미 태국에 잠입해 있고 또다른 8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金씨3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한국 지도자라고만 표현했다.

한편 태국경찰은 지난 19일 일본 옴진리교(眞理敎) 신도인 오타 게이지로(51)를 테러용의자로 체포한데 이어 22일 또다른 용의자 히로유키 시마야(31)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진위확인 후평

정부는 23일 북한의 한국지도자 암살기도와 관련한 태국언론 보도에 대해 현지공관에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긴급훈령을 내린데 이어 김대통령의 태국방문기간중 경호 및 방한태세 재점검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국 정상회의(ASEM)의 경호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날부터 ASEM종료 때까지 북한인의 입국을 더욱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北대사관 「잠입」 부인

【방콕聯】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23일 북한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는 한국대통령을 위해하기 위해 4명의 북한인 테러용의자를 2명의 한국계 일본인과 함께 방콕에 보냈다는 보도를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 동아일보 1996. 2. 24

北의 「成혜림보복」우려 경호비상

「韓國지도자 위해說」 정부반응

보도眞偽확인… 만일사태 철저대비

"北 테러감행 가능성엔 의문" 시각도

청와대는 23일 태국의 데일리 뉴스지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기간중 한국지도자에 대한 북한의 테러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순방기간중 경호와 보안문제를 재점검하는등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16일 북한이 金正日의 전처 成혜림씨 망명사건과 관련,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밝힌뒤부터 金대통령의 이번 외국순방중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테러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여기에다 북한의 동남아 공관 주재원들이 최근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회동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모임이 테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3일 수행원들에게 순방기간중 독자적 개인행동을 최대한 자양해줄 것과 통신과 문서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는 공람을 배포하는등 테러가능성에 따른 사전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있는만큼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는 북한이 전세계 정상 25명(아시아 10명, 유럽 15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같은 테러행위를 할 가능성은 일단 적을 것으로 보고있다.

테러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싶어하는 북한이 대서방관계개선 및 경수로와 중유제공등 거의 모든 외교관계를 희생하고서 그런 행동을 감행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외무부는 成씨 일행의 잠적이 金正日을 감정적으로 자극, 뜻밖의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현지공관 및 태국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金東哲·朴濟均〉

▽ 동아일보 1996. 2. 26

북한인 8,9명 泰잠입

"한국인으로 위장 入國"

亞-歐정상회담 앞둬 긴장

경찰고위관계자 "감시중"

로이터 보도

泰, 각국수뇌 경호 5천명배치

【방콕=】태국 출입국관리경찰국은 다음달 1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을 앞두고 최근 한국인으로 위장 입국한 북한인 8,9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출입국관리경찰국의 한 고위관계자가 25일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인이 태국에 입국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나 우리가 재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한국인으로 신원을 속이고 입국했다는 점은 특이한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보안관계자들은 이번 ASEM회의에 관한 정보수집 및 경호작전에는 강력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태국 당국은 회의 참석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5천여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폴도 위험인물 1천여명의 명단을 태국 정보기관에 제공했으며 출입국관리경찰당국은 모든 입국장소에서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 중앙일보 1996. 2. 26

北, 黨·政·軍간부

전화금지령

정부 당국자 "상류층 脫北여파…규제강화"

강영진 기자

북한은 최근 당·정간부, 군지휘관등이 보유한 개인전화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통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5일『당·정·군 간부들만 사용하는 개인전화를 전면 금지시킨 직접적 이유는 확인키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단순한 사적 통신의 증가와 이에 따른 유언비어 증폭을 막기 위한 조치이상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북한당국은 94년 7월의 김일성(金日成) 사망의 충격과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발생한 지난해 여름의 수재와 식량부족으로 인한 민심동요에다 잠비아 대사관 현성일씨 부부 귀순사건·김정일 동거녀 성혜림(成蕙琳)씨 일가의 탈출사건등으로 상류층마저 흔들리자 통신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것같다』고 말하고 북한의 동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2. 28

북한인 泰위장입국 사실무근 확인

외부는 2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앞두고 북한인 8~9명이 한국인으로 위장해 태국에 잠입했다는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는 태국 정부에 조회한 결과 사실무근인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徐大源외무부 대변인은 이날『현지 공관이 26일 태국정부에 확인한 결과, 북한인의 신분위장 입국과 관련된 적발사례는 전혀 없다고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2. 27

泰, 북한인등 포함 8명 테러용의자 명단 입수

【방콕=연】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차 태국을 방문할 예정인 金泳三대통령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보안당국이 현재 북한인등 테러용의자 8명의 명단을 입수해 놓고 있다고 태국의 일간 데일리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조깅을 하는 金대통령의 가슴에 표적을 그려넣은 사진을 게재, 金대통령이 방콕체류기간중 매일 아침 조깅을 할 예정인 국립경기장 주변이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신변안전이 더욱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북한인 잠입조認

泰 출입국관리경찰

【방콕=】태국 출입국관리경찰국의 키아티사크 프라파와트국장은 25일 최근 한국인으로 위장입국한 북한인 8,9명을 그의 부하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외신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외신보도의 사실여부를 떠나 현재 한국인을 가장해 태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인이 있는지, 있다면 몇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6일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기록을 체크한뒤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말해 다소 여운을 남겼다.

▽ 조선일보 1996. 3. 1

成蕙琳씨의 행방

記者 수첩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 脫北사건이 보도되고 달이 바뀌었다. 날수로는 17일이 지났다.

成씨 일행은 여전히 오리무중.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실체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잡히지를 않는다. 한국정부의 「소식통들은 한때 成씨 일행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그곳이다. 지금은 소식통들조차 잠잠하다.

냉전시절 서방세계는 소련 중공의 최고지도자 근황이 궁금하면 그의 「중대발표」를 종종 보도했고, 담사자는 며칠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건재를 확인해주곤 했었다.

파리에 있는 교포들은 둘셋만 모이면 수군거린다. 혹시 우리 정부가 成씨 사건을 총선에 맞춰 「덮으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成씨의 행방을 쫓는 추론을 해나가다 막다른 골목에 막히자 「현 정권이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지난달 내내 成씨 일행이 프랑스에 있는게 확실하다는 뉴스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을때 파리는 더욱 술렁였다.

파리에 있는 미국 기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 특파원들에게 전화로 취재하는 일이 잦았다.

韓·美 취재진들은 美CIA에 「협의를 두고 그곳을 함몰으로 뒤져보기도 했지만, 기사를 쓸수 있을만큼 확실한 확인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美佛 외교관행에 정통한 전문관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나서기도 했다.

佛열토에서 美정보원들이 공작을 벌이는 일은 현재로서 거의 생각할수 없다는 것이다.

샤를르 파스쿠아 前내무장관이 현직에 있던 몇년전 佛정부는 파리에 있는 美 CIA 요원 3명을 경제간첩행위를 이유로 추방했던 일도 있다. 국가원수급 요인이라고 할수있는 成씨 일행이 선진 투명사회라는 서유럽에서 한달이나 미궁상태에 있는게 전례가 있는 일일까.

成씨의 사위 식구 4명까지 포함, 모두 8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들을 이토록 감쪽같이 숨겨둘 수 있는 실력자는 누굴까. 그 만한 인력, 장비, 조직, 예산을 갖춘 기관은….

그리고 成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욕심을 내는 나라는 어딜까 등으로 의문은 꼬리를 문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답은 美CIA, 혹은 유럽내 美맹방의 미군기지나 병원 등으로 귀결되는데 이를바 관련국 정보원들은 일절 말이 없다. 북한만이 「보복」을 운운하며 成씨 일행의 탈북을 간접 시인했을 뿐이다.

유럽에서 미군 기지와 병원이 잠돼있는 곳은 독일이고, 美정부는 중요 인사를 엄중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곳을 자주 이용한 선례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추론은 독일이다.

이럴때 우리 국민들에겐 굼금증을 참아야할 의무만 있다. 답답한 일이다. 〈金佛日·파리특파원〉

▽ 경향신문 1996. 3. 1

成씨자매 이달중 일시訪韓

아들 李韓永씨와 통화서 밝혀

현재 LA 안전지대 체류

최종망명지는 한국…美에 의사전달

북한을 탈출, 미국에서 망명자를 밝고있는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59)일행 8명은 현재 미국 LA근교의 안전지대에 체류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成씨일행이 희망하는 최종 망명지는 한국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의사를 이미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중 蕙琳씨 자매등 일부는 빠르면 3월중 서울을 방문, 잠시 머물면서 공식기자회견등의 일정을 보낸뒤 일단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정부의 고위관계자및 이날 본지와 또다시 단독회견을 가진 李韓永씨(36)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李씨는 단독회견에서 『지난27일 오후 어머니(成蕙琳씨)가 LA에서 서울로 국제전화를 걸어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李씨는 어머니 成씨와 약 1시간동안 통화를 했으며 이때 成씨는 『미국 서부 LA지역의 안전가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LA에 머물고있는 망명자 일행은 成씨 자매와 蕙琳씨의 딸 李옥분(40)·사위 王승림(47)씨부부, 이들의 자녀2명, 李韓永씨의 여동생 南玉씨(30), 수행원인 「명순이 아줌마」등 8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成씨 일행이 최종망명지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있다는 연락을 미국측 관계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의사표시는 망명자들의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成씨 일행의 한국방문계획은 이들 당사자와 한국 미국의 관계당국등 3자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成씨 가족의 망명동기와 과정, 최종망명지에 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때가 됐다는 취지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한·미 관계당국은 成씨일행의 한국방문에 앞서 이들과 李韓永씨가 미국에서 상봉하도록 주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이에대해 『이는 李씨의 어머니 成蕙琳씨 등 成씨일행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李씨는 빠르면 일주일안에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姜皓植기자〉

▽ 조선일보 1996. 3. 2

"成씨자매 유럽의 제3국 은신"

정부, LA체류설 부인

지난 1월 모스크바를 탈출한 金正日의 前妻인 成蕙琳씨 자매 일행은 현재 미국 등 우방국의 보호 아래 유럽의 제3국에 은신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종 망명지등의 출발을 체 외부행동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이들은 신변안전문제 등 선 이들이 유럽에 단분간 눌추고 있다는 成씨 현재로 더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당국은 이날 成씨 일행이 미국 LA에 체류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부인했다. 〈宋義達기자〉

▽ 경향신문 1996. 2. 28

成씨일행 美서 망명절차

지난주 극비리 이동

【워싱턴=朴仁奎특파원】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59) 가족 8명이 지난주 미국으로 이동, 미국으로의 망명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그들(成씨 일가족)이 미국 정부와 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成씨 가족이 지난주 극비리에 미국으로 옮겨왔으며 미국정부로부터 망명에 따른 기초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그들이 조사를 마치고 망명에 대한 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친뒤 망명 허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국정부는 成씨 일행이 미국으로의 망명을 원한 만큼 이들에 대한 망명심사와 시민권부여등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成씨일행은 현재 건강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에 있다』고 전하고 『成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지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있으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은 없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996. 3. 1

안기부 왜 말이없나

기자 메모

姜皓植 <사회부>

안기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정보기관이다. 따라서 안기부가 정부의 특정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때는 언제나 그내용이 성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런 정확성을 기하기위해 안기부에는 제도적인 對언론창구가 있다.

그러나 成蕙琳씨 망명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고있는 요즈음 안기부 對언론창구의 자세는 실망을 금치못하게 한다. 안기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냈다. 본지 1일자(일부지방 2일자) 1면과 23면에 「成씨자매 이달중 일시 방한」제하의 단독기사가 보도된 직후 보낸 자료가 3번째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인즉, 그같은 사실을 안기부가 확인해준 바 없으며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전부(취재기자는 물론 사실로 확인하고있다). 앞서 2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와 흡사한 내용이다.

「成蕙琳사건」은 그 일행 8명의 비중이나 그들의 망명이 여러 방면에 미칠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가히 초대형급이라 할수있다. 그것은 이 사건에 관한 보도직후 북한이 보인 격렬한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이 사건 보도는 안기부나 다른 정부기관의 발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본사 등 3개 신문사가 수개월에 걸쳐 취재경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왔다.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춰보면 우리의 취재보도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할수있다.

본사 등 3개의 신문사들은 이 사건을 몇달동안 은밀히 추적·취재해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특성때문에 보도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단 공개돼버리자 3개 신문사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이 사건 추적에 매달렸다. 국내의 독자는 물론, 외국의 독자들도 이사건의 속보를 관심깊게 지켜보게됐다. 이쯤되면 안기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에 어떤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일정한 對언론 홍보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취재의 어려움이나 보도의 부정확성때문만이 아니다. 成씨일행의 망명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쟁이 한창일때 안기부는 비공식적·임의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언론사에 취재편의(설명이 아닌)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가지 방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에 어긋난 對언론 정책은 설득력과 신뢰감을 잃은 것으로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면이 훨씬 많지 않을까.

▽ 경향신문 1996. 3. 1

"일남이냐… 엄마는 잘있어"

LA 成蕙琅씨—서울 李韓永씨 "전화상봉"

「망명보도」로 일꼬일까 걱정

蕙琅씨 "네가 이곳 다녀가야 서울갈 생각"

서울의 李韓永씨와 미국 LA의 어머니 成蕙琅씨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은 간단했다. 우선 상대방의 신변안전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자(母子)간의 대화는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

전화벨이 울리자 기다리고있던 李씨는 즉각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成씨에게 전달된 李씨의 전화번호는 李씨가 발기중은 장소로 착신전화이 돼있었다.

『李韓永씨 좀 부탁합니다』라고 운을 뗀 점잖은 여성의 목소리는 『나야, 엄마』라는 李씨의 대답에 곧 낭랑해졌다. 『일남이냐』하고 李씨의 본명을 불렀다. 成씨의 이 목소리는 成씨 일행이 망명길에 오르기위해 모스크바를 탈출, 잠적한 1월중순 이후 우리정부로서도 처음 확인되는 것이었다. 成씨는 이어 두달만에 통화하는 아들에게 『괜찮아?』하고 물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망명의 험한 길을 밟느라, 아들은 서울에서 당국과 취재기자들과의 숨바꼭질사이에서 각각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모랑 南朱이랑 모두 안전해. 여긴 다른사람들은 모르는 곳이래』

『옥련이 이모는?』『그 집식구들도 다 잘있어. 여기 걱정은 하지마라』 대화는 곧 한국언론에 대한 李씨의 불만토로로 이어졌다.

李씨의 불만에 『거기 신문은 무슨 색각을 하고 우리이야기를 날렸는냐(보도했느냐)? 우릴 방해하자는 거 아니냐?』고 成씨가 물었다. 李씨는 『여긴 거기(북한)와 상황이 달라서 그래』라고 말문을 닫았다.

成씨는 「망명지에 도착할때까지 언론의 보도로 일이 꼬이지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던 관계자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成씨의 말에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우선 미국 체류중」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배어있었다.

제3국 체류중 자신들의 망명소식이 실린 각국 신문의 보도를 보고 成씨 일행은 한때 망명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일행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고 成씨는 덧붙였다.

成씨 가족은 그뒤 망명과정의 진행보다는 언론보도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했다고 成씨는 덧붙였다.

이모 蕙琳씨는 지레 망명이 실패했다고 낙담을 하면서 둑고온 아들 점남에 대한 만났던 감정까지 겹쳐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이것이 일행의 이동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成씨는 그러나 아들 李씨에게 『이제는 다 잘됐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우린 만날 수 있어. (네가 곧 미국으로 오게 될거야)』라고 말했다.

李씨가 자신은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成씨는 『알고있다. 그래도 올수 있으니 걱정마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成씨는 그러면서도 『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재삼 당부하며 애틋한 모정을 보였다.

成씨는 『네가 다녀가야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측 당국에 대해 자신들의 서울행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아들 李씨의 미국행을 요구했다는 의미.

곧 다시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짧은 통화를 마쳤으나 벌써 한시간이 지나 있었다. 〈姜皓植기자〉

北한 金正日의전처 成蕙琳씨와 함께 망명길에 오른 어머니 成蕙琅씨와 밝은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는 李韓永씨. LA~서울간의 국제전화에서 蕙琅씨는 가족들의 현지체류상태와 앞으로의 일정을 밝혔다. 〈金文錫기자〉

▽ 서울신문 1996. 3. 1

「脫北者협회」中서 첫 결성

회원 1천2백명 中·국제기구에 "정치망명 인정" 촉구

【北京=李錫遇특파원】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탈출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북경에서 극비리에 「탈북자 민권협회」를 결성한후 최근들어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북한붕괴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출신 주민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29일 기자가 입수한 이들의 모임 출범 당시 작성한 「정의와 량심을 사랑하는 전세계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은 『참다운 삶과 정치적 자유, 생존의 초보적 권리를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해와 탄압을 중지하고 정치망명을 인정하라▲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에 넘겨주는 비정상적인 국제관례를 타파하라▲한국은 탈북자 전원의 망명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은 정치인들에 대한 박

▽ 중앙일보 1996. 3. 3

成씨일행 LA도착 美국무부 "근거없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김정일(金正日)의 전(前)동거녀 성혜림(成蕙琳)씨 일행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국무부 한국과의 한 관계자는 『成씨 일행이 미국에 입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成씨일행 문제에 대해 관여한바 없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1996. 3. 3

귀순 玄성일씨 삼촌 北 玄철해大將 건재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3등서기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우리측에 귀순한 玄성일씨의 친삼촌인 玄철해 북한인민군 대장이 아직 건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 동아일보 1996. 3. 3

成혜림 「잠적」한달… 어디있을까

美안착-CIA보호속 독일체류說

일행한두명 이달극비訪韓 추측도

정부당국자 "망명등 처리 상당한 시일 걸릴것"

철통보안속 說만 무성

지난달초 스위스에서 잠적한 金正日의 전처 成혜림씨 일행의 행방이 한달이 다되도록 안개속에 싸여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조직 전을 관계당국 혼자 통제 보호제도가 정착돼 있는 등 세계에서 북한의 가해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다. 미국으로 보면 成씨 일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빌 클린턴정부의 정책 목표인 미-북관계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다소 꺼릴 수도 있다. 그러나 成씨는 북한 최고실력자 金正日과 한때 깊이 살았고 金正日의 장남의 생모란 특이한 신분이다. 따라서 成씨일행의 망명을 받아주는 것이 미국에도 플러스이고 미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인권외교」측면에서 볼 때 이 다면 한국방문도 유럽보다 는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의 추적이 아직도 집요한 만큼 당분간 成씨 일행의 방한은 어렵을 것이란 풀이가 많다. 成씨의 언니 成혜랑씨의 아들 李韓永씨가 미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李씨 자신이 이미 「뉴스메이커」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成씨일행 가운데 한두 사람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李씨 및 한국정부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成혜랑씨의 딸 李南玉씨(30)나 成혜림씨의 사위 王승림씨(47)의 이달중 방한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고위관계자들은 成씨일행의 소재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이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추측보도를 삼갔으면 한다』며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成씨 문제 처리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朴濟均〉

지난달 스위스에서 잠적한 金正日의 전처 成혜림씨 일행의 행방이 한달이 다되도록 안개속에 싸여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조직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잠적, 네덜란드를 거쳐 유럽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成씨일행의 잠적 망명 「작전」을 관계당국 혼자 통제 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대외안전총국」(DGSE)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成씨 일행의 행적이 모스크바-스위스-네덜란드-프랑스로 이어졌 잠금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어느정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1일 「成씨일행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정보기관이 이들을 「관리」하고 관계당국이 「협조받는 공조형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리고 이 정보기관이 바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과 막강 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이와는 달리 애초부터 美 중앙정보국(CIA)보호하에 독일에 있다는 설도 있다.

成씨 일행이 망명지로 택할 나라는 미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게 정설이다. 미국은 「증인 증신 한국교만이 많은 로스앤젤레스근교보다는 CIA가 관리하기 편리한 워싱턴DC근교의 안전가옥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미국에 있다면 한국방문도 유럽보다

▽ 세계일보 1996. 3. 13

脫北者 7백명 귀순희망

金대통령 제3國서 대기…정부 선별처리

金泳三대통령은 12일 국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현재 제3국에서 한국입 7백명가량 있다」면서 「그 러나 정부는 이들을 무조 건 받아들일수 없고 선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백32명과 오찬을 함께한 시민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통일논의보다는 언제라도 통일을 맞을수 있는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起弘기자〉

탈출한 난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많다」며 「늘어나는 탈북 귀순자들이 우리사회의 한 이들을 지원해 달라」고 당

▽ 중앙일보 1996. 3. 4

延邊당국 "脫北者 돕지말라"

작년 우리 企業·종교단체에 요구

千여명 신변 위험…대책마련 시급

최원기 기자

중국 옌볜(延邊)자치주 공안당국이 옌볜에 진출한 3백여 우리 기업과 종교단체들에 「탈북자들을 보호하거나 돕지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옌볜자치주 당국은 지난해 탈북자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옌볜자치주 일대와 창춘(長春)·선양(瀋陽)·다롄(大連) 등 만주지역,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지에 숨어 지내면서 한국망명을 기대하는 1천여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처리에 있어 지난 60년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따라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북한측에 인도하고 있으며 북한도 기관원을 파견해 탈북자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3일 옌볜자치주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 『중국과 남북한 3자간의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포석인 것같다』고 분석하면서 사안의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3. 15

北-러 脫北者대비 정례 實務접촉 개최

양국 國境수비대장 합의

[모스크바=聯] 러시아와 북한은 14일 양국 국경 통제와 관련된 협력회담을 열고 앞으로 정례적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태평양지역 국경수비대장인 비탈리 세드흐 중장과 북한 함경북도 수비여단장 박연수 소장은 14일 러시아·북한·중국 접경 지역에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에서 만나 북·러 국경조약에 따른 국경통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번 회담은 탈북자 급증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일보 1996. 3. 16

中, 脫北者유입 통제

하반기부터 엄격 차단

지금까지 북한 탈북자 유입을 사실상 묵인해 왔던 중국 정부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북·중 국경통제를 강화, 탈북자를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라고 일본의 한 북한문제 전문가가 15일 밝혔다.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고위관리와 접촉한 뒤 방한(訪韓)한 이 관계자는 『베이징 당국은 탈북자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은 올 하반기부터 북·중 국경통제를 강화, 탈북자를 엄격히 차단하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수비대 증강배치▶탈북자 북한인도▶탈북자 관련 정보교환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러시아도 최근 북한과 국경통제 회담을 개시하는등 탈북자 문제가 인접국들 사이에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 조선일보 1996. 3. 29

北주민 7천여명 작년 중국탈출

【東京=李革宰기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은 지난해에만 7천여명에 달한다고 도쿄신문이 28일 한국내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이 간부급 탈북자를 집단관리중이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탈북자수가 7천명에 달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정부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996. 3. 24

中 "외국인 신변보호 주력"

외교부-대변인 北납치등 불법행동 용납안해

【北京AP聯】 중국은 한국 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해 외국인에 대한 신변보이 중국내 한국인들을 북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한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중국내 외국인의 안전은 물론 법적 권리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에서 외국인이 불법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1996. 3. 17

成蕙琳씨 망명說부인

美정보관계자 밝혀

【워싱턴=외합】 지난 2월 중순 모스크바를 탈출한 것으로 보도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59)의 행적과 관련, 북한소식에 정통한 美 정보관계자는 15일 成蕙琳의 망명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성혜림이 망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러시아에서 병치료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고 서방으로의 탈출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는 그동안 成씨는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 현재 망명을 위해 제3국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전면부정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는 또 成씨가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고 있다는 일부 한국언론의 보도도 부인했다.

▽ 조선일보 1996. 3. 19

北노동자 2명 귀순

북한을 탈출해 독립국가연합(CIS)내에 은거해 오던 북한노동자 李태영(33)-尹성철(35)씨가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탄광노동자로 2년전 북한을 탈출, CIS 지역에 은거하며 우리 공관에 귀순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말했다. 〈宋義達기자〉

▽ 세계일보 1996. 4. 7

中國내 「脫北者 민권협회」 김정일에 "탄압중지" 촉구

【北京=金星路특파원】 北京에 주소를 둔 자칭 「탈북자민권협회」는 6일 『김정일은 탈북자민권협회를 정치적 망명단체로 인정하고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권협회는 북경 주재 한국특파원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김정일에게」에서 『95년12월 민권협회 창설이후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탄압정책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김정일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아직 모임의 구성원과 규모 거처등 구체적인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탈북자민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팩스를 보낸 뒤 전화를 통해 『우리들의 주장과 입장이 한국신문에 잘 보도될 수 있도록도와달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3. 15

北, 한국인납치 기도

成씨탈출 보복 駐中상사원 유학생 대상

북경대사관 신변안전 긴급회의

【北京=黃義鳳】 북한은 金正日 전처 成혜림 탈출사건등과 관련, 보복수단의 하나로 중국내 한국인을 테러 납치하려고 기도하고 있는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북경(北京)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길림성(吉林省) 요령성(遼寧省) 흑룡강성(黑龍江省) 등 동북3성의 한국인 사회를 겨냥, 구체적인 테러 납치 대상 범위를 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사관관계자는 이같은 정보가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동북3성의 한국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북경 상해(上海) 천진(天津)등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공관원 유학생 상사주재원 특파원 등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 납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사관측은 또 북경주재 한국기업및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의 책임자들을 불러 鄭鍾旭대사 주재로 신변안전문제에 관한 긴급회의를 개최, 가라오케 등 취약지출입과 심야외출 등을 삼가도록 했다.

▽ 서울신문 1996. 3. 25

한국인 납치·테러 움직임 심상치 않다

北의 "對南 철저보복" 발언 왜나왔나

유학생·상사원등 인적사항 상세파악
中·러등에 특수공작팀 파견… 기회노려

金正日의 전 동거녀인 成蕙琳여인의 탈북사건과 관련, 북한의 한국에 대한 보복차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돼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중국·러시아등에 특수공작팀을 극비에 파견, 한국인 테러·납치를 위해 공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이 이와 관련된 정보와 첩보들을 입수, 중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상사원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일 북경을 방문한 孔魯明외무장관도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측의 한국인 납치·테러 가능성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인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앞서 북측은 成여인사건이 우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남조선은 우리 최고지도부를 악랄하게 헐뜯는 전대미문의 대죄를 저질렀다。 필요한 시기에 수단과 방법을 다해 무자비하고 철저한 보복을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비단 이러한 협박이 아니더라도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그동안 북측이 자행한 여러차례의 테러와 납치에 비추어 중국에서의 만행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우리 공안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의 대남 테러·납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7월엔 중국 연변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安承運목사를 납치한 바 있다。

북한의 납치·테러가 다발적이며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최근 북한인들의 탈출과 귀순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망명·귀순이 당간부의 자녀와 외교관등 특권층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보복심리는 현재 극에 달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成여인의 탈출 보도는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현재 북한측이 한국인 테러·납치를 위해 특수공작조를 파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중국·러시아등 한국인의 왕래가 잦으면서 북한 공관이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 곳들이다。 중국의 경우 1만8천여명의 한국인이 있어 북한이 제일 눈독을 들이고 있을 공산이 크다。 지역별로는 북경에 유학생 3천2백명을 포함해 약 5천2백명, 길림성 연변지역에 3천여명등 동북 3개성에 많이 체류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연길등은 지리적으로 북한의 특수공작조가 활동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인들은 요즈음 외출할 때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외에 아프리카나 중동지역등 북한 공관이 있는 지역등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의 주의가 있기 전에도 북한은 1개팀에 4~5명으로 구성된 5개조 내외의 특수공작팀을 해외에 파견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바 있다。 북한의 특수공작팀은 특수부대원들로 이들은 최근 MBC-TV에서 보도된 바와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테러·파괴훈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맹훈련된 북한 공작팀은 해외에 나와있거나 해외여행이 많은 우리 기업인이나 상사원들의 인적사항, 숙박호텔, 단골음식점, 주요 접촉인물등을 상세히 파악해놓고 대북교역이나 합작알선등을 구실로 접근, 납치를 기도하는 수법을 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공안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공작원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중국이나 러시아등지에 여행할 상사원·관광객등과 현재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교민·상사주재원등에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체재국 당국의 신변보호에 앞서 각자 스스로가 북한 특수공작팀의 납치나 테러대상이 되지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柳垠杰연구위원

▽ 서울신문 1996. 4. 9

脫北者 민권協 北京에서 활동

안전원출신이 주도

【북경=李錫遇특파원】 지난해 12월15일 중국 북경에서 결성됐다는 「탈북자민권협회는 비록 그 규모는 작으나 실재하고 있으며 이 지하조직을 이끄는 인물은 올해 24세의 전북한안전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회의 연락책임자를 자처하는 金모씨는 최근 본사 북경지국에 보내온 팩스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수백명에 이르고 이들 중 협회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북경에 9명, 대련 6명이며 천진과 상해에도 약간명씩 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4. 7

잠비아주재 北대사대리 부임

외교부 張명식… 前대사는 극비소환

외교관 탈출 사태를 겪었던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의 대사 대리에 최근 張명식 외교부 참사관이 임명돼 현지에 부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張은 지난 4월 15일 金日成 생일행사와 관련해 북한대사관 저에서 외교사절들을 초청해 리셉션을 개최하고 외교단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전임자에 비해 한층 의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는 제네바와 유네스코본부에 근무했으며, 90년대에는 유엔대표부에도 근무한 정통 직업외교관출신이라고 말했다。 전임 金응상 대사는 玄성일·崔수봉 부부와 차설근 등의 연쇄망명에 대한 문책으로 지난 1월말 평양으로 극비소환됐으며, 당시 8~9명 규모이던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은 현재 보조인력을 포함해 4~5명 규모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宋義達기자〉

Ⅵ. 탈북자 관련

3. 조명길 망명요청 사건

北 평양 9·7공군부대 초토

「북수하」 대포동 발사 준비 중

러시아 대사관 공항 폐쇄, 출국 불가

어제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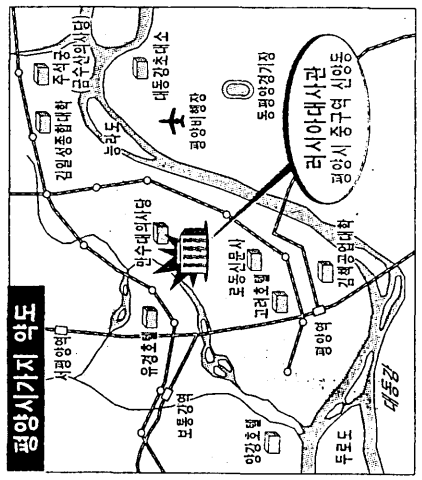
러시아 대사관 폐쇄 … 대사 등 귀국

러시아 대사관 폐쇄 사연과 관련자들

北 평양 9·7공군부대 초토

北 평양 무장침입 충격전

北청년 망명 요청 평양 러大使館 폐쇄



러시아 대사관 폐쇄 사연과 관련자들

러시아 대사관 폐쇄 … 대사 등 귀국

어제 아침

「북수하」 대포동 발사 준비 중

러시아 대사관 공항 폐쇄, 출국 불가

"출근직후 총성함께 청년 침입"

北 보위부원 망명요청

本社 李進熙특파원 러 대표부·대사관 통화 일문일답

본보 李進熙 모스크바 특파원은 14일 하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원이 북한 경비병을 사살하고 침입한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러시아 대사관직원과 전화통화, 현지 상황을 직접 취재했다. 러시아측은 사상초유의 무장괴한 침입사건에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냉정하게 사태수습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은 러시아 무역대표부 언론담당자및 대사관 당직 책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평양주재 무역대표부 언론담당자와의 통화〉

「그렇다」

—모스크바 주재 한국 일보 특파원이다. 오늘 아침 무역대표부에서 발생한 무장괴한 난입사건에 대해 말해달라.

「무장괴한 침입 사건은 무역 대표부내에서 발생했다. 여러 명의 총성과 함께 한 청년이 대표부 구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측 피해는 없었다」

—신원은 밝혀졌나.

「모른다」

—괴한은 대표부내에 있는가.

「잠깐 기다려라. 언론담당자를 바꿔주겠다」(신호가 울린 뒤 언론 담당자와 연결됐다)

—오늘 아침 사건에 대해 말해달라.

「무장괴한 침입 사건은 무역 대표부내에서 발생했다. 여러 명의 총성과 함께 한 청년이 대표부 구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측 피해는 없었다」

—신원은 밝혀졌나.

「모른다」

—괴한은 대표부내에 있는가.

「이곳에 있는 것 만은 확실하다」

—괴한의 신변은 안전한가.

「아직은 그렇다」

—그의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잘 모른다. 괴한과 의견을 교환중인 것으로 안다」

—그가 망명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직 뭐라 얘기할 수 없다」

—무역대표부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남아 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당직자와의 통화〉

—모스크바 주재 한국일보 특파원이다. 오늘 아침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북한인 무장괴한이 난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가.

「사실이다. 직원들이 막 출근한 상오 9시께 무역대표부 건물에 침입했다」

—괴한의 신원은 밝혀졌나.

「아직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뿐이다. (준비된 메모를 읽어내려가는 듯) 96년 2월 14일 평양의 러시아 외교단지내에 있는 무역대표부에 괴한 한명이 침입했다. 현재 무역대표부내에 머무르고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북한측의 피해는.

「모른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방금 말한 게 전부다」

—괴한이 망명을 요청했단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말하기는 힘들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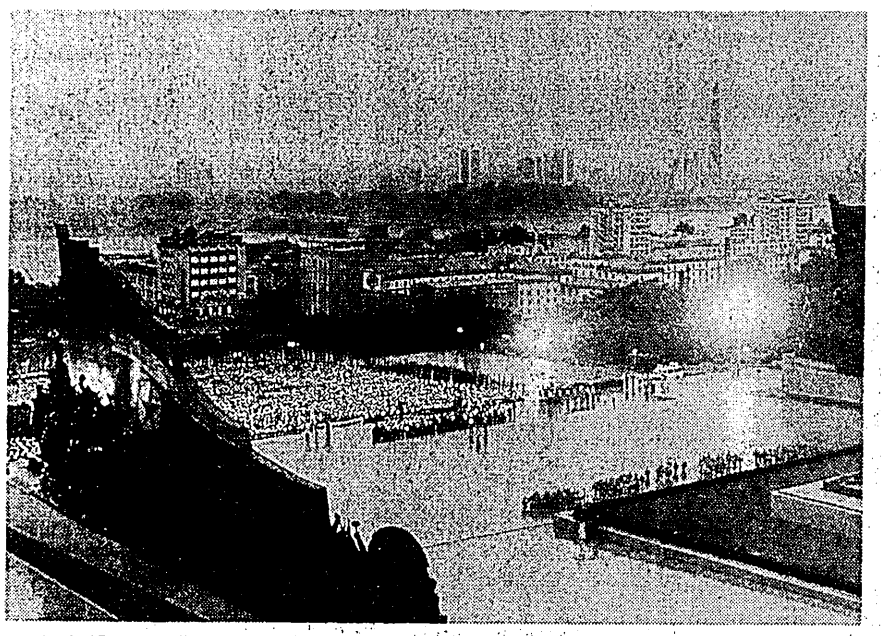
「당직 책임자이다」

—이름은 무엇인가.

「말할 수 없다. 나는 당직 책임자일 뿐이다」

신원 아직 정확히 모르나 신변안전

러시아人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어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무역대표부와 인접한 곳에 있는 평양시내 중심가 만수대 언덕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北 체제붕괴 또다른 징후

북한인 망명요청사건 의미

모스크바에서 金正日의 m 떨어진 곳이라는 점, 전처 成惠琳씨 탈출사건이 경비중이던 북한경비병을 발생한 데 이어 북한 수도 사살하고 망명을 요청한 평양에서 25세의 북한청년 과감성 등을 볼 때 북한 이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체제의 동요가 심각한 상 점적적 망명을 요청한 사 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내 볼 때 이번 사건이 북한 당국에 준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주재 외국공관에 북한인이 무장침입해 망명을 요청한 것이 북한 정권 수립이래 최초라는 것으로 가볍게 넘어 갈 점도 결코 아닐 것이다. 체제 붕괴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金正日의 54회 생일(16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발생했고 발생장소가 金正日의 집무실에서 불과 5백 이유효한 만큼 망명신청 이 러시아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당국도 이번 사건을 묵과할 경우에 벌어질 사태를 우려, 러시아측에 신병인도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처럼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폐쇄상태로 머물러 있으려해도 이제 더이상 폐쇄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북한 청년은 국가안전보위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계층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의 청년이 망명을 시도한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준다.

외국 주재원들의 잇따른 망명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수도 평양에서마저 망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철옹성 같던 북한이 89년 주민들의 꼬리 문 탈출로 붕괴에 이른 동독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전망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16일 金正日생일 코앞서 발생 엄청난 충격

"동독주민 탈출 재연되는것 아닌가" 전망도

북한은 15일부터 金正日 생일을 축하하는 경축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평양 일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을 것이 분명하고 외국공관에 대해서는 평소 수교한 이후 소원해졌다고 는 하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아직은 우호적이고 57년 체결된 범인인도협정 만큼 아니라 경직된 체제의 나사가 풀려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90년 한국과 蘇소련이 수교한 이후 소원해졌다고 는 하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아직은 우호적이고 57년 체결된 범인인도협정 리결과와는 관계없이 몇가지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이 신속하게 외부에 상세히 알려졌다는 점이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망명처」로서 북한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李長勳기자】

2m담장 월사이로 넘어

北 퍼하마평 여명

평양 교수하면수학 충전전 시계

대이로 자어학교 전면 보이로 지학교 실전 학생들이 "해방" 지체

오래전 일제시대 때지어 지어 면 면 면

마라톤 대회

평양시내 교수하 마라톤대회가 지난 14일 열렸다. 마라톤대회는 평양시 교수하 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평양시 체육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교수하 마라톤대회 출발점인 교수하 마라톤대회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교수하 마라톤대회 종점인 교수하 마라톤대회 종점에 도착하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교수하 마라톤대회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北韓내부 「중대사태」 판단

정부, 「平壤총격전」 대책마련에 분주

정부는 金正日전처 成蕙琳씨 일가의 서방탈출에 이어 북한의 중신가에서 총격전까지 발생하자 북한사회 내부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일단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파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북쪽에 보복 대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태진전을 염두에 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특히 특수신분의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교단지 내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것은 「중대사태」가 아닐 수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외무부는 사건발생 직후 駐러시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駐평양주재 러시아대표부에서의 총격전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총격전을 북한과 러시아간에 진행될 사건처리 절차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측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 이번 사건의 처리향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총격전을 북한 권력내부의 이상기류를 반영한 상징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부세계에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金正日체제의 안정성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강하게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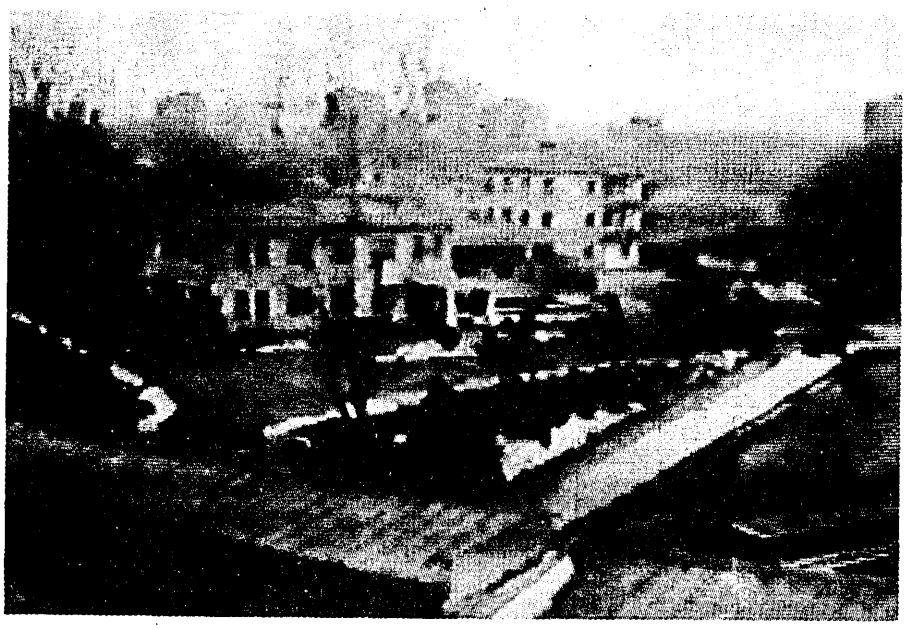
북한사회 내부가 크게 동요할 경우 북한주민들이 중국과 러시아등 인접국가로 대규모 탈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북한주민들이 이들 지역으로 탈출할 경우 한국으로의 망명여부가 당장의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따라서 북한주민의 대거 일국사태에 대비,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엔도 미묘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보안요원이 러시아로 망명하는 것은 북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청년이 경비병들을 사살한 현행범인 만큼 러시아로선는 신병을 북한측에 인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韓·러수교 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의 한 달국자는 "러시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북한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달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사이에 아직도 고위당국자간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실무자들간의 교류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부는 북한내부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러시아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협력관계를 점진적인 협력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게 정부의 기본 전략인 것이다.

〈鞠賢然기자〉



◇14일 오전 무장한 북한인 20대청년 1명이 정치망명을 요구하며 침입, 북한경비병들과 총격전을 벌인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있는 평양중심가 외교단지의 일부. 이 외교단지에서는 지난 94년 8월 「김정일타도」라는 전단이 뿌려지기도 했었다. 〈자료사진원〉

韓-러시아 협조체제 가동… 경위파악 주력

北권력층 난기류…金正日체제 불안 반영

러대표부 무장난입, 북한전문가 분석

북한의 노동당특수부 경비책임 보안요원 1명이 14일 오전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침입해 정치망명을 요구하며 경비병들과 총격전을 벌인끝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平壤도심 총격전 후진국 정글"

피살된 경비병 보위부소속 名射手들

武裝청년, 고도의 특수훈련받은 요원

북한의 노동당특수부 경비책임 보안요원인 敏씨는 『러시아무역대표부는 본래 만수대의사당 앞에 있는 러시아대사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범인이 외교단지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안전보위부 내부경비부 소속의 숙련된 사격수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이른상 권총으로 소총을 갖고 있는 상대방 4명을 사살했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군사전문가는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라면 소총권총으로 불시에 기습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방송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은 1957년에 맺은 범인인도협정에 따라 형사범들을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안전부요원 복장이지만 사실은 국가안전보위부 내부경비부 소속의 숙련된 사격수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이른상 권총으로 소총을 갖고 있는 상대방 4명을 사살했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군사전문가는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라면 소총권총으로 불시에 기습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방송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은 1957년에 맺은 범인인도협정에 따라 형사범들을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人質은 없다… 지금 설득중"

本社기자 平壤 러대사관 당직자와 전화

◇平壤 외교단지 평양 외교단지의 모습. 이곳이 시내 중심부의 러시아대사관단지인지 동평양 문수거리에 위치한 일반외교단지인지는 분명치 않다. 【聯合】

平壤의 총격전

러시아 외무부 경악 "… 구체 언급회피"

러특파원 "테러범 인상은 아니었다"

모스크바주재 한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은 우연하게도 14일 오후6시(한국시각 밤12시) 대사관에서 각각 러시아의 한국관계자들을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 한국측은 蔡수동총영사를 비롯, 5명의 한국대사관 직원이 이번 달에 이임하게 돼 있어 이임환송회를 개최했고, 북한측은 2월16일 김정일생일잔치를 앞당겨 열었다。 러시아의 한국관계자들은 成薰琳의 망명사건과 평양주재 러시아무역대표부에서의 북한인 망명요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바람에 어느 쪽 만찬모임에 가야 할지 고민하기도。

이번 평양주재 러시아무역대표부사건으로 러시아외무부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분위기였다。 최근 貿利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사실을 확인해준 뒤 터진 것。 러시아외무부의 한 직원은 私見(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이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리송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무부직원들은 앞서 이날오전 『成薰琳이 金正日에게 큰 생일선물을 줬다』며, 『16일 오후6시에 열릴 金正日의 54번째 생일기념 북한대사관주최 만찬 분위기가 어떻겠는가』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스크바라디오기자가 들이닥쳐 면서 무장군경이 러시아대사관주변을 에워싸고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으나, 특별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 한국課직원들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제1보가 전해지자, 사건 구체적인 논평은 거부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성 혜림사건에 러시아가 개입됐다고 오해한 북한측의 발표했다。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에 25세가량으로 추정되는 북한청년이 총을 쏘며 침입했으며, 그는 현재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관계자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1957년에 체결된 朝-蘇우호조약은 폐지키로 합의했음에도 금년 9월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북한 간 약국은 범죄자를 상호 인도하게 돼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나 이 조약은 이미 사문화했으며, 최근 10년동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범인인도 관례가 없기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 그 북한인이 순수정치 망명자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논평을 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외무부는 또 망명을 요구하는 북한인이 러시아와 북교 공관에 난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80년대에도 평양주재 옛 소련대사관에 북한주민이 난입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 사건이 한 차례 이상 있었지만, 모두 북한당국에 인도했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黃晟準기자】

東京특파원과 전화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 당직책임자는 14일밤 本紙 동경특파원과 전화통화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을 시인했으며 러시아 정부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직책임자와의 통화내용이다。

—범인은 현재 어디있나。

『현재 대사관에 있지 않다。 무역대표부에 있는 것으로 안다。』

—부상자는 몇명이나 되나。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다。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

—범인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인질을 잡고 있는가。

『북한 경비병과 총격을 벌였으나 우리를 인질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역대표부 직원이 함께 있으면서 설득중이다。』

—무역대표부 출입이 엄격하지 않은가。

『대사관과 달리 무역대표부는 군사대표부 등과 같은 건물에 들어있어 출입통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구는 무역대표부 직원중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어 외부인이 알기 어렵다。』

—주변 경비는 강화됐는가。

『최소한 대사관 건물에는 경찰과 경비원은 없다。』

【東京=李革宰·李濟기자】

▷ 동아일보 1996. 2. 15

고 허담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北韓人 교수직 박탈 여부 변수

국제법 관례따라 결정… 파렴치범 여부 판단

마천리 北韓라도. 북한의 자국 교육부문 수뇌부가 여러차례 파견했던 이 북한의 대표적 지식인 허담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가 대학 교수직 박탈 여부 변수로 떠올랐다.

평양 평양의 대학교수들은 이 소문의 진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평양의 대학교수들은 이 소문의 진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천리 北韓라도. 북한의 자국 교육부문 수뇌부가 여러차례 파견했던 이 북한의 대표적 지식인 허담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가 대학 교수직 박탈 여부 변수로 떠올랐다.

평양 평양의 대학교수들은 이 소문의 진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 과거와 달리 "政治的이유땐 존중"입장

「도주한 범죄자」인 경우엔 北에 인도 예상

러-北 사법공조협정 불구 관계 예전같지않아 촉각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서 도주한 범죄자를 북한에 인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천리 北韓라도. 북한의 자국 교육부문 수뇌부가 여러차례 파견했던 이 북한의 대표적 지식인 허담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가 대학 교수직 박탈 여부 변수로 떠올랐다.

평양 평양의 대학교수들은 이 소문의 진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1996. 2. 15

법률에 선 北 간첩 문제

「망명허용」 싸고 急浴 조짐

마천리 北韓라도. 북한의 자국 교육부문 수뇌부가 여러차례 파견했던 이 북한의 대표적 지식인 허담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가 대학 교수직 박탈 여부 변수로 떠올랐다.

평양 평양의 대학교수들은 이 소문의 진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천리 北韓라도. 북한의 자국 교육부문 수뇌부가 여러차례 파견했던 이 북한의 대표적 지식인 허담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가 대학 교수직 박탈 여부 변수로 떠올랐다.

평양 평양의 대학교수들은 이 소문의 진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1996. 2. 15

"고수하고 人權보장도 적다"

유엔인권위 추궁의견 속출

◇이그나틴코

14일 오후 2시부터 미얀마 이그나틴코 대사가 문

마천리 北韓라도. 북한의 자국 교육부문 수뇌부가 여러차례 파견했던 이 북한의 대표적 지식인 허담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가 대학 교수직 박탈 여부 변수로 떠올랐다.

평양 평양의 대학교수들은 이 소문의 진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예의 다수파가 여전히 권력층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은 이 사예의 평파 저금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1996. 2. 16

러 협조 北특공대 진입

총성후 北 軍10여명 나와

러言論 처음엔 "射殺" 보도

러 외무부 "국가보위부 소속 조명길하사" 발표

【모스크바-동경=黃晟準·李濬기자】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침입, 망명처를 요구하던 무장 북한인이 15일 오전 무역대표부 건물 회의실에서 북한 특수부대요원들의 무장해제과정에서 자살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했다. 이 북한인의 신원은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 하사관 조명길氏(25)로 밝혀졌다.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조명길에게 무장해제와 투항을 설득했지만 그는 이를 완강히 거절했다』며 『양국간 협의를 거쳐 북한특공대가 무장해제 작전을 펴는 도중 조명길이 자살했다』고 밝혔다.

카라신 대변인은 이같은 정보는 현지공관의 보고에 근거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북한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명길이 수용소 경비병이었다』며 그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그의 망명요청을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조씨가 북한 특수부대에 사살됐다고, 보도했었다. 또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이타르 타스통신 보도를 인용, 작전이 개시된 오전 10시15분쯤 무역대표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으며, 잠시 후 무역대표부에서 북한군 10~15명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타르 타스통신은 조씨의 시체가 무역대표부에서 알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고 보도했다.

한편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직원들은 조씨가 자신들을 위협하지는 않았으며, 침착하고 평정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타스통신에 전했다. 전날 무역대표부에 침입했던 조씨는 1층 응접실에 계속 머물면서 망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권총 1정과 총탄 3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舊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명요구 北군인 自殺"

▽ 동아일보 1996. 2. 16

北 특수요원 10~15명 진입 작전개시 순간 "탕"…상황끝

인근 거리 차량통제도 안해

이타르타스 통신 특파원 목격기

북한군 조명길 하사의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망명시도사건을 현장에서 유일하게 보도한 이타르타스통신의 평양주재 특파원은 15일 사건종료직후 북한특공대의 작전 순간에 대한 목격기를 타전했다.

이타르타스통신 특파원은 총성이 한발 울린 뒤 작전이 종료됐으며 숨진 조하사는 내내 평정을 잃지 않고 침착했다고 전했다.

이타르타스 특파원이 전하는 작전현장은 다음과 같다.

15일 오전 10시15분경 작전이 개시되는 순간 (러시아대사관 부지내) 무역대표부 건물에서 총성이 한발 울렸다.

무역대표부 건물쪽 출입부구(대사관저로 통하는 출입문)는 3개가 있음)가 활짝 열렸으며 문 주변에 10~15명의 북한 특공대가 눈에 띄었다. 그중 일부는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인근 거리의 차량통행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으며 단지 무역대표부로 통하는 인도의 통행만 군복을 입은 요원들에 의해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금지됐다.

무역대표부 건물내로는 특파원도 진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모스크바=聯〉

▽ 한국일보 1996. 2. 16

自殺했나·射殺됐나

北韓주재 러통신 제1報땐 "사살" 打電

「몸싸움때 격발」 등 다른情況 가능성도

북한정권 수립이후 처음으로 무장망명 사건을 일으킨 조명길 하사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사살됐는가, 아니면 망명요청이 거절되자 좌절해 자살했는가. 평양은 말이 없다.

조하사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15일 상오 11시40분께. 로이터 통신이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통신사인 이타르타스의 보도를 인용, 조 하사가 「사살」됐다는 기사를 타전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망경위가 매우 불확실했다.

AP 통신은 하오 2시50분께 『북한특공대가 (러시아 무역대표부 건물내에서) 조하사를 사살했다』는 이타르타스 통신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조하사가 사살되기 직전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무역대표부의 협조아래 대사관 단지내로 들어왔다는 보도가 덧붙여지면서 사살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졌다. 당시까지 이타르타스 통신은 조하사 망명기도 사건을 보도한 유일한 매체였다.

그런데 하오 3시께 한국 외무부에서 조하사가 자살했다는 내용을 러시아 치는 보도를 타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대사관 소식통을 인용한 이타르타스 통신의 보도를 정확히 옮기면 조하사가 「자살했을 수도 있다(Might Have Killed Himself)」였다.

몇시간이 지난후 또 다른 러시아 통신사인 인테르팍스는 한 러시아 외교관의 말을 인용, 『조 하사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러시아측이 이날 상오 10시30분 조하사의 신병을 러시아측에 인계했다고 밝힌 대목과 무장해제 과정에서 그가 숨졌다는 점이다. 즉 신변인도 직후라 러시아측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고 또 무장해제 과정에서의 몸싸움때문에 총이 격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체부검등 북한측의 공식한 조사결과 발표가 없을 경우 조하사 사망경위는 평양의 깊은 장막너머에서 미스터리로 남을 공산이 크다.

【尹舜煥기자】

▽ 동아일보 1996. 2. 16

러-北「마찰」일단 모면

국제사회 비난화살 피해가 파문 최소화한 것으로 만족

평양「총격파문」외교문제

러시아 북한

조명길씨의 자살로 러시아와 북한은 자칫하면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을 지도 모르는 난처한 상황은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씨가 치외법권지대인 러시아 공관 구역 내에서 북한요원들에 의해 사살되었다면 양국간에 커다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도 있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국 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이 공관 구역 내에서 주재국 요원들에 의해 사살되는 일을 허용했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으로 비난받는 입장에 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씨의 자살은 양국간에 파생될 수도 있었던 문제, 러시아가 처할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모면케 해주었다. 북한측으로서도 이같은 「해결」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씨가 러시아 공관 구역 내에서 자살을 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측이 그를 북한 측에 인도할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풀이될 수 있어 러시아측의 점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모스크바=文明惠〉

다만 러시아 측으로서는 자국 공관 내에서 자국의 보호 상태 아래 있었던 망명 요청자가 자살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개운치않은 사실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 공관 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끝내 무기를 버리지 않아 최소한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강제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내했다는

▽ 한국일보 1996. 2. 16

러-北도 국제비난 직면

보위부원 사건 비극적 결말

정당한 재판등 요구않고 신병넘겨줘 러

설득등 적법절차무시 독재국가 확인 北

북한 보위부원 조명길 하사의 망명기도사건은 사건 발생 25시간만에 조하사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 조하사가 죽음에 이른 과정을 살펴 볼 때 그것이 자살이냐 사살이냐와는 관계없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도 국제적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매우 곤혹스런 형편에 빠졌었다. 만약 망명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러시아와 북한간의 외교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같은 이유등으로 조명길하사의 망명의사를 확인하기는 고민을 덜어 준 것은 57년에 체결된 범인인도 협정이었다. 이 범인인도협정에는 「범법자를 사살했다. 이는 러시아가 조하사의 신병을 인도하는 구실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한다 해도 러시아는 조하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자살이냐 사살이냐와는 관계없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도 국제적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매우 곤혹스런 형편에 빠졌었다. 만약 망명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러시아와 북한간의 외교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사관저에 보낼 방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사관저에 조하사를 계속 보호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양국관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적인 이유도 있었다. 조하사는 러시아 신병인도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보호해 북한 밖으로 내 해결책에서 배제 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조하사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이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상황에서 러시아측의 과정에서 북한 경비원의 처리문제등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을 것이다. 조하사의 신병을 북한측에 넘기기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북한측의 약속을 받아 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북한도 이 사건으로 인권이나 법을 무시하고 있는 독재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려는 노력이나 조하사를 설득하려는 시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당황했었는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모스크바=李進熙특파원】

▽ 중앙일보 1996. 2. 16

庇護權인정 않지만 일시적 보호 관례

公館 망명요청… 외국의 例

박장희 기자

외국 공관에 망명을 요청했을 경우의 비호권(庇護權)은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권리다.

그러나 망명자의 신체·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이들에 대해 일시적 보호를 해온 것이 관례다.

▶아야 데 라 토레 사건=48년 페루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인민혁명당 당수 토레는 수도 리마의 콜롬비아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 콜롬비아대사관의 허가를 얻었다.

콜롬비아 대사는 이 사실을 페루 정부에 통보하고 망명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두 나라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갔다. 콜롬비아가 토레를 페루 정부에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판소는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했다. 3년뒤 양국의 타협 아래 토레는 콜롬비아대사관을 나와 페루를 떠났다.

▶팡리즈사건=89년 천안문사태 발생 직후 시위 연루 혐의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반체제 물리학자 팡리즈는 부인과 함께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중국 정부는 팡리즈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하고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워싱턴측은 이에 대해 인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1년여뒤인 90년 6월25일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등 잇따른 외압에 굴복, 팡리즈의 출국을 허용. 팡리즈 부부는 그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 중앙일보 1996. 2. 16

러, 亡命청년 왜 넘겼나

韓·러 수교후 냉각된 對北관계 解氷겨냥

모스크바=안성규 특파원

조명길씨 망명기도사건이 러시아대사관측의 적극 협조로 신속히 수습됨에 따라 91년 한국과 옛소련간 수교이후 줄곧 냉각관계에 빠져들었던 러·북한관계가 온난기류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평양의 러시아무역대표부에 들어간 조씨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러시아는 사건이 터지자 즉각 『그는 범죄자다. 범죄자는 망명 허용이 안된다』는 말을 흘렸고 급기야 자국 영토와 다름없는 대사관내에 북한 특수부대를 진입토록 허용했다.

옛소련 시절인 80년대에도 수차례의 북한주민 망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속성은 러시아의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임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양국간 사법공조협정이 있어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처리했어도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사태를 끝내게 방조한 것은 러·북한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교부는 안드레이 코지레프 장관이 물러난 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장관이 등장, 「지나친」 한국 일변도의 대

人道的비난 불구 亡命 일축
'그저 지켜본' 정부태도 문제

(對)한반도정책을 수정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장기화」나 조씨의 망명 요청을 정치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일 따위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조씨의 죽음에 대한 인도적 비난에는 러시아가 완전히 발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러시아는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북한인을 살해했다는 결과만 따져 망명 요청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태도다.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저 지켜본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건의 신중한 처리」나 「조씨의 범죄자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등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이 이번 사건에 결코 제3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행동은 일절 없었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주민임을 규정한 헌법조항은 사문화된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용당하게 될 가능성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

▽ 동아일보 1996. 2. 16

주민불만 고조…기강 해이

러기자 평양 10년 체류기

북한은 근년들어 사회규율이 크게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지난 85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평양에 주재했던 이타르타스통신의 알렉산드르 바리예프 전(前)특파원이 전했다.

다음은 바리예프가 일본언론을 통해 전한 북한의 실상.

이번 사건은 북한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또 망명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북한에서 망명하려면 갈 곳은 러시아와 중국 한국이 고작이기 때문에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표적이 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

金日成 사후 북한에선 사회규율이 깨지고 있다.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틀림없다. 나 자신도 작년 9월 주민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예정보다 앞당겨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동차 부품 도난 사건도 빈번하다. 러시아 여성이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기도 하고 평양시내에서 서로 치고받는 싸움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치안 이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사정 악화와 감권제 아래에서의 압박감이 자리잡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식량지원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외에게는 전혀 배급되지 않고 있다고 슬픈 얼굴을 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수록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시각이 현저히 바뀌면서 영어학습열이 일고 있다.

북한에는 강력한 재야세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반정부운동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만의 에너지가 확실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가 정부로 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東京聯〉

범죄 급증… 거리폭력배 활개
외국 식량지원 전혀 보도안돼
對美시각 변화…영어학습 열기

▽ 조선일보 1996. 2. 16

〈평양 러大使館과 통화〉

"경비병 살해해 인도… 그외엔 못밝혀"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침입, 망명을 요구한 국가보위부 소속 조명길하사를 15일 오전 10시쯤(서울시간) 북한측에 인도했다고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다. 이를 밝히지 않은 러시아 대사관 직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살인자이기 때문에 북한측에 인도했다』고 말하고 『그밖의 사실에 대해서 말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오전 6시40분(서울시각 12시40분)

—여보세요.

『여보세요.』(두번 반복)

—여기 모스크바입니다.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이죠. 북한인이 사살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 밝히시오.』

—한국의 조선일보입니다.

『알겠어요. 잘 들으시오. 평양시각 오전 9시 30분 북한인은 북한측에 인도됐다. 인도 이유는 북한인이 동포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상.』

—여보세요. 그럼 북한측이 북한인을 사살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실에 대해서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화 끊겠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러시아 대사관 직원.』

—이름과 직책은….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러시아 대사관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대화자는 정확한 러시아어 발음을 가진 30대 남자 목소리였다.

【모스크바=黃晟準기자】

▽ 한국일보 1996. 2. 16

孔외무 "自殺 통보받아"

孔魯明외무부장관은 15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러시아대사관에서 망명을 요구했던 조명길하사는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孔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러시아정부로 부터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1996. 2. 16

숨진 北韓軍하사 조명길은 누구

25세…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복무

「성분」 좋아 체코 해외연수 경력도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단지내 무역대표부에 권총을 들고 침입,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며 대치하다가 하루만에 사살된 북한인은 정치범수용소 경비원으로 있던 25세의 북한군 현역 하사 조명길로 드러났다.

조명길은 국가안전보위부원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북한내부에서는 「성분」이 좋은 인물이었다. 삼엄한 검문과 경계가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 외교단지의 외곽까지 무리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그의 성분과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이후 평양의 러시아대사관등으로 잠입해서 망명을 요청한 북한인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과는 달리 조하사는 극히 정상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이후 조명길 위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우 침착하고 정신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조하사는 그러나 러시아 직원들중 한 명이 대표자로 그와 계속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하는등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불안해 했었다고 이 직원들은 덧붙였다.

조명길은 무역대표부 건물로 들어온 직후부터 「망명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그가 지닌 권총에는 탄환 3발이 장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조의 망명기도는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었다기 보다는 치밀한 사전계획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가 북한군 동료를 3명씩이나 사살하면서까지 러시아 무역대표부로 뛰어든 데는 뚜렷한 동기가 있었으리라는 분석이다.

【曺再雨기자】

▽ 한겨레신문 1996. 2. 16

북 체제단속 고삐죄기 전망

잇단 돌발사태 청와대 시각

위기지만 붕괴 예단은 일러
남북 냉각상태는 심화될 듯
언론태도엔"상식밖 호들갑"

김종구 기자

15일 오후 열린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지금까지 통일부총리가 주재하던 관례와는 달리 이수성 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통일안보조정회의 주재자를 격상시킨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첫째는 북한의 최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둘째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처라는 점이다. 즉 북한이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도 세세한 탈북자 대책 등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북한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부처별 대비태세 확인,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에 집중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의 북한 정세에 대한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분석은 체제에 금이 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붕괴 위기로까지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데 모아진다.

한 관계자는 "최근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체제가 나사가 풀려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몇건의 돌발사태만을 갖고 붕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냉각 상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우선 북한이 내부체제에 대한 고삐를 더욱 죄는 한편, 남북관계에서도 강경자세로 더욱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기존의 강공책에서 후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쪽의 이야기다.

'평양 충격' 현장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조명길 하사의 망명기도 사건이 발생한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있는 평양 중심지 만수대거리 부근 모습(점선안이 대사관 자리). 가까이에 만수대의사당과 노동당 청사가 있다. 서울/연합

청와대는 그렇지만 최근의 북한 이상징후에 대해 언론 등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성혜림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호들갑"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성씨의 잠적 문제는 김정일로부터 대접을 받아온 북한 상류층이 일탈했다는 정도의 의미만 가질 뿐"이라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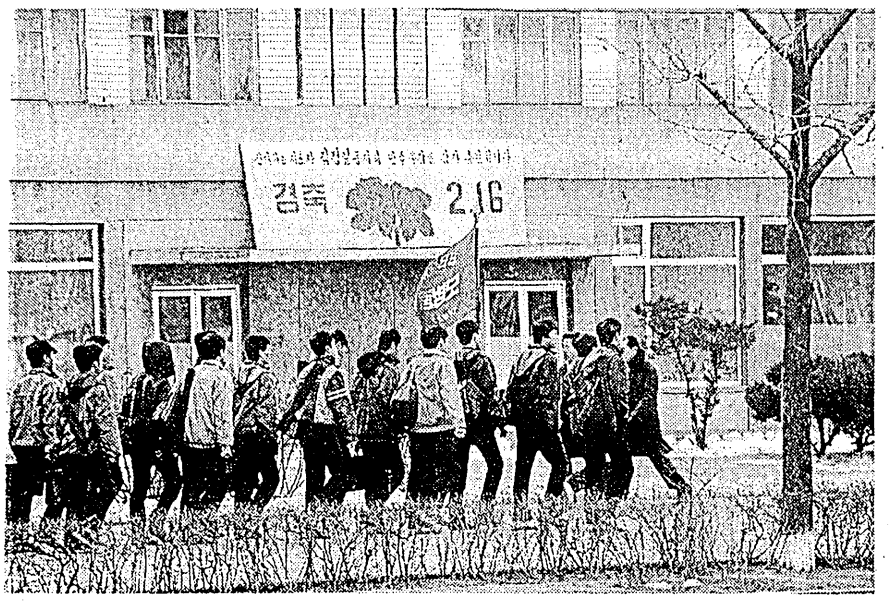
그는 또 "성씨가 아들 김정남의 정치적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쪽으로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더욱이 성씨의 망명 문제가 세상에 공개된 상태에서는 그를 서울로 데려 오는 일은 사실상 물 건너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성씨가 마치 김정일 주변 여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탈북한 것처럼 분석하고 있으나 전후 배경을 살펴볼 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위기이나 급속붕괴 없을것" 일치

北韓 심상찮다

——日·美측의 분석



북한주민들은 金正日독재체제하에서 철저한 사상통제와 함께 엄격한 사회규율을 지키도 강요받고 있다. 사진은 金의 생일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리를 지나가는 북한학생들 모습.

"金正日체제 구심력 심각하락 상징"

"일련의사건 우연… 와해신호 아니다"

앞날불투명 지속따라 돌발 軍事행동엔 우려

日의 시각

일본은 북한 보위부원 망명기도사건을 북한체제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서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언론은 15일 成惠琳씨 탈출에 이사건을 묶어 북한 체제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크게 보도했다.

일본이 이번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거주권이 극히 한정돼 있는 평양의 중심가에서 ▲16일 金正日 서기의 생일을 앞두고 경계가 극히 강화돼 있는 가운데 ▲체제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원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특히 成씨사건을 다소 평가 절하했으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평양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시각은 「식량사정등 경제적 어려움을 배경으로 金正日체제의 구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신문들은 국제면 등의 해설기사를 통해 일제히 「체제이완」「구심력 저하」「불투명한 앞날」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상황을 직접 「체제위기」「붕괴조짐」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애써 자제하고 있다.

특히 아사히(朝日)신문은 日방위청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교관의 기고문을 통해 「이사건을 두고 「망명연발-체제붕괴」의 동구형 구도를 연상하는 것은 북한이 개인숭배의 이질적 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무리가 있다」면서 「미국 이 북한붕괴론을 거론하는 것은 對北「연착륙」정책에 따른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美의 시각

【도쿄 = 黃永植특파원】

한편 지금까지 해외나 중국, 러시아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경로였으나 평양의 외국 공관을 이용한 탈출기도 클린턴美행정부는 경제난 악화와 엘리트계층의 이탈등 金正日체제의 동요조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붕괴 직전에 다다른게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가 희박한 가정으로 보고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북한내외에서 잇달아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우연히 겹쳐 발생하는 것일 뿐 체제와해를 예고하는 총체적인 신호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美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成惠琳씨 탈출과 북한보위부원의 러시아대사관 망명기도를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같은 사건들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같은 이유에서도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동구국가들의 멸망과정에서 나타났인 체제에 기반한 망명 기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본내에서는 활발하다.

【워싱턴 = 李相石특파원】

▽ 중앙일보 1996. 2. 16

좋지 않은 조짐… 후유증 클듯

중국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중국당국은 김정일(金正日)의 전 동거녀 성혜림(成惠琳)씨의 서방탈출과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의 북한청년 정치적 망명요청 사건에 대해 일체의 논평이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成씨 탈출은 북한의 내정이며 북한군인 망명기도 역시 북한과 러시아간 문제로서 중국이 이러쿵 저러쿵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근 북한외교관을 포함한 체제 핵심세력들의 망명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조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이들 사건이 북한 권력핵심부에 몰고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당국은 成씨의 서방탈출이 보도되자 『나름대로의 채널을 풀가동시켜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한 고위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물론 중국측 관계자들은 북한 정세와 관련, 한결같이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새 권력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일뿐 체제붕괴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을 공식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당(黨) 대외연락부 부부장의 방북 목적중 하나도 북한내부 동향 파악이었으며 戴부부장 일행은 『김정일 정권은 현재까지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成씨가 金의 전 동거녀라는 점과 김정일의 친인척등 로열 패밀리 내부에 적잖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따른 후유증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金의 복잡한 여성관계도 그렇고 이미 표면화하고 있는 가족및 친인척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脫走·망명은 과거에도 있던일

러시아

모스크바=안성규 특파원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북한주민의 망명사태에 대해 러시아 전문가들은 비교적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점점 더 불안정해져가고 붕괴로 이어질 조짐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의 조짐이라는 시각에 대해 비관적이다. 러시아 외무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러시아 외무부는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탈북자가 늘어난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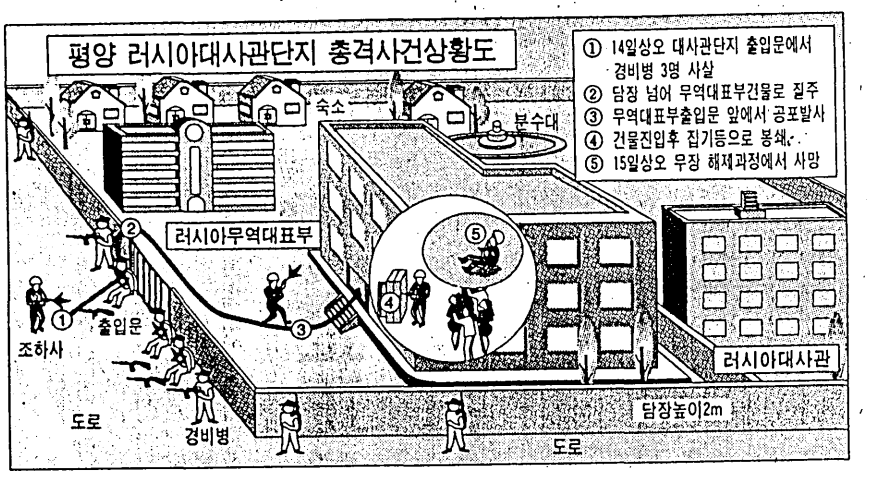
러시아 외무부는 몇몇 북한주민의 탈출·망명이 「일련의 사태」가 아닌 개별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는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서방의 움직임을 「호들갑」으로 보듯 북한붕괴의 조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극동문제연구소의 바딤 트카첸코 한국과 과장도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다. 탈주나 망명요청사태는 과거에도 있어왔다』고 했다. 그는 때문에 이런 일이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붕괴의 조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조기와해 없더라도 대책세울때"

北韓 심상찮다

―― 전문가들이 보는 실상



북한은 자멸하는가.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등 권력핵심층의 망명사태에 이은 사상초유의 평양시내 총격사건들은 붕괴를 앞당기는 청신호일까, 또는 한반도에 혼란을 알리는 경고등일까.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북한내 사건들은 북한의 48년 兵營(병영)체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총체적 정세와 관련,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일탈현상과 불안정요인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안보태세 강화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 전망까지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연이은 이 사건들이 개인적 동기에 의한 것이고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북한 외교관 玄성일씨등의 망명은 대사와의 갈등이 주요원인이고 외교관의 망명은 91년 자이르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었던 高永燦씨등 몇번의 전례가 있다. 成씨의 경우도 20여년간에 걸친 사실상의 유배생활에 대한 염증및 소외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평양 러시아대사관 총격사건은 일종의 「무장탈영병사건」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정부관계자들이 많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우리측에 비유하자면 金正日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급한 예단은 대북정책의 기조에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북한의 총체적 붕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李恒九前기무사 심문실장은 「정치와 무력이 결합한 북한의 당·군지배체제는 경제난등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급한 예단은 대북정책의 기조에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북한의 총체적 붕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金賢俊민족통일연구원장은 「현재 金正日체제는 북한 나름대로는 정통성을 갖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은 체제나 이념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두려움, 정권교체기의 관리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高太宇북한연구소 연구부장은 「북한체제가 우려하는 것은 체제위기보다는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불이익일 것」이라면서 「현재는 축적된 불만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관리능력을 상실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전환기에 접어든 만큼 우리측의 주도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89년 동독주민이 수백명 단위로 헝가리·오스트리아국경을 통해 탈출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공산체제의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탈출자의 수는 곧 20만명으로 불어났고 1년뒤 동독정권은 붕괴됐다.

특히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리측이 북한의 연착륙, 또는 강제추락 등 양대 노선중 택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成씨의 국내망명, 대북식량지원등 임박한 현안들은 모두 북한체제의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판단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제 우리는 북한을 도울 것인지, 버릴 것인지 한가지 길을 가야 할 것」이라면서 「우선은 金正日을 북한의 수장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국내적 합의과정 도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柳承宇기자】

"北체제 도울지 버릴지 선택의 시점"

최근사태는 개인불만·관리능력 부재 탓

망명·소요사태 집단화조짐 아직 안보여

"형사범죄자 亡命 못받아"

러外務部대변인 일문일답·平壤 현지통화

모든결정은 모스크바-北당국 事前협의

"射殺 아니냐" 질문엔 확실한 언급 회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일문일답〉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단 지내 무역대표부에 무장침입, 망명을 요구하던 북한군 조명길하사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카라신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표부에 침입한 북한인의 신원은.

「그는 25세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 특수경비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그의 신원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북한청년은 자살한 것인가, 사살된 것인가.

「그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모든 결정은 모스크바와 북한당국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졌다. 그는 명백한 범죄자였다」

-북한 특수부대가 대표부 구내에 들어간 것은 양국간 합의에 따른 것인가.

「러시아측은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대표부내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후 작전이 시작됐다」

-정확한 자살시점은.

「상오 10시30분께이다. 그를 인도받기 위해 북한측 특수부대원이 진입한 뒤 자살했다」

〈러시아 무역대표부 직원과의 통화내용〉

(이에 앞서 특파원은 조하사가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직원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인가.

「그렇다」

-대표부에 들어온 북한인 청년이 사살됐다는 보도가 있다. 확인해달라.

「우리는 오늘 상오 10시 30분 북한인 청년을 형사범죄자로 인정, 북한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 이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

-그는 어젯밤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가. 「모른다」

-현재 무역대표부 분위기는.

「모두들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 모든 게 정상적이다」

-위협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나.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왔었나.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더이상 말할 게 없다」

-당신 이름은. 「언론담당이다」

【모스크바 = 李進熙특파원】

北특공대 들어가자 "상황끝"

평양의 「銃聲」 현장 스케치

북한군 하사 조명길. 나이 25세.

14일 새벽 북한 경비병과 총격전을 벌여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입힌 러시아 대사관 관내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침입,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인물이다. 그는 15일 아침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협조 작전에 의해 사직 국영 이타르 타스 통신 이반 자하르첸코 평양주재 특파원 뿐이다. 과거에는 프라우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이즈베스티야 등의 일간지도 평양에 상주 특파원을 파견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

정확한 진상 알수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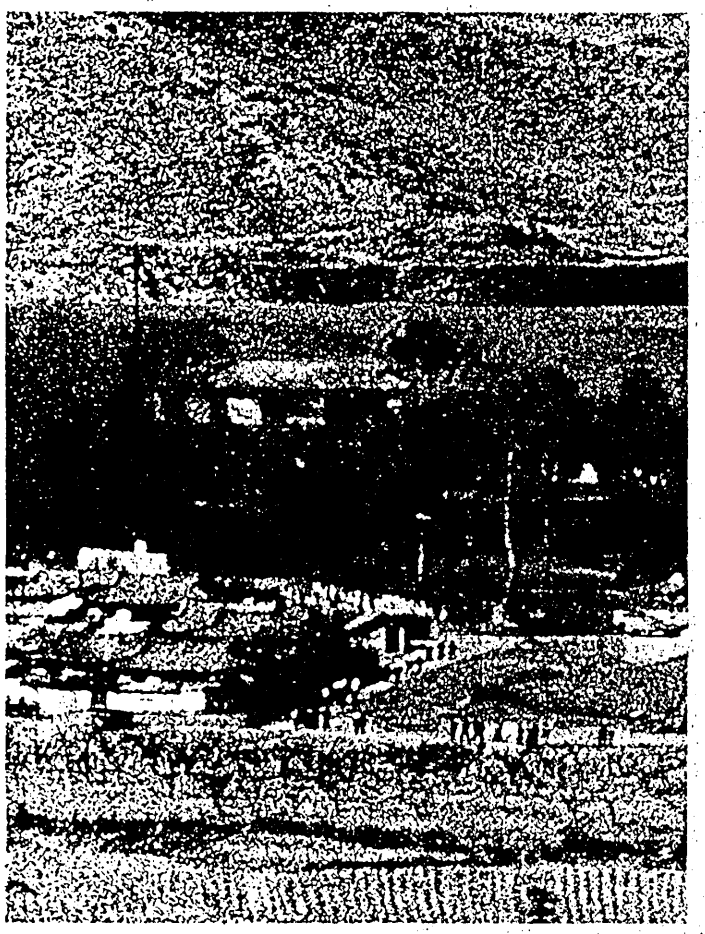
이타르 타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명길 하사는 국가보위부 소속 군인 이다.

아직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지점이 전세계에서 가장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북한에서 발생했기에 정확한 진상을 알 수는 없다.

현재 전체 러시아 언론이 의지하고 있는 일은 오로지 이타르 타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명길 하사가 북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 내 사건 발생일이 16일 金正

머리에 총탄 "한발"…끝내 아쉬운 비극

러 외무부 "北韓에 신병인도" 입장 번복



◇「金正日생일」맞이 北마을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형 망원렌즈로 촬영한 개성시 판문군 야곡리(일명 임한리) 마을의 일부모습. 사진 가운데 마을 공회당에 김정일의 54회생일을 하루 앞두고 대규모 군중들이 축하행사를 위해 운집한 것이 관측됐으며 왼쪽 윗부분에 보이는 붉은 깃발은 북한국기인 人共旗로, 『지난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 걸렸다』고 통일전망대 운영과 金學舞차장은 설명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坡州)=李起元기자>

망을 빠져 나가, 김정일과 북한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는 현 시점은 거사를 위한 좋은 호기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조하사의 단독거사인지 아니면 연계세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金생일직전 거사 주목

조하사의 사망을 가져온 직전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타르 타스 통신은 평양에 있는 한 러시아 민간인의 말을 인용, 『무장 탈주자가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이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및 무역대표부 직원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간의 긴밀한 협조로 성공적으로 종결됐다』고 말하고 『이번 작전이 아주 면밀하게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러시아 외무부는 초기 『9시 30분쯤 북한측에 인도했다』고만 밝히던 입장을 바꿔 조명길 하사가 사살됐음을 인정하고, 조명길 하사가 북한 경비병 3명을 죽인 살인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대표부직원들에 대한 위협때문에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의 대사관 구내 진입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모스크바=黃晟準기자】

「조下士」 보도 관련 北, 러특파원에 경고

【모스크바=黃】 북한 외교부는 16일 평양의 이타르-타스 통신 상주특파원을 불러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침입, 망명을 기도한 북한군 조명길 하사 사건 보도와 관련해 『북한을 음해하기 위한 선동과 조작을 일삼았다』고 경고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평양發로 보도했다.

이반 자하르체코 이타르타스통신 평양 특파원은 이날 북한 외교부의 관리가 『조하사가 살아있으며 러시아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바 없고 정신착란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하사는 自殺" 러 외무부 거듭밝혀

【모스크바=文明豪】 조명길하사가 살아 있다는 북한측 주장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측으로부터 그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조명길이 자살했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한 직원은 이러한 보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2. 17

러시아 외교「보수 회귀」인가

「北韓軍 망명」 거부한 러 외무부

조하사 하루도 안돼 전격인도
北韓과 관계정상화 의지 반영

15일 오전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들어와 정치 망명을 요구하던 조씨가 북한 정치법 수용소 경비병으로 인간 도살자 생활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15일 오후 2시(서울시각 오후 8시), 초조하게 기다리는 내외신 기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카라신 대변인은 『14일 오전 무장한 북한인이 경비병들을 뚫고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침입,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한 뒤 『그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기 전 무역대표부의 경비병들을 사살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그의 망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조씨가 북한 정치법 수용소 경비병들을 죽이고 인간 도살자 생활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 직원들조차도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진상을 모르는 듯했다.

『사살이냐, 자살이냐』를 비롯한 각종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 직원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오늘(15일) 오후 2시 외무부 정례 브리핑 시간에 그레고리 카라신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주무 부서인 한국과 직원들은 전화를 받기는 커녕, 핵방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단지 러시아 외무부가 이미 『조씨가 북한측에 인도하라는 지시한 뒤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 직원들조차도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진상을 모르는 듯했다.

『사살이냐, 자살이냐』를 비롯한 각종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 직원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오늘(15일) 오후 2시 외무부 정례 브리핑 시간에 그레고리 카라신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주무 부서인 한국과 직원들은 전화를 받기는 커녕, 핵방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단지 조씨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러시아 당국이 조씨의 망명신청을 단 하루도 되지 않아 거부하고, 북한측에 인도할 것을 결정한 것은 최근 러시아 외교가의 보수화 움직임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소련 해체 이후 보여준 한국 일변도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국문제 전문가는 『러시아는 더 이상 국제협정을 파기하는 등 무리를 하면서까지 러시아를 무시해온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黃晟準기자】

조하사 망명 러 한국대사관

국제법상 제3자일 수밖에 없었던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조명길씨 사건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한국 대사관이 조씨 사건 발생을 포착한 것은 이타르타스 통신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한 14일 오전. 그러나 한국 대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러시아 외무부에 문의해 보는 일밖에는 없었다. 국제관례상 제3자인 한국이 공식으로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단지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정보수집을 시도할 뿐이었다.

개입땐 「내정간섭」 비난우려

공식활동 없이 간접 정보수집
"본국서도 별다른 훈령 없었다"

조씨 신병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문제이며, 한국 대사관은 『국제법상 북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말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14일 파티 자리에서 한 직원이 한국-러시아-북한 3자를 위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길은 「북한 탈주자가 자살하는 것이라고 한 말대로 사건은 귀결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한국측이 취한 태도가 정말 정당한 것이었으냐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우연하게도 14일 오후 6시(서울시각 밤 12시)는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러시아 외무부 한국 관계자들을 초청한 상태였다.

다행히도 러시아 외무부의 주요 한국 관계자들은 대부분 한국 대사관쪽으로 왔다. 발렌틴 모이세에프 러시아 외무부 한국과장을 비롯한 러시아 한국관계자들은 비롯한 러시아 한국관계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될 일』이라며 조씨 사건으로 한국 대사관이 어떤 개입을 할 수 없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모스크바=黃晟準기자】

▽ 세계일보 1996. 2. 17

조명길씨 망명기도사건 여파

러, 北韓軍투입 허용… 외교사 오점
北에 공관둔 정부 유사사태 재발할까 신경
韓-러 핫라인개설… 상황추적불구 소득없어

북한 조명길씨 망명기도사건은 한반도의 비극적 드라마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여파는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14일 오전 9시께 평양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뛰어들었다가 15일 오전 11시에 사망하기까지 약 26시간동안 밀폐된 북한 사회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풍부하다.

○…조씨 사건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통신 사무실이 사건 현장인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같은 경내에 위치해 있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히 서방세계에 보도됨으나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사건의 전모가 베일에 가려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을 채널로 한 핫라인을 개설, 이번 사건의 전개 상황을 줄곧 추적했다는 것이 외무부측 주장이다.

러시아 정부는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의 본국 정부에 보고해 온 내용을 우리 정부측에 「친절하게」 설명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러시아 정부 역시 평양 주재 대사관의 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해 사건의 전개 상황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조씨의 정확한 망명동기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한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우리 정부측에 거의 제공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駐韓러시아대사관과 참사관급 이상의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에선 위성 안테나를 통해 러시아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교롭게도 송수신 시설에 잡혀가 생겨 TV시청 조차 불가능했다고.

○…러시아가 자국 공관에 북한 특수부대 요원의 투입을 허용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게 될 전망. 러시아는 조씨가 자살했든 사살했든 조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자국의 공관내에 외국의 경찰도 아닌 군인의 투입을 허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외교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는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군 투입을 허용한 전례가 남아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러시아는 처음부터 조씨 사건을 조기 수습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그러나 조씨가 러시아무역대표부에 있는 동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던 만큼 최소한 조씨를 정상적으로 북한측에 인계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온당한 처사였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남북한 및 북한에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각국 정부 등은 북한에서 조씨 사건과 같은 유사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라 분주하다는 것이 외무부측 전언. 북한 주민이 舊소련 붕괴후 러시아대사관에 망명을 하겠다며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舊소련 시절에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여러차례 발생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북한에는 대사관 23개, 총영사관 2개, 대표부 2개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모두 28개 외국 공관이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조만간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개설될 경우 서방세계로 망명을 꾀하는 북한 주민들이 쇄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벌써부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고 전언. (鞠炅然기자)

▽ 경향신문 1996. 2. 18

北 조하사 生存주장 속셈은?

「사살→자살→생존說」 의혹

「體制불안」비칠까 우려

귀순자들 "정신병처리는 상투적 수법"

북한은 러시아로 망명을 시도하다 무장해제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하사 조명길이 살아 있다고 주장, 그의 생존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북측은 16일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조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러시아 무역대표부로 도망했으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현지 특파원을 통해 망명기도 사건을 처음으로 전했던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도 조씨의 생존설을 북한 외교부 한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처음에는 사살로, 나중에는 자살로 사망원인이 뒤바뀌는 등 발단부터 종결까지 의혹 투성이었던 이 사건은 급기야 북측이 사건종결 하루만에 생존설까지 제기하자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건 진행 과정이 비일비재하여 있어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지만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면 북측의 생존주장은 매우 의외로 러시아의 이 타르타스 통신도 조씨의 자살했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이타르타스 통신도 처음 사살로 보도했다가 뒤에 자살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가 머리에 총 한방을 맞고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외무부는 망명기도 사건이 종결된 직후 15일 오전 10시 15분쯤 『조하사는 무장해제 과정에서 이어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 등도 조씨의 자살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북한은 이러한 러시아의 의혹 투성이 사건을 단순한 자살로 몰아가 북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대북관계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그 과정에서 죽지 않고 극적으로 목숨이 붙어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이 생존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측이 급한김에 북·러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살로 몰았다가 뒤늦게 생존설을 내세우는 것은 그를 사망으로 처리했을 경우보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정신병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돌려 대외적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비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속셈이라는 것도 그같은 실례를 짐작할 수 있다。〈李大根기자〉

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대북관계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한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측이 급한김에 북·러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한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 등도 조씨의 자살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북한은 이러한 러시아의 의혹 투성이 사건을 단순한 자살로 몰아가 북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대북관계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한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측이 급한김에 북·러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한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 등도 조씨의 자살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북한은 이러한 러시아의 의혹 투성이 사건을 단순한 자살로 몰아가 북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대북관계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한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 등도 조씨의 자살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북한은 이러한 러시아의 의혹 투성이 사건을 단순한 자살로 몰아가 북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대북관계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

▽ 조선일보 1996. 2. 17

北 "조명길 생존… 병원치료중"

"정신병자일뿐… 망명요구는 말도안돼"

정부 "사실이라면 공안요원 될수있나"

북한은 16일 조명길하사가 생존해 있으며 현재 병원서 치료중이라고 주장했다。북한관영 중앙통신은 『러시아대사관에 뛰어든 자는 전에 중한 정신병자로 살인 범죄행위를 감행한 자』라며 『이런 자가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초보적인 의학상식도 모르는 어리석고 가소로운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조하사가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주장했다。중앙통신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일부 나라 보도계가 졸렬한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에 이어 이타르타스 통신도 평양발로 조하사가 살아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북한외교부의 한 관리가 이반 자하르체코 평양주재 이타르 타스 통신 특파원을 불러 조하사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조하사와 직접 면담했던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파벨 야코블레프 참사관은 조하사의 생존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보도됐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정부당국에선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주장대로 조하사가 정신병자라면 어떻게 고도로 훈련된 북한 경비병을 사살한뒤 망명을 요구 할 수 있었겠는가는 것이다。또 성분을 중시하는 북한에서 정신병자인 그가 핵심계층인 공안당국 요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다。관계자들은 조하사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이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조하사의 사인을 북한과의 외교관계상 부담이 덜한 「자살」쪽으로 결론지었다는 추측과 맥을 같이한다。

【金炳讚기자】

▽ 조선일보 1996. 2. 18

北「조하사 사건」축소 안간힘

대표부 軍투입-국위손상등 부담

"정신병자" "러시아 날조극"주장

북한이 지난 14일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서 발생한 조명길하사(26)의 망명요구 사건을 축소하기위해 안간힘이다。

북한은 이 사건이 종료된지 하루만인 16일 대외선전매체인 중앙통신을 통해 조 하사가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통신은 『러시아 대사관에 뛰어든 자는 과거 중한 정신병자로, 살인범죄행위를 감행했다며 『이자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주장했다。또 「무장난입」「망명요구」등에 대해서는 『일부나라 보도계가 이타르 타스 통신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라면서 퍼뜨린 비열한 反공화국 책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이 조하사 사건을 「러시아의 날조」라고 주장하다가 하루만에 사건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외국 언론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등 사건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북한 주민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사회주의 조국을 버리고 망명-탈출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북한이 귀순자에 대해 『인간쓰레기』『상식 이하의 사람』등으로 인신공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북한측이 그를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국대사관에 군대를 투입한 데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이 조 하사의 생존사실을 밝히는 것도 그가 정신병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 중앙통신의 보도로 인해 그동안 조명길의 망명요구와 사망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러시아측과 북한간에 이번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金仁杭기자〉

Ⅶ. 남북관련 동향

1. 남북 경협

▽ 중앙일보 1996. 2. 1

北, 한국主導 공동차관 희망

美-中-日-러 참여 100~150억弗

亞太硏소장, 나진-선봉市와 합의

김광수 기자

북한당국은 나진-선봉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국 주도아래 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 주변 4개국이 참여하는 1백억~1백50억달러 규모의 공동 장기저리 경협차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찬영(方燦榮)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장(전 카자흐스탄 대통령 경제 특별보좌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한국무역협회가 무역회관에서 주최한 제1회 남북경협민간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方소장은 이와관련, 자신과 북한의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백화룡위원장간 체결된 기본합의서 내용도 공개했다.

5개국 공동 대북차관의 조건은 런던은행간금리(LIBO)등 저리의 국제금리에 상환기간은 일정기간 거치후 15~20년정도다.

方소장은 『이 합의서는 작년 8월 작성됐으며 지난 15일 북측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문성 사무총장과의 베이징(北京)회담에서 재차 확인됐다』며 『이같은 내용은 북측의 최고위 당국자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찬영 소장

북한은 나진-선봉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위한 최소 45억달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方소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지역에 차관을 공여하는 문제에 대해 북측이 수락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이는 이 지역 개방에 한국정부의 암묵적인 이해나 기업들의 도움없이는 곤란하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절감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方소장은 또 『북한과의 관광투자에 관한 기본합의도 이루어졌다』며 『한국배가 속초·부산등지에서 1주일에 2~3회 나진-선봉에 운항하는 문제와 나진-선봉지역에 선상호텔을 건설하는 방안도 북측과의 협의 아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方소장은 나진-선봉 투자희망 한국기업 17개업체를 선정해 현재 통일원측에 방북허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南北당국간 대화가 먼저 통일원, 訪北신청 없었다

통일원은 『方교수가 거론한 17개 기업은 아직 통일원에 방북신청을 낸 바 없다』며 『국제 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대북투자는 남북당국간 대화가 있은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 기업의 대북투자 불허 방침을 시사했다.

▽ 조선일보 1996. 2. 3

세계경제포럼 96총회 개막

北, 「나진-선봉」설명회 취소

【다보스(스위스)=金濟一】세계의 주요 정치지도자들과 경제계 학계등의 저명인사 1천5백여명이 모인 세계경제포럼(WEF) 96년 연차총회가 2일 스위스 다보스 콩그리스센터에서 개막됐다。

「지속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을 주제로 한 이번 다보스총회에는 북한의 李성이 참석,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치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은 이날 설명회를 돌연 취소했다。

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위 부위원장은 취소이유를 묻는 한국기자들에게 『계획은 바뀔수도 있는 것이냐』며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측은 또 3일 오후(현지시간) 가질 예정이던 북한경제설명회도 취소했다。 한국측 대표단 단장인 崔鍾賢(최종현)전경련회장은 총회에 앞서 일본 經團連 도요타 쇼이치로 회장과 만나 『아시아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일본이 보다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기간중 오는 5일에는 金錫俊(김석준)쌍용그룹회장과 李在賢(이재현)제일제당상무가 WEF가 선정하는 「차세대 기업인상」을 받을 예정이다。

▽ 한겨레신문 1996. 2. 1

나진·선봉 투자전문사 북, 베이징에 첫 설립

외자유치 상담-사증발급 총괄…홍콩사와 합영

【베이징=이길우 특파원】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 자본의 활발한 유치를 위해 투자 상담에서 사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창구를 단일화한 투자전문 합영회사를 최근 베이징에 처음으로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진·선봉 투자자문 유한책임회사'로 이름된 이 합영회사는 김종운 북한 대외경제추진위원회 서기장 등 모두 6명의 국장급 북한 고위관리가 파견돼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투자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합영한 홍콩위택 국제유한공사 사장 이규성씨는 31일 이런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상담은 모두 베이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이 회사가 지난 94년 해체된 고려민족산업발전경제협회 이후 북한이 직접 관여하는 유일한 대외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사가 연길시에 '선양국제무역유한공사'라는 자회사를 세워 북한에 대한 입·출국 업무를 전담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7월 나진·선봉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한국 기업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나진·선봉 지역을 통과하는 북한 관광 업무도 이 회사가 담당하고, 이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광고를 위해 관련 광고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 합영회사의 설립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지난 12일 김 서기장을 비롯한 2명의 국장급 관리가 베이징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다.

▽ 조선일보 1996. 2. 5

통일원, 對北투자기업 설문조사

"나진-선봉 성공가능성 적다" 65%

53%가 남북에 투자희망… 노동력이 큰 매력

對北경협사업에 나선 우리 기업들 가운데 65.7%가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유망투자지역으로 평양 남포지역을 든 기업체(53.1%)가 나진-선봉지역 선호업체(27.4%)의 두배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서방기업의 대북투자를 대부분 나진-선봉에 집중유치하려는 북한당국과 한국 일본등의 민간기업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통일원 교류협력국이 북한에서의 임가공사업 對北투자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99개 기업체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북한이 추진중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설문에 「북한의 경제개방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뤄질때까지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8.4%, 「성공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27.3%였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는 성공하기 어렵다」가 27.3%였다. 「정치적 불안」(52.5%)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자본 유치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들었다.

응답업체들은 북한의 다음으로는 「낮은 대외신용도」(18.2%), 「사회간접자본 미비」(16.1%), 「투자관련 법 제도 미비」(6.1%)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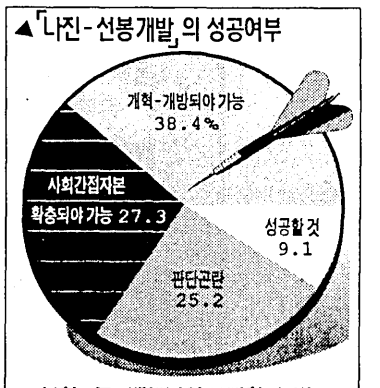
북한이 중국 베트남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으로는 「양질의 노동력」(48.4%), 「언어소통문제해소」(33.3%), 「지리적 근접성」(11.8%)順이었다.

대북투자 형태로는 경영권이 보장되는 「합영방식」(45.4%)과 「외국인기업방식」(28.9%)이 선호됐고, 다음으로는 임가공방식(20.5%)과 합작방식(4.1%)이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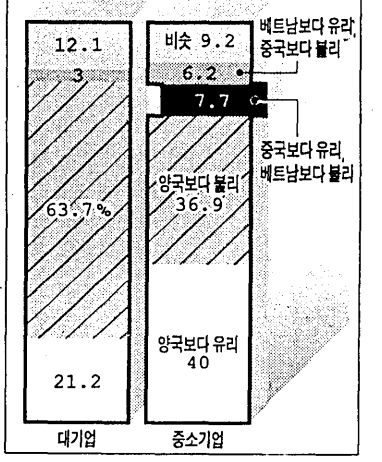
응답기업들이 고려하고 있는 초기투자규모는 「1백만달러 이하」 42.4%, 「1백만~3백만달러」 18.2%, 「3백만~5백만달러」 18.2%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초기단계에는 소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濟光기자>

▲「나진-선봉개발」의 성공여부



▲ 북한-중-베트남의 투자환경 비교



▽ 한국일보 1996. 2. 5

LG, 北서 컬러TV 만든다

정부, 설비반출승인 年2만대생산 국내 시판

LG전자가 남한기업으로는 처음 북한에서 컬러TV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4일 『정부는 최근 LG전자의 TV테스터기등 TV생산설비(35만달러 상당)의 對北반출을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LG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컬러 TV생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서의 컬러TV 생산은 연간 3억달러에 육박한 남북교역의 질적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 경제협력사절단은 지난해 초 북한을 방문, 평양근처에 있는 기존 공장의 설비를 이용해 컬러 TV를 조립생산키로 합의한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시험생산한 20대의 컬러 TV를 반입해 성능을 시험, 국내판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연간 2만여대의 컬러 TV를 만들 계획이며 성과가 좋을 경우 생산량을 늘려갈 것』이라며 『북한에서 생산하는 컬러TV는 「골드스타」라는 상표명으로 모두 국내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2. 8

北, 해외주재 경제인 대폭 물갈이

金正日 통상강화 지시등 정책기조 변화 주목

"해외주재원 동요 예방차원 정비조치" 시각도

북한이 올들어 그동안 해외에서 활약하던 경제인을 대폭 교체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京(베이징)의 한 북한소식통은 『지금까지 실적도 없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잡음을 일으킨 해외주재 경제인들을 모두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北京에서도 최근 무역회사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외화벌이에 장기간 종사하던 낯익은 북한의 인사들 상당수가 귀국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 이 소식통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같은 경제관련 해외주재원의 물갈이를 두고 북한이 동요하는 해외주재원을 예방차원에서 사전 귀국시킨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 소식통들은 북한이 통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진용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외교 진용의 재정비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근거로 金正日의 지시를 든다. 金正日은 연초에 경제인들에게 북한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나라 어느 기업과도 접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최근 北京에 들른 한 고위 북한경제인도 『金正日비서로부터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제회의등에 참석하는등 대외경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소개, 이같은 金正日 지시설을 뒷받침했다.

북한은 현재 金正日의 친여동생인 김경희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 관장하에 대외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올해들어 북한의 경제외교는 눈에 띌 정도로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외경제위원회 金문성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팀이 하와이 동북아경제포럼에 참가했고 1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회의에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李成大위원장과 林太德 副위원장등 4명이 참가했다. 또 비록 취소되기는 했지만 5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경제세미나에 북한 외교부 관리와 경제관료가 참석하려고 하였다.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도 상층부는 이미 개혁,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군부와 중간층에서 반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해외주재원의 물갈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

▽ 세계일보 1996. 2. 11

北, ADB가입 타진

【도쿄=연합】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회의에 참석중인 북한 대표단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日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ADB 가입을 타진한 것은 지난 94년에 이어 두번째로 심각한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대표단의 金應烈대외경제협력委부위원장은 ADB 관계자와 접촉해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정식 가입을 위해선는 거시경제정보 등을 공개해야 하고 다른 회원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까지는 많은 관문이 있을 것이라고 얼른은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2. 12

재계, 교착 남북經協 돌파구찾기

「유럽기업」과 연계모색 활발

평양진출 獨동아시아協·ING그룹등 물밑교섭

송금·협상중개 유리… 각종 전시회등 참가채비

「유럽기업을 잡아라」. 우성호송환을 계기로 무르익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재계는 최근 유럽기업과 연계한 대북경협을 모색하고 있다. 물밑 움직임을 통해 평양지사설립으로 약진하고 있는 유럽기업을 징검다리로 경협을 이끌어 가기위해서다.

현재 남북경협은 어려운 국면이다. 당국간 대화이전에는 구체적 결실을 끌어내기 어렵고 북한도 대외정책에서 남한기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위 金日成의 유훈사업으로 알려진 대우 남포시범사업도 합영계약서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승인을 받은 나머지 7개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남북경협이 발이 묶인 사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기업들. 미국과 일본도 관계 정상화를 고리로 對北투자를 상당히 진척시켜 왔지만 유럽기업들은 실속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 독일의 아시아개척에서 전위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협회는 지난해 11월5일 평양사무소를 개설했고 ING은행은 12월 5일 서방은행으로는 최초로 북한에서 공식영업활동에 들어갔다. 유럽 8위의 은행이며 5위의 보험회사인 ING그룹은 이미 하노이와 아바나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등에 지점을 개설, 모험적인 신장진입으로 정평이 나있다. 동아시아협회는 독일과 동아시아 24개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연방상의와 경제성주관으로 AEG 지멘스 바이엘 헥스트 베를린은행등 17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단체. 평양지사개설이후 공동사절단 방문등 굵직한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베를린은행 다임러 벤츠등은 독자적 지사개설등 각개약진도 시도하고 있다.

재계는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유럽의 통로」를 주목하고 있다. ING그룹은 얀 보스마 서울지점장이 지난 연말 방북, 국내기업은 물론 서방기업들의 송금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었고 동아시아협회는 자체 지사는 없어도 AEG 지멘스 헥스트 바이엘등 회원사들이 서울에 지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기업을 매개로 한 남북경협가능성은 가시화하고 있다. 동아시아협회가 평양사무소의 첫사업으로 추진중인 국제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전시회에 국내업체들이 참가를 준비중인 것이다. 재계에서는 동아시아협회의 회원사의 서울지사를 통해 4월23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따로 독일의 대규모 전시회사인 뮌헤너 메세社가 개최할 10월의 투자 및 설비재전시회도 재계의 관심거리다.

재계 관계자는 『서울과 평양 양측의 상설지사를 가진 유럽기업을 이용할 경우 송금방법의 해결, 북한측과의 협상중개등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자체의 불안정성과 정치적요인으로 급변하는 정책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李在烈기자]

▽ 세계일보 1996. 2. 25

작년 南北교역 3억弗 돌파

통일원 보고서 위탁가공분야 94년보다 60%증가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후 7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규모가 3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남한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이 됐다.

통일원이 24일 발표한 「95년도 남북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승인기준으로 3억1천만달러, 통관기준 2억8천7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한에 지원한 15만t의 쌀까지 포함하면 5억3천만달러(통관기준)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은 94년도보다 60% 증가했으며 반입과 반출의 비율이 3:2대 1로 94년의 8대 1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교역품목은 2백6개였으며 2백13개 기업이 남북교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 한달 남북교역실적은 승인기준으로 반입이 1천2백만달러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했으나 반출은 4백만달러로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趙敏皓기자〉

▽ 문화일보 1996. 2. 16

北韓경제 최악국면

水害 식량難… 5년연속 마이너스成長

羅津투자회의도 9월로 연기

成蕙琳씨 망명등 북한에서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개발기구(UNIDO)와 오는 5월에 공동 개최하기로 한 나진 국제투자회의를 6월로 미룬데 이어 갑자기 9월로 또 다시 연기했다.

또한 북한은 이달초 태국에 63만t 규모의 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상무역형태로 주기로 한 열연강판 등을 태국측에 갚지 못해 쌀 관련 추가교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책제철소의 철강생산등 북한산업의 근간을 이뤄온 철강, 시멘트등 중화학산업이 구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90년 이후 5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도 무역거래가 6% 가량 줄어드는등 경제 여건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태국에 지난 2년간의 쌀대금 1천3백만달러를 열연강판, 시멘트, 비료등으로 갚기로 했으나 최근 태국측에 수재 발생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또 李成大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위원장이 이달초 스위스 다보스회의에서 태국 林日光부총리와 만나 태국에 63만t 규모의 쌀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林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은 당초 북한에 30만t 규모의 쌀을 제공하려 했으나 북한이 외채를 갚지 못해 현재 16만2천t만이 공급된 상태이다.

북한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철강, 시멘트산업이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5년 이상 계속된 북한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원료와 자재수입격감—공장가동률 저하—생산과 수출 부진—외화부족—투자재원과 원자재 수입격감등 경제의 축소재생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과 9일사이 일본 니가타市에서 개최된 96년 니가타 동북아경제회의에서 북한대표단은 유엔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던 나진 국제투자회의를 9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북한 관계 전문가는 『다보스 나진투자설명회, LA나진선봉투자설명회, 북한의료기기전시회등에 이어 한국기업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었던 나진 투자설명회마저 연기한 것은 북한 내부에 모종의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고 밝혔다.

〈芮珍洙기자〉

▽ 한국일보 1996. 3. 5

北韓産 농수산물 반입완화

닭등 30개품목 자유화

오늘부터 로열젤리등 5개는 규제대상 추가

북한산 닭, 냉동낙지 등 농수산물 30개 품목의 국내반입이 5일부터 자유로워진다. 대신 냉동오리고기 등 5개 품목은 통일원의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승인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통일원은 4일 북한산 농수산물 중 종전의 제한승인품목 30개를 자동승인품목으로 바꾸고 자동승인품목 5개를 제한승인품목으로 조정하는것을 골자로한 개정「남북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를 5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한 승인품목은 종전의 2백25개에서 2백개로 줄었다. 반입이 자유로워진 품목은 종돈 닭 잡종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곶감나무 뽕나무 양송이 버섯 조제양송이 참깨유박 사료용식물성부산물 요소 냉동돔 냉동낙지 골뱅이 어분 등이다.

새 제한승인품목은 냉동오리고기(절단, 미절단 모두) 로열젤리 냉동명태필레트 냉동명태 등이다.

통일원측은「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한승인품목을 줄였다」며「그러나 로열젤리나 냉동오리고기 등은 무차별 국내 반입시 국내 농어민이나 양봉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새로 규제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金炳讚기자】

▽ 조선일보 1996. 2. 28

北 무역적자 악화

작년 8억8천만弗… 日本이 최대 교역國

북한의 지난해 무역규모는 20억6천만달러로, 94년의 21억1천만달러보다 3.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원이 26일 발표한 「96년 북한 무역실적 잠정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5억9천만달러, 수입은 14억7천만달러를 기록해 전체 교역규모가 지난 88년이래 7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다. 무역수지적자도 8억8천만달러로 94년보다 4천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과의 무역이 94년 4억9천만달러보다 20%정도 증가한 5억9천만달러를 기록,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했다. 94년까지 북한의 최대교역 상대였던 중국과의 무역은 5억5천만달러에 그쳤다.

통일원의 李浩 북한경제분석관은 『북한이 지난해 「무역제일주의」를 앞세워 대외무역 확대에 주력했지만 94년의 성과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외화와 에너지난, 생산침체의 지속 등으로 대내외 무역여건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金濱光기자〉

◇북한의 무역규모

(단위/억달러)

구분	전체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기타
95년	20.6	5.9	5.5	2.9	0.6	5.7
94년	21.1	4.9	6.3	1.9	1.4	6.6

▽ 서울신문 1996. 3. 3

대우 기술진 再入北

7명 北京거쳐… 1년간 체류

기술지도등을 위해 북한에 머물다 지난해말 귀환한 (주)대우 기술진이 귀환 2개월여만에 재입북했다.

2일 대우 및 당국에 따르면 이번 기술진은 모두 7명이며 1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대우 기술진은 1년간 북한 체류와 수시왕래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편 대우측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 합영사업 계약체결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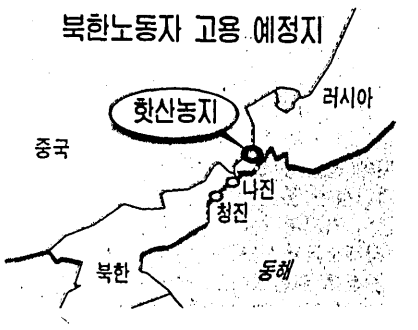
〈具本永기자〉

▽ 중앙일보 1996. 3. 2

韓·러 합작社 北노동자 첫 고용

쌀 경작 北서 300명 5월에 파견의사

국제농업개발원 "월급은 230弗상당 쌀 지급"



최원기 기자

러시아에 진출한 한·러 합작기업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북한 노동자 3백명을 고용, 6천만평 규모의 농지에서 쌀농사를 짓게 된다. 북한 노동자가 한국이 참여한 기업에 고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李秉華·51)원장은 1일 『북한의 대외인력 송출을 담당하는 「여광무역연합총회사」가 최근 북한 노동자 3백명 제공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여광무역연합총회사(회장 김덕홍)는 평양 보통강 구역에 본사를 두고있는 무역회사로 최근 제3국을 통해 인력송출 제공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원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연해주 핫산에서 2만ha(6천만평·여의도 면적의 67배)규모의 농지를 개발중인 포세트사(대표 발렌틴 朴·46)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두세 곳의 한국 합작기업에 고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조건과 관련, 李원장은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월 2백30달러(18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급여를 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996. 3. 6

선명회, 北에 국수공장 완공

청진市에 月60톤규모… 이달중 어린이대상 배급시작

한국선명회(회장 李潤求)는 5일 국제선명회를 통해 북한 함북 청진시에 월 생산량 60톤 규모의 국수공장을 최근 완공, 이달 중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및 인민학교 어린이들에게 국수배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선명회에 따르면 국제선명회의 청진 국수공장은 어린이 3만2천명에게 1주일에 두번씩 국수 식사(어린이 정량 1백50g)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이며 공장의 추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선명회의 한 관계자는 「국제선명회가 한국선명회의 요청과 자금지원에 따라 지난해 9월 함북행정경제위원회와 국수공장 건설에 합의했다」면서 「올해초 중국에서 국수생산기계 4대를 들여왔으며 원료인 밀가루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선명회가 급식감독 인력파견과 공장의 추가 건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金炳讚기자】

▽ 조선일보 1996. 3. 13

北, 나진·선봉 투자유치 축소

4억弗로…外資도입 실패 인정

북한이 나진-선봉개발계획의 투자유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등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개발계획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출한 「투자유치 계획서」에서 이 지역의 공업부문 투자유치 목표를 58개분야, 4억3천7백만달러로 수정했다.

북한의 새로운 투자유치 목표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93년12월 발표한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기본계획」에서 밝힌 「68개 분야, 36억6천만달러」에 비해 규모면에서 약 12% 수준이다.

이같은 계획축소는 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이후 추진해온 북한의 외자유치 사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유치한 해외투자액은 현재까지 2천만달러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金潤光기자〉

▽ 한국일보 1996. 3. 6

외국의 투자외면에 "궤도수정"

나진-선봉 투자유치 축소 배경

36억弗 목표에 2천만弗 불과

인근 中-러항만과 경쟁도 작용

북한이 불과 4년여만에 나진 선봉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유치 부진이다. 『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가 선포(91년12월)된 후 1백20건의 사업계약을 체결했고, 3억1천2백만달러가 나진 선봉지역에 투자됐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2천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6억달러였던 공업부문 투자유치 목표액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까지 나진 선봉을 무역 수출 관광 금융 등 세계경제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북한의 꿈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때문에 북한은 대규모 투자유치보다는 임가공업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쪽으로 개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실 적응」노력은 유엔공업개발기구에 제시한 유치희망 축소 조정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북한이 개발계획을 현실화한 데는 두만강개발(TRADP)의 중심지인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나홋카 자루비노와의 경쟁에서 북한이 낙오하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진-선봉지역은 양질의 항구가 유일한 강점인 반면 중국의 훈춘은 해상통로가 없고, 러시아의 자루비노는 함만시설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들어 자루비노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훈춘과 러시아의 크라스노스키港을 잇는 철도가 개통된다. 중국 동북 3성에서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수송 루트는 러시아가, 외국자본은 산업인지가 좋은 훈춘이 차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북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북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기업인은 『북한이 새로 제시한 4억3천만달러의 공업부문 외자유치 목표는 우리 대기업의 단일 해외투자 프로젝트에도 못미치는 규모라며 『북한이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외면한채 굳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金潤光기자〉

10%선으로 축소됐고, 개발의 중점이 대규모 수출기지 건설에서 중계수송 관광사업 활성화쪽으로 옮겨졌다.

북한의 金應烈 대외경제협력 추진위 부위원장은 지난 93년 1억5천만달러로 책정했던 컬러TV 조립공장의 투자요구액을 1천5백만달러로, 4천8백만달러였던 반도체 조립공장의 투자액을 1천만달러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 서울신문 1996. 3. 8

北, 平壤~마카오 항공노선 추진

양국대표단 금명 항공협정 체결 협상

【마카오UPI연합】 북한은 마카오와 평양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마카오 항공관계자들이 6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대표단이 최근 마카오를 방문, 마카오 외곽 타이파섬에 11억달러를 들여 건설된 새 마카오국제공항을 둘러보는 한편 민항관계자들과 만나 평양과 마카오간 항공노선 개설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마카오 민항관리공단의 루이 다니엘씨는 여객기 정기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마카오와 북한 정부간 항공협정 체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고려항공은 당초 화물전세기만 운항할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대표단이 곧 다시 마카오를 방문해 항공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3. 12

北, 경공업모델공단 지정

나진·선봉특구내 신흥·후창2곳에

최원기 기자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백20만평 규모의 후창공단과 신흥공단등 두 곳을「경공업 모델공단」으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초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열린 나진·선봉특구 투자개발 설명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 재계(財界)소식통은 11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김웅렬 부위원장이 경제특구내에 신흥·후창등 2개 공단을 모델공단으로 지정,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외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정무원(내각)산하 기구로 나진·선봉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 소식통은 또 『金부위원장은 중계수송업과 관광업 우선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1996. 3. 16

□ 대우 남포공단 가동 의미

위탁가공서 합작투자로 남북경협 한 차원 높여

이봉현 기자

남북 최초의 합영사업인 북한 남포공단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쌀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잔뜩 얼어붙은 속에서도 경협의 발걸음은 계속 나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한과 협력사업을 모색해 온 기업들은 4월 총선이 끝나고 양쪽의 분위기가 정돈되면 남북경협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의 남포공단 가동은 북한쪽으로 보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성사됐다는 의미가 있는데다, 남한으로서는 북한이 개방을 꺼려온 심장부에 가까운 곳에 국내기업이 진출했다는 점 등 남북 경협의 새장을 여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등을 결합해 합영사업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반세기 분단사상 남과 북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한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북한은 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조총련이나 해외자본이 아닌 남한의 자본을 합영상대로 맞이했다.

남포공단사업은 또 지금까지 위탁가공에 머물던 남북경협을 한 차원 끌어 올려 투자수준으로 높였다. 이를 위해 5백12만달러어치의 남한 시설재가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남한 기술자가 평양과 남포를 오가며 북한 근로자를 가르치면서 공장운영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아울러 대우와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협력사업 1호인 남포공단사업을 추진한 과정은 앞으로 비슷한 남북 협력사업을 헤나가는데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2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북한과 남포공단 사업에 합의한 뒤 북한은 곧바로 공장 건설에 들어갔으며, 대우는 지난해 통일원이 협력사업을 승인하자 곧바로 해외에서 시설재를 남포공단으로 보냈다. 또 북한과 합영계약 협의중 기술자를 북한에 보내 근로자 교육에 들어감으로써 합영계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본격적인 생산을 할수 있게 됐다.

양쪽 투자주체인 대우와 삼천리총회사는 합영계약에서 합영회사의 대표이사는 남북이 한명씩 공동으로 맡되, 사장은 북쪽이 부사장은 남쪽이 맡기로 했다. 또 평양에 양쪽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합영회사 본사를 두기로 했다. 대우는 현재 (주)대우의 상무급 임원을 대표이사로 내정했으며, 평양 본사에 근무할 사무직 요원도 이미 정해놓고 있다.

대우는 4월중에 김우중 회장이나 회장급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영계약 서명식을 열고 합영회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 동아일보 1996. 3. 15

北남포 봉제공장 가동

金宇中회장밝혀 TV등 가전工場 추가건설

남북경협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포공단이 지난해 시설투자를 마치고 본격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金宇中대우그룹회장은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포공단은 작년에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 5개품목을 모두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남포공단의 봉제공장이 점산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TV 등 가전제품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회장은 또 현재 7명의 직원들이 남포공단과 평양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 첫 평양사무소 개설을 시사했다.

▽ 중앙일보 1996. 3. 14

두만강사업 본격 추진 개발협의委 내달 발족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고등 5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두만강지역개발협의위원회(TRADP Commission)가 다음달 중순께 구성돼 두만강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통일원 한 당국자는 13일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열린 두만강지역개발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5개국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두만강지역개발협의위원회가 발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3. 17

정부대표단 22일 訪北

나진-선봉지구 기반시설 확충논의

92년 고위회담후 처음

지난 92년2월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4년여만에 처음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이끄는 정부대표단이 다음주 북한의 나진-선봉지구를 방문한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金光琳대외경제국심의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22일 나진-선봉지역을 방문, 7일동안 머물면서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으로 열리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무부, 통일원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대표단은 나진-선봉지역의 도로 항만 통신 교통 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鄭瑞鎭기자〉

▽ 서울신문 1996. 3. 14

南北교역 총액 작년 10억달러 돌파

7년만에 반입 초과로 연평균 1억弗 적자

남북교류협력법 발효에 따라 지난 89년 남북교역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만에 남북교역 총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원이 13일 발표한 「남북한 교류협력 종합평가」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승인총액 11억9천만달러, 통관총액 9억9천만달러로 승인 총액면에서 이미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역수지면에서는 반입초과 현상이 지속돼 7년간 반입초과액이 7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연평균 1억달러 이상씩 수지적자를 본 셈이다.

그동안 남북교역이 이뤄진 품목은 모두 3백71개로 이중 반입이 2백13개, 반출이 1백5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입품목에서는 금괴·아연괴 등 철강금속이 총액의 65.8%를 차지했고 농림수산물 12.1%, 섬유류 7.2%, 광산물 6.9% 순으로 나타나 1차 생산품이 대부분이었고 반출품목은 섬유류 50.4%, 화학제품 24.1%, 기계전자 4.3% 등이어서 대조적인 구조를 보였다.

〈具本永기자〉

▽ 한국일보 1996. 3. 24

남포항 결빙 南北교역 큰지장

북한의 남포항이 1~2월 한파로 얼어붙어 선박의 입출항이 중단되는 바람에 남북한 교역이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남북간을 운항하는 해운업체들은 평소 인천-남포를 월 3~4회 운항해왔으나 1~2월에는 남포항 갑문안팎에 적게는 5㎝에서 최고 수십㎝ 두께로 얼음이 얼어 입항했던 선박이 꼼짝 못하고 갇히는등 북한으로의 화물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선해운은 작년에 월평균 3~4차례에 달했던 인천-남포항의 선박운항횟수가 1월에는 전무했으며 2월에는 작년에 올라갔던 배 2척이 내려오는데 그쳤다. 이 회사 관계자는 1~2월에 남북간 선박운항을 못하게 돼 화물수송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배를 韓中간이나 다른 항로로 돌려놓아 이달말이나 다음달 남북교역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 1996. 4. 2

두만강개발 통신-인프라사업

北, 한국제외 움직임

북한이 두만강개발사업(TRADP)의 통신등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선봉에서 열린 TRADP산하 통신 및 관련인프라부문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재정경제원 金光琳(김광림) 대외경제심의관은 1일 『북한이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슬라비얀카를 잇는 통신망 건설을 위해 한국과 몽골을 제외한 3개국만의 별도 작업반 구성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金심의관은 『북한은 오는 18~19일 북경에서 관련 5개국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TRADP 5개국 위원회에서 북한-중-러 3개국만의 작업반 구성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할 계획』이라며 『이는 접경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과 몽골을 사업 주체국에서 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姜京希기자>

▽ 세계일보 1996. 3. 24

北최대 「김책제철소」 가동중단

통일원 발표 시설낡고 전력부족…경제난 심화

2월남북교역 1월보다 30%줄어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가동이 완전 중단돼 북한경제가 위기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23일 통일원이 발표한 2월중 남북교역동향에서 밝혀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김책제철소는 작년까지 3개의 爐(노)가운데 2개가 가동 중단됐으나 올들어서는 나머지 1개마저 중단됐다』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재래식 장거리 미사일공장 뿐』이라고 말했다.

1938년 일제에 의해 청진제철소로 출범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연간 강철 2백40만t, 선철 2백12만5천t, 압연강재 1백4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북한최대 제철소로 운영돼 왔으나 전력 부족과 시설이 낡후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이지 북한은 작년 남북교역에서 월평균 1천4백만달러어치의 철강류를 남한에 수출해 왔으나 지난 2월에는 30% 수준인 4백39만달러어치밖에 수출하지 못했다.

한편 통일원이 집계한 지난 2월 한달의 남북교역은 승인규모 1백17건 37개 품목 1천24만달러로 1월의 90건 47개 품목 1천5백만달러에 비해 3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趙敏皓기자>

▽ 한국일보 1996. 3. 21

南北韓

72년 똑같이 316달러 94년엔 9배差 벌어져

남한이 북한보다 잘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에서 남한을 앞질렀다. 64년에는 북한이 1백94달러로 남한(1백7달러)의 2배수준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72년 남북한의 1인당 GNP가 똑같이 3백16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점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남한의 1인당 GNP는 북한에 비해 80년 2배, 87년 3배, 88년 4배, 89년 5배에 달했다.

북한은 90년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반면 남한은 꾸준히 성장해 94년말 현재 1인당 GNP는 남한이 8천4백83달러로 북한(9백23달러)의 9.2배 이다.

북한의 94년 1인당 GNP는 남한의 77년(1천11달러)수준으로 북한이 17년이나 뒤진 셈이다.

1만달러를 넘어선 95년에는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국력지표인 경상GNP로 보면 94년기준 남한(3천7백69억달러)이 북한(2백12억달러)의 17.8배나 된다.

남북간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고 경협이 본궤도에 올라 경제통합이 이뤄진다면 2010년께 통합한국은 경제규모 1조1백90억달러에 1인당 소득 1만3천달러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李伯圭기자】

▽ 경향신문 1996. 3. 23

北 작년 마이너스 성장

6~7.5% 지원없인 자생력회복 어려워

지난해 북한경제가 94년에 비해 6~7.5%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 통일원은 22일 「95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7~8월 수해와 체제의 경직성, 생산의욕감퇴 등 북한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생산활동이 예년보다 침체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마이너스성장률은 90~94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마이너스 4.5% 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북한경제가 외부지원 없이는 자생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통일원은 분석했다.

이 동향에 따르면 홍수피해로 인한 광공업 및 농업부문의 생산량 감소, 수송 및 통신애로가 경제활동을 침체시킨 주 요인으로 평가됐다.

<李大根기자>

▽ 중앙일보 1996. 4. 9

진로 副회장 극비訪北

經協외에 南北현안 협의 가능성

6일 入北 13일까지 머물 예정

진로선 "런던갔다" 否認

안희창 기자

진로그룹 박영수(朴永壽)부회장과 LA지사장인 이충원부장이 지난 6일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해 현재 평양에 체류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들 진로그룹 고위관계자의 방북은 판문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朴부회장 일행의 방북과 관련, 한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은 북한에 담배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협의가 주 목적이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총선후 남북관계 등 비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를 예정인 朴부회장 일행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조선백양무역회사 등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에 담배·식품·샘물 및 농산물가공단지 조성 등을 위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진로측은 특히 남포시용강군옥도리에 대규모 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황해도나 평안남도에 약 1천만평의 부지를 확보, 진로측의 영농기술 지원하에 농산물과 인삼 등 한약재를 재배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부회장

한편 진로측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朴부회장의 베이징(北京) 방문사실을 확인, 방북사실을 뒷받침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朴부회장은 현재 런던에 있다는 것외에는 아는 바 없다』고 방북사실을 부인했다.

▽ 조선일보 1996. 3. 31

北 나진-선봉 경제특구

중계무역지구 격하 방침

마이니치신문 보도

【東京=李革宰기자】 북한은 羅津(나진)-先鋒(선봉) 경제특구를 중계무역 지구로 격하시킬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30일 평양을 떠나 北京에 도착한 「일본북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日외무성 산하단체 단체다.

지난 23일 방북했던 연구소 대표단은 이날 『북한은 당초 나진-선봉지구를 제조업 공단으로 만들어 경제재건의 핵심으로 삼으려 했다』며 『그러나 북한내 정세불안으로 외국투자가 부진하자, 최근 중국 러시아와 중계무역 지구로 기능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4. 1

北무역대표단 臺灣방문

국민당 기업인 초청…투자·經援 논의

지난15일부터 5일간

【臺北=AP연】 북한 무역대표단이 최근 무역과 투자 등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고 대만의 聯合報가 31일 보도했다.

聯合報는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 『金정일 정지를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국민당이 운영하는 한 기업의 초청으로 15일부터 5일간 대만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오래전부터 맹방관계에 있는 북한의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신문은 북한 대표단이 이번 방문에서 대만측과 투자와 무역협력, 對北원조가능성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대만은 오는 5월 이후 북한에 관리와 기업인들을 보내는 문제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두나라는 중국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조심스럽게 접촉을 늘려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1996. 4. 10

대우 北京지사장 訪北

어제 평양에 남포공단 합영등 經協협의

고윤희 기자

㈜대우의 박원길(朴元吉·전무) 베이징(北京)지사장이 9일 대우그룹이 건립중인 남포합영공단 파견기술자 3명과 함께 평양으로 들어갔다.

9일 ㈜대우에 따르면 朴지사장은 평양에서 남포공단 합영계약 체결을 비롯한 대우그룹과 북한의 경협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朴지사장은 현지에서 실시중인 북한근로자들의 교육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대우측이 전했다. 朴지사장은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다.

㈜대우는 남포합영공단 가동을 앞두고 생산라인건설과 현지인력교육을 위해 현재 평양에 7명의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으며,이들은 수시로 베이징~평양을 왕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996. 4. 5

두만강 개발 5國委 18일 북경서 첫회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을 위해 관련국가간 조정협의기구로 설립된 「TRADP 5개국위원회」가 오는 18, 19일 북경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이 회의에 재정경제원·외무부·통일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이 회의에 金正宇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12월7일 뉴욕에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등 5개국 대표가 제6차 계획관리위원회(PMC)를 열어 임시기구인 PMC를 대체할 정부간 상설조정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5개국위 설립협정문」에 서명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5개국위의 상설 사무국의 위치 및 운영비분담·구성방법, 사업시행·재원조달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李大根기자〉

▽ 한국일보 1996. 4. 15

南北韓, 두만강개발 구체협의

17일 中·러·몽골포함 5개國 차관급회의

經協활성화 轉機될듯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관계국간 구체적 협의에 들어가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李桓均재경원차관은 17일 北京(베이징)에서 남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차관급 회의에 참석, 유엔개발계획이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관련, 관계국 차관급 회의가 열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가서명한 「5국간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 환경회랑에 관한 양해각서」와 「5국간 두만강 개발지역 및 동북아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등을 구체화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두만강개발계획의 진전이 남북한 경협증진에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 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엔개발계획이 지원하고 있는 두만강개발에 따른 비용은 20년에 걸쳐 3백억달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成鐵기자】

나진-선봉 직할市 승격

위원장에 副총리 孔鎭泰 人口도 30만명으로 늘려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직할시로 승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평양)와 3개 직할시(남포·개성·나진선봉), 9개도로 개편됐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14일 『북한은 지난 93년 나진시와 선봉군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7백46㎢의 직할시 승격은 이지역개발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저조해 계약액은 2천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장이었던 白화룡이 사망함에 따라 후임으로 정무원 부총리에 임명된 후 대외경제사업부장, 무역위원회위원장, 인민봉사위원회위원장 등을 겸임한 경제·무역통이다.』【金炳讚기자】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직할시로 승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평양)와 3개 직할시(남포·개성·나진선봉), 9개도로 개편됐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14일 『북한은 지난 93년 나진시와 선봉군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7백46㎢의 직할시 승격은 이지역개발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저조해 계약액은 2천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지난달 19일 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장이었던 白화룡이 사망함에 따라 후임으로 정무원 부총리에 임명된 후 대외경제사업부장, 무역위원회위원장, 인민봉사위원회위원장 등을 겸임한 경제·무역통이다.【金炳讚기자】

▽ 한국일보 1996. 4. 16

南北韓교역 급감

관계경색반영 작년比 41%나감소

올해 3월말까지 승인기준 남북교역 규모는 모두 5천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2% 감소했다고 통일원이 15일 발표한 「남북교역동향」에서 밝혔다.

「남북교역동향」에 따르면 또 지난 2월까지 통관실적도 3천91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4천76만달러에 비해 24.2% 줄었다.

통일원의 당국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협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나 위탁가공은 승인기준으로 3월말까지 6백55만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10%정도 늘어났고 3월 남북교역 승인실적도 2천5백62만7천달러로 2월에 비해 1백50% 증가했다.

【金炳讚기자】

▽ 조선일보 1996. 4. 16

北농기계 부품 국내 반입

원산 트랙터등 12대 분량

저기술-노동집약 위주… 日중개 형태로

북한의 농기계 부속품이 곧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남북교역에 종사하는 한 기업인은 15일 『북한 원산에 있는 금강원농기회사에서 제작한 트랙터와 이앙기 등에 쓰이는 엔진과 제너레이터 펌프 등 12대 분량의 농기계 부품들이 작년부터 국내에 반입돼 농기계 전문제작회사인 아세아 종합기계㈜에서 성능 테스트를 받아 왔다면서 『이들 부품들은 작년 2차례에 걸쳐 테스트-보완-재제작 과정을 거쳤으며 이달중 최종적으로 제작된 부품들이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세아 종합기계㈜에서는 일본을 통해 북한 농기계 부속품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에서 주로 1차 농수산물등을 들여왔으나 최근 저기술-노동집약적인 기계 부속품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선반기계와 텔레비전 부속품들도 일부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仁杭기자>

▽ 동아일보 1996. 4. 16

서방은행들 「北韓채권」 처리 골치

값어치 액면가의 19%불과 한국기업에 "사달라" 매달려

북한에 차관을 제공했다 되돌려 받지 못한 서방은행들이 국내기업에 북한채권의 구매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계 ANZ은행 영국 현지법인과 독일계 모르간 그랜펠은행 등은 한국기업에 자신들이 유통시킨 북한채권을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서방은행은 북한이 대출받으면서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채권을 재발행(증권화)했기 때문에 북한채권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최근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채권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서방국가들에 대한 부채가 33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서방은행 채권단이 유통시킨 북한채권은 총 8억5천만달러로 가격은 액면가 대비 19%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서울신문 1996. 4. 17

두만강 개발사업 지원 韓國, 1백만달러 기탁

【유엔본부엽】 한국정부는 15일 동북아 국가간 최초의 다자간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에 1백만달러의 신탁기금을 기탁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기금을 전달하면서 한국을 비롯,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TRADP가 이 지역의 잠재적인 경제개발과 장래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서울신문 1996. 4. 17

北京서 南·北·韓·러·中·몽골 참석

두만강 개발사업 내일 5國 첫 次官회의

北 金正宇 참가… 南北 별도접촉여부 주목

사무국 소재지 선정·재원조달안 중점 논의

두만강 개발사업(TRADP)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차관급 위원회가 오는 18~19일 중국 북경에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북한의 金正宇 대

李桓均차관

金正宇 北측대표

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과 별도의 남북한간 접촉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만강 개발사업을 추진할 사무국의 소재지 선정과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사업계획도 마련한다.

사무국의 경우 현재 서울과 북경, 블라디보스토크 등 3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나 북경이 유력하다.

재경원 관계자는 『유엔은 여러가지 항목을 자체 평가한 결과 서울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 등을 감안, 북경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신과 인프라, 환경 분야 등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만강 개발계획의 추진기구로 5개국 위원회와는 별도로 두만강 접경국가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3개국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 방안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회의에 李桓均 재경원차관을 수석대표로 모두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吳承鎬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7

남북경협확대로 대화돌파구 연다

정부, '총선자신감' 바탕 이달말 활성화조처 취할듯

나진·선봉 사회간접투자 전망…농산물·관광도 활기

이봉현 기자

총선이 끝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재계는 정부·여당이 안정의석 확보로 자신감을 얻은데다, 북한 문제를 미국·일본이라는 '지렛대'에 의존해 오던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경협확대를 남북대화 유도의 돌파구로 삼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 역시 올초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경협확대를 희망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 경제면에서의 남북협력은 지난해 쌀제공 파문이 몰고온 남북긴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돼 왔다. 지난해 남북교역규모는 3억달러로 남한은 이미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으며, 남한기업의 북한내 위탁가공 규모도 94년 1천6백6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2천6백50만달러로 늘어났다.

첫 남북합작사업인 대우그룹의 남포 경공업공단사업은 지난해말과 올초 합영회사 설립계약을 마무리짓고 현재 시험생산 단계까지 진전됐다. 심지어 북한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무력화 시위를 벌여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주에도 진로그룹 박영수 부회장과 (주)대우 박원길 베이징 지사장이 사업협의차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는 이르면 이달말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조처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진·선봉은 이미 많은 국내 기업이 현지를 방문해 타당성 조사 및 북한 당국과 투자협의를 마친 지역이며, 북한 역시 정치군사적 긴장과 곡물난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고급인력을 집중 투입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재계는 통신 같은 사회간접시설 건설이거나 컨벤션센터 건립처럼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가 넘어 승인이 보류됐던 삼성 한화 쌍용 등의 투자가 허용되고, 토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30만평 규모의 남한 중소기업 전용공단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어 비료, 농약, 종자 등 각종 영농자재 지원과 연계된 농산물생산사업이 활기를 띨 될 전망이다. 진로그룹이 남포시 용강동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식품가공단지조성과 황해도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산물재배 사업은 이런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북한 관광과 관련한 남북간 협력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또 대우의 남포공단합영회사 설립 공식발표와 제품전시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향신문 1996. 4. 18

南 상품 北서 은밀히 유통

89년 平壤 청년학생축전 전후 반입

북한 주민들 사이에 옷·양말·운동화·전자제품 등 갖가지 남한제품들이 고가(高價)에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고 내외통신이 탈북자들 증언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남한 상품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89년 9월의 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를 전후해서다. 중국 접경지역인 양강도 혜산과 평북 신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생필품이나 공업제품이 북한산 인삼·구리·해산물 등과의 물물교환 형식으로 북한으로 반입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본·미국·캐나다 등지 교포들이 북한 방문때 친척들에게 전해주는 선물이나 북한의 대외사업 종사자들이 귀국때 반입하는 한국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 한겨레신문 1996. 4. 17

나진·선봉 한국공단 본격추진

토지공사…사회기반시설 완비 2천년이전 입주 방침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의 나진·선봉에 용수공급·폐수처리시설과 전기 통신 도로 항만 등을 갖춘 30만평 규모의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건설하기로 하고 관계당국과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6일 토공에 따르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나진·선봉 관련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접촉해 토지임차와 공단건설 방안에 합의할 계획이며, 2년6개월~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2000년 이전에 남한 중소기업 2백~3백개 업체를 이 공단에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의 고위당국자는 "토공은 공업용지의 분양 뿐 아니라 기업설립, 공장건설,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이들의 나진·선봉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공이 공단을 조성할 경우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완비되는 데다 정부투자기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안정효과를 가져와 국내 중소기업의 나진·선봉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단조성 과정에 건설업체와 한전 한국통신 등 관련기업의 나진·선봉지역 건설참여가 이루어지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사는 러시아 나홋카에 1백만평 규모의 한·러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30만평은 99년께 분양할 예정이다. 이봉현 기자

▽ 경향신문 1996. 4. 18

北韓 장기 미상환외채 1百억달러 넘어

북한이 10년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외채가 1백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貿公 런던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채권국인 러시아에 약 30억달러, 중국 10억달러, 유럽국가 10억달러, 일본 5억달러 등 모두 1백억달러가 넘는 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는 채무는 차관도입과 수입대금 미결제로 발생한 것이며 일본과 유럽국가의 채무는 수출대금 지급 보증후 북한이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것으로 알려졌다고 무공은 밝혔다. 〈許元淳기자〉

▽ 세계일보 1996. 4. 18

두만강개발 투자기구 설치

사무국과 별도로…사업계획등 결정

사무소 서울유치 가능성

오늘 北京회의 南北차관 참석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차관급으로 구성된 두만강개발사업(TRADP)위원회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국과 별도의 기구로 투자추진기구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TRADP 참여 5개국은 18, 19일 이틀간 북경에서 열리는 차관급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사무국 구성과 사업추진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비롯, 사무국과 별도기구로 투자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추진기구 설치쪽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안한 것으로 각 참여국의 대표와 UNDP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사무소는 서울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투자추진기구는 두만강개발사업의 투자사업계획과 투자우선순위등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실질적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RADP 차관급 위원회 창립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는 李桓均재경원 차관이 북한에서는 金正宇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趙敏皓기자〉

▽ 동아일보 1996. 4. 18

재미교포 北에 첫 직접투자

20여만 달러 플라스틱 합작공장 허가 신청

백스테이지社 禹회준 사장

在美경제인協 나진-선봉에 대규모상가 건축

재미 한인(韓人)들의 북한 투자가 최근 늘고 있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 백스테이지사 禹회준사장은 지난 2월25일~3월2일 북한을 방문, 플라스틱 수지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합작규모는 20여만달러로 禹사장은 미국 상무부에 정식 투자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다.

지금까지 재미한인 자본이 홍콩 등 제삼국을 통해 북한에 우회진출한 사례는 평양 삼방합영, 청진 청진합영등 3, 4건에 달하지만 직접 투자허가 신청을 한 것은 禹사장이 처음이다.

禹사장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 합작 투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내 대북투자 자문단체인 재미경제인협회(회장 金훈영)는 지난 2월28일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투자유치계약을 하고 나진 선봉지역에 5백개 점포 규모의 상가를 건축중이다. 이중 1백개 점포는 재미한인에게 분양할 계획.

오는 7월 완공예정인 이 상가에는 의류 신발 식품업체 등이 입주, 주로 러시아와 중국인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경제인협회는 입주희망자 40여명을 모집, 18일부터 3박4일간 현지를 시찰하고 오는 22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서울신문 1996. 4. 19

"나진·선봉개발 정치와 분리"

北 金正宇대표 美·日참여도 반대안해

「두만강개발」 5국회의 中서 열려

【북경=李錫遇특파원】 북한의 金正宇대외경제위원회부위원장은 18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문제와 관련, 남북한 양측이 이를 정치문제와 분리해 잘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국 북경 亮馬河飯店에서 이날 개막된 5개국 두만강개발사업(TRADP) 정부간조정협의위원회 제1차회의에 북한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金부위원장은 이날 오전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한국측 수석대표인 李桓均재경원차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金부위원장은 그러나 나진·선봉 개발문제에 관해 이번 기회에 한국측과 정부간 접촉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5개국 정부간회의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두만강개발사업에는 참여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참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지난 4일 유엔개발기구(UNDP)와 출연협정을 체결한 1백만달러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1996. 4. 20

對北경협 확대검토

정부 기업인訪北·사업승인기준 완화등

4者회담前 가능

4者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후속조치로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4者회담의 성격이 북한의 체제 안정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4者회담을 수용하기 이전에라도 남북 경협 확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도 『대북 경제지원의 능력과 의도가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재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남북 경협은 4者회담의 후속조치뿐 아니라 남북한 쌍무 문제의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협확대에는 기업인 방북과 사업승인 기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金炳讚기자】

▽ 세계일보 1996. 4. 20

「두만신탁기금 설치」합의

두만강개발 회의 南北대표 경제협력문제 논의

【北京=金晟鎬특파원】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등 5개국은 18~19일 北京에서 제1차 두만강지구정부간회의(TRADP)를 열고 나진-선봉지구를 포함한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두만신탁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TRADP는 첫 사무국을 북경에 두되 3년후부터는 서울 블라디보스톡 북경을 순환하며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5개회원국이 매년 2만5천달러씩의 분담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TRADP는 또 오는 9월 나진-선봉지역 투자촉진포럼을 개최하고 올 하반기중 부산에서 「해운통관전산화 실무그룹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측대표인 李相均 재경원차관은 19일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은 이 회의를 통해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력히 희망했다』고 전하고 『북한측대표인 金正宇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위원장과 격의없이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TRADP 2차회의는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린다.

▽ 세계일보 1996. 4. 20

北 나진-선봉지역 개발 궤도수정

대규모 자본-노동력 필요한 공업부문 뒤로밀려

기존시설 최대한 활용… 중계-관광기지화에 주력

북한이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관련,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지역을 중계기지,수출가공기지,국제관광기지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왔으나 최근들어 개발순서를 중계수송업→관광업→공업부문으로 궤도 수정했다.

貿公(KOTRA)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2월 「96 니가타-동북아경제회의」에서부터 이같은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대표단은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 △초기투자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 우선추진 △전망이 좋은 사업 우선추진등의 원칙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나진-선봉개발의 이같은 궤도수정은 지난 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후 관련법령및 제도정비,적극적인 대외홍보등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성과가 신통찮은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10개 공업지구를 동시 개발한다는 계획이 인프라 미흡과 자원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은 것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야 하는 공업부문이 뒤로 밀리고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계기지화가 앞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밝힌 개발현황을 보면 인프라부문에서는 △나진~원정(권하)간 도로확장 △나진항 1호부두 확장및 2호부두 기중기 설치(40피트 컨테이너용) △헵기 착륙장 완공 △나진~부산간 정기 컨테이너항로 개설 등이다. 이외함께 서비스시설로는 나진호텔 건축이 90%정도 진척돼 오는 6월 개업할 예정이며,이 건물은 지상 8층에 2백여 객실을 갖춘다. 신해관광지역에도 관광여관을 만드는 중이고 비파지구의 관광도로도 확장하고 있다고 북한은 소개했다.

북한은 특히 이 지역과 연계,백두산~삼지연~철보산~금강산을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부 구간의 철도와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알려진대로 백두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했으며 삼지연에서는 이미 스케이트경기 대회까지 가진 바 있다.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지역을 직할시로 승격하고 부총리 孔鎭泰를 책임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나진-선봉지역 개발 성패가 북한의 경제재건과 체제유지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계약실적은 33건, 3억5천만달러이며 실제 투자액수는 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북한측은 이중 2억달러는 불과 1년만에 체결된 것이라며 세계각국의 참여를 유혹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부터 북경에서 재경원 李相均차관과 북한의 金正宇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열리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 회의도 북한의 나진-선봉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이 지역 개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남한정부와의 투자보장협정체결 등에는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어 특구개발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趙敏皓기자)

▽ 동아일보 1996. 4. 21

두만강개발 실무회의 부산서

올 하반기 개최

올하반기에 두만강개발사업(TRADP)과 관련된 해운분야 통관전산화(EDI)실무그룹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20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18, 19일 이틀간 중국 북경(北京)에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 회원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TRADP제1차차관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신문 1996. 4. 22

북 나진선봉 외국기업에 원자재등 활동영역 확대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위해 이 지역 안 외국 투자기업들이 원·부자재를 이 지역 밖에 있는 북한 기업이나 합영·합자회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통일원 등에 따르면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는 지난해 발간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이라는 책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원료, 자재의 공급 및 부분품의 가공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있는 기업소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원 관계자는 "북한은 나진·선봉지역 밖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처럼 면세특혜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

▽ 조선일보 1996. 4. 24

▽ 동아일보 1996. 4. 24

北 "경제전략 수출위주 전환"

자급자족 한계… 자본주의市場 진출

金정우 대외경제副委長 밝혀

【워싱턴=李載昊】 金정우 북한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은 22일 북한이 지난 50여년 동안 추구해온 자급자족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인하고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위주의 대외(對外)경제전략으로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위원장은 이날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소장 金英鎭)가 주최한 남북한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를 단위로 세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국제협력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오늘의 세계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단일시장으로 통합됐다』고 말하고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 접근을 위해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이어 아프리카 중동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순으로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북한경제의 한계를 전례없이 솔직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방의지 강력…실제정책은 "모호"

北「수출주도 전략」발표안팎

시장·품목 다양화, 法정비 밝혀

"北폐쇄 외부탓" 美에 불만표출

◇金正宇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美 조지 워싱턴大 부설 東아시아연구소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聯合】

金正宇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놓은 「수출 주도형 북한 경제전략」은 외형상 야심만만하다. 22일(한국시각 23일) 조지워싱턴大 부설 東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한 金은 『앞으로 북한은 「수출 제1주의 정책」을 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단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가지 실제적인 정책들도 나열했다. 과거 국가 차원의 求償(구상·Barter)무역 수준을 탈피, 시장의 다변화와 교역 품목의 다양화도 꾀하겠으며,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들도 정비할 뜻임을 피력한 것이다.

金은 이번 발표에서 북한 지도층의 세계 경제에 관한 인식의 일단도 폈다.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라는 단일 시장으로 통합됐다는 대목이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교역할 때 와는 다른 무역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 등을 열거한 것이다.

그러나 金의 주장들이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신기원을 이루는(Epoch-making) 정책전환」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실제 북한 외교부 순회대사 등 많은 북한인들은 訪美길이 분위기는 이번 발표에서 북한 지도층이 주체 사상에 따른 자급형 경제체제를 고집하다가는 이상의 「북한체제」 자체가 생존키 의해 폐쇄된 경제를 라고 강조하는 한편, 『美정부등의 완고한 입장을 질타하는 잘 조율된 이중주를 울린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美정부를 포함, 워싱턴 안팎의 분위기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에 쉽게 감동한다는 점이다.

美국무부 관계자는 『북한과 협상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金의 워싱턴 행사는 북한이 대외경제 진출에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美정부의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朴斗植기자】

金正宇 조지 워싱턴大 발표요지

세계는 이미 자본주의 單一시장

첫목표는 동남아… 中東도 중시

계약형 合作-추식회사까지 권장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DPRK) 경제의 기초 전략은 자급형 경제다. 일부 인사들은 자급형 경제를 폐쇄 경제로 보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폐쇄된 경제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金正日동지는 『북조선은 이데올로기와 사상, 체제의 차이를 넘어,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경제·기술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나눠 가지려는 모든 나라를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지도 이념 아래 우리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적 무역과 협력을 증진키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北조선은 사회주의 시장의 몰락으로, 외부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교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들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자본주의 국가와의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사회주의 시장의 소멸로 북조선은 주요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이것이 우리 무역정책의 변경을 가져온 주요 이유다. 우리 무역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 의존형에서 자본주의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세계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단일 시장으로 통합됐다. 자본주의 시장은 여러 지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북조선은 우선 가장 우호적인 시장에 접근할 것이다. 우리의 첫 목표는 동남아 시장이다. 南·南협력의 바람직한 모델로 우리는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또 다른 발전도상국인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다음 단계는 첨단 기술과 자본을 가진 선진 외資기업을 포함한 계약형 합작및 넓은 범위의 주식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격상되고 있다.

수출 증진은 국가 단위의 노력이다. 또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에 자본주의 국가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역 형태는 국가간 구상(Barter) 무역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북조선은 외국교역 제1주의라는 원칙 아래 (시장의) 다변화와 (교역 형태의) 다양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상품 교환에만 초점을 두었던 과거 교역은 이제 완전한 합작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북조선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역할 때는 교역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큰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비슷한 정치·사회 구조 덕분에 국가 단위의 협상과 합의로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우리가 외부와의 교역 조건 개선을 위해 ▲적합한 법률과 제도들을 제정하고, 출판, 발효하고 ▲완전한 규모에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에 노력중이다. 나진-선봉 지역 개발에 적합한 법제 마련과 인프라스터럭처 건설을 위해 노력중인데 이로써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제약들을 완전히 없애려 한다. 흔히 북한의 폐쇄 경제때문에 외부 교역과 협력에 실패했다고들 하는데, 외부 세력에 의해 부가된 경제 제재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리·워싱턴=朴斗植기자】

▽ 서울신문 1996. 4. 23

"北, 한국 나진·선봉 적극투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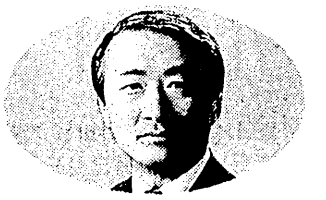
두만강 개발회의 참여 李桓均차관 밝혀

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은 22일 『북한은 우리나라 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적극 투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차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金正宇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지난 18~1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두만강개발사업(TRADP) 차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진·선봉지역에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金 위원장은 한국이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연을 늘리는 것보다 동족을 생각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는 등 한국의 경제발전을 부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金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李桓均차관

〈吳承鎬기자〉

▽ 중앙일보 1996. 4. 24

北 '김정우 발언' 왜 나왔나

'국제무역질서 편입' 北 희망사항 드러내

김용호 전문기자

북한은 지난 93년 12월 노동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그동안 무역제일주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3차 7개년 경제계획(87~93년)의 실패에 따라 설정된 3년간의 「경제적 완충기」첫해인 94년 김일성(金日成)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한다면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 발전에 힘쓰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그러나 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지난해 여름 수해 등으로 북한은 대외경제에 관심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다.

22일 나온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김정우(金正宇)부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앞으로 이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공격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취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우의 발언은 북한이 95년 초 발간한 대북투자안내서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자립경제」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金의 발언은 북한이 그동안 고수해온 주체경제 노선의 포기라기보다는 미국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을 후원해 달라는 희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 대외경제 정책 변화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노동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	93년12월	-대외경제관계 방향전환 천명 -무역제일주의 방침설정	-3차 7개년계획(87~93년) 실패
김일성 신년사	94년 1월	-대외시장 적극개척 지시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 발전 강조	-94년을 「혁명적전환의 해」로 규정
나진·선봉 투자환경 소개책자	95년 2월	-세계각국과 대외경제관계 발전 강조	-김일성 사망 -수해, 경제난 심화
김정우 워싱턴 발언	96년 4월	-주체경제노선의 획기적 정책 전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침투 -자본주의 사업방식 도입	-4자회담 제의

▽ 중앙일보 1996. 4. 24

北 對外경제정책에 담긴 뜻

美의 경제제재 벗어나기가 주목적 韓國과의 經協등은 전혀 언급안돼

워싱턴=길정우 특파원

작년 홍수 피해 이후 북한이 대외경제정책 대강(大綱)을 공식석상에서 피력하고 문제점과 전망을 소상하게 설명한 적은 없었다.

현재 2개의 국제회의 참석차 워싱턴에 체류중인 북한 대표단은 모두 8명. 이들은 대외경제위원회,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외교부 소속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을 공식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북측이 조지워싱턴대 경제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세 문건은 비록 지금까지의 북측 노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 하더라도 세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판문점 도발, 한·미정상회담, 4자회담 제의등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둘 때 북측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워싱턴에서 밝힌 것은 북·미 관계 등과 관련해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에도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2개의 국제 회의에 제시된 북측 발표문에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번 방미(訪美)를 통해 북측은 미국이 대북경제제재와 적대정책을 철폐해야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가 체제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북한의 「연(軟)착륙」에 두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간파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논리를 역이용해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공세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 중국·대 러시아및 대일 경제관계 현황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이들이 동북아지역 공동의 경제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 대북경제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논리다. 북한의 혼란이 역내에 파급되기를 원치 않는 주변국의 입장을 카드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행보다. 종전과 다소 달라진 것은 「주체경제」에 기초한 북한경제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세히 기술한 점이다.

한편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민간회의인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참석을 계속 거부해 오던 북한이 처음으로 연구원들을 보낸 것도 단순한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 한국일보 1996. 4. 25

중장비·가전품 첫 北반출

정부, 대우신청서 승인 내달, 모두 23만弗상당

분단이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과 지게차등 국산중장비가 다음달 북한으로 반출되고, 올 상반기에 북한산 컬러 TV가 국내 반입된다.

24일 통일원에 따르면 (주)대우가 3월 지게차·트랙터·트레일러등 중장비 6대와 컴퓨터·세탁기·건조기·복사기등 모두 23만달러상당의 국산제품에 대한 대북 반출신청서를 제출, 최근 승인을 받았다. 북한측 거래자는 조선삼천리무역총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88년 남북교역이 허용된 이후 전자제품 부품이 북한으로 반출되거나 중장비 부품이 위탁생산된 뒤 남한으로 반입된 적은 있으나 완제품으로 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선일보 1996. 4. 25

"한국언론 왜곡"주장 北 金正宇 회견취소

【워싱턴=聯】 워싱턴을 방문중인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金정우부위원장 일행은 2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한국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美조지 워싱턴大 東아시아연구소가 밝혔다.

金부위원장 일행을 초청한 연구소측은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 대표단이 일부 한국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1996. 4. 25

북, 경제제재 철폐 촉구

북대표단 "대외관계확대 큰 걸림돌"

조지워싱턴대 학술회의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동아시아연구소 주최의 학술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제재의 조속한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진-선봉 지역의 경제개발'이란 주제로 발표한 북한 국제무역촉진위 김정기 서기장은 "나진-선봉에 대한 투자가 지금처럼 미약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고 무역자유지구 개발에 대한 경험 부족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제재로 인해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황세영 지역부장도 이날 '북-미 경제관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미국이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2항에서 밝힌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 완화 조처조차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미 정부에 경제제재를 철폐하거나 크게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 경향신문 1996. 4. 25

▩ 北 속사정 털어놓은 「경협세미나」

조지워싱턴대 주최 「남북한 경제협력」세미나에 참석했던 金鎭炫 서울시립대총장은 23일 북한대표단으로부터 받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과거에 비해 굉장히 솔직해졌다. 물론 비공개회의라는 측면도 작용했지만 「세계가 자본주의시장으로 통합됐다」든가 「경제의 세계화, 무역의 세계화」라는 등의 북한측의 발언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둘째,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측은 경제난의 최대요인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꼽으면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어야 다른 나라도 뒤를 따를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미국측 참가자들은 경제제재 기간중에도 프랑스, 영국 등 외국자본유치에 성공한 베트남·중국 등의 예를 들면서 『북한측이 미국기업의 구미를 당기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북한경제가 일정한 난관에 봉착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쌀에 대해 중요하고도 민감한 관심을 보였다.

북한측은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사회주의시장의 소멸로 무역규모가 절반으로(90년대비),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에서 719달러(94년)로 줄었으며 무역에 현금결제를 요구해 원유및 자재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北무역규모 90년의 절반"

"美 무역제재로 경제난"… 해제촉구

또 지난해 홍수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가 5백20만명, 작물피해 1백20만t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의 자본주의시장으로의 통합 등 시대적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고 자본주의시장 진출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자체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측 참가자들의 진단이었다.

연세대 이영선 교수는 『북한은 개방과 개혁, 특히 개혁이란 말을 대단히 꺼린다』면서 『북한은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평행선에 둔 채 경제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朴仁奎특파원】

▽ 세계일보 1996. 4. 24

北, ASEM가입 간접시사

北태국대사 ESCAP서 이례적 찬양 발언

【방콕=】 북한은 23일 태국의 방콕에 열린 제52차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이례적으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찬양하고 강조함으로써 ASEM회원국 가입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태국주재 李三燮북한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월초 발표에서 열린 사상최초의 ASEM은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간의 경제-통상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지역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ASEM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발언의 외교가에서는 유엔기구회의를 통한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ASEM가입을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 서울신문 1996. 4. 25

"사회주의 붕괴중" 北 金正宇 시인

【워싱턴=】 金正宇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붕괴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시인했다.

金부위원장은 22~23일 미 조지워싱턴대학 동아시아연구소(소장 김영진교수)가 주최한 한반도경제협력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 동아일보 1996. 4. 26

北 김정우 일행 美와 잇단 접촉

【워싱턴=李載克】미국 국무부는 24일 워싱턴을 방문중인 金정우 북한대외경제위부 위원장 일행이 개인적 목적으로 미국에 왔으나 국무부관리를 비롯한 美 정부관계자들과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대변인은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자신은 金부위원장 일행이 『한반도 4자회담제의에 관한 북한측의 공식입장을 가지고 왔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자회담에 관한 지난 19일의 北美간 뉴욕접촉에 대해서도 『이같은 긍정적인 접촉이 평양측의 4자회담제의 수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25

北, 실질경제 문제점 인정

美세미나 참석 北대표단 金正宇, 美에 경제제재 해제 요구

【워싱턴=申相一특파원】22일과 23일 조지 워싱턴대학 부설 東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북한경제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이 북한 자급자족경제의 문제점들을 솔직히 인정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진지한 자세로 경제회생에 진력하고 있음을 나타내 미국측 관계자들로부터 인상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김정우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은 특히 미국의 對北 경제봉쇄가 해제돼야만 북한의 경제난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나타냈다.

김정우는 91년 유엔가입 당시 1천달러였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94년 7백19달러로 떨어졌으며 외환부족으로 원유 등 자재 수입이 어렵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개발은 자본주의 경제와 연결을 통해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25

□ 워싱턴회의 남쪽대표가 전하는 북 태도

"경제난 솔직히 털어놓더라"

자본주의적 경쟁력 강조··정책 과거회귀 없을듯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소장 김영진 교수)주최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 등 4명의 한국쪽 참가자들은 이틀동안의 회의를 끝낸 뒤 23일 오후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학술회의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우선 한국내 일부 언론에서 마치 북한이 자본주의 방식을 대폭 수용하는 것처럼 북한 대표들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북한 대외경제위 김정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지금까지의 북한 경제정책을 다시 밝힌 것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들의 솔직하고도 진지한 태도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진현 총장은 우선 김 부위원장이 주제발표에서 "세계시장이 자본주의 단일시장으로 통합됐다"고 현실을 받아 들였으며, 지금 세계의 흐름을 '경제·무역의 세계화'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대표들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조금도 감춤없이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대표단은 경제적 어려움의 큰 원인으로 북한의 경제를 외부로부터 봉쇄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처를 지목했으며 이의 조속한 해제 또는 대폭적 완화를 촉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북한관리들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정치적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토론자들은 △한국의 대북 정책이 좀더 개방적이고 유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개방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침투'를 위해 상품의 경쟁력 강화, 마케팅 전략 등도 크게 신경을 쓰는가 하면, 비록 사유화를 거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국쪽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 서울신문 1996. 4. 25

한반도 학술회의 南·北 태도

지난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조지 워싱턴대에서 개최된 한반도 경제협력 국제학술회의는 최근 북한의 판문점 도발로 인한 안보 긴장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4자회담 제의등 국제이목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여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대학 부설 동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한 이 학술회의는 남북한과 미국·일본의 한반도 경제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북한측 대표단의 면면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남북경제공동위위원장을 역임, 우리에게도 낯익은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金正宇부위원장(차관)을 단장으로 김정기국제무역촉진위서기장, 박석균외교부 미주국 부국장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학술회의의 멤버로는 적절치 않은 듯했으나 경제및 외교의 실무책임자급이라는 점에서 최근 극심한 식량난과 판문점 도발 등의 북한측 진의파악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로 보였다. 예고없는 불참을 다반사로 해와 늘 주최측의 애를 먹이던 북한대표단은 이번에는 회의 전날 당초 명단대로 6명이 모두 워싱턴 내셔널공항을 통해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나타나 오히려 주최측을 놀라게 했다.

金正宇는 공항에서 북한당국이 4자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수출증대라는 획기적 경제정책전환을 밝히는등 「달라진 북한」을 소개하기에 바빴다.

미국무부 관리들과의 면담은 물론 워싱턴의 각 정책연구기관은 그들을 세미나등에 연사로 다투어 초청, 북한의 실체파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 나타난 북한대표들을 미국측이 십분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측 담당자들은 시종일관 학술회의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만 열중하는 자세를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당초 주최측은 한국정부에도 경제관리 3명과 학자 3명을 초청했으나 우리는 학자 3명만 참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미한국대사관측의 태도다.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게 없다』면서 옵서버 자격으로나마 직원 하나도 파견하지 않았다.

남북대화는 별도의 멍석을 깔아놓은 곳에서만 이뤄지라는 법은 없다. 북·미대화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보면 적어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보인 우리측 정부나 대사관의 태도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신문 1996. 4. 28

北개방정책 선전…投資 적극 권유

訪美 金正宇 韓國기업인 접촉 안팎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제의된 가운데 워싱턴을 방문, 북한의 자급자족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교역증진 노력 등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밝혀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金正宇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이 일주일간의 체류를 마치고 27일 평양으로 떠났다.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경제협력 학술대회에 참석한후 미국무부 관리들과 한국 및 동포기업인들을 연쇄접촉했던 金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金과 여러차례 접촉을 가진 바 있는 익명을 요구한 한 교포기업인은 金이 국무부 관리들과의 접촉후 대단한 만족을 표시했으며 한국 및 동포기업인들에게 북한의 개방정책을 설명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고 전하고 메디슨호텔12층에 위치한 金의 방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두개의 방으로 돼있어 한쪽방에서 접견이 이뤄지는 동안 다른 방에서는 다음 면담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옆방에 누가 와있는지는 알수 없게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金은 왜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느냐는 면담자들의 질문에 『북한은 할만큼 다하고 있는 데 우리보고 더이상 개방하라는 것은 주권침해』라면서 『생수개발건도 한국기업에 8건 데 허가했고 현대의 금강산개발, 대우의 남포 전자공장 건설 등도 우리쪽 조치는 다 끝낸 상태이나 한국측이 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기업인은 또 金이 『북한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우수하면서도 싼 인건비』라며 기업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金은 『나 진·선봉의 경우 월인건비가 80달러로 책정돼 있는 데 이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라면서 『베트남이 30달러,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50달러로 액수는 싸지만 북한인력은 교육받고 근면한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金은 『대우의 남포 전자공장을 당초에는 인건비를 2백달러로 했으나 대우측이 사정해 1백달러로 낮춰주었는 데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1천2백달러를 줘야 하는 한국과 비교할 때 북한은 엄청난 매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인은 이어 한편 나진·선봉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꼭 DPRK(북한의 영문약칭)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시설보강을 위한 차관도입시에는 북한정부가 지불보증까지 서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金正宇부위원장은 또 국무부 관리들과 면담을 하고 온후 『미국사람을 더욱 몰아붙이는 게 북·미 직접대화에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한 기업인의 말에 『잘돼가는 데 그럴 필요없다』면서 북·미간 대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워싱턴=羅潤道특파원)

2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金正宇 부위원장이 한국 및 동포기업인들을 만나 대북투자를 촉구했다. 사진은 94년 9월 북-미 전문가회담 참석차 베를린에 왔던 金의 모습.

▽ 세계일보 1996. 4. 28

「金日成격하운동」 예고인가

北한 金正宇 방미행적 진단

「주체경제」 실패 자인… 상상밖 발언많아

金正日 승계 앞두고 모종 변화가능성

워싱턴을 방문중인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 일행이 자급자족경제의 실패를 솔직히 자인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金日成 격하운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돼 주목된다.

워싱턴의 한 북한전문가는 김정우 일행이 공개석상에서 특히 서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金正日의 사전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김정우의 권력승계와 관련해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영향력있는 두뇌집단의 고참연구원인 이 북한통은 김일성死後 소위 유훈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관리가 직접 나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우 일행이 90년 유엔가입 당시 1천달러였던 1인당 GNP가 7백19달러로 감소했으며 홍수피해로 인한 금년도 식량부족량이 전년도보다 1백20만t 늘어난 3백80만t이라고 밝히는등 등장하는 시점에서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을 필요로 할 때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권력승계와 체제생존을 위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이번 김정우 일행의 발언내용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워싱턴 대학 부설 東아시아연구소(시거센터) 주최 학술세미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김정우 일행의 발언을 직접 경청했던 이 연구원은 이같은 점들로 미뤄 북한대표단의 이번 발표내용에는 경제회생을 위한 진지한 태도표명 이상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어렸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워싱턴 대학 부설 東아시아연구소(시거센터) 주최 학술세미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김정우 일행의 발언을 직접 경청했던 이 연구원은 이같은 점들로 미뤄 북한대표단의 이번 발표내용에는 경제회생을 위한 진지한 태도표명 이상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어렸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술회의 참석후 미국측 주요인사들과 폭넓은 접촉을 벌이고 있다.

대표단 일행은 24일과 25일에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를 방문, 클린턴행정부 관리들과 주로 對北경제제재 완화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과거의 전례에 따라 김정우 일행과 만나는 관리를 과장급 이하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일부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급 관리들만이 金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국무부의 경우 제프 골드스타인 북한담당관과 앤 캐버라 북한경제담당관(여)등이 김정우 일행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초청자인 시거센터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나 양측간 구체적 대화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申相一특파원)

워싱턴의 한 북한전문가는 김정우 일행이 공개석상에서 특히 서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金正日의 사전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김정우의 권력승계와 관련해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영향력있는 두뇌집단의 고참연구원인 이 북한통은 김일성死後 소위 유훈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관리가 직접 나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우 일행이 90년 유엔가입 당시 1천달러였던 1인당 GNP가 7백19달러로 감소했으며 홍수피해로 인한 금년도 식량부족량이 전년도보다 1백20만t 늘어난 3백80만t이라고 밝히는등 등장하는 시점에서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을 필요로 할 때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권력승계와 체제생존을 위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이번 김정우 일행의 발언내용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워싱턴 대학 부설 東아시아연구소(시거센터) 주최 학술세미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김정우 일행의 발언을 직접 경청했던 이 연구원은 이같은 점들로 미뤄 북한대표단의 이번 발표내용에는 경제회생을 위한 진지한 태도표명 이상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어렸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술회의 참석후 미국측 주요인사들과 폭넓은 접촉을 벌이고 있다.

대표단 일행은 24일과 25일에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를 방문, 클린턴행정부 관리들과 주로 對北경제제재 완화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과거의 전례에 따라 김정우 일행과 만나는 관리를 과장급 이하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일부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급 관리들만이 金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국무부의 경우 제프 골드스타인 북한담당관과 앤 캐버라 북한경제담당관(여)등이 김정우 일행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초청자인 시거센터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나 양측간 구체적 대화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申相一특파원)

▽ 조선일보 1996. 4. 28

3개기업 對北투자 승인

통일원 合作등 1천9백만달러

北京쌀회담 결렬후 7개월만에

통일원은 27일 삼성전자-태창-대우전자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1천9백20만달러규모의 대북투자사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대북투자를 승인받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는 10개업체로 늘어났다. 정부가 대북투자사업승인을 재개한 것은 北京쌀회담결렬이후 7개월만이다.

삼성전자는 북한조선체신회사와 합작사업으로 7백만달러를 투자, 나진-선봉지역에 통신센터를 건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태창은 북한의 릉라888무역총회사와 합작사업으로 5백80만달러를 투자,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서 금강산샘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대우전자는 6백40만달러를 투자해 조선삼천리총회사와 합작으로 남포공단에서 컬러TV-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전자제품공장건설계획과 사회간접자본인 통신센터 건설이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對北투자사업에 적용됐던 「5백만달러 이내, 경공업위주」라는 정부가이드라인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金演光기자〉

정부 對北사업자추가승인등 배경

북한을 4者회담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꼽혀 온 남북 경협확대의 신호탄이 올랐다.

통일원은 27일 전격적으로 (주)삼성전자(회장 金 십자회에 전달키로 결정, 중단됐던 제4차 대북 수재민 구호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또 (주)대우도 그동안 당국의 신호를 기다리며 보류해오던 북한 남포공단 양시멘트·동룡해운 등 3

측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는게 무리가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자 사업승인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실행된다.

정부의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15일 녹십자·동양시멘트·동룡해운 등 3

◇최근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상황

(단위:만달러)

기업명	승인일	사업내용	투자규모	북측회사	투자지역
대우	95.5.17(92.10.5 협력사업자 승인)	셔츠·블라우스, 가방, 재킷	512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고합물산	95.5.17	의류·봉제, 직물, 이불·솜, 수지병	686	광명성총회사	협의중
한일합섬	95.6.26	쉐터, 봉제, 모포, 방적	980	조선은하무역총회사	남포
국제상사	95.6.26	신발제조	350	조선은하무역총회사	남포
녹십자	95.9.15	의약품제조(유로키나제)	300	광명성총회사	평양시 대동강 또는 용성구역
동양시멘트	95.9.15	시멘트저장 사일로 1기건설	300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나진항
동룡해운	95.9.15	하역설비(지게차2대, 크레인1대)	500	해양무역회사	나진항
삼성전자	96.4.27	통신센터(전자교환기)	700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태창	96.4.27	금강산샘물	580	능라888무역총회사	강원 고성군 온정리
대우전자	96.4.27	전기·전자	640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 한국일보 1996. 4. 28

"4者회담 성사" 분위기 조성

韓赤구호사업도 재개 經協확대 물꼬전망

회담진척따라 범위·종류등 더 다양해질듯

光浩)、(주)태창(사장 金桂泳)、(주)대우전자(회장 裵洵勳)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허가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도 이날 2억5천만원 상당의 식용유(옥수수 기름) 18만ℓ를 북한적십자사에 보냈다。

북한이 4者회담 제의에 대한 모종의 금융적 「의사표시」를 했으며 앞으로 남북한, 북·미간 접촉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추측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는게 무리가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자 사업승인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실행된다。

정부의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15일 녹십자·동양시멘트·동룡해운 등 3개사에 대한 승인 이후 7개월여만이다。

통일원은 이 조치가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나온 것은 4者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정지 및 분위기 조성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남북 경협사업을 생필품 분야 등으로 한정하고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을 규제했던 정부방침이 사실상 풀렸다。 삼성전자의 사업은 7백만달러를 투자, 조선체신회사와 함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통신센터인 1만회선 규모의 전자교환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또 3개사의 투자액이 단일사업으로 5백만달러를 넘어서 기존의 5백만달러 가이드라인도 무의미해졌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측의 은밀한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북한실장이 北京(베이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음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북한은 金正宇대외경제무역위부위원장、李種革노동당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미 접촉을 하고 있다。

4者회담의 진척상황에 따라 경협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북추가 식량지원 및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협사업 재개 거물들의 방북 문제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물꼬가 트인 남북경협 확대의 청신호가 지속될 수 있는냐 여부는 물론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金炳讚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28

유화조처로 4자회담 길닦기

정부 남북경협 추가승인 배경·의미

북서 원한 업종·업체 선정 관계개선 청신호

사회간접분야로 사업확대·투자한도 무너져

이상기 기자

정부의 이번 남북경협사업 추가승인은 4자회담 제의 이후 처음 나온 대북 유화조처로 북한의 4자회담 수용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통일원은 이번 조처가 "시범적 경협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번 조처가 갖는 상징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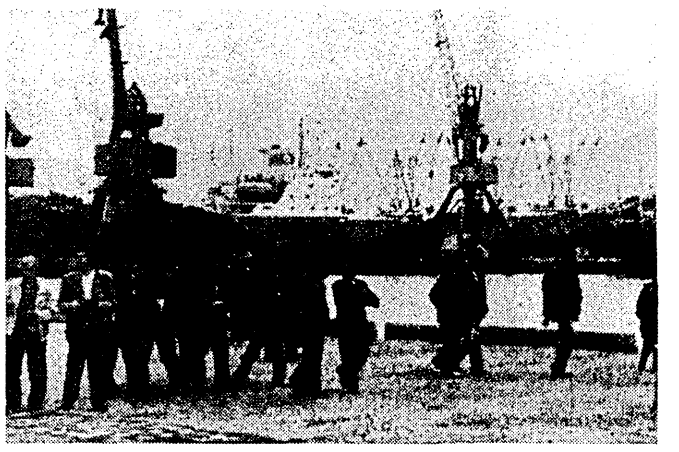
그동안 정부는 경제협력과 남북관계개선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 베이징 쌀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7개월 이상 경협사업 승인을 중단해오다 이번에 빗장을 풀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승인을 받은 녹십자, 동룡해운 등 대부분 경협사업자의 사업진척이 북한쪽의 소극적인 태도로 부진했으나, 이번 경협사업자는 북한이 사전에 적극성을 보인 업체와 업종 중에서 최대한 선정됐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통일원은 이번에 승인받은 업체 외에도 10여개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또 승인발표가 때마침 남북비밀접촉설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 나온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4자회담제의 뒤 북한의 공식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4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부처간 입장을 정리해 왔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지난 17일 "제주 4자회담제의 뒤 북한의 공식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어떤 추가조처도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 유화조처를 구체적으로 낸 것은 베이징 남북비밀접촉 내용 등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자회담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시점에서 대북지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제협력문제가 비밀접촉에서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이번 승인조처가 북한의 4자회담 수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승인조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생필품 위주의 경공업분야에 치중돼온 경협사업이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으로 확대된 점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나진·선봉지대 안 통신센터 건립·운영은 먼저 설치될 경우 배타적·독점적 운영이 가능한 선점효과를 갖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남북간 투자보장협정 등의 미비로 우리 기업의 투자안정성을 우려해 그어져온 5백만달러 규모 이하의 투자한도가 이번 승인에서는 사실상 무너진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는 향후 경협과정에서 북한쪽에 대해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내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통일원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갖고 있는 함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즉 북한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자칫 북한에 먼저 우리 패를 노출시킴으로서 4자회담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만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부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7일 3개 기업의 대북합작투자 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북한의 자유무역지대 관문인 나진항.

□ 대북경협 승인 3개업체 어떤사업 벌이나

나진·선봉에 대규모 통신센터 삼성전자

컬러TV등 전자제품공장 남포공단에 설립 대우전자

5백80만 달러 규모 금강산 샘물 합작생산 태 창

이봉현 기자

27일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 대우전자, 태창 등 3사는 다음 절차인 세부사업계획서 작성과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실무조사단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이 경공업 등 소규모시범사업 위주에서 통신 등 인프라투자와 전자·전기 등 첨단투자로 확대됨에 따라 나진·선봉에 통신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한화나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쌍용 등 아직 승인 받지 못한 업체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에 3개의 전화분국을 포함한 통신센터를 건립하고 전자교환기를 합작생산하는 것으로 모두 7백만달러 규모다.

삼성은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이런 내용의 의향서를 교환했으나, 금액이 5백만달러를 넘고 통신사업은 정부가 정한 경공업 위주의 시범사업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협력사업자승인이 1년 이상 미뤄져왔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북동지역의 통신사업권을 선점하려는 외국업체의 움직임도 활발히 이어졌다.

타이의 무역·통신업체인 록슬리그룹은 지난해 9월 나진·선봉 투자를 담당하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쪽과 이 지역의 통신인프라 구축에 장기적으로 6억3천5백만달러를 투자해 27년간 독점 운영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삼성은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나진·선봉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던 북한 경협담당 부서로부터 올 초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애초의 의향서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통첩을 받기도 했다.

삼성은 미국 스웨덴 일본 등의 통신업체가 이 지역 사업권을 완전 석권하기 직전에 사업자 승인이 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주)태창은 지난해 6월 이주영(36) 사장이 북한을 방문해 능라888 무역총회사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5백80만달러 규모의 먹는 샘물 공장을 건설키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북한이 올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지리적으로 연계성이 있어 주목된다.

태창 관계자는 "협력사업승인이 나면 8~10개월의 공장설립기간을 거쳐 현대시설로 생산된 생수를 동해안을 통해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전자의 남포공단 전자제품 생산사업은 평양과 가까운 북한의 핵심지역인데다 대우가 이미 섬유 분야에서 북한과 최초로 합영공장을 만들어 가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 사업이 급속히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 대북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단위:만 달러)

회사명	규모	사업내용
(주)대우 (협력사업 승인)	512	남포공단내 셔츠, 가방, 자켓 등 9개 사업
고합물산	686	의류, 직물, 수지병, 이불
한일합섬	980	스웨터, 봉제, 방적
국제상사	350	신발
녹십자	300	의약품(유로키나제)
동양시멘트	300	시멘트 유통기지(사일로)
동룡해운	500	항만하역설비(지게차, 크레인)
삼성전자(주)	700	나진·선봉지대 통신센터 건설, 운영
대우전자(주)	640	남포공단내 컬러TV,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주)태창	580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샘물 개발, 판매

* 자료:통일원

▽ 한국일보 1996. 4. 28

南北 첫 합작공장 가동

내달부터 大宇, 남포에 봉제섬유社 설립

공동경영진 구성 셔츠등 생산

대우그룹과 북한의 합영회사가 5월 본격 가동된다。남포공단에 세워진 이 회사는 남북 경협사상 최초의 합영기업으로 대우그룹은 이 회사 가동을 계기로 남한기업으로는 처음 평양에 지사를 개설한다。

27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대우그룹은 최근 북한의 정무원산하 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에 봉제섬유를 생산할 합영회사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고 5월중 본격 가동키로 합의했다。대우와 삼천리총회사측은 이 계약에서 양측이 각각 5백12만달러를 투자해 남포공단에 봉제의류를 생산할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3개 공장으로 구성된 이 합영회사는 북한근로자 1천3백19명과 대우측 29명 등 1천3백48명을 고용해 셔츠 블라우스 등을 생산하게 된다。임기 3년의 합영회사사장은 삼천리총회사의 쇼봉익사장이、부사장은 (주)대우 북한팀장인 朴瑃삼부가 맡고 양측 2명씩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측은 총선직후인 13일 북측과 계약을 하기위해 朴삼부를 중국으로 보내 삼천리총회사측과 접촉해 왔다。

대우의 한 관계자는 「남포공단의 연락사무소성격으로 평양에 상주직원이 근무하는 지사를 개설할 방침」이라며 『평양사무소에 근무할 상주직원의 규모는 10명내외、지사장은 민족산업총회사 부사장을 맡을 朴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는 2단계 경협사업으로 최근 金宇中회장이 폴란드에서 밝힌 컬러TV 등 가전제품공장 설립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李在烈·金炳讚기자】

3개공장 北근로자 千3백명고용

平壤에 支社도 첫 개설

▽ 동아일보 1996. 4. 28

北 나진 선봉 家電등 70개품목 유치

本報 「투자보고서」 단독입수

2千10년까지 10개공업구 조성 통신망 확충

【애틀랜타=李載昊】북한은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오는 2010년까지 21세기의 세계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국제교류 거점으로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가전제품 방직 식료품 전자자동화분야등에서 총 70개의 투자 유망 품목을 선정、이를 집중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애틀랜타 「한반도 통일」 학술회의에 참석한 李種革 북한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보고서」(총3백32쪽)에 의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에 확정된 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북한이 선정한 70개 투자 유망 품목은 △가전제품 잡화-조명기구 냉장고 구두 포장재 모피 완구 △방직-견직 양말 바지 피복 △식료-맥주 샘물 채소가공 빵 고기 수산물가공 △전자자동화-전자계산기 반도체 정밀자기 직접회로 건전지 무선호출기 초고주파소자 △건재화학-판유리 위생자기 타일 가구 제약 원유가공 △기계-자동차 조립 오토바이 전동기 △서비스-호텔 투자촉진센터 건설 등이다。북한은 또 이들 품목의 공장유치와 원활한 가동을 위해 2000년까지 나진 선봉 청진항의 화물처리 능력을 3천만t까지 늘리고 자유무역지대 안에 10개의 공업구를 조성하고 기존 선봉화력발전소 인근에 1백만㎾의 중유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북한은 특히 나진 선봉지구의 통신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천8백56만달러를 투입、평양~청진~나진~선봉~훈춘~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갖출 계획이다。

▽ 동아일보 1996. 4. 28

北 개방波高-경제난극복「청사진」

「나진-선봉 보고서」 주요내용

26일 처음 공개된 나진 선봉 자유무역 보고서는 나진 선봉 지역 개발과 투자에 대한 북한의 구상과 전략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개방의 물결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흥미롭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개발목표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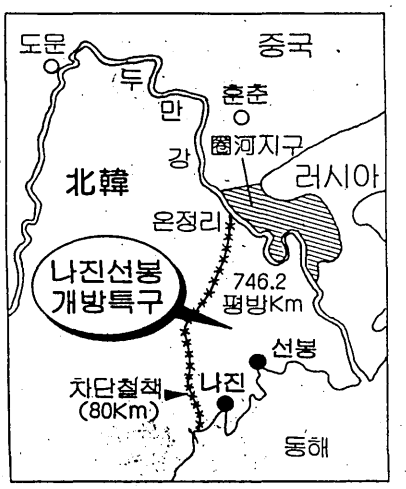
나진 선봉지구는 동북아의 국제화물 중개기지로,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수출가공기지로, 국제적인 관광기지로 개발한다. 2000년까지는 우선 나진지구를 집중 개발하고 중국 러시아와 도로 및 철도를 연결하여 1일 생활권의 수송망체계를 형성한다. 2010년까지는 나진 선봉항의 화물처리 능력을 1억t까지 늘린다.

▼관리 기구

무역지구의 관리는 대외경제위원회와 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전자는 개발과 정책을, 후자는 관리와 운영을 주로 담당. 출투자액 1천만원(북한화폐 기준) 이상, 2천만원 이상의 기간산업 건설은 모두 대외경제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배후 도시 건설과 공업구 조성

나진 선봉 웅상 홍의 상회 원정 두만강 우암에 배후 도시를 건설. 개발 지역의 인구는 30만명으로 하되 점차 1백만명으로 늘리고 선봉에 국제 비행장을 건설하고 선봉~니가타, 선봉~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 선봉~훈춘~연길~심양을 잇는 고속도로를 개설한다. 2000년까지 나진시 안주동에 건평 1만㎡ 규모의 통신센터를 세우고 4만회선의 숫자식(DGT)자동교환 설비와 자동통신교환(DDX) 설비를 설치. 국제위성통신지구국을 운영하고 이동통신 체계와 케이블 TV체계를 완비. 두만강 철교를 복선화하고 훈융과 중국의 훈춘을 연결하는 철교를 건설.



국제화물-수출-관광기지 종합개발

百만명배후도시… 항공로 대폭 개설

▼기간산업

나진 선봉 청진항의 접안, 화물처리 능력을 대폭 늘리며 선봉에 국제 비행장을 건설하고 선봉~니가타, 선봉~블라디보스토크 화물 운영하고 이동통신 체계와 케이블 TV체계를 완비. 두만강 철교를 복선화하고 훈융과 중국의 훈춘을 연결하는 철교를 건설.

▼소득세 재산세와 외화관리

북한 영역 안에 1백80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린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계설비와 같은 투자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북한 영역 안에서는 누구도 외화를 쓸 수가 없다. 외화는 돈자리(계좌)에 넣고 써야 하며 현금으로 쓸 경우 북한돈과 바꿔 써야 한다.

▼인력과 노조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종업원들의 노동 일수와 시간은 주 6일에 하루 8시간. 종업원들에게는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없으나 실적이 좋은 종업원에게는 상금 장려금 등을 줄 수 있다. 단 상금은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노조)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직업동맹은 단체행동을 통해 종업원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애틀랜타=李載昊〉

▽ 경향신문 1996. 4. 29

南·北경협 규제 완화

기업인訪北·사업자승인 확대

정부 對北유화 추가조치 검토

정부는 28일 3개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승인에 이어 기업인 방북허용, 남북경협 사업자승인 대상확대, 대북수재민 구호물자 지원확대등 추가적인 대북유화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인이 개별적으로 방북할 경우 북한당국의 초청만 있으면 모두 허가해 주기로 했으며 기업인의 집단적 방북이나 재벌총수방북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대북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수재민 구호물자에 대한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 쌀이외의 곡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개기업의 대북투자 승인이후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 보는게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어떠한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남북경협활성화의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4자회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정부는 남북경협및 대북지원문제를 활용, 북한을 4자회담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大根기자〉

▽ 한국일보 1996. 4. 29

財界총수 내달 잇단訪北

鄭周永·裵洵勳·姜晉求회장등 계획

전경련·貿協·貿公도 파견추진

정부 "經協활성화" 긍정적

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5월중 대거 북한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또 전경련과 무역협회등 경제단체들도 회원기업대표들의 방북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지난해 1월 삼성 대우등 대기업사장들의 방북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기업인방북이 5월중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의 방북러시는 4者회담제의이후 우리정부가 남북경협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재계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방북을 추진하다 무산된 鄭명예회장이 5월중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해 북한을 다녀온 裵洵勳대우전자회장、姜晉求삼성전자회장등 전자분야의 전문경영인들이 2차방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4者회담제의등 남북관계상황이 바뀜에 따라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동안 억제해온 재계총수들의 방북허용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鄭명예회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방북을 내락받았으나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보류돼 방북 허용에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경련과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경제단체들도 단체별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단체방북을 추진했던 무역협회도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등 기존채널을 통해 무산됐던 나진·선봉지역 방문을 재추진하고 있다。

무공도 연내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중소기업의 對北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이달초 崔鍾賢회장을 비롯한 전경련회장단에게 남북한정세와 경협동향을 브리핑、식량난등 북한실정을 설명하고 경협활성화를 당부한 바 있다。

【李在烈·金炳讚기자】

▽ 서울신문 1996. 4. 29

大宇 南浦합영공장 새달 가동

5백만달러 투자 최근 合營社 설립계약 체결

(주)대우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지난 92년부터 남북경협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류 및 봉제공장이 빠르면 다음달 북한 남포공단내에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과 무역업계 관계자는 28일 『양측은 최근 합영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계약에 서명、합영회사 이름을 「민족산업총회사」로 하고 북한노동자 1천3백여명과 대우측 30여명 등 총 1천3백30여명을 고용해 3개공장에서 셔츠、블라우스 등을 생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사상 첫결실인 대우합영공장은 남포공단내에 설치되며 대우측 투자규모는 5백12만달러이다。

(주)대우는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계기로 평양사무소 개설도 장기 과제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1996. 4. 29

"美서 4者회담 구체안 제시를"

北 金正宇밝혀

【워싱턴=金昌均기자】金正宇 북한 대외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27일 『(북한이) 4자회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金은 이날 朝鮮日報를 비롯、韓·美·日 3개국 6개 언론기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누구와 누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4자회담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金은 「미국이 언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金은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보를 26일 만나 양국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내가 경제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완화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토론했다』고 말했다。

金은 『미국의 對北제재는 美·北 관계개선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인 추가 완화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4. 29

얼어붙은 南北經協 "봄바람"

정부, 사업자 추가승인등 계기

시범 성격 벗고 첨단분야 확산

재계도 "기회놓칠라" 준비 박차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자 추가승인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경협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재계는 4자회담 제의등 남북간 정치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재개되는 남북경협이 그동안의 시범사업성격에서 벗어나 사회간접자본과 전기·전자 통신등 첨단분야로 확산되면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았던 남북경협이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갖고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우전자 등 3개사에 대한 사업자승인으로 투자규모상한이 철폐됐고 사업내용도 경공업등 소규모 시범사업위주에서 통신 등 인프라와 전기·전자등 첨단분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재계는 북한의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으로 對北진출의 교두보를 이미 확보한 서방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자세로 남북경협사업에 임하고 있다.

새롭게 펼쳐지는 경협전선의 선두주자는 역시 대우다. 대우는 남북 첫 합영회사 「민족산업총회사」를 5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의류등 봉제제품을 생산할 「민족산업총회사」는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 문을 열어갈 방침이다. 대우의 한 관계자는 『연락사무소는 민족산업총회사의 운영은 물론 대우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조사단 파견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진출에 나선 프랑스의 알카텔, 스웨덴의 에릭슨, 태국의 록슬리, 미국의 AT&T등과의 합작가능성도 타진할 방침이다.

의류 임가공에 주력해 온 LG그룹도 컬러TV 임가공을 통해 가전분야의 합작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TV시험 생산에 들어간 LG는 북한에서 조립된 20인치 짜리 TV를 반입하기 시작, 올해안에 2만대수준으로 남북이 손잡고 합작품을 생산한다는 역사적 무게로 남북경협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대우측은 조만간 민족산업총회사의 가동을 위해 홍콩은행을 통한 송금, 설비반출등 남은 절차상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중국 동남아등을 중심으로 생산품의 수출선 확보에 나섰다.

대우는 또 평양에 상주직원이 주재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설, 경협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갈 방침이다. 우선 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기점으로 금강산개발사업과 원산수리조선소등 대형 사업들을 구체화할 계획이고 쌍용도 사업규모가 너무 커 추진이 어려웠던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李在烈기자】

▽ 조선일보 1996. 4. 29

"식량부족해소 體制는 안정"

北 金正宇대외경제委부위원장 인터뷰

美의 對北경제제재 완화된 내용 없어

日北수교지연은 한국눈치보는 日탓

金正宇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오후 朝鮮日報, 美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일본의 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약 1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다. 『24~26일 美의 회, 국무부, 재무부, 기업들과 협의를 가졌다. 26일에는 美 국무부의 허바드 부차관보등과 좌담을 가졌다. 이같은 협의들은 유익했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허바드 차관보와의 만남은 공식적인 것이었나.

『그도 미국의 공식 관리이며, 본인 역시 북한의 공식 관리다. 두 사람간의 만남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는 기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4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4자회담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반도 南北간에는 92년 2월 이미 기본 합의서가 채택돼 세상에 공표돼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朝美 두 나라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제안은 어떤 도를 가지고 제안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측에 그같은 우려를 제기했는가.

『면담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됐나.

『4자회담에 대해선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으로서는 누구와 누구사이에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인지 그 내용도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논평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안을 언제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美에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나.

『이 문제는 중요하게 토론됐다. 대북제재는 美北관계 개선의 중요한 걸림돌이다. 미국은 95년 1월 제재 완화를 발표했지만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아직도 동결된 자금이 해제되지 않았으며, 마그네사이트를 제외하고는 對美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美北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측이 경제제재 완화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있는가.

『쌍방에 유익한 회담이었다는 점만을 거듭 강조하겠다.』

—올여름에 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 정부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추측도 있다.

『식량사정은 어렵지만 정치체제는 안정돼 있다.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인민들은 수령이 있고, 당이 있고, 인민이 있는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고 있다. 서방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식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오래 못 간다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난관도 극복해 낸 경험을 지니고 있다.』

—日北 관계 정상화 회담 전망에대해 설명해 달라.

『이 문제는 95년 있은 사회담과 조선노동당 사이의 합의서, 그전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日北 관계가 늦어지는 것은 일본이 독자적인 對北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실시한다면 양국 정상화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워싱턴=金昌均기자】

◇金정우副委長

▽ 동아일보 1996. 4. 30

4者회담 北유도책 검토 정부

기업 對北경협 추가승인 포함
전문경영인 訪北허용도 시사

정부는 4자회담 수용여부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표명이 예상 외로 늦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정부는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북한의 金正宇대외경제위부위원장과 李種革아태평화위부위원장이 귀국하고 난뒤 다음 달 중순경에나 북한측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대북제의에 대한 북한측 반응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은 남북대화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그만큼 북한이 4자회담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난 27일 3개 기업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같은 유인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원의 金景雄공보관은 이날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金국장은 또 『정부는 현 단계에서 재벌총수들의 북한방문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나 전문경영인들의 방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는 별도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식량지원 협의의 3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북한당국의 공식요청 △한반도내 회담개최 △대남비방중단의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원의 金英一교류협력국장은 이날 『현재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낸 10여개의 기업들은 사업의 필요성 등 객관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말해 정부가 추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金국장은 또 『정부는 현 단계에서 재벌총수들의 북한방문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나 전문경영인들의 방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4. 30

대우南浦합작공장 가동

빠르면 내달부터… 북한서 영업승인 받아
삼성 진로도 合作확대…對北투자 가속될듯

남북한 최초의 합작 봉제공장이 북한의 남포공단에 준공돼 빠르면 오는 5월중 가동된다.

이와함께 북한과 합작사업을 추진중인 삼성 LG 진로그룹의 對北(대북)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우는 29일 북한 조선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에 합작(합영)투자한 남포경공업회사의 명칭을 「민족산업총회사」로 정하고, 지난 3월 북한당국으로부터 영업개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남포시 황구구역 진흥리에 위치한 합영공장은 연면적 8천6백여평에 총투자금액이 1천50만달러에 이르며, 앞으로 1천3백여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 연간 3백만장의 셔츠와 60만장의 재킷, 가방 30만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우와 삼천리의 지분은 각각 50%이며 합영회사의 총사장은 북한측이, 부총사장은 ㈜대우가 맡고 이사회는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합영회사는 평양에 주재한다.

국내기업이 북한에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측의 영업개시 승인을 받은 것은 ㈜대우가 처음인데, 부총사장으로 내정된 ㈜대우 朴瑋(박춘)상무는 현재 평양에 체류하며 삼천리측과 합영회사 운영에 관해 협의중이라고 대우측은 밝혔다.

한편 朴永燾(박영수)부회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진로그룹은 평남 용강 등지에 1천만평규모의 축산·농업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쌍용그룹도 그동안 유보했던 나진-선봉지구 컨벤션 센터 건립 등 북한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고, 북한내 시멘트 제조기술 지원 및 북한산 시멘트 반입사업을 다시 추진, 조만간 전담팀을 나진-선봉지구에 보낼 계획이다.

〈朴世燾기자〉

▽ 경향신문 1996. 4. 30

대우 金회장 6월 訪北추진

南北 첫합영기업 남포공장 가동 맞춰
정부선 불허방침

金宇中대우그룹회장이 남북한 첫 합영기업인 북한 남포의 「민족산업총회사」 가동에 맞춰 빠르면 오는 6월쯤 방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대우는 (주)대우와 조선삼천리총회사가 합작으로 세운 남포공장 가동때 金회장의 방북 문제를 빠른 시일내 확정키로 하고 일정준비와 함께 정부당국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는 특히 합작기업운영에 관한 최종 협의를 위해 한달째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주)대우 朴瑋상무를 통해 이같은 뜻을 북한측에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은 그러나 金회장 등 재벌총수의 방북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許元淳기자〉

▽ 동아일보 1996. 4. 30

北 ADB가입 지지

재경원 협조의사 밝혀

정부는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기를 원하면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에서 북한이 ADB에 가입하기를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북한의 ADB 가입문제는 이번 총회의 공식안건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北美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ADB가입문제가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93년초 ADB 사무국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지난 84년이후 한푼도 상환하지 않는 등 국가신용도 문제때문에 가입이 무산됐었다.

▽ 동아일보 1996. 4. 30

주일미군의 요청은 구체적으로 △민간공항과 항만 사용 △미군에 대한 보급 수송 정비 의료 위생 숙박 식량 등 자위대의 후방지원 △주일미군기지 경비 등 9백개 항목이다.

▽ 한겨레신문 1996. 4. 30

북, 외자유치 새 법령 8월 공포

나진·선봉 개발관련‥신의주등 추가 개방가능성

내부이견으로 지연

【베이징=이길우 특파원】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해 획기적인 외자 유치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관계법령을 오는 8월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위해 김정일 비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노동당 중앙위원인 김국태가 법령 수정 작업을 총괄하고 있으나 내부의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개방 폭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관계자가 29일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의 나진·선봉 개방과 관련된 법규가 미비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8월 중순 공포를 목표로 대대적인 법규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는 새로운 관련법규는 외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과 함께 나진·선봉 지역뿐 아니라 신의주를 포함하는 서부지역도 새로운 개방특구로 선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당과 실무진 사이에 개방 폭을 두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난 1월 베이징에 개설된 '나진·선봉 투자자문유한공사'가 최근 문을 닫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월 김종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 등 국장급 6명을 베이징에 파견해 홍콩기업과 최초의 투자관련 합영회사를 세웠으나 최근 사무실을 임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일보 1996. 4. 30

재계 「北韓팀」재가동

南北경협 대비 조직정비·인력보강 착수

정부의 4자회담 제의에 이은 남북경협사업자 추가승인을 계기로 재계는 그동안 이름만 걸어놓은 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온 대북 전담사업팀을 재가동시키거나 확대개편하는 조직재정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미 팀을 해체했거나 종합상사내에 형식적으로 존치시켰던 기업들도 북한팀을 그룹차원의 조직으로 환원시키고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그룹종합기획실의 고위임원을 주축으로 경협을 본격 추진하고 대북사업을 실무자급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사에 설치돼 있는 북한담당의 특수지역팀 인력을 보강, 그간 유명무실했던 팀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룹차원의 북한전담팀을 삼성물산으로 이관해 북한담당으로 축소운영해온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북한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해당기업을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LG그룹은 북한전담팀을 두지않고 상사내에 있는 다른 지역팀에서 북한업무를 병행 취급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 실무급 인원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쌍용그룹은 사실상의 대북투자 상화철폐 조치로 나진·선봉지구의 컨벤션 컴플렉스와 시멘트 제조시설 재추진을 위한 조직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具熙千)

▽ 한국일보 1996. 4. 30

"北돌발변수 없는한 적극 뒷받침"

기업인 訪北계획 러시 정부 입장

전문경영인 실무차원 승인 원칙

총수·경제단체 "대화진척 봐가며"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3개업체 추가승인에 이어 기업인들의 방북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남북경협 확대 방안은 이미 20일 4者회담과 관련돼 개최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된 단계적 경협확대 조치에는 사업자승인과 기업인 방북을 비롯해 북한연락사무소 개설, 사회간접자본 사업확대, 신의주·해주·원산 등 북한 전역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협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굳이 방북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 당장 방북신청을 해오더라도 승인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재계에서는 기업총수, 개별업체 전문경영인 및 경제단체 회원대표들이 각종채널을 동원해 방북을 추진중이다.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3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실무차원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裵洙熙대우전자회장과 姜哲求삼성전자회장 등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차로 방북할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나진·선봉지구 투자조사단 파견계획을 비롯한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의 방북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4者회담의 상황진척에 따라 이들 경제단체의 방북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경제논리만을 고려한다면 방북 승인여부는 경제부처에서 처리할 일이나 남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 앞으로 전개될 남북상황을 감안해가며 문제들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추가 승인과도 연계시키고 있다.

문제는 기업총수들의 방북이다. 지난해 초 기업총수들에게 방북 자제요청을 했던 정부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총수들의 방북도 대북 유인력 제고나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더욱이 대우, 삼성, 쌍용 등의 기업총수들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방북을 자제해왔으며 특히 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이산가족 분야에서 방북을 추진하다가 정부와의 협의단계에서 막판에 신청을 철회했다.

남북관계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협력사업승인, 기업인 방북에 대한 지속적 승인은 대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척되느냐 역시 북한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볼수있다. 【金炳讚기자】

財界 對北경협 행보 빨라졌다

투자승인 3件허용… 경색국면 벗어나

재계의 남북경협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동안 경색국면을 맞았던 남북경협이 최근 남북한 실무자의 北京협의를 전후해 속도를 붙여가고 있고, 특히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통신사업 등 3건의 남북협력사업을 새로 승인하자 기업들의 대북 움직임이 경쾌해졌다。 각 그룹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경협의 남북당시자간 협의를 위해 대북한 채널을 풀가동하고 나섰으며 그룹에 따라서는 총수의 북한방문도 재추진중이어서 한차례 경협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삼성 訪北시기 협의중
현대 鄭씨 재방북 타진
진로 발전소 설립계획
대우 첫合營공장 설립
LG 北조립TV 반입
동양 시멘트공장 추진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합작사업으로 7백만달러를 투자해 나진·선봉지역 통신사업에 통신센터를 건설·운영키로 한 사업자의 승인이 남에 따라 남북경협에 좀더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특히 삼성전기가 생산설비를 반출하고도 진전을 보지 못했던 TV스피커 임가공사업이 최근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매우 고무돼있다。

삼성은 그러나 姜晋求회장 등 고위직의 북한방문보다는 실무협의를 위한 기술진 방북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姜회장 등 그룹임원진이 북한방문에서 합작사업의 대강을 잡아놓은 상태여서 방북을 하더라도 전무급을 대표로 한 그룹 실무진이 방북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정부의 방북승인이 나 방북시기를 북한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전자분야에서 컬러TV 오디오및 부품 통신망 냉장고 선풍기 히터 전화기 VCR 세탁기 청소기의 사업진출(기술이전 포함) ▲섬유분야에서는 신사복 바지 티셔츠 숙녀복의 임가공 ▲경공업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신발 낚싯대 어망 로프 등의 협력사업을 우선 진출분야로 꼽고 있다。 석탄 아연 철광석 금 등 광물자원의 공동개발과 항만하역, 창고 등 물류사업, 도로·항만·발전 등 인프라사업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대우그룹도 (주)대우를 앞세워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우는 이날 발표한 남포의 합영공장 설립건 외에 지난 27일 정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대우전자의 북한삼천리총회사와 합작사업도 서두르고 있다。

협력파트너가 삼천리총회사인점을 감안, 오래전부터 접촉해온 (주)대우로 하여금 대우전자와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남포 합영공장의 가동을 위해 평양에 체류중인 (주)대우 朴瑨상무가 대우전자 합작사업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의 합작사업은 삼천리총회사와 공장부지 근로자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협의가 끝나 사업승인이 나는 대로 가동할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룹의 설명이다。 또 (주)대우는지난해 7월부터 합작공장설립에 대비, 13명의 기술자들을 보내 해왔던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연수교육을 최근 마무리지었고 관련 기술자와 관리자 10~20명도 곧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지난 89년 鄭周永 당시 회장이 재계 총수로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개발문제를 협의, 남북경협의 물꼬를 텄던 현대그룹은 鄭명예회장의 북한방문과 남북경협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鄭명예회장의 2차방북이 성사되면 금강산 개발외에 ▲원산의 수리조선소 설립 ▲철도차량 공장 합작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이전에 논의됐던 경협문제를 북한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난해 鄭명예회장의 방북 가능성을 정부에 타진했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돼 무산됐던 현대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대로 방북신청서를 다시 내기로 했다。

LG그룹은 상반기중 북한서 조립한 컬러TV를 반입할 예정이고 조만간 고위 임원이 방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사업을 전담하던 상사의 특수지역팀을 올초부터 신설된 신사업실내에 옮겨 전열을 다가듬은 LG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북 채널을 풀가동하며 북한측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朴永壽 유통담당 총괄부회장이 북한을 방문했던 진로그룹은 평남 용강지역에 종합식음료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동양그룹도 시멘트공장 건립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업계팀〉

大宇의 南北 첫합영공장은 어떤 회사인가

南浦에 「민족산업총회사」… 지분율 50%
셔츠·가방등 年3,500만달러 수출목표

(주)대우가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와 남포공단에 설립했다고 29일 발표한 「민족산업총회사」는 남북한 최초의 합영공장이다。

(주)대우는 지난해말 중국 北京에서 조선삼천리총회사측과 남포경공업사업 합영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당국에 합영회사설립을 등록하고 지난달 「민족산업총회사」의 영업개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족산업총회사의 총사장은 삼천리총회사 김종익사장이, 부총사장은 (주)대우 朴瑨상무가 맡는다。 이사회는 대우측 3명, 삼천리측 3명등 모두 6명。

공장은 남포시 항구구역 신흥리에 위치하며 건물면적은 2만6천㎡다。 총투자금액은 1천50만달러이며 대우와 삼천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주)대우측은 설명했다。

「민족산업총회사」는 앞으로 1천3백여명의 근로자를 고용, 연간 셔츠 3백만장, 재킷 60만장, 가방 30만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 수출액은 완제품기준으로 3천5백만달러어치에 이를 전망이다。

(주)대우 관계자는 『현재 남포의 민족산업총회사는 생산개시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평양에 체류중인 朴상무가 삼천리측과 합영회사 운영에 관한 최종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포 합영공장은 지난 92년1월 金宇中대우그룹회장일행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셔츠·블라우스·재킷·가방등 9개 경공업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에 합의, 추진되었으며 그해 10월 우리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자승인을 받았다。 〈金柄憲기자〉

주요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내용

기 업	사 업 내 용
대 우	남포공단 봉제의류 등 경공업합작공장, 아연광산개발, 재봉틀합작사업
삼 성	스웨터, 식료품, 전자제품합작공장, 선박건조
현 대	면방직, 원산수리조선소건설, 금강산관광단지, 신발원피가공공장
LG	정유공장개보수, 봉제의류등 합작공장, 컬러TV공장
선 경	수산가공합작, 봉제의류
쌍 용	시멘트 합작사업, 나진·선봉지구 컨벤션 컴플렉스 건설사업
롯 데	백화점건립
효 성	봉제직물합작, 벽지, 재킷
한 화	PVC합작
두 산	골프장갑생산공장
코오롱	제직염색가공 봉제 원사합작
고 합	침구화섬직물
한 일	아크릴방적공장, 스웨터, 봉제, 신발공장
삼 미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미 원	식품사업및 생수개발, 조미료 참기름 간장공장
해 태	과실음료 가공공장
진 로	소주공장, 백화점건립, 과일넥타, 생선통조림, 유리병공장
동 양	시멘트 저장시설
강원산업	연탄공장
벽 산	슬레이트공장
한국강관	아연도금강관
녹십자	의약품 플랜트
나산실업	봉제
신세계	백화점건립
영창악기	피아노합작사업
태 창	금강산 샘물
신 원	신발 봉제

Ⅶ. 남북관련 동향

2. 사회·문화 동향

▽ 중앙일보 1996. 2. 2

대영호越北 기관장이 주도

당국, 폭력전과 형제 선상반란 추정

[서울=연합] 지난달 28일 함경북도 김책항(옛 城津)에 입항한 제주도 서귀포 선적 유자망 어선 제707대영호(39t·선장 고천권)월북사건은 이 배의 기관장 金정언(37)씨와 金씨의 친형인 金정현(42·전남 여천군풍산읍 신북리)씨 형제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자는 2일 대영호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정밀조사한 결과 당초 「선원 김명수」로 승선자 명부에 기재됐던 사람이 대영호 기관장 김정언의 친형 김정현씨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국은 金씨 형제가 각기 다른 곳에서 선원으로 일해오다 지난달 8일 대영호 출항때 처음으로 동승했으며 이들이 폭력 전과자들이라는 점, 일정한 거처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 형제가 당초부터 월북의도를 갖고 승선, 선상반란을 일으키고 월북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대영호에 동승했던 ▶곽민수(34)▶고영수(38)▶조수남(48)▶정학봉(41)씨 등 선원 4명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 국민일보 1996. 2. 2

北수해 긴급지원 결의 내달 피해조사단 파견

北황시천목사 "식량 3백20만t 필요"

마카오회의 폐막

北韓 황시천목사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 康永燮)은 앞으로 1년간 3백20만t의 양곡이 보충되어야 만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교회지도자를 비롯, 세계 7개국 교회지도자가 모인 「마카오 동북아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의 마지막 날인 1일 북한대표는 자체 제작한 흑백비디오를 통해 수해상황을 특별보고하고 세계교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선기독교도연맹 국제부장 黃時天목사는 보고를 통해 지난 94년 한해 1백2만t의 손실을 본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악의 홍수로 8개도 1백45개 시·군에서 5백20만명의 주민(이중 교인은 2천6백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백5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남한을 비롯, 이 대회에 참석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교회대표,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을 긴급지원키로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아시아·세계교회가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WCC는 오는 3월 북한에 피해상황조사단을 파견키로하고 이미 지난해 10월 북한에 다녀온 WCC아시아담당국장 朴庚緖박사를 피해조사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李昇翰)

▽ 서울신문 1996. 2. 3

北체육인 서울 초청

4월 세계생활체육총회 참석 요청

金KOC위원장 초청장 발송

金雲龍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2일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생활체육총회에 북한대표단을 초청키로 하고 조선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金위원장은 중국올림픽위원회를 통해 6일경 북한측 박명철위원장에 전달될 이 초청장에서 항공료 등 초청경비를 우리측이 부담한다고 밝히고 숙박 등 참가 안내서를 동봉했다.

金위원장은 북한측이 이번 총회에 참가하면 남북한 스포츠교류 협력을 포함한 당면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할 계획이다.

세계생활체육총회는 4월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데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세계스포츠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아일보 1996. 2. 2

"北수해 전쟁치른 것처럼 심각 식량태부족… 2백30만t 필요"

北황시천목사 일문일답

황시천목사

북한 황시천목사(조선기독교연맹 국제부장)와의 일문일답.

-피해 복구상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재민 의식주문제가 매우 시급하다. 도와주면 복구기간이 빨라지겠지만 몇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다』

-농지는 어느정도 회복됐는가.

『모래가 휩쓸려 피해가 크다. 모래를 걷어내도 지력회복이 문제가 될 것이다. 모래 등을 걷어내기 위해선 불도저등 장비가 필요하다』

-피해상황이 정말 심각한가.

『그렇다. 세계기독교인이 의약품도 많이 보내주었지만 식량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콩기름 사탕가루 등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론 딸이 신의주로 출가했는데 냉동고 자전거등 가재도구를 모두 잃었다.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정도이다』

-식량 부족분 통계가 들쭉날쭉한데….

『연간 알곡 수요량은 7백83만8천t이다. 지금 부족한 식량은 2백30만t이다』

-수재민들의 거처는….

『임시거처를 마련하긴 했지만 피해보지 않은 지역 주민집에서 살기도 한다. 조선 사람들은 남의 일도 내일처럼 여긴다』

한편 북한의 김남혁 대표는 기독교단체에 보내는 지원 식량 포장단위중 소단위 포장에서 성경구절을 빼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카오=尹得憲〉

▽ 국민일보 1996. 2. 6

북한에 식량 30만달러어치 지원

세계교회협 베트남서 선적…12일께 나진항 도착

식량난조사단 5명 내달3일 평양파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5일 한국교회를 비롯, 세계교회가 북한수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주 30만달러어치의 식량을 지원, 이 식량은 오는 12일쯤 북한 나진항에 도착한다고 발표했다。또 4월7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만든 예배문과 기도문으로 같은 시간에 서울과 평양에서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총무는 이날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지난달 마카오에서 있었던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교회협의회가 30만달러어치의 식량을 베트남에서 선적,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총무는 이와함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는 그동안 북한당국이 밝힌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세계교회가 지원한 물자가 수재민들에게 잘 전달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표 5명을 3월3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총무는 이 대표단에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국장인 박경서박사가 한국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며 조사단의 방북보고를 한국교회 앞에 한 뒤 한국교회 차원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총무는 또 한국교회 대표는 북한 교회지도자들과 별도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4월7일 부활절예배를 공동형식으로 드릴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응해 같은 예배문과 기도문으로 같은 시간 남한과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총무는 이와함께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WCC CCA등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교회간의 나눔과 연대를 위한 협력기구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昇翰〉

▽ 국민일보 1996. 2. 6

"북한 기독교인 신앙생활 자유롭다"

"대부분 나이든 사람 1만명… 가정집 방에서 예배"

강영섭기독교도연맹위원장 홍콩지회견서 주장

【홍콩=AP연합】북한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도수는 젊은이들의 무관심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북한 조선기독교도연맹 강영섭위원장의 말을 인용, 5일 보도했다。

마카오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에 참석했던 강위원장은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장은 또 『선교활동을 대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대1 대면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영섭위원장

그는 북한에는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인 약1만명의 기독교도가 있으며 이들은 8~10명 단위로 교회가 아닌 5백개의 「가정 교회」(가정집 방)에서 30명의 전업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천주교신자는 약 3천~4천명이라고 강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포스트지는 「연대회의」에 참가한 다른 북한 대표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종교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헌법에서 「모든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구절은 놔두고 「모든 인민은 종교에 반대할 자유를 갖는다」는 구절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포스트지는 또 북한이 81년 공식 사전에서 선교사를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파견되는, 종교의 가면을 쓴 침략의 하수인…」이라고 규정했으나 92년판은 단순히 「기독교를 장려하고 선전하기 위한 임무로 외국에 파견된 자」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2. 9

南北예술인 런던서 합동공연 추진

北참가 월말확정

／金龍雲기자

남북한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한국은 하나, 세계는 하나」가 9월13일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열린다. 일본 교토에 본부를 둔 국제예술가교류단체 「저니 이스트」(Journey East)와 런던대학이 공동주최하고, 세계은행이 후원하는 이 예술제는 故 尹伊桑 추모제형식으로 열리며, 남북한의 국악-클래식-무용이 공연된다. 이에앞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바비칸센터 전시실에선 남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미술가들이 참가하는 미술전이 열리고, 행사기간중 런던대-옥스퍼드대 주최로 한국학강연회도 마련된다.

◇90년 서울통일음악제에서 만난 黃秉冀씨와 成東春(왼쪽).

합동공연의 한국측 참가자로는 가야금의 명인 黃秉冀씨(이화여대교수)와 한국무용가 李愛珠씨(서울대교수)가 확정됐다. 또 윤이상의 외손녀인 바이올리니스트 진리나와 예음클럽 등 의 윤이상곡 연주도 추진중이다. 북한에서는 조선음악가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成東春이 이끄는 평양민족음악단이 참가할 예정. 黃씨와 성동춘은 예술제의 공동음악감독을 맡았다. 이밖에도 일본과 중국의 민속악기인 샤쿠하치-비파, 러시아민요 연주순서가 마련된다. 현재 북한의 참가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전에는 화가 曺德鉉(이화여대교수), 方惠子(재불), 金明姬-孫雅由씨(재일)의 참가가 확정됐고, 비디오아티스트 白南準씨도 출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학 강연회는 런던대 전임강사 박영숙, 옥스퍼드대 연구원 루이스 제임스등이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다.

「저니 이스트」는 일본 긴키대학 교수 로버트 코월첵이 설립한 동아시아 예술가단체. 90년 폴란드의 크라카우, 93년 모스크바에서 韓 日 中 露 예술가들로 음악-무용-미술전을 열었었다.

9월13일 「윤이상 추모제」형식

음악-무용-미술展 계획

▽ 조선일보 1996. 2. 14

北, 올림픽탁구예선 참가 통보

日탁구협회에 신청서-6명 선수명단 보내

【東京=聯】 북한은 오는 3월 일본 지바(千葉)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올림픽 아시아지역 탁구 예선에 참가하겠다며 선수명단을 통고해 왔다고 日 탁구협회가 13일 발표했다. 북한은 日 탁구협회에 팩시밀리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보냈는데 남녀 각각 3명씩모두 6명으로 남자의 경우 세계 랭킹 10위 이내인 李긍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조총련의 在日 조선인체육연합회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93년1월 도쿄에서 개최된 탁구대회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국과 북한은 지난 91년 지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리아로 합동팀을 구성해 여자단체 부문에서 우승한 바 있다.

▽ 조선일보 1996. 2. 13

대영호 송환 촉구 韓赤 대북 통지문

대한적십자는 지난 1월8일 실종된 「707 대영호」 선원들의 생사확인과 선원송환을 촉구하는 姜英勳총재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12일 발표했다.

통지문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한 접수를 거부해,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됐다.

〈金演光기자〉

▽ 중앙일보 1996. 2. 24

美國 올림픽조직委 직원4명 平壤체류 北韓출전 실무협의

미올림픽조직위원회 직원 4명이 지난 14일부터 평양에 체류, 북한측과 올림픽참가에 따른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 재미교포가 전했다.

이 교포는 북한측이 미올림픽에 참가하는 대신 참가에 따른 경비와 제반 편의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모든 올림픽 회원국이 참가토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1996. 2. 11

국제적 나눔기구 창설합의

南北기독교대표 마카오회의 결산

지난달 29일부터 2월1일까지 마카오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를 계기로 남북한 기독교가 화해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교회 대표들은 그동안 펼쳐왔던 「희년운동」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나눔운동」으로 전환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기구구성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발제를 통해 국제적 나눔기구 창설을 제안한 KNCC 金東完총무는 『교회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대해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 康永燮위원장은 △평화 통일을 위할 것 △세계교회가 참여할 것 △평등함 속에서의 연대 등을 조건으로 찬성을 표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조했다.

金총무는 올 부활절예배는 남북교회가 같은 예배순서와 같은 설교문으로 같은 시간에 드리자고 제안, 북한 대표들에게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또 공동기도문을 사용할 것과 헌금도 되도록이면 남북한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희망을 북측에 전달, 극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차원 北수해지원 선언문도

북한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남북한은 물론 세계기독교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수해지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鎭)

▽ 조선일보 1996. 2. 22

동해상서 49일간 표류 北韓人4명 日에 구조

사회안전부원3명 포함 망명 가능성 조사

【東京=李革宰·李濟기자】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요원 3명을 포함한 북한인 4명이 49일 동안 동해상을 표류하다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에 구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표류 경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치적 망명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일본 해상보안청 등에 따르면, 후쿠이(福井)현 해안보안부(MSA)는 지난 20일 오전 쓰루가港 에치젠 곶 서방 33㎞ 해상에서 표류중인 14t급 북한 어선을 발견, 쓰루가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다. 선박에는 박성일(38·선장) 최핸모(45) 김영일(22) 진동운씨(20) 등 20~45세의 북한인 4명이 승선중이었으며, 조사 결과 이들중 3명은 북한 경제개발지구인 나진-선봉지역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부 소속 요원이며, 나머지 1명은 일반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이현 해상보안부의 오모타니 총무계장은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조 당시 이들 전원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海難조건으로 구조했다는고 말해 이들의 망명 가능성을 부인했다.

▽ 조선일보 1996. 2. 22

北韓人구조 日관계자 문답

14t급 북한어선 「주소(?) 6052號」 표류 사건과 관련, 후쿠이(福井)縣 해안보안부측은 선원들이 구조되기 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후쿠이縣 해안보안부 오모타니 총무계장과의 통화내용이다.

—선원들의 건강상태는.

『탈수증 등으로 몹시 쇠약한 상태다. 21일 병원측에서 이들의 상태를 발표했으며 최소한 1~2주동안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

—선박은 어선으로 확인됐나.

『외관은 어선같다. 그러나 오늘(21일) 선박을 항구로 예인한 상황이어서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조사로는 선박의 소속을 밝히는 공식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과 일본 행정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물과 무전기가 없었다는 정보가 있다.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물의 경우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유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사실을 종합할때 망명한 것이란 느낌이 드는데.

『아니다. 이들은 표류어선에서 구조될 당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선장이 그렇게 말했는가.

『선원4명 전원이 북한귀환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海難(해난) 조건으로 구조한 것이다.』

—사회안전부 소속이라던데….

『선원들이 몹시 쇠약해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외관상 漁船… 4명전원 北귀환 희망"

【東京=李革宰·李濟기자】

▽ 서울신문 1996. 2. 24

북한 오륜 복싱출전

태국 아시아예선에 9체급 참가 신청

올해 애틀랜타 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북한이 오는 25일 열리는 올림픽 아시아지역.복싱 예선전(태국 방콕)9체급에 출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복싱연맹은 21일 『조직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북한이 라이트플라이급 부터 미들급까지 9체급에 엔트리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조직위는 선수명단 확인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93년 동계 아시안게임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모습을 감췄던 북한은 지난 달 애틀랜타 올림픽 참가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번 복싱 예선전 참가는 구체적인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북한은 복싱을 시작으로 다음 달 일본 지바에서 열리는 탁구 예선전과 오는 4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레슬링 예선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번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체급별로 2위안에 들어야 한다。한편 한국은 1·2차 예선을 통해 9체급에서 올림픽 본선 티켓을 획득, 이번 대회에는 티켓을 확보하지 못한 3체급에만 참가하며 남·북 대결 가능성이 있는 체급과 선수는 라이트플라이급의 배경석(경희대)과 라이트미들급 이완균(서울시청)이다。

▽ 서울신문 1996. 2. 22

北방문 재미교포 "애틀랜타五輪 참가조건 北, 美에 경비부담 요구"

金正日 생일(2·16)후 협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온 한 재미교포는 23일 미애틀랜타 올림픽조직위원회 직원 4명이 평양에서 북한측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내부 사정에 매우 밝은 이 교포는 『북한측이 미올림픽에 참가하는 대신 참가에 따른 경비와 제반 편의를 전적으로 부담해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미측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만난 미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올림픽 회원국이 참가토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이 교포는 덧붙였다。

〈具本永기자〉

▽ 중앙일보 1996. 2. 24

南北 종교지도자 北京회담

汎教界대표 20여명 26~28일 만나

교류·화해·식량지원등 논의키로

최원기 기자

남북한 종교지도자 20여명이 오는 26~28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민간차원의 남북 종교교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통일원과 종교계 소식통은 23일 『남측의 한국종교인협의회(회장 이재석)와 북측 조선종교인협회(회장 장재철)가 오는 26일 베이징에서 만나 남북한 종교교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인협의회는 유교·한국불교 태고종·천도교·원불교·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등이 망라된 국내 10개 종단 협의기구다.

성혜림(成蕙琳)씨 탈출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최초로 마련된 이번 접촉에서 남북한 종교지도자들은 민간차원의▶종교교류▶남북화해▶식량지원 문제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남북한 사이에 순수 종교교류를 점차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번 종교인 접촉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소나마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종교인들은 지난 연말부터 막후 접촉을 통해 베이징 회동에 합의한 후 최근에는 통일원으로부터도 최종 접촉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종교계는 지난해 10월 30일 미국 뉴저지에서 공동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마카오에서 북한 식량난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 경향신문 1996. 2. 27

南北종교인 오늘 회담

北京서 주제발표

남한의 한국종교인협의회(회장 이재석)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張在澈)대표들이 27일 북경에서 「남북종교인 회의를 갖는다고 통일원이 26일 밝혔다。

한국종교인 협의회 대표단 19명은 이 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북경에 도착했다。남북한의 불교·기독교·천도교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양측은 「조국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각각 종교활동에 관한 보고를 한 뒤 28일 함께 북경 종교유적지를 답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李大根기자〉

▽ 중앙일보 1996. 2. 24

새 南北관계 '물꼬' 기대

26일 北京 남북종교인 회동

최원기 기자

오는 26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남북 종교인 회동은 일단 기존의 남북 종교교류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지난해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활발한 종교교류를 시도해 몇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남북천주교 대표가 지난해 10월30일 미국 뉴저지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발표문을 냈다. 지난달 29일에는 남북 개신교 대표들이 마카오에서 만나 민간차원의 대북(對北)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또 이번 모임을 주도한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측도 『이번 모임은 정치적 의미가 배제된 순수 민간차원의 종교 교류』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접촉이나 北 黨간부도 대표로 참여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의미가 1백% 배제된 순수 종교교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 종교계가 따로 없는 북한에서는 노동당 간부가 종교단체 대표 명의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북측 대표로 나오는 조선종교인협회 장재철 회장만 하더라도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산하단체인 「조선천주교협회장」으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순수하게 남북 종교교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남한 종교인과 북한 당국자」간의 접촉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베이징 종교인 접촉이 비록 당국간 회담은 아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접촉이 원만하게 풀려갈 경우 그동안 막혔던 남북 문화·사회 교류가 한층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2. 27

통일 미술축전 10월 평양개최

코리아 통일미술축전이 오는 10월 평양에서 3년만에 재개되고 도쿄 등 일본의 수개도시에서 오는 9월 코리아통일특용-음악 축전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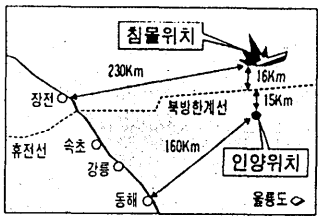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사장 具仲書수원대교수)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통일예술축전」이 오는 4월 하순 北京에서 북한록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과의 실무회담을 거쳐 이같이 실현된다고 밝혔다。

〈薛原泰기자〉

▽ 한국일보 1996. 3. 1

동해표류 北선원 2명 구조

시체 2具도 37명 탄 화물선 침몰



어젯밤 동해 입항 병원이송

29일 낮12시25분께 강원 강릉 동쪽 1백마일 해상에서 표류중 침몰된 북한 상선 염분진호(석탄화물선·9천9백55톤)의 구명정 1척이 발견돼 우리 해군경비함이 출동, 북한선원 2명을 구조하고 시체 2구를 인양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염분진호는 27일 하오 4시45분께 북한 장전 동쪽 1백40마일 해상(북방한계선 10마일 북쪽)에서 침몰하면서 긴급구조요청(SOS)을 했으며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이를 탐지, 우리 해군등에 구조를 요청했었다.

수색에 나선 해군은 28일 하오6시30분께 선원들이 구조된 곳과 같은 지점인 강릉 동쪽 1백마일 해상(북방한계선 9마일 남쪽)에서 구명정 1척과 신호탄등 염분진호의 구명장구 11종 99점을 인양했다.

선원들을 구조한 해군경비함은 이날 하오10시 10분 강원 동해항에 입항했으며 구조된 선원은 기관장비요원 李진규(34·청진거주)와 요리사 金일철(2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재 동해시 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해군경비함에 인양된 시체는 의사 金순종(48)과 전기요원 吳승택(34)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李씨등은 석탄을 싣고 남보에서 홍남으로 가던중 변을 당했으며 사고 당시 선원 37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의 송환및 신병처리 문제등은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나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洪潤五기자】

▽ 세계일보 1996. 2. 28

南北종교인회의 정례화 합의

北京 첫회의 통일문제만 논의…서울-평양 교환개최

【北京=金星路특파원】분단 후 최초의 남북한 범종교인회의가 27일 北京에서 개최돼 교착상태에 빠진 南北 당국간 대화및 민간교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우리측의 한국종교인협의회(회장 李戴錫)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張在哲)는 이날 북경 五洲大酒店에서 각각 12명, 8명의 범종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과제」라는 주제로 「남북종교인회의」를 갖고, 앞으로 남북종교인회의를 서울과 平壤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합의를 보았다.

회의는 이를 위해 오는 6월중 일본 도쿄에서 2차회의를 갖고 올 하반기에 열릴 3차회의부터는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키로 했다.

남북종교인회의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양측 회장명의 공동합의문을 통해 『조국통일이 우리민족의 최상의 과제임을 인정하고, 민족이 대단결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공존공영하는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데 종교인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종교대표자들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의 성업을 실현키 위해 자주 만나고 연대를 굳게 해 평화적 통일운동에 적극 대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2. 28

민간교류 물꼬트는 새전기

제1회 남북종교인회의 의미

北京에서 열린 제1회 南北종교인회의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한 범종교인회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지난해 北京쌀회담 이래 전면 동결된 南北정부간 대화 및 민간분야의 교류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南北 양측의 범종파적 대표들이 비정치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통일문제만을 질의논의한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향후 서울과 平壤에서 남북종교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함으로써 남북한 민간차원의 본격적인 통일논의를 위한 최초의 창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 종교인들은 이번 회의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만이 통일의 목표이며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산가족 파간 남북회의보다 한단계 높은 성과를 도출해 냈다.

정치성격 배제된 만남통해 동질성 회복

민족화해-평화정착통한 통일목표 설정

회의는 또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종교인통일기금」설치와 물질나누기 운동, 평화통일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키로 함으로써 정치적 이유 등의 특별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성숙된 민간교류의 새로운 場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측의 張在哲단장(조선천주교인협회중앙위원장)은 이날 한국기자들과 만나 『우리 민족이 분열된 것은 수치』라고 지적하고 『민족을 떠난 종교는 있을 수 없으며 남북간의 교류확대는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해 앞으로 북한측이 남북종교인회의를 통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우리측의 李戴錫회장은 『이번 회의는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의 범종파적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회의는 특히 북한에도 종교와 종교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李회장은 회의에 앞서 26일 통일원관계자와 함께 鄭鐘旭 駐中대사를 예방,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간 민간레벨의 교류확대 방안과 정부의 지원문제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특히 최근 權五琦통일부총리의 『複眼的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정부와 민간사이의 北韓觀과 統一觀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고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부드러운」 접근을 하기 위해 이번 남북종교인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京=金星路특파원〉

▽ 중앙일보 1996. 3. 4

구조된 北선원 2명 조속한 송환을 요구

지난달 29일 동해상에서 표류중 우리 해군함정에 의해 구조된 이진규(34·기관정비원)·김일철(28·요리사)등 두 명의 북한선원들은 최근 관계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하루빨리 김정일(金正日)의 품안에 돌아가고 싶다』며 조속한 송환을 요구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건강한 상태이며 자신들에 대한 향후 거취를 묻자 또렷한 목소리로 이같이 대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이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오는 15일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송환할 방침이다. 이들이 타고있던 석탄수송선은 「염분진호」가 아닌 「연분진호」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1996. 3. 3

北선원 2명 15일께 송환

韓赤 방침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는 지난달 29일 동해상에서 표류중 우리 해군에 의해 구조된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생존선원 2명과 사망자 시신 2구를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적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현재 관계당국에 의해 보호치료중이며 생존선원은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면 15일쯤 북한에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3. 5

南北직통전화 1년만에 "가동"

"北선원 오늘 판문점송환"

北선 지난2일 "돌려달라" 요청

대한적십자사(총재 姜英勳)는 4일 지난달 29일 동해상에서 해군경비함이 구조한 북한 화물선 생존 선원 2명과 사망자 시신 2구를 5일 오전11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기로 했다.

한적(韓赤)은 이날 姜총재 명의로 북한적십자회 중앙회 李성호 위원장대리 앞으로 보낸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적은 이와 함께 북한측이 억류하고 있는 동진호 대영호등 우리측 어선의 선원들을 조속히 송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북적(北赤) 李위원장은 지난 2일 한적 姜총재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선원들을 시급히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남북간에 직통전화를 통한 전화통지문이 오고 간 것은 지난해 2월23일 북한측이 서울에서 열리는 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키겠다고 통보, 우리측이 이에 관한 남북연락관접촉을 제의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측이 북측 선원들을 구조 5일만에 신속히 송환하는 것은 최근 金正日 전처 成혜림씨의 서방탈출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통지문 교환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韓赤통지

▽ 한국일보 1996. 3. 5

日,北선원4명 송환

【도쿄 = 연합】 지난달 20일 일본 후쿠이(福井)현 앞바다에서 표류중 구조됐던 북한 선원 4명이 4일 하오 쓰루가(敦賀)항에서 북한 화물선 돌봉호(2천7백16톤) 편으로 나진항을 향해 귀환길에 올랐다.

▽ 한겨레신문 1996. 3. 5

□ 북 선원송환 관련 '통지문' 교환 의미

김주석 사후 첫 직통전화 남북관계 앞날에 '청신호'

이상기 기자

정부가 4일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전화통지문 형식으로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선원 2명과 주검 2구를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기본조사만 마친 뒤 즉각 송환하는데다, 특히 이번 송환을 계기로 김일성 주석 사망 뒤 사실상 중단됐던 남북 직통전화가 재가동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한은 71년 직통전화 개설 이후 '직통전화 단절=관계단절 또는 경색', '직통전화 재개=관계회복 및 진전'의 상황을 거듭해 왔다. 실제 76년 판문점 도끼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80년 1월 3년반 만에 재개된 직통전화는 그해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을 성사시켰으며, 84년 4년 만에 다시 개통된 다음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이란 '역사'를 만들어냈다.

북한은 지난 2일 북한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생존 선원 2명과 주검 2구의 송환을 촉구했다. 이어 4일에는 한적 강영훈 총재가 보낸 대북 전화통지문을 접수했다.

지난 94년 7월 김 주석 사망 때의 조문파동 이후 우성호 송환과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한 우리쪽의 전통문 접수를 일체 거부해온 종전의 북한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이다.

지난해 이후 경색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한 간의 상황에서 이번 전화통지문 교환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와 미국 〈CNN방송〉 관계자 등을 통해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지문의 상호 교환은 북한의 태도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이수성 국무총리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통지문 발송 및 접수가 이미 송환계획이 세워진 이후 나온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용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정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 세계일보 1996. 3. 5

北 「韓赤전통문,수령 안팎」

냉랭했던 남북관계 봄바람부나

金日成사망후 처음… 北태도변화 기대

정부 "큰 기대는 안하지만 도움됐으면"

북한이 4일 오전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대북전화통지문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지난 94년 7월 金日成사망후 처음이다. 물론 작년 2월23일 정신대문제와 관련해 전통문이 오간 적은 있지만 남북관계와 연관된 공식접촉은 그동안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전통문 수령은 남북관계에 어떤 진전된 조짐을 암시하는 면도 없지않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북측의 전통문수령에 필요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북한은 지난 2일 선원 2명과 시신 2구를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對南전통문이 아닌 평양방송을 통해 전달해온 점으로 볼 때 공식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방북했던 美 CNN TV의 조던 부사장일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남북대화 「희망」을 전달해온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달국대 달국을 통한 정상적인 대화보다는 비달국 차원의 비정상적인 채널을 그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金日成사망후 처음 정상회담을 「유보」한다는 북측준비위원장 金容淳대남비서 명의의 전통문을 보낸후 우리측 전통문 수령마저 거부해왔다. 작년 수해지원과 우성호송환 촉구 내용을 담은 姜英勳총재의 대북전통문도 수령을 거부해 KBS 라디오방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 韓赤의 전통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세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예측이라 하겠다.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자기네 선원의 송환문제가 걸린 문제여서 전통문을 수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부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염분진호」 선원송환이 미진하나마 내심 관계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전혀 없지는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조 6일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원들을 북송키로 한 것은 작은 「功德」이라도 쌓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趙敏皓기자〉

▽ 동아일보 1996. 3. 6

北선원 2명 판문점송환

屍身2구 유류품함께

【판문점=공동취재단】지난달 29일 동해상에서 표류중 한국해군에 구조된 北韓화물선 염분진호 선원 2명과 시신 2구가 5일 오전11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다.

이날 송환된 선원은 李진규(34) 金일철씨(27)등 2명이며 표류 당시 인양된 25인승 구명정등 유류품도 함께 북한측에 인도됐다.

송환선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 우리측을 향해 고맙다는 말을 건넨 뒤 곧바로 북측 적십자사에 인도됐다.

이에 앞서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남측 제의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선원송환절차등을 논의했다. 이날 연락관 접촉은 지난 94년 7월 金日成사망으로 중단된 후 1년8개월여만에 처음이다.

南의 선물들고… 동해상에서 표류중 해군에 구조됐던 북한화물선 선원 2명이 5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기전 우리측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 동아일보 1996. 3. 6

남북연락관 20개월만의 접촉

北선원 판문점 송환 이모저모

북한선원송환을 위해 1년8개월여만에 열린 남북연락관접촉은 7분여만에 끝났다. 이날 접촉은 연락관접촉이기는 하지만 남북당국간 대화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모처럼 열린 당국간대화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개선전망과 관련, 관심을 모았다.

○…5일 오전11시정각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도착한 北韓선원 李진규씨는 갈색 체크무늬 잠바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대형 비닐 쇼핑백을 하나씩 든 모습이었다.

선원들 밝은표정…소감묻자 "감사합니다"

밝은 표정에 건강해 보이는 이들은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감사합니다」고 대답한 뒤 곧바로 대한적십자사 요원의 안내를 받아 군사정전위본회의실과 중립국감독위원회사이의 통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행.

분계선을 넘은 선원 2명은 손을 높이 들어 마중나온 북측 인사들과 포옹했고 북한여성 2명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이들에게 증정했다.

이어 곧바로 빨간천 명정에 「왕생극락(往生極樂)」이라고 쓰인 관 2개도 북측에 인도됐다.

○…이날 열린 연락관접촉은 지난 94년7월9일 남북정상회담 신변안전보장문제 논의를 위한 접촉이후 처음이다.

물론 정부당국자들은 이날 접촉이 곧바로 남북대화재개는 남북관계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아직 북한이 金日成사망이후 수위를 높인 대남비방을 줄이지 않은데다 남측도 현재로선 남북대화재개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이들 선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5일만에 돌려보낸 것은 북한당국이 화해의 메시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북한도 지난1월 비공식적으로나마 대화를 제의한 적이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에서 화해무드로 풀려가는 느낌도 주고 있다.

특히 4월총선이후 미국과 일본은 대북접촉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앞서 한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화해제스처를 보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4일 1년여만에 남북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이나 5일 1년8개월만에 재개된 남북연락관접촉은 의미가 있다.

〈朴濟均〉

▽ 한겨레신문 1996. 3. 6

탁구 남북교류 추진

세계선수권 단일팀 파견·교환경기등 제의키로

천영석 협회 부회장

최근 북한체육의 해빙 움직임에 맞춰 남북한 탁구 교환경기가 추진된다.

천영석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은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일본 지바에서 열리는 96애틀랜타올림픽 탁구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 북한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이곳에서 북쪽 관계자와 만나 협회 차원에서 남북탁구 교환경기를 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천 부회장은 또 내년 4월 영국 맨체스타에서 열리는 제4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에 남북 단일팀을 파견하는 문제를 북쪽에 타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탁구협회의 이런 방침은 지난 93년 11월 호주 멜버른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출전 이후 국제대회서 모습을 감춘 북한이 올해 초 애틀랜타올림픽 출전의사를 표명하는 등 다시 체육쪽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애틀랜타올림픽 권투 아시아 예선에 다녀온 체육 관계자들은 북쪽 인사들이 예전과는 달리 우리쪽에 상당히 유화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북쪽의 최근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아직 얼어 붙어 있는 남북 체육교류는 양쪽의 의지에 따라 다시금 활기를 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바 올림픽 탁구 예선전에 북한은 모두 6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데, 93년 5월 예테보리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3년 만에 다시 남북탁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천 부회장은 김희진 북한 탁구협회 전무와도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남북탁구 교환경기의 제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축구의 경우 지난 91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온국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려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나, 남북 모두 세계적 정상급 수준에 올라 있는 탁구는 아직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지난 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은 단일팀 코리아로 출전해 여자 단체전 세계제패의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김경무 기자

▽ 한겨레신문 1996. 3. 7

납북 동진호선원 1명 생존확인

북 '통일신보'에 수기 실어…황해북도 거주

지난 87년 1월 납북된 동진27호 선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양용식(당시 28살·전남 담양군 창평면 고곡리 585)씨가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양씨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지난 1월13일치 〈통일신보〉에 '내 삶의 보금자리'라는 수기를 자신의 사진과 함께 싣고 북한 여성과 결혼해 황해북도 은파군의 공장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밝혔다.

양씨는 이 수기에서 납북된 해인 87년 12월 제대 군인 출신 처녀와 결혼한 사실과 함께 "장인 장모가 아들처럼 돌봐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상기 기자

▽ 동아일보 1996. 3. 21

拉北 安목사 "구해달라" 호소

연변科技大 金鎭慶총장 만나 平壤교회 예배때 은밀히 요청

작년말

黃鎬澤·朴來正기자 延吉서 제2信

安承運목사

金鎭慶총장

지난해 7월 중국연변지역에서 목회활동중 북한에 납치된 安承運목사(51)를 연변과학기술대 金鎭慶총장(61)이 작년말 평양 봉수교회에서 직접 만났으며 그자리에서 安목사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미국시민권을 갖고 사업차 북한에 자주 드나드는 金총장은 20일 『작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중 일요일에 봉수교회로 예배를 보러갔다가 연길에서 알고지내던 安목사를 만났다』면서 『安목사가 은밀하게 「구원해주세요」라고 두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金총장은 安목사가 「구원」이라는 기독교식 표현을 빌려 「살려달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安목사가 납북된후 북한 방송등에 나와 의거입북했다고 말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외부인사가 북한에서 安목사를 직접 만난 것은 金총장이 처음이다。

金총장에 따르면 安목사는 이날 예배시간에 『의거입북했다』는 요지의 간증을 마친 뒤 옆자리에 다가와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손을 잡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구원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安목사는 이날 간증에서 『나는 연길에서 남한 안전기획부의 지령에 의해 움직였다』면서 『안기부가 북한 사람들을 유인 납치해 오라는 지령을 계속 내려 더이상 견딜수 없어 자진 의거 입북했다』고 종전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金총장은 安목사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며 『순교하시오』라는 말만 두어 차례했을 뿐 더 이상의 말은 나눌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安목사가 소속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측은 『연변과기대 金鎭慶총장이 봉수교회에서 安목사를 만났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 없었다는 말만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22

서울대-김일성대 학생대표 만난다

내달 미 통일심포지엄 모두 참가

이용인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김일성대 학생대표가 내달중 미국에서 열리는 통일 심포지엄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 "버클리대 학생서클인 한국학위원회(회장 권정현) 주최로 오는 4월19, 20일 열리는 '제5차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에 김일성대쪽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통보를 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여성오(23)씨와 총학생회 국제교류담당 이재성(26)씨 등 우리쪽에서 4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북한에선 김일성대 학생대표 권호웅(33)씨와 김일성대 사회정치학 연구실장 김령성씨 등 3명이 참가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열린 4차 심포지엄에선 북한쪽이 구두로 참가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불참해 서울대쪽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올해엔 북한쪽이 구두통보에 이어 지난 16일 버클리대에 참가자 명단까지 서면으로 보내온 상태라,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서울대쪽은 내다봤다.

총학생회장 여씨는 "이번 만남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북한의 쌀문제와 홍수 피해 등을 들은 뒤 학우들에게 전해주겠다"며 "특히 서울대는 10월15일, 김일성대는 10월1일 각각 개교 50돌을 맞기 때문에 만남의 의미가 더욱 각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17

월드컵 공동개최 북한서 부인

【도쿄=연합】 북한 올림픽위원회 장웅 전무이사는 15일 북한을 방문중인 가와테이 에이치 아시아테니스연맹 회장 겸 일본 올림픽위원회 국제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2002년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안을 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월드컵 공동 개최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장 전무이사와 가와테이 회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단된 북한과 일본의 스포츠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17

북한 올림픽 출전선수 첫 공개

선수42명·임원20명 구성

북한은 제26회 애틀랜타올림픽에 9개 종목에 걸쳐 선수 42명, 임원 20명으로 구성된 총 62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호에서 북한 국가체육위원회가 밝힌 올림픽선수단 규모와 함께 종목별 출전선수들을 처음으로 상세히 공개했다.

북한은 이미 올림픽 티켓을 획득한 복싱 라이트급(60㎏)의 이철을 포함, 역도 탁구 레슬링 다이빙 마라톤 사격 유도 체조 등의 종목에 선수를 파견할 계획이다.

역도에선 92바르셀로나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명남과 4위에 입상한 전철호의 출전이 유력하고 탁구는 이근상 김성희 최경섭과 김현희 김향미 두종실 등 신예들이 일본 지바 예선전에 참가한다. 레슬링도 11명의 선수가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 티켓 싸움을 벌인다. 이밖에 다이빙에 신경림, 마라톤에 문경애가 출전할 예정이다. 예선전이 끝난 사격·유도는 2명의 선수가 와일드 카드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

▽ 조선일보 1996. 3. 27

탁구 남북대결 승리

류지혜-김분식 각각 역전승…조1위

▒올림픽탁구 예선

한국여자탁구가 4년만에 이뤄진 두차례의 남북대결서 모두 승리했다.

류지혜(제일모직)는 26일 일본 지바포트아레나에서 벌어진 96애틀랜타올림픽탁구 아시아지역 예선전 여자부 E조 풀리그에서 북한의 김현희(평양안산고등중)와 1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2대1(21—23, 21—11, 21—16)로 역전승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류는 이로써 4전전승으로, 3승1패의 김현희를 제치고 각조 1위가 벌이는 상위그룹 8강 풀리그에 올라 올림픽본선 진출에 바짝 다가섰다.

또 F조서 김분식(제일모직)도 북한의 두정실(조선체육대)에 2대1(15—21, 21—14, 21—12)로 역전승, 3승으로 조1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탁구의 기대주 오상은(삼성증권)과 이철승(삼성증권)도 예선 D조에서 3승으로 상위그룹 8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김봉철(동아증권)과 이경선(현대)은 2승1패로 조2위를 차지해 하위그룹으로 떨어졌다. 한편 북한 남자탁구의 1인자 김성희(철도기관교원)는 예선G조에서 일본의 다사키에 1대2로 져 3승1패를 기록했으나 세트득실차에서 앞서 조1위를 차지했다. 최경섭(평양체육학원교원)도 예선 C조에서 3승으로 상위그룹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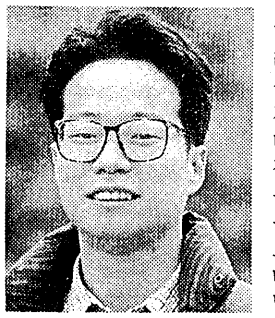
▽ 한국일보 1996. 4. 18

■ 신세대와의 만남 ■

美「코리아 통일심포」 참석 서울대생 이재성씨

"김일성大 학생들과 첫만남 분단의 아픔 함께 나누고파"

18일부터 美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코리아 통일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서울대 李在星씨(26·계산통계3·사진)는 분단이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처음으로 북한 김일성대 학생들을 만난다.



李씨는 출국전 『가슴이 떨린다』며 『무엇보다 군축문제에 대해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韓民族의 동질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내건 모처럼의 민간차원 모임에서 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축문제를 언급하려는 까닭에 대해 李씨는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군복무 당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겪은 경험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남다른 동기를 말했다.

李씨는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져 전운이 감돌았던 92년부터 94년까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군수보급병으로 근무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오른쪽을 쳐다보면 북한이, 왼쪽을 바라보면 남한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신기했다』는 것이 李씨의 당시 기억이다.

『쌍안경으로 북녘을 관찰하면 우리와 똑같이 생긴 북한병사의 모습이 지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지요. 그런데 슬픈 현실은 형제같은 그가 우리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이었지요』

이런 경험으로해서 실질적인 군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이후 李씨는 기회가 오면 이런 슬픈 현실을 꼭 얘기하리라 마음먹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남한에서 李씨외에 통일원 李봉조 정보분석관과 한국여성사회연구원 池은희원장이, 북한에선 김일성대 權호웅씨(33)와 사회과학원 통일문제연구소 金경남 부소장, 金령성 김일성대 사회정치학 연구실장 등이 참석한다.

/趙鐵煥기자

▽ 서울신문 1996. 4. 18

南北대학생 美서 첫상봉

서울大·金日成大 대표 6명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와 김일성대학의 학생대표가 미국에서 만난다.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 외곽 버클리대에서 열리는 제5회 코리아 평화통일 포럼에서다.

우리측 대표단인 李在星서울대 대학개혁위원장(26·계산통계3)、池銀姬한국여성사회 연구원장、李鳳朝통일원 제1분석관 등 3명은 17일 하오 대한항공편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북한대표단은 김일성대 학생위원회 편집위원 權호웅(33)、사회과학원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金경남(53)、김일성대 사회정치학 연구실장 金영성(51)등 3명으로 북경을 거쳐 이날 미국으로 떠났다. 〈金煥龍기자〉

▽ 경향신문 1996. 4. 16

南北학생 美서 토론회

서울大·金日成大 18일부터 「한민족」주제로

사회단체人士도 참석

서울대와 金日成종합대 학생등 남북 학생 사회단체인사들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大에서 만나 「한민족동질성 회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고 통일원의 한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위원장 權貞賢·24·여)가 주최하는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에 남북학생을 포함, 남북토론자가 3명씩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 남한측에서는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대학개혁위 李在星위원장(26·계산통계학과 3년)、池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李鳳朝 통일원 제1분석관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북한측 참석자는 權호웅 金日成대학생위원회 편집위원(33)、金경남 사회과학원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53)、金령성 金日成대학 사회정치학 연구실장 등 3명이다.

▽ 한국일보 1996. 4. 14

천주교 北韓에 병원 세운다

金추기경 계획밝혀

"敎人상대 모금추진"

한국천주교회가 북한에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金壽煥추기경은 13일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곧 교인들을 대상으로 건립기금모금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건립은 한국천주교회와 북한의 본격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한 金추기경의 방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천주교회는 지난해 11월 대구대교구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金相振신부를 북한에 파견, 이 문제를 북한당국과 협의한 바 있으며 독일천주교회를 통해 북한당국과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양측의 사업계획서나 구체적 건립일정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립 승인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나진·선봉지구는 북한이 91년 12월에 선포한 자유무역지대로 그동안 외국기업의 투자액은 2천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朴天浩기자】

나진·선봉에… 작년 한차례 訪北 협의

▽ 한겨레신문 1996. 4. 19

"반갑습니다" 반세기만의 악수

서울대-김일성대 학생대표 미국서 첫 만남

"통일 당기는 계기로" 벅찬 감격속 이야기꽃

버클리/지창은 기자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온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권호웅입니다."

17일 오전 10시께(한국시각 18일 새벽 3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이뤄진 서울대와 김일성대 학생대표의 첫 만남은 반세기 동안 이어진 분단 장벽을 금세라도 허물듯 뜨거웠다.

이들 학생대표의 만남은 두 학교 개교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특히 '운동권' 출신의 대학 총학생회 간부가 북한 대학생 대표와 합법적으로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감격에 찬 악수를 나누자 이국땅 공항 대합실에서는 우리 동포대학생들이 치는 풍물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권호웅(33·철학부5년)씨 등 북한 대표단 3명은 남쪽 대표단 및 동포학생들과 함께 대합실을 나오면서, 풍물소리에 맞춰 박수로 장단을 치고 두손을 높이 흔들기도 하는 등 벅찬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북쪽 대표단의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지난해처럼 북한 대표단이 불참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으로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던 남쪽 대표단과 동포학생들의 얼굴도 반가움과 기쁨으로 상기됐다.

권씨는 "북과 남 해외동포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 이번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치러 이번 만남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성(26·서울대 계산통계3)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다.… 김일성대에도 통계학과가 있느냐"고 묻자, 권씨는 "경제학부 안에 통계학 전공이 있다.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하자"고 화답했다.

이씨는 권씨에게 "군복무 시절 전방 철책선 근무를 했는데 당시 분단현실과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하자, 권씨는 "나도 군생활을 하다 김일성대에 입학해 나이가 많다"고 소개했다.

남북 대표단은 버클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내 로렌스과학관에서 버클리대의 연혁과 한국학생 현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 뒤 시내의 한국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자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한 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 회장 권정현(24·여·정치4)씨는 "오랜 친구와 동네어른을 만난 것처럼 편안하다. 이번 심포지엄이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한 학생대표들도 "심포지엄을 통해 남북한 학생들간의 가치관과 대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서로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18일 현지 동포학생들과 함께 '통일과 이민사회'라는 주제로 학생회의를 가진 뒤 오는 20일에는 '한민족동질성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제5차 평화통일 심포지엄에 참여할 예정이다.

▽ 서울신문 1996. 4. 20

南北대학생 "정례적 만남 추진"

美심포지엄후 합의문 발표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참석차 미국에서 만난 남북한 대학생 대표들은 18일 하오 버클리대 근처 유니버시티 루터란 교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워크숍을 가진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李在星(서울대 계산통계학과 3년)남측 학생대표와 권호웅(33·김일성종합대 철학부5년)북측 학생대표가 함께 발표한 합의문에서 이들은 『앞으로 남북한 학생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북한측은 오는 10월1일 창립 50돌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기념사업으로 서울대 학생과 버클리대의 동포학생들을 초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北측 "서울大·美동포학생 10월께 초청"

이보다 앞서 남북한 대표단은 이날 상오 주최측인 UC 버클리대 구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문제 등에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북한 사회과학원 통일문제연구소의 김경남부소장(53)은 『관련국으로부터 통일이 되도록 지지를 끌어내려면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도 중시해야하며 미국과의 관계는 시대의 추세』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식량난을 묻는 질문에 金은 『수해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고난의 행군정신」으로서 나눠먹으며 일하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고 답변.

북한 대표단의 유일한 대학생으로 군복무 7년을 마쳤다는 권호웅씨는 『남녘 학우와의 만남은 오래전부터 열망해온 일로서 한국 및 해외학우들의 통일열기를 확인해 북한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남측의 李在星씨는『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젊은이들이 나서야하며 통일논의에서는 평화정착과 군비축소문제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黃德俊특파원〉

▽ 조선일보 1996. 4. 20

조계종 총무부장-李庚宰신부 訪北

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申法陀스님(50·평불협회장)이 지난 16일 북한에 들어가 宋月珠조계종총무원장의 訪北과 부처님 오신날(5월 24일) 남북한 공동법요문 채택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申法陀스님은 중국 북경을 통해 入北,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朴泰鎬위원장과 남북한 불교계의 현안을 논의한뒤 오는 23일 귀국한다. 한편 성라자로마을 원장 李庚宰신부(70)도 지난 16일 북경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庚宰신부는 북한지역의 나환자 치료를 위한 방안을 북한측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다. 申法陀스님과 李庚宰신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정부의 방북승인 없이 방북신고서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李先敏기자〉

▽ 경향신문 1996. 4. 20

"통일 기여" 선언문 채택

南北학생대표 美서 심포지엄

【샌프란시스코=연합】 20일 열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 참석차 방미중인 남북한 학생대표들은 18일 저녁 한반도 분단이래 최초로 南北학생들이 함께 참석하는 토론회를 갖고 「조국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李재성 서울대학생대표는 이날 저녁 6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캠퍼스내 루터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통일은 민족공존차원에서 체제와 이념을 넘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 분단현실을 깨뜨리는 교육이념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측 金日成종합대의 권호웅학생대표는 『남북 청년학생들이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사적 비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선봉에 나서야 한다』며 『통일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통일분열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웅 북한학생대표는 오는 10월1일 金日成종합대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생들과 버클리대 학생들을 초청하는 문제를 金日成종합대 학생들과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 중앙일보 1996. 4. 21

美심포지엄 南北대표 주제발표

南대표 통일은 게임아닌 共存의 문제
北대표 민족 일체감이 統一의 밑거름

샌호제이=박신옥 기자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통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남·북 학생대표들과 재미(在美)학생 대표들은 19일 저녁 캠퍼스내 루터리안 교회에서 워크숍을 갖고 통일을 위해 청년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남·북 학생 대표들은 서로 서울대와 김일성대 초청 의사를 밝혔고 내년에도 자리를 같이 해 통일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성(서울대)=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개혁,특히 교육개혁이다.남북간의 차이,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남한에는)그것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학교교육과정이 통일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일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우리 남한 학생들은 예컨대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경제·사회를 배울 필요가 있다. 서로 알아야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통일은 게임이 아니다. 이기고 지는 일도 아니다. 그것은 공존의 문제다. 군비 경쟁은 사라져야 한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국방비를 우선 줄여야 한다.

◇권호웅(김일성대)=조선의 분단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민족적 비극이다. 젊은이로서 조국을 수호하고 통일을 이뤄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단결하면 통일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조선 젊은이들로 구성된 범청학련이 얼마전 채택한 강령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젊은이들의 국제적 연대를 형성할 것이다.남쪽 학생들과 버클리대 학생들을 김일성대 기념일에 열릴 회의에 초대한다.

◇최호성(버클리대)=중학교때 미국에 왔다.아이덴티티 문제는 이곳의 많은 내 친구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과제다. 한국의 통일 문제는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많은 한국계 아메리칸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남한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반쪽의 이야기일 뿐이다. 남·북한과 미국간의 문화적 교류는 한반도 통일의 주요 변수다.

◇권정현(버클리대·심포지엄준비위원장)=어느 기자가 심포지엄 위원회가 남과 북중 어느 입장에서 있느냐고 물어왔길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한국계 학생들은 버클리대학과 김일성대학간 학술교류를 추진중이다. 이미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아 예산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북간 교류를 추진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 한겨레신문 1996. 4. 21

남쪽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북쪽 "고려연방제 도입 필요"

코리아평화통일 심포지엄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버클리=지창은 기자】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이 20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법과대 강당에서 이재성 서울대 학생대표와 권호웅 김일성대 학생대표 등 남북 대표단 6명과 현지 동포 학생, 교민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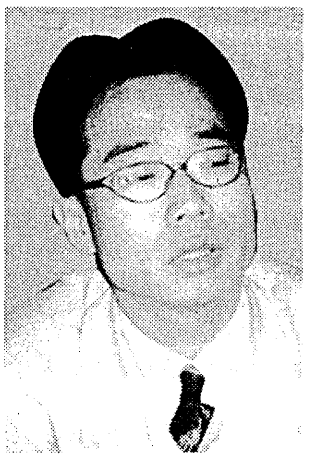
'한민족 동질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봉조 남쪽 대표단장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런 뒤에야 경제·사회·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교류와 협력이 확대·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남 북쪽 대표단장은 "조국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민족의 대단결"이라며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통일 방식은 고려연방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을 마친 뒤 이날 행사가 남·북, 해외 동포간 민족 동질성 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열기로 했다.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남북 대표단은 21일 오전 버클리 한인 감리교회에서 평화예배를 올린 뒤 22일 미국을 떠날 예정이다.

▽ 중앙일보 1996. 4. 20

美심포지엄 南北학생대표 회견



南대표 이재성

北대표 권호웅

10년 軍복무뒤 入學… 통일 진지한 논의를 권호웅
分斷, 젊은이에 큰 피해… 平和정착 나서자 이재성

샌호제이=박신옥 기자

이번 통일 심포지엄은 미국에서 남북한 학생대표들이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자회견에서 권호웅(33·김일성종합대) 북측 학생대표와 이재성(서울대)남측 학생대표는 각각 통일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權에게)학생치고는 나이가 많은 데.

▶학생 나이로는 33살이 많다고 하지만 생일이 11월이라 만으로는 32살이다.10년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입학해 졸업반인 5학년이다.결혼해서 딸도 하나 있다.

—(權에게)북측 대표 선발 기준은.

▶내가 북한학생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선발 기준은 잘 모른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생각은.

▶권=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북의 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 논의도 한다. 남녘 학우들과 만남은 오랜 바람이었다. 이재성 학생이 북의 학생들이 남의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는 것을 어제밤 신문을 보고서야 알게돼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질문을 내게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이=군복무중 비상출동 명령이 내렸을때 느낀 참담함을 잊지 못한다.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이들이다. 왜 젊은 세월을 총쏘는 것을 배우며 낭비해야 하는가. 그래서 통일 논의에 있어 평화정착·군비축소 문제도 다뤄야 한다. 남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젊은이들이 나서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진정 바란다. 남한의 모든 젊은이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는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기대는.

▶이=심포지엄을 계기로 남북 학생들이 서로를 알고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한다. 남한학생들이 북한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측 대표에게 전해주고 싶다.

▶권=앞으로 3,4일 같이 생활하는 동안 통일문제 뿐아니라 다른 여러면에서도 서로에 대해 잘 알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

▽ 동아일보 1996. 4. 27

통일원 "신청땐 검토"

통일원은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남북대학총장회담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나 공식적으로 교류 및 방북 신청을 해올 경우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4. 26

"北, 올림픽선수단 45명 파견"

장웅 올림픽委 총장

【애틀랜타=共同】애틀랜타 올림픽(7월19일~8월4일)에 파견될 북한선수단은 모두 45명정도가 될 것 같다고 북한체육계 고위인사가 25일 밝혔다.

대회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2명의 고위관계자를 데리고 애틀랜타를 방문중인 장웅 북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북한선수단은 24~25명의 선수와 20명정도의 임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4. 27

南北 대학총장회담 추진

大敎協 광복절전후 개최…학술교류 집중논의

전국 1백64개 4년제대학 총장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大敎協·회장 金致河중앙대총장)는 26일 올해 광복절 전후 남북한 대학총장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교협 주최, 통일원 후원으로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남북한 대학교육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朴弘 서강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이에 따른 혼란을 극소화하기 위해 남북 대학총장들이 만나 평화통일문제와 통일에 대비한 교육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朴총장은 『대학총장 교류는 지난 91년의 남북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정부당국 주도하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쌍방이 같은 수의 총장을 선임하고 장소, 시간, 운영방식은 양측 실무진이 의논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측은 이미 청와대에 남북대학총장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곧 통일원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鎔宇기자〉

▽ 동아일보 1996. 4. 30

訪北 李庚宰신부 귀국

성 라자로마을 원장 李庚宰신부(70)가 친지상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뒤 북경을 거쳐 28일 귀국했다. 李신부는 북한 체류중 황해도 서흥군 도면 능리에 살고 있는 친동생 李미자씨(51) 등 친지를 상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신부는 29일 『통일원에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겠다는 것이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4. 28

南北범청학련 총회

8월15일 서울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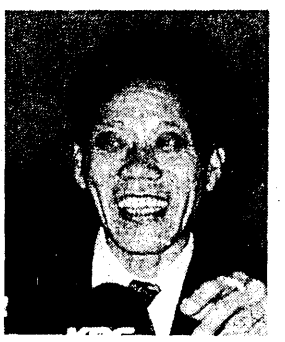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鄭明基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7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월15일 서울에서 남·북한 및 해외 청년대표 6백여명이 참석하는 「청년학생 연석회의 및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1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신문 1996. 4. 24

5차 평화통일 심포지엄참가 김경남 북 대표단장

"남북학생 첫 만남 더욱 빛났다"

한핏줄 민족 새삼 절감··김정일 곧 주석승계 절차 밟을 것



버클리/지창은 기자

지난 20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열린 제5차 코리아평화통일 심포지엄에 북한쪽 대표단장으로 참가한 북한 사회교육원 통일문제연구소 김경남(53·사진) 부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남·북과 해외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부소장은 남북고위급회담 수행원으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지난 91년 제1차 심포지엄 때도 통일문제연구소 위원 자격으로 미국에 왔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해외에서나마 통일문제를 가지고 남·북, 해외동포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까지 5차례의 심포지엄 가운데 이번에 남·북 학생이 처음으로 만나 더욱 빛이 난다. 남쪽과 해외의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니 우리 모두가 한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란 것을 새삼 깨달았다. 5천년 동안 이어온 민족의 동질성보다 50년간 갈라져 살아오면서 생긴 차이점을 더 중시하면서 '이질화' 논리를 펴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머나먼 이역 땅에서 동포학생들이 민족문화를 지켜가며 조국통일에 앞장서는데 대해 고마움과 함께 기성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남한과 미국 정부가 제안한 '4자회담'에 대한 견해는.

=제의가 나오기 이전에 심포지엄 참석차 평양을 떠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우리 외교부쪽이 이 제안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가 남쪽과 할 일이 따로 있고, 미국과 할 일이 따로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협정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이 할 일이지 여기에 다른 나라를 끼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 당비서의 주석직 승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비서가 이미 당과 군의 최고 영도자로 있고, 공식 승계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국가수반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또 인민들이 지난 30년 동안 김정일 비서의 영도를 받아왔으며 김일성 주석 서거후 정치가 안정돼 있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민들이 빨리 주석으로 추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 절차가 있을 것이다.

-남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

=선거가 남한 정부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남쪽내부 사정이라 큰 관심을 안 둔다. 이번 일에 대해 남쪽 언론들이 크게 보도한 것은 잘은 모르지만 '언론 이용'이 아닌가 싶다.

토론에 나선 閔丙天 서경대총장은 총장대표단은 남북한 동수로 10~20명으로 구성하고 대학발분, 통일교육 토론회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직접교류에 앞서 제3국에서 예비접촉과 실무대표자회의를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玄勝一 국민대총장등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측이 남북총장회담을 이데올로기 선전장으로 이용, 휴전협정 문제등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부처와의 마찰과 국론분열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의제는 대학교류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Ⅶ. 남북관련 동향

3. 북한, 미·일 관계

▽ 경향신문 1996. 2. 4

美, 對北정책 전환

경제난심각 판단 2백만달러규모 식량지원

"유엔기구 통해 무상지원" 국무부발표

「불량국가」명단서 빼…관계개선 박차

【워싱턴=박신홍특파원】 미 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2백만달러 상당의 식량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클린 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와함께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을 이른바 「불량국가(Pariah States) 명단에서 조용히 제외시켰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가 같은날 보도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호소에 따라 북한의 홍수피해를 구호하기 위한 2백만달러를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원은 국제개발처(USAID)의 외국재난지원국(OFDA)이 식량공급을 담당한 WFP에 무상원조하는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면서 『WFP가 지원의 통로로 선정된 것은 제공된 식량이 이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가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널 오브 커머스」는 종전에는 미국관리들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과 함께 「불량국가」 또는 「깡패정권」등으로 지칭했으나 최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연설에서 이같은 호칭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지난달 18일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에서 행한 美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 핵개발의 동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라크 이란 리비아등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노력은 중단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변화가 아직 수사(修辭)의 변화에 불과하지만 미국 對北정책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신문 1996. 2. 4

북, 미에 '테러 비난' 편지

미국선 2백만달러 대북 식량지원 공식발표

크리스토퍼 국무, '불량국가'서 북한 제외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북한은 지난달 30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 명의로 된 '테러행위 비난' 편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오는 4월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1년 외교부 고위관리가 테러행위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그동안 몇차례 걸쳐 이런 자세를 밝혀왔다. 미 정부는 북한이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북한이 '테러 포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 국무부는 해마다 4월 테러국가 명단을 발표해 왔는데 지금까지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목하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87년 이후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북한이 이처럼 테러 행위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낸 가운데 미국은 2일 북한에 대해 2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식량지원을 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홍수로 북한내 농업지역의 상당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식량난과 영양부족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인도적 입장에서 추가 식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미국 외교에 대한 연설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하지 않아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미국의 경제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가 1일 보도했다.

▽ 중앙일보 1996. 2. 2

修交교섭 再開하면 日,北 쌀지원 방침

일본정부와 여당은 1일 대북한 추가 쌀지원 여부를 북-일간 수교교섭 문제와 연계해 다루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공식으로 쌀제공을 요청해 올 경우에 한해 지원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수교교섭 재개를 쌀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셈이다.

연립여당은 오는 10일 야마자키 다쿠(山崎拓)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이토 시게루(伊藤茂)사민당의원,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郎)신당사키가케 의원을 한국에 보내 일본의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 한국일보 1996. 2. 4

對北관계개선 美구상 관련 주목

禁輸 추가해제등 美상응조치 압력 작용

北, 테러포기 美에 약속 안팎

북한이 지난달 말 공식 문서를 통해 미국측에 테러포기를 약속한 사실은 양측에 의해 베일에 가려져 왔다.

평양측은 대내외적인 체면 때문에 이를 비밀에 부치고 싶어한다. 한편 對北식량지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의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워싱턴은 서울이 배제된 北·美간의 또다른 흥정의 시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북한의 테러포기 선언에 함구하고 있다.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서울방문도 對北식량 지원논의가 목적이라는 백악관측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측이 준비중인 2단계 對北 관계개선 구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한층 설득력을 갖는다.

美행정부의 한 관리는 최근 『북한이 핵동결 유지라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선적인 안보이슈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의 이니셔티브를 취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하지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禁輸(금수) 조치의 추가해제등 미국측의 對북한 관계개선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북한은 테러국 명단에서 졸업을 결심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88년 2월 美국무부에 의해 테러국으로 지정된 뒤 매년 테러국 명단의 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美국무부의 테러리즘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도 일부 테러관여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항공(JAL)소속 요도호 납치범인 적군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美국무장관이 특정국을 테러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지도부 경질, 또는 정책의 변화로 그들이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는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테러국명단 삭제조치에는 상당한 시일과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특히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있는 의회를 설득한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측의 테러국 리스트 탈출 움직임은 한국의 반대를 무릅쓴 미국측의 대북 추가원조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클린턴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행보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워싱턴=李相石특파원】

▽ 한겨레신문 1996. 2. 9

"북·일회담 지금이 기회"

주일 중국대사 일에 촉구

【도쿄=박종문 특파원】 쉬둔신 주일 중국대사는 7일 "지금이 북-일 수교 교섭의 재개의 적기"라며 일본쪽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쉬둔신 대사는 이날 밤 도쿄 대사관저에서 야마자키 다쿠 자민당 정조회장을 비롯한 여3당 정책책임자들과 벌인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쉬 대사는 이날 △북한이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자립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 실태를 볼 때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는 게 현명하다는 점에서 북-일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비서가 연내에 권력을 승계해 새로운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도 회담 재개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1996. 2. 7

美, 對북한개입 계속추진

경제제재 추가완화, 중유·식량제공 검토

"지원통해 北개방 유도"

국가안보회의 결정

【워싱턴=朴斗植기자】 美정부는 지난달30일 백악관에서 한반도정책과 관련한 행정부내 주요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 對북한개입(Engagement)전략을 계속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앤서니 레이크 美백악관 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CIA)국장, 샬리 카시빌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 최근 북한軍 및 金正日정권의 동향, 북한의 식량난 및 제네바核협정의 이행 등을 종합평가,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크보좌관의 訪韓직전에 마련된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받았으며, 金泳三대통령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한 뒤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점도 크게 변화된 자세로 평가, 이번 기회를 서방사회가 적절히 이용할 경우, 북한사회의 개방과 한반도 평화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美정부는 북한에 대한 개입전략으로 ▲경제제재 추가완화 ▲중유 제공 ▲식량지원 등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1996. 2. 5

美, 北경제제재 추가 완화

韓國에 타진 정부반발 "南北개선 선행돼야"

완화내용

소규모 직접투자 교역허용
미국內 북한동결자산 해제
對北 송금액수규모도 확대

【뉴케트=朴濟均】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2단계완화조치를 실시하려 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발, 韓美간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중인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에게 미국이 경제제재완화 2단계조치를 취하려면 남북관계개선을 비롯, 스북한의 미사일수출포기 스전방배치 북한전력 후방이동 등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키로 했다.

미국이 실시하려는 2단계 조치는 스북한에 대한 소규모 직접투자 및 교역허용 스미국내 북한자산동결 해제 스대북송금규모확대 및 이를 위한 일부 관련규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준비 아시아 10개국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4일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미국의 1차 경제제재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나아진게 없다는 불만을 미측에 토로하고 있다』며 『미국이 2백만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2. 6

「경제제재 추가완화」 美, 對北 지렛대 활용

모종의 연계조건 北에 전달 추측

「遺骸송환」등 매듭땐 실현 가능성

지난 12월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 이후, 『美-北관계개선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韓-美 외교당국자들은 굳이 숨기지 않고 『경제제재 추가완화일 것이라고 대답해 왔다. 북한의 핵시설 동결이 유지되고 공급협정도 체결된 만큼, 북한에 뭔가 반대급부를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제재완화이기 때문이다. 美국무부 관계자들에게 『경제제재를 곧 풀 것이냐』고 물으면 『생각해 봐야한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당장 빗장을 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 설명한다. 미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렛대를 좀더 활용하고 싶어하며, 뭔가 북한이 미국을 만족시키는 한단계 조치를 더 취해야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으리라는 것이다.

작년 12월 공급협정 체결 직후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부차관보와 북한의 許鍾이 비밀리에 만났을 때, 「북한이 경제제재 추가완화 등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모종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우선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한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급부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美北간에 미군유해송환 협상이 벌어지고, 북한이 「테러포기 각서」를 보내는 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조치들중 한 두 가지라도 말끔하게 매듭된다면 미국은 2차 제재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외교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비교적 덜 껄끄러운 몇 가지 항목에서 성의를 보여 미국측의 반대급부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美北간에 미군유해송환 협상이 벌어지고, 북한이 「테러포기 각서」를 보내는 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조치들중 한 두 가지라도 말끔하게 매듭된다면 미국은 2차 제재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외교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金均기자】

러나 이것 역시 북한정부가 군부의 동의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美 "對北관계 南北대화 연계"

▽ 한국일보 1996. 2. 8

제재완화 결정된바 없어

연락소설치도 조만간해결 難望

로드美차관보 밝혀

【워싱턴 = 鄭炳鎭특파원】 윈스턴 로드美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는 6일 『對北경제제재 추가 완화를 비롯한 美·北관계의 개선은 남북대화의 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드차관보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동아태 6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미국은 미·북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남북대화의 진전에 종속돼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가 우방(한국)과의 관계를 앞질러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미국의 방침이 「先남북대화진전 後미·북관계개선」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최근 미국이 對北 식량원조를 결정하고 북한은 미국에 테러대상국 지정철회를 요청하는등 미·북관계가 일방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듯한 시점에 나온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는 또 『미·북연락사무소의 설치문제는 양측간의 기술적 애로점들 때문에 느린 속도로 진전되고있다』면서 『앞으로 두달 이내에 이런 애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對北 경제제재의 추가 해제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2. 15

美, 對北구호품 수출허가 폐지

국무부등 검토 「포괄적 무역규제 완화」확대 주목

【워싱턴 = 李相石특파원】 빌 클린턴 美행정부는 민간단체들의 對北식량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적인 품목에 대한 사전 수출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美국무부의 한 관리가 14일 밝혔다.

앤 캠바라 국무부 북한 경제담당관은 이날 「유진 벨재단」이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개최한 대북 수해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에 인도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수출)허가에 따라 구호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상무부, 재무부등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의 대북수출 완화조치 검토는 당장은 「인도적 품목」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포괄적 무역규제의 일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캠바라 담당관은 『이같은 조치가 대북 수해구호 기간동안에 한해 유효한 한시적인 조치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클 로스 세계식량계획(WFP) 대북식량원조 담당자는 『북한의 식량및 연료사정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부가 보유중인 식량마저도 고갈돼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2. 17

北 테러國명단 잔류

美행정부소식통

【워싱턴 = 李相石특파원】 클린턴 美행정부는 북한을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등과 함께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군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美행정부 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최근 美국무부의 연례 테러 보고서 작성자들이 국제테러 상황 등을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는 4월 의회에 제출될 이 보고서는 또 현재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진행중인 시리아도 테러지원국 범주에 잔류시켜 달 등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2. 21

"日-北韓 조속수교 추진"

무라야마 前日총리, 金正日에 축전

【서울=內外】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총리가 金正日의 54회 생일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일북 조기수교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고 평양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무라야마 전총리는 일본 사회민주당 당수 명의로 보낸 축전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에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日朝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과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조선일보 1996. 2. 12

美국무부 관리 訪北

金正日 생일과 기간겹쳐 주목

美국무부의 케네스 퀴노네스 북한담당관이 현재 북한을 방문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美국무부 정보조사국의 퀴노네스 북한담당관이 지난주 북한에 들어갔으며 2주일 여동안 북한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그는 영변지역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처리 및 보관작업 중인 10여명의 미국 기술자와 북한당국간의 연락관 역할을 주로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미국 정부관리로는 처음인 퀴노네스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金正日의 생일(16일)과 겹치는데다 미국의 2백만달러 식량지원,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경수로 공급사업 등 미북간의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미북관계개선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퀴노네스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목적을 갖고 2~3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직급이 사무관급 실무담당자이어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宋義達기자>

▽ 중앙일보 1996. 2. 24

對北 수교교섭 日서 극비타진

社民黨간부 주초 訪北때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일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후카다 하지메(深田肇)사민당 조직부장을 통해 북·일 수교교섭 재개문제를 집중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北京)의 한 서방 외교소식통은 23일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방북한 후카다 조직부장은 김용순(金容淳)노동당비서, 이종혁(李種革)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등과 만나 북·일 수교교섭 재개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며 『후카다 부장은 대외적으론 개인 자격이었으나 실질적으론 일본 정부를 대표해 수교교섭재개를 위한 북한측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후카다 조직부장은 특히 김용순과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적당한 계기를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양국간 수교교섭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일본측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한에 대한 쌀 추가지원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3. 1

北·美 관계개선 2단계회담

내달 24·25일 제네바서 개최합의

北미사일 禁輸 논의

우리정부서도 원칙적 양해

【워싱턴=鄭炳鎭특파원】 北·美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를 비롯한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핵문제에 이은 제2단계 北·美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미국은 북한이 최근 자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자제하는 대신 北·美관계의 진전을 요구해온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네바회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중동과 중남미등에 자국산 스커드미사일등을 무제한 수출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수출금지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묵살해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최근 추가 경제제재조치 완화등 北·美관계의 순조로운 진전을 전제로 미사일 수출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해왔다』고 회답이 이뤄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韓美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협의를 해왔으며 한국정부는 협상의 제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문제에 한정될 것을 전제로 회답을 양해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北·美간 2단계 제네바회담은 최근 북한핵 동결에 따른 北·美 관계개선 협상이 고착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한국일보 1996. 2. 22

北요구 美軍유해費 美서 지급거부

【워싱턴외신=연합】 미국 정부는 북한이 93~94년 미국에 인도한 미군 유해에 대한 보상금 요구액 4백만달러를 과도한 액수라고 판단, 거부하고 있다고 美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20일 밝혔다.

▽ 동아일보 1996. 2. 29

日외무성 외곽단체 내달중 北에 대표단

【東京聯】 일본 외무성 외곽단체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빠르면 3월중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도쿄신문이 외무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 28일 보도했다.

▽ 중앙일보 1996. 3. 1

미사일 수출통제체제 北가입 여부 관심

北-美 미사일 협상 전망

김민석 기자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은 핵문제 못지 않은 국제적인 골칫덩어리였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자 후속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해외 수출을 막기위해 협상을 북한에 제의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 북한은 협상을 계속 기피해왔고, 미국은 미사일 문제를 북한·미국 관계정상화의 주요 전제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오는 4월24일부터 제네바에서 미국과 미사일 회담을 갖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의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데다 미국과 적대적인 군사접촉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고 핵협상 때처럼 이 협상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수로문제 타결후 이처럼 상당기간이 소요된 것은 다른 한편으론 한국정부가 북·미간 직접접촉을 극력 반대해온 측면도 있는데 한국정부는 최소한 한국의 4월 총선후 북·미간 협상을 가지며, 의제는 미사일 부분에 한정하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선에서 이번 협상을 양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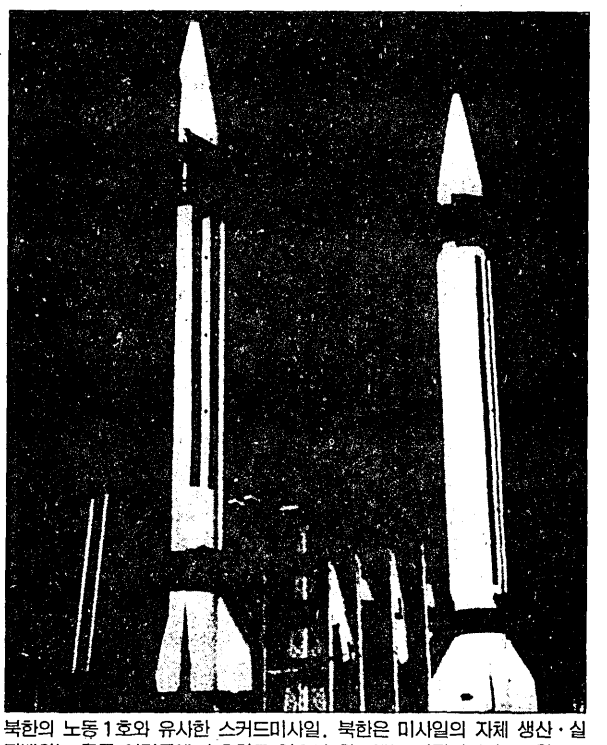
북한은 지난 75년 중국으로부터 스커드미사일을 들여와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81년에는 이집트와 「미사일 개발 협정」을 맺어 본격적으로 미사일개발에 착수했다. 북한은 지난 84년부터 사정거리 2백80㎞의 스커드미사일을 개발, 평양부근에 배치했고 이후 연간 1백기의 스커드미사일 생산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지난 87년 스커드미사일 1백여기를 이란에 수출하는 등 미사일이 북한 무기수출의 주요 품목이 돼왔다. 또 최근에는 사정거리가 3천~5천㎞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일대를 사정권에 넣어 주변국을 불안케 하고 있다.

年間 1백여기 생산능력 87년부터 이란등에 수출

정부 "구체적인 회담계획 미정"

이같은 상황에서 미사일을 핵무기및 화학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MTCR는 사거리 3백㎞를 초과하는 미사일및 관련부품과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수출통제기구로서 북한이 MTCR에 가입하게 되면 미사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입했고 이를 주요 외화획득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 순순히 MTCR에 가입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북한의 노동 1호와 유사한 스커드미사일. 북한은 미사일의 자체 생산·실전배치는 물론 이란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정거리가 5천㎞에 이르는 대포동미사일도 개발중이다.

미국측은 이번에 기필코 북한을 MTCR에 가입시키겠다는 생각이고 북한은 상당액을 울궈낼 속셈인 만큼 협상과정의 진통과 우여곡절은 불가피하겠지만 북한에는 북·미관계개선이라는 당면목표가 있으므로 결국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편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 돼온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해결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북한과 미국의 직접접촉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국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외무부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북·미간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간주, 긴밀히 협의해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북·미간 회담계획과 회담장소·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중앙일보 1996. 3. 6

美 고위인사 북한방문 군사안보 토론회 개최

미국 국무부의 보브 칼린 정보조사국 부과장과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등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관계자 및 북한전문가 일행 5~6명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 북한 외교부 관리등과 군사안보세미나를 가졌다고 정부 한 고위소식통이 5일 밝혔다. 칼린 부과장은 10여년 동안 북한문제만을 다뤄온 전문가로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있은 북·미간 유해송환협상에도 참여한 바 있다.

존 루이스 교수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채널을 개설한 군사외교전문가다.

▽ 중앙일보 1996. 3. 1

美, 對北 경제제재 완화

가능한한 交流넓혀 개방 유도

국무부 韓國과장 밝혀

샌프란시스코=박신옥 기자

데이비드 브라운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위해 대북(對北)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것이며 학술교류등 가능한한 많은 분야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 유명 정책 브레인 기구인 후버연구소가 스탠퍼드대에서 「김일성(金日成)이후의 북한 : 영속인가, 변화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최대목표는 북한의 「완만한 변화(soft landing)」유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경제제재 완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브라운 과장은 『북한이 급격히 붕괴해 군부에 의한 폭력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수 있는만큼 북한의 변화촉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상호간의 긍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문제와 관련, 『아직(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심포지엄에 참석한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교수도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촉진하므로 피해야 한다』면서 『현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경제 교류등을 통해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1996. 3. 1

美국무부 4월 제네바회담 부인

美, 미사일수출논의 제의

北 구체답변 없어

【워싱턴=李載昊】미국 국무부는 29일 미국이 그동안 제의해온 북한-미국간 미사일 회담에 대해 북한이 아직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개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월 하순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의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미사일 수출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말하고 『북한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물론 회담의 형식조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이 이뤄질 경우 미사일만을 단일 주제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북한 미사일 위협의 일차적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이해나 참여 없이 이같은 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1996. 3. 2

"北-日 修交협상 재개합의"

日紙보도 한국 총선후 평양-東京서 개최

【東京=李東官】일본과 북한은 지난 92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도쿄신문이 1일 北-日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북한측은 평양과 도쿄에서 교대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일본측에 제의해 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양측의 움직임은 이달중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연립여당 대표단의 방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 소식통은 양국정부가 작년 4월 이후 북경에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해왔으나 외무성측이 접촉내용의 공개를 기피해왔다며 북한측은 비공개접촉에서 새로 개시될 국교정상화 협상 대표로 차관급인 鄭泰和참사를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일본의 정권교체와 韓日관계의 악화로 현재 비공식 접촉이 일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4월 한국의 총선거가 끝나면 한국의 이해를 얻어 양측의 접촉이 본격 개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1996. 3. 3

美·北 수교교섭 가시화

내달중 美-北韓 「미사일 협상」개최 전망

日외무성 관리들도 이달하순께 訪北

미·북간 정치 협상과 일·북간 수교 교섭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일본과 북한은 각각 관계 진전을 위한 일정 마련을 위해 물밑 접촉을 해왔다.

미국과 북한간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의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로 확정됐으며 그 시기는 4월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일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대북한은 최근에도 이란 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참페루등에 스커드 미사일을 미사일에 대한 투명성을 여러번 식으로 확보해 나가 북 미사일 협상에 대해 원한번 한반도 질서를 왜곡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정거리가 최대 5천㎞까지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북간 미사일 협상도 인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은 3월중 방북한다. 92년 중단됐던 일·북간 수교교섭 재개도 입밖에 냈다는 징후중 하나이다. 그동안 주로 日정치인들이 평양에 들어간 적은 여러번 있으나 외무관리의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앞으로의 수교교섭 재개일정이 논의

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그 투명성을 그냥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일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대북한은 최근에도 이란 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참페루등에 스커드 미사일을 미사일에 대한 투명성을 여러번 식으로 확보해 나가 북 미사일 협상에 대해 원한번 한반도 질서를 왜곡

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정거리가 최대 5천㎞까지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북간 미사일 협상도 인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은 3월중 방북한다. 92년 중단됐던 일·북간 수교교섭 재개도 입밖에 냈다는 징후중 하나이다. 그동안 주로 日정치인들이 평양에 들어간 적은 여러번 있으나 외무관리의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앞으로의 수교교섭 재개일정이 논의

다. 그러나 의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로 확정됐으며 그 시기는 4월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일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대북한은 최근에도 이란 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참페루등에 스커드 미사일을 미사일에 대한 투명성을 여러번 식으로 확보해 나가 북 미사일 협상에 대해 원한번 한반도 질서를 왜곡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의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로 확정됐으며 그 시기는 4월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일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대북한은 최근에도 이란 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참페루등에 스커드 미사일을 미사일에 대한 투명성을 여러번 식으로 확보해 나가 북 미사일 협상에 대해 원한번 한반도 질서를 왜곡

구체적인 일정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의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로 확정됐으며 그 시기는 4월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일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대북한은 최근에도 이란 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참페루등에 스커드 미사일을 미사일에 대한 투명성을 여러번 식으로 확보해 나가 북 미사일 협상에 대해 원한번 한반도 질서를 왜곡

미·북간 미사일 협상도 인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은 3월중 방북한다. 92년 중단됐던 일·북간 수교교섭 재개도 입밖에 냈다는 징후중 하나이다. 그동안 주로 日정치인들이 평양에 들어간 적은 여러번 있으나 외무관리의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앞으로의 수교교섭 재개일정이 논의

한국, "한반도 질서 왜곡 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일본정부와 ▲수교전 일-북 경협 북가 ▲남북관계와 일-북 관계 조화 병행등의 원칙을 합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일-북관계를 추진하겠다』며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북관계와 일-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남북관계의 동결이 고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具聖宰기자〉

▽ 동아일보 1996. 3. 5

北노동당 訪日추진

日연립여당 비공식초청 검토

【東京=李東官】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연립여당측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訪日) 초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北-日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측은 지난달 말 밝혔던 루카다 하지메(深田肇) 사민당 조직국장을 통해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의사를 전달했으며 연립여당측도 노동당 대표단의 초청을 긍정적으로 판단,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북한-노동당 간부가 개인자격으로 비공식 방일한 일은 있으나 대표단 형식으로 방일한는 것은 성사될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연립여당측은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 비공식적인 형태로 초청하되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높은 형편이다.

▽ 중앙일보 1996. 3. 14

北-美간 장성급 회담 유엔司·국방부 否認

태국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해 북한과 미국간에 장성급 회담이 열렸고 여기에 한국측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유엔사령부와 국방부는 13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유엔사측은 『지난해는 물론 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정전위 본회담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뒤 정전위 본회담이 열린 적이 없어 양측 장성급 접촉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면서 『다만 94년말 미군헬기 격추사건 해결과정에서 양측 장성들이 만난 사실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전위원회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14

미, 대북 수출액급증 작년 15억6천만달러

미국은 95회계연도(94년 10월~95년 9월)에 북한에 15억6천6백만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미국 상무부의 '96년 대외수출통제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95회계연도중 수출허가를 얻어 북한에 수출된 상품은 31건, 15억6천6백만달러로 10만달러 미만에 불과했던 94회계연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한 수출이 크게 는 것은 94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대가로 수출금지 조처를 완화한 데다가 인도적 차원에서 밀, 옥수수 등 곡물을 수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봉현 기자

▽ 한국일보 1996. 3. 5

美、여행경고국서 北韓 제외

【워싱턴 = 鄭炳鎭특파원】 미국은 지난달 24일부터 북한을 그동안 지정해왔던 여행경고국(TRAVEL WARNINGS)에서 제외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가 없고 북한이 폐쇄적이어서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안전에 관여할 수없다는 이유로 북한으로의 여행을 자제토록 경고해왔으나 이를 해제함에따라 美국무부가 발행하는「영사정보철」에서 경고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의료시설 치안정보 형법내용등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1996. 3. 14

美, 對北제재 추가 완화

「인도적 물자」 정부승인 없이 민간지원 허용

【워싱턴=】 미국은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미국인이 제3국으로부터 「기본적인 인도적 요구」에 따라 물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추가 완화했다.

미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에 대한 구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 규정을 일부 완화시켜 지난 5일자로 발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개인이나 비정부기관도 역시 일반허가를 통해 미정부의 사전승인없이 유엔, 미적십자 혹은 국제적십자에 기금을 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미상무부 수출통제국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인 인도적 요구」에 따른 물자공급은 ▲건강 ▲식품 ▲의류 ▲거주 설비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가능하며 그것이 수출가능 품목이면 「기본적이며 소량」으로만 허용토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의료설비, 보건관련 실험장비, 의약품, 水源설비, 소규모 농수산·관개 설비, 농업실험 설비, 비료, 살충제, 종자, 의직물류, 직조기, 건자재, 개인공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 서울신문 1996. 3. 5

美·北 물밑접촉 "상당한 진척" 시사

美, 여행경고국서 北제외 배경

미국무부가 북한을 여행경고국에서 제외한 사실은 최근 미·북 화해기류에 편승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첫 구체적 완화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미국무부의 재외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인 「시민비상센터」(CEC)가 해외공관 및 정보기관들의 정보를 총망라하여 지정해오고 있는 여행경고국은 내란중이어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몇몇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외부적인 상황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해제조치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사자인 미국무부 측도 여행경고국 해제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양국간의 「상황개선」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때 제네바 핵합의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미·북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진전은 현재 양국간의 현안문제로 돼있는 ▲연락사무소 개설 ▲추가경제 완화 ▲신(新)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체제의 북한규제 철회 ▲테러국명단에서의 북한삭제문제 등에서 북한측에 유리한 분위기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포기 약속등 北韓평화공세 먹혀들어 선거앞둔 클린턴 「核합의」업적 선전 계산도

북한측은 그동안 지난 1월 미국무부에 테러포기 서한을 보낸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측이 좀기차게 요구해온 미사일개발 및 수출통제에 대한 협의에 응할 태도를 보였으며 또 미국측에 잠정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북한의 미국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련의 평화공세는 미측에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에 의한 핵동결약속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무부 관리들은 최근 『이제는 미국이 무엇인가 해야할 차례』라는 말을 해왔다. 특히 클린턴 재선전략의 최대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과의 핵합의는 무슨 수가 있어도 올11월의 선거때까지는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이끌어간다는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련의 완화조치들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한 연설에서 「부랑아국가」(Pariah state) 명단에서 북한을 슬그머니 제외시켰으며 지난달초에는 한국 일본 등 우방의 의사에 반한채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 2백만달러의 정부원조를 「인도적 차원」이라는 구실로 제공했다.

또 오는 4월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방문시 한국에도 들러달라는 초청에 대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을 분명히 했으며 미의회의 통과지연으로 난관에 처한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대금을 우선 일본으로부터 차입토록 하는 등 북한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여행경고국에서의 해제 역시 이같은 조치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워싱턴=羅潤道특파원〉

▽ 서울신문 1996. 3. 16

美北비밀접촉 없다 레이니美대사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는 15일 『미국과 북한간의 비밀접촉은 없으며, 미국은 한국과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니 대사는 이날 저녁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우호협회(회장 金尙哲) 초청 강연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평양에 개설될 미국연락사무소 소장으로 내정된 스펜서 리처드슨의 영변 방문은 사용후 핵연료봉 봉인작업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신문 1996. 3. 17

北韓노동당 간부 日초청 새달 訪日

【도쿄=姜錫珍특파원】 북한의 노동당 간부가 한국 총선이 끝난 뒤 4월중 일본의 연립여당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될 전망이라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16일 사민당(구사회당)간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러나 일본을 방문하게 될 노동당 간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 경향신문 1996. 3. 17

"北核·남북문제·미사일 北·美 관계진전과 연계"

클린턴

올 안보전략보고서서 밝혀

【워싱턴=연합】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96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北·美관계진전은 北核타결에대한 평양측의 계속적인 협조와 남북관계 개선및 미사일 확산방지문제 등과 균형있게 이뤄질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달 번 「개입과 확대에 입각한 국가안보전략」이란 제목의 연례보고서 아시아 부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금주 공개됐다.

보고서는 北核 제거노력이 北·美기본합의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발판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북한과 상호 정치·경제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의향과 동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같은 美측의 노력이 『핵문제 타결 및 남북관계 개선과 미사일 확산방지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에 대한 그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균형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핵으로부터 해방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이 변함없는 미국의 목표』라면서 『동맹인 한국 등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결의가 이같은 노력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의 경우 ≪10만 미군을 계속 전진배치하고 ≪東北亞국가들을 연는 집단안보체 구축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亞太경제협력체(APEC)를 발판으로 한 통상협력을 활성화하는데 美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1996. 3. 18

美·北韓 첫 미사일관련회의

4월말 개최 협의중

日 아사히신문 보도

【도쿄=姜錫珍특파원】미국과 북한은 오는 4월말 유럽에서 북한의 미사일개발및 수출문제를 둘러싼 첫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한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군부가 미국과의 미사일문제 협의에 대해 반발해 왔으나 최근 들어 金正日정권 내부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기본적으로 협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4월말 국무차관보 대리급을 대표로 해 유럽에서 첫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며 미측은 북한의 미사일관련 기술 수출규제(MTCR)체제 참가 문제를 협상에서 우선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세계일보 1996. 3. 21

日외무성단체 대표단 訪北

23일부터 修交협상 재개등 현안논의

【도쿄=田賢一특파원】일본 외무성 외곽단체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이 오는23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

20일 외무성에 따르면 대표단은 나가이 신야(永井愼也)연구소장대리와 한반도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慶應)대학 교수등 3명으로 구성된다.

대표단은 북한외교부 직속기구인 군축평화연구원의 초청으로 방북해 지난 92년 11월이래 중단되고 있는 일·북 수교협상을 비롯, 양국의 정치및 경제정세에 대해 북측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외무성은 마쓰나가 노부오(松永信雄)이사장겸 소장을 대표단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외교문제를 전담하는 일본정부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마쓰나가이사장이 방북하게 될 경우 한국정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나가이소장대리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 조선일보 1996. 3. 27

7월 修交본회담 목표

日-北, 실무협상 진행

【東京=李革宰·李濟기자】일본과 북한은 오는 7월 修交(수교) 본회담 개최를 목표로 활발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일본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미 지난 18일 日-北대표가 北京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으며, 5월까지 수차례 협상을 통해 본회담 의제를 확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北京협상에서는 또 양측 외교당국이 협상을 전담키로 했다.

▽ 경향신문 1996. 3. 19

美,對北제재 추가완화 추진

자유거래 용인방안 마무리 단계

【워싱턴=연합】미국은 구호차원을 넘어 사실상 본격적인 對北경제제재 추가완화를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美소식통이 17일 전했다.

美·北관계를 다루는 이 소식통은 美재무부가 지난 5일자로 해외자산통제 규정을 풀어 현금구호를 가능케하는등 對北제재를 사실상 추가 완화한데 이어 美상무부도 「인도적 목적」이란 명분으로 역시 「정부의 사전승인없는」 對北거래를 용인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무리중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3. 29

"적성국서 빼달라" 北, 美의회에 로비

워싱턴=진창욱 특파원

북한이 최근 주 유엔 대표부를 통해 워싱턴에서 본격적인 대미(對美) 의회 로비를 개시했다.

워싱턴의 한 북한 소식통은 최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고위 인사가 미 연방의원을 만나 미국의 교역규제법상 적성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방미 초청을 요청했다고 28일 본사 기자에게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3. 20

「무기확산 불량국」에 美, 北韓 거론안해

【워싱턴=연합】빌 클린턴 美행정부는 19일 97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배경설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를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北·美 기본합의가 국제적인 지원속에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 설명서는 이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리비아 및 이란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OUTLAW STATES)을 그 대상으로 지적했으나 북한은 제외돼 눈길을 끌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상정한 예산안은 국방비 2천5백94억달러(이하 지출기준)와 국제 문제 소요비용 1백92억달러를 포함하는 모두 1조6천3백50억달러 규모이다.

▽ 조선일보 1996. 3. 27

한국戰 美軍유해 송환

美-北회담 결렬

지난 1월 하와이서

【워싱턴=聯】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인수와 관련, 공동 법의학팀 구성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열었으나 북한이 많은 돈을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워싱턴 포스트紙가 26일(미국시각) 보도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93년과 94년에 인계한 1백62구의 유해의 대가로 4백만달러를 요구했으며 미국이 1백만달러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회담장을 떠났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와 관련, 美국방부의 제임스 월드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관은 결국 약 2백만달러에 숫자가 조정되기를 기대하며 북한이 공동 귀환 작업에 동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발굴방법이 조잡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유해송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다. 많은 경우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어졌으며 발굴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뼈와 섞여있는데도 한 사람의 유해로 표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 세계일보 1996. 3. 29

美, 對北규제 추가완화

수출통제 대폭 간소화

무역거래 라이선스 원칙 폐지

【워싱턴=연합】美상무부는 對북한 수출규제를 사실상 추가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수출통제 간소화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무부 수출관리국(BXA)은 상무장관이 93년 9월30일 美의회에 제출한 수출촉진조정위(TPCC) 보고서를 통해 기존 수출통제규정을 포괄적으로 재고할 것임을 약속함에 따라 현재로선 잠정적인 성격의 새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24일자(일부는 3월25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새로운 수출통제규정이 냉전후 (국제경제)환경에 보다 잘 부합하는 쪽으로 (수출대상)국가그룹군을 現반신으로부터 재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한 (통제)규정이 명시되지 않는한 여하한 (무역)거래에도 (美정부)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現수출 통제규정은 적절한 일반 라이선스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BXA에 의해 유효한 라이선스 또는 다른 권한들을 부여받지 않을 경우 어떤 수출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조선일보 1996. 3. 23

美、北에 유해송환 협상 제의

내달 뉴욕서… 北서 수용가능성

미국이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송환 문제와 관련, 최근 UN북한대표부와 판문점을 통해 오는 4월22일부터 5일간 뉴욕에서 美·北 협상을 갖자는 제의를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2일 『美국무부는 이달초 UN북한대표부를 통해 4월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에서 유해송환 협상을 갖자는 제의를 북한측에 전달했으며 이어 지난 20일 판문점에서 정전위 비서장 옴즈대령이 북한의 朴임수대좌(대령)와 만나 똑같은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이같은 제의는 북한이 지난달 중순 UN북한대표부를 통해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협상을 하자고 美측에 제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북한측은 이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제의가 실현될 경우 지난 1월 하와이 美-北 군사접촉에 이어 미국내에서 두번째 美-北 군사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 스펜서 리처드슨 美-北연락사무소장 내정자의 訪北과 다음달로 예정된 美-北 미사일회담 등 활발해지고 있는 美-北 접촉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된다. 〈庾龍源기자〉

▽ 중앙일보 1996. 3. 31

"北·日간 국교정상화 정당차원 교섭 중단"

自民黨 고이치간사장

일본 자민당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은 29일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연립 여당 대표단의 방북(訪北)으로 정부간 교섭의 기초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정부가 북·일간 국교정상화에 노력해주었으면 한다』며 북한과의 정당차원 교섭 중단 방침을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3. 31

아미티지 美前차관보 北초청 내달 평양방문

【東京=聯】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미티지 前국방차관보가 북한의 초청으로 빠르면 4월말 평양을 방문한다고 日교도(共同)통신이 30일 워싱턴發로 보도했다.

통신은 클린턴 정권에 비해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 계열 前정부고위당국자를 초청한데 대해 역측이 나돌고 있으나 오는 11월 美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미티지 前차관보를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30

미 협조요청 한국거부 북미 장성급 회담

지난 1월 미 서신보내

국방부는 29일 미국이 지난 1월 북-미 장성급회담의 성사를 위한 우리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1월 국방부 커트 캠벨 아태담당 부차관보 명의의 서신을 박용옥 정책실장에게 보내 "미국은 주한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대화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어 "북-미 장성급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 재검토작업이 긍정적 결과가 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박 실장이 때마침 한국을 방문한 캠벨 부차관보에게 "북한의 거듭된 북-미 장성급 접촉요구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가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되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상기 기자

▽ 동아일보 1996. 3. 28

北-日수교협상 早期재개

실무접촉서 확인

【東京=裵仁俊】북한과 일본은 지난 92년11월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협상을 공식재개하기 위한 준비협의를 이달 중순 북경(北京)에서 가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양측은 수교협상을 조기에 재개하는데 대한 공감을 확인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일본측은 이 준비협의에 외무성 아시아국의 관계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국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부쩍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도 남북대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춘다는 전제 아래 한국의 4·11총선 이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북한과의 정부간 대화창구를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 1996. 4. 1

北-美 19일 미사일회담

이틀동안 베를린서 1차회의 합의

核제외 무기문제 첫논의

정부, 주내 美國과 사전조율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대중동(對中東)스커드미사일 수출중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北-美미사일회담 1차회의를 오는 19, 20일 이틀간 베를린에서 열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달초부터 뉴욕주재 북한대표부 채널을 통해 북-미 미사일회담의 시기 장소 및 의제 등을 놓고 절충을 벌여 왔다.

북한과 미국이 공식적인 당국간 채널을 통해 핵문제외에 무기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미 당국간의 직접대좌는 지난 1월 하와이 미군유해송환협상이후 3개월여만이다.

이번 회담에 북한과 미국은 각각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며 북한대표단은 李형철외교부미주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관계자들을 주축으로 하고 군부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사일회담이 개최되는 베를린 현지에 한국정부대표단을 파견, 회담이 진행되는동안 韓美당국간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미양국은 이번 주안에 사전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한국측은 주미대사관을 통하거나 별도의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 미사일회담 담당인 미국무부 정치군사국의 아인혼 부차관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중 하와이에서 열리는 韓美日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미사일회담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사전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시리아 이란 등 중동지역국가들에 대한 미사일의 기술, 부품 또는 완제품의 수출을 중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가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미사일수출 중지조건으로 △미국의 대북(對北)제재 추가완화 △테러국가 리스트에서 북한제외 △미사일수출중지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일보 1996. 4. 1

北-美미사일회담에 교섭단 안보내기로

"南北대화 연계안시켜" 再확인

정부는 이달 중순 개시될 예정인 북한과 미국간 미사일회담에 우리측 교섭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북한과 미국은 오는 19, 20일 베를린에서 북한 미사일의 對중동 수출문제에 관한 첫번째 협상을 갖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北·美간 미사일협상은 일단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對중동 수출통제문제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사후에 결과만 통보받으면 되기 때문에 현지공관의 보고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주 중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협상계획을 설명받고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정부는 北·美미사일협상을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계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李秉璇기자>

▽ 경향신문 1996. 3. 30

"北·美 미사일협상 추진중"

로드 美차관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 기술 해외수출을 막기 위해 북한측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윈스턴 로드 美국무부 亞·太담당 차관보가 29일 밝혔다.

로드 차관보는 이날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언론인들과 가진 위성 화상회견 월드네트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로드 차관보는 그러나 『이에 관한 美·北간 접촉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양측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향후 접촉 결과가 주목된다.

그는 『미사일 문제는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이 외국에 비밀리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드 차관보는 또 최근 美군부와 행정부 사이에 북한 붕괴에 관해 인식차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군부는 최악에 대비하고 외교관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견해차일 뿐』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국무부 고위관리가 연락사무소 문제 협의를 위해 平壤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薛原泰기자>

▽ 한겨레신문 1996. 3. 31

미 전 국방차관보 방북 불투명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의 북한 방문 관련 보도와 관련해 그가 북한에 방문신청을 낸 것은 사실이나 방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내 한 북한관련 소식통이 3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이 아미티지의 방북신청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해온 바 없다면서 그의 방북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아미티지가 북한의 초청으로 이르면 4월말께 평양을 방문한다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 동아일보 1996. 4. 2

「禁輸」조건 반대급부 "흥정"

北-美 미사일회담

美의 추가제재완화등 난제… 성사 불투명

정부 "美-北접근 가속화" 우려 대책부심

북한과 미국이 오는 19, 20일 베를린에서 열기로 합의한 미사일회담은 한반도의 안보와 직접 관련있는 북한의 첨단부기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군사기술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스커드미사일문제를 협의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구소련(舊蘇聯)의 미사일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축적,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사거리 5백㎞의 노동1호 스커드미사일이 실전배치단계에, 1천㎞의 노동2호가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거리 5천, 1만㎞의 대포동 1, 2호 미사일도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동북아국가는 물론 태평양연안국들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70년대 후반부터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등 중동지역국가들에 스커드미사일 기술 부품 및 완제품 등을 수출해 왔다. 근년에 들어선는 특히 미사일부품 수출에 주력, 시리아 이란 등지에서 연간 5천만~1억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동(對中東) 미사일수출은 중동평화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미국의 골칫거리다. 따라서 미국은 지난 94년 北-美제네바합의 직후부터 북한에 미사일회담개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사일수출로 얻는 외화와 대중동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북한은 이를 거부해 왔다.

그러던 북한이 지난 2월부터 미국의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 은밀히 절충을 벌여온 끝에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회담에 응하게 된 배경에는 미사일수출중지의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게 될 「반대급부」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반대급부로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완화 △테러국가 리스트에서 북한 제외 △미사일수출 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기대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북제재 추가완화나 테러국가 제외는 미국내법상 미사일수출중지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금전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스스로 부담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수출중지로 이들을 얻는 것과 또한 중동평화유지에 부심하는 미국이 미사일수출중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북한에 접근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미사일회담 1차회의 직후 미군유해송환협상도 개최하는 등 정부도 총선이후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향적인 남북관계개선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1총선이후 북한을 둘러싼 한미일의 4각구도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朴濟均〉

▽ 조선일보 1996. 4. 4

北에 미사일 개발중단 요청

美, 노동1호 수출중지도 요구키로

【워싱턴=鄭昭】 미국은 오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에서 일본서부 지역 대부분을 강타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의 추가개발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미국정부의 한 소식통이 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19일의 쌍무회담에서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와 북한내의 미사일 배치문제 등도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미사일수출의 중단을 약속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같은 소식통의 발언은 노동1호의 추가개발중단과 수출중지를 요청할 경우, 미국은 직접적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중동국가들 및 일본측에 對북한 보상 계획에 동참토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동1호는 舊소련의 스커드 C 미사일을 개량한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1천㎞에 달한다.

▽ 한겨레신문 1996. 4. 4

北·日수교교섭 민간그룹 관여

日외무성 시인

【도쿄=辛允錫특파원】 일본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과 對北 쌀지원 결정과정에 자민당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 주변 민간인 그룹이 비정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외무성이 시인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일 보도했다.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對北교섭 방법의 불투명성을 따지는 신진당 요네다 겐조(米田建三) 의원의 질문에 외무성 가토 료조(加藤良三) 아시아국장이 『정부당국자 이외의 관계자가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4. 4

美軍유해 송환협상 北·美 이달말 再開

【워싱턴·도쿄=연합】 미국과 북한은 미사일 회담에 이어 미군유해 송환협상도 이르면 이달말 재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美소식통은 『미사일 협상과 별도로 유해 송환협상도 재개될 예정이라며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나 이달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유해 협상 재개와 관련해 美측에 아직 공식 반응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협상이 열리면 콜라룸푸르와 뉴욕중 한군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뉴욕이 유력시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에서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국내배치도 협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美국방부 간부의 말을 인용, 3일 보도했다.

▽ 조선일보 1996. 4. 3

美-北 미사일회담 일자-장소 못정해

【워싱턴=AP聯合】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미사일 회담의 일자, 장소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익명을 요구한 美국무부 관리가 1일 밝혔다.

美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자체개발및 수출, 특히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앞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동결시킨 94년 핵합의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점차적으로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었다.

그후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을 돕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으며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도 허용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5

유해송환회담 속개조건 북,발굴보상비 선행제시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북-미 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군 유해송환 회담이 속개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먼저 지금까지 송환된 미군 유해 발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놓은 것으로 3일 밝혀졌다.

▽ 조선일보 1996. 4. 4

日·北정부차원 修交협상 신호탄

90년 11월이후 중단

北京 극비접촉 배경·전망

日북한 수교(修交)협상은 92년11월 중단됐다. 그럼에도 양측은 北京과 싱가포르에서 만나왔다. 지난달 18일에도 北京에서 만났다. 그러나 이 회담은 의미가 다르다. 日외무성 벳쇼 고로(別所浩郎) 북동아 과장, 일본을 전담중인 북한 외교부 李철진이 참석한 이 회담은 3년4개월째 중단중인 日-北수교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초 평양을 찾은 日외무성 관계자에게 「수교교섭을 선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외무성은 「이제 외교 非전문가는 제외시키자」고 요구했고 북한은 동의했다. 그후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열렸던 北京회담. 절통한 여러 소식통들은 北京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두가지이며, 모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첫째 내용이 「중매인」이나 「정치인」을 배제하고 양국 외무부가 협상을 주도한다는 것. 바로 수교협상이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양측은 그간 중매인을 내세웠다. 조총련이 중매인이었다. 이어 금강산국제그룹 회장이며 金正日 측근으로 알려진 朴敬允, 그의 아버지 故요시다 다케시(吉田猛)가 맡아왔다.

요시다는 스위스에서 日-北 중개무역을 알선했고, 지난해 3월 日연립여당 후쿠자와 다이시로(福澤諭吉)의 4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4월 협상 대표자와 시기였으며 협상해보자는 것이 첫째 합의내용이었다. 자민당의 對北창구였던 가토 간사장,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정조회장이 지난달 잇따라 『日-北교섭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공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합의내용은 5월말까지 본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을 끝내고 金日成 3주기가 지난 7월말쯤 본회담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日측은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여성 李恩惠문제 ▲핵의혹 ▲식민지배 배상 ▲회담장소 및 시기 ▲납북대화 재개 등 본회담 의제를 5월말까지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합의된 것은 나머지 의제들은 계속 절충하자는 수준으로 잠정합의됐다.

한편 北京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對한국 전략도 밝혀졌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남북한은 북한 삼천리총공사, KOTRA(한국무역공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北京서 접촉중이다. 그러나 「실무차원」 접촉은 하지만 金泳三정부와 「공식대화는 안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전략임이 드러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즉 남북회담 본회의는 안할 것이며, ▲7월 金日成 3년상 끝난뒤 ▲미전향 간첩석방 ▲金日成에 대한 사죄 등의 조건을 버리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기본전략은 일본과 수교교섭은 본격화시키면서 한국에는 들어주기 곤란한 조건만 제시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東京=李革宰·李濟기자】

▽ 세계일보 1996. 4. 5

日·北 修交회담 재개 합의

교도통신 보도 韓國총선 끝난뒤 北京서 개최

지난달 北京 비밀접촉서

【도쿄=연합】 일본은 92년 11월 이후 4년 가까이 중단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 총선이 끝난 뒤 차관보급 예비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18일 北京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벳쇼(別所浩郎) 동북아과장이 북한 외교부 일본담당 간부와 극비접촉을 갖고 수교협상 재개를 위해 작년 3월 연립여당 방북단과 조선 노동당간에 이뤄진 4당합의 원칙을 고수하며 교섭 전제조건을 앞으로 좁혀나간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차관보급 예비절충을 가질 예정이며 장소는 北京이 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도 이와 관련, 3일 기자들에게 『정상적 협상을 향해 예비적 인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면서 북한과 접촉을 벌이고 있음을 시인했다.

▽ 문화일보 1996. 4. 6

北韓대표단 오늘訪日

12일까지 「국교정상화 회담」再開 협의

【도쿄=연합】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일본 아이치(愛知)縣 日·北韓친선단체의 초청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교도(共同)통신이 4일 보도했다.

대표단은 노동당 중앙위 姜鐘勳부과장을 단장으로한 3명이며 아이치현 등을 시찰한 뒤 10일에는 日·北韓 우호의원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중단상태인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를 벌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4. 4

北-美 회담 한국참여시킬 용의

방콕 北대사관 밝혀

【방콕=연합】 방콕주재 북한 대사관은 4일 북한이 북한군(조선인민군)관문점대표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억지하기 위해」 북한이 제의한 잠정평화협정을 미국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관문점대표부대변인 성명을 입수하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알지못하나 만약 北-美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체할 잠정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은 앞으로 평양측과 워싱턴측간에 열릴 평화회담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동아일보 1996. 4. 9

美 「對北 인도적지원」 규제해제

21일부터 구호식량·현금등 제공 자유화

【워싱턴=李載昊】미국 (對)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었다.

이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지난달 재무부의 사전허가제 폐지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이로써 미국정부는 구호용 식량과 현금 등 북한에 제공되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제공에 대한 법적 제한을 사실상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낼 사람이나 단체는 앞으로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호단체를 통해 곧바로 이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미 상무부는 그러나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물품을 받아서 전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금까지 공신력있게 대북한 원조사업을 해 왔거나 △북한 현지에서 구호물품의 분배를 확인,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국한키로 했다.

미 상무부는 또 현장확인을 위해서도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상주직원이 현지에 파견돼 있거나 △상주직원이 없을 경우 기관 또는 단체대표가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기관이나 단체가 북한 당국과 현장 확인을 위한 특별협약을 맺도록 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8일 미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식량지원이 더욱 늘어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정부의 사전 허가없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은 △보건 및 의약품류 △식량 △의류와 가정 필수품 △대피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연장 △교육용 도서와 학교 집기 △구호품의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교육용 자재와 발전기 사무용품 등이다.

▽ 문화일보 1996. 4. 9

北-日 정부교류 본격화

산하단체 잇단방문 「國交회담」재개촉진

【도쿄=연합】日 외무성 산하의 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松永信雄외교문제 정부대표) 대표단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북한 외교부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대표단이 올 여름 일본을 답방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정부 산하단체 교류가 본격화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8일 日·北韓 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군축평화연구소대표단이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올 여름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양국간 정부 산하단체의 교류는 지난 92년 11월 이후 중단상태인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11일 한국 총선거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 문화일보 1996. 4. 6

美-北미사일회담 사전조율

정부 "정치회담 변질 不容" 입장전달

8일 韓美실무자회의 韓-美 양국은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달말로 예정된 北-美 미사일회담에 대비한 한-미간 실무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6일 밝혔다.

외무부의 宋旻淳미주국 심의관과 宋旻淳부의 아인호 대량살상무기담당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미 미사일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뿐 아니라 생산및 배치, 기술개발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미실무회의를 통해 북-미 미사일회담이 북-미간 잠정협정 체결 또는 안보대화 개설 문제 등도 협의하는 북-미간 정치회담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鞠鎭然기자〉

▽ 서울신문 1996. 4. 12

北-日수교회담준비 고위회담 개최 요청

訪日 北노동당 대표단

【도쿄=연합】북한은 11일 일본의 연립여당에 대해 양국간 국교 정상화를 준비하기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북한의 우호친선대표단(단장 姜鐘勳노동당중앙위원)은 이날 사민당 간부들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를 일본에 초청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

북한대표단과 회담한 치바 게이코 사민당 부위원장은 姜鐘勳 단장에게 북한측의 요청을 사민당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은 지난 92년 이래 중단되고 있으나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재접촉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 한겨레신문 1996. 4. 10

북-미 유해회담 22일께 재개

뉴욕서…북한, 평화협정 강력 제기할듯

【워싱턴=정연주 특파원】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조처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19일부터 베를린에서 미사일 회담을 열기로 한 데 이어 22일께 뉴욕에서 미군 유해 송환 2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잇따른 미국과의 직접 접촉에서 최근 판문점 사태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평화협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8일 "유해송환 회담 재개를 위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해 온 북한과 미국은 22일께 뉴욕에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유해송환 2차회담에 참석하는 북-미 대표단은 1월초 하와이에서 열린 첫 회담때 참석한 대표단과 같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1차 회담 때 북한은 김병홍 평화군축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미국은 제임스 월드 국방부 전쟁포로·실종미군 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하와이 1차 회담에서 북한은 93, 94년의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따른 경비로 4백만달러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1백만달러를 제안했는데, 두 나라는 2백만달러선에서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제의했으나, 북한은 정전협정 아래서는 공동발굴이 불가능하며, 평화협정을 맺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한국일보 1996. 4. 15

對美미사일협상 관련 北 외교부·군부 갈등

【워싱턴=연합】북한 외교부와 군부는 對美 미사일 협상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美 행정부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미국측에 협상 개최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는 북한 외교부와 군부의 의견대립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19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북한측은 아직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치 않고 있다.

소식통은 양측이 협상 개최에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나 미국측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최사실을 발표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4. 14

"미사일회담 의제와 北美관계개선 별개"

韓美실무협의 참석 宋旻淳 외무부심의관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北·美미사일회담에 앞서 한미실무협의를 갖고 양국 입장을 조율했다. 이협의에서 양측은 미사일회담의 의제를 북한 미사일의 수출 문제뿐아니라, 이의 개발 및 배치문제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협의에 참석한 宋旻淳외무부미주국심의관과의 일문일답.

-실무협의 논의사항은.

『북한측의 대량살상무기 현황과 회담에 관한 양국 공조방안 등이다. 양측은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차 미사일회담은 이번 실무협의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사일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주문은 무엇인가.

『우리측은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위협도 이번 회담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도 이에 전폭 동의했다』

-북한측도 미사일회담의제를 미사일의 수출·개발·배치문제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키로 한데 대해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도 생화학무기까지 의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차 미사일회담에서 北·美의 입장이 포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알고있다』

-미사일회담의 의제가 대북경협확대 및 한반도 평화체제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가.

『없다. 대북경협확대와 北·美연락사무소 등 北·美관계진전문제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다루어질 것이다』 【張寅鐵기자】

▽ 세계일보 1996. 4. 14

美, 北생화학무기 감축 제기

韓-美 사전합의 下旬 베를린회담때 확산방지 논의

韓-美 양국은 이달 하순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인 美-北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뿐아니라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개발-수출 문제를 집중논의키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사전협의를 통해 미-북간 회담에서 대량 살상-파괴무기의 비확산차원에서 미사일과 함께 생-화학무기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북한이 미사일 등의 무기를 수출해 대량살상무기를 수평적으로 확산시키는 문제와 함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의 기술개발및 생산등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방안에 관해 북한측과 협의할 방침이나 북한측은 일단 협상을 시작한뒤 의제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만을 논의하고 북한의 관문점 무력시위등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었다』고 말했다.

美국방부는 최근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북한이 사정 1천㎞의 노동미사일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각각 사정 1천5백㎞ 4천㎞인 대포동1, 2호를 개발중에 있으며 생-화학 전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 상태라고 밝혔다. 〈鞠賢然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18

북-미·일 접촉 가속화

미 19일 미사일협상·일 22일 수교협상 한국과 협의

한 미 정상의 '4자회담' 제의로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19일 베를린에서 미사일 협상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 연립여당 대표단이 북한-일본의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급 접촉에 앞서 22일 한국을 방문해 사전협의를 갖는 등 북-미, 북-일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첸치천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대만문제 등의 현안 이외에 한반도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중국쪽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베를린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져 온 '미사일협상'에 대해 "곧 미국쪽에서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회담날짜는 19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이번 베를린 '미사일 협상'이 미사일 이외에 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군비통제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통보했다.

또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열린 북-미 유해송환협상이 22일쯤 뉴욕에서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95년 9월 5차 전문가회의 이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쪽도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정조회장이 이끄는 연립여당 대표단을 22일 한국에 파견해 북한과의 수교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해 3차 쌀지원[illegible]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일본 사민당을 통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5월 방일을 타진하고 있다. 또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얼마 전 지난 3월 [illegible]징에서 외무성 [illegible]무자와 북한 노동당 간부가 비밀 접촉을 가진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정상적인 교섭을 위한 예비대화를 하는 단계"라고 밝혀 수교협상 재개 움직임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이미 외교부 참사인 정태화를 수교협상 대표로 임명했으며, 도쿄-평양을 오가는 회담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태호 기자

▽ 국민일보 1996. 4. 18

"北 정전협정 위반으로 日-北수교상황 아니다"

日총리, 클린턴에 밝혀

【도쿄=연합】하시모토 류타로 日총리는 17일 빌 클린턴 美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등으로 북한과 국교정상화협상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하시모토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과 수교협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 위반 등) 일련의 북한 움직임으로 日·北 협상을 가동시킬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日당국자들이 전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17

미, 대북 경제제재 대폭완화

나진-선봉 진출·통신장비 참여등 간접투자 허용 검토

제주선언따라 남북대화 연계 풀려 실시 가능성 높아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정부는 간접투자 허용 등 대폭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한미정상회담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이를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추가 완화 조처는 △미국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 투자 △나진-선봉과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내 직접 금융거래 △북한의 특산광물인 마그네사이트의 채광과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 △마그네사이트 외의 희귀 전략광물의 대미수출 허용 △통신분야의 장비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 참여 허용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허용 △상업 전세기의 북한 비행 허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처 시행에 필요한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분리하여 진행한다는 제주도 선언에 따라 지금까지 전제조건이 돼온 남북대화의 재개라는 연결고리 없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는 조처를 취하거나 그밖에 다른 군사적 시위를 할 경우 미국의 이러한 추가 완화조처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가 완화 조처는 수없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고 "적성국교역법, 해외자산동결법 등 미국 국내법 문제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투자나 상품교역의 허용 등 핵심적인 조처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추가 완화 조처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그동안 북한의 연착륙 유도가 미국의 정책임을 강조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지난 몇달 동안 이를 적극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월21일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처를 취했으나, 그 내용이 극히 미미한 상징적인 것으로 그쳐,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온건파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한겨레신문 1996. 4. 17

"붕괴땐 대혼란" 제재완화 수순

미, 대북정책 전환 배경

연초부터 구체화…한국과도 긴밀 협의

추가조처 자국법에 묶여 단계진행 예상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정부가 대북한 정책의 전환을 적극 모색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홍수로 인해 북한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 정권이 급격한 붕괴과정을 밟을 경우, 남한에 대한 자포자기의 '자살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남북의 가공할 군사력으로 인해 한반도에 걷잡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대북한 정책의 일대 전환이 모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미국은 지난 1월말,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 주재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관계자들과 행정부 밖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 결과 레이크 보좌관은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에만 초점이 모아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을 절감하고 2월에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안보·외교 수뇌부들과 협의를 거친 뒤, 북한 정책 전환에 필요한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유화책을 구체화하는 데는 결정적 걸림돌이 있었다.

그것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명시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고리였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대북 강경자세를 유지해온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현실을 미국은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리들은 총선 뒤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암시했으며, 그러한 정책 변화의 기본 뼈대는 3월말 공로명 외무장관의 미국 방문 때 구체화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북한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가 기본 골격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력화 시도는 평화협정 대체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아래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미 직접협상을 피하고, 북한이 한사코 꺼리는 남북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대안으로 2+2의 4자 회담을 제안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협상 자리로 끌어내고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처를 적극 검토해왔으며, 이번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관계는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해외자산동결법, 수출행정규제법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 완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울러 대북한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투자 허용이나 상품교역 등 핵심부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단계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연착륙 유도와 대북 유화책의 상징성을 위해 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미국 해외현지법인의 대북 투자 허용 등 7~8개 조처를 이른 시일 안에 우선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 동아일보 1996. 4. 19

미사일회담 北대표 獨도착

회의일정-의제는 유동적

【베를린=金昶熙】북한-미국간 미사일회담을 위한 북한대표단이 18일 오후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북한측 수석대표단인 李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은 도착 직후 『아직 회담의 일정과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해 19,20일로 예정됐던 회담일정이 순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李국장은 미국측 대표단이 도착한 뒤 예비접촉을 갖고 일정등을 협의할 것이라고만 밝힐 뿐 일체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를린 쇠네펠트 공항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李국장 등 모두 5명이다.

베를린의 외교소식통들은 『회담일정의 순연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 미사일의 「수출」 문제외에 「개발」까지 의제에 포함시킬지 등의 문제로 양측의 이견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계일보 1996. 4. 19

美, 베를린 미사일회담서 4者회담 거론

北에 수용 강력 촉구키로

韓-美양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20일께 시작될 예정인 北-美 미사일회담을 통해 북한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북한측에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韓-美 양국은 당초 北-美 미사일회담에서는 미사일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생산및 수출문제등만을 논의키로 했으나 북한이 이 회담에서 對美 평화협정 체결등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북한측에 4자회담을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키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北-美 미사일회담이 개최되면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로서 北-美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등 4자회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北-美 미사일회담에 미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호른 副차관보가 19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美-中 외무장관 회담에 배석해야하는 만큼 이번 회담이 19일에 개최되기는 어려우나 빠르면 20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鞠貴然기자〉

▽ 동아일보 1996. 4. 20

北-美 내달 고위급회담 추진

제재완화등 논의…「修交」가 최종목표

政府 지난달 통보받아 양해한듯

북한과 미국은 전반적인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의 내달중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미고위급회담에는 북한측에서 金桂寬외교부부장이, 미국측에서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東亞太)담당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의 金부부장은 지난달 극비리에 허바드부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허바드부차관보는 최근 비밀리에 金부부장에게 답신을 보내 이를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미미사일회담과 미군유해송환협상 등 일련의 북-미대화와 병행, 고위급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 16일 韓美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와 북-미대화의 분리를 선언한 직후 여러개의 북-미대화가 연달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미고위급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정치 경제분야등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대북제재추가완화 북-미연락사무소개설등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며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측으로부터 북-미고위급회담 개최추진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실상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지난달 고위급회담 제의를 받았으나 북한의 관문점도발 등으로 대답을 미뤄오다 최근 수락하는 답신을 보냈다』며 『허바드부차관보가 6월1일자로 필리핀대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만큼 그 전에 1차 회담을 시작한다는게 미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1996. 4. 20

美-北 유해협상 월말 뉴욕개최

미-북 미사일협상이 20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데 이어, 이달말 뉴욕에서 한국전쟁 실종미군 유해송환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宋堯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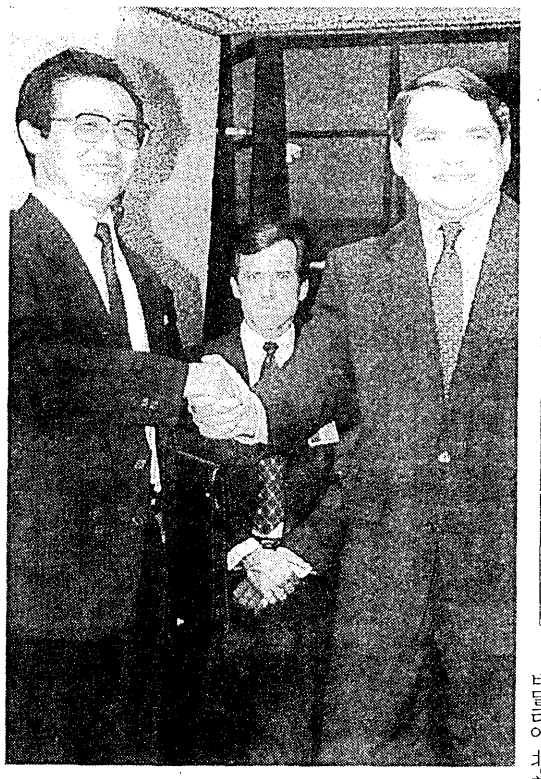
▽ 동아일보 1996. 4. 20

「한국영향권」 벗어난 北-美대화

미사일-유해회담 병행 동시다발 접촉

4자회담 예비접촉 성격띨 가능성도

고위급회담 추진 배경과 의미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준고위급회담에서 金桂寬부부장과 허바드부차관보가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미사일회담 미군유해송환협상 외에 비밀리에 北-美수교를 목표로 한 고위급회담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번달 열린 북-미미사일회담이나 유해협상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 미국간 대화는 고위급회담을 주축으로 하고 미사일회담 유해송환협상 등 특정주제를 다루는 회담이 이에 종속, 병행되는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 미사일회담이나 유해송환협상 등 개별사안협상에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관계개선조치를 합의하는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위급회담은 한미정상이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열릴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4자회담문제가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급회담은 미사일회담 등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회담이어서 자칫 고위급회담이 4자회담의 예비접촉적 성격을 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4자회담의 예비접촉이 열린다면 북한 미국이 아니라 남북한이 참석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북-미고위급회담은 한국에 중대한 의미를 갖지만 한국정부는 현실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총선전까지 북-미대화의 자제를 조건으로 그 이후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해해준 상태다.

특히 지난 16일 제주 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와 북-미대화의 분리를 선언, 사실상 미국의 대북접근에 더이상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미사일회담 등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북-미수교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회담 개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 베를린에서 열리는 미사일회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할말이 많다.

미사일회담은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부품 기술 완제품의 수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열렸으나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가장 가깝게 노출돼 있는 한국으로서는 수출문제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생산 배치 등도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한국의 입장을 감안, 이 문제도 거론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주안점은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에 맞춰져 있다.

미사일회담을 신호탄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북-미대화, 특히 이달은 대화의 정점에 있는 고위급회담 개최추진 등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朴濟均〉

▽ 동아일보 1996. 4. 20

北·美 미사일회담 시작

【베를린=金湘熙】 북한과 미국은 19일 북한제 미사일을 국제적 감시체제 아래 두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날 의제와 회담일정을 정하기 위한 사전접촉을 갖고 첫 회담은 20일오전 미국대사관 분관에서 두번째 회담은 21일 오전 북한 이익대표부에서 갖기로 했다.

북한 이익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해 첫회담이 열리면 의제에 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 대표단은 수석대표 李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을 포함, 외교부 직원을 주축으로 한 5명이다.

▽ 세계일보 1996. 4. 20

미사일협상 北측대표 李형철 누구인가

◇李형철

군축문제 전문가로 對美외교 관장

北-美회담등 참석… 양국 현안해결 모종 역할 맡은듯

20일부터 베를린에서 시작되는 北-美 미사일협상의 北측수석대표 李형철은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과 함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직을 맡고있다.

과거 이력이나 현직으로 볼 때 李수석대표는 北韓의 군축문제 전문가이자 對美외교통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외교관 양성 교육기관인 平壤 외국어대를 졸업한 李수석대표는 90년 8월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자격으로 日本을 방문한 것 외에는 美國과의 접촉에만 빈번히 등장, 그가 對美외교 전문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91년 9월 姜錫柱 외교부 제1부부장이 유엔총회 참석차 訪美했을 때 姜부부장을 수행했고 92년 1월 金容淳 당시 노동당 국제부장과 캔터 美국무부정무차관 사이에 첫 北-美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도 北측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또 93년 4월 미국에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5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北-美 준고위급 회담에도 許鐘수석대표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미사일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 이외의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군축협상을 벌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李수석대표의 카운터파트인 美측수석대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부차관보 역시 군축문제 전문가다.

그러나 李수석대표가 미국과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실무자라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평화협정 체결, 대미관계 정상화, 경제제재조치 완화 등 포괄적인 쌍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北-美「4자회담」의중탐색

베를린 미사일회담 안팎

北"검토중" 반응속 첫 직접대좌 주목

대표단 외교실무자로만 구성돼 눈길

20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미국간 미사일회담은 매우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韓美정상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측과 직접 대좌하게 됐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물론 이번 미사일회담은 회담 주제와 참석자의 직급등으로 볼 때, 그리고 회담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4자회담 문제를 다룰 적절한 장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제의 직후 첫 대면하는 두 당사국 외교실무자들이 이 자리에서 4자회담과 관련,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의 경색국면을 돌파할 중요한 카드로 제시된 이 4자회담의 배경과 여파 등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르면서 북한은 주로 한미 양국의 의도에 대한 탐색을, 미국측은 회담 수용을 위한 설득작업을 각각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무기문제를 다루는 이번 회담의 북한측 대표단 진용이 군부 인물은 한사람도 없이 모두 외교부의 국장 과장급 등으로 짜여져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노동신문이 미사일 문제를 북 국가권의 「자위권」차원의 경우 북한은 휴전선 이남 양국의 무기체계도 동시에 거론함으로써 논의를 미루는 대신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회담의 주의제인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미군부의 보수세력」을 거론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군부세력을 배려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그럼에도 미 제정치적 금전적 보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金昶熙〉

시리아 이란 등 중동국가들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문제는 보상책이 마련된다면 탄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겠지만 미사일 개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미군부의 보수세력」을 거론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군부세력을 배려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그럼에도 미 제정치적 금전적 보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金昶熙〉

현재 관측통들은 이번 첫 대좌에서는 의제와 추후일정 등만 확정돼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제 자체가 이렇게 명분 및 추후의 국 발언권을 어떤 식으로 정 당화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더구나 이 회담 자체는 북한의 미사일 중동수출에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이 지난 93년 북경 등지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하던 것을 미국이 이어 받아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회담 초반에 자신의 발언권을 어떤 식으로 정 당화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현재 관측통들은 이번 첫 대좌에서는 의제와 추후일정 등만 확정돼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제 자체가 이렇게 명분 및 추후의 국 발언권을 어떤 식으로 정 당화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4者회담 北반응떠볼 「시험대」

北 정치공세로 의제부터 난항가능성

北·美 미사일회담 의미·전망

北·美미사일회담은 4者회담 제안 이후 북한측의 태도와 반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北·美간 첫 공식접촉이자 향후 北·美관계개선의 이정표이다. 18일까지도 개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 하오 李형철외교부 미주국장을 수석대표로한 북한측 대표단이 베를린에 도착함으로써 20일께부터는 회담이 열리게 됐다.

미사일회담은 미사일 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전반을 다루기로 이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확하게는 대량살상무기회담이 최합의가 이루어진 미사일 회담을 통해 미국은 1차 부의 이해가 깔려있다.

회담은 의제 범위에서 적으로 연간 1억달러 어치에 달하는 북한 미사일의 對중동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북 美 양측은 이번 회담에 앞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선전공세를 펼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18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사일회담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압살하자는 것이라며,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에 관한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측은 의제 자체에 관한 협의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평화체제 공세에 대해서는 미사일회담과 한반도문제의 분리원칙에 따라 이를 차단하는 한편, 4者회담수용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張寅鐵기자】

에 따라 미사일회담으로 불려왔다.

94년 北·美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측의 꾸준한 요청으로 지난해말에 회담개한 미사일 수입북으로 알려진 이란 이라크 등으로부터 직접 군사적 위협을 받게되는 이스라엘과, 대선 레이스에서 이 문제를 서 8일 워싱턴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회담의 의제를 북한미사일의 수출 뿐 아니라 개발, 배치와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2월22일 北·美 잠정협정을 제안한 북한측은 회담 초기부터 4者회담에 대한 입장을 포함 美 양측은 이번 회담에 앞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선전공세를 펼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18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사일회담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압살하자는 것이라며,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에 관한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측은 의제 자체에 관한 협의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평화체제 공세에 대해서는 미사일회담과 한반도문제의 분리원칙에 따라 이를 차단하는 한편, 4者회담수용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張寅鐵기자】

워싱턴 시각

北 주한미군미사일 철거요구 가능성

"평화협정 체결" 정치공세 펼까 우려

윌리엄 페리 미국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앞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은 핵무기가 아닌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대량살상무기 속에는 북한이 개발했거나 아니면 개발중인 노동 1, 2호와 대포동 1, 2호가 포함된다. 대포동 1, 2호가 실전 배치되면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까지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각별하다. 중동의 미사일 확산도 북한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북한은 70년대 후반부터 이란 이라크 등지에 미사일 관련 기술 부품 완제품 등을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으로 따지면 최고 1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무엇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제2의 핵협상 카드로 삼아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중지할테니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나아가 미사일 수출중단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동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미사일회담을 포괄적인 정치 군사접촉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북-미 미사일회담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회담의 성격과 결과가 한국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 떼를 쓰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회담에서도 의외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李載昊〉

▽ 세계일보 1996. 4. 21

美-北 베를린서 미사일회담

4者회담제의후 첫 접촉

【베를린-워싱턴=劉又根-申相一특파원】韓-美 양국이 지난 16일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한 뒤 美-북한간 첫접촉인 미사일협상이 20일 駐獨 美대사관 베를린 분관에서 개시됐다.

미국측 협상대표 로버트 아인혼국무부부차관보는 이날 첫 공식회의를 끝마친 뒤 기자들에게 『첫날 협의가 평양의 미사일개발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21일 오전 베를린의 북한이익대표부에서 속개된 뒤 그날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뒤 이날 협상에서 4者회담문제가 포함됐는지에대해선언급을회피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이형철 외교부미주국장도 회담성과에 대해 『이제 금방 시작됐다』고만 답변했다.

미국측은 첫날 회의에서 개량형 스커드및 노동계열 미사일 등 사정거리 3백㎞이상의 미사일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수출로 전세계적으로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평화협정체결 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제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당초 19, 20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아인혼 미국 수석대표가 19일 헤이그에서 열린 미-중 외무장관회담에 배석, 하루 연기됐다.

美 "미사일-군축문제 국한"

▽ 서울신문 1996. 4. 22

美에 고위회담 제의 北 韓

북한은 4자회담과 제네바 합의 이행, 경제제재 완화등 미·북간의 전반적인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을 다음달에 개최하자고 미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 경향신문 1996. 4. 23

北·美간 미사일회담 대표지위 격상 검토

베를린회담 종결

【베를린=孫東佑특파원】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회담 타결을 위해 현재의 협상 레벨이나 채널을 바꾼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1~22일 베를린에서 열린 北·美미사일회담이 끝난후 미국측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것이지만 회담 방식의 문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대표 지위를 격상시키거나 다른 현안과 연계시키는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로버트 아인혼 美국무부 부차관보와 이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을 단장으로 한 회담에서 미국측은 북한제 미사일의 존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전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수출통제체제(MCTR) 가입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미국의 對北 군사적 위협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등은 국가자위권수호의 핵심수단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1996. 4. 21

美-北 내달 연락소협상 재개

北, 경수로기술자 면책특권부여 긍정적

【워싱턴-뉴욕=연】미국과 북한은 내달 연락사무소 개설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 美관계자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북한문제에 관여하는 이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구체적 일정 등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북한이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내달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이라면서 『金계관 북한 외교부부장과 토머스 허바드 美국무부 동아-태담당副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한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9일 경수로 공급사업을 위해 KEDO 직원과 북한에 파견될 한국전력 등 우리측 기술인력 등에 대한 법적지위 및 특권 면제 협상보호 의정서 협상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은 이날 오후 2시 뉴욕시내 KEDO사무국에서 속개된 2주째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에서 특권과 면제문제와 관련, 경수로 주계약자로 선정된 韓國 등의 순수 기술인력에 대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다소 신축적 태도를 보였다고 KEDO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22

북-미 미사일협상 지속키로

북 평화협정등 주장 이견…베를린회담 일단 마감

【베를린=연합】 미국과 북한은 21일 베를린에서 미사일 협상 이틀째 회담을 속개해 첫날 교환된 양쪽간 기본입장을 토대로 협상 실마리를 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리형철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양쪽 대표단은 이날 오전 베를린 북한이익대표부로 협상장소를 옮겨 이틀째 공식협의에 들어갔다.

양쪽은 그러나 첫날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문제를 보는 기본시각에서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쪽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측면에서 접근한 반면 북쪽은 자위권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 양쪽간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치적 해결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이런 기본적 현안인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촉형식 등 광범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을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아인혼 미국쪽 수석대표는 20일 첫날 회담을 마친 뒤 "유익한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 의제 등 협상의 실질적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 경향신문 1996. 4. 24

北고위대표단 오늘 訪美

단장에 李鍾革 黨부부장 「평화협정 전문가」 포함

▽ 조선일보 1996. 4. 24

카터·美관리등 접촉

4者회담 제의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외교담당 고위대표단이 24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다。

북한대표단은 李鍾革 노동당 副부장을 단장으로 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전문가 및 외교부관리들로 구성돼 있으며、訪美기간중인 26일 조지아州 애틀란타市 카터센터에서 열리는 한반도문제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세미나에는 美국무부 한국담당관리들도 초청돼 『북한대표단과 美국무부관리들과의 접촉도 예상된다』고 외무부는 23일 전했는데、美北접촉에서는 4者회담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터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카터 前 美대통령은 한반도문제의 주요 고비마다 중재 등 결정적 역할을 해왔으며、이들 대표단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鍾革은 이어 29일에는 조지아대학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李鍾革은 金容淳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당산하의 아·태평화위원회 副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책임참사직도 겸하고 있는데、그는 지난94년 6월 카터 前 美대통령의 訪北시 영접했으며、지난해 3월 평양에서 일본의 연립여당대표단과 수교협상재개문제를 논의하는 등 북한외교의 실력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具聖宰기자〉

▽ 경향신문 1996. 4. 24

北 "미사일협상 계속"

【東京=연합】 북한은 23일 미국과 미사일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미사일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지난 주말 베를린에서 열린 1차 미사일협상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 협상에 참석한 미국관리들은 『좋은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협상에서는 주로 미사일의 확산금지와 그밖의 다른 공동관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한 북한관리는 기자들에게 다음 협상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베를린 협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을 이란、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에 판매하는데 대한 우려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4. 24

"美-北 미사일협상때 4者회담 논의 안해"

美국무부대변인

【워싱턴=朴斗植기자】 美국무부는 21일 끝난 베를린 美-北 미사일회담과 관련、『4자회담과 관련한 토의가 직접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22일(한국시각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를린에서 대사급 또는 고위전문가급 美-北 미사일 회담이 열렸지만、이는 북한의 미사일수출을 통제키 위한 예비적 회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향신문 1996. 4. 23

미사일 「지렛대」로 北·美 "포괄 對話"

■미사일회담 뭘 논의했나

북핵협상의 후속협상으로서, 그리고 최근 韓·美양국이 제안한 4者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는 시험대로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베를린 北·美 미사일회담 1차회의가 21일 끝났다。 이틀동안 계속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4者회담」 제의후 北반응 탐색

철저보안속 「신축대응폭」 주목

양측 모두 회담내용은 물론 사소한 회담일정까지도 함구로 일관하는등 그동안의 北·美협상중 가장 완벽한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볼 때 몇가지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다。

우선 적절한 시기에 협상의 격을 올리거나 회담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등의 문제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는 미국측 대표단 한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는 이 회담이 단순히 미사일협상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포괄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의제는 물론 북한제 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문제이다。

그러나 회담에서 이 문제만 논의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북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며 중동지역에까지도 수출되는 북한제 미사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北·美관계를 한단계 개선하고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는등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의 핵심적 논거인 「자위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측에 대해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등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의 미사일협상도 궁극적으로는 對美관계 완전정상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부분 신축적인 자세를 취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최근 한국과 함께 공동제의한 4者회담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측의 반응을 탐색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회담은 편의상 미사일회담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뿐 북핵회담에 이은 北·美간 포괄적 정치·군사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를린=孫東佑특파원】

▽ 동아일보 1996. 4. 25

"北-美 연락사무소협상 진전"

美국무부 早期 교환설치 北태도에 달려

【워싱턴AP聯】 미국은 23일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교환설치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대변인은 이와 관련、『일이 50% 이상 진척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94년10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문제 등 몇가지 문제를 해결한 후 외교적 관계수립 절차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문제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미국은 마지막 남은 문제들이 정리되는대로 연락사무소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이를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문제는 북한측에 있다』고 지적해 북한이 사무소의 조기 교환설치에 다소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미 관리들이 뉴욕에서 북한대표단을 만나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4자회담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고 공개했으나 더 이상 이 회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 동아일보 1996. 4. 25

北-日관계개선 급진전

修交협상 전제 日-朝의원聯 재건추진

北 李鍾革 내달訪日 구체협의

【東京=李東官】 한미 양국의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4자회담 제안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개최를 전제로 일조우호의원연맹의 재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일본의 쌀원조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4일 일본의 연립여당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연립여당측은 지난 93년 7월 중의원 총선이후 사실상 해체됐던 일조우호의원연맹을 내달 22일경 총회를 열어 재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일조우호의원연맹에는 자민당에서만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을 비롯,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정조회장,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대리,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郎) 전외상 등 중진의원 44명이 이미 가입의사를 밝혔다. 자민당측의 대표는 다니 요이치(谷洋一) 전 일조의원연맹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민당은 이미 지난 2월 참가자 명단을 확정, 대표로 노사카 고켄(野坂浩賢) 전 관방장관을 내정했다.

또 내달초 방일할 李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대일(對日)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 3차 쌀원조를 매개로 해 북일국교정상화 예비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일본내 북일 관계 소식통은 『북한이 조만간 북-미 북-일관계개선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측에 애틀랜타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2002년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 제안 등을 통해 스포츠 외교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답때 북한측 대표로 방일했던 李種革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달초 미국방문 귀로에 일본에 들러 연립여당관계자들과 △국교정상화 예비협상의 개최 △3차 쌀원조 문제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문

▽ 조선일보 1996. 4. 25

「4者회담」 美여론 탐색 가능성

美방문한 北이종혁 黨부부장

李鍾革 노동당 부부장 대표단이 지난 16일 4자회담 제의이후 북한 외교 담당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24일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대표단의 비중이나 방미 시점과 일정등으로 볼 때 이번 방문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종혁이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한 미국 조야의 방미 목적은 학술적인 것이다. 26일의 조지아주 애틀랜타 카터 센터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 참석과 29일 조지아대학교 연설등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4자회담과 관련된 모종의 「정치적 교섭」을 도모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는 金正宇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워싱턴DC에 머물고 있으며 『이밖에 2~3건 더 북한인들의 방미가 추진중이라고 외무부 당국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종혁 일행만큼 정치적 무게를 띤 것은 없다』는 게 외무부 당국자들은 『아직 이 대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여운을 남겼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 정상이 공동제의하고 중국마저 지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국면이다.

◇李鍾革

金正日 특사役… 카터 접촉후 자문 구할듯

이번 방문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종혁이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한 미국 조야의 방미 목적은 학술적인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 대표단의 드러난 위원장이 워싱턴DC에 머물고 있으며 『이밖에 2~3건 더 북한인들의 방미가 추진중이라고 외무부 당국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종혁 일행만큼 정치적 무게를 띤 것은 없다』는 게 외무부 당국자들은 『아직 이 대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여운을 남겼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 정상이 공동제의하고 중국마저 지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국면이다.

따라서 북한의 4자회담 수정제의 가능성과 연관돼 카터의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다. 카터가 이를 수락할 경우 카터의 방북도 조만간 실현될 수 있다.

4자회담과 관련, 이종혁은 「특사로서 카터에게 자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4자회담 제의로 인해 외교적 궁지에 몰려있다. 한미 일정등이 포함된 각서를 교환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종혁은 이 대목을 카터에게 줬은 뒤 진전의 가속화를 위한 영향력 행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에는 美국무부 관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4자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 타진도 예상된다.

북한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해 지난 18일 「검토중」이란 반응을 내놓은 뒤 일을 다물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물밑으로는 이종혁일행을 미국에 보내 현지조사를 벌이는등 앞으로의 수순 선택을 위해 대미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具聖宰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26

북 대표단, 미·일 연쇄방문

이종혁부위원장, 한국 식량지원 기대 시사

【워싱턴 도쿄=정연주 박종문 특파원】 북한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는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이 미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미주 기독자협회 주최의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 6명과 함께 24일 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한 이 부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대해 "제일 가까운 나라가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해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했다.

북한 대표단은 26일 카터 센터에서 열리는 29차 북미주 기독자협회 주최의 학술회의와 29일 조지아 대학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남북한과 미국'을 주제로 한 29일의 학술회의에는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브라운 한국과장을 비롯한 미 관리들과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평화재단 수석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등이 참가한다. 한편 일본 사민당은 24일 이 부위원장(노동당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을 5월7일께 일본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도 북한 대표단 초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1996. 4. 25

北 이형철 새달초 訪美

美洲국장 美스탠퍼드大 군축세미나 참석

북한과 미국간의 연락사무소교환설치를 위한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외교부 李형철 미주국장이 오는 5월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李형철의 방문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주최로 열리는 군축문제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명목상의 목적이나 한·미양국이 북한측에 4자회담을 공동제의해 놓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李형철이 이번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체제구축과 관련,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종전의 북한주장을 집중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李가 방미중 미국측과 막후접촉을 시도, 4자회담과 관련해 모종의 변칙적인 수정제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체제를 확고히 다져놓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져미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1996. 4. 26

北-日관계 빗장 풀리나

수교협상-쌀문제 논의 교류 물꼬

日-朝연맹 재건땐 급속밀착 예상

관계개선 급진전 배경과 전망

韓美 정상회담에서의 4자회담 제안이 사실상 「평화보장 체제와 北-美 관계개선이 별개 문제」임을 선언한 것이라면 최근 일본 연정대표단의 방한(訪韓)은 北-日 관계개선의 병마개를 딴 셈이다.

일본의 연립여당 측은 연초부터 방한단파견-방북단 파견-수교 예비협상 개최를 하나의 일관된 시나리오로 상정, 준비를 거듭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정조회장 일행의 방한에 대해 일본측은 대북 접근을 위한 「통과의례」를 마쳤다고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의 총선거 이후 그동안 미루어왔던 북-일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맥락.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움직임이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미(訪美) 예정인 李種革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일(訪日)계획과 日朝우호의원연맹의 재건움직임. 金容淳 서기의 측근으로 대일(對日)분제 책임자인 李種革은 일본의 활동연류가 끝나는 내달 7일경 귀로에 일본을 방문, 연립여당 관계자들과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는 물론 쌀북가원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방일은 사민당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미 연립여당 내에서 양해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대외정책 최고 책임자인 金容淳서기의 방일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93년7월 중의원 선거로 자민당 일당지배가 붕괴된 후 활동정지 상태였던 일조우호의원연맹이 자민당 주도로 재건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되는 점이다. 지금까지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진행돼온 대북접촉의 참구를 자민당이 대표함으로써 관계개선 움직임에 더욱 추진력이 붙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연맹에는 현직외상인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에 파벌보스인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전정조회장 등 실력자들까지 포진,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표면상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가 북일 관계의 급진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관계진전의 매개역할을 할 쌀원조 문제도 일본내에 잉여미가 바닥났다는 점에서 협상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하시모토 정권 발족이후 무라야마 총리시절보다 총리부의 외교적 영향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전보다 빠른 행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東京=李東官〉

▽ 중앙일보 1996. 4. 25

美, 對北관계개선접촉 加速

에셜먼 국무부담당관 27일 訪北
연락사무소 개설도 마무리 단계

워싱턴=길정우 특파원
김성진 기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양측간 공식·비공식 접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 한국과 스테파니 에셜먼 북한경제담당관(여)이 27일부터 2주간 예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대북(對北)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와 관련, 주목된다.

또 글렌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 『일이 50%이상 진척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남은 문제들이 정리되는대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미 정상의 4자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한다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주민들에게 전쟁결의를 선동하면서 대남(對南)비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부 관리의 방북(訪北)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미간 구체적인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북한 고위 관리들의 계속되는 방미(訪美), 관계자 접촉도 북·미관계 개선노력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한반도 경협(經協) 세미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정우(金正宇)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미 국무부외에 상무부·재무부측 인사들과도 비공식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4. 25

北·美연락소 8월께 개설

워싱턴 소식통 협상진전, 준비 마무리단계

【워싱턴=李相石특파원】 미국과 북한은 8월께 상대국 수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韓美 소식통들이 23일 말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양측이 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에 관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8월께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北·美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문제는 그동안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연돼 왔으나 金正日의 권력승계 움직임과 최근의 北·美관계 진전상황에 비추어볼 때 애틀랜타 올림픽 직후인 8월 개설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및 테러국 지정 재심사등 對北 관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며 북한과 미사일회담에 이어 6·25 참전 미군 유해반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도 26~2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北·美기독학자 연차총회 및 한반도관련 세미나에 고위급 對美관계 책임자인 李鍾革 노동당 副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 연락사무소 설치와 애틀랜타 올림픽 참가준비를 최종점검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李副부장은 이 세미나에서 데이비드 브라운 美국무부 한국과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22·23일 이틀간 열린 한반도 경협세미나 참석차 訪美중인 金正宇북한대외경제위 부위원장 일행도 24일부터 美국무·재무·상무부 관리들과 접촉을 갖고 연락사무소 개설및 對北 경제제재 추가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北고위관리 잇단訪美 접촉

▽ 한국일보 1996. 4. 25

北, 유해협상延期통보

북한은 25일부터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北·美간 유해송환협상을 무기연기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일보 1996. 4. 26

日, 北 金容淳 방일초청

여름전 실현추진

【도쿄=朴榮基특파원】 사민당등일본여당은 北日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해 북한 노동당 金容淳비서의 방일을 초청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사민당 간부는 金容淳비서의 방일 초청이 여3당 초청형식이라고 밝히고 이르면 여름전에 金비서의 방일을 실현시켜 北日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기 재개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민당 등 여3당은 지금까지 北日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해 북한의 對日 교섭 실무책임자인 李鍾革 아·태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일을 희망해 왔기 때문에 金비서에 앞서 李부위원장이 5월 초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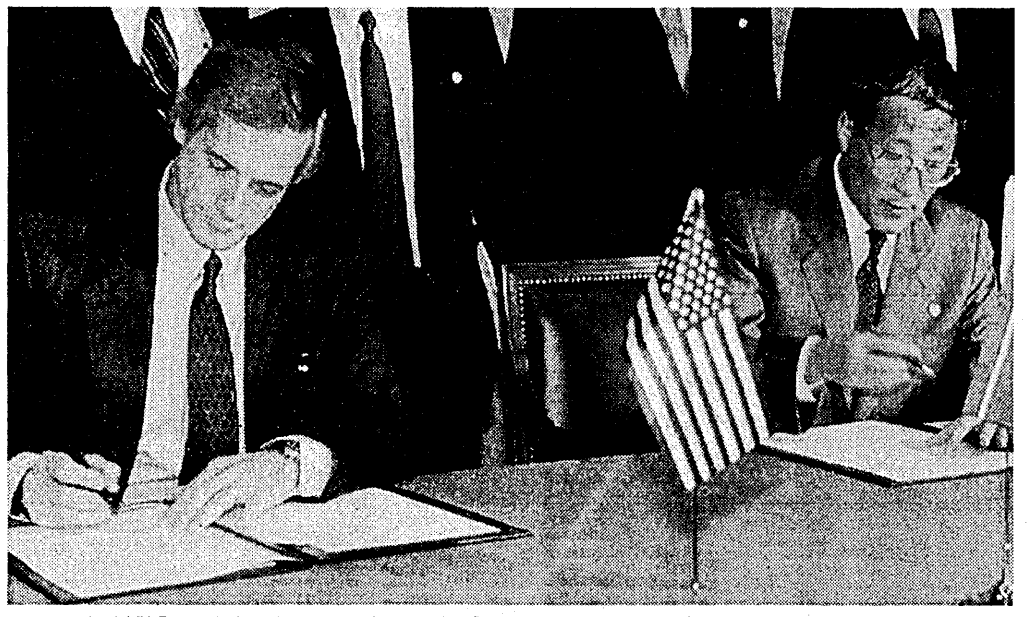
이에 따라 李부위원장이 먼저 방일할 경우 연립여당 간부들과 만나 北日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北, 유보입장탈피 적극자세

北·美 연락사무소 8월께 개설 안팎

金正日권력승계·美제재완화관련 분석

실무문제 마무리… 양측「보따리」관심



◇姜錫柱 북한측 수석대표와 로버트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가 94년 10월21일 제네바 북한대표부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北·美 연락사무소 개설은 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자료사진】

시간문제로 간주돼온 北·美간 연락사무소 개설 시점이 8월께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해 보여 온 유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8월, 또는 늦어도 올 가을 이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태도 변화를 일으킨 동기는 아직 분명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金正日의 공식 권력 승계작업이 거의 끝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美행정은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이 對北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 및 북한의 테러국 명단 삭제 여부를 검토중인 시점에서 연락사무소 8월 설치도 『연락사무소만 평양에 있어도 훨씬 덜 답답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北·美간 연락사무소 8월 개설 소식은 또 양국이 북한여행 관련규제 추가 완화 등 對北 경제규제 완화조치를 검토중이다.

반면 북한은 ▲핵동결의 유지 ▲대량살상무기 규제협상(미사일회담) 개시 등의 쌍무현안 분야에서 미국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해 온 ▲국제거래 대금의 직접결제 ▲미국기업의 북한진출 허용 ▲미국인의 북한여행 관련규제 추가 완화 등 對北 경제규제 완화조치를 검토중이다.

반면 북한은 ▲핵동결의 유지 ▲대량살상무기의 위한 4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美관리들에 따르면 양국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실무문제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사무소 개설에 따르는) 문제들이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북한을 방문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단은 경수로공사와 관련된 인원의 통행 통신 서비스 및 부지인수 문제등과 함께 연락사무소의 기본임무 운데 하나인 영사보호문제도 논의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측과 KEDO가 다루어 온 영사보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초공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李鍾華 노동당 副부장겸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석균 외교부 미주담당 부국장등을 통해 4자회담 및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李 副부장이 참석하는 조지아대학 세미나에는 데이빈드 브라운 美국무부 한국과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李相石특파원】

「北·美 연락소 개설」정부 입장

"큰 파장 없을것" 탄력대응

北정세파악 도움판단 4者회담 不연계

지위격상 요구등 돌발변수에는 촉각

우리정부는 북·미 관계의 수용여부와 연락사무소 개선의 상징적 조치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평가를 이미 마친 상태다. 정부 평가의 주요골자는 현단계에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더이상 큰 얘깃거리가 되지 못하며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설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양해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이 美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韓·美가 공동으로 제의한 4者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한 달국자는 『올해초까지 개설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이처럼 탄력적인 입장을 정리한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연락사무소 개설의 정치적 의미는 크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미간 미사일회담등 사안별 접촉이나 상설화한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모든 현안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제의된 상황에서 오히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줄어든데다 특히 4者회담의 정치적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北·美간 연락사무소 8월 개설 소식은 또 양국이 북한여행 관련규제 추가 완화 등 對北 경제규제 완화조치를 검토중이다.

반면 북한은 ▲핵동결의 유지 ▲대량살상무기 규제협상(미사일회담) 개시 등의 쌍무현안 분야에서 미국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해 온 ▲국제거래 대금의 직접결제 ▲미국기업의 북한진출 허용 ▲미국인의 북한여행 관련규제 추가 완화 등 對北 경제규제 완화조치를 검토중이다.

반면 북한은 ▲핵동결의 유지 ▲대량살상무기의 위한 4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美관리들에 따르면 양국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실무문제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사무소 개설에 따르는) 문제들이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북한을 방문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단은 경수로공사와 관련된 인원의 통행 통신 서비스 및 부지인수 문제등과 함께 연락사무소의 기본임무 운데 하나인 영사보호문제도 논의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측과 KEDO가 다루어 온 영사보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초공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李鍾華 노동당 副부장겸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석균 외교부 미주담당 부국장등을 통해 4자회담 및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李 副부장이 참석하는 조지아대학 세미나에는 데이빈드 브라운 美국무부 한국과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李相石특파원】

▽ 중앙일보 1996. 4. 26

北·美접촉 양해기준 마련

정부 연락사무소개설·經濟제재 완화를 용인

배명복 기자

북·미간 각종 공식·비공식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더이상 무원칙한 북·미 접촉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무리라고 결론,「북·미 접촉 양해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한국참여 3원칙」으로 알려진 이 양해기준은▶한반도 현상(現狀)변경▶한반도 장래▶한반도 평화와 안전등 한국의 주권및 국익과 직결되는 세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하되 여타 문제에 대한 북·미간 접촉과 대화는 원칙적으로 양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5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범주별 해당사항에 대한 구체적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는대로 이를 미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참여나 개입이 보장돼야 할 사항들로▶정전체제의 변경▶평화체제 수립▶한반도 군축▶북·미간 장성급 접촉▶북한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북·미 수교 문제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정 해제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 당국자는 『북·미간 유해송환협상이나 미사일수출통제협상, 연락사무소 개설등은 세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북·미접촉 양해기준은 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평화문제와 미·북접촉 분리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對北)경제제재추가 완화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도 세가지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경제제재 해제효과가 북한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용에 따라선 「한국 참여 3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제재 해제조치 내용을 효과별로 3~4단계로 분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제1단계 조치에 대해선 당장 해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1996. 4. 26

'主權'이외 北·美접근 간섭안해

'北·美접촉 양해기준' 마련 의미

배명복 기자

정부가 마련중인 「북·미 접촉 양해기준」은 북·미 관계개선 문제에 대한 정부 접근방식의 근본적 발상 전환을 의미한다.

북·미간 접촉및 대화 의제와 관련, 『이러 이러한 것은 논의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안된다』는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이러 이러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노선변경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미간 접촉에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에 대한 「범주화(Categorize)」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국익이나 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한 북·미간 직접대화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범주를 크게 세가지로 설정, 각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참여와 개입이 보장돼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북·미간의 광범위한 대화와 접촉을 용인한다는 의미에서 네거티브 방식이며, 이는 북·미 접촉에 대한 사실상의 대폭적 「규제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한반도의 현상변경▶한반도의 장래▶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등 세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준별 해당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 현재 북·미간에 진행중인 미사일수출통제협상이나 유해송환협상·연락사무소 개설등은 우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경제제재 해제 문제도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다만 경제제재 해제의 경우 그 효과가 북한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 해제가능한 조치를 효과별로 3~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별 조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남북대화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맞물리는 기존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국자의 선명이다.

정부가 「북·미접촉 양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북·미간 접촉에 더이상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과 미국간의 각종 공식·비공식 접촉과 대화가 봇물터지듯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북·미 관계개선이 반드시 국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국적」 판단도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의 내부실상 파악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기회에 북·미 접촉에 대한 확실한 개입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더이상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그간의 무정견한 대북정책 수행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론에서 비롯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평화협정·군축등은 양보不可
현실적 원칙제시로 혼선방지

▽ 중앙일보 1996. 4. 27

美, 北경제제재 해제 3조건 제시

테러포기·유해반환·미사일 협상 계속

도쿄=이철호 기자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와 가진 비공개 접촉에서 『테러포기등 세가지 전제조건이 실행될 경우 대북(對北)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워싱턴발(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테러 완전 포기▶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반환▶미사일 협상의 계속 등이라고 전했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세가지 조건을 전달한 것은 4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한편 본격적인 대북 관계개선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은 테러포기와 관련, 올해 초 북한이 미국에 문서로 전달하기도 했지만 이후 동남아에서 북한에 망명한 일본 요도호 납치범이 가담한 달러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해 다시 촉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996. 4. 26

▨ 對北경제제재완화 신축입장 배경

강경 제동땐 北 자극우려

정부 "美 경제카드 지렛대 남용않을 것" 낙관

정부 일각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대한 신축적 입장으로의 선회를 검토하는 것은 몇 가지 낙관적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추가 제재완화를 철저하게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지 않아도 미국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사일 및 유해송환 협상에서 유일한 지렛대인 경제카드를 미국이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제재완화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 4자회담 성사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또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전분야를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추가 제재완화가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1단계 對北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은 별반 나아진 게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1단계 조치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북한내 크레디트카드 사용 및 통신 허용과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절반 해제 등이었다.

앞으로 미국이 미사일협상 등의 진전과 관련해 취할 가능성이 높은 추가 제재완화는 세 가지 정도다.

첫째,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의 나머지 반에 대한 동결해제다. 북한이 해외송금 도중 미국은행을 거치다 동결된 5백만~1천만달러 규모의 돈을 해제하는 것이다.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둘째, 홍콩 등 해외 미국법인들의 대북수출입 및 투자 허용이다. 이 경우 중화학공업 쪽보다는 코카콜라, 맥도널드社 등 식음료 회사들이 일차적으로 대북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행의 북한진출 허용조치다.

외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완화조치를 취해도 당장에 경제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 진출을 시도할 미국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추가완화는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굳이 강력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제재완화에 대한 정부내 입장이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청와대와 외무부간 이견이 아직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가 북한의 4자회담 수용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과 추가 제재완화의 「느슨한 연계」를 선호하는 반면에 청와대 등은 「강한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은 보수적 對北여론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간 협상이 진전돼 추가 제재완화를 두고 美측과 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 부처간 조율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李太熙)

▽ 한국일보 1996. 4. 26

"4者회담 北외교부담당" 언급회피

北 李鍾革일행 訪美 이모저모

북한 고위관리들의 잇단 訪美가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 반응 및 北美관계개선 가속화등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李鍾革 북한 노동당 副부장이 北·美기독학자회 연례 세미나 참석차 24일 밤(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했다.

李 副부장은 공항도착 직후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 질문을 노련한 화술로 받아 넘겼다. 노동당 산하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副부장은 駐美대사 후보로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北美관계개선 가속화등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李鍾革 북한 노동당 副부장이 北·美기독학자회 연례 세미나 참석차 24일 밤(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했다.

李 副부장은 공항도착 직후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 질문을 노련한 화술로 받아 넘겼다. 노동당 산하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副부장은 駐美대사 후보로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北美관계개선 가속화등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李鍾革 북한 노동당 副부장이 北·美기독학자회 연례 세미나 참석차 24일 밤(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했다.

李 副부장은 공항도착 직후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 질문을 노련한 화술로 받아 넘겼다. 노동당 산하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을

단신의 체구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애틀랜타 공항을 빠져나오던 李 副부장은 『4자 회담과 관련한 메시지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런 일을 혼자서 다하면 외교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겠느냐』고 응수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묻는 질문에 『형편이 좋지않으며 우리끼리 해결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식량을 사들여 오는 수밖에 없다』면서 『가까운 사이니 (북한측 대표단의 애틀랜타방문은 오래전에 예정됐던 행사임에도 그 시기의 미묘함 때문에 각국 언론의 각별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쏠리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의식, 이번 행사 주최측인 조지아대학 국제문제센터(소장 朴漢植교수)는 『현재로서는 카터전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말을 뺐다.

李 副부장은 또 『카터 前美대통령 면담계획이 있는 코카 콜라와 함께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문제 전문기자인 마이크 치노이 前北京(베이징) 지국장(현 스미스대학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서울지국장 손지애씨도 행사취재를 위해 날아왔다. 한국측에서는 韓完相 前통일부총리를 비롯해 李信行교수(연세대)등 5명이 참석하며 북한측 대표단은 李 副부장외에 최승철(해외동포회장) 박승덕(민족문제연구회회장) 지상록(同연구원) 주량민(통일문제연구소 참사) 박철(아·태평화위 연구원) 김철(同연구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측 대표단은 이곳 행사가 끝난 뒤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LA등을 순회하며 美관리 및 교포 지도자들과 연쇄접촉을 가진 뒤 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애틀랜타(美조지아주)=李相石특파원】

"식량난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여운

예정된 세미나불구 시기상 미묘 "언론초점"

카터 前美대통령 면담할 가능성 부인안해

▽ 세계일보 1996. 4. 27

美「쉘」社、北땅 5천평租借

油類저장시설 확보

【워싱턴=申相一특파원】미국계 자본이 참여하고 있는다국적기업「쉘(Shell)」이 북한 선봉 인근의 땅 5천평(1.7ha)을 50년 조차하는 대가로 50만달러를 북한측에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유회사중 매출규모면에서 엑슨에 이어 세계 제2위인 쉘의 북한땅 조차는 유류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油類전문지 최신호가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관련 사업관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미국인변호사는 『조차계약이 쉘과 북한 대외경제위원회간에 체결된 것으로 안다』면서 쉘社가 美재무부로부터 이에 관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등의 자본으로 구성된 「로열더치」그룹에 속해 있는 쉘社의 경우 美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本社 차원에서 미국은행을 경유하지 않은채 북한에 대한 자본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1996. 4. 27

美、테러국가서 北제외

내부방침확정 2단계 경제제재완화 근거마련

【워싱턴=鄭炳鎭특파원】美국무부는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무부는 북한이 제외된 「테러국 지정 명단」을 클린턴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29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對北 2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北·美관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한이 北·美 미사일협상이나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송환협상은 물론 한반도 4자회담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 조선일보 1996. 4. 27

"4者회담 보따리 풀어야 판단"

「즉시 접수-즉시 반대」만이 반응은 아니다

북경접촉 제의 南쪽대답 기다리고 있는중

北 李種革 일문일답

애틀랜타를 방문중인 李種革북한 노동당 副부장은 한국 보도진과의 접촉을 피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는 수행중인 崔승철 해외동포원호위원회 국장 등이 보도진과의 접촉 중 간중간 끼어들려고 하면, 『언론자유 구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라는 식으로 농담을 건네며,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했다.

李는 26일 카터센터에서 열리는 北·美기독학자회의에 앞서 열린 25일(한국시각 26일) 리셉션에서 한국 보도진과 30여분 가량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李와 보도진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4者회담 등과 관련한 남북 비밀접촉설이 많다.

『남북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서로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나.

『남북한과 해외의 동포들 모두가 하나되길 희망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민족적 지향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남북대화와 관련, 북경접촉 제의는 어떤 상태인가.

『서로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주석직등 권력 승계는 언제쯤 이뤄지나.

『좀 기다려봐야 한다. 아직 공식 애도기간도 끝나지 않았다. 보통 관습적으로 3년상을 치르는 것이니나.』

—4자회담에 아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외교부가 18일 「연구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 접수, 즉시 반대만이 반응은 아니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판단은 무엇이나.

『제안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이제 보따리를 내놓았으니,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는 조던 국제담당 사장은 평양만 5-6회 찾았던 사람이다.』

—북한과 해외의 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남쪽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기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쓰고 있지 않나.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가 한반도에서 책임있는 당국간에 열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에 부응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그런 논리라면 지난번에 언제쯤 이뤄지나.

『공식 애도기간도 끝나지 않았다. 보통 관습적으로 3년상을 치르는 것이니나.』

—4자회담에 아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외교부가 18일 「연구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 접수, 즉시 반대만이 반응은 아니다.』

—美CNN방문은 성과가 있었나.

『CNN에 친구들이 많아 만난 것이다. 이는 조던 국제담당 사장은 평양만 5-6회 찾았던 사람이다.』

【애틀랜타=朴斗植기자】

▽ 동아일보 1996. 4. 27

北 "南北대화 잘풀릴것"

李種革 부위원장 "北京접촉재개 韓國답변 기다려"

"4자회담 내용 설명해줘야"

金正日승계 年內가능 시사

이중혁

【애틀랜타(조지아주)=李載昊】李種革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남북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북미주(北美洲) 한국인 기독학자회가 주최한 한반도 통일문제 학술회의 참석차 애틀랜타에 온 李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남북한 북경접촉을 재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한 남한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李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4년 6월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중단된지 18개월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과 함께 대화재개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李부위원장은 노동당 부부장직과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책임참사직도 겸하고 있으며 金正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측의 북경 접촉재개 제의에 대해 『그같은 제의는 북한북미무역촉진위의 제의로서 책임있는 북한 당국자의 공식 제의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 왔기 때문에 李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李부위원장은 또 한미 양국의 한반도 4자회담 제의에 대해 『제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연구중이라고 대답하고 『한미 양국이 회답을 제의만 했지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납득하도록 설명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金正日의 주석직 승계시기에 대한 질문에 『공식 애도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습상 3년상을 치른다』고 말해 金日成 사망 2주년이 되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서울신문 1996. 4. 27

北 국제무역 촉진委 李成祿 7월께 訪日

【도쿄=姜錫珍특파원】 북한의 대일경제교류 실무책임자인 국제무역촉진위원회 李成祿회장이 오는 7월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북한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李회장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우호적인 아시아무역연구회의 초청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방일시 일본 대장성 통산성의 실무자 등과의 면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1996. 4. 27

「테러國제외」 美國의 의도

협상「빗장」제거 北 적극성 유도

北·美협상·4者회담등 끌어내기 整地

新코콤체제등 제재여지는 여전히 남겨

美국무부가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은 향후 전개될 北·美간 각종 접촉에서 유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테러국 명단 삭제가 곧바로 북한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對北협상을 북한의 대응태도에 따라 오히려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결정을 『北·美관계 개선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송환협상과 미사일 협상등 北·美간 양자협상은 물론 한반도 4자회담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주자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北·美간 관계개선을 선언한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新코콤(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체제를 발족시키는 등 관계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반발해 왔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접촉에 대한 빗장을 한 단계 풀어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는 조던 국제담당 사장은 평양만 5-6회 찾았던 사람이다.』

【애틀랜타=朴斗植기자】

▽ 서울신문 1996. 4. 27

北 국제무역 촉진委 李成祿 7월께 訪日

【도쿄=姜錫珍특파원】 북한의 대일경제교류 실무책임자인 국제무역촉진위원회 李成祿회장이 오는 7월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북한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李회장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우호적인 아시아무역연구회의 초청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방일시 일본 대장성 통산성의 실무자 등과의 면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1996. 4. 27

北, CNN 平壤지국 허가

9월 활동개시… 직원 13명

【北京=朴勝俊기자】북한 정부는 최근 美CNN 방송의 平壤지국 개설을 허가, 오는 9월 CNN 평양지국이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추진과 對美 대화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美CNN방송의 평양지국 개설을 허가했으며 현재 애틀랜타를 방문중인 李種革 노동당 부부장이 CNN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당국은 CNN에 평양상주 기자 1명과 카메라맨 1명을 비롯한 3명의 CNN 본사 파견 직원과 10명의 평양 현지 채용 직원을 고용하는 규모의 평양지국개설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측은 그동안 北京을 경유해서 평양에 수시로 직원을 파견, 평양지국 개설을 추진해왔으며, CNN 평양지국의 개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돼 결정됐다고 北京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CNN의 평양상주기자는 북한통신 在美교포, 또는 북한 현지인 가운데 선정하기로 북한당국과 CNN간에 논의가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CNN 평양지국개설 허가를 전한 北京의 소식통들은 『북한당국은 미국과의 대화확대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美보도기관의 평양상주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획기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오는 9월 CNN 평양지국이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자유로운 취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평양당국은 이미 CNN 평양지국의 개설에 대한 대비책의 기본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말했다。

CNN본사측선 否認

【애틀랜타=朴斗植기자】애틀랜타의 미 CNN 본사측은 CNN의 평양지국 개설과 관련,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CNN측은 25일(현지시간) 『애틀랜타를 방문중인 李種革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이슨 조던 국제담당 사장간의 면담이 이뤄졌지만 CNN 평양지국 개설문제에 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1996. 4. 28

美-北 유해회담 내달초 재개

【워싱턴=柄旭】미국과 북한은 내달 초 한국전 당시의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문제에 관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美관리가 26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양국이 구체적인 회담 재개일자와 장소, 기타 사항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이번 회담이 뉴욕에서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리는 전쟁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맡고있는 제임스 월드 국무부 副차관보가 美대표단 단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4. 27

4者회담 진전보며 北日수교교섭 추진

日북동아과장 밝혀

【도쿄=辛允錫특파원】일본 정부는 현재 北日국교정상화 교섭에 정식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4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벳쇼 고로(別所浩郎)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26일 밝혔다。

벳쇼과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정식으로 수교교섭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면서 『4자회담 제안에 대한 반응을 포함,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美日안보공동선언에 따른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헌법하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며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美日안보협력 강화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28

리종혁 부위원장 "언론, 분단 부채질 말아야"

한완상 전부총리 "민족·평화 우선원칙 필요"

북미주기독학자회의 연설

【애틀랜타=정연주 특파원】북미주기독학자회의에 참석한 리종혁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밤 만찬 연설을 통해 "북과 남은 지난 시기 서로간에 오해와 불신이 많았으나 이제는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점을 찾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와 북미주기독학자회의를 통해 북과 남, 해외동포 등 우리 민족 구성원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더욱 새롭게 느끼게 됐다"면서 "특히 언론은 분단을 부채질하는 불신을 심기보다는 화해와 단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한완상 전 부총리는 "최근 한반도에는 새로운 평화를 여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민족과 평화 우선의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다른 나라와 함께 평화정착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28

"北 테러國에 계속포함"

美국무부 경제제재완화 조만간 어렵다

【워싱턴=申相一특파원】美국무부는 26일 오는 30일 발표될 테러리스트국가 명단에 북한이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과 함께 계속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면서 금년도 테러리즘 관련국가는 작년과 같이 7개국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해 북한의 명단 잔류를 분명히 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어 對北 경제제재 해제조건들은 94년 10월 마련된 제네바합의에 명시돼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27

亞太평화위 부위원장 李鍾革은 누구인가

◇李鍾革

26일 미국을 방문, 北-美막후접촉을 벌일 것으로 알려진 李鍾革 亞-太평화위 부위원장은 막후교섭의 베테랑。평화위 위원장이자 金容淳노동당비서가 국제담당에서 대남담당으로 옮겨간후 사실상 金이 하던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그의 실제 직책은 북경쌀회담의 북측대표단장인 全今哲과 마찬가지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알려져있다。

36년 10월 강원도에서 태어난 그는 월북작가 李箕永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평양외국어대학 불어학과를 나온후 74년 대외문화 연락위 과장을 거쳐 76년 駐프랑스 유네스코대표부 대표, 85년 駐이탈리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대표부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대외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런 그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것은 90년 1월 金日成이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를 접견하는 자리에 배석, 어학실력을 발휘해 인정받았기 때문。그 후 그는 주로 미국인사들의 북한 방문 때 영접을 맡는 등 북한의 對美, 對日접촉의 첨병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과의 인연으로 작년 8월 수해 때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50만t의 쌀지원을 얻어내기도。외국어는 불어와 영어, 일어에 능통하며 장차 노동당 국제부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南昌龍기자)

對美-對日접촉 첨병역할 담당

외국어실력 뛰어나 막후교섭 도맡아

▽ 경향신문 1996. 4. 28

北이종혁 訪美이모저모

잇단 對南유화발언 「모종변화」주목
카터 前美대통령과 접촉설도 대두
CNN측, 평양지국 개설 공식 부인

미국을 방문중인 李種革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26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학술회의에 참석, 리셉션에서 「북남이 서로 비판만 한다면 역효과만 날 수 있다」며 「북남간의 동질성 회복은 시간문제」라고 말하는 등 대남유화자세를 보였다.

○ 카터센터 한반도 학술회의에 이어 26일 저녁 열린 리셉션의 분위기는 「그간의 남북관계가 불편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화기애애했다」고 한 참석자가 말했다.

이 참석자는 「李부위원장의 인사말이 두드러지게 유화적이었다」면서 私見임을 전제로 「특히 韓完相 전통일부총리와 李부위원장의 사이가 좋아 보여 두 사람간에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李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시기에는 오해와 불신이 많았으며 북남 관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서로 이해하고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커가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부위원장

○… 도단 이슨 CNN 수석부사장이 이날 학술회의장과 리셉션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 CNN의 평양지국 개설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슨 부사장은 그러나 CNN이 오는 9월 평양에 지국을 개설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CNN은 가까운 미래에 평양에 지국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면서 「현재 애틀랜타를 방문중인 북한대표단과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駐유엔북한대표부의 金정수 副대사가 예정에 없이 애틀랜타에 나타나 李부위원장 일행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참석자는 「金부대사가 26일 갑자기 회의장에 나타나 「(전날)밤에 급하게 왔다」고 소개했다면서 그러나 이렇다하게 주목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터센터측은 카터 前美대통령이 李부위원장을 만날 예정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터센터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다시 말하지만 카터 前대통령이 애틀랜타에 와있는 북한 인사 누구와도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센터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李부위원장이 카터 전대통령을 면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애틀랜타=朴仁奎특파원】

▽ 동아일보 1996. 4. 28

美애틀랜타에 「親北커넥션」

현지 韓人교포등 對北신뢰관계 구축
CNN·카터센터는 직접접촉 가능
北 올림픽참가·대표단訪美 성사시켜

26일 저녁(한국시각 27일 오전) 美애틀랜타市 한 호텔에서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울려퍼졌다. 北美지역 기독학자회의에 참석한 남북한 및 해외 대표단들이 회의를 마치고 열린 저녁 모임에서였다.

李種革 북한 노동당 부부장등 7명의 북한대표단 전원과, 韓完相 前통일부 총리등 우리측 학자들, 그리고 美전역에서 모여든 韓人들은 이번 회의의 주제어 「통일과 「민족」이라는 두 단어에 무척 감동한 모습들이었다. 美CNN의 이슨 조던 국제담당 부사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다소 뻣뻣하게 느껴지는 워싱턴의 분위기에 비하면 애틀랜타는 북한측 인사들에게 「고향처럼 느껴질만큼 친근한 곳이다.

우선 이날 회의가 열린 카터센터의 기념관 입구에는 카터 前미국대통령과 金日成이 나란히 찍은 94년6월의 사진이 걸려있다. 애틀랜타가 배출한 美대통령 카터와, 그의 평화중재노력을 기념키 위해 지어진 이 기념관에 이사 정부와의 직접통로가 여기로까지 치닫던 한반도 상황을 중재한 당시 카터의 활약(?)은, 퇴임후 카터센터의 설립 제1호로 기록돼있기 때문이다. 카터센터는 북한이 를린 핵 문제에 카터센터다.

CNN방송은 서방언론 중 북한이 가장 친근감 있는 우회로처럼 여겨지는 두 단어에 무척 감동한 진이 걸려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카터센터는 설명한다. 전쟁위 지는 곳이다. 올해 2월에는 카터의 아들이 직접 북한을 이끌고 訪北한 구호단을 이끌고 訪北하려다 여러 사정때문에 적 美기업들이다. 이튿바 이번 북한대표단 방문을 성사시킨 朴한식교수(조지아大·정치학)등 적잖은 韓人들도 북한과 연락이 수월한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朴교수는 남북한 문제에 관해 절대 중립을 지키려 애쓰는 편이다.

또 본인이 한국 언론과의 접촉도 극도로 자제하는 편인데, 불필요하게 양측을 자극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여들었다. 북한 역시 교민 접근방법을 종래의 이데올로기 중심보다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 「같은 민족」이라는 실정적 호소에 의지하고 있다.

【애틀랜타=朴斗植기자】

▽ 한국일보 1996. 4. 28

南北학자 한자리 對話 큰의미

北美기독학자회 美세미나안팎

李種革 "서로이해하려는 의지감지" 낙관論
주체사상 최고권위 박승덕소장 참석 주목
北대표단 곧 워싱턴방문 "이제부터 더관심"

북한의 4자회담 수용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美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 카터센터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北美기독학자회 주최 한반도 문제 세미나는 남북한 학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對美외교 조타수로 불리는 李種革 노동당 副부장이 미묘한 시점에 방미, 이 세미나에 참석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李 副부장은 이날 저녁 北美기독학자회 연차총회 및 세미나 폐막 만찬석상에서 전날 리셉션에서 한 국 특파원들에게 밝힌 대로 남북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남북한이) 과거 오해와 불신으로 곡절을 겪어왔지만 이번에 여기와 보니 그전보다 확실히 다른 감을 느꼈다면서 「병이 든 몇그루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던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려는 의식이 자라잡아 가고 있음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의 연설에 앞서 韓完相 前통일부총리가 역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나 이의 수락을 암묵리 역설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이유는 그와 金泳三대통령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北美기독학자회 창설멤버인 韓 前부총리는 이날 비록 「4자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만찬연설을 통해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촉구한 것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24일 애틀랜타에 도착한 뒤 하루 늦게 이곳에 온 李副부장과 애틀랜타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의 같은 층에 투숙하며 우의를 다져왔다.

그는 연설 첫머리에 한때 적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현재는 동맹관계를 맺어 수라를 감수하는 의미가 행간의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다. 그는 또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주장해온 북한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민족」이라고 강조한 뒤 4자회담의 당위성을 역설해 나갔다. 그는 「서로 기시키고 「동맹관계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로는 민족의 공존과 공영을 성취하기 어렵다」면서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민족공영과 민족화해,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이웃들과 민족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맞고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미래를 생각하자」고 말했다. 4자회담 수락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번에 북한에서 대규모 대표단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북한은 7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그중에는 주체사상의 최고권위자인 박승덕 주체사상연구소장(조선민족연구회장 겸임)이 포함돼 있다.

李 副부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27~28일 코카 콜라사등을 시찰한 뒤 29일 美국무부 관리들도 참석한 가운데 조지아大에서 열리는 「새로 부상하는 삼각관계-남북한과 미국」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들은 이어 워싱턴등지를 방문, 美의회및 행정부 진도자들과 만날 계획이어서 오히려 관심은 지금부터 더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애틀랜타(美조지아주)=李相石특파원】

▽ 조선일보 1996. 4. 28

「테러國」카드로 北변화 압박

美, 경제제재를 각종회담 도구로

"北협상파 입지 살려주자" 견해도

「혼돈」의 美·北관계

제도적 「최대장애물」

26일(한국시각 27일) 美국무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群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美정부가 종합보고서 공식발표전에 이를 알린 것은 더이상 이 문제를 둘러싼 주변의 추측을 막자는 짜증과 곤혹스러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 문제는 북한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현안이었다.

美정부가 對北조치(쌀지원 등)를 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를 막는 최대의 법적·제도적 장애물이 「테러지원 국가」라는 낙인이었다. 이번 결정과정은 여러 면에서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최근 美·北관계는 따히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잡히지도 않으면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정은 「혼돈스러운 美·北관계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틀의 일단을 제공해준다. 북한의 끈질긴 제외요구에, 가시적 성과 내지는 보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해온 미국의 대응은 결국 「포함」으로 막을 내린 것이 올해의 테러 보고서이다.

이런 과정은 對北경제제재해제, 4者회담과 美·北관계 정상화 등 여러 현안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투영될 전망이다.

對北경제제재 완화문제는 작년이후 줄곧 최고 관심사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 美정부 특히 국무부관리들은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년1월, 평양-미국간 직통전화개설 등 1차제재완화조치가 있었지만, 북한에 實益(실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말할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내 협상파의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도와줘야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북한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金正宇대표단 등의 국무부 관리면담에서 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한다.

「평화협정」문제 뒷전

많은 관측과는 달리 金일행의 워싱턴면담에서 「4者회담」 또는 「평화협정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경제제재해제가 主의제였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요구가 간절할수록, 이 문제는 美정부가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열마 안되는 對北수단이라는 사실임을 보여준다. 미사일 유해 등 기존 美·北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함께 추진된다」는 차원에서 美·北관계 사이의 「느슨한 연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4者회담문제는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美정부가 실망은 할지언정 크게 놀랄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장기적 포석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주요간부들의 잇단 미국行은 민간화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4者회담과 美·北관계는 어떤 면에서 한국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혼선이다. 제주도정상회담을 전후해 4者회담으로 한국쪽에 힘을 몰아주고, 美·北관계에는 무한정의 재량권을 줄 듯한 설명이 한국측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하지만 美국무부관리들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한 관리는 「분리라는 뜻은 「4者회담제안이 미사일유해 등 기존 美·北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함께 추진된다」는 차원에서 美·北관계 사이의 「느슨한 연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4者회담문제는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美정부가 실망은 할지언정 크게 놀랄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장기적 포석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주요간부들의 잇단 미국行은 민간화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美정부 역시 「북한과의 접촉기회」라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려 했다.

서로 "변화 보여라"

북한의 노림수는 미국내 분위기조성과, 직접호소 등 다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美정부는 북한과의 근본적 내용의 변화가 없는 한, 지금 美·北관계에서 들려오는 요란함이 내용까지 갖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애틀랜타=朴植기자】

北반응 日誌

▲4월16일=韓美양국, 4자회담 공식제의. 孫成弼 러시아주재 북한대사, 「북한과 미국이외 3자 개입불필요하다」고 부정적 반응.

▲16일=노동신문, 『정전협정은 북-미사이에체결. 남조선은못끼여들신세』.

▲16일=李三魯 태국주재 북한대사, 『4자회담은 연구가치가 있다. 평화협정은 북-미가 당사자이다』.

▲18일=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의 현실성을 검토중』.

▲19일=한성렬 유엔주재 북한공사, 크리스텐슨 미국무부부과장 면담.

▲21일=金正宇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클린턴대통령의 제안은 현실성을 따져봐야한다』. 워싱턴 세미나에서 언급.

▲25일=孫成弼 『4자회담 검토중이다. 남조선은 신뢰할 당사자 아니다』.

▲26일=조선중앙통신, 『평화보장문제는 북-미문제』라며 한국정부를 격렬히 비난.

▲26일=李種革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4자회담제의 어떤 내용인지 연구중, 남북대화 잘될것』. 워싱턴에서 한국기자들에게.

▽ 경향신문 1996. 4. 28

日, 北에 밀사파견

國交정상화 실마리 탐색

거물급경제인 전후배상금 北의중 타진

【東京=姜成輔특파원】 일본은 「한반도 4자회담」제의를 계기로 北·美간 대화분위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물급 경제인을 평양에 파견, 대북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북 밀사파견은 北·日국교정상화교섭을 위한 북한 노동당 金容淳비서의 訪日에 앞서 그의 측근으로 대일교섭실무자인 李種革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방일 초청한 시점과 거의 맞물려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도쿄(東京)의 외교소식통은 27일 일본의 한 대기업 총수급 경제인이 최근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 북측 요인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경제인의 방북이 외무성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외무성 산하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동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제인에게 맡겨진 「임무」는 북·일 수교교섭의 전제중 하나인 전후 배상금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의중 탐색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초 외무성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관계자는 배상금 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주는 측이 부담스럽지 않고 받는 측이 섭섭하지 않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외무성이 경제인을 비밀접촉선으로 활용한 것은 일본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북한측의 「구미」를 당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들어 대북밀사는 경협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측은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한 깊은 협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李種革의 방일은 金容淳서기의 방일에 앞선 사전정지작업 차원』이라며 『金비서의 방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은 4자회담의 추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가을에 본격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28

잦은 접촉 북-미 관계개선 임박

미사일협상·핵사찰등 다양한 경로통해 공식 교류 확대

강태호 기자

북-미 관계가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고 있다.

4·11총선 이후 마치 봇물 터진 것처럼 국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북한관리들의 '빈번한 미국행'만은 아니다. 이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담연한 얘기지만 북한관리들의 미국 방문을 북-미 관계개선의 일정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예컨대 조지워싱턴대 시거 동아시아연구소(소장 개스턴 시거)가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에 참석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이번 방문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월18일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주최 '환동해 심포지엄'에도 참석했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엔 뉴욕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 계획관리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한 뒤 뉴욕 인근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그의 미국 방문이 5개월여 사이에 3번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제 그의 방문은 '뉴스'가 아니라는 얘기도 된다.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북미기독자협회(회장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 주최의 세미나에 참석했으나 그의 방미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종교행사 참여로 미국에 와서 워싱턴 등 5곳을 돌아다녔다.

작년 60명 12~13회 방미

공식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관리들의 미국방문은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12~13회에 이르고 있으며 방문자는 연인원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여기에다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쪽 요청으로 그동안의 북-미 접촉이 수면 아래서 진행되거나 미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월에서 6월까지 잇딴 세미나 참석을 위한 북한관리들의 미국방문을 비약적인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 지난 16일 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4자회담 제의라는 상황이 이들의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몇몇 북한인 그룹이 미국을 방문중이지만 그들의 역할이 평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글린 데이비스 미국무부 대변인의 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의 말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공식 대화채널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쪽은 올 들어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북-미 3단계 회담 이래 처음으로 핵문제 이외의 분야인 미사일 등 대량 파괴 무기 문제와 유해송환 문제에서 고위 실무급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북-미간의 빈번한 교류가 앞으로 그 폭과 깊이에서 더욱 확대 심화되리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그런 변화의 흐름은 뉴욕의 채널과 베를린·뉴욕·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식접촉 및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미관계의 시간표는 이런 정치·군사회담의 틀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1차 한국전쟁 실종미군 유해송환 협상과 4월 베를린에서 열린 역시 제1차 미사일 비확산 협상은 제네바 기본합의 이래 북-미관계의 가장 큰 변화다.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르면 유해송환과 미사일 등의 분야는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가기 위해 진전을 이룩해야 하는 '상호 관심사항들'이다. 아울러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그밖의 상호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인 테러포기 문제 등도 물밑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영변 파견자 '평양채널'기능

이밖에 북한의 폐연료봉 봉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변에 미국이 국무부 실무 담당자들을 상시 파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의 공식설명은 봉인작업을 위한 통역 등 행정지원을 위한 파견이라는 것이다. 이에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미국무부 한국과 사이의 상시 대화채널인 '뉴욕 실무접촉'을 뒷받침하는 '평양 채널'의 성격도 있는 듯하며, 연락사무소 개설을 앞둔 미 관리들의 현지 적응 훈련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해송환협상 지난 1월 10일 하와이에서 미군 유해송환문제 협상이 열렸다. 미 국방부의 제임스 월드 전쟁포로 및 실종자 담당 부차관보와 북한쪽에서 김병홍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외교부 국제기구국장 겸임)이 수석대표로 나온 이 협상은 미국쪽 대표가 국방부의 부차관보급 고위실무자이고 북한쪽도 대표단에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박임수 대좌를 비롯해 군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북-미 군관계자들의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88년 시작된 베이징에서의 8차례 참사관급 접촉을 통해 실마리가 풀린 미군유해 송환은 90년 5월 처음으로 5구가 인도된 이래 지금까지 2백여구의 유해가 미국쪽에 넘겨졌다. 또 93년 8월엔 북-미간에 '미군유해문제와 관련한 합의서'가 체결돼 이를 기초로 판문점에서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유해송환비용 문제와 본격적인 송환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판문점에서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와이 협상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북한은 이를 북-미간 군사접촉이자 관계정상화의 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지난 3월 하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차협상에선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유해송환 비용 문제에서 지난 93~94년 북한이 인계한 1백62구의 유해 대가로 북한은 4백만달러를 내놓은 데 대해 미국이 1백만달러를 말하자 결렬됐다. 그러나 미국쪽 수석대표인 월드 부차관보는 2백만달러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비용문제보다는 유해발굴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에 북한이 동의할 것인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지적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유전자 감식법을 이용하면 실종자 8천1백명 가운데 3천5백명 이상의 유해가 송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유해송환을 위한 북-미간 협력이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사일 협상 지난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사일 비확산협상은 미사일을 내세우긴 했지만 미사일을 비롯해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군비통제 협상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쪽에서 로버트 아인호른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가 북한쪽에서 리형철 미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온 이 베를린 협상은 회담의제와 일정 등이 협의되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 협상때 북 '배려'늘어

미국은 우선 개량형 스커드 및 로동 1호 등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등 사정 3백㎞를 넘는 북한 미사일이 동북아 일원뿐 아니라 이란·시리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됨으로써 전세계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북한을 이들 범주의 미사일수출을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차적 목표일 뿐이다. 미국은 단순히 미사일 기술의 수출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생산 그리고 운반수단에 불과한 미사일에 탑재되는 화학무기 등도 통제·감축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협상 군비통제 겨냥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의 개발·보유가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논리로 미국쪽의 요구가 국가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제거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베를린 협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미는 물론이고 남한까지도 포함하는 한반도의 포괄적인 군비통제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 협상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문제와 관련되는 회담이 되리라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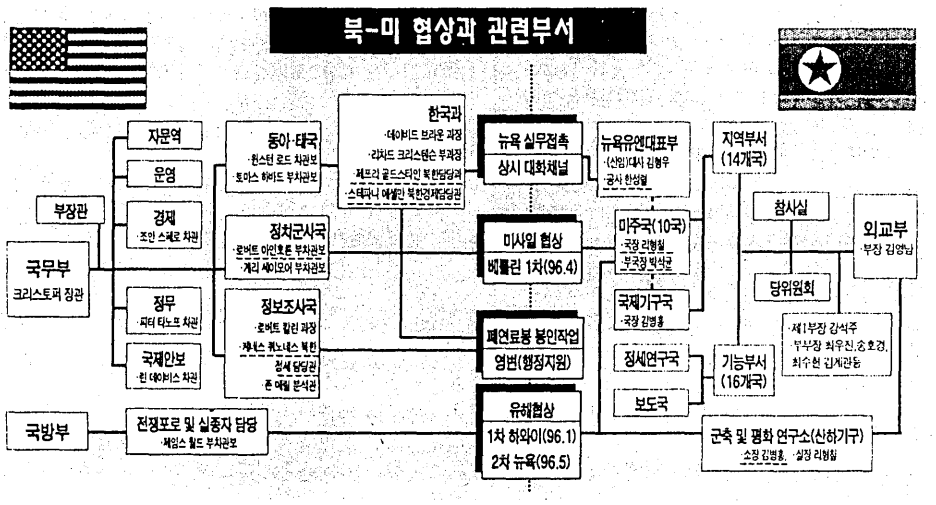
미국무부 영변 상주파견

연료봉 봉인작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미 관리들의 파견은 지난 2월 중순 미 국무부의 케네스 퀴노네스 정보조사국 북한정세 담당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그의 방문에 대해 "영변에 있는 미 기술자들의 사용후 핵연료봉 봉인작업에 대한 연락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뒤 미국의 북-미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내정된 스펜서 리처드슨이 지난 3월1일 북한에 들어가 임무 교대를 했다. 또 세번째로 국무부 한국과의 스테파니 에셀만 북한경제 담당관이 27일 북한에 들어갔다.

현재 영변에서 진행중인 8천여개의 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은 10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10개월 동안은 번갈아가며 국무부 실무자들이 영변에 파견된다는 것인데, 차기 연락사무소장이 파견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 서울신문 1996. 4. 29

日, 對北수교협상 재개관련
南北韓관계 신중 관망

도쿄신문 보도

【도쿄(東京)】일본 정부는 대(對)북한 수교협상 재개와 관련해 일본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지양하고 북한의 자세를 관망키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무성 산하 단체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외교부 소속 군축평화연구소 대표단을 일본에 초청하는 문제도 당초 올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따라서 남북 관계 추이를 살펴가면서 북한과 수교협상 재개 시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측이 지난달 2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가 『일·북한 관계는 남북관계보다 선행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어렵사리 개선단계에 들어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996. 4. 30

北, 美에 테러국제외 촉구
訪美 李種革 경제제재 전면 해제도

【애틀랜타(美조지아주)=李相石특파원】미국을 방문중인 李種革 북한 노동당 副부장은 29일 對북한 경제제재 조치의 전면 해제와 테러국가 명단에서의 삭제를 미국측에 촉구했다.

李 副부장은 이날 美조지아大 국제문제 연구소(소장 朴漢植) 평생교육센터에서 주최한 「떠오르는 삼각구도-남북한및 미국」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 이후 일련의 합의이행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불만은 미국측의 속도가 굼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군사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근본적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池明觀 한림대 교수와 李信行 연세대 교수등 한국측 참가자 전원이 이번 세미나가 남북한및 미국의 공식회담으로 보도된데 불만을 갖고 철수하는 바람에 북한과 미국측만 참석했다.

▽ 중앙일보 1996. 4. 29

北·日 비밀접촉 지속 立證
급진전되는 兩側 수교 교섭
'보상금' 핵심爭點… 北·美협상 보며 속도조절

김성진 기자

북·일 수교교섭이 급진전될 조짐이다. 일본은 지난 22일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일본연립여당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수교교섭 재개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다. 또 금명간 북한 고위인사들도 잇따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일본측도 거물급 경제계 인사를 북한에 보내 절충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일간 수교교섭 급진전은 92년 북·일 수교협상 결렬 이후에도 양측간 비밀접촉이 계속돼왔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지난 2월 호리 고스케(保利耕輔)전문부상이 싱가포르에서 북측과 접촉을 가진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일본은 북한의 유력한 외교관이 주재하는 베이징(北京)·제네바·빈 등에서도 수시로 전화접촉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92년 결렬된 북·일 수교협상의 핵심 쟁점은 보상금 문제. 북한은 그동안▶교전상대국으로서의 전쟁배상▶식민지시대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전후 45년간 북한을 적대시해온데 대한 보상을 포함, 약 1백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65년 한국과 국교수립시 적용했던 모델을 감안,재산권·청구권을 인정해 연체이자를 감안한 40억달러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시각차가 크지만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컨대 북한은 배상금을 빼고서도 약 20조 2천7백만엔(약 1백47조원·한국개발연구원 추정치)에 달하는 조총련 공유재산가운데 적어도 10조엔(약 73조원)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액수다.

일본 정부 역시 쟁점인 李은혜(KAL기 폭파범 金賢姬의 일본어교사)신원확인 문제를 수교교섭과 별도 채널로 협의하는 방안을 북한과 비공식적으로 절충한 바 있다.

수교교섭은 한국정부를 의식, 연락사무소개설 등 북·미관계 개선속도를 앞지르지는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이어서 전체적인 수교협상진행은 미국측의 행보와 맞물려 나갈 전망이다.

▽ 중앙일보 1996. 4. 29

南北대표 참석 토론회
美 조지아대학서 개막

지난 26일 애틀랜타 북미주 한인기독학자회의에 참석했던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한대표단은 28일 조지아대가 있는 애턴스로 자리를 옮겨 「남북한과 미국—새로운 삼각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회의는 조지아대 부설 국제문제연구센터(소장 박한식교수)주최로 열린다.

회의배경과 관련, 주최측은 『탈냉전시대 한반도에 상존하는 냉전상태는 남북한이 영합(零合 : zero-sum)게임의 룰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며 상호 포용과 조화를 시도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양함을 인정하며 동일성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1996. 4. 30

美, 北제재완화 추진

외교소식통 韓國과 목록 사전협의 끝내

교역확대-人的 北상응조치때 단행키로

미국은 북한과의 인적 교류 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 구체적인 단행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북한이 미군유해 송환에 성의를 보이는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취하게 될 경제제재 추가 완화 조치에는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완화 △북한인에 대한 미국입국비자발급 확대 △북한여행 미국 여행자의 소지금액 확대등 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비롯해 △미국선박의 북한입항 허용 △미-북간 경제거래대금의 직접결제 허용등 미-북간 경제교류 확대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미국이 단행할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조치 단행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마쳤으나 아직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의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군유해 송환 △남북대화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경수로사업 등의 분야에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도 지난해 1월에 이어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金正宇대외경제위부위원장이 美국무부의 토머스 허바드副차관보와의 면담등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면서 "미국측은 이에대해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인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해 조심스런 낙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鞠賢然기자〉

▽ 중앙일보 1996. 4. 30

남북한-美 3者 학술회의

우리대표 돌연 不參

"정부대표로 오해할 우려 때문"

애틴스=길정우 특파원

29일(현지시간)조지아대에서 개막된 「남·북한과 미국 : 새로운 삼각관계」 학술회의에 남측 대표가 돌연 불참했다.

회의를 주최한 국제문제연구센터(GLOBIS)소장 박한식 교수는 『북측 대표단에 고위관리가 참석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북한당국의 입장이 대변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남한측 대표들은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남한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초래될 엄청난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불참한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 시작 후 첫 발언에 나선 북측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남측인사들의 불참에 대해 『남측대표들의 불참으로 회의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아무튼 남측인사들이 불참해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북한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남측불참이 북한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4. 30

北태도에 개선속도 달렸다

美-北 日-北관계 어떻게 돼가나

美, 4者회담 수용땐 경제제재 완화
日, 金容淳초청 修交교섭 재개준비

한반도 4자회담 제의 이후 미-북, 미-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험 접지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는등 명분만 제공하면 언제든지 對北 관계개선 조치를 구체화할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의 최대현안은 4자회담과 미국의 對北 경제제재 완화문제다. 미-북 양국은 북한의 숀난무대외경제협력위원장과 李鍾革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일행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이들 현안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제의한 만큼 4자회담과 경제제재완화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계돼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곧바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란게 이 당국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포함한 미-북 관계개선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실적인 진단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4자회담 수용여부와 경제제재완화 등 미-북간 관계개선을 일괄타결하려들 공산이 크다.

한미 양국의 정부당국자들은 4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다.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訪美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입장은 미국측이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등을 단행해야기 때문에 곧은 오히려 미국측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단계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고 실무적인 검토작업까지 마친 상태"라며 "다만 현단계에서는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4자회담과 관계없이 북한이 미군유해송환, 미사일, 남북대화 연락사무소개설 경수로 제공 문제등에 있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지난해 1월에 이어 2단계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교섭 준비를 서두르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일본은 오는 7월께 북한의 金正日이 공식 권력승계를 할 것으로 보고 올 여름에 본격적인 대북 수교 교섭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해 북한 대외경제의 최고책임자인 金容淳노동당비서의 訪日을 초청해놓고 있다. 북한의 對日교섭 실무책임자인 李鍾革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숀비서에 앞서 미국 방문을 마치는대로 내달 7일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일본은 수교교섭 재개에 앞서 북-일 관계개선의 매개체인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현재 잉여미가 반입났다는 이유로 대북 식량 추가지원을 유보해놓고 있으나 북한의 4자회담 수용등 상황변화가 생기면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鞠賢然기자〉

Ⅶ. 남북관련 동향

4. 북한 내정

▽ 조선일보 1996. 2. 6

北, 민간차원 대화 "고집"

당국간 대화거부… 對美-日 관계개선 노린듯

북한이 올해에도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한 채, 민간차원의 대화공세와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反韓-통일투쟁 선동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3일 남북한 및 해외 정당-단체들 간의 접촉과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올해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의 「통일애국인사」, 정당-단체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녘, 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사이에 광범한 접촉과 대화를 실현시킬 때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릴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남한과 해외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올해를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민당 金英浩 부위원장도 이날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동참』을 호소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7일 평양방송을 통해 연초 일본에서 열린 反韓단체 성격을 띤 「在日한국민주연합」(의장 곽동희) 모임을 소개하면서 『이 단체가 남조선 총선거를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남북색선전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도 지난달 21일 『고국민중의 투쟁에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2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北)의 대화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해 남북한 당국간 대화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북한이 당국간 대화는 거부한 채 민간차원의 접촉이나 해외동포들의 통일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조성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해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金仁杭기자〉

▽ 경향신문 1996. 2. 3

"金正日 승계 3년 탈상후"

駐유엔 北대사부인

【워싱턴=연합】 클린턴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유엔주재 북한대사 朴길연의 부인 조옥단은 1일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3년탈상(96년 7월8일)이 끝난후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조찬기도회장인 워싱턴 힐튼호텔 로비에서 한국기자와 마주친 朴대사는 『金正日의 주석직 취임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으나 곁에 있던 부인 조씨는 『3년탈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북한전문가들은 조씨의 이같은 발언이 평양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앞서 주창준 북경주재 북한대사도 올해에 권력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 조선일보 1996. 2. 3

"南과 결코 對話안할것"

北, 하와이 韓美日성명 내정간섭 주장

노동신문 보도

【北京=聯】 북한은 한국과 또다시 대화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일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新華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한-미-일 3국이 지난달 하와이에서 북한에 대해 외부세계와 대화하고 한국과도 그동안 중단했던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한 공동성명은 『제3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외부세계와 대화하고 문호개방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나, 이는 국의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1996. 2. 5

金正日 「지지기반 확대」 본격화

軍이외 청년조직·조총련등 各界인사 잇단 접촉

金正日이 새해들어 공식활동 영역을 청년조직과 조총련등 군 이외의 분야로까지 넓히며 자신의 스타일을 과시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金正日의 이같은 행보는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앞둔 사전포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金正日은 지난달 1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사청맹)」으로 이름이 바뀐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대표자회의 폐막식에 참석한데 이어 22일에는 조총련 대표단과 함께 인민군 협주단 공연을 관람했다. 지난달 20일 제1회 세계군인체육대회(지난해 9월 개최) 참가 인민군 체육선수 및 지휘성원(코치)들을 접견해 기념 촬영을 하는등 그는 올해 벌써 세번째나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북한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는 金正日이 김일성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청년조직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金正日이 지난해 1월 모습을 나타냈던 세차례의 공식 행사는 제214군 부대 방문 등 모두 군관련 행사였고 지난해 한해의 공식 활동 역시 4분의 3 이상이 군관련 행사였다. 金正日의 최대 권력기반인 북한 군부는 지난해 10월의 수뇌부 개편과 12월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우성호 송환 등으로 미뤄볼때 온건 실용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는 金正日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金日成 유훈통치 벗고 권력승계위한 행보" 관측

金正日은 지난달 22일 「조총련 일꾼 대표단」, 「재일조선청년동맹 축하단」, 「재일조선청년학생 대표단」을 만났다. 이는 그가 조총련의 막강한 자금력, 특히 지난해 9월 조총련 산하에 결성된 「재일조선인 청년상공인회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조총련 2~3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 북한에 필요한 헌금과 기금조성에 소극적이며 조총련 소속원들의 이탈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金正日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경제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중국식의 「정치적 사회주의 고수와 경제적 시장경제 원리 도입」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위해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의 자금지원과 젊은 세대들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金炳讚기자

▽ 한국일보 1996. 2. 10

金正日 생일행사에 3億弗 책정

北 전체주민 두달치 식량구입費 해당

해외공관·상공인대표등에 비용 갹출

【베이징=연합】 북한은 金正日의 생일(16일)을 앞두고 행사비용으로 약 3억달러를 책정, 60여개 해외공관과 1백30여개 무역대표부 및 상공인 대표 등으로 부터 10만~1백만달러씩의 비용을 갹출키로 했다고 北京(베이징)의 한 서방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金의 생액수로서 친북한 국가에 일행사비용 3억달러는 국산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주민 2개월분의 식량에 해당되는 88만톤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로서 친북한 국가에서 공식취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회」결성과 경축행사 및 국내에서의 각종 행사 및 생일특식 선물비용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金의 생일을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올해 金日成의 3년상을 치르는 金이 북한 최고통치권자로서 공식취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2. 7

金正日 6~7월께 권력장악

在日 朴甲東씨 본지회견

노장세력 조만간 숙청할듯

【도쿄=田翼 특파원】북한의 최고권력자 金正日이 현재 북한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崔光인민무력부장과의 권력투쟁을 오는 6~7월까지 마무리짓고 노동당총비서와 국가주석에 취임할 것이라고 일본에서 활동중인 前남로당총책 朴甲東씨가 6일 밝혔다.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 상임의장인 朴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최광은 지난해 10월 인민무력부장에 취임한 이래 60, 70대 군원로들을 규합해 군조직을 사실상 완전장악해 왔으나 金正日직계인 50대 소장급 군인사들이 그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있어 북한군내 노소장파별간에 치열한 권력쟁탈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朴씨는 『金正日이 지난 93년6월 3차7개년계획 실패의 책임을 지고 金日成으로부터 3년간의 권력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올해 6월 그 기간이 만료되는데다가 김일성의 3년탈상도 끝나게돼 6월이나 7월께 金正日측근세력이 권력장악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朴씨는 金正日이 지난 1월 사회노동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한데 대해 『과거 문화혁명당시 중국의 홍위병이 공산당조직을 와해시켜 권력장악에 성공한 수법을 답습한 당파괴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 조만간 당·정·군에 배치된 김정일의 추종세력 5백만명이 노장세대의 숙청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朴씨는 또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기 전에 무언가 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며 『2월이나 4월쯤 한국내에서 게릴라활동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 중앙일보 1996. 2. 6

김정일承繼 앞두고 충성경쟁 본격화

최근 주요단체 집회 분석

김용호 전문기자

최근 북한은 당·정 연합회의, 인민무력부 궐기모임, 사로청(社勞青) 대표자회의및 근로단체 전원회의등을 잇따라 열어 김정일(金正日)중심의 체제수호를 다짐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김정일 승계분위기로 연결해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옹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대남·대미 평화제스처가 물씬 풍기는 내용들을 쏟아 놓고 있으나 외부압력에는 결연히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는다. 신년사에 반영된 입장이 재표명된 것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

和解몸짓속 외부사상 문단속 강화

우선 당총비서및 주석직 승계와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일성 3년상을 맞는 올7월 김정일의 공식승계가 계획됐다면 보름앞으로 다가온 그의 생일(2월16일)을 출발점으로 김일성생일(4월15일)과 3년상(7월8일)이 이어지는 기간에 공식승계분위기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또 당·정을 비롯한 각 단체간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경쟁이 본격화된 신호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내비치는 평화제스처는 대미평화협정체결 주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재선을 노리는 클린턴대통령의 외교성과로 연결돼 득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협정체결을 성사시킨다는 계산이다. 또한 조만간 밀려들어올 「외부사조」에 대한 문단속의 의미도 담겨 있다.

▽ 한겨레신문 1996. 2. 12

북한 조평통 담화

"각계인사 접촉강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발표하고 민족대단결에 입각한 통일실현을 강조하면서 남북한과 해외 각계인사들의 접촉과 대화를 주장했다고 〈내외통신〉이 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정당·단체 연합회의가 올해를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자고 주장한 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11일 보도했다.

▽ 중앙일보 1996. 2. 10

7월 3년喪 끝나면 김정일 主席職 승계

北 김응렬 本紙회견

니가타=김국진 특파원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회의에 참석중인 북한의 김응렬(金應烈)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은 8일밤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일성(金日成)의 3년상이 끝나는 오는 7월이후에는 언제든 김정일(金正日)의 주석직 취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에 대해 『30년전부터 공화국(북한)의 정치·경제를 주도해 왔으며, 인민들도 金비서를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님과 마찬가지로 존경하고 있다』며 북한사회가 매우 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1996. 2. 12

北 식량난과 金正日 생일잔치

남풍북풍

張秀根 〈연구위원〉

오는 16일은 金正日의 54회 생일. 지난해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자리매김된 金正日의 생일을 앞둔 요즘 북한전역이 잔치준비로 시끌벅적한 모양이다.

북한에서 치러지는 金正日 생일축하행사는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등 10가지가 넘는다. 이들 행사외에 金正日혁명사적지 참관이나 기념우표발행 같은 「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북한은 또 金正日의 생일을 앞두고 그의 위대성과 그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한 각종 문학작품을 집중창작하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등의 찬양가요 보급에도 열을 올린다. 이를 위해 북한은 주민조직망별로 노래보급책임자를 선정, 집단적인 노래학습모임을 수시로 갖는다.

북한은 이번 金正日생일잔치에 3억달러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한다. 3억달러면 1t에 3백40달러인 태국산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주민의 2개월분 식량에 해당하는 88만t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지금 그들이 처한 형편을 보면 金正日생일상차리기에 신경쓸 여유가 없는 게 북한이다. 평양측 주장대로라면 5백20만명의 수재민이 한데 나앉아 끼니걱정을 하며 엄동설한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미상원 샘넌의원을 비롯, 많은 북한전문가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한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지원만으론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과다한 국방비와 집단농장의 비능률, 비료와 농약부족, 특히 다락밭개간으로 인한 수계(水系)변화가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金正日은 바로 군비(軍費) 편중배분과 다락밭개간을 「지도」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볼 때 金正日은 현금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부른 화근(禍根)」이라고 할 수 있다. 궁핍과 기아(飢餓)의 원인제공자를 1년 열두달 지성으로 모셔야 되는 북한주민. 이 겨울 그들이그렇게 측은할수가없다.

▽ 중앙일보 1996. 2. 16

행사 다양… 예전보다 떠들썩

잇단 脫北·망명속 54회 생일맞은 김정일

유영구 전문기자

성혜림(成蕙琳)씨 일가의 행방불명과 평양에서의 총격전 및 망명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예정된 김정일(金正日) 생일행사를 떠들썩하게 치렀다. 김정일숙소 등은 베이징(北京)주재 북한대사관이 구입, 고려민항편으로 수송한 생화로 장식됐다.

15일의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선 전당·전군·전민의 혁명적 규율과 군의「만반의 전투태세」가 강조됐다. 김정일 자신은 예년처럼 행사에 불참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16, 17일 양일간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선포하고 휴일로 쉬고 있다.

일련의 생일행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4일 김정일의 출생지로 선전되는 백두산밀영(정일봉 바로 밑)에서 열린 육·해·공군 연합모임이다.

이 자리엔 조명록(趙明祿)군총정치국장, 김영춘(金英春)군총참모장, 김광진(金光鎭)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이하일(李夏一)당군사부장 등 차수급을 비롯한 군실세들이 참석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김정일이 「오늘의 김일성(金日成)」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명록은 특히 전군에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고 성새방패가 돼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일)를 결사옹위한 것』을 역설했다. 이날 밀영에선 불꽃놀이까지 벌어졌다.

노동신문은 김정일 54회 생일 기념사설에서 『우리 장군님은 단 한번의 실패나 사소한 실수를 모르시는 혁명의 천재』라며 『김정일동지의 두리(주변)에 단결하는 것이 우리인민의 신념의 기치고 승리의 기치』라고 역설했다.

육·해·공軍 실세들 忠誠경쟁 눈길

북한이 이번 생일행사에 신경을 쓴 흔적은 우크라이나공산당, 포르투갈공산당, 영국공산당 등의 축하사절단을 초청한 데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정일봉 답사행군, 백두산상 체육대회, 2·16예술상 경연대회, 미술·사진·도서전시회, 영화상영, 국제피겨스케이팅대회 등 10여 가지 행사가 줄이었다.

김일성 생일행사때 열리던 전국노동자 예술소조경연대회도 이번에 열렸다. 생일 분위기 고조를 위해 김정일찬양가요를 보급하는 한편 사상강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북한 방송들은 최근의 비상사태 보도는 피하면서 지난해보다 성대한 생일행사만 요란하게 보도했다.

권력 심장부와 일부 실무부서는 생일을 따질 겨를이 없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요란한 행사와 휴일을 즐겼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일이 자신의 생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해왔다고 선전해왔는데 이번 생일에는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다.

▽ 국민일보 1996. 2. 16

金正日생일 축하 北 어제보고대회

【도쿄=연합】북한 평양방송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15일 金正日의 54세생일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린 것으로 보도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대회에는 李鐘玉 朴成哲 金炳植부주석 崔光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당정 간부가 참가했다.

金正日과 姜成山총리, 金英柱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崔泰福노동당비서가 보고를 했다고 평양방송은 전했다.

▽ 조선일보 1996. 2. 18

北 권력서열 변화없어

【서울=內外】 지난 15일 金正日의 54회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한 북한의 고위간부들의 서열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석단에는 金正日과 姜成山총리, 金英柱부주석 등은 불참했다. 軍차수그룹은 정치국후보위원과 당중앙위비서들 사이에 위치해 군부의 위상에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 중앙일보 1996. 2. 18

김정일 마카오신문에 政治광고

"사회주의國 이념포기" 비난

북한 지도자 김정일(金正日)은 54회 생일을 맞은 16일 4천7백50달러(약 3백74만원)를 들여 마카오의 중국어 신문 타이충포우에 전면광고를 내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金은 광고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배반하고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황금만능주의를 널리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사회주의 사상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 과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앞장섰던 일부 국가들이 지금은 단지 경제건설만을 앞세우면서 국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이는 경기 침체와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또 金이 북한군을 사열하는 모습, 군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등 다섯장의 컬러사진을 싣고 있다.

[마카오·홍콩 UPI·로이터=연합]

▽ 한겨레신문 1996. 2. 16

김정일비서 54회생일 맞은 북한

'이상징후'불구 경축행사 여전

'위대한 수령'호칭…"균열감출 의도" 분석도

이상기 기자

16일 김정일 비서의 54회 생일을 맞아 북한은 최근 성혜림씨 일행의 탈출과 조명길 하사의 망명 기도사건 등 일련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연례행사를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했다.

오히려 김 비서를 '위대한 수령'으로 호칭하면서 북한군에 대해 '김정일의 친위대' 역할 수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북한은 지난 15일 김 비서의 54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통해 김 비서의 영도 아래 전당, 전군, 전인민이 하나와같이 움직여 혁명적 규율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성 주석 사후 두번째 맞는 이번 '김 비서 생일 행사에서 북한은 "최고사령관(김정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이를 무조건 집행하는 군체계와 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동당 최태복 정치국후보위원 겸 비서는 "김 비서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굳건히 옹호 보위하며 그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것"을 독려했다고 〈중앙방송〉은 보도했다.

특히 그는 "김 비서는 수령(김일성 주석)과 사상도 같고 목표도 같으며, 뜻도 같은 오늘의 김 주석"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체제 이탈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 방송들은 김 비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전국적인 행사가 한창이며 전국이 축제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가령 김 비서의 탄생지로 성역화되고 있는 백두산 '밀영'에서는 지난 14일 불꽃놀이 행사가 벌어졌으며, 평양에서는 당일 러시아 무역대표부 망명기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민무력부 주최의 축하연회가 있었다.

북한이 김 비서의 54회 생일을 맞아 종전과 다름없이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최근 내부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체제가 외부에서 관측하듯 붕괴 또는 몰락의 길을 갈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증거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물론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체제내부의 분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분히 의식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탈북 망명자인 강명도의 장인으로 알려진 강성산 총리가 이번 행사에 불참한 데 대해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 경향신문 1996. 2. 26

"대표회의 갖자" 또 편지공세

방송통해 각계인사에 발송사실 밝혀

정부, 배달않고 본인원할땐 공개방침

북한은 지난 23일 남북한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간 대표자회의를 열자는 내용의 편지를 남한과 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냈다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들 방송이 편지를 발송했다고 발표한 대상은 단체 63개, 개인 89명이다. 대부분이 종교·노동·재야운동권 단체 및 재야인사들이지만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4개 정당도 망라돼 있다.

이 방송은 편지발송 대상중 4개 정당 대표를 가장 먼저 거론했으며 이중 金元基·張乙炳민주당 공동대표가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고 金大中국민회의 총재, 金潤煥신한국당 대표위원, 자민련 순으로 나열됐다.

자민련의 경우 정당명만 적시하고 金鍾泌총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 특이했다. 북한이 89년 1월 남북정치협상회의와 90년 1, 2월 남북당국·정당수뇌협상회의를 각각 제의하면서 정당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였던 金鍾泌이라는 이름을 거명했었다.

이때 당시 盧泰愚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를 대통령 대신 민정당총재로 호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간접 표출하기도 했다.

정당대표 다음으로는 통일·노동·농민·대학생·여성·청년·종교 단체의 순서로 거론, 북측이 나름대로 우선시하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사회단체중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통일운동단체를 앞자리에 놓은 것은 통일과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명단 중간에는 정당대표와는 별도로 李基澤민주당 상임고문, 金槿泰·李鍾贊국민회의 부총재, 민주당의 李富榮전의원과 李哲총무 등 두 야당 중진들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의 張基杓씨는 21세기사회발전연구회장 명의로 대상자에 들었다.

또 韓完相한국방송대학장, 白基玩통일문제연구소장, 兪在賢경실련사무총장, 申庚林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李効再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宋壽一한국노총위원장 대행, 崔洌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도 포함됐다. 종교지도자로는 金壽煥추기경, 宋月珠조계종총무원장, 咸世雄·文奎鉉신부, 吳忠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이 대상자로 되어 있고 천도교·대종교 등 민족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명이 포함됐다.

故 文益煥목사의 부인인 朴容吉씨, 姜汝奎YMCA사무총장, 安在輝한국기자협회장, 崔鍾賢전경련회장도 대상자이다. 이와함께 잡지 「말」의 발행인 盧香基씨, 주간 노동자신문 발행인 李태복씨, 姜萬吉고려대교수, 白樂晴서울대교수, 李泳禧전한양대교수, 시인 高銀씨 등도 있다.

이 편지들은 관계당국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당국은 편지발송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원하는 경우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李大根기자>

▽ 동아일보 1996. 2. 23

北、西歐와 관계개선 접촉

獨佛英濠와 核문제 매듭 판단… 外交 다변화

【런던=李進寧】북한이 지난해부터 독일과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주요 서방 미수교국과 국교 정상화 또는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벌여온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런던과 본 및 모스크바의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주요 서방국가들과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 이같은 교섭을 벌여왔다고 22일 밝혔다.

북한은 영국 및 호주와 북경 주재 양국 대사관 외교관을 통해 교섭을 벌여왔으며 독일과는 베를린의 북한 이익대표부, 프랑스와는 파리의 대표부를 통해 각각 주재국 정부와 교섭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호주의 경우 이미 다른 서방국가에 앞서 교섭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북한측의 제의에 따라 도로 지난 76년 단절된 양국 외교관계 교섭 노력과는 별개로 지난 1~2월 모스크바주재 네덜란드 대사관과 네덜란드 외무부에 각각 외교적 교섭을 요청하며 접근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네덜란드의 ING은행에 서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지점 설립을 청원하는 등 서방 각국의 외교적인 접촉도 없는 네덜란드에 호의를 표시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합의와 北美간 연락사무소 교환원칙 합의 등으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마찰이 일단 해소됨에 따라 미국의 다른 서방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경향신문 1996. 2. 27

對韓 편향정책 중단 北韓 日에 강력촉구

【東京=AP연합】북한은 26일 일본의 새 정부에 대해 한국 편향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장문의 사설을 통해 2차대전 이후 일본의 對한반도정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는 적대적이며 남한에는 우호적』인 것이었다고 비난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3. 2

"金正日 7월8일後 주석 취임"

日정계 소식통 밝혀

【東京=李濟기자】金正日이 金日成 사망 3주기인 7월8일 이후 주석에 취임할 것이라고 일본정계 소식통이 1일 밝혔다. 북한은 최근 다케시타(竹下登) 前총리에게 『金正日의 주석취임 준비가 순조로우며, 3주기 행사를 마친뒤 주석에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서울신문 1996. 2. 29

조국전선 서기국장 北、白南俊 임명

【北】북한은 최근 柳浩俊의 사망(95년10월)으로 공석이 된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에 전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白南俊을 임명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한 집회 소식을 보도하는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白南俊을 조국전선 서기국장으로 호칭함으로써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 한겨레신문 1996. 3. 2

북 김정일비서 동부전선 시찰

북한 김정일 비서가 지난달 27일 동부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중앙방송〉이 1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김 비서는 이날 오후 현지에 도착해 차수 이하일, 대장 김명국 전재선, 상장 박재경 등 군 간부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최전방에 위치한 351고지에 올라 "주위환경을 요해하고 1천2백m 밖에 있는 적들의 진지를 바라보면서 적정을 청취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김 비서의 올해 군부대 방문은 지난달 20일 제963부대 여성중대 시찰 이후 두번째이다.

▽ 한국일보 1996. 2. 21

金正日 공식석상 연주회 집단체조관람

【서울=연】金正日이 지난 18, 19일 군협주단 공연과 집단체조를 관람, 2월 들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잇달아 모습을 나타냈다.

金正日은 18일 玄哲海 등과 함께 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북한 관영 중앙방송이 19일 보도했다.

玄哲海의 참석은 조카인 玄승일 부부의 한국 망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재를 과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金正日은 이어 19일 평양체육관에서 평양시 청소년 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장군님 따라 붉은기 지키리」를 관람했다.

▽ 조선일보 1996. 2. 28

成씨 충격이냐 심신장애냐

김정일 公席 '침묵'

최근 각종行事때 악수만

최근 북한 최고권력자 金正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해외동포들이 『김정일이 분명 말을 해야할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해 관심이다.

최근 김정일을 잠시 만났던 한 해외동포는 27일 『김정일이 두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부드러운 자세를 보였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김정일은 여러사람을 접견하면서 악수만 나누었을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金日成 장례식때 만 해도 김정일은 해외동포들을 접견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라는 짤막한 인사를 건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정일이 말을 하기 어려운 어떤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청소년들의 집단체조를 참관한 또 다른 해외동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체조를 구경하면서 김정일은 말한마디 건네지 않은채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고 전했다. 김정일의 침묵이 전처 成蕙琳일가의 망명 등으로 불편해진 심기 탓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金仁杭기자〉

▽ 한겨레신문 1996. 3. 7

김정일 전방초소 시찰 군악단창립 50周 경축

북한 김정일(金正日)은 5일 군최고사령부 군악단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축연주회를 관람했다고 중앙방송이 6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최전방 초소를 시찰하고 이날 평양에 돌아온 김정일은 차수 조명록(趙明祿)·이하일(李夏一), 당비서 계응태(桂應泰)·김용순(金容淳)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김정일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과 29일 「351고지」「제436비행군부대」를 각각 방문하는 등 동부전선 최전방 초소와 부대들을 시찰했다.

▽ 서울신문 1996. 2. 27

"金正日 9월9일 주석직 승계"

조총련 간부 노동당 총비서직도 함께

【도쿄=姜錫珍특파원】 북한의 金正日비서가 오는 9월9일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국가주석과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할 것이라고 조총련의 한 고위간부가 26일 예상했다. 이 고위간부는 『金비서가 생일을 맞아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고지도자의 승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조총련 내부에서는 9월9일 최고 지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金正日비서가 현재 북한이 처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金正日의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9월9일 이후에도 최고위직에 오르지 않을 경우 조총련도 북한 권력 내부에 상당한 난기류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金正日비서가 최고 지위에 오를 경우 유훈통치 시기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정책기조를 밝힐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3. 10

北대학생 反정부시위

청진서 지난달 2백여명, 공무원부정부패 비난

日산케이신문 보도

【도쿄 = 朴榮基특파원】 북한 청진에서 2월말 대학생 2백여명이 반정부데모를 일으켜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 등 북한 치안당국이 경계상태에 들어갔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을 방문한 한국동포로부터 이 같은 정보를 얻었으며 이들 학생들은 공무원의 부정 부패를 비난하며 가두데모를 벌이다 전원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내에서 일어난 反정부데모가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은 드문 일이라며 데모 정보가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부정 부패 추방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부비판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1996. 3. 9

北특수부대 '인간폭탄' 훈련

몸에 4~5개씩 매달고 敵陣 침투

김정일 참석…섬뜩한 파괴장면 연출

MBC-TV 필름 입수방영

북한의 특수부대는 최근 자신의 몸에 폭탄을 매달고 적진에 침투하는 이른바 가미가제(神風)식 「인간폭탄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이 8일 확인됐다.

MBC-TV가 최근 입수, 이날 방영한 필름은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자신의 몸에 폭탄 4~5개를 매달고 저공 침투용 AN-2기를 이용, 적진 깊숙이 침투한 다음 목표물을 파괴하는 훈련 장면을 생생히 보도했다.

또 특수부대 요원들은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유리 조각 위를 뒹구는가 하면 야전삽을 던져 10m 전방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도 했다.

이 필름은 또 적진에 침투한 특수요원이 달리는 트럭을 탈취, 격투를 벌이는 장면과 여자대원이 남자 4~5명을 제압하는 장면을 담고있다. 이같은 훈련은 김정일(金正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金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장면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南 선거겨냥 선동

노동신문

【서울=內外】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오는 4월의 15대 총선과 내년말 대선을 겨냥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들의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기대할 수 없고 통일문제 해결도 바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민들에게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촉구했다.

신문은 특히 세대교체론을 언급하면서 『반역집단과 보수세력을 정치무대에서 축출해야 한다』면서 反정부-反보수투쟁을 부추겼다.

▽ 서울신문 1996. 3. 9

「反金正日세력 존재」 시사
北비디오 日에 유출

北고위관리 訪北 재일교포에 전달

【도쿄=姜錫珍특파원】 북한에 반金正日 세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비디오가 일본에 유출돼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한 매스컴사는 8일 북한의 한 고관이 『金正日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본에 널리 알려달라』면서 북한에서 지난달 金正日생일을 전후해 반북적으로 방영된 비디오를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재일동포에게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 비디오를 일부 한국언론에 공개했다.

1시간여에 걸친 이 화면에서 金正日은 군의 자전거부대를 방문, "혁명정신만 있으면 강이나 바다도 건널 수 있다"고 교시했다는 내용 등 무모하거나 허장성세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비디오 화면을 일본에 유출시킨 매스컴사의 비디오 입수·배포 경위가 사실이라면 최근 여러가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金正日의 권력기반과 관련, 북한내에 반金正日 세력이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동아일보 1996. 3. 14

金日成 묘향산서 심야업무중 돌연死
사망전날 마지막 남긴글씨 「조국통일」

북한의 고(故) 金日成주석은 지난 94년7월8일 묘향산에서 심야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피곤하다고 말한 뒤 쓰러져 사망했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사망하기 바로 전날 쓴 「조국통일」이란 네 글자였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중국의 무한만보(武漢晩報)를 인용, 보도했다.

무한만보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최근 金正日비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金日成주석의 중국인 은사 가족에 의해 전해졌다.

金주석은 사망 전날인 7일 묘향산에서 열린 농촌공작회의에 참석, 밤늦도록 업무를 보던 중 「안되겠다. 피곤하다. 좀 쉬어야 겠다」며 쓰러진 후 8일 새벽 1시경 집무실 책상 옆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金주석은 사망전 1개월사이에 20개월 이상의 외국대표단과 만났으며 핵개발의혹 문제를 둘러싸고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8시간 동안이나 회담을 갖는 등 극히 바쁜 일정을 보냈다.

金주석의 중국인 은사는 그가 중국 길림(吉林)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28년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던 尙鉞(상월)씨로 문화혁명 뒤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 82년 사망했다.

〈東京=李東官〉

아사히신문 中紙인용 보도

▽ 조선일보 1996. 3. 16

北, UN주재대사 경질 후임에 金형우 副부장

【유엔본부=聯】 북한은 유엔주재 朴吉淵대사를 경질, 후임에 金형우 외교부 副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한국일보 1996. 3. 15

北 최초 국제박람회 준비부족 무산

【베를린=연】 다음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최초의 국제박람회가 무산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평양 의료기기·의약품 전문 국제박람회를 준비중인 독일 국제박람회서비스社(IFS)측은 이날 이 박람회가 준비부족으로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10월말 개막을 목표로 북한에서 산업박람회를 추진중인 국제박람회행사기구社(IMAG)측도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업체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1996. 3. 11

北, 해외교포에 기부금 강요
외화부족등 경제난 타개 안간힘

북한은 식량난과 외화부족 등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親北단체들을 통해 교포들의 對北송금이나 기부금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정부소식통이 1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해외 유력 상공인 교포들에게 접근해 통일후 통일정부에서의 고위직책 부여를 암시하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某씨는 1백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對北투자 주선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북한인 해외방문때 일정 마련, 체류비 부담, 접촉자 주선 등 접대활동과 해외공관 요원의 활동비 및 비품지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북미지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핵사초청, 이산가족 상봉, 북한 고위인물 접촉기회 부여 등을 통해 친북세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현재 북미지역의 핵심친북인사는 40여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4월 뉴욕과 11월 시카고에서 「북미주 조국통일범포연합」과 「미주지역 조국방문 교류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趙敏皓기자〉

▽ 경향신문 1996. 3. 9

■北韓의 전반적 상황…美전문가 분석

"金正日 3년喪 정치적 이용"

북한 金正日 당비서가 국가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때가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메시지를 젊은이들에게 주기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美전문가가 분석했다.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스티브 린튼 박사(컬럼비아大 연구원)는 계간지 워싱턴 쿼터리 96년 봄호에 게재된 「아들 치하의 북한」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린튼 연구원은 『金正日이 3년상을 권력장악에 노련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3년상 절차를 감안할 때 빨라야 오는 7~8월에나 권력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담배를 끊고 블랙커피를 마시는가 하면 심지어 (美인기 TV시리즈인) 스타트랙을 시청하기까지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같은 새로운 金正日맨들이 중국인보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간 한국이 독점해온 在美 한인사회에 외교·학술 측면에서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 특히 대외 문제의 경우 장기 전략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불가사의한 새 지도자가 벌이고 있는 게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린튼 연구원은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정책과 관련, 『농업에서도 주체노선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면서 『金正日은 농업, 과학, 기술 및 자본 부문에서 주체 사상을 너무 강조할 경우 북한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활력적인 수출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학술분야등 在美 한인사회 침투시작
경제정책선 슬그머니 주체노선 빠져

그는 『北美 기본합의가 체결된 이후 경수로 관련 비용이 당초(예상)보다 25% 뛴 50억달러가 됐다』면서 『對美 핵협정 체결이 金正日에게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對北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식량을 무기삼아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대단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간 부문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린튼 연구원은 지적했다.

【워싱턴=연합】

▽ 중앙일보 1996. 3. 26

北 청진서 연쇄 反體制사건

將星 1명 중국 망명

[옌지=聯] 북한 청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걸러 반체제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중국 옌지(延吉)의 지도급 인사들이 25일 전했다. 북한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10월 청진에 주둔중인 6군단 소속 정치군관과 장성급 상당수가 반체제사건에 연루돼 체포됐으며 6군단소속 중장(우리의 소장급)한명이 중국으로 망명했고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급도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전했다. 또 11월에는 청진지역에서 군·검·경 및 사회안전·무역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6·4그룹」이 반체제사건에 연루돼 관련자 모두가 체포됐고 12월에는 대학생 3백여명이 반정부시위를 벌여 이들은 물론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996. 3. 23

北 94년 軍費47억원 국가 예산의 11.4%

【東京=聯合特約】 북한의 94년 군사비 지출은 47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가총지출액 4백14억원의 11.4%라고 일본의 라디오 프레스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은 통상 군비지출액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나 이 수치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월30일자로 발간한 1995년 연감에 수록된 것이라고 라디오 프레스는 말했다.

92년 북한 원화의 환율을 달러당 2.13원으로 계산하면 94년 북한의 군사비는 22억달러이며 국가총지출액은 1백94억달러에 해당된다.

▽ 동아일보 1996. 3. 24

金正日 중부전선 시찰

【서울=聯】 북한 金正日은 지난 18일 서부전선 최전방초소를 방문한데 이어 20일에는 중부전선 최전방 오성산일대의 군부대를 시찰했다.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은 올들어 다섯번째다.

▽ 세계일보 1996. 3. 28

北관광 내달재개 日서 관광객 모집

【도쿄=연합】 북한은 작년 5월이후 중단해 온 일본으로부터의 관광객 수용을 오는 4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북한관광 총대리점인 중외여행사는 최근 관광객 모집을 개시했는데 여행코스는 평양을 비롯해 개성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등 종래와 마찬가지이나 이번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과 선봉도 추가됐다.

▽ 중앙일보 1996. 3. 17

새로운 北·美관계 징검다리役

새 유엔주재 北대표부 대사 김형우

김용호 전문기자

박길연(朴吉淵)의 뒤를 이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에 임명된 김형우(金亨宇·60·사진)는 북한의 베테랑 외교관. 77년 9월 41세의 나이에 차관급인 외교부 부부장에 임명된 그는 수많은 해외순방과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꽤나 알려진 인물이다.

유엔과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6년 이상 외교부 부부장을 지낸 뒤 스위스 대사로 있던 80년대 중반 제네바주재 유엔사무국의 북한측 상임옵서버로 활약했기 때문.

88년12월 당 국제부 부부장으로 옮겨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던 金은 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92년11월에는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회담 대표단원으로 참석했고 미 카네기재단 방북조사단과 김용순과의 회담에 배석할 정도로 북한의 대미관계에 깊숙이 간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은 베테랑 외교관답게 국제정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95년5월 당 이론지 「근로자」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냉전종식 이후 세계정세는 다극화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일본의 부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프랑스 核실험 강행은 美영향력 감소탓"주장

11년 가까이 대미외교의 전진기지를 지휘해온 박길연을 김형우로 교체함으로써 북한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등 새로운 대미관계 설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 중앙일보 1996. 3. 18

北 軍部 행정·司法업무도 관장

상부지시 어긴 민간인 軍裁 회부도

최근 平壤방문 소식통

최원기 기자

북한군부가 최근 일부 행정·사법업무까지 관장하는 등 군부의 입김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에선 최근 상부 지시를 위반한 민간인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대민 분야에 대한 군부의 감독·통제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金正日)의 행정지침 등도 최고사령관 명의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 이후의 북한 권력체제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문제 전문가 이항구(李恒九)씨는 이에 대해 『김정일이 김일성(金日成) 사후 발생한 일련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노동당내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한 「최고사령관체제」로 북한을 통치하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군부내 차수(次帥)·대장급 장성들의 서열 변동도 심상치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1996. 3. 25

총비서 승계 앞두고 대내외에 「건재」 과시

활발한 金正日 공식활동 배경

최근들어 金正日이 공식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1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옛 사로청)대표자회의 폐막식에 참석, 올들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데 이어 최근까지 여섯차례의 군부대 방문을 포함, 모두 14차례의 공개활동을 가졌다. 지난해의 경우 金正日은 같은 기간에 9차례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냈으나 이 가운데 인민무력부장 吳振宇의 사망을 전후한 문병, 문상, 장례식 참석등을 빼면 6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올해는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金日成 사망이후 오랫동안 미루어온 당총비서직등의 공식승계를 앞두고 체제불안, 건강이상설등을 불식하고 군부장악을 통해 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동아일보 1996. 3. 31

김정일 公席 잦은 등장… 우상화 박차

「신비한 인물」로 미화한 영화 잇달아 TV 방영

군장악-체제결속 과시 휴전선부대 방문 빈번

최근 金正日이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일이 부쩍 잦아지고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어 북한당국이 공식적인 권력승계에 대비해 정지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金正日은 올 들어 지난 29일까지 군부대 직접 방문 6회를 포함, 모두 16차례 외부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공개활동 횟수는 지난 1월엔 3회에 불과했으나 2월엔 5회, 3월엔 8회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그는 1~3월 사이 모두 11차례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가운데 세번은 인민무력부장 吳振宇의 사망과 관련된 행사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외부활동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의 최근 활동중 관심을 끄는 것은 비무장지대 부근의 전방초소 등 군부대를 찾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金正日은 지난 20일엔 중부전선 오성산 일대의 군부대를, 18일엔 서부전선 대덕산 초소를 시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동부전선 351고지를 방문하는 등 최전방 부대를 돌아가며 찾았다.

그가 현재 북한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고통치자가 비무장지대 일대를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金正日은 또 전체 지시중 약 40% 정도를 군 관련 부문에 내려 金日成이 생전에 내린 지시중 군 관련 사안이 21% 정도였던 것에 비해 군에 대한 주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현상이 『金正日이 군에 대한 장악을 더욱 확실히 다지는 한편 주민들에게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흔들리는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金正日을 우상화하는 내용의 기록영화를 TV를 통해 잇달아 방영하는 등 서서히 추대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들 영화에는 △金正日이 학창시절 읽은 역사책에 자필로 「김유신에 대한 평가문제?」라고 써놓은 장면과 △아무렇게나 권총을 쏘아도 백발백중시키는 장면△백마를 타고 군부대를 시찰하는 장면 등 그가 문무를 겸비한 신비한 인물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노동신문은 지난 20일자 논평에서 金正日이 『그 누가 내세워 주어서가 아니라 특출한 자질과 실력으로 혁명활동을 벌여 당과 혁명의 최고 수위에 추대된 실력가형의 위인』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이는 金正日이 金日成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고 강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金正日시대의 개막을 염두에 둔 우상화 작업이 한창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이 외국인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전시하기 위한 묘향산 지하전시관 공사비에 3천7백만달러를 투입하는 등 金日成부자의 우상화를 위해 약 3억5천만달러를 썼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韓起興〉

올들어 金正日의 북한군부대방문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북한군부대를 방문한 金正日이 병사로부터 화환을 받고 있다.

▽ 동아일보 1996. 4. 16

金日成 84회생일 기념 北 평양서 각종 행사

【평양 이타르타스聯】지난 94년 사망한 金日成의 84회 생일인 15일 북한의 평양주민들은 金日成 동상 헌화 등 각종 기념행사를 벌였다.

평양 시가지는 인공기와 金日成의 불멸성을 주장하는 구호가 적힌 깃발들로 뒤덮여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불패(不敗)의 지속은 지도부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金日成의 불패의 역사가 오늘날 金正日에 의해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正日은 金日成이 시작한 전통에 따라 이날 재일(在日)조총련 간부들을 위한 장학기금 2억1천6백만엔을 기부했다.

▽ 한겨레신문 1996. 4. 1

"김정일 판문점 시찰"

방북 일 연구소 대표단

【도쿄=박종문 특파원】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은 30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일 비서는 최근 판문점을 시찰했으며, 북한군이 애달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 대표단은 "김 비서가 판문점 시찰에서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는 현지 군 간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평양에서는 긴장을 느끼지 못했으며, 경제, 특히 에너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나가이 신야 대표단장(연구소장 대리)은 "북-일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북한쪽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으나, 북-일 수교회담 재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중앙일보 1996. 4. 16

남포지구 전력난 해소

北 火電 12월 완공

북한은 남포 공업지구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12월화력발전소」(남포시 천리마 구역 소재)를 완공, 13일 조업식을 가졌다. 「12월 화전」은 15만㎾ 규모로 착공 9년만에 완공된 것이다.

▽ 동아일보 1996. 4. 17

金日成 84회생일 맞아 北 外紙에 대대적광고

【마카오·홍콩聯UPI聯】북한은 지난 94년 7월 사망한 金日成의 84회 생일인 15일 대대적인 金日成 찬양광고를 마카오의 한 중국계 신문에 게재했다.

마카오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격인 조광무역은 친중국계 타이 충 포우지에 4천7백50달러의 광고비를 들여 1면에 金의 컬러사진 8장과 찬양광고를 실었다고 포르투갈의 루사통신이 이날 전했다.

▽ 동아일보 1996. 4. 15

"군사긴장 예측 불허 주민 동원태세 확립"

北 金日成생일 보고대회

【서울聯】 북한은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의 84회 생일(4월15일)을 기념한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단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고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당중앙위 비서 崔泰福은 이날 대회에서 보고를 통해 『최근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만약 원수들이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적들을 단매에 짓뭉개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를 이어 金正日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1996. 4. 16

金日成 "여전히 살아있는 수령"

北, 어제 84회생일 성대 행사

代이은 충성유도로 內部불안 무마시도

식량難에 特食줄고 행사규모 다소 축소

북한은 15일 사망 2년째를 맞은 金日成의 84회 생일을 성대하게 치렀다.

북한의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金日成의 시신을 참배했고 金日成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집단체조와 충성맹세대회, 야간 횃불놀이와 경축야회 등이 펼쳐졌다. 지역별로 金日成 동상 헌화식이 거행됐으며 전인민에 특식이 배급됐다.

14일에는 평양체육관에서 부주석 李종옥, 인민부력부장 崔광 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하고 중앙·평양 방송이 실황중계하는 가운데 金日成 탄생 84돌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됐다. 이 보고대회에서 崔태복당비서는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며 우리조국은 김일성조선』이라고 칭송한 뒤 『최고수뇌이신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성하자』고 강조했다. 崔태복은 또 현 판문점 상황과 관련, 『우리는 자신이 결심하고 채택한 입장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당의 자위적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 국가적, 전 인민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자』고 독려했다.

金日成이 죽고난 뒤에도 이같은 생일행사가 계속되는 점 등은 김정일의 지시 충성심을 유도하는 한편 체육대회, 사진전람회, 영화상영, 연구토론회, 金日成 위대성발표회, 기념우표·엽서·봉투발행 등의 기념축하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金日成 생일은 통상 2일간의 휴일이었으나 올해는 14일 일요일이 겹치는 바람에 3일 연휴가 돼 명절분위기가 고조됐다.

18일까지 계속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아프리카권을 비롯한 35개국의 55개 예술·문화단체들이 북한 단체들과 함께 만수대예술극장, 4·25문화회관 등지에서 다채로운 예술 공연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金日成 생일을 맞아 7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예년과 달리 지방에서는 열리지 못하고 평양에서만 진행되는 등 행사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金日成의 생일 전후 4일간을 특별경비기간으로 설정, 평양주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으며 2주일 전부터는 평양의 출입통제가 엄격해졌다.

【金炳讚기자】

▽ 세계일보 1996. 4. 19

北, 베트남-UAE와 미사일협상

共同통신 보도 이란-시리아에 수출상담 추진

【도쿄=연합】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뿐 아니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도 미사일 수출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日 교도(共同)통신이 18일 美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發로 보도했다.

북한이 베트남 등에 미사일 관련 수출협상을 벌이고 있음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美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방지는 아시아와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국자는 또한 북한의 베트남 등과의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말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이 문제도 제기해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을 동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제약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주도로 중동평화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시리아가 북한 미사일기술을 수입하고 있음은 물론 개발계획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밖에 미사일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아직은 (수출규제의 반대급부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 미사일과 관련되는 의제 이외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1996. 4. 19

北, 美비난발언 재개

【東京=AP聯】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제의 사흘후인 18일 이에 대한 공식반응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재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인용한 사설에서 빌 클린턴 美대통령과 金泳三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주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데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정권에 의한 새로운 한국전쟁의 발발은 실제로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우리가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이자 영혼인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전쟁국면에 대처키 위해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 4. 23

金正日건강 양호한듯

日紙 보도

【도쿄=朴榮基특파원】북한 金正日은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朴久好 在日조선청년동맹 위원장이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朴위원장은 金이 1월 在日조선청년동맹 대표단과 가진 4시간동안의 만찬에서 오리고기 냉면 등 코스요리를 남김없이 먹었고 대표단 60명 전원과 한 차례씩 건배를 하는 등 아무런 건강 이상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金이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전자악기 관련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 말해 일본 신문을 자주 읽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고베(神戶)대지진의 복구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對日 관계개선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996. 4. 20

김일성 실제크기 '黃金像' 만든다

도금 아닌 純金… 3周忌 맞춰 김정일이 지시

도쿄=김국진 특파원

북한은 오는 7월8일 김일성(金日成)사망 3주기를 앞두고 등신대(等身大)의 황금동상 제작을 서두르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도쿄(東京)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북한 소식통은 김일성의 황금동상은 아들 김정일(金正日)비서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금이 아니라 순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황금동상은 보안상 이유로 실내에 안치될 예정이다. 금 함유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순금 1백㎏만 사용해도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조선일보 1996. 4. 24

北 姜成山총리 교체임박說

4개월째 공식활동 안해

지병인듯… 지난15일 TV화면은 자료사진

북한 정무원 총리 姜成山이 4개월 가까이 공식활동을 갖지 않아 지병으로 인해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姜成山은 금년 1월1일 당·정 고위간부들의 만수대 김일성동상 참배에 참석한 이후 일체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일성 84회생일인 지난 15일 오전 당·정 고위간부들이 참배에도 불참했으며 이날 밤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김일성동상에 헌화하는 모습이 잠깐 북한의 중앙TV를 통해 방영됐다。

그러나 중앙TV는 姜成山 가족의 헌화사실을 별도 뉴스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관계각층 주민들이 김일성동상에 화환을 진정하고 있다」는 보도의 자막화면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姜成山이 공식활동을 갖지않는 것은 당뇌와 간경화 등 지병 때문인 것으로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姜成山은 지난 92년말 총리에 재임명될 당시에도 지병으로 인해 93년 2월까지 2개월정도 집무를 보지 못했다。

15일 중앙TV에 방영된 姜의 얼굴이 몰라보게 수척돼 있어 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는게 북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북한정보 분석기관에서도 姜成山의 교체는 기정사실이며 단지 시기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고있다。

〈金仁杭기자〉

▽ 한겨레신문 1996. 4. 28

김정일-군부 '권력강화'밀어주기

군부 "충성맹세"에 김 비서 잇단 순시·배려 화답

군 최고권력기구 급부상 대남 강경입장 이끌어

이상기 기자

지난 25일 창설 64돌을 맞은 북한 군부가 김정일 비서 체제 수호의 제1선을 맡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번 군창설 기념행사에서도 김 비서에 대한 군부의 충성맹세는 어느때 못지 않았다. 또 김 비서 역시 최고 권력기구인 군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이고 있다.

조명록 군총정치국장, 김영춘 총참모장,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군부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평양시 전승광장에서 열린 경축야회에서 군부는 "김 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제1선에서 결사옹위하는 김 비서의 제1호 위병, 제1친위병으로 튼튼히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동신문〉 25일자 사설도 "인민군 군인들의 삶은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일)를 위한 삶이고 인민군대가 틀어쥔 총대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옹위해 나가는 성스러운 총대"라고 강조했다.

군부에 대한 김 비서의 관심은 올 들어 김 비서의 군부대 방문이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이뤄진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김 비서는 지난 1월 4차례를 비롯해 2월 5차례, 3월 7차례, 4월 들어 27일 현재 3차례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23일 중앙인민위 정령을 통해 군창건일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의 생일, 당창건일 등과 함께 '국가적 명절'로 제정한 것도 군부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군부배려 차원의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 북한사회에서의 이른바 '군민일치' 분위기를 높이고, 전투동원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의 비무장지대 사태를 계기로 북한 최고권력기구임이 다시 확인된 북한 군부의 움직임과 김정일 비서와의 관계, 실세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10일 조선로동당 창건 기념행사에서 군 부대들이 열병식을 하고 있다.

군부는 김 비서의 정치적 상황과 물리력을 바탕으로 최고 권력기구로 급부상하면서 대남 강경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3월29일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의 대응책에는 군 N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조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 직후 나온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 무력시위, 그리고 지난 20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등도 군부가 주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김 비서의 군부대 순시 때 수행하고 있는 혁명 2세대 출신의 차세대 실세 장성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작전국장 김명국, 포병사령관 김하규(이상 대장), 총정치국 부국장 박재경(상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올 들어 지난 1월20일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접견 등 김 비서의 군부관련 행사 때 11번이나 수행했다. 이는 김 비서의 신임이 두터운 것을 의미하며, 향후 김 비서 체제 아래 활동이 크게 주목되는 군부인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한국일보 1996. 4. 26

北韓軍창건 기념행사 金正日 참석안해

【도쿄=辛允錫특파원】 金正日은 북한 인민해방군 창건 64돌을 하루 앞두고 24일 평양에서 열린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불참했다고 닛케이(日經)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대회에는 姜成山 정무원 총리와 金英柱 부주석도 불참했다。

▽ 조선일보 1996. 4. 26

북한 金永南 외교부장 내달 北阿 5개국 순방

【카이로=黃】 북한의 金永南외교부장이 오는 5월초 중동, 아프리카 5개국 순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아랍 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金永南은 리비아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및 수단을 방문, 최근의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 북한측 입장을 설명하고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金은 순방 기간중 역내국가들과 쌍무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일부 국가들과는 군사협력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1996. 4. 29

인민군 창건일 「국가적 명절」로 격상

북한 군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북한은 23일 당 중앙위원회 정령을 통해 4·25 「조선인민군 창건일」을「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적 명절」은 설날, 金正日생일(2·16), 국제부녀절(3·8), 金日成생일(4·15), 국제노동자절(5·1), 해방기념일(8·15), 정권창건일(9·9), 노동당창건일(10·10), 헌법절(12·27)을 포함해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軍 사기진작·金正日권력기반 견고화등 포석

대대적 행사속 金光鎭무력부장 새 실력자로

북한전문가들은 군 창건일이 기념일에서 명절로 격상된 배경이 金日成 사망후 군부를 중심축으로 유지되던 위기관리체제 상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동원태세 강화를 유도하고 金正日의 권력기반을 더욱 견고히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난 등 체제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을 받치고 있는 세력이 유일한 파워집단인 군부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사회의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金正日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와 당군사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正日의 대외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로 군부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의 판문점 무력시위도 군부가 발원지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특히 판문점 무력시위를 전후해 대남 강경발언을 주도한 金光鎭인민무력부부부장이 군의 새로운 실력자로 떠올라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북한은 24일부터 사흘간 조선인민군 창건 64돌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졌다. 24일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경축야회, 당·정간부들의 金日成 동상 꽃바구니 지정,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화환증정, 육해공군 장병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金正日의 서부전선 대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의 군부대 방문 등이 이어졌다. 또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조선인민군은 김정일의 전사」 등 군을 찬양하는 관영 매체들의 선전도 요란했다.

이중 경축중앙보고대회와 金正日의 서부전선 지휘부 방문에는 권력 실세들인 崔光인민무력부장 金永南외교부장 全炳浩국방위위원 桂應泰당중앙위위원 金光鎭부부장 趙明祿총정치국장 李河一당군사중앙위위원 白鶴林사회안전부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金正日이 주석이나 총비서 등의 직책을 승계해야 북한이 현재의 위기관리체제를 원래의 당 중심체제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48년 2월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오다 78년부터 金日成이 항일유격대를 결성했다는 4월25일로 이를 변경했다.

金炳讚기자

◇金正日이 지난해 10월10일 金日成광장에서 열린 당창건기념행사에서 군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金正日의 옆에는 군부인사들이 자리를 잡아 북한군부가 실세집단으로 부상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자료사진】

▽ 조선일보 1996. 4. 29

최고인민회의 2년째 소집안해

매년 4월 「예산승인」위해 열려

「주석선출」등 부담감 때문인듯

북한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승인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해마다 1~2차례의 정기회의를 열어 인사, 내부사정에 따른 예산승인, 법안채택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도록 헌법에 규정(제92조)돼 있다. 예산승인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는 대개 4월 중순에 열렸으나 올해 4월28일 현재까지 한달전 발표되는 소집령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데 대해 정치일정 등 내부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지면 예산승인 외에 주석선출이나 새로운 경제정책 등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선거는 다루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 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작년으로 끝났음에도 선거도 치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북한이 「비상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마치 계엄체제하에서 국회기능이 정지되는 것과 흡사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의 직함으로만 통치하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을 대신하는 「비상위원회」같은 것이 조직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金仁抗기자〉

▽ 동아일보 1996. 4. 28

金正日 내년 7월이후 주석취임說

북한 내부정보에 北京관측통 촉각

대내외사정 고려 시기 저울질 추측

북한의 金正日이 金日成의 사망 3주년이 되는 97년7월 이후에야 국가주석직에 취임할 것이라는 최근 북한내부정보가 북경(北京)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20일 북한 불교단체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경에 들른 申法陀조계종 총무부장은 평양체류기간중 북한의 한 고위인사로부터 『金正日이 만3년상을 치른 뒤 국가주석직에 오를 계획임을 직접 밝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고위인사는 金正日의 이같은 방침이 『수령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북경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식이 사실이라면 金日成사망으로 무기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거론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직의 공백상태가 해소돼야 하므로 최소한 1년이상은 남북간 정상접촉이 불가능하며 다소 모호한 상태의 남북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金正日의 국가주석직 취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유훈통치필요설 건강악화설 등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으나 金日成의 3년상이 끝나는 금년 7월이후 취임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시돼 왔다.

북경의 한 북한문제전문가는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의 현상황에서는 책임질 자리에 오르는 대신 유훈통치를 계속하면서 金日成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경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최근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정황까지 종합해 보건대 金正日이 국가주석 취임을 내년 7월이후로 미룰 명분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사태추이에 따라 취임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北京=黃義鳳〉

▽ 경향신문 1996. 4. 30

北, 대만에 여행사개설

관광객에 여행증명서 사실상 비자업무와 동일

【홍콩=AP연합】 북한은 29일 대만인들의 북한방문을 돕기 위해 타이베이에 여행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사무소의 대만인 대리인인 양치광은 『조선국제여행사 타이베이 지사로 불리는 이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허락아래 대만 관광객과 기업인들에게 訪北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부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대만이 외교관계가 없는데다 비자협정도 체결돼 있지 않아 이 여행증명서를 비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효력은 비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소에는 그러나 북한 직원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양치광은 덧붙였다.

▽ 중앙일보 1996. 4. 29

北주민 20명 또 공개처형

훔친 물건 密輸團… 2주前 압록강가서

電線 잘라 김일성동상 조명 꺼져 "정치범"

최원기 기자

북한은 최근 신의주에서 20여명의 북한주민을 정치범으로 몰아 공개 처형했다고 정부 한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2주전 신의주 근처 압록강 변에서 수천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40대 여자를 포함한 20여명을 정치범으로 몰아 사형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처형된 20여명은 정치범이 아니라 국경 밀수를 전문적으로 일삼는 절도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전선(電線)을 절취해 중국에 팔아오던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도 전선을 절취했는데 이 전선이 신의주 시내 중앙에 위치한 김일성(金日成)동상을 비추던 조명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어서 집중수사를 받아왔다는 것.

김일성 동상을 비추던 조명이 갑자기 꺼지자 사회안전부가 아닌 국가보위부가 직접 사건수사에 착수, 절도단 20여명을 체포했다.

북한당국은 김일성 동상에 조명이 꺼졌다는 점을 중시, 통상적인 경우라면 교화소(교도소)에 보낼 이들을 정치범으로 몰아 총살형에 처했다.

Ⅶ. 남북관련 동향

5. 북한 위조달러 유통 등

▽ 세계일보 1996. 3. 5

"北, 100弗위폐 발행-유통 개입"

美-홍콩경찰 증거확보

홍콩紙보도 中-이라크도 인쇄시설 보유

【홍콩=연합】미국과 홍콩의 수사관들은 북한이 외화에 궁한 나머지 극도로 정밀한 미화 1백달러 위폐의 발행 및 유통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홍콩의 영자지 스탠더드가 3일 보도했다。

美재무부의 비밀 수사팀과 홍콩 경찰의 추가 수사결과 지난 94년 마카오의 「아시아 델타 뱅크」에 입금된 극도로 정밀한 美달러화 위폐 23만8천달러는 북한의 중국 廣州주재 무역대표부및 珠海주재 무역기구에서 나왔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스탠더드紙는 이 위조지폐는 당초 수사에서 마카오 주재 북한대표부격인 조광무역과 마카오주재 또 다른 북한기업이 개설한 계정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나, 美재무부의 비밀 수사팀과 홍콩 경찰의 추가수사결과 이같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美재무부 인쇄-조판국장을 역임한 화폐전문가로 버트 로이버는 『북한 중국 이라크 나이지리아가 고도로 정교한 위폐를 찍을 수 있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3. 28

北대사관車 위조지폐 적발

수백만불… 캄國境수송중

日紙 외교관 여권소지 운전자 체포

【東京=李革宰기자】캄보디아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북한대사관 차량에서 수백만달러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고 산케이(産經)통신을 신문이 교도(共同)통신을 인용 27일 보도했다。산케이는 캄보디아 내무부가 26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지난24일 캄보디아 남부의 캄보디아-베트남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북한대사관 차량에서 위조지폐 수백만달러가 발견됐으며, 차량을 운전중이던 남자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남자는 북한계 재일교포로 알려졌으며, 당시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놈펜 북한대사관은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 세계일보 1996. 3. 30

「캄」서 위조달러 운반 赤軍派다나카

北韓 돈세탁 공작원

日警밝혀… 泰에 신병인도요청

【도쿄=田賢一특파원】캄보디아에서 위조 달러화를 운반하다 구속된 일본적군파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는 북한당국의 지령을 받아 위조지폐를 진짜 지폐로 바꾸는 「돈세탁」 공작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본경시청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경시청 공안부는 다나카가 캄보디아경찰에 의해 구속됐을 때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북한대사관 전용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70년3월 일본항공여객기 요도호 납북사건후 북한공작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다나카가 태국국내에 위조지폐 제조공장이 있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그가 발톱을 거점으로 삼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에서 돈세탁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일본당국은 태국정부에 현재 태국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다나카의 신병인도를 요청해 놓고 있다。

▽ 경향신문 1996. 3. 11

대만 北韓선박 억류 폭발물질 원료·압수

【臺北=DPA연합】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항만경찰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에서 무기제조용으로 보이는 화학물질을 압수했다고 聯合報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가오슝 항만경찰이 8일 제보에 따라 북한 선적 전승호를 수색한 결과 34.8t의 화학물질을 발견했다면서 이 화학물질은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됐으며 다음주 다른 화물들과 함께 카라치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초 이 물질이 시안화물(청산칼륨)이나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국 폭발물의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인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현재 경찰은 북한선박을 억류한채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분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3. 30

北 위폐제조실태 드러날듯

日요도號 납치범 다나카 검거의미

위조달러 핵심인물로 1월初 태국서 꼬리잡혀

日당국 "泰·캄보디아 국경 僞幣비밀공장"추정

美·日 신병인도 줄다리기도 주목

25일 캄보디아 국경에서 다량의 위조달러를 가진채 체포돼 태국경찰에 넘겨진 북한 여권 소지자가 70년 일본항공(JAL)국내선 요도호를 북한으로 납치했던 적군파 다나카 요시미(中田義三)로 밝혀지면서 그의 임무와 앞으로의 수사과정이 전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다나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 파타야 지역에서 나돌았던 100달러 위폐의 배후 핵심 인물로 지목돼 그동안 미국과 일본 태국 경찰의 수배를 받아 왔다. 다나카와 함께 체포된 북한공관원 2명은 외교관 신분이 확인돼 석방됐기 때문에 위폐달러 사건의 전모는 이제 다나카의 입에 달려 있다.

미국은 태국측에 그의 신병 인수를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고, 일본도 요도호 납치사건의 사법절차와 해외거점을 이용한 국내 적군파 공작여부의 수사를 위해 신병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그의 신병을 둘러 싸고 벌써 미국과 일본정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느낌이다.

다나카가 꼬리를 잡힌 것은 1월2일. 태국 파타야 시내 사진가게에서 태국인 2명이 위조 100달러 90장을 사용하려다 점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추궁한 끝에 배후에 「하야시」란 인물 등 9명의 위폐제조단이 있다는 사실과 하야시와 다나카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 신분이 노출되자 다나카는 캄보디아에 잠복해 있다가 오래전부터 북한의 해외공작원들과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일대에서 비밀공장을 차려 놓고 위조달러의 제조·유통 등 비밀공작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실태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쿄= 辛允錫특파원】

북한외교관의 도움으로 제3국으로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28일 캄보디아 정부에 『다나카는 일본 정부와 투쟁, 70년부터 망명한 정치망명자』라고 인정했다. 캄보디아 외무부를 방문한 북한외교관 2명은 『다나카가 위폐사건의 용의자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본공안당국은 그러나 다나카

◇다나카가 28일 태국 경찰에 얼굴을 가린채 연행되고 있다. 【파타야(태국) 聯合= 연합】

요도號 사건이란

70년 日적군파에 피랍… 서울거쳐 평양끌려가

「요도호」사건은 일본 적군파 9명이 70년 3월31일 승무원 포함, 탑승객 138명을 태운 일본항공(JAL) 소속 국내선 여객기(보잉 727機·일명 요도號)를 공중납치한 사건이다.

도쿄(東京)를 떠나 후쿠오카(福岡)를 향하던 요도호는 이륙직후 범인들에게 납치돼 일본당국과 납치범들의 끈질진 신경전 끝에 후쿠오카·서울을 거쳐 평양으로 끌려갔다. 승객들은 전원 서울 등에서 풀려났다. 범인들에게 볼모를 자원한 야마무라(山村) 당시 日운수성 정무차관과 승무원 3명은 사건발생 이틀만에 무사 귀환했다. 납치범중 주모자였던 적군파 중앙군대장 다미야(田宮高磨)등 2명은 이미 병사했으며 남은 7명은 생존해 북한에서 활동중이다. 【도쿄= 朴榮基특파원】

▽ 서울신문 1996. 4. 1

北외교관 큰 타격 받을것

「달러위조」 국가적 개입 드러날땐

日 산케이 보도

【도쿄=姜錫珍특파원】 캄보디아주재 북한대사관 차량에 위조달러화를 싣고 가던 요도호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가 체포된 사건과 관련, 북한이 국가적·규모로 달러위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정부가 달러화 위조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고 있어 북한이 조직적으로 달러화를 위조하고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미관계의 악화와 함께 지금까지 비교적 관계가 좋았던 캄보디아 등 인도지나반도의 국가에 불신감을 심는 결과가 돼 북한의 외교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다나카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재무성 시크리트 서비스(SS)와 일경시청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1996. 3. 31

"달러위조" 개입 드러날 때

北외교관들이 직접 운반

泰 경찰소식통

【방콕 = 연합】 북한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태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의 달러위조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태국의 경찰소식통은 다나카가 25일 베트남국경으로 넘어가려다 체포될 당시 북한외교관 3명이 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이 승용차에서는 93년에 발권된 것으로 돼있는 위조달러 3만6천3백달러가 적발됐고 다나카도 미화 1만여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진짜임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식통은 이 승용차가 외교관 번호판이 부착된 프놈펜주재 북한대사관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다나카의 3명은 프놈펜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별도의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어 풀려나고, 여권 등 신분증이 없는 다나카만 체포됐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들은 다나카도 북한 외교관이라며 뒤늦게 「김일수」라는 이름으로 된 북한외교관 여권을 캄보디아경찰에 제시했으나 여권번호가 없는 등 조작된 것임이 드러나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카는 北외교관" 北·泰에 인도요구

【방콕 = 연합】 북한은 다량의 위조달러화를 운송중 체포돼 태국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가 북한 외교관이라고 주장, 그의 신병을 북한에 인도해 줄 것을 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태국의 관계소식통이 30일 밝혔다.

▽ 한국일보 1996. 3. 31

"위폐공장 어디에 있나" 집중추적

위조달러犯 日적군파 다나카 수사 안팎

美연방수사국(FBI)과 일본 경시청,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수사요원들이 30일 태국 경찰과 합류하는등 「적군파」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사진) 달러위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제공조수사가 본격 진행중이다.

관련국들은 이번 사건을 태국과 인접국 일대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위조달러화 유통의 루트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위폐가 북한에서 제조돼 동남아 일대에 유포되는 것인지, 동남아에 현지 제조공장이 있는 것인지를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다나카가 『위폐공장이 태국 동남부 캄보디아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으나 태국 경찰은 『아직 정확한 공장의 위치는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한 정보관계자는 29일 『최근 3년간 북한이 일본에서 지폐검색기를 수차례 반입해갔다는 첩보를 갖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 위폐를 만들어 은행창구 통과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데 사용됐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평양에 「101연락소」로 불리는 위폐 및 위조여권 공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폐가 북한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다나카는 북한 외교관들과 함께 동남아 일대에서 위폐를 진짜 달러화와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나카 요시미

위폐문제를 담당하는 美재무부 「시크리트 서비스」가 「슈퍼 K」라고 부르는 정교한 100달러 위폐의 유통 추정액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서남아지역등을 합쳐 2,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만 지난 2월이후 6명의 슈퍼 K 소지자가 체포돼 유통이 일반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나카가 체포 당시 차안에 싣고 있던 위조달러 액수는 현재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방콕 주재 美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소한 50만달러 규모의 위폐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1월 캄보디아 프놈펜발 방콕 경유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가 방콕공항에서 100달러 위폐를 소지한 사실이 발각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고다마 쇼오고(兒玉章吾)」란 이름의 일본인을 다나카의 공범으로 태국경찰이 수배했다고 전했다.

2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때 태국에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옴 진리교 테러리스트 「하야시」도 미국이 달러위조범으로 추적중이던 다나카였던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일대에 정보망을 두고 다나카를 추적해온 미국은 당초 그의 신병인수를 강력히 희망했

다나카 "泰접경 위치" 주장 확인안돼 北서 제조 추정

美-日 신병인수 자제속 일단 泰주도 수사공조 합의

일부 언론에 의하면 방콕 주재 美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소한 50만달러 규모의 위폐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1월 캄보디아 프놈펜발 방콕 경유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가 방콕공항에서 100달러 위폐를 소지한 사실이 다. 일본도 다나카가 요도호 납치사건의 범인으로 자국민인 만큼 원칙적으로 신병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선은 위폐공장확인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아래 美·日 모두 태국 주도하의 국제공조수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辛允錫특파원】

▽ 한국일보 1996. 4. 1

北韓, 「다나카 위조달러」 개입 가능성

對동남아 외교 큰타격 예상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태국 경찰에 신병이 인도된 「적군파」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의 위조달러화 사건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 파문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외교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북한 외교가 아웅산사건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 또한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아웅산사건으로 버마(현 미얀마)와의 국교가 단절되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 신뢰가 완전히 실추됐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2~3년전부터 이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계개선에 큰 힘을 쏟아왔다.

미국에 의해 리비아등과 함께 테러리스트 국가로 분류돼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북한으로서는 가까운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베트남 라오스등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과 수교, 이제 동남아 국가중 북한과 단독 수교국은 캄보디아뿐이다.

이와 관련, 현지 외교관계자들은 다나카가 북한 외교관 3명과 동승하고 있었고 이들이 뒤늦게나마 다나카의 여권(북한인 김일수 명의)을 가져 왔는 데도 캄보디아 경찰이 다나카를 체포, 곧바로 태국경찰에 넘긴 사실에 크게 놀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북한의 개입이 확실해지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동남아 각국의 對北 불신감이 되살아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국제적으로 나돌던 위조달러화 제조 및 유통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여 온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對北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태국 경찰의 수사결과 다나카의 증언등을 통해 북한이 국가적으로 달러화를 위조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파문이 북한 핵심부에까지 미칠 지도 모른다. 심각한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외화획득 공작은 당직속사업으로 金正日등 북한권력 핵심부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도쿄= 朴榮基특파원】

캄보디아측 범인泰이송 이례적… 국제不信 확산

"국가적 위폐유통" 확인땐 北핵심부도 파장클듯

▽ 서울신문 1996. 4. 2

北、泰서 위폐 2천만달러 인쇄

日紙보도 다나카, 3년전부터 「캄」서 暗躍

3곳에 거점… 北韓人들 출입 잦아

【도쿄=姜錫珍특파원】 캄보디아주재 북한대사관차량에 다량의 위조달러화를 갖고 베트남으로 가다가 체포돼 태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日航機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는 2~3년 전부터 프놈펜시내에 3개소의 거점을 마련해두고 담배수입업자로 위장, 활동해 왔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이 거점에는 조선어를 쓰는 남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와 태국및 미국 수사당국은 다나카 외에도 여러 사람이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거점에는 골판지상자가 종종 운반돼 왔으며 벤츠와 일제 승용차가 빈번하게 드나들었으며 다나카는 지난 2월중순 이곳에서 갑자기 철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태국경찰에 따르면 다나카는 또한 「고다마」(兒玉)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캄보디아및 태국 등에서 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밝혀내고 「고다마」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다나카 등이 캄보디아 국경부근 태국 동남부 토라토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총 2천만달러의 위조달러를 인쇄했다고 태국 경찰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 서울신문 1996. 4. 3

테러범 다나카 신병 은닉

美、北에 해명 요구키로

테러지원國리스트 잔류 시사

【도쿄=姜錫珍특파원】 미국방부의 고위소식통이 1일 위조달러화 소지혐의로 체포된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를 북한측이 은닉하려 한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앞으로 「테러국가」의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이문제의 해명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정부가 현재 『(다나카의) 배경 전력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사죄하려 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측의 자세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느냐는 북한내 전적군파 멤버의 재판에 협력하고 테러금지 국제조약에 서명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당분간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위폐 9천달러 泰화폐로 환전 다나카

【도쿄=연합】 위조달러를 대량으로 갖고 있다가 적발된 일본항공여객기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는 9천달러분의 위폐로 태국돈 22만5천바트를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이 2일 방콕발로 보도했다.

태국 파타야 경찰서가 법원에 구치연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돈을 환전한 범인은 태국인 2명으로 피해자가 지난 1월5일 경찰에 신고했다.

▽ 한국일보 1996. 4. 2

위조달러犯 다나카 어떻게 체포했나

美-泰-인터폴 끈질긴 추적 "개가"

다량의 달러 위조및 유통혐의를 받고 있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는 캄보디아경찰의 불심검문끝에 우연히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과 태국 수사당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경찰소식통에 따르면 美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는 위조달러 유통조직이 태국 동남부 해변휴양지 파타야를 중심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오랫동안 은밀히 내사활동을 펴왔다. 美당국은 그 결과 국제적인 위조달러 유통조직이 파타야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태국경찰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태국경찰이 파타야의 위폐조직 아지트를 급습, 태국인관련자 7명을 체포했으나 「하야시」라 불리던 두목은 붙잡지 못했다.

그후 태국경찰의 추적 결과 하야시는 캄보디아로 도주했음이 확인됐다. 수사협조를 요청받은 캄보디아경찰은 하야시가 제3국으로 탈출할 가능성에 대비, 국경지역의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마침내 지난달 25일 베트남으로 넘어가려던 하야시를 붙잡았다.

CIA, 泰파타야서 유통조직 암약 첩보입수 장기간 內査

北외교관과 도주중인 「하야시」 검거 日통해 정체밝혀내

그는 프놈펜 주재 북한외교관 번호판을 단 승용차에 다른 3명과 함께 타고 있었다.경찰은 즉각 신분확인을 요청했고 3명은 북한외교관 여권을 제시했으나 하야시는 신분증이 없었다. 북한외교관들은 왜 한 사람은 신분증이 없느냐는 물음에 『이 사람은 우리와 우연히 알게된 중국인으로 베트남까지 태워다 주기를 애원하기에 우리가 데려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프놈펜으로 압송됐고 외교관여권을 갖고 있던 3명만 프놈펜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임이 확인돼 석방됐다.

그러자 먼저 풀려난 북한외교관들이 한참후 경찰로 찾아와 하야시가 「김일수」라는 이름의 북한외교관이라고 주장, 그의 명의로 된 북한외교관여권을 제시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이 여권이 여권번호가 빠져 있고 발급일자도 3월24일자로 돼 있어 급조된 것이라고 판단, 원래부터 달러위조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태국경찰로 하야시를 이첩했다.

이어 태국경찰의 통보를 받은 방콕주재 일본대사관은 하야시의 지문을 도쿄(東京)로 보냈고 일본경찰은 지문감식결과 북한이 「김일수」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가 70년 일본항공(JAL)여객기 요도호를 공중납치한 적군파 대원의 하나인 다나카 요시미임을 밝혀냈다. 【방콕=연합】

▽ 조선일보 1996. 4. 3

요도號 납치범 경호원도 위조달러 소지혐의 체포

日언론들 보도

【東京=李濟기자】 위조달러사건을 수사중인 태국경찰은 요도號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용의자의 운전수 겸 보디가드로 근무하던 「김철수」라는 북한 남자가 지난해 프놈펜에서 위조달러 소지혐의로 체포돼 평양으로 이송된 사실을 밝혔다고 일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위조달러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깊이 연계돼 있다는 증거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수사 당국은 또 다나카 용의자에 대한 1차 구속시한이 만료됨에따라 구속을 12일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태국 재판부의 구속연장신문에서 자신이 북한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北、위조달러관련 부인

【서울=內外】북한은 1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前일본적군파 대원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가 북한외교관 차량을 이용, 다량의 위조달러를 운반하다가 체포된 사건과 관련, 『밝고 깨끗한 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北)에서는 애당초 위조지폐라는 범행이 있을수 없다』면서 자신들과의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세계일보 1996. 4. 5

北국영社 가짜달러 결제

94년 수입대금 萬弗짜리로

NHK보도 외국업자 평양으로 불러 百弗짜리로

泰 위폐운반 다나카 내주중 日인도

【도쿄=연합】일본항공기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가 미화 위조사건으로 검거돼 북한이 대량의 달러를 위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관련회사가 재작년 수입대금을 결제하면서 가짜 달러지폐로 1만달러를 외국업자에게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일본 NHK-TV가 3일밤 보도했다.

NHK는 문제가 된 1백달러짜리 위폐를 내보이면서 인쇄가 정밀해 얼핏 보면 진짜와 구별하기가 어려우나, 지폐에 숨겨놓은 무늬가 없고 肖像의 녹색선이 진짜는 끊어져 있으나 위폐는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NHK는 가짜달러를 받은 외국업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이 업자가 재작년 8월 전자기기를 북한 노동당 소속 무역회사에 판매한 뒤 대금 지불을 재촉하자, 북한측이 평양에 온도록 해 현지에서 1백달러짜리 지폐로 현금 1만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나카 요시미의 공범으로 태국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는 고다마 쇼고(兒玉章吾)라는 사람이 가나가와縣에 거주했으나, 수년전 캄보디아에 건너간 뒤 소식이 끊겼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방콕=연합】美달러화를 위조·유통시킨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후 태국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항공(JAL)기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는 빠르면 다음주중에 일본에 신병인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한 경찰소식통은 3일 다나카의 일본 조기송환에 대해서는 이미 태국과 미·일간에 조율이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1996. 4. 5

위조달러 北개입 판명땐

美 "對北관계 재고"

【워싱턴=李載昊】캄보디아 위조달러 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정부의 한 소식통이 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금까지 태국 일본 미국 등 관련국들의 수사 결과 위조달러 소지혐의로 체포된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에게 북한이 북한여권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테러리즘 지원행위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6. 4. 4

北위조달러 日대량유입

NHK TV보도

【도쿄=田賢一특파원】북한에서 만들어진 대량의 위조 美달러화가 일본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NHK TV와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에선 「슈퍼K」로 불리는 매우 정교하게 제조된 위조 달러화지폐가 교토(京都)시내 외국계은행과 도쿄시내 은행에서 발견됐다.

이와관련, 수사당국은 최근 수년사이에 연간 5백장의 위조 1백달러 지폐를 압수했다며 그중 절반가량이 「슈퍼K」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수사당국은 일본내에 7가지의 슈퍼K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유통경로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서울신문 1996. 4. 7

北韓 日서 위조달러 식별기 반입

94년부터 20차례… 위폐 정밀도 향상에 사용

산케이신문 보도

【도쿄=姜錫珍특파원】북한은 지난 94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위조 달러 식별기를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한반도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니가타(新潟)항에서 원산을 운항하는 만경봉호가 반입 루트가 됐으며 위조한 달러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금년까지 식별기 반입은 약 20여차례에 걸쳐 계속됐으며 식별기가 원산항에 하역된 뒤에는 어디로 옮겨졌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미국 달러를 인쇄할때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도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반입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또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요도호 납치범중 또다른 사람이 최근 여행업자로 위장해 동구에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는데 이 사람도 위조달러를 진짜로 교환하는 임무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한국일보 1996. 4. 5

100弗짜리 위폐 「슈퍼K」 日 대량유입 파문

일부는 北韓서 지불한 무역대금

적군파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가 관련된 정교한 100달러 위폐 「슈퍼K」가 일본에 대량 흘러들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유입분중 일부는 북한이 무역결제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돼 북한의 관련 의혹이 점증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연간 200여장의 100달러 위폐를 발견, 압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이중 최소한 200여장 이상이 다나카가 연루돼 있는 슈퍼K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분석됐다. 태국 일대에서 유통돼 온 슈퍼K는 위조방지를 위해 벤저민 프랭클린 초상화 주위에 집어 넣은 마이크로 문자와 빛을 비추면 드러나는 「USA100」 암호까지 그대로 위조돼 진폐와 구별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6월 도쿄(東京)의 한 무역회사가 은행에 입금하려던 달러화에서 슈퍼K 54장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이 회사가 평양에서 중고차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중에 슈퍼K가 섞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8월 전자기기를 북한 무역회사에 팔고 평양에 들어가 1만달러를 받아온 수출업자도 수령액이 모두 100달러 위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소개했다. 이 업자가 항의하자 북한측은 『가짜인줄 몰랐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은 다나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수배중이던 다나카는 분명 북한 외교관들과 함께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가려다 체포됐다. 캄보디아군의 격투기 교관으로 있으면서 다나카와 접촉하던 북한인도 그전에 위폐소지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물건을 팔고 북한에서 받아온 달러화중에 위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슈퍼K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다나카의 공범으로 수배된 고다마 쇼고(兒玉章吾·53)는 중국계 캄보디아인으로 75년 일본에 귀화,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에 주소를 둔 인물로 판명됐다. 다나카와 함께 프놈펜에 담배수입상을 차려놓고 수시로 캄보디아와 일본을 오간 고다마도 2월 방콕공항에서 위폐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 당연히 일본 경찰은 고다마가 슈퍼K의 일본유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추적중이다.

북한-캄보디아-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다나카그룹의 행적에는 항상 가짜 100달러가 떨어져 있다는게 일본 경찰의 지금까지 수사결과다. 【도쿄=辛允錫특파원】

北 "가짜인줄 몰랐다"… 갈수록 관련의혹 증폭

▽ 세계일보 1996. 4. 9

泰, 가짜달러 대량압수

9백장 환전 2명검거… 다나카관련 조사

【도쿄=田炳一특파원】정교한 위조 美달러지폐 「슈퍼K」유포사건을 수사중인 태국경찰은 8일까지 1백달러짜리 달러위폐 9백76장을 추가로 압수했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방콕발로 태국경찰이 6~7일 달러위폐 7백76장, 2백장을 각각 소지한 두 태국인을 체포했으며 두사람은 캄보디아국경지역에서 위폐달러를 구해 태국돈과 교환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전했다.

태국경찰은 이들과 이미 검거돼 신문을 받고있는 적군파대원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와 관련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경찰청은 이날 1백달러짜리 위조 美달러화지폐를 4백장이나 국내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노다 다케시(野田健)형사국장은 중의원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발견된 위조 달러지폐 5백여장가운데 진짜와 아주 흡사한 슈퍼K는 93년에 90장, 94년과 95년에 각각 1백50장에 달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96. 4. 5

北韓은 위조달러 '제조司令部'

「북한은 위폐 제조 사령부, 동남아는 유통 천국―.」지난달 24일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체포로 불거진 북한의 위조달러 파문은 이렇게 요약된다. 「외화벌이」에서 「외화위조」로 방향을 틀게끔 만든 북한의 경화(硬貨)부족과 동남아의 엉성한 단속망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파문이다. 꼬리가 잡힌 북한 위폐 제조의 베일은 앞으로 얼마나 벗겨질까. 캄보디아의 북한 외교관 위폐유통사건 전모와 북한의 위폐 제조·유통 상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지난달 24일 캄보디아 북한대사관 직원과 함께 체포된 일본 여객기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가 1일 태국 경찰들에 의해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다. [방콕 AP=연합]

오영환 기자

현대판 불법 연금술의 대명사 위조달러.

93년에 미 정보당국이 압수한 위조달러만 자그마치 1억2천만달러다. 위조달러가 적발될 때마다 빠짐없이 북한이 들먹거려진다. 러시아·중국·마카오·동남아·유럽·일본…. 지금까지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추정되는 위폐 유통지역은 지구촌 전역이다. 심지어 지난 1월 서울에서 발견된 1백달러 위조달러도 색채·디자인 등으로 미뤄 북한이 유통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파탄 일보직전의 경제난 속에서 마약밀매까지 하는 북한이 위폐에 손을 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위폐는 북한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경제난을 부채질하는 서슬퍼런 부메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위폐 사용 사례=「슈퍼―K」. 국제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교한 1백달러 위폐의 통칭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슈퍼―K」를 쓰다 적발된 대표적 케이스는 6건이다. 83년 금성은행이 오스트리아 빈은행에 입금한 8천여달러가 위폐로 판명된 것을 비롯,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부쩍 사용이 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적발될 때마다 결제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발뺌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의 사건은 북한이 더이상 변명을 못하게 만들었다. 일 무역업자가 노동당 소속 모무역회사로부터 받은 1만달러가 모두 위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위폐 제조능력=북한에서 입금·지불한 「슈퍼―K」는 초상화 주위의 마이크로 글씨가 진짜 지폐처럼 선명한 것이 특징. 진짜 돈은 위조방지를 위해 빛을 쪼였을 때만 「USA―100」이 나타나도록 특수인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제 위폐도 같은 처리가 돼있다. 종이질·크기도 진짜와 거의 같다. 그러나 「USA―100」이 나타나지 않는 북한산 위폐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교한 특수인쇄술 갖춰 지구촌 全域서 개입의혹

귀순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위폐 제조에 나선 것은 81년 오스트리아 「게브리데헨」회사로부터 지폐 제작용 초정밀 인쇄기 등을 구입하면서부터. 84년에는 사회문화부 소속 101연락소에서 다량의 위조달러를 만들어 외교부를 통해 해외에 반출하기도 했다.

안기부 당국자는 『북한은 현재 위조달러 제조능력을 갖춘 화폐공장에서 다량의 위폐를 발행, 해외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한 태국 동남부 토라토 등 동남아에도 위폐 인쇄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조달러 관련일지

▶81년 오스트리아에서 지폐 제작용 인쇄기·오프셋기 구입
▶83년 6월 빈은행 입금 8천달러 위폐 판명
▶84년 101연락소 위폐 다량 제작, 해외 반출
▶86년 리비아서 위폐 수천만달러 교환하다 적발
▶87년 12월 평성 소재 상표인쇄공장서 1달러 5백장을 1백달러로 변조
▶88년 4월 자이르에 달러 위조용 「붉은 수은」구입 타진
▶93년 4월 독일제 달러 감식기 2대 구입
▶94년 6월 조광무역, 마카오 델타은행에 위폐 9천달러 입금
▶95년 8월 노동당 소속 무역회사, 위폐 1만달러 일본 업자에게 지불
▶96년 3월 캄보디아 북한외교관 위폐 소지 혐의체포

▽ 세계일보 1996. 4. 9

北에 사린원료 밀수출 적발

日경찰 무역사원 1명 구속 조총련계 인듯

【도쿄=연합】일본 효고(兵庫)縣 경찰은 8일 사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불화나트륨 등을 북한에 밀수출한 혐의로 고베(神戶)시 소재 무역회사 「동아기술공업」사원 李種俊씨(34)를 구속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1월과 2월 사린의 원료인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 각각 50㎏을 일본이 지원한 쌀 운반을 위해 오사카(大阪)항과 고베항에 입항한 북한선박을 통해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는 경찰에서 문제의 불화나트륨등이 수출규제 품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계 회사로 추정되는 동아기술공업은 지난 63년 설립된 자본금 1천만엔 규모의 무역회사로 사원은 20명이며 선박부품, 철강 등을 북한에 수출해왔다.

▽ 세계일보 1996. 4. 10

日、조총련系기업 조사 착수

毒가스 사린원료 北밀수출 본격수사

【도쿄=외신종】독가스 사린 제조에 쓰이는 원료 밀반출사건을 수사중인 일본경찰은 9일 구속된 수출회사 사원을 추궁한 결과 지난 1월 평양의 한 무역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린의 원료를 밀반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관할 日효고(兵庫)縣 경찰당국은 독가스 원료로 수출금지품목인 불화나트륨등 화학약품을 일본이 지원한는 對北쌀 운반선인 북한화물선을 통해 밀수출한 고베(神戶)시 소재 조총련계로 추정되는 「東亞기술공업」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日통산성도 문제의 회사가 엄격한 수출규제대상인 불화나트륨등을 쌀수송선에 밀수출한 경위등 진상파악에 나섰으며 고베시 세관당국도 동아기술공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할 효고(兵庫)현 경찰은 8일 구속된 이 회사 사원 李種俊씨(34)등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李씨가 통관이 비교적 수월한 「선장 탁송품」형식을 빌어 화학약품을 밀수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李씨는 경찰에서 문제의 화학약품이 수출규제 대상품목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지난 1월초 평양의 한 무역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씨는 지난 1월과 2월 사린원료인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 각각 50㎏을 오사카(大阪)항과 고베항에 입항한 북한화물선을 통해 밀수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 경향신문 1996. 4. 10

■北밀수입 불화나트륨으로는…

사린가스 50㎏제조 가능

산케이신문 보도

일본 고베(神戶)시의 한 조총련계 무역회사가 북한에 밀수출한 불화나트륨은 사린가스 50㎏을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지역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전문가 말을 인용,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이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밀수입한 배경에 관해 일본 공안당국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화나트륨은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에서 사용된 사린가스의 제조공정 5개중 제4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로 치약의 제조 등 민생용으로도 이용되지만 복수의 북한전문가들은 『당연히 화학무기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가나가와(神奈川)大의 쓰네이시(常石敬一)교수(화학사)는 『이번에 밀수출된 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린 50㎏을 만들 수 있다』며 『이 정도로도 지역분쟁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말했다. 쓰네이시 교수는 이어 『함께 밀수출된 불화수소산은 농축우라늄 제조에 쓰이는 것으로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북한이 이를 급히 수입한 이유를 생각하면 섬뜩한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야마나시(山梨)大의 미야쓰카(宮塚利雄)교수(북한경제학)는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제조할 기술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고 『화학무기 제조가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은 다량의 화학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이들 화학물질을 사린을 만들기 위해 밀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번에 적발된 것은 수사망에 걸린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소식통은 북한이 생물무기의 개발에 사용되는 일본제 세균배양기도 수입해 왔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고베의 무역회사 도아(東亞)기술공업의 영업사원 李鍾俊씨(34)가 지난 1, 2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의 대북 지원 쌀 선박에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 50㎏을 몰래 실어 밀수출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東京=姜成輔특파원】

▽ 서울신문 1996. 4. 10

泰國 다나카 내일 기소

24일 첫재판 위조달러 소지·유통혐의 적용

北외교관 관련 혐의 언급않을듯

【방콕=聯】태국검찰은 미달러화위조및 불법유통사건과 관련,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후 태국에서 조사를 받아온 일본 요도호 공중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전적군파단원)를 오는 11일 기소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태국 촌부리지방검찰청은 이날 다나카를 오는 11일 위조달러소지 및 유통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첫 재판을 오는 24일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된 두명의 태국인과 함께 열도록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촌부리지검의 한 검사는 당초 다나카를 일본에 조기송환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최종결정과정에서 태국의 국내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하고 그를 일본으로 송환하는 데는 정상적인 3심재판절차를 거칠 경우 1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다나카에 대한 달러위조부분을 조사했으나 그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주요한 고비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일단 위조혐의는 빼고 위폐소지및 유통혐의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다나카사건에 대한 북한외교관의 관련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관련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일보 1996. 4. 12

日요도호 납치범 부부 90년 脫北실패 北억류

【도쿄 AFP=연합】 70년 북한으로 망명한 일본 민항기 요도호 납치범 오카모토 다케시(50) 부부가 폐쇄적인 북한체제에 실망,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90년 북한을 탈출하려다 실패, 북한 보안당국에 억류돼 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北京(베이징)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오카모토는 요도호를 납치한 9명의 적군파 대원 중 한 사람으로 이들 부부는 한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식량난으로 음식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996. 4. 11

러주재 北외교관등 위조달러 유통의혹

조선족동포 "百萬달러 환전"

【모스크바=文明熹】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 등 북한인 수명이 최근 대규모로 가짜 美달러화의 유통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북한외교관이 포함된 가짜 달러화 유통사건과 관련, 최근 러시아연방 보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조선족 동포 韓금철씨(41)는 10일 『북한 외교관 등이 부탁한 위폐 1백여만달러의 환전을 도와주다 러시아경찰의 소환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권을 압수당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韓씨는 『동생의 소개로 1년전부터 알고 지낸 북한대사관의 安모 영사가 3월말과 4월초 북한인 사업가 3명을 데리고 와 달러화를 바꾸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 모스크바내 중국상인들과 조선족들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이들이 교환해간 1백여만달러가 거의 가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韓씨는 安영사의 부탁에 따라 安영사 등 4명을 지난달 28일 오후 모스크바 시내 레진스키 거리에서 중국인 상인들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 2일까지 30여명의 중국상인 조선족들에게 각각 1만~10만달러씩 80여만달러를 환전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韓씨는 또 중국인 피해자들이 『1백장씩 묶인 위조달러가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렵을 정도로 정교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보안당국은 이날 韓씨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4. 11

"北외교관이 소개… 僞幣인줄 몰랐다"

러 위조달러 중개인 韓금철씨 일문일답

북한외교관 安모 영사와 그일행 3명을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소개해 위조달러를 루블로 환전토록 알선해준 중국계 조선족동포 韓금철씨. 韓씨는 자신이 환전을 소개해줬을 뿐 위폐유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모스크바=柳敏특파원〉

북한외교관이 포함된 달러위폐유통조직을 중국교포들에게 소개한 韓금철씨는 9일 경찰 출두직전 본사기자와 만나 『나는 단순히 소개해준 사람일 뿐 위폐유통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큰 사업하는 사람"…換錢알선·통역 부탁

모두 舊화폐…전문가들도 식별 어려워

다음은 韓씨와의 일문일답.

―어떻게 가짜 달러의 환전을 소개해주었나.

▲가짜인줄은 전혀 몰랐다. 평소 잘 아는 사이인 북한대사관의 安모 영사가 하는 일이니 믿고 소개해주었다.

―안영사와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安영사는 모스크바에서 사업을 하는 내 동생이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다. 그와는 동생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을 정도로 친하다.

―동생은 무슨 사업을 하나.

▲동생은 길림성 대외무역공사 연변분공사를 맡고 있고 또 모스크바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 1년전쯤에 동생으로부터 安영사를 소개받아 자주 만나왔다(이 동생은 환전한 달러가 위폐임이 드러난 직후 중국으로 출국).

―환전제의는 누가 했나.

▲安영사로부터 처음 전화가 왔다. 安영사는 「잘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현지화인 루블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安영사와 동행한 「사업가」들의 인적사항은.

▲30대 중반·후반의 북한말씨를 쓰는 사람들로 보였다. 安영사가 「가나를 오가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 그렇게 믿었다. 이들은 내가 중국인 상인을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중국말을 모른다」면서 나에게 통역을 부탁하기도 했다.

―북한인들이 가지고 온 돈이 가짜라는 것을 언제 알았나.

▲피해자들이 돈을 마지막으로 바꾼 하루 뒤인 4월3일 나의 숙소로 몰려와 「바꾼 돈이 모두 가짜」라며 安영사 일행을 찾아내라고 했다. 내가 安영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安영사의 연락처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 번호임이 확인됨). 피해자들은 나를 자신들의 숙소인 「모단(牟丹)」여관의 지하실에 가두었다. 나는 하루동안 감금돼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빠져나왔다.

―북한인들이 가짜달러화를 어딘가에서 대량으로 위조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위조달러가 전문가들도 감별기 없이는 진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라는 말을 했다. 달러는 모두 구화폐였으며 1백장씩 묶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돈다발에는 가끔 진짜달러가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피해규모는.

▲옷도매상을 하는 중국인 상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레진스키 프로스펙트의 「모단」에서 20여명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밀집촌인 관필로바 18번가 여관의 중국인·조선족상인 10여명등 모두 30여명은 넘는 것같다.

〈모스크바=柳敏특파원〉

▽ 세계일보 1996. 4. 11

北, 「캄」주재대사 경질

위조달러 문책 외교관 3명도 전격소환

【방콕=연합】 북한은 캄보디아주재 宋皓敬대사를 포함한 4명의 북한외교관을 앙으로 2주일내에 평양으로 긴급히 소환할 방침인 정으로 알려졌다고 발표의 한 관계 소식통이 10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캄보디아 외무부도 宋대사를 포함한 캄보디아주재 북한외교관 4명이 곧 평양으로 소환될 것임을 확인했으며 宋대사의 후임으로는 이집트 주재대사를 지낸 金容燮이 내정된 것으로 캄보디아정부의 한 외교문서에 나타나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5월 부임한 宋대사가 부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북한에 망명중인 前적군파 대원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의 美위조달러 유통사건에 북한대사관직원 3명이 관련된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宋대사외에 다른 3명은 지난달말 캄보디아에서 다나카가 체포될 당시 다나카와 함께 북한대사관차량을 이용, 베트남 국경으로 넘어가려다 적발된 자들로 이들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姓은 모두 金씨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들 3명은 이미 캄보디아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선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1996. 4. 12

타이, 다나카 어제 기소
북 캄보디아대사등 소환

【방콕=연합】 타이 검찰은 미달러화 위조 및 불법유통사건과 관련해 일항기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47)를 11일 기소했다.

타이 촌부리 지방검찰청은 다나카가 위조달러 소지 및 유통 혐의로 기소돼 빠르면 오는 5월24일 같은 혐의의 타이인들과 함께 첫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촌부리지검의 한 검사는 다나카를 추방형식으로 일본에 조기 송환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사건이 타이에서 발생했고 관련 타이인들과 병합심리하기 위해 국내에서 기소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다나카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주재 송호경 대사를 포함한 4명의 외교관을 앞으로 2주일 내에 평양으로 긴급히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콕의 한 관계소식통이 10일 전했다.

▽ 조선일보 1996. 4. 12

駐모스크바 北외교관 위조달러 또 유통개입

정부는 11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위조달러 유통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를 확인중에 있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 당국자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영사가 개입해 약 1백만달러의 위조 달러를 러시아에서 장사하는 조선족 20여명을 통해 루블화로 바꾼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러시아 공안당국이 관련 조선족 상인 중 한 명을 조사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모스크바 대사관을 통해 이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최근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이 東아시아 지역을 넘어 러시아등지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미국 정부와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具聖宰기자>

▽ 세계일보 1996. 4. 20

北、駐캄 외교관 3명 추가소환
달러위폐 문책인듯

【방콕=연합】 북한은 宋皓敬 駐캄보디아대사를 平壤으로 소환한데 이어 또다른 외교관 3명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콕의 외교소식통이 19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5월 부임한 외교부 副부장 출신의 宋대사가 부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교체된 것은 북한에 망명중인 前적군파 대원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47)의 美위조달러 유통사건에 북한대사관 직원 3명이 관련된 것의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4. 25

北, 달러위조기술 이란서 도입
日 사피오誌 폭로
미사일·제트機 제공하는 대가로
가짜百弗 슈퍼K 대량제조 유통

북한은 미사일과 제트전투기등 무기 수출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위조지폐 제조기술 및 기술자를 도입, 신종 1백달러 위조지폐인 「슈퍼K」를 개발했다고 일본 격주간 시사정보지 사피오가 24일 폭로했다.

사피오誌는 최신호(5월8일자)에서 위조달러 적발조직인 美재무부 「시크릿 서비스(SS)」 간부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북한은 이란과 손잡고 위조달러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잡지에 따르면 북한은 80년대 초반 오스트리아에서 정밀 인쇄기를 구입, 위폐 제작을 시작했으나 당시 「슈퍼C」라는 정교한 위폐를 만들어 내고 있던 이란과 같은 고도의 위조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 위폐의 「품질」이 떨어졌다.

북한은 이에따라 이란 기술자를 포함해 2천여명의 특수요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북한은 그 이란 군부가 「노동」「대포동」등 북한제 신형 미사일을 탐낸다는 점을 달러 이상 제작, 동남아와 중동지역에 유통시켰을 것으로 이 잡지는 추정했다.

한편 SS 간부는 이란이 위조지폐 제작에 들어간 것은 80년대 초반이며 당시 이란혁명정권은 팔레비국왕이 美조폐국으로부터 구입해두었던 정밀인쇄기 2대로 정교한 위폐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위폐는 3~50달러로 암시장에서 교환됐는데 SS가 80년대 후반 중동지역 전체에 「거의 완전무결한 위조달러가 유통됨에 따라 추적에 나서 이를 밝혀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도쿄=朴榮基특파원】

▽ 서울신문 1996. 4. 24

「다나카 出國」 기도는 非외교업무
캄、北대사관에 해명 촉구

【도쿄=연합】 캄보디아 외무부는 달러위폐 사건으로 기소된 전 적군파 요원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를 프놈펜주재 북한대사관원 3명이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려 한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캄보디아 외무부간부의 말을 인용, 외무부는 지난 3일 북한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외교관의 통상 직무로는 있을 수 없는 활동에 관여』한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한은 특히 국제적으로 수배중인 다나카를 북한대사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면서 대사관직원이 그를 국경검문소에서 대사관차에 태워 출국시키려 한 것과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주려 했던 『적극적인 간섭』등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Ⅶ. 남북관련 동향

6. 기　　타

▽ 동아일보 1996. 2. 1

美조찬기도회 北인사초청

朴吉淵등 2명- 한국선 金淑喜전교육 참석

【워싱턴聯】미국 워싱턴의 힐튼호텔에서 1일(현지시간) 열릴 미국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에 빌 클린턴 美대통령등 미국내외 인사 4천여명과 함께 북한 인사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에 관여하는 한 美관계자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朴吉淵대사와 한성렬 공사가 기도회 참석을 초청받고 워싱턴을 방문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측에서는 金淑喜 전 교육부장관이 기도회 참석을 위해 역시 워싱턴을 방문중이다.

이번 기도회는 북한의 추가 쌀지원 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기도회때는 클린턴 대통령이 북측 참석인사를 비공개리에 별도 면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 한국일보 1996. 2. 23

日"구조北韓人 北송환"

귀환의사확인… 회복되는대로

【도쿄=朴榮基·黃永植특파원】일본당국은 49일간 표류끝에 일본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 해안에서 일본 경비정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 4명을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북한으로 송환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日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안전부 요원 3명을 포함한 이들의 북한 귀환의사를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日당국은 이날 조총련 관계자에게 이들의 면회를 허용했다.

이들을 구조한 日해상방위청 후쿠이현 쓰루가 해상보안부의 오모타니(重谷) 총무계장은 「20일 구조당시 본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으며 「海難(해난) 조건」으로 구조한 것이라며 「1~2주 후 건강이

▽ 중앙일보 1996. 2. 11

韓美21세기委 3차회의 폐막

한미 21세기위원회 3차회의가 지난 8~9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려 통일 이후 한반도 미군주둔 문제, 한국의 세계화 정책 등 중장기 한·미간 현안을 토론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崔昌潤)후원으로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司空壹)과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 프레드 버그스텐)가 공동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중앙일보 김영희(金永熙)국제문제 대기자,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 등 양국 언론인, 전·현직관리,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 서울신문 1996. 2. 28

北, 노동1호 개발 완료

이동식발사대도 곧 갖춰

日NHK, 英군사전문지 인용 보도

【도쿄=姜錫珍특파원】영국의 군사전문지 출판사인 제인사는 「세계분쟁지역 96년판」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노동1호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 란과 판매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일본의 NHK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제인사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까지 노동1호를 완성했으며 곧 이동식 발사대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1호는 사정거리가 1천km를 넘으며 5백kg내지 7백50kg의 통상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남한지역은 물론 일본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제인사는 지적했다.

▽ 한국일보 1996. 2. 22

카터次男 訪北취소

【도쿄=黃永植특파원】북한을 방문하려던 지미 카터 前 美대통령의 차남이 돌연 방북을 취소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美 민간단체 교렌트리 포스방북단의 일원으로 20일 북한을 방문하려던 카터 前대통령의 차남 제임스 얼 카터씨가 이날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996. 2. 28

中國-北韓관계 다시 냉각

中노선비난 北의 外紙광고 발단

北선 硬貨결제 요구에 불만높아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노선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그 진의파악에 나서는 한편 당(黨)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간접 비난하고 나서는 등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한 고위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이달 중순 한 마카오 신문에 중국을 비난하는 대형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 몹시 분노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진의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은 이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4천7백달러(약3백70만원)를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광고는 일부 국가(중국을 지칭)가 겉으론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론 부패한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리수정(李淑錚)당 대외연락부장은 이날 차이나 데일리와의 회견에서 『세계 모든 국가의 당은 체제와 이념이 비슷하든 다르든 간에 다른 국가의 당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나 관례를 강요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북한을 간접 비난하고 나서 주목 끌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안승운씨 납치주범 리경춘(40)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에 강력히 항의, 중국측과 외교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양국 교역시 경화(硬貨)로 현금결제를 요구한데 대한 북한측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부가 지난 25일 예고한 변경(국경)무역 관리감독 강화방침에 따라 북·중 변경무역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1996. 2. 28

유엔사무총장 訪北 무산

김정일 面談거절로 南韓만 방문

배명복 기자

오는 28일 방한하는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당초 남북한을 동시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한당국이 부트로스 갈리 총장의 김정일(金正日)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방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외무부 관계자는 『당초 부트로스 갈리 총장은 북한측에 김정일과의 면담과 판문점 통과 등 두가지를 요청했다』면서 『북한측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면담에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방북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부트로스 갈리 총장은 5박6일간의 방한기간중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만나는 한편 국제정치학회·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동아일보 1996. 2. 29

"北붕괴조짐없다"

訪北CNN 부사장

북한은 오는 8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선수 50명과 임원진 30명등 8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안다고 미국 CNN방송 이슨 조던 국제담당 부사장이 28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방한중인 조던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金正日은 金日成사망 2주기인 오는 7월 이후 취임식을 갖고 금년중에 권력을 공식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던부사장은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金容淳 노동당비서겸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하고 그러나 체류기간중 북한의 붕괴조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1996. 3. 5

러 北韓에 核기술 판매

미하일로프 核장관 "이미 상당수준 투자 계속제휴 바라"

이란·쿠바등에 年20억弗 수출

【모스크바=AFP연합】러시아는 北韓을 비롯해 이란 및 쿠바 등에 核기술을 팔아 연간 2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빅토르 미하일로프 核에너지장관이 4일 밝혔다.

미하일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의 核시설 건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으며 앞으로도 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제휴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하일로프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와 北韓의 核협력관계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하일로프 장관은 또 현재 이란의 부시에르에서 러시아 기술진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核발전소가 3년안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95년 1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10억달러 규모의 이 核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발전소가 이란의 核무기 개발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미하일로프 장관은 또 쿠바의 주라구아에 核발전소 건설을 완공하기위해 국제 컨소시엄을 설립하기로 최근 쿠바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하일로프 장관은 미국과 서구 기업체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미국은 주라구아 프로젝트가 안전수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들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주장,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미하일로프 장관이 언급한 이들 3개국은 서방국가들이 잠재적 위험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다.

▽ 동아일보 1996. 2. 29

"北식량난 생각보다 심각"

訪北 美CNN부사장 인터뷰

중단된 南北대화 조건없이 재개원해

『3박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고 평양 한복만을 방문했지만 어떤 붕괴 조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차 북한을 방문하고 서울을 방문중인 이슨 조던 美CNN부사장은 28일 저녁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YTN개국 1주년 축하 리셉션장에서 기자와 만나 방북기간중 예년과 달라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4년부터 다섯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평양에 머물면서 金容淳노동당비서겸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관리들과 평양에서 활동중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북 목적과 일정은….

『북한의 식량난 실태, 남북대화와 北-美관계, 북한의 애틀랜타올림픽 참가여부 등을 취재하기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마이클 치노이 CNN북경특파원과 평양을 방문했다』

―최근 평양 한복판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지고 金正日의 전처 成혜림도 망명을 위해 잠적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존 도이치 CIA국장은 며칠전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어떤 붕괴 징후도 없었다. 도이치 국장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은가』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관리들은 아무때나 어디서든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무런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

―北-美의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는 입장이었다. 관계진전을 위해 북-미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잠정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어떤 상황인가.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사 직원이나 국제구호기금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식량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평양 도심을 흐르는 대동강 주변도 경작을 위해 모두 파헤쳐져 있었다』 ―〈金世媛〉

동아일보와 단독회견하는 이슨 조던 美CNN부사장

▽ 세계일보 1996. 3. 5

러-北, 국경회담 개최

양국 수비대장 통제협력 방안등 논의

【모스크바=연합】러시아와 북한은 14일 양국 접경에 대한 통제문제와 관련한 협력회담을 개최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태평양지역 국경수비대장 비탈리 세드흐 중장과 북한의 함경북도 수비여단장 박연수 소장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 중국 3국접경지역에 인접한 러시아연해주 크라스키노에서 만나 北韓-러 국경조약의 내용에 따른 국경통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경수비대 책임자는 향후 정례적으로 국경통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1996. 3. 26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북한군 대표단과 회담

【北京=聯合】遲浩田중국 국방부장은 25일 북경에서 북한 인민군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 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당중앙 군사위 부주석이기도 한 遲부장이 이날 북한 인민무력부외사국장인 이상우 소장을 단장으로 6명으로 구성된 북한 인민군대표단과 회담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996. 3. 7

北 "주민 75% 반정부·동요세력"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50개 성분 분류 통제

정치범 15만명 12곳에 수용

【워싱턴=鄭炳鎭특파원】美국무부는 6일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金正日체제하에서도 북한주민의 75%가 반정부 인사나 동요세력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을 50개 성분으로 분류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96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는 반정부 세력을 가두기 위한 시설이 12곳이나 있으며 15만명의 정치범과 그의 가족들이 철저히 폐쇄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들 정치범중에는 전직 고위관리나 당간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외부와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까지 한국인과 일본인을 납치하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이 「일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라는 전제아래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일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개정 혹은 폐지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1996. 3. 14

北 美인권보고서 비난

【도쿄=聯合】북한은 13일 인간의 기본권리를 조직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전세계 8개국중에 북한을 포함시킨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를 조작된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북한외교부 관리의 말을 인용, 美국무부는 지난 6일자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여러나라의 인권사항을 언급하면서 근거도 없이 북한문제를 들고나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매년 그같은 보고서를 조작하여 타국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한겨레신문 1996. 3. 17

북 인권조사 '특별보좌관' 임명을

국제인권협회등서 유엔에 공식요청

국제인권협회(사무총장 로버트 챔버스)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는 16일 북한 인권실상을 긴급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을 임명해줄 것을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요청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북한주민들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4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인권위에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의 임명을 요청했다.

이상기 기자

▽ 한국일보 1996. 3. 7

北, 고문 가혹·재판없이 처형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주요내용

다음은 美국무부가 6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중 남·북한과 중국 관련부문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金正日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을 승계하지 않았으나 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없어 보인다.

북한 당국은 인권 보호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재판 없이 처형된 사례와 실종에 관한 보고들이 잇따랐다. 고문과 가혹한 형 실태도 여전하다.

많은 인사들이 정치범으로 붙들려 있다. 귀순자들에 따르면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북한내 12개 수용소에 갇혀 있다. 북한 당국은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대신 범법자 갱생을 위한 「교화소」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연계된 한국·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에 관한 보고도 계속 나왔다. 국제사면위(앰네스티)에 따르면 외국인과 가깝게 지낸 북한인 다수도 실종되는 우호국들의 경우를 보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들이 나왔다. 여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려는 법적 노력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역사이동성 경제성장 무등에 힘입어 생활수준은 향상됐으나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당국의 의지 부재속에 인권존중의 확대를 실현하지 못했다. 당국은 또 작년까지 협박국외추방 투옥 구금 등의 수단으로 反정부인사들을 침묵시키는데 성공을 거뒀다. 형법도 오히려 사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으며 지난해 알려진 처형자 수만도 1천4백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워싱턴=鄭炳鎭특파원】

한국 정부가 지난 해 6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등 계속 남아 있다. 노동 관행도 여전히 국제기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 또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가혹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들이 나왔다. 여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려는 법적 노력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정치범 15만·탈주막으려 해외유학 규제

한국 노동관행 국제기준 이하-여성차별 여전

중국 反정부인사 협박·국외추방·투옥등 억압

▽ 조선일보 1996. 4. 1

北 인권상황 지속추적

유엔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금주 인권委서 문제제기

국제 인권협회

【베를린=聯】 국제민간인권기구인 국제인권협회(ISHR)는 31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했다.

국제인권협회는 이날 독일 쾨니히슈타인에서 열린 국제이사회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체제적 주민감시와 억압, 불합리한 형법전, 4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ISHR는 이에따라 북한내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회원국 공동서명으로 이 문제를 2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 관계자들은 연설과 개별접촉을 통해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계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네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유엔을 대상으로한 막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ISHR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저명 민간운동기구로 세계 24개국 인권기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 동아일보 1996. 4. 10

訪北예정 러記者2명 北요청따라 비자취소

【모스크바聯】 10일 평양에서 개막되는 제 1회 러-북한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동행취재할 예정이던 이즈베스티야지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의 기자 2명에 대한 비자가 취소됐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외무부소식통을 인용,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이즈베스티야지의 게나디 차로제예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의 빅토르 슈트케비치 등 2명의 기자가 러-북한 경제위원회 회의를 동행취재할 수없게 됐다고밝혔다.

▽ 세계일보 1996. 3. 26

"북한 化學-生物戰 준비"

美DIA보고서 신경가스등 생산 韓國공격 능력

【도쿄=연】 美국방부 국방성보국(DIA)은 북한이 화학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작성했다고 日 지지(時事)통신이 2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북한 군사력에 관한 이 보고서에서 DIA는 북한이 생물무기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나 중거리미사일 「노동」은 아직 실전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포동」도 아직 설계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군사력 기초」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은 신경가스 등 무기용 화학제와 이를 사용한 화학무기 생산및 저장시설을 보유함으로써 화학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한 화학전에 대비해 스스로 對화학무기 훈련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예비역을 포함해 모든 병사들에게 방호마스크와 방호복을 배포하고 있고 민간인에게도 화학전을 가상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아울러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과학자와 시설을 확보해 전염병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사용한 생물무기 생산능력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사정 약 1천㎞인 탄도미사일 「노동」은 수출 또는 북한 국내에 실전배치될 정도로 제조되지 않았고 실전배치도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대포동도 모두 설계단계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91년 공표된 같은 이름의 보고서 개정판으로 작년말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정세와 군사력 실태를 종합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 동아일보 1996. 4. 11

訪北 러시아대표단 北과 친선협력다짐

북한은 10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정부대표단을 맞아 연회를 베풀고 북-러간 친선협력 증진을 다짐했다. 북한 부총리 洪成南은 이날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정무원 주최로 열린 연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평양방송이 11일 보도했다. 【朔】

▽ 중앙일보 1996. 4. 13

北-러 經協의정서 조인

러외무차관 北긴장조성 우려 표명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무역관계 회복을 위한 「경제·과학기술협력 의정서」를 조인했다.

12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날 평양 만수대서 열린 북-러 무역·경제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북한 정무원 부총리 홍성남(洪成南)과 방북중인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와함께 이 방송은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날 북한을 방문, 김영남(金永南)부총리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1996. 4. 18

美·日 安보협력 선언

양국 頂上회담 한반도 4者회담 韓國과 긴밀협의

【도쿄=田賢一특파원】빕 클린턴 美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는 17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美-日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클린턴대통령의 일본방문 이틀째인 이날 선언을 통해 『양국정상이 21세기를 앞두고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와 다음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하는데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과 미국및 중국이 참여하는 4者회담(2+2)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도쿄사내 아카사카(赤坂)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속출하고 있는 지역분쟁에 공동대처키 위해 美-日 新안보체제 구축에 정식 합의하는 한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4자회담을 제안한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안보선언은 과거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성격의 美-日안보조약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범위로 한 광역 지역분쟁 억지형 안보체제로 사실상 전환됐음을 의미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하시모토 日총리는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정전협정체결 당사자가 아닌 만큼 4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정부로서는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 등 또다른 대화기구를 제안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美-日안보공동선언」과 「美-日 양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에 4만7천명의 주일미군을 포함한 10만명 규모의 미군병력을 유지키로 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유사시에 대비, 「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996. 4. 14

러-北, 「한반도 평화」 異見

北 "美國과 직접대화" 고수

양국 외무차관회담

【모스크바=】 러시아와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러-북한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와 병행해 열린 양국간 정무협상에서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12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이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국간 정무협상에서 북한측은 『제3자나 중재자는 필요없으며 단지 미국과 직접 대화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북한측은 또 유엔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유엔사무총장의 대리인도 북한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노프 차관은 회의를 마친뒤 이처럼 양국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한반도에서 심각한 충돌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관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노프차관은 정무협상을 마친뒤 김영남 북한외교부장을 만났으며 김영남은 이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1996. 4. 16

"국제정세 변해도 中·北 우호는 고수"

中國 부총리 강조

중국 공산당중앙위 서기처서기겸 국무원 부총리 장춘윈(姜春雲)은 12일 중국과 북한은 「순치(脣齒)의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쌍방간 친선협력 증진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미 고인이 된 김일성(金日成)의 84회 생일을 맞아 중국주재 북한대사 주창준(朱昌俊)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 姜부총리는 『중·조 두나라는 친선적인 인방(隣邦)』이라면서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전통적인 친선을 확고부동하게 수호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1996. 4. 16

美·日 「新안보체제」 출범

극동 유사시 협력-美軍기지축소등 합의

【東京=李革宰기자】 美日 양국은 15일 駐日미군 기지를 축소조정키로 합의했다。양국은 또 오는 가을쯤 회의를 열고 「유사시」 일본의 미군에 대한 지원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

페리 美국방장관, 우스이 히데오(臼井日出男) 방위청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駐日미군 11개 기지중 4개는 일부반환하며, 나머지도 기존 기지에 그 기능을 이전토록 합의했다。이에따라 기능적인 면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게 됐다。

이와함께 日정부는 이날 임시각의를 열고 「평화시」 주일미군의 훈련에 대한 일본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서비스 상호조달협정(ASCA)을 가결했다。이에따라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合同훈련 때 일본측이 통신, 연료, 수송, 기지 수리, 공항·항만 업무 등을 지원케 된다。양국은 이날 합의로 그동안 초점이 돼온 美日 안보 현안을 대부분 실무선에서 타결함으로써 美日안보체제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합의내용은 17일 美日정상회담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축소·이전과 관련, 지난주부터 야마구치(山口)縣 등 기지이전 후보지에서 반발이 일고 있어 합의내용 실시에는 日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14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日총리와 페리 美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현재 일본의 미군 지원태세가 「평화시」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사시 일본의 지원이 가능토록 양국이 협의토록 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전문가팀을 구성, 올 가을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사시 지원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 위헌논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한국일보 1996. 4. 18

北정치범 최소 40만명 2~3년새 2배 증가

러시아일간지 보도

【모스크바 = 李進熙특파원】북한에서 지난 2~3년간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종전에 비해 2배정도 늘어난최소 40만명에 달하며 정치범 수용소 3곳외에 20여개의 강제수용소, 70여개의 정신병원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의 일간 시보드냐지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제인권기구등의 자료를 인용, 북한이 식량난등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남한의 위협을 빙자해 반체제 인사를 더욱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49호 요양소」로 불리는 정신병원에는 金日成의 주체사상에 반대하는 지식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수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996. 4. 27

訪韓스위스외무관리 오늘訪北 주목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참석차 방한했던 한인리히 라이만스위스 외무부 정무2국장이 북한의 초청으로 27일부터 4일간 평양을 방문한다.

라이만국장은 4者회담 제의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을 잇달아 방문하는 중립국감독위 위원국의 고위외교담당자로 방북기간중에 북한측 金영남외교부장 등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동아일보 1996. 4. 18

美-日 新안보 공동선언(요지)

△美日간의 강고(强固)한 동맹관계는 냉전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지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 지역의 안정과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불안정, 불투명한 요인을 안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해결의 국경분쟁이나 잠재적인 지역분쟁, 대량살육무기의 확산 등이 불안정의 원인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국의 전향적인 건설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반도의 안정은 양국정부에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양국 정부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위에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에 가장 중요한 틀은 긴밀한 2국간 방위협력이며 미군의 주둔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것이라는데 합의했다.

미군은 현수준의 주일미군을 포함해 10만명 전후의 병력을 유지한다.

△양국 정상은 안보협력의 수정에 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한다. 장래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인 안전보장의 환경변화에 대응, 양국 정부는 방위정책과 부대구성에 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 그 가운데는 주일미군의 구성도 포함된다.

△미군시설이 집중된 오키나와(沖繩)현민에 감사하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통합 축소를 추진할 것을 재확인한다. 「오키나와의 시설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통해 96년11월까지 결론을 낸다.

▽ 세계일보 1996. 4. 26

中-러 4者회담 신중검토

江澤民-옐친 정상회담 한반도 안정유지 필요 공감

【北京=金星路특파원】江澤民 중국국가주석겸 黨총서기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새롭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신각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沈國放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다.

江주석은 이날 오전 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특히 체첸은 러시아의 일부이며 러시아가 체첸에 대해 취한 조치는 러시아의 내정이므로 외국이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옐친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이 중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 대만과 어떤 공식관계도 맺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특히 대만과 티베트는 분리할 수 없는 중국영토의 일부임을 인정했다.

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마련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21세기를 대비해 평등과 상호신뢰및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중-러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군축과 핵무기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고 양국은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괄적핵실험금지협정(CTBT)및 화학무기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996. 4. 19

정부 美·日선언 "환영"

日군사대국화 인정여부로 파문예상

외무부는 18일 당국자 논평에서 『미·일안보공동선언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이 선언은 미·일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견지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외무부의 이같은 논평은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李承哲기자〉

▽ 중앙일보 1996. 4. 18

일본 안보 관련 주요일지

△51. 9 = 요시다(吉田) 트루먼회담에서 미일안보조약 조인
△54. 7 = 日, 방위청 자위대 발족
△56.12 = 日, 유엔가입
△57. 5 = 日, 「국방 기본방침」결정
△60. 1 = 기시(岸) 아이젠하워, 신미일안보조약 조인
△68. 1 = 사토(佐藤), 비핵 3원칙 표명
△72. 5 = 美, 오키나와(沖繩)기지 1차 반환
△76.10 = 日, 「방위계획 대강」결정
△76.11 = 日, 방위비 GNP의 1%내 억제 결정
△78.11 = 「미일방위협력 가이드라인」 결정
△81. 5 = 스즈키(鈴木) 레이건, 공동성명에서 「동맹관계」첫 표기
△87. 1 = 日, 방위비 GNP 1% 억제방침 폐기
△91. 4 = 日, 걸프전 소해정 파견
△92. 6 = 日,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통과
△92. 9 = 日, 캄보디아에 PKO 파견
△95. 2 = 美국방부, 「동아시아전략」보고서제출
△95. 9 = 오키나와 미군,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96. 4 = 오키나와 미군기지 추가반환, 신안보선언 발표

▽ 조선일보 1996. 4. 26

中-러 공동성명 (요약)

1. 양국 상호관계 = 中-러 양국은 상호 평등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선언한다. 양국은 92년 12월18일 서명한 「중-러 상호관계의 기초적 공동성명」과 94년 9월3일 서명한 「중-러 공동성명」이 천명한 원칙들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다짐한다.

양국은 각급-각종 채널의 대화를 유지하고 양국 지도자간의 고위급-최고위급 접촉과 협상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이를위해 北京과 모스크바에 양국정부간의 핫라인을 개설키로 한다.

양국은 91년5월16일 서명한 「中蘇 동부국경협정」과 94년9월3일 서명한 「중-러 서부국경협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중국은 체첸문제가 러시아 내부문제임을 인정한다. 러시아는 중국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분리할수 없는 중국영토의 한 부분임을 인정한다. 러시아는 일관되게 티베트(西藏)가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한다.

2. 국제평화와 발전 = 세계의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환영을 표시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양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속한 체결과 화학무기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희망한다.

3. 亞太지역 안전과 협력 = 양국은 亞太 각국이 자국의 다양한 현실에서 출발해 다양한 형식-직급-채널로 안전보장을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亞太지역의 양자-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 양국은 中-러, 中-카자흐스탄, 中-키르기스탄, 中-타지크스탄간의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를 높이는 협정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갖는다.

Ⅷ. 사설·칼럼

사 설

□ 안목사, 원상회복 시켜라 ····· 문 화, 2. 1.····· 371
□ 귀순자 낙담 시켜서야 ····· 동 아, 2. 2.····· 371
□ 이산의 아픔 씻는일 부터 ····· 서 울, 2. 3.····· 372
□ 흔들리는 대북공조 ····· 한 국, 2. 4.····· 372
□ 중, 안목사 송환에 최선을 ····· 동 아, 2. 5.····· 373
□ 미국의 대북 독주 ····· 세 계, 2. 5.····· 373
□ 미국의 대북정책 뭔가 ····· 조 선, 2. 6.····· 374
□ 미국의 다짐 너무 믿지말라 ····· 경 향, 2. 7.····· 374
□ 북한 동포가 넘어 오면 ····· 한겨레, 2. 9.····· 375
□ 우려되는 미 이중정책 ····· 한 국, 2. 12.····· 375
□ 김정일 가족의 탈출 ····· 동 아, 2. 14.····· 376
□ 북한의 붕괴 조짐 ····· 세 계, 2. 14.····· 376
□ 성씨 탈출처리 신중하게 ····· 경 향, 2. 15.····· 377
□ 북한의 '이상징후' 냉정히 봐야 ····· 한겨레, 2. 16.····· 377
□ 북 심장부의 총성 ····· 조 선, 2. 16.····· 378
□ 북의 '무자비한 보복' 협박 ····· 중 앙, 2. 18.····· 378
□ 북의 「잠정협정」 속셈 ····· 한 국, 2. 24.····· 379
□ 북한 어디로 가고 있나 ····· 세 계, 2. 25.····· 379
□ 「북한인권」에 정면돌파를 ····· 조 선, 2. 27.····· 380
□ 북 수재민 위해 물자 받아라 ····· 서 울, 2. 28.····· 380
□ 범아시아 철도 해볼만 ····· 조 선, 3. 5.····· 381
□ 미, 대북시각에 일관성 있어야 ····· 서 울, 3. 6.····· 381
□ 북인권에 더 관심을 ····· 문 화, 3. 7.····· 382
□ 북한의 「인간폭탄」 훈련 ····· 경 향, 3. 10.····· 382
□ 굶주리는 동포 외면 말아야 ····· 한겨레, 3. 14.····· 383
□ 「남침형 붕괴」에 대비를 ····· 조 선, 3. 19.····· 383
□ 북의 '최종조치' 으름장 ····· 중 앙, 3. 23.····· 384
□ 미·중간극 좁히는 공로명외교 ····· 서 울, 3. 23.····· 384
□ '남북대화' 적극 제의해야 ····· 한겨레, 3. 28.····· 385
□ 북한, 위폐·마약 본거지인가 ····· 중 앙, 3. 29.····· 385
□ 북·미 정상급 회담? ····· 중 앙, 3. 30.····· 386

□ '쌀회담'을 활용해야 ····· 한겨레, 3. 30.····· 386
□ 북은 좀더 솔직해야 ····· 조 선, 3. 30.····· 387
□ 짧지만 중요한 클린턴 방한 ····· 중 앙, 3. 31.····· 387
□ 한국배제된 미사일협상 ····· 국 민, 4. 2.····· 388
□ 북한동포에 사랑의 손길을 ····· 국 민, 4. 3.····· 388
□ 「종합 범죄단체」북 ····· 조 선, 4. 3.····· 389
□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 한겨레, 4. 5.····· 389
□ 북한의 전쟁협박 ····· 동 아, 4. 7.····· 390
□ 북, 협박으로 얻을 것 없다 ····· 중 앙, 4. 8.····· 390
□ 안보의식 점검할 때 ····· 한 국, 4. 9.····· 391
□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 동 아, 4. 10.····· 391
□ 안보리에 오른 북한의 도박 ····· 경 향, 4. 11.····· 392
□ 러시아의 북한 설득 ····· 동 아, 4. 11.····· 392
□ 북 도발은 실패했다 ····· 조 선, 4. 12.····· 393
□ 북은 국제여론 수용해야 ····· 세 계, 4. 14.····· 393
□ 북 4자회담 응해야 ····· 조 선, 4. 17.····· 394
□ 4자회담은 마지막 카드다 ····· 경 향, 4. 17.····· 394
□ 「한국형」 외교안보 ····· 조 선, 4. 19.····· 395
□ 「2+2」회담과 미일선언 ····· 세 계, 4. 19.····· 395
□ 북한의 해상도발 ····· 동 아, 4. 21.····· 396
□ 북—미 접촉에 대한 우려 ····· 서 울, 4. 22.····· 396
□ 중국의 확고한 대북메시지 ····· 문 화, 4. 22.····· 397
□ 북한은 변할 것인가 ····· 동 아, 4. 24.····· 397
□ 지금은 북측반응 지켜볼 때 ····· 세 계, 4. 24.····· 398
□ 미국의 대북접촉을 보는 눈 ····· 한겨레, 4. 25.····· 398
□ 중·러협력과 한반도 ····· 한 국, 4. 27.····· 399
□ 북·미접촉과 중구난방 ····· 중 앙, 4. 27.····· 399
□ 4자회담 거품 기대 ····· 조 선, 4. 28.····· 400
□ 재개되는 대북 경협 ····· 중 앙, 4. 28.····· 400
□ 지렛대 없는 대북관계 ····· 세 계, 4. 30.····· 401
□ 「대북 냉·온」 ····· 조 선, 4. 30.····· 401

칼 럼

□ 통일독일에서 본 분단한국 ····· 한 국, 2. 1.····· 402
□ 위험스런 클린턴의 대북접근 ····· 세 계, 2. 6.····· 402
□ 대미관계 성숙해져야 ····· 중 앙, 2. 7.····· 403
□ 기대 못할 대북공조 ····· 중 앙, 2. 10.····· 403
□ 미국은 변하고 있는가 ····· 조 선, 2. 11.····· 404
□ 동북아와 비핵지대화 ····· 한겨레, 2. 12.····· 404
□ 방치된 귀순자들 ····· 조 선, 2. 14.····· 405
□ 대북경계 강화하자 ····· 조 선, 2. 15.····· 405
□ 김정일이 기른 20대의 반란 ····· 서 울, 2. 15.····· 406
□ 북한은 붕괴하고 있는가 ····· 한 국, 2. 16.····· 406
□ 북한엘리트의 이반 ····· 조 선, 2. 21.····· 407
□ 성혜림씨의 '망명' ····· 한겨레, 2. 21.····· 407
□ 성씨망명과 북체제 ····· 경 향, 2. 21.····· 408
□ 「성혜림소동」이 남긴 문제점 ····· 세 계, 2. 24.····· 409
□ 유격대국가 북한의 한계 ····· 세 계, 2. 26.····· 409
□ 북한과 동독의 차이 ····· 한겨레, 2. 28.····· 410
□ 「북붕괴」 미의 언론플레이 ····· 문 화, 2. 28.····· 410
□ 남북밀사가 만나면 ····· 중 앙, 3. 2.····· 411
□ 통일 끈기있게 대처하자 ····· 서 울, 3. 5.····· 411
□ 김정일체제 「출구」가 없다 ····· 조 선, 3. 5.····· 412
□ 「망자통치」 기형정권 불안 ····· 조 선, 3. 5.····· 412
□ 점검, 북한 붕괴론 ····· 한겨레, 3. 8.····· 413
□ 김정일정권과 가짜달러 ····· 세 계, 3. 9.····· 413
□ 북한관의 이중성 ····· 한 국, 3. 14.····· 414
□ 「비핵화」 철회하라 ····· 조 선, 3. 16.····· 414
□ '남북 당국자 대화' 고수해야 하나 ····· 중 앙, 3. 30.····· 415
□ 한-미 우습게 본 북의 도전 ····· 세 계, 4. 7.····· 416
□ 북한 내부의 최신정보 ····· 동 아, 4. 12.····· 416
□ 북한의 「벼랑끝」 전략 ····· 조 선, 4. 15.····· 417
□ 북-미 미사일협상의 앞길 ····· 한겨레, 4. 15.····· 417
□ 4자회담 제의의 참뜻 ····· 한 국, 4. 17.····· 418

□ 북한이 응답할 차례 ····· 동 아, 4. 17.····· 418
□ 「회담」 성공의 네가지 기준 ····· 경 향, 4. 17.····· 419
□ 4자회담 제의 ····· 조 선, 4. 18.····· 419
□ 북한의 '선택' ····· 한겨레, 4. 19.····· 420
□ 한반도 4자회담 성사는 북내분위기 정도에 달려 ··· 경 향, 4. 19.····· 420
□ 4자회담은 막다른 북한에 탈출구 ····· 중 앙, 4. 21.····· 421
□ 남북관계 보는 「새로운 눈」 ····· 경 향, 4. 27.····· 421
□ 북한에 시간을····· ····· 중 앙, 4. 27.····· 422
□ '4자회담'을 다듬어 가자 ····· 중 앙, 4. 29.····· 422
□ "안보정보 국익차원서 관리를" ····· 서 울, 4. 29.····· 423
□ 평화통일과 4자회담 ····· 한 국, 4. 30.····· 423

사설

黃毒사 해결에 협력하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중국 연길에서 발생한 黃毒無毒사 스파이사건이 북한에 납치사건으로 중국측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黃毒사를 원상회복시키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물론 지난해 사건발생 때부터 정부는 모든 상황이로 보아 黃毒사가 기정사실이로 확정한 북한측의 의견 납치된 것이로 보고 중국에 송환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국측의 사실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태도는 중국측의 최종결론을 기다리는 듯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黃毒사가 강제 납북된 것으로 결론내린 지금 정부는 마땅히 黃毒사의 송환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측에도 黃毒사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지금 주장한다. 이미 이 사건 발생초부터 지적한 바 있지만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중국측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은 조사과정을 통해 북한인사가 마땅한 북한의 개입사실의 범행증거를 충분하다는 뚜렷한 태도를 보여왔다. 아마도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해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뜻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 납북에 의한 범죄로, 북한의 개입에 의한 범죄는 중국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만일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자국의 주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사법당국은 그 유죄와 북한인의 정체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黃毒사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넘어간다면 북괴보복설이는 중국 사법당국의 결론은 믿어지고 북한측이 계속 주장해 온 黃毒사의 「의거 월북」선전을 합리화시켜주는 셈이 된다.

중국측에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다. 黃毒사 납북이 분명 중대한 권리침해이며 이주민에 범죄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식량지원문제 등 인권문제로 주시를 받고 있어 그 문제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기도 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중국이 이 명백한 국제인권침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부 오해를 씻어주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 정부에 당부하려는 것은 黃毒사 사건이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의 기조가 깨어질까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적 책무는 책무다. 관계개선을 위해 국민모욕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黃毒사 송환을 위해 중국과 아니라 국제인권기관을 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쿠산자 납북 지켜져야

사진(寫眞)을 보면 자야를 찾는 쿠산 부인들로 중 한명은 자기 아들이 납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쿠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뒤 자야를 찾아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얘기다. 「쿠산부인들의 자랑」이라는 미국 뉴욕 타임스지 96년 1월 2일자 기사는 자야를 찾는 쿠산 부인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93년 처음으로 쿠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주변 마산지역, 주변 여천 군민들지역, 총 해산 표를 쿠산자가 당선하고 있다. 또 쿠산자가 국회의원 중 한명이 되어 자야를 찾아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자야는 쿠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쿠산자가 자야를 지원하는 것이다. 쿠산자는 자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야가 쿠산자를 찾는 것이다. 이제 자야는 쿠산자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야는 쿠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쿠산자가 자야를 지원하는 것이다. 쿠산자는 자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야가 쿠산자를 찾

▽ 서울신문 1996. 2. 3

離散의 아픔 씻는일 부터

취임한지 한달남짓 지난 權五琦통일부총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2월 2일자)를 통해 올해의 통일정책에서는 이산가족문제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각별히 기대되는 부분이다. 남북회담이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힘쓸 과제이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국제기구 또는 제 3 국을 통해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상봉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특히 반갑게 생각한다. 반세기가 지난 이산 1 세대들의 한이 아직 남아있고 그후 북송선으로 실려간 이산, 가족을 두고 탈출해온 귀순한 사람들의 이산등 숱한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고싶어 한다.

통일부총리식의 비유를 빌리면 그들은 착한 「콩쥐」들이다. 계모밑에서 상상할수 없는 구박을 받고있는 가엾고 서러운 육친의 소식을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들 「콩쥐들」의 상황을 시야에 두고 북한정책을 펴가야 한다』는 통일당국 수장(首長)의 행정시각을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망명해온 부부는 아직 10대에도 이르지 못한 아이들을 북에 두고 왔다. 이런 경우에는 범(汎)인류적 도의로 자녀들이 부모품에 안길수 있게 해야 한다. 국제기구가 주선하거나 여론으로 북한을 설득하게 하는 일은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간의 교양과 도의를 함께 나누는 것은 북한당국을 인륜상의 가학(加虐)사회가 되지않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일수도 있다.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경제적 개방만으로는 안된다. 인륜지도덕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교류의 자(尺)로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천륜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어느 경우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 권리에 대한 배반이다.

곧 다가올 음력설이면 두고온 혈연에 대한 한을 안고 인생의 황혼을 맞은 이산 1 세대들이 북녘을 향해 다시한번 피울음을 울것이다. 북한이 그 통곡소리에 가슴을 열수 있게 하는 일에 통일정책의 핵심이 있기를 빈다. 「이산가족 상봉」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할 가장 절박한 역사적 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한국일보 1996. 2. 4

흔들리는 對北공조

북한에 대한 미국의 2백만달러 상당 식량지원 결정은 한국정부를 국내외적으로 난처하게 만들었다. 얼마전 한국·미국·일본이 하와이 고위회담에서 「당분간 정부차원의 對北(대북)쌀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했음에도 9일만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도 그렇고 바로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한 앤터니 레이크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한 하루전에 발표한 것 등은 그야말로 강대국의 독단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한·미간의 대북共助(공조) 방침을 일방적으로 뒤흔든 것이다. 미국의 결정은 한국이 국제적으로는 식량지원을 반대하는 강경한 나라로 인식되고 나라안으로는 주도적인 대북정책에서 밀린 것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미국의 지원결정은 우방국과 시각이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자국이익에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공조약속을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이 내는 2백만달러(16억원)의 식량은 작년 남한이 준 15만톤(약 2천여억원 상당)에 비해서는 미미한 규모이나 그 의미는 크다. 즉 정부가 대외재난지원기금을 국제식량계획기구(WFP)에 내는 형식으로서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며 이는 앞으로 대북지원의 기폭제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한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 유럽각국이 이 방식을 통한 지원에 대거 참여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식량지원을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최근 6·25이래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국가」에서 제외하여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른바 적대정책에서 끌어안기로 슬그머니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기보다 끌어안기, 살리기로 북한을 개방시켜 미국의 영향권속에 넣겠다는 전략이다. 클린턴대통령이 4월 방한을 취소한 것도 한국의 반발을 피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우방국과의 대북공조만을 신주처럼 믿고 있는 사이 미국은 독단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고 일본은 양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접근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레이크안보보좌관을 맞아 분명한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첫째 국제기구를 통한 쌀지원은 인정하나 남북대화와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배급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好戰的(호전적) 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는 북한의 테러국지정 제외에 항의하고 과거 테러만행에 대한 시인·사과와 함께 테러의 영원한 포기다짐을 받아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의 일방적 대북정책 전환은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유발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 뒤 사전협의공조체제를 재다짐시켜야 한다.

社 說

中, 安문사 송환에 책임을

중국 공안당국이 안문사 김덕홍 3명을 북한 당국에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다. 중국은 이들이 북한 주민들을 중국 영토 내에서 불법 납치한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은 북한 당국이 이미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 당국자들이 안문사 김덕홍 일행 3명을 북한 당국에 넘겨주기 전 북한 당국자들이 이들을 만나 중국 영토에서 불법 납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 당국에 귀순한 것이라는 내용의 녹음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중국이 이들 안문사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 당국이 믿었다면 그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이들 일행이 북한 당국에 넘겨지면 중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중국은 이들을 송환함으로써 4개월여 끌어온 지난 연말연초의 중국 수사당국과 북한 당국 간의 협의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확한 진상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

▽ 조선일보 1996. 2. 6

미국의 對北정책 뭔가

미국의 對北(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에 따라 한-미공조도 전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여일전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고위 정책협의회 때까지만 해도 대북관계에서는 行步(행보)를 함께 하기로 했던 클린턴 행정부가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독자적인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이제 식량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가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변화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미국의 對北정책의 기조는 그리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미국이 北을 돕기로 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장기적 분단을 지향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당분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식량지원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하므로 그로 인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과연 극심한지 미국이 실태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설사 식량난이 극심하다 해도 그것이 도발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제는 또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은 잘못된 農政(농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지난해의 수해 탓으로만 돌리는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원에 급급한 것은 이상하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작년에 쌀 15만t을 북한에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北이 계속 우리 정부를 비방하며 대화를 거부해도, 미국은 그러한 北을 탓하지는 않고 우리에 대해서만 쌀을 더 보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점이다. 미국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대북 식량지원마저 방해하고 있는 나라로 비쳐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 무상으로 다량의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물론 탈냉전 시대엔 미국의 대북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통일을 내다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변화를 거부하는 北을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 北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의 입장을 인정하는 정책만을 구사할 경우 우리의 분단은 더욱 고착될 것이 아닌가.

▽ 경향신문 1996. 2. 7

美國의 다짐 너무 믿지말라

레이크 美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한으로 한·미간 대북갈등이 일단 해소된 듯한 인상을 풍긴다. 3박4일의 방한일정을 통해 그는 「한국을 배제한 북·미 접근은 있을 수 없다」는 점과 미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북관계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정부당국자에게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의 다짐만 보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양국 갈등은 완전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레이크의 방한은 최근 첨예하게 드러난 한·미갈등을 일시적으로 미봉(彌縫)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다짐을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관계 변화의 흐름과 연계해 보면 객관적 의미가 분명해 진다.

따라서 정부가 「북·미접근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다짐을 곧이 곧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러기에는 미국은 북한과 너무나 많은 일을 벌여 놓았기 때문이다. 제네바합의 직후 클린턴대통령은 金正日에게 친서를 보내 대체에너지 제공을 약속하고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보장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미국은 지금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인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북관계를 추진한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북정책의 일반론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그것을 개별사안에까지 적용되는 구체적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식량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모두 그 범주에 집어넣으려 한다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것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고 미국이 주장한다면 정부로서는 뭐라고 대응할 것인가.

대북관계에서 미국은 때때로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준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만을 탓할 수는 없다.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외교는 외교다.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을 믿고 미국의 호의적 발언에 의존하는게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하와이회의의 결과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한데 비해 우리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없다고 너무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던가.

레이크의 다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발언을 너무 우리쪽 입장에서만 보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일보 1996. 2. 12

社 說

우려되는 美 이중정책

새해들어 미국의 對한반도정책과 자세가 달리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것은 남북한 等距離(등거리)정책내지 북한에 대해서는 관계개선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對北정책에 있어 「共助(공조)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는 필요한 경우 독자적인 접근 등 이중정책을 공공연히 구사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독주와 이중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북한에 2백만달러 상당의 식량지원과 자신들이 맡게 돼있는 重油(중유)비용의 전가, 그리고 남북대화 실현의 외면이다.

이것은 미국의 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통한 쌀지원의 거부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군부의 반발을 내세웠으나 실제 국제기구를 통한 요청이 3~4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천여만달러 상당에 불과한데 불만을 느끼고 차제에 이른바 核(핵)동결과 북한달래기 등을 위한 미국의 북한접근을 역이용, 쌀지원과 무역제재완화 등을 겨냥하여 「적은 지원들」을 사양한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클린턴대통령이 「독자적 행동」의 운을 떼고 의회조사국이 미북관계와 남북한 문제를 연계시켜 온 정책을 국가이익을 위해 부득이할 경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음미해 볼 만하다.

미국의 대북·대한반도정책이 이처럼 이중적 자세, 일방적 추진으로 바뀌려는 이때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실로 너무나 한가하다. 그저 「한미공조」만을 신주처럼 믿고 또 미국이 이를 파괴해도 잠시 불만을 나타낼 뿐 이번 레이크 보좌관의 방한때처럼 이해하고 동의하는 안이한 자세를 되풀이하고 있음은 어이가 없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접근과 제네바 핵합의문에 명기된 남북대화의 실종은 당초 북·미핵협상에 우리가 빠지기로 한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합의·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미북관계개선, 정상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철저한 한국배제와 휴전선 병력증강의 도발 위협속에 미·북접근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세계정책과 국익에 따라 경수로건설비용서부터 쌀추가비용 등 사사건건 부담만하는 구경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접근과 이를 틈탄 일본의 약삭빠른 대북수교협상 모색을 경계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또 미국에 대해선도 남북대화 이행을 비롯, 공조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부담도 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남북한 카드에 눈치보기로 놀아날 수는 없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 1996. 2. 9

사설

북한 동포가 넘어 오면

지난 94년 북한에서 넘어온 김형덕씨가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항구에 정박중인 외국배에 몰래 올라탔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에 넘어온 강명도씨는 중국으로 외화를 몰래 보내려다 적발되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근년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5백명도 넘는다고 하니 한두 사람의 의문스러운 행동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대해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적어도 이들을 맞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재점검해 볼 계기를 만들었다.

남북한은 그동안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탈출자'를 받아들이려 애써왔다. 그 수의 많고 적음이 마치 체제의 우열을 판정하는 기준이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정착금 등 적지않은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약속하고, 한 명이라도 넘어올 때마다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려 했다. 강명도씨 경우에도 안기부는 북한 정무원 강성산 총리의 사위라는 점을 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몇개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자 마치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든 사실이 확인이나 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법석을 떨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과 가족 등 3명이 넘어온 것을 비롯해 최근 그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수해까지 입은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외국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북한 탈출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정부의 계산은 일리가 있다. 정부는 이들의 급격한 증가가 자칫 재정적 부담능력의 한계를 넘어설까 걱정하면서도, 체제경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하여 고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로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들 개개인을 마치 무슨 '의거'라도 한 것인 양 떠들석하게 맞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저 그들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과거 신분이나 성분, 탈출 동기를 불문하고 당장의 정치적 목적에 이들을 활용하려던 탓에 이들의 무책임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 홍보했던 점은 반성해야 한다. 특히 강씨의 발언이 타결단계의 북-미 핵합의를 뒤엎으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는 말이 나돌만큼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장애요인의 하나임을 안기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社說

北韓의 남북 조건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해 이른바 「대표성」 문제를 들어 회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담 장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등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회담 수락 의사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회담 수락 의사는 그 내용에 있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이것이 과연 회담 성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이 없지 않다. 북한은 이번 회담 제의에 대해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 의제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이른바 「반미」 문제를 포함시키려고 하였고 이것이 회담 성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회담 수락 의사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의제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이번 북한의 회담 수락 의사가

▽ 경향신문 1996. 2. 15

社 說

成씨 탈출처리 신중하게

북한 金正日의 전처 成蕙琳씨가 북한체제를 탈출, 서방세계에 도피했음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 일행이 최종 망명지로서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이고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언론도 당국도 그래서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成씨의 북한탈출 뉴스가 던지는 충격과는 별개로 현단계에서 우리는 우려와 함께 관계당국에 몇가지 당부를 하지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안전문제이다。 成씨가 누구인가。 74년 金日成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이래 20여년동안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金正日의 전처이자 金의 장남을 낳은 어머니 아닌가。 그런 成씨가 북한체제를 버리고 남한에 귀순한다면 그 충격파는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그녀에 대한 金正日 자신과 북한의 보복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것이 도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위한 당국의 조처가 과연 철저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일수록 귀순의 최종적 성공여부가 중요하지 국민에게 하루이틀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오빠 日耆씨와 조카 李한영씨의 안전에 대해서도 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는 그들의 서방세계 망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국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최종 망명지로 成씨가 어디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한다。 우리 당국이 무리하게 한국행을 유도하려 한다든가, 그것을 위해 서울에 있는 그녀의 친척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더구나 이 일로 인해 그들이 일시 머물고 있는 나라와 공연한 외교적 마찰을 빚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또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成씨의 망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우리가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망명은 북한체제의 누적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반영일망정 북한의 즉각적 붕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成씨의 망명은 우리의 대북정책의 한가지 보완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대북정책의 원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 한겨레신문 1996. 2. 16

사 설

북한의 '이상징후' 냉정히 봐야

며칠 사이에 잇따라 터져 나온 북한의 '이상징후'들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들게 한다. 북한의 실권을 쥐고 있는 김정일 비서의 옛 동거녀가 서방으로 탈출한 사건이라든지, 평양의 특수지역에 있는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무장을 한 사회안전부원이 망명을 요구하면서 침입해 북한 경비병을 사살하는 총격전을 벌인 일 등은 예전 같으면 좀처럼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개개의 사건이 전혀 동기가 다르고 우발적인 사건이 공교롭게 겹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련의 사건이 최근 잠비아에서 외교관이 망명한 사건이나 심각한 식량난 등과 맞물려 여러 갈래의 추측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극도로 폐쇄된 체제인 북한 사회인지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이상기류'가 흐르고, 체제를 떠받쳐온 기본규율이 풀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 주민들을 한묶음으로 묶던 연대감이 느슨해지고 식량부족으로 인해 사회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소식들도 단편적으로 전해진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외국의 시각도 북한의 정세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일 비서의 절대적인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권력행사에 큰 이상이 있다는 특별한 정보도 없는 것으로 봐 북한의 최근 상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거나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만만찮다. 오랜기간 일인 지배체제에 익숙해진 북한의 특수사정을 감안할 때 섣부른 해석이 자칫 방향을 잘못잡는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일이라고 본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그러지 않아도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우선 해당 부처간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교류해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판단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돌출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변하는 임기응변의 정책이 아니라 남북문제를 길게 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성혜림씨 망명건도 이런 기조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조선일보 1996. 2. 16

社 說

北 심장부의 銃聲

평양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뛰어들어가 한국 등으로의 망명을 요구하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조명길 하사의 꿈은 무참히 깨졌지만, 이 사건이 몰고온 충격과 파장은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종전 같으면 그런 곳에서 그같은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장소부터가 북한의 심장부로, 金正日(김정일)의 집무실 및 숙소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일반의 접근이 통제된 가운데 무장경비병들이 24시간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 우선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런 곳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핵심 보안기관원이 목숨을 걸고 脫北(탈북)을 시도한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여겨지기만 하던 북한의 심장부에도 이젠 구멍이 나기 시작했으며, 軍(군)내부 역시 결보기와는 다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조하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는 주석궁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경비 및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일의 친위대이므로 이 사건이 북한 권력층에 준 충격은 더 클것이다.

북한 외교관 부부의 망명, 김정일의 전처 成蕙琳(성혜림)씨 서방 탈출 등에 이은 북한 내부 모순의 표면화 질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과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공산정권처럼 갑작스럽게 북한 정권이 몰락하는 전조로 생각할 필요까지야 없다 하더라도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때 북한 체제가 이미 「비정상」인 상태에 접어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돌발사건은 앞으로 더 빈번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저런 모든 가능성에 신속하게, 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의 돌발사태나 체제 동요에 의한 불똥이 우리에게 입히는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평화적인 민주통일의 계기로 이끄는 지혜가 긴요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하사가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진입할 때 북한 경비병 3명을 사살한 것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측이 국제적인 관례를 존중해 좀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 병력을 러시아 영내로 불러 조하사를 사살토록한 격이니, 이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 제3국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조하사가 자살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러시아 대사관 측과 북한 특수부대간의 협조아래 「무장 탈주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자살이냐, 사살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 여러 사정으로 「망명」을 허용할 처지가 못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쯤은 보였어야 옳다.

▽ 중앙일보 1996. 2. 18

사 설

北의 '무자비한 보복' 협박

북한의 공갈엔 우리도 이미 익숙해져 있다. 협박·공갈은 북한이 상투적으로 우리에 대해 써오던 수법이요, 그들의 체질처럼 돼온 것이다. 이번 성혜림(成蕙琳)씨 탈북(脫北)사건이 있은 후에도 북한은 다시 협박하고 있다. 「무자비하고도 철저한 보복」을 하겠다느니, 「무정(無情)한 복수」를 한다느니 하는 극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협박에 물론 놀랄 필요도, 겁낼 이유도 없다. 그들이 이처럼 보기 드문 최강경 표현으로 협박하는 것을 보면 성혜림씨 사건이 그들의 체면과 위신에 얼마나 큰 손상을 입혔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정일(金正日)로서는 굴욕감과 분노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분하고 창피스럽다 해도 여러가지 안팎의 여건은 테러나 납치 등 야만적 행위를 하기엔 어렵게 돼 있다. 그들이 다시 테러나 무장공비남파 등의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들이 애써 추진해온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일본과의 수교노력, 투자유치 등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 감정적 대응은 가뜩이나 한계에 부닥친 체제유지를 더 어렵게 할 뿐임을 스스로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우리로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태세는 갖춰야 할 것이다. 오래 봐 왔듯이 북한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도 저지르는 무모성과 예측불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손쉽게 의지하는 수단이 테러·납치·무장침투, 이런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외교망·무역망을 갖고 있고, 우리 유학생·교민·기업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우리 항공기와 선박은 지구 곳곳을 누비고 있다. 북한이 노리기로 든다면 언제 어느 곳이 취약점이 될는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물론 항공사 등 각종 기업과 민간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일정기간 만일의 사태가 없도록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정권이 약이 오를대로 오르고, 성이 날대로 났다는 점을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거나 창피감을 줄만한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우리로선 스스로의 방비(防備)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황에 냉정·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 한국일보 1996. 2. 24

北의 「전면공격전」 실체

북한이 여러차례 전면전 위협을 가해온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은 이를 단순한 협박으로 간주하고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전면전 준비를 해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전면전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닌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의 전면전 전략·전술

▽ 조선일보 1996. 2. 27

社 說

「북한人權」에 정면돌파를

민족통일 연구원이 북한人權(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北(북)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매년 15~20명을 공개 처형하는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수용자들이 한달에 반 정도는 풀뿌리나 개구리 등으로 연명해야 한다는 소식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충격이다.

이 백서가 아니더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극악상을 고발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다.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일치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이 언제나 세계에서 최하위라는 점이다. 냉전이후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지만 북한 인권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보고서 발표만이 되풀이 될 뿐이다. 그 극악한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 일부 편향된 논자들은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는 식으로 北의 입장을 옹호하려 하고, 北을 대화의 場(장)으로 유도하려는 달콤은 저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그 문제를 덮자고 하며, 또 상당수 식자들은 자칫 「냉전논자」나 「보수반동」으로 몰릴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북한 인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소련 동구가 붕괴됨에 따라 체제의 위기를 실감하는 북한 정권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범을 더욱 量産(양산)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北은 외부로부터 비난이 자제될때 인권을 개선할 조치를 강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안심하고 인권을 탄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로 개선책을 강구할 때이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개발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판했다. 김일성을 이은 김정일의 북한 정권은 동포들을 飢餓(기아)에 몰아 넣으면서 남한 군사정권보다 몇천배나 더 가혹한 인권탄압으로 체제를 연명시키고 있다. 그런데 왜 남한의 인권을 시비하던 사람들이 北의 인권지옥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

北을 자극하면 도발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北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민족적인 문제가 잘 풀릴 가능성은 없다. 北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면 도발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그러나 인륜과 도덕과 민족의 입장에서 볼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인권 도살집단인 현재의 북한 정권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질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또한 그런 논의보다 결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서울신문 1996. 2. 28

北 수재민 위해 물자 받아라

북한이 대한적십자사의 대북(對北) 수재구호물자중 라면과 담요를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현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북한당국은 라면같은 가공식품을 수재민에게 전달하는 데는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면같이 간편하고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구호식품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도 굳이 라면을 받지않기로 한 것은 이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제조회사의 상표와 원산지표시를 일일이 지우기가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으로 치졸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가 지난해 순수한 동포애 차원에서 15만 t 의 쌀을 보냈을때 북한당국이 저지른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상기해보면 라면을 받지않기로 한 그들의 저의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라면·담요등 현물지원보다 현금지원을 바라는 북한당국의 요청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수재민을 구호하기보다는 체제유지에 더 안간힘을 쏟고있는 그들의 처지에서는 현금이 지원됐을때 그것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金正日우상화놀음을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현금지원요청과 함께 쌀 추가지원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구호물자의 배분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방북과 육로수송을 거부한 것도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다. 우리정부는 대한적십자사등 민간단체의 쌀지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쌀지원에 앞서 북한의 정확한 식량실태조사가 전제돼야 하고 분배과정의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쌀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 북한당국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나 민간단체에만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의 추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그것이 도움을 받는쪽의 올바른 자세다. 북한당국은 추가 쌀지원을 위한 우리정부의 전제조건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

▽ 조선일보 1996. 3. 5

汎아시아 철도 해볼만

汎(범) 아시아 철도건설 구상은 많은 난제들이 쉽게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서는 흥미롭고 의미있는 프로젝트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아시아 物流(물류)의 한 先端(선단)이라는 현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멀리로는 그동안 지리적 거리감보다도 훨씬 더 소원했던 아시아 제국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나아가선는 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징성을 더 연장하면 아시아-유럽을 연결한다는 대륙간 소통의 의미까지 함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 구상이 첫번째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몇몇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번 구상은 현실적 난관도 적지 않게 안고 있다. 우선 아시아 철도망의 경제적 이해가 나라마다 서로 다를 것이므로 당연히 이해 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프로젝트의 현실화에도 각별한 협조정신과 조정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이런 대형의 국제적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아시아 국들이 프로젝트의 완성까지 겪게 될 재정적 기술적 정치적 장애들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의문이다.

북한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철도망이 있고 북한으로서도 경제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몇가지 정치적 또는 기술적 문제는 극복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언제나 예견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人的(인적), 物流的(물류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간접적 교류를 의미할 수 있어 우리로서는 적극 추진해 볼직하다. 또 하나, 비록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해도 이 문제에 대한 유럽쪽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아보여 유럽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결국 범아시아철도구상은 그만만치 않은 상징성에 비해 현실성은 꼭 그와 정비례하지는 않을것같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구상은 아시아 경제권에 속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경제적 위상을 생각할때 결코 가벼이 지나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제반 여건에 비추어 우리가 가능하다면 주도적으로 조정기능을 맡을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일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 서울신문 1996. 3. 6

社 說

美, 對北視角에 일관성 있어야

미 행정부가 최근 미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없는 16개 「여행경고국」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했다고 한다. 의아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갑자기 미국인의 여행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지역이 됐다는 어떤 상황변화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래들어 미국의 북한을 보는 시각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적지않다. 우리의 시각과 상치되는 경우도 많다. CIA책임자가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의회에서 증언하는가 하면 국무부는 평양에는 아무런 혼란 조짐도 없으며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수해 피해나 식량난도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분석결과와 대책이 구구각색이다. 쌀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한마디로 미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실상에 대해 정리된 정보와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는게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

식량사정 조차 알지못하고 혹은 붕괴할지도 모르며 국교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안심하고 자국민을 여행 시킬 수 있는가.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라도 개설된 뒤라면 모르겠다. 이라크·이란·레바논·아프가니스탄등 다른 15개 여행경고국 보다 북한이 안전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사태를 촉발, 미국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대화로 핵문제에 합의를 보는등 대미 위장평화공세를 펴오고 있다고 판단 한다.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주한미군철수등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으로 한반도문제를 타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본다. 적화통일을 궁극목표로 하는 북한은 유화책으로 개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미-북간 핵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대화를 철저히 외면하는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아야 한다. 또한 북핵 타결을 선거용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클린턴행정부가 일관성 없는 유화책으로 북한에 핵합의 이행을 「구걸」하는게 아니냐는 한국 일부의 시각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문화일보 1996. 3. 7

사설

北人權에 더 관심을

한국정부, 미국, 국제기관들로부터 매년 나오는 北韓人權報告書를 보아왔지만 올해는 더 측은하고 또 실망스럽다. 올해는 좀 나아지려니 하던 기대가 또다시 무너졌기 때문이다.

7일 발표된 美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중 북한인권상황은 북한내에 15만명의 정치범과 이들에 대한 불법처형, 고문, 가혹한 수형실태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난주 한국정부가 낸 북한인권백서 내용과 거의 같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12월 낸 연례인권평가보고서는 세계 18개국을 인권최악국가로 분류하고 이중에서도 북한등 3개국을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국가」로 최하로 평가하고 있다.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어떤 문제보다도 지켜보고 또 강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다. 그것은 인권이야말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국경, 장벽을 넘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66년 12월 제21차유엔총회에서 특별채택한 국제인권규약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도의적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 비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당국에 대해 이 국제인권규약을 함께 지켜 나가자고 권한다. 북한도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최악의 국가」로 계속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경제협력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데도 어려울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사정의 악화로 각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 북한당국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납북여류자를 빨리 돌려보내달라는 것이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지난 55년이후 강제납북자는 모두 3천7백38명, 이중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은 4백42명이다. 납치된 高相文교사, 安承運목사, 동진호선원등 모든 억류자를 곧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계속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깊이있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등이 필요하다. 이에따른 예산도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유엔인권위원회, 아시아워치등 각종 인권기관과 단체들도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귀순자들의 말보다 직접 북한에 들어가 실태조사를 해주기 바란다. 북한이 문을 닫고 있어도 이를 열도록 해야하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한국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그 후 조치가 제대로 따르지 못한는것같다. 환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난

▽ 경향신문 1996. 3. 10

북한의 「人間폭탄」 훈련

엊그제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북한의 「인간폭탄」 훈련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다. 특수부대 여군이 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저공침투기에서 뛰어내려 비행장을 폭파하는 이 훈련은 군사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무기화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무서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특수부대요원들의 훈련모습을 담은 이 필름은 김정일(金正日)이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선전용 비디오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몰락과 함께 이미 역사의 무덤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가미카제(神風)특공대식 훈련이 정규군에서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한번 대북경각심을 일깨운다.

우리는 자살폭탄공격을 중동이나 북아일랜드의 테러리스트들이나 자행하는 것으로 알았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혹은 조직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흔쾌히 바치는 「자살공격」은 그들의 순교자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반문명적인 테러로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공격은 어떤 명분,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문명사회의 기본가치이자 윤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에게 자살폭탄훈련을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정권의 반문명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사회의 일사불란한 획일성과 광신적인 군중집회는 그동안의 대규모 행사와 김일성 사후의 추모행사등에서 익히 보아왔지만 여군들까지 「인간폭탄」으로 훈련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변치않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대한항공기 폭파사고나 버마 아웅산참사를 통해 북한정권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 테러집단임을 익히 체험한 바 있다.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의 테러국가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테러리스트적 성향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군중집회나 로봇화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한 핏줄을 가진 동족이라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폭탄을 안고 뛰어내리는 북한여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대북문제를 「뜨거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새삼 깨닫게 된다.

▽ 조선일보 1996. 3. 19

社 說

「南侵型 붕괴」에 대비를

게리 럭 주한 미군 사령관이 美(미)하원에서 북한 붕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증언하면서 「자체붕괴냐 남침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 대목에 우리는 큰 관심과 더불어 걱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럭 사령관은 안보관계 북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을 직위에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일반적 관측과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미국 CIA(중앙정보국)도 비슷한 증언을 한 일이 있어 미국 국방 및 정보계통의 북한觀(관)이 새로이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이 그렇게 쉽게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논의에선 또한 「붕괴」의 주체도 북한의 「국가」인지 「체제」인지 「정권」인지 「김정일 개인」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붕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고, 김정일의 건강 또한 건강한 50대 남자에 비하면 좋지 못한 편이나 권력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걱정이 더 커진다. 럭 사령관은 북한이 붕괴할때 자체붕괴냐 남침이냐의 두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는, 한국에 대해 공격행동을 취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같은 우려는 한국에 요격 미사일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만은 아닐 것이다. 럭 사령관의 증언을 유보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대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세하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군의 힘이 강화되었다는 징후도 뚜렷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붕괴할 때도 북한군은 맨마지막으로 붕괴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막강한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끝장을 기다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이 대거 넘어올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우려해야할 것은 북한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북한이 붕괴할때 누가 북한군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워낙 폐쇄된 북한이기에 그 속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는 통일정책도 북한의 실상과 의도가 어떠한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도 거부감을 갖지 않을 통일 방법만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작 시급한 것은 북한이 붕괴 코스로 갈 경우의 北(북)의 필사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놓는 일이다. 한반도에는 아직 脫(탈)냉전이 없다.

▽ 한겨레신문 1996. 3. 14

사 설

굶주리는 동포 외면 말아야

온나라가 지금 선거바람에 휩싸여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겨레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앞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감히 지켜내기도 어려워보이는 공약들을 쏟아내는 여야 정당들도 행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도 미칠까봐 대북 쌀지원 문제는 말도 꺼내려고도 않는 형국이다. 과연 이 정당들한테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를 풀어갈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쌀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도 쌀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쌀을 보내야 하는 것은 굶주리는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베이징 쌀회담을 결렬로 몰고간 정부는 하와이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대북지원 움직임도 차단했다. 되풀이하는 셈이지만, 정부는 베이징회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훤히 내다보이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 당국의 공식요청과 한반도 안에서의 협상 그리고 실제조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 오늘에 와서 이를 되돌아보아도 그 조건들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할 이유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15만톤의 쌀지원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한 정부·여당이 추가지원을 안하려고 찾아낸 구실이었을 뿐이다.

이후 북한의 어려운 사정이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의식적으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총선에 줄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정부가 쌀문제에 좀더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북한 당국이 남쪽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게 될 가능성을 점쳐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선거를 의식하거나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절대로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미 지난 91년부터 하루 두끼먹기 운동을 벌일만큼 식량사정이 나쁜데다 작년에는 큰물 피해까지 입은 북한 주민들이 겪을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다녀온 세계교회협의회 박경서 박사는 그 참상이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동포의 고통은 끝까지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않될 것이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민족문제에 임한다면 총선이 이를 막아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중앙일보 1996. 3. 23

사 설

北의 '최종조치' 으름장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그들이 북·미(北·美)간 평화협정의 중간단계로 제의한 잠정협정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정전체제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위협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 군사대표부」이름의 비망록을 통해 『선택권은 결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은 위협을 한 이래 같은 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되풀이 되고 있다. 나흘뒤인 12일 북한외교관들이 언론과의 회견에서 최종조치를 경고한데 이어 지난 주에는 유엔 안보리(安保理)에 같은 내용의 공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잠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한지 22일로 꼭 한달이다. 최종조치란 말은 북한의 상투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제안을 내놓은지 한달이 못되는 사이에 위협성 발언을 집중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전체제와 관련해 북한이 위협을 실천에 옮긴 전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북한측이 판문점 군사대표부 이름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북측 관리하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등을 폐쇄하겠다고 말한뒤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당시 북한측은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무력증강과 군사도발을 묵인한다면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힌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위협하는 최종조치를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군사도발외에도 정전협정체제를 상징하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방법같은 것이다. 정전위원회 회의실폐쇄나 명칭변경에서 최악의 경우 판문점폐쇄조치나 비무장지대의 불인정선언및 행동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불길하지만 정부로서는 말뿐이 아닌 군사적 행동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신문 1996. 3. 23

美·中간극 좁히는 孔魯明외교

孔魯明외무장관이 이번에 중국과 미국을 연쇄방문, 외교활동을 펴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역할면에서 다같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시기적으로 대만문제로 중국이 매우 민감한 때에 있고 이 문제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는 어려운 국면이다。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한다는 정부입장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양안(兩岸)관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우리의 「희망」도 아울러 전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이 빚어낸 한국외교의 딜레마다。 만일 사태가 악화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중 택일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외교에 적지않은 시련이 될 것이다。 孔장관은 이러한 때에 두 나라간의 오해와 마찰의 간격을 좁히는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적절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국외교의 적극적 역할이란 점에서 긍정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늘 한국외교의 한계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쳐놓고 그속에 안주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孔장관은 20일 錢其琛외교부장과의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나 22일 江澤民국가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江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통일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통일과정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생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개방에도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孔魯明외무의 이번 방문외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겨레신문 1996. 3. 28

'남북대화' 적극 제의해야

남북한 사이의 오랜 대화단절 상태는,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4월쯤으로 예견되는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협상창구를 통해 접촉통로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과 미국은 지금 한국전 당시의 미군유해 송환문제와 북한 미사일의 중동지역 수출을 제한하는 문제를 다룰 협상 자리를 만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협상이 차질없이 열리는 것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장관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들의 협상과 남북대화를 연계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등 남한을 제쳐두는 대미 접촉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을 두고 정부의 대응책이란 미국쪽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남북대화를 연계토록 요구하는 정책이었다. 미국은 한-미 관계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이 구차스러워 보이는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매우 곤혹스러워 해왔다. 북한은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대미 의존정책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신통한 성금도 없었던 이 정책은 물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해도 크게 어긋난 지적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북-미 사이의 새로운 협상에 즈음하여 이제까지 고집스레 해오던 요구를 이번만은 내놓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는 반드시 그 협상이 남북대화와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극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남북대화에 나서려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총선을 의식해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리게 될 북-미 협상에서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남북대화의 길을 탐색해 올 것이라는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민족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남북대화의 문을 열고,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에게 겨레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찾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길일 것이다. 정부는 남북대화의 연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북한 당국도 미국이 남한을 제쳐두고 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중앙일보 1996. 3. 29

사 설

北韓, 僞弊·마약 본거지인가

북한이 가장 악질적 국제범죄인 마약과 위조화폐의 공급통로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마약과 위조화폐의 국제적인 유통에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의 북한외교관들이 위조달러를 대사관차로 태국에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발목을 잡혀버렸다. 게다가 북한의 무역회사 사장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다 귀순한 최세웅씨는 자신이 직접 북한 인민무력부로부터 마약밀매종용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궁여지책(窮餘之策)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라는 조직을 이런 국제범죄에 이용해야 하는 북한이 딱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94년 여름 북한이 위조화폐와 마약의 공급루트로 노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서도 똑같은 짓을 계속해 왔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조달러 관련은 94년 7월 마카오에서 북한상사가 은행에 다량 입금시킨데서 드러났다.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할 만큼 정교한 위조화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북한 사회안전부요원들이 러시아에서 마약을 밀매하다 붙잡혀 러시아의 대통령과 총리가 수사를 지시할 정도의 대규모 마약사건이 터졌다. 수사당국은 북한의 마약밀매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당시 러시아 언론은 전하고 있다.

위조화폐나 마약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낙인찍혀 철저하게 응징하는 범죄다. 그런 범죄인줄 알면서도 북한이 계속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단 몇푼의 외화라도 벌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파렴치행위는 위조화폐와 마약뿐이 아니다. 외교관들의 담배·시계같이 좀스러운 밀수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훨씬 넘는다. 답답한 것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좋을 남북한 협력의 길을 북한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세계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남한뿐이란 사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중앙일보 1996. 3. 30

사 설

北·美 장성급 회담?

미국정부가 북한과 판문점(板門店)에서 장성급 회담통로를 만들려고 우리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이 그런 통로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는 눈치를 보인 것은 지난 1년 가까이 몇차례 되지만 그 때마다 우리측의 반대로 잠잠해지곤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측이 북·미(北·美)간의 판문점 장성급접촉의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를 설득하다 못해 압박하는 인상까지 주는 모양이다. 지난해 주한(駐韓)유엔군사령관의 이름으로 우리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하다가 최근에는 미 국방부 고위관리까지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판문점에서 북한측과 군사문제를 다루는 통로가 마련되기까지는 미국측의 북·미 군사접촉의 필요성 제기는 더 잦아지고, 강도도 차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 주장으로는 지난해 미국측 제의로 북·미간에 영관급장교가 실무협의를 10차례나 갖고 장성급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군사대화통로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고충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돌발사태가 있을 경우 자칫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화통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추진하려는 북한과의 대화통로는 북한이 획책하고 있는 정전(停戰)협정의 무력화(無力化)에 사실상 동조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인 우리를 빼돌린채 우리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안보문제를 흥정하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없이 끌고 갈 수는 없는 형편이다. 보다 현실적인 타개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런 방안중 하나로 정전위원회의 유엔측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으로 환원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한 일이다. 이 문제로 한·미간에 갈등을 빚는 인상없이 긴밀한 협의로 해결하기 바란다.

▽ 한겨레신문 1996. 3. 30

'쌀회담'을 활용해야

북한이 아마도 쌀 지원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회담을 열자는 제의를 해 왔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이미 답신까지 보냈음이 통일원의 뒤늦은 발표로 알려졌다. 북한은 베이징 쌀회담에 대표로 나왔던 전금철 이름으로 역시 그 회담의 남쪽 대표였던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앞으로 팩스를 보내 이런 제안을 해왔다고 한다. 이 장관은 재정경제원차관이었을 때 쌀회담에 대표로 나갔지만, 지금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를 다룰 회담에 대표로 나갈 처지가 못된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북한이 이 장관 앞으로 연락을 보낸 것은 다른 통로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베이징 쌀회담을 정부 차원의 공식회담이 아닌 것으로 몰고가던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게 실상에 더 가까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6개월 전 베이징회담에서 제시해 회담을 결렬로 가게 했던 세가지 조건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회담에 임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 세가지 조건이란 회담을 남의 나라가 아닌 한반도 안에서 할 것과 회담을 당국자가 공식통로로 형식을 갖춰 제의하고, 이에 앞서 대남 비방행위를 그만둘 것 등이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태도 또한 여전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베이징회담 이후 북한은 한때 어려운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외적인 지원을 더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유는 원조를 받아보았자 그 규모가 적어 나라의 체면만 손상될 뿐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체판단 때문일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그러나 대외개방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부담'은 제쳐두고 북-미 관계 진전 및 국제적 식량지원이라는 '열매'를 얻겠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에 이른 북한이 선택을 위한 '계산'에 몰두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얼마전 국제기구에 다시 구호를 요청한 데 이어 남쪽에 연락을 보낸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회담 재개 조건들은 모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15만톤의 쌀을 보내고도 국민들한테서 질책만 받았던 정부로서는 이런 선택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듯 싶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남북문제를 일시적인 국민감정이나 눈앞의 선거 따위에 주는 영향을 기준으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다. 무엇이 통일에 다가가는 길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미 내건 조건들에 반드시 연연할 이유는 없는 게 아닐까.

▽ 조선일보 1996. 3. 30

社 說

北은 좀더 솔직해야

남북대화는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지난해 있었던 「北京(베이징) 쌀회담식 대화」를 요청했고, 우리가 「한반도내에서의 탈북자 대화」 방법을 逆提議(역제의)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쌀밥은 베이징 회담을 끝내면서 그것을 훗날의 과제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때맞춰 孔魯明(공노명)외무장관은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4월 총선 이후 對北(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도 시선을 끈다.

그러나 이제 남북대화를 이루려면 北이 솔직하게 나와야 한다. 제3국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만나 쌀이나 얻어가려는 식은 진정한 대화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이쪽을 이용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우리가 작년에 북한의 수해 실상과 金澤哲(전금철)의 자격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그 많은 쌀을 지원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동포애가 남북간의 진정한 대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北의 자세에서 대화다운 대화를 하려는 성의는 보이지 않는다.

북은 우리가 작년 지방선거에 앞서 쌀을 급하게 지원한 일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총선에 임박하여 대화를 제의하면 우리가 응할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對北 쌀지원이 오히려 큰 악재가 되어 여당이 대패한 것으로 일반은 알고 있다. 총선을 앞둔 이번에도 어느 정당, 어느 후보도 대북 쌀지원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北은 바로 알아야 한다.

북이 진솔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한다면 우리 내부에서는 정말 쌀을 사서라도 주려는 동포애가 발양될 수도 있다. 우리의 국민정서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고 싶지만 동시에 북에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두고보자는 것이다. 북이 수해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대화의 자세로 나온다면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는 폭 넓게 형성될 것이다.

북은 식량난, 경제난을 시인할 경우 金正日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된다고 우려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정당하게 처신하고 대접받고 싶은 것이다. 우리와 미국 등 관련국들은 모두 북의 연착륙을 바라고 있다. 북은 남북 당국자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내부 일각에서는 천진한 생각에서, 혹은 위선적인 의도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다수 국민 정서는 그와 반대라는 점도 알기 바란다.

▽ 중앙일보 1996. 3. 31

사 설

짧지만 중요한 클린턴 訪韓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6일 방한(訪韓), 제주(濟州)에서 갖게 될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해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4월 총선뒤 한·미(韓·美) 모두 대북(對北)접촉과 교섭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조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부쩍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대해 한·미간의 협조체제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도 작지 않다.

우연이긴 하지만 4월들어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일들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총선이 끝난뒤 대북정책에 융통성을 보여 남북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태세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접촉이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사일협상을 비롯해 6·25때의 미군유해 송환교섭 등 북한과 여러 경로를 통한 접촉을 앞두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완화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판문점(板門店)에서는 북·미(北·美)간의 군사접촉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북한의 동향도 갈수록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한다.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에 앞서 잠정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된 최종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29일에는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이름으로 『문제는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다』란 위협적 내용을 방송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달동안 한·미간의 협조체제가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틈새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을 줬다. 그런 현상이 일시적인 견해의 불일치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혹 상대방에 대한 오해로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뜻깊은 일이다. 북한정책을 정상끼리 조율, 협조체제를 다지고 동맹관계의 확고함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 국민일보 1996. 4. 3

社 說

북한동포에 사랑의 손길을

부활절을 맞은 한국교회가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위해 모금운동에 발벗고 나선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30개 개신교단 연합체인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모금운동은 전체 기독교계가 뜻을 같이하고 동참함으로써 동포애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들어 모금운동이 시작되면서 연합예배위원회 등에는 사랑의 손길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전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보내는가 하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저금통을 털어 들고 오기도 했다. 특히 전국의 교회는 성금요일인 5일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한끼씩 절약한 금식헌금을 모으게 된다. 이렇게 이달말까지 모아지는 헌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탈북자들과 국내외 매스컴이 연일 전하는 것처럼 북한의 식량난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수년째 계속된 흉작과 농업생산성 하락으로 수확의 절대량이 부족한데다 지난해의 극심한 수해까지 겹쳐 최악의 춘궁기를 맞았다. 하루 두끼 강냉이밥으로 연명하기조차 어렵다는 북한동포들의 참상은 짐작이 가고도 남으며 이대로 올봄을 넘기기 어렵다는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딱한 처지를 이대로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형편이 나은 우리가 나서서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한 핏줄의 도리요 책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분단장벽은 굶주리는 북녘 친척에게 한줌의 쌀을 보내는 길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차례 식량원조가 있은 뒤 남북관계는 오히려 경색되고 일체의 대화마저 단절되고 있음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북한동포 돕기운동에 나선 한국교회의 결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북한동포들의 고난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독교 최대의 축제일인 이번 부활절은 분단후 처음으로 남북한 교회가 공동 기도문과 설교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각별하다. 「부활의 기쁨을 북한동포와 함께」라는 표어대로 북한동포들이 주린배를 채우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의 교회와 성도는 물론 뜻있는 인사들이 모금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국민일보 1996. 4. 2

한국배제된 미사일協商

북한 미사일의 對중동 수출문제에 관한 北·美협상이 오는 19·20일 이틀간 베를린에서 열린다는 보도다. 북한 미사일 수출규제는 제네바 核합의에서 北·美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문제다. 따라서 北·美 미사일협상은 제네바 核합의의 실천을 위한 후속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야 막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우리의 안보 이해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한국을 배제한채 논의한다는 데 있다. 제네바 核합의 때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만 해야 했다. 또다시 미사일 협상에서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미사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韓·美 양국간에 이견이 있을리 없다.

그러나 협상방법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다. 한국이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한국을 배제한 채 미사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한국배제 책동」에 미국이 놀아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협상의 내용에서도 그렇다. 제네바 核합의 때도 우리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만약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와 미래의 투명성 보장에 역점을 두었고 사실 그런 선에서 양보했다. 앞으로 열릴 미사일 협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 같다.

현재 북한이 막강한 미사일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은 소위 韓·美 미사일 각서라는 것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을 감축 내지 폐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지 북한 미사일의 對중동 수출규제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 핵문제 해결에서 그랬듯이 미사일문제 있어서도 오로지 미국은 그들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그것이 오늘의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두고 보자는 식이다.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측불허의 북한정세와 대만사태에 따른 中·臺·美·中의 긴장관계, 그리고 美·日간의 새로운 군사협력강화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마땅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 독자적인 안보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겨레신문 1996. 4. 5

사 설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북한은 어제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무장지대 남쪽지역이 완충지대로서의 고유의무를 완전히 상실하고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변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북한의 이러한 선언은 갑작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인민무력부 김광진 부부장 및 손성필 러시아 주재 대사의 위협적인 발언에 이어 준비된 조처들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에는 전쟁전야에서나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응당한 자위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번 선언은 실현 방안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북한쪽 인원 및 차량에 붙이게 되어 있는 식별표시를 않겠다는 정도여서 당장 안보상의 결정적인 위협요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선언이 북한이 마련한 단계적 조처의 첫번째 것일지도 모르며,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후속조처들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다분히 도발적인 북한의 이번 선언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남쪽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그 비현실성 때문에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일찍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분명히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법하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실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남쪽의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만일 한국군이나 미군이 지적받을 만한 위반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마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국 96' 훈련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약속하고도 이를 대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훈련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련은 휴전선과는 아무 관련도 찾을 수 없는 남한강 주변에서 실시되고 있다. 북한은 냉정을 찾고, 불필요하게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조선일보 1996. 4. 3

「종합 범죄단체」 北

北북은 「종합 범죄단체인가? 여객기 요도호를 납치해간 테러범을 위조달러 제작·유통에 종사케 하고, 위조달러로 담배를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당함으로써 北은 전세계를 상대로 「국가주도의 파렴치 범죄를 고루 자행하는 조직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질서가 아무리 잘 잡혀 있는 나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가 파렴치한 범죄를 직접 주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권이 마약 밀거래에 개입했다 해서 미국에 당한 일이 있지만, 북한 정권처럼 위폐, 마약, 밀수, 테러에 종합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적어도 현대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제적인 범죄에 개입하는 집단이라면, 북한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 조직들은 또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광신적인 사이비 종교집단과도 같은 북한으로서는 우상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밖에서 北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도 北은 둔감하게도 범죄에 더욱 재미를 붙여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제 위조달러 사건에 요도호 납치범이 개입해 있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피해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이 사건 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사건 무대인 동남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서도 떳떳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벌일 때 테러국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北은 유엔에서 다시 식량을 지원받고, 미·일과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폐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 첩단 정보 시스템으로 위폐범 가운데 「김일수」라는 북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임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뺌만하려 들면 北에는 위증의 혐의만 추가될 것이다。

▽ 동아일보 1996. 4. 7

社 說

북한의 전쟁협박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은 물론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외적으로 한반도전쟁이 시간문제라고 위협한데 이어 4일 전격적으로 군사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및 유지 의무」의 포기를 선언하고 군사도발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5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군사정전협정상 반입이 금지돼 있는 판문점내 북한측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한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가 철수하는 등 무력시위를 감행, 휴전선 일대의 긴장감을 부채질했다. 북한의 이같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즉각 긴급북가 안전보장회의를 소집, 대(對)北경계태세를 한 단계 높여 만약의 무력도발에 대비하고 미국 등과의 공동보조를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북한이 전쟁위협을 일삼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간의 긴장분위기를 조성, 체제내부의 동요를 막아보겠다는 탄압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식량난까지 겹쳐 사회통제가 어려울만큼 주민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한국을 배제시키면서 그들이 지난 91년부터 추진해 온 北美간 평화협정 체결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내에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면 미국이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 북-미평화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의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 남한 내부를 교란해 보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DMZ불인정 선언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 이외 받을 것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이를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군사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협정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체결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원칙 고수는 불가피하다. 협정당사자인 유엔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 모두가 북한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군사정전체제의 유지를 권고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또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무력시위나 후방침투, 서해5도 공격 가능성 등 앞으로 예견되는 북한의 그 어떤 무력도발도 원천적으로 봉쇄키 위해 물샐틈없이 완벽한 경계태세를 갖추기 바란다.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론이 분열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중앙일보 1996. 4. 8

사 설

北, 협박으로 얻을 것 없다

북한이 연이틀째 판문점(板門店)공동경비구역안에 무장병력을 투입,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의 눈에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마치 폭탄을 들고 요구를 내세우는 테러리스트로 비쳐질 것이다. 지금껏 북한의 행태와 최근 달러 위조사건등이 맞물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나쁜 인상은 씻기 어렵게 됐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적 행동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만저만한 오산(誤算)이 아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건 테러리스트가 협박한다고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없다. 테러는 응징의 대상일 뿐이다.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도발행동을 통해 벼랑끝 수법을 쓰면 미국이 마지못해서라도 북한과의 군사대화 통로개설 요구에 응하고 평화협정 교섭에도 나서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또 「불바다 운운」같은 협박을 하면 우리가 온갖 비방중상을 감수하면서까지 겁에 질려 유화책으로 나올 것으로 계산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북한에 대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던 움직임마저 움츠러들게 할 뿐이다.

군사적 도발행위 동기중에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과 유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망상이 아닐 수 없다. 핵 협상을 통해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집단」으로 여겨왔던 북한에 대한 경계와 불신만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북한이 전쟁분위기를 만들어 내부체제 강화에 이용하려 했다면 당장은 몰라도 결국은 체제불안을 가중(加重)시키게 될 뿐이다. 우선 경제회생을 위해 그토록 노력해온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어느 기업이건 신뢰가 없고 불안정한 북한에 투자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체제불안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다. 군사도발의 경우 우리에게 단호하게 응징할 능력과 결의가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社說

安保의 소리 전달할 때

신한국당의 연말 3일 책임당원 총궐기대회 때 대통령 후보 경선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출되고 그 여파로 대회 자체의 성격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선 문제는 이미 지난 달 중순 이후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고 그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대회 이전에 매듭지을 것을 공언한 바 있었다. 그러나 대회 이틀 전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대회 당일 그 여파가 그대로 표출되고 말았다. 이는 당 지도부의 사전 조정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

▽ 경향신문 1996. 4. 11

安保理에 오른 북한의 도박

정전협정을 무시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무력시위가 마침내 국제심판대에 올랐다。유엔 안보리가 엊그제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제출한 이 안건을 긴급토의 의제로 채택, 본격논의에 들어간 것이다。동족간의 불미스런 일을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기구의 논의에 부친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못되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안보리는 DMZ안에서 북한이 행한 정전협정 위반사항들을 논의한 뒤 결의문 채택, 의장성명, 의장서한, 언론발표문중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문이 채택될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발표문등의 조치가 취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그러나 그중 어느 조치가 취해지든 그 강도에 관계없이 북한의 도전적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발표문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도전적 행위를 계속할 경우 안보리의 조치는 점차 강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유엔헌장 제39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침략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 안보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결국 북한이 안보리의 권고를 어기고 정전협정 위반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이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냉정하게 되새기지 않으면 안된다。안보리상정 말고도 여러가지 다른 압력들이 지금 북한을 내리누르고 있음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러시아의 외무차관 일행이 지금 평양에 와서 그 문제와 관련, 북한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중국외교부도 북의 정전협정 준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일본은 북·일수교회담에의 악영향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국도 미사일협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한반도위기 중재를 위해 남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것은 북한에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북한은 무모한 도박으로는 절대로 한반도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동아일보 1996. 4. 11

러시아의 북한 설득

과거 냉전체제 당시 북한의 맹방이었던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상태 진정에 나섰다。알렉산데르 파노프 러시아외무차관은 10일 평양을 방문,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정전체제 파기 선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무력시위로 빚어진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키 위한 외교노력을 시작했다。이와 함께 러시아는 비탈리 이그나텐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무역대표단도 평양에 파견,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등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고위당국자들의 이번 평양방문 목적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우선 구소련 붕괴후 거리가 멀어진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이번 방문이 큰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반도 긴장사태를 긴급 의제로 상정, 본격 토의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은 관심을 끈다。

러시아는 파노프차관의 평양파견에 앞서 9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와 관련,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했다。이 성명은 또 새 평화협정은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이해당사국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따라서 평양을 방문중인 파노프차관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러시아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위험스런 전진도발 행위의 자제를 촉구할 것이 확실하다。특히 파노프차관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난해 9월 개정된 朝·러우호동맹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이해당사국 국제회의는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방식이다。이 제안은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동조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다。유엔은 물론 세계에서 유일한 맹방인 중국까지도 이미 이번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와 관련해 원상회복과 함께 새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간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그러나 원조능력이 없는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북한 태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 조선일보 1996. 4. 12

北 도발은 실패했다

專職(전직) 체제를 깨뜨린 北(북)의 도발은 실패했다. 북이 「전면에 내걸었던 요구」는 하나도 관철되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위기를 극복시키려 한 무모한 몸부림이었지만 體(체)면(면) 전쟁직전 북한은 국민들의 熱狂(열광) 속에 휩싸였다. 2년전 북핵문제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수 없었던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北은 아직도 총칼을 휘두르고 도발하면 우리 정부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 그것은 오늘날 정녕코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날 정녕코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날 정녕코 모르지만,

▽ 조선일보 1996. 4. 17

社 說

北、4者회담 응해야

韓-美(한-미) 양국은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者(자)회담을 제의했다。北이 현재 4자회담 제의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하지만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회담을 거부하고 있고、對北(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도 하나로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북은 핵의혹 전략으로 경수로를 얻는데 성공한 일이 있어、판문점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 미-북간 평화협정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모르지만、한-미 양국 정책당국자들의 견해나 여론에 비추어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북의 판문점 무력시위가 있은 후에는 북의 게임에 더이상 휘말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北은 이제 자세를 고쳐 4자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이 우선 모여서 해결의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북은 남북회담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과 별도 협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이상、북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으로도 4자회담이 가장 합리적이다。4자회담은 북한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우리와 미국이 북한의 軟着陸(연착륙)을 바라고 있고、중국이 북한편에 서준다면 北의 안보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고 북이 미국과 중국의 충고를 모두 거부하면서 고립적인 강경 자세만을 취한다면、그것은 북에 엄청난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지 않은가。지금도 식량난 유류난 등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북이 대남도발을 위해 군사력 증강에 더욱 힘쓴다면 스스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한차례 기습공격을 감행할수 있을뿐인 북의 군사력에 남한이 붕괴될 것도 아니니 말이다。

4자회담은 일단 시작되면 다음에는 러시아와 일본을 추가하는 「4+2」회담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또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제안하는대로 유엔을 포함하는 7자회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우리는 1차단계에서 러시아가 빠짐으로써 행여 사태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조속히 러시아의 역할도 증대되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이렇게 되면 북으로서도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을 얻는 길이 열린다。북이 이 4자회담마저 끝내 거부한다면 국제적으로 북한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 경향신문 1996. 4. 17

社 說

4者회담은 마지막 카드다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이 어제 제주도에서 공동제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남북한과 미국·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4자회담은 한국이 종래의 입장에서 크게 양보한 제안이다。지금까지 한국은 「2+2방식」, 즉 남북한이 회담을 주도하고 미·중이 그것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4자회담 제의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일본은 회담제의가 나온 뒤 즉각 전폭지지의 뜻을 보내왔다。중국의 반응도 아직 공식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이라고 한다。지난 3월 로드 미 국무차관보가 하원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중국측과 협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왔기 때문이다。러시아만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이른바 「8자회담」을 제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4자회담은 북한측 입장에서 본다면 형식상 북·미 단독협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른다。그러나 북·미 단독협상은 북한외에는 어느 나라도 지지하지 않는다。한국전 당시 북한의 후견인이었던 중국마저도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와 대미 평화협상 추진을 반대한 바 있다。그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제주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남한을 제치고 북한과 한반도평화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북한은 한반도문제 협상을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4자회담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4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적잖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눈치다。객관적인 상황조건이 그런데다가 대북 제의에 포함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와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 등의 표현에 우리측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시사했다。북한이 제도적인 평화체제 속으로 나오는 노력을 보일 경우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각종 지원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평화문제와 일반적 북·미문제를 앞으로는 분리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이다。4자회담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중의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제의인 반면 북·미문제 분리처리는 남북관계 진척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합의이기 때문이다。제주도 정상회담의 결실이 후자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 조선일보 1996. 4. 19

社說

「한국몽」의 허와 실

미국과 일본의 「북(北)-한국」접촉 이후 한국은 미-일 양국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두 나라가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이 두 나라가 한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한국이 이들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북(北)-한국」접촉을 주선하고 있다. 「북(北)-한국」접촉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 동아일보 1996. 4. 21

社 說

북한의 해상도발

북한이 판문점에 이어 이번에는 해상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북한 경비정 2척이 지난 19일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을 넘어 한시간반동안 무력시위를 벌이다 우리 해군이 출동하자 북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이다. 군사적 충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번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비무장지대(DMZ) 불인정 선언」 연장선상에서의 해상도발이라는 점에서 대(對)북 경계태세의 확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현재 한반도 주변은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공동제의 이후 미·일, 미·러, 중·러 정상간 회담과 북·미 베를린 미사일회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상이 본격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가 여러 수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4자회담 수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다 느닷없이 해상무력시위를 감행,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조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한의 해상도발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성격상으로도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이번 북한의 해상도발은 남한의 방위태세와 대응 능력을 탐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북한 경비정이 지난 53년 휴전과 동시에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철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술책인 동시에 무력충돌까지 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해상도발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가속화하고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 자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속셈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해상도발의 저의와 목적이 어디에 있든 한반도 문제를 대화가 아닌 무력 도발로 해결을 시도해 보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에 응하는 것만이 북·미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는 길임을 인식, 무력시위를 그만두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국군은 한시도 대북 경계 태세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북한의 판문점 무력 시위후 서해 5도를 비롯한 해상에서의 무력시위 예상은 현실로 드러났다. 특히 지금은 조기잡이 철로 어선들이 연평도부근 북방한계선 가까운 해상에까지 출어하기 때문에 해군은 어선보호에 만전(萬全)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신문 1996. 4. 22

北-美접촉에 대한 우려

북한과 미국간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20일부터 베를린에서는 북·미간 미사일협상이 시작됐으며 다음주중엔 뉴욕에서 미군유해송환을 위한 2차회담이 열리게 된다. 또 양국은 내달중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기 위해 활발한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미간 고위급회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양국수교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접촉이란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끈다. 물론 이런 접촉들은 본래 예정돼있었던 것들이고 지난번 제주에서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와 북·미간 접촉은 분리키로」양해한바 있어 외견상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이 4자회담제의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간 정치접촉이 본래의 목적을 일탈해 자칫하면 4자회담 예비접촉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미고위급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꼭 그런다는 확증도 없다. 그러나 양측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 서로의 속마음을 떠볼 수도 있고 미국은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일이 이렇게 되면 사안의 본말이 뒤바뀌는 사태를 빚게 될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은 4자회담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은 지원하며 사후보장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확인해두었다. 세칭 2+2가 회담성격의 본령이다. 그런데 북·미접촉이 4자회담을 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라도 4자회담문제를 본격논의하게 되는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북·미가 어떤 형태로든 4자회담을 사전협의하는 것은 북한측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북·미간 단독접촉의 변형에 불과하고 그렇게되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은 또 깨지게 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북·미간 접촉이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한반도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사태를 경계하면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둔다.

▽ 문화일보 1996. 4. 22

사 설

中國이 환영한 對北제재 지지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4자회담에 대한 中國정부의 明示的 입장이 밝혀져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江澤民중국국가주석이 金泳三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4자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 회담에 참여할 것이 중국도 同參하겠다」는 견해를 천명한 것이다. 북한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

江주석은 이 친서에서 남북한이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직접 회담한 다음 중국과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국을 보증하기 위한 회담에 참석하는 형식을 지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먼저는 한반도 휴전협정을 지켜야 하는 북한의 명분을 존중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이 남북한이 이룩해야 한다는 중국의 對北관계 시각도 전해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韓·美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기도 한다. 한국은 4월 16일 제주도 회담을 통해 4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

중국이 이번 견해를 지지하는 韓·美의 생각은 한국과 평화협정 추구를 주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그것 보증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北京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중국적 평화체제가 성립될 때까지 현정전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해 왔다. 이번 중국정부의 입장은 94년 李鵬총리의 訪韓과 95년 江주석 訪韓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중국은 또한 北·美대화를 통해서만 새로운 평화체제를 세우려는 북한정부의 기도가 미흡하다고 「3非원칙」을 전개해 온 것이다 알려져 있다.

이제 공은 북한정부에로 넘어갔다. 북한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4자회담을 수락해야 한다. 43년간 지속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대한민국은 어떤 시도도 중단 중단해야 한다. 북한정부는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밝혀진 것을 그들의 4자회담 참여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두 달 전 이 자리에서 「북한정부의 4자회담 참여」를 촉구한 것이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 동아일보 1996. 4. 24

社 說

북한의 평화 전략가

북한의 새로운 대남 평화전략이 이제 4자회담 참여 촉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주체적 자세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한국과 대화하는 것은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전략은 이른바 남북-북미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전략이 남북-북미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미국과 대화하는 것과 연계

▽ 세계일보 1996. 4. 24

社 說

지금은 北側반응 지켜볼 때

韓-美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제의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여러 채널을 통한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반응이 없는 가운데 그같은 접촉이 이뤄짐에 따라서 온갖 억측과 우려를 낳고 있다.

미-북 현안과 남북대화의 분리방침에 따라 남북관계는 뒷전에 밀려나고 미-북관계만 과속 질주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북이 우리 등너머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보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대두되고 있다. 제네바 核(핵)협상의 기억 때문에 빚어지는 과민한 피해의식인 것 같다.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이 濟州(제주)에서 밝힌 공동성명을 면밀히 새겨보면 적어도 그런 지나친 피해의식은 버려도 좋을 것 같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지 않은가. 이는 적어도 국가 元帥(원수)간의 약속이다. 클린턴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적 신뢰가 걸린 그같은 公約(공약)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린는 믿는다.

미-북접근이 고속으로 이뤄져 미국의 추가적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지고 미국이나 일본기업이 북한 시장을 先占(선점)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조바심도 일고 있다. 따라서 대북관계에서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4자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대북 經協(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기회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주도적 유화론이다.

한마디로 성급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초조하거나 안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제의한 4자회담에 국민적 지지를 실어 무게를 더해줄 때이다. 4자회담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다른 代案(대안)이 없다. 그것은 국제사회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아가고 있지 않는가. 북한이 결국은 호응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연하고 끈기있게 긍정적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을 때 짜여질 협상테이블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남북의 장래를 위한 경협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의 접근을 통해 모든걸 얻을 수 있다는 미망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올바른 현실인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기다려야 한다. 북한은 아직은 4자회담 제의에 실린 뜻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때마침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시사한 金正男(김정우)북한대외경제협력위 부위원장의 워싱턴 발언은 북의 변화되어가는 인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일단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 한겨레신문 1996. 4. 25

사 설

미국의 대북접촉을 보는 눈

미국이 '제주선언'을 어겨가며 북한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이 지난 19일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와 만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접촉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한국에 통보했으므로 의혹의 여지가 없다는 자세이다.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제의하는 의도나 배경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해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했으며, 이는 북한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데 유익하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미국은 제주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북한과 별도의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므로 이번 북-미 접촉을 이 선언의 위반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선언의 이 부분은 문구의 표현만으로 보면 애매한 점이 있다. 미국의 대북협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연계되지 않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면, 또 어떤 대북접촉도 협상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대북접촉은 이 선언의 위반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을 한국의 참여 없이는 논의하거나 체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북-미접촉을 이 선언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선언을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미 미사일협상 등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접촉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기 이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또 4자회담을 내세워 다른 대북접촉을 위험시하거나 기피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긴 눈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국교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대외경제를 담당하는 고위인사가 미국에서 공공연히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에 끼어들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닐 만큼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른바 '주체 경제'를 포기하리라고 성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지만, '자본주의로 통합된 세계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정책 수정이나 보완을 할 가능성은 있다. 4자회담을 제안했다고 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려던 목표가 사라졌을 까닭이 없다면, 우리도 대북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다른 나라의 북한 접촉에 일일이 경계의 눈을 보내자면 이러한 목표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말 것이다.

▽ 한국일보 1996. 4. 27

중·러협력과 韓半島

24일부터 시작된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두번째 중국방문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 이후 숨가쁘게 전개된 극동지역 관계 각국 간의 정상외교가 한바퀴를 돌았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냉전후 유일 초강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에 대해 양대국이 공동의 견제세력으로 손을 잡았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21세기 동아시아지역 안보질서가 미·일·중·러의 다극 체제로 규형을 잡아 나가리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또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 안주해 온 우리 외교가 냉전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신축성을 갖춤으로써 변혁의 시대에 대처해야 할 때임을 실감하게 한다.

러시아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 압력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亞太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모색해 왔다. 시베리아 개발과 무기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매력적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대만문제 인권문제 미·일동맹으로 압박해 오는 미국과 맞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힘을 보태 줄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한 처지다. 21세기 안보동맹을 선언한 미·일 정상회담 직후의 중·러 정상회담은 이런 점에서 서로의 이해가 합치한다. 25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에 현존하는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고 밝힌 것은 이같은 양국의 합치된 이해를 집약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만 중국 외교부장의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한 어떤 제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지만 「4자회담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정리하고 넘어갔다.

러시아는 한반도 4자회담에서 제외된데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을 표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수교한 이후 다방면으로 협력했으나 기대했던 경제협력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고 외교적으로도 소외당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이런 러시아의 섭섭한 감정이 4자회담에 대한 태도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는 평화회담 참여 여부로 금이 가게 내버려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냉전종식후 러시아는 실제로 우리의 對北외교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어 왔다. 어렵게 쌓아 온 양국간의 우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동아시아로 돌아온 러시아의 아쉬움을 이해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중앙일보 1996. 4. 27

사 설

北·美접촉과 衆口難防

최근 미국과 북한의 몇갈래 접촉이 이뤄지면서 양자관계가 우리의 어깨너머로 급속하게 진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런 우려는 특히 4자회담제안 이후 두드러져 정부가 북·미(北·美)접촉이 못미더워 조바심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이러한 조바심은 우선 북·미접촉이 예정에도 없이 마치 봇물이라도 터진듯 느끼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예정됐던 북·미간의 미사일협상과 유해송환협상, 통상적으로 뉴욕에서 이뤄지던 양자간의 접촉 등을 묶어 한꺼번에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접촉외에 북한의 고위당국자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부수적으로 미국 정부관리와 만나는 것도 심상치 않다는 걱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돼 있던 이러한 행사들을 4자회담제안과 연결시켜 미국이 우리와의 약속과는 달리 직접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된 정치적 논의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런 걱정의 근거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이러한 수준의 북·미접촉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좀 성급한 느낌을 준다.

4자회담을 제안해 놓은 우리로서 당장 기대할 일은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물론 미국도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목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접촉한다면 우리로서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또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진다고 따돌림당하는 것은 아니다. 북·미간의 제네바 핵(核)합의에 따라 약속된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순기능도 낮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을 제쳐둔채 최근 북·미접촉을 둘러싸고 과속론(過速論)·우려론·대미(對美)항의론 등이 어지럽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런 현상으로 정부부처간에 제각기 말이 달라 손발이 안맞는 인상을 주는 것도 곤란하다.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내외의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기관간에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적절한 그때 그때의 설명으로 국민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조선일보 1996. 4. 28

社 說

4자회담 거품 期待

4者(자)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나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추측도 지나치며, 이의 본도도 지나친 점을 자괴한다. 北(북)이 4자회담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것은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때 주목할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거기에 들떠 4자회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리느냐가 문제이지 열리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미-북이 4자회담이 아닌 다른 현안으로 접촉하기만 해도 4자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4자회담은 성사될 수도 있다. 北으로서도 이에 응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그럴싸하다. 그러나 北이 4자회담을 거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지금까지 北의 정책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일이 드물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4자회담이라 하여 성사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자회담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가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탈을 극복하는 또 다른 난제에 부닥친다. 또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 갑자기 실제 이상으로 기대를 몰아가면 상대방의 정보모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 남-북관계는 아직 허심탄회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北의 一言一行(일언일행)에 지나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는 결과를 빚는다. 우리는 對北(대북)관계에서 우리의 속을 먼저 드러내 보임으로써 일을 그르친 때가 많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까지 北이 4자회담에 응해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정책-전략을 미리 노출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신중하는 것이 좋다.

우리 정부나 국민은 4자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남-북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처럼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4자회담이 우리가 제의한대로 열린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실을 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정전협정을 남-북간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협정문만 새로 만들어 서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간에 실제로 긴장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입장에서도 남-북관계의 변화 조짐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지켜볼 것은 지켜보고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은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나친 기대부터 앞세우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 중앙일보 1996. 4. 28

사 설

재개되는 對北 經協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남북쌀회담이 결렬된지 7개월만에 민간기업에 의한 대북(對北) 통신·전자투자가 승인돼 남북경협(經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4자회담의 가능성 등 최근 정세의 변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조치임에 틀림없다. 특히 통일원이 승인한 투자금액도 그동안 5백만달러이하로 제한했던 규모를 넘어 합작사업 종류에 따라 정부도 신축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대북경협이 가능하면 정치문제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내에는 남북간에 투자안전보장과 과실송금 등 제반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대북투자 허가권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별 실효가 없음이 입증됐다. 오히려 일관성 없다는 인상만 갖게 했다. 따라서 채산성을 따지고 수익을 걱정하는 일은 기업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는게 우리 견해다. 민간기업에 의한 대북투자는 상호신뢰구축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의 김정우(金正宇) 대외경제위부위원장이 워싱턴회의에서 동남아 등의 자본주의국가와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남북간 교류가 훨씬 상호 이득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동남아시아는 내놓을 수 없다. 여기에 북한의 인력을 결합시키면 수익성 있는 합작사업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경협의 장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질적인 체제를 정치적으로 융합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경협쪽이 훨씬 성과가 클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대북진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되, 해선 안되는 일부만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북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나 과당경쟁을 조정하는등 효율적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소한 변화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기업도 서로 과당경쟁을 해서 모양 사납게 보일 일이 아니라 차분히 경제논리에 입각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세계일보 1996. 4. 30

社 說

지혜와 용기는 對北關係

정부가 4자회담 수석대표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에 머물러 있던 지난 두 달을 이 한 주일 사이에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파견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들이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이 한 주일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파견은 4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종전 정책방향을 바꾸어 4자회담 수석대표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에 머물러 있던 지난 두 달을 이 한 주일 사이에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파견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들이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이 한 주일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파견은 4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종전 정책방향을 바꾸어 4자회담 수석대표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에 머물러 있던 지난 두 달을 이 한 주일 사이에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파견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들이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이 한 주일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파견은 4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종전 정책방향을 바꾸어 4자회담 수석대표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에 머물러 있던 지난 두 달을 이 한 주일 사이에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파견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들이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이 한 주일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파견은 4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 1996. 4. 30

「대북 冷-溫」

이번 파견은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11일 종전에 있었던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4자회담 수석대표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에 머물러 있던 지난 두 달을 이 한 주일 사이에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파견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들이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이 한 주일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파견은 4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파견은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11일 종전에 있었던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4자회담 수석대표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에 머물러 있던 지난 두 달을 이 한 주일 사이에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파견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들이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이 한 주일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파견은 4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세계일보 1996. 2. 6

전문가 칼럼

아침을 열며

위험스런 클린턴의 對北접근

鄭 鎔 碩

〈단국大정경대학장·정치학〉

빌 클린턴 美國대통령이 北韓접근을 일방적으로 서두르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클린턴의 對北접근은 자신의 외교업적 과시와 올 11월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데서 매우 위험스런 불장난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2년 전 클린턴행정부가 서둘러 북한과 제네바核협정을 타결짓는 과정에서부터 북한측에 끌려다닌다는 우려를 금치 못했었다. 당시 미국은 金泳三대통령이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던 「韓國型」경수로의 관철을 깔아뭉갠채 金正日주장대로 끌려갔던 것이다. 그래서 1994년 10월 채택된 美-北韓간의 제네바합의서를 가리켜 "미국은 북한에 끌려다녔고 한국은 북에 끌려다닌 미국에 끌려다닌 협정"이라는 비아냥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은 이 협정에 명시된 북한내의 핵사찰 실시나 남북한대화 추진에는 관심이 없었고, 북한에 대한 重油공급, 북한내 美軍유해 공동조사, 식량지원, 평양과 워싱턴에의 연락대표부설치 등에만 신경을 썼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 유니세프를 통해 22만5천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하였고 지난 2월에는 긴급재난구호기금으로 2백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世界日報 96년 2월5일자 보도에 의하면 클린턴정부는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조치해제, 북한에 대한 소규모무자허용, 대북송금규모확대 등의 제2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태세라고 한다. 클린턴은 올은 4월 한국측의 訪韓요청도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경제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북한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면 同族으로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조치가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빚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면 그같은 대북정책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 더하여 클린턴의 대북접근이 자신의 외교실적 과시와 11월선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클린턴리더십의 도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는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명히 클린턴의 성급한 대북접근은 한반도의 평화정착보다는 그 자신의 치적표출과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클린턴은 60년대 베트남전쟁중 정병을 기피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싸워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의 속성을 몰라 북한에 끌려다니며 대북관계를 자신의 정치목적으로 조종했었다.

그러나 집권후 클린턴의 국내정책은 보수 共和黨지배 국회의 제동에 걸려 걸돌게 되었다. 그러던중 클린턴의 정책은 아이티의 민주정권수립, 쿠바 난민처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화해, 보스니아 인종분규, 美-北핵협정 등에서 성과를 보게 되었다.

여기에 클린턴은 자신의 치적을 국제문제를 통해 드러내기로 하였고 북한이 마지막 대상으로 잡힌듯 싶다.

그는 올 11월선거전까지 지구상 최악의 폐쇄체제 평양에 미국대표부를 설치하거나 평양-워싱턴간의 반반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현시코자 작심하고 덤비는 것 같다.

그렇지만 클린턴은 개인의 치적과시를 위해 뛰어든 대북접근이 金正日의 호전성을 더 한층 고무시켜 남북한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실상 클린턴은 그가 소속한 民主黨 정권들이 지난날 對韓정책을 경솔히 선불렀던 끝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를 분단시켜놓고서는 1949년 주한미군을 성급히 철수시킴으로써 북한공산군의 6·25남침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또 그같은 비극적 교훈도 잊은채 지미 카터대통령은 77년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강행, 한국안보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카터의 철수계획은 미국내의 들끓는 반대여론에 직면, 뒤늦게 포기된 바 있다.

이제 클린턴대통령도 그의 민주당 선임대통령들이 저질렀던 대북정책의 경망스런 실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달 12일 선물을 받은 조지 부시 前 美대통령도 張泰玩재향군인회장과의 요담중 張회장이 클린턴의 성급한 對北접근을 경고한데 대해 1백% 공감한다고 밝힌 대목도 클린턴은 잊어서는 안된다.

클린턴은 일반적인 대북접근강행이 결국 한국인에게는 불안을 안겨주고 미국인에게는 실망만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간과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해 두는 바이다.

▽ 한국일보 1996. 2. 1

한국 論壇

통일독일에서 본 분단한국

崔 鍾 庫

20년만에 다시 독일에 왔다. 물론 그사이 잠시 몇번 다녀갔지만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 학기 장기체류를 허락받게 된 것은 이처럼 오랜만이다. 그만큼 청천하늘의 별처럼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게 살아왔던 것이다.

필자에게 독일은 학위과정을 밟느라고 청춘을 불태운 곳이기도 하여 어리둥절한 것은 없지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우면서도 낯선 느낌을 받는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과거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독일은 그 사이 통일국가가 된데 반해 우리는 아직도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同病相憐의 두 나라중 독일보다 한국이 먼저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장담하던 지난 날의 실언 때문에 독일인에게 속으로 겸연쩍음같은 것이 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히 독일사회도 낯설게 변화한 것들이 적지 않다. 어느 사회나 과거의 고유한 전통보다 국제화, 지구촌시대의 현대적 요소들이 현저해짐은 보편적 현상인 듯 하다. 고풍스런 도시 한 복판에 미국식 맥도널드가게가 파고드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길거리 사람들의 모습도 훨씬 다양해졌고 다소 구질구질해 보인다. 과거의 정갈한 독일 맛이 안 나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 독일학자는 이것을 「느슨해짐」(Verwahrlosung)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와 다른 무엇

그러나 필자는 이런 가시적 현상들을 넘어서 독일사회를 현재 끌고 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통일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여기에 왔다. 앞으로 자료도 모으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야겠지만,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다른 점때문에 「독일은 독일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식의 자기폐쇄적 논리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실 필자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논리를 펴는 학자와 정치인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았다. 이런 논리는 결국 한국이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체념 내지 자기정당화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독일인들도 자기네처럼 서둘러 통일하지 말고 한국은 차근차근 준비하여 통일하라고 충고하는 여유도 보여준다. 그만큼 독일도 통일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통일복구사업을 위해 국민의 세금에서 10%를 더 내는 통일부담금을 계속 실시해야 하느냐 절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고, 前동독총리 에곤 크렌츠에 대한 재판을 비롯한 법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보다 600만명에 이르는 실업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통일의식이 상당히 냉담해져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회적·심리적 통일과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후유증의 문제는 양국가를 통합하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불가피한 부수적 현상일 것이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한국인은 이런 부정적 측면에 집착할 처지가 못된다. 통일후유증을 얘기하다가도 도서관에 들어가보면 한 마디로 그것이 기우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느껴진다. 통일된 90년이후에 나온 통일관계 서적만 해도 수백권임은 물론 학술잡지들이랑 출판물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분량과 질이 좋아졌다. 요즘도 네오나치즘 얘기가 간간이 나오긴 하지만 독일인은 확실히 무섭게 우수한 민족 인 것같다. 대학에서 검소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저것이 이들의 저력이구나 싶어 고개가 숙여진다.

정말 우리도 국내외 여건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잠재력을 통일에로 승화시켜야 할 때이다. 이곳에도 한국신문들이 오기 때문에 국내소식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요즘 국내소식은 통일에는 아랑곳 없고 정치게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되는 집안의 아귀다툼같이 보인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여야 편가르기로 누구를 영입하고 말고 하는 짓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의미가 있으며 통일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치게임만 열중

오늘 아침에도 한 독일교수가 왜 아직도 한국은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여 답하느라고 아침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못난 민족」이라는 표현이 서로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기가 민망스러웠다. 물론 통일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독일통일에서 배울 점은 배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정치적 통합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독일이 웅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면, 한국은 지금부터 아니 벌써부터 국내정치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나가야 했었다.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착실히 배워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 나가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분단조국의 한국인으로 통일독일에 와 있는 필자의 곤혹스런 심정을 솔직히 적어보았다. -프라이부르크(독일)에서 〈서울大교수·법사상사〉

▽ 중앙일보 1996. 2. 7

시 론

對美國觀 성숙해져야

咸在鳳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

지난 며칠사이 한-미(韓-美)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간접적으로나마 대북(對北)쌀지원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는 4월 일본을 방문하는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인 북한과의 제네바협의를 무리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보도의 줄거리다.

그렇다면 한-미관계는 과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미국의 안보정책은 분명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맹목적 동맹관계가 사라진 세계에서 한-미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우리의 외교정책과 무조건 일치할 수 없다. 이것이 탈냉전(脫冷戰)시대의 조건이다. 또 미국의 외교정책 역시 여느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왜곡된다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국제정치의 조건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를 얘기하거나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의 연관성을 논할 생각은 없다. 필자는 오히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북한 동포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고, 전 국민이 열광적으로 대북 쌀 수송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것도 우리돈으로 환산해 고작 15억원어치의 쌀을 제공한다는데 대해 경악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들 역시 북-미 제네바협정의 틀 속에서 미국이 공표해온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우리가 전혀 뜻밖의 호의적 대북한 조치로 보는 것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은 원래 합의된 바도 없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원했어도 미국내의 사정상 성사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갈구하고 그것이 무산되면 그토록 실망하고 미국의 저의를 의심하고 「오만」을 비판하는가.

필자는 한-미관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를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誇大妄想) 아니면 불필요한 비하(卑下)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만 생각해주는 맹방이 아니면 자신의 국익만 생각하는 오만한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대미관(對美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미 외교는 완전히 주체적이고 주도적이지 않으면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의 대미의식의 미숙한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한-미관계를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외교정책이 자국의 국내정치와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만큼 우리의 대북·대미(對美)정책이 국내정치에 의해 얼마나 좌우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대미 정책이 그토록 강경과 온건의 양축을 어지럽게 오가는 것은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여론의 향배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일본과 견줄 만한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에게 북한만도 못한 그런 국가도 아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이며 군사적으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방으로서 미국에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미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 보다 의연하고 냉철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앞서는 과도한 친미(親美) 또는 반미(反美)의 극복이야말로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의 필수조건인 것이다.

▽ 중앙일보 1996. 2. 10

글로벌 포커스

기대 못할 對北共助

金永熙
<국제문제대기자>

남북한 관계는 지금도 제로섬 게임같은 것인가. 그래서 북한에 유리한 것은 반드시 남한에는 불리한가. 북·미(北·美)협상을 놓고 생각해 보자. 제로섬 게임의 이론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에 비상식량원조를 해주고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적(利敵) 아니면 우방으로서의 배신행위와 같다.

이것은 바로 대북공조(對北共助)의 문제다. 94년 핵협상 때나 지난 1월 쌀 지원문제 때 한국과 미국은 공조전선(共助前線) 이상없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北核)에 관한 제네바합의나, 쌀지원에 관한 한·미·일(韓·美·日) 호놀룰루합의는 번번이 한국의 불만과 그 불만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낳았다.

북한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당연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간을 이간시킬 모든 방도를 강구한다. 이런 실정에서 쌍방에 만족스런 정책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과 쌀에 이어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또 대북공조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8~9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 포럼에는 두나라의 고위관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한·미(韓·美)간 현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21세기를 전망하는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비공개여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토론에서 한 발언과 사석(私席)에서 한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에선 한국이 미국을 견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느 미국인은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는 하겠지만 한국측 입장의 「인질」이 되지는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지난해에 북한을 다녀온 어느 전문가도 이 문제에 관한 북한 내부의 갈등이 조정돼 북·미간 합의만 되면 한국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연락사무소는 개설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연락사무소는 북·미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里程標)의 하나가 된다. 북한이 바라는대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한국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북·미간 모든 관계개선 조치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이 주장해온 남북대화의 재개와 진전은 하나의 죽은 문서가 되고 만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북한외교의 큰 업적의 하나로 꼽힐 만하다.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국측의 한 참가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민족주의적 반미(反美)감정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그런 경고에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않았다.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생겨 북한에 관한 정보갈증이 해소되고 북·미 접촉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 반드시 한국에 불리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

미국은 제 갈 길을 간다.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의 4월 총선거가 끝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유연해질 것 같다. 북한의 당장의 붕괴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북한이 당분간 남북대화에 응할 처지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평양 한복판에 성조기가 날리는 것이 오히려 전쟁위험을 막고 장기적으로 북한사회를 정상화하는 방법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이미 중국·러시아와 정식으로 외교관계까지 맺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 거의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를 누린다. 평양에 설치되는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모험을 견제하는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한국에도 긍정적 요소다.

다만 한국은 연락사무소 설치를 양해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접촉의 포기와 연락사무소 이상의 대북관계 확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계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일종의 패키지 흥정이다.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중요시하는 정도로 보아 그 정도의 대가는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 한겨레신문 1996. 2. 12

동북아와 비핵지대화

동남아 국가들이 9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15일 조인한 비핵화조약은 이 조약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에 굴복하느냐는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조약은 "아시아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 비슷한 협정을 동북아시아에서도 체결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중, 동남아 비핵화 반발

이 조약이 규정하는 지역은 10개 조인 국가들의 육상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법조약에서 규정하는 2백해리 경제수역과 남중국해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그들 영토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대륙붕확장지대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해양지대를 포함한다. 이 조약은 조약국들에 대해 비핵지대 안팎에서 "어떠한 수단으로도 핵무기를 개발·제조·취득·배치·수송하거나 핵무기를 실험·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이 조약을 위반하는 것을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핵강국들은 이런 조항들의 준수를 다짐하는 이 조약의 의정서 조인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약을 수정해 핵무장 선박과 잠수함의 통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조약이 이 지역에서의 상호안보공약 이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하고 있다. 각 국가의 경제수역과 대륙붕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것이 해로와 항공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은 진행중이다.

이 조약은 전함과 잠수함의 '순수한 통과', 항공기의 영공 비행과 항구와 공항에의 기착을 허락하고 있지만, 각 조약국들에 각 경우의 통과가 진짜로 '순수한' 것인지 혹은 전투작전과 연관됐는지를 판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조약 주요 주창국인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입장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아메드 자아파르 외무장관은 "만약 우리가 핵강국이 원하는 대로 굴복한다면 이 조약은 한낱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조약을 환영한 〈마이니치신문〉의 사설은 "자체 핵무기 소유를 반대하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비난하며 핵우산의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활발한 비핵지대망 창설 노력"을 촉구했다.

핵우산을 겨냥한 이러한 주장은 일본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주창자들과 일본의 독립적인 핵능력을 은밀하게 추진하는 매파 사이의 논란이 점차 양극화함을 반영한다.

일본과 남북한은 핵과 관련한 두개의 다른 미래, 즉 영속적인 핵무기 경쟁의 길과 동남아시아가 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비핵지대화를 향한 길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는다는 5대국 협정의 체결을 주창해왔다. 남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자신들 영토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

남한은 더이상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않고 미국도 한반도에 공중배치 핵무기를 포함해 어떠한 핵무기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해야만 할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정책을 내세워 미국은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북한은 미국이 직접 선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91년과 92년 남북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포기 조건으로 미국과 남한은 재래식 분쟁의 위험을 줄일 북한의 양보를 주장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91년 협의된 남북군사위원회의 활성화에 동참해야만 하고 비무장지대 양쪽에서 재래식 공격무기의 상호철수 또는 최소한 현저한 축소에 동의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보호 거부해야

5대국 협정과 함께 일본과 남북한은 가모 다케히코 도쿄대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조약을 맺어야 한다. 한반도는 광범위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내가 제안한 다짐을 하게 되면 좀더 광범위한 협상을 위한 단계가 설정될 것이다. 존 에디코크 미국 국방부 전략연구소 전 소장과 일본 외무성 과학원자력 전 과장인 가네코 구마오 도카이대학 교수도 그와 비슷한 중요한 제안들을 했다. 한반도의 38선을 중심으로 반지름 1천2백해리의 지역을 설정해 그 안의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고 앞으로의 모든 배치도 금지하자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가 됐다.

시평

셀리그 해리슨

미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 조선일보 1996. 2. 11

미국은 변하고 있는가

金大中 칼럼

對韓정책 不變강조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익숙해있는 한국인, 특히 보수층에서는 최근 미국의 對韓(대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오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의 기저는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에서 미국이 「독자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데서부터 비롯되어 최근의 對北(대북) 식량지원 문제, 클린턴 대통령의 「발한취소」, 그리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 같다」는 국내 보도등으로 점차 그 파장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만난 미 행정부 관리들은 단호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은 한국 관리와 언론이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否認(부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 차관보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 위원회 오찬연설에서 「미국은 對北문제에서 절대로 한국을 앞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의심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핵협상은 미국의 대외협상에서 전례가 없으리만큼 한국과 일일이 협의를 한 것이며, 2백만 달러의 식량지원은 하와이 회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한국의 동의 아래」 결정한 것인데도 한국측이 반대로 발표하고 한국 언론이 그대로 보도해서 생긴 한국의 「자가발전」이라고 맹박했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北에 쌀을 줄 수 없는 한국의 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다만 北이 전례없이 미국에 정식으로 요청한 만큼 그런 「변화」를 수용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명목상으로 2백만달러 어치(1만t 가량)를 지원하되, 그것도 한국이 PL480에 따라 주는 것을 반대했기에 명목을 「재난지원」으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마치 미국이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클린턴의 발한에 대해서도 미 관리들은 『애당초부터 방한을 약속한 적이 없는데 취소란 무슨 말이냐』고 했다. 한국측 요청은 있었지만 약속한 적이 없고 거듭 재촉이 있어 일정관계로 도저히 갈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 방문은 이미 외교적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따라서 갔으면 좋겠지만 안간다고 해서 한국을 무시했다는 것은 너무 비약된 논리라는 것이다.

對北 유연화는 사실

北을 테러 지원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문제도 미 정부는 누가 「조작」했는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마도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어느 연설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깡패국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을 거명하지 않은 것이 그 발단인 모양인데 그것은 견강부회라는 것이다. 책임있는 미국 관리들의 태도가 이처럼 확고한 만큼 미국이 대북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에서 「다른 보따리를 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 한국 몰래 북한과 어떤 거래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을 보는 미국의 전체적 시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미국측은 핵 협상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기회를 통해 북한을 단순히 흑백논리로 파악하는 자세에서 복합적으로 보는 (complex view) 자세로 이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관리는 북한이 그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행동양식은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요소들을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미국도, 그리고 같은 논리로 한국도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을 지원하자는 배경이 그런 것이고 원자로를 주는 것도 크게는 같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국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은 8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對北접촉에서 「배운 것」이며 지금 미국은 그 이후 한국이 했던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했으면서 미국이 그러는 것은 섭섭하다는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관리도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의 행동양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감지하면서 점작 북한 내부의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애써 외면하는 인상이다. 그들은 지금 북한으로부터 이탈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식량과 경제상태가 아주 어려워지면서 어쩌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즉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오히려 위협스러워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북한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미국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 특히 한국 보수층의 불만이라는 것에는 굳이 답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북한이 단말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붕괴위협 너무집착

한-미 21세기 위원회 회의에서 브레진스키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진단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경제와 통일비용이 주제의 하나로 논의됐을 정도로 북한의 극한적 사정이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클린턴 행정부는 추락의 위험을 얘기하며 연착륙을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을 보는 클린턴 행정부의 시각은 軟(연)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미국을 보는 한국의 시각도 언제나 과거에 머무를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워싱턴=주필〉

時論

미사일 대응 시급

延 河 清

북한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대 설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 한국일보 1996. 2. 16

김정일 전처의 북한탈출 소식이 가져다 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평양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침입해 망명을 요청했다는 이타르 타스통신의 보도가 날아들었다. 비록 탈출 보위부요원의 사망으로 망명시도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잇따른 북한체제 내부의 동요현상에 주변의 사람들은 북한이 금방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전망들을 하고 있다. 정말 북한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일까?

특별기고

金 正 源
〈政博·한국정경연구소장〉

북한은 붕괴하고 있는가

성혜림의 탈출소식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던 지난 월요일 하오 나는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근래에 북한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체제동요 사태와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이었다. 내 답변은 북한이 체제와해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른 시일안에 붕괴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에 인용보도된 「북한의 지도체제가 인민들로부터의 두려움을 계속 누르고 있으며 이는 붕괴를 앞당기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뒤에 이어졌던 전화상에서의 나의 언급은 「그러나 북한은 50년을 지탱해온 견고하고도 비타협적인 체제(Hardshell System)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지연시켜줄 것이다」였던 것이다. 지금 북한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망명사태와 체제동요 현상은 일면 심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은 존속할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판단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그것은 바로 북한체제가 갖는 특수성에 근거한다.

일제로부터의 해방후 우리민족은 새로운 정치체제 창출의 기회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일제 36년의 지배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정치조직과 제도 및 질서를 송두리째 붕괴시켰고, 이는 우리 민족에 새로운 토양, 마치 백지와도 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해방공간에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린 채 각기 다른 체제를 수립, 발전시켜 왔다. 북한은 그 새로운 토양위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견고하고도 굳건한 전제주의적인 독재국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독재는 수십년에 걸쳐 대를 물려가며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극히 일부의 지배계급과 다수의 피지배계급으로 구분지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마치 대물림 종으로 태어나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하인처럼 항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년을 지내온 것이다. 이와 같은 굴종의 경험과 그에 길들여진 의식구조는 경제상태가 최악이 된 상황에서도 북의 체제를 지탱시켜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구조와 더불어 북한체제의 존속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체제의 핵을 이루는 일정한 수의 체제유지계층과 막강한 군대의 존재이다.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 테러국가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계층을 의도적으로 양성한다. 현재 평양을 중심으로 모여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그들이다. 수해와 흉년으로 인하여 북한의 식량상황이 최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주민들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배급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군대에도 적용되어 군부대에 대한 배급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수준의 핵심적인 체제유지계층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력수단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체제는 붕괴되지 않는다.

흔히 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해서는 총, 자금, 조직, 이념의 네가지 정치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데 북한은 이 네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오랫동안의 독재와 군비제일주의가 가져온 폐해, 냉전의 붕괴로 자금과 이념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굳건한 조직과 총이 그것을 지탱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는 일련의 동요현상에 현혹되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우리국가 또한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외무부장관을 역임한 관료의 월북을 경험한 적이 있다. 북한과 유사한 카스트로 지배하의 쿠바와 같은 곳에서도 친딸이 서방으로 망명해 자기 아버지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그 국가가 곧 망할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안의 요소가 있을 때 상황은 오히려 위험해진다. 지금 우리주변을 둘러볼 때 총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이요, 일련의 탈북사태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어느 때 보다도 해이해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다」라는 낙관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쉽게 붕괴하지도 않을 것이며, 위기에 몰린 북한이 어떤 도박을 감행할 지 결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휴전상태에 있으며, 안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땅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것들을 모두 허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 각자의 안보의식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들은 장기적 전망에서의 총체적인 전략수립에 더욱 힘써야 한다. 북한은 결코 쉽사리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 서울신문 1996. 2. 15

전문가 긴급 진단

金日이 기른 20代의 반란

「세뇌사회」 거부 국민적 불평·불만 표면화

金學俊
〈단국대 이사장〉

북한에서 놀라운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 金正日의 전통거녀로 알려진 成蕙琳이 서방세계로 탈출한 일만해도 매우 충격적인데 마침내 평양 시내 한복관에서 북한 보안요원이 외국공관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이며 망명을 요청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북한이 고도로 통제된 전체주의적 억압체제의 사회임을 고려할 때 「혁명적」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자. 평양과 모스크바로부터 러시아의 관영통신 이타르 타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장한 노동당 보안요원 1명이 정치망명을 요구하며 14일 이른 아침에 평양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 침입해 북한 경비병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여러명을 사살했다. 그가 러시아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러시아 직원들이 곁에 있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몇몇 북한 군인들이 그와 협상하기 위해 러시아 무역대표부로 들어간 것으로 이 통신은 보도했다.

이 보도에 접하면서 우선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일의 주역이 20대 젊은이라는 사실이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는 채 철저하게 「세뇌되며 자랐기에 체제에 대해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수용적이라는 분석이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번의 대사건은 그러한 분석이 피상적 관찰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특히 김정일은 뼈아프게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는 金日成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목된 1973년 이후 일관되게 청년 조직들을 직접 관장하면서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왔는데 바로 그 청년층 가운데서도 핵심부인 20대에서 「반란」의 깃발이 오른 것이다.

평양의 중심가에서 일이 터졌다는 것도 뜻이 깊다. 「북한은 국가가 여성의 처녀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라는 호주국립대학의 국가이다」라는 호주국립대학교의 개번 매코맥 교수의 지적 그대로 북한은 국가의 국민 감시 능력이 뛰어난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북한에서 외국 공관들이 집중돼 있는 평양의 중심가가 「망명 드라마」의 무대로 등장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민적 저항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억압 체제의 쇠그물이 중심부에서 찢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종합해 말한다면, 김정일 지도체제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의 붕괴로 곧바로 이어질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국가와는 구별되는 김정일 지도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들어섰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김정일 지도체제는 아마도 감시와 억압과 처형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김정일 지도체제에는 그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그러한 조처들은 결국 종말을 재촉할 뿐이다.

북한의 불안정과 긴장은 우리에게 부담도 되고 기회도 된다. 여러 시나리오를 빈틈없이 설정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時論

체제유지 권위추락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일가와 외교관 부부의 망명, 평양 한 북관에서 벌어진 무장보안요원의 러시아 무역대표부 난입은 사건 주역들의 사회적 신분과 사건발생의 시기적 상황으로 보아 결코 체제위기와 무관한 것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수 없는 사건들이다.

우선 이 사건들의 주역들이 북한사회안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려온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중노동과 배고픔에 못이겨 도망친 노동자나 벌목공, 병사가 아니라 권력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김정일체제의 장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상실해 망명을 결심한 권력층 엘리트이다.

이들의 체제 일탈행위는 권력핵심 내부의 심각한 불안과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북한체제관리에 명백한 이상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체제관리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엘리트 관리이기 때문이다.

金 惠

북한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제를 끝고갈 엘리트에게 계속 희망과 믿음을 줄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김정일에게는 이 선택된 자들을 회유할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나 이들의 복종을 계속 지탱시킬수 있는 중엄한 권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트의 離反(이반)은 오히려 당연하고 체제의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이번 사건들이 심상치 않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것이 일어난 시기적 상황이다. 재작년 여름의 김일성 사망은 북한정권 반세기의 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이요 위기였다. 김정일은 계승을 위한 오랜 준비과정을 거쳤고, 김일성의 사망후 공식적 계승절차 없이도 비교적 혼란 없이 실질적 계승자로 등장할수 있었다.

김일성의 거대한 동상과 유훈을 후광으로 삼고 관도적 유훈통치의 연장을 통하여 김정일의 권좌는 점차 공고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强權통치 가속예상

그러나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폐쇄 왕조를 물려받은 시점은 불행하게도 세계적으로 개방의 물결이 휩쓰는 때였다. 그리고 그가 물려받은 것은 교조주의와 경제적 빈곤이라는 절망적 유산이었다.

김일성 사망의 충격과 위기는 「유훈통치」에 의해서 잠시 연기될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 최근의 사건들을 통하여 점차 확인되고 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가 미국 망명을 감행한 것은 소련 체제의 안정기였던 196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이에 비하면 성혜림의 망명 시점은 전혀 다르다. 앞으로 김정일의 정치적 상황인식과 체제관리 방식은 더욱 경직화되고 강권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남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목전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충격적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그것이 금방 세계적 주목거리가 되는 판국에 그가 내릴수 있는 유일한 결단은 체제고수를 위한 강권적 통제의 발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충격적 사건들을 통하여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가능성을 당장 추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김정일정권 몰락의 가능성까지를 배제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독일 나치체제 멸망의 전조가 된 1944년 6월의 조직적 군부쿠데타 음모는 전쟁수행의 필요상 비대해질수밖에 없었던 독일정규군 조직의 감시를 위한 무장친위대(Waffenss)세력이 40개 사단 80만명의 절정에 이르렀던 때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접촉통한 변화유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태에 대한 정치적 조기경보능력과 치밀한 대비의 강화가 긴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내부의 잇단 이변에 들뜬 나머지 아무런 준비없이 북한붕괴 시나리오의 假需要(가수요)만 팽창된다면 이번 사태는 또다른 한반도 재앙의 단서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북한을 위협하지 않은 존재로 유도하기 위해 「접촉을 통한 변화」 노력을 참을성있게 지속해 나가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前통일부총리〉

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아침햇발

이원섭 논설위원

성혜림씨의 '망명'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일 비서의 옛 동거녀인 성혜림씨의 서방 망명은 여러 모로 충격적이다. 진상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지만, 언론에 단편적으로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007영화를 방불케 하는 극비접보전에, 폐쇄사회인 북한 권력층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 더해 있어 일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주인공격인 성혜림씨 일가의 가족사는 분단된 민족의 비극을 압축시켜 놓은 모습이어서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소설보다도 훨씬 소설적인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소설보다 더욱 소설적인 가족사

성씨 일가가 망명을 결행하기까지 겪었을 인간적인 고뇌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처지에서, 그리고 이들의 망명이 남북관계에 끼칠 현실적인 파장 등을 제쳐놓은 채 소설적인 요소들을 앞세우는 것이 저어하기는 하지만 실제 흥미를 자아낼 극적 요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교육을 받고 좌익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간 성유경씨와 당시 대표적인 신여성이었을 김원주씨 부부의 삶이나, 이들의 자녀들인 혜랑·혜림씨 자매의 북한에서의 파란만장한 생활, 월북 뒤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됐다가 체포돼 전향한 혜림씨 오빠 일기씨의 기구한 인생유전, '타의'로 남한생활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좌절을 겪은 혜랑씨의 아들 이한영씨의 뒤틀린 인생 등등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누구 하나 주역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성혜랑씨가 가족사를 중심으로 북한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소설은 소재만으로도 대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흥미 본위의 생각을 지우고 성혜림씨 일가의 망명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성씨는 최근 상황이야 어떻든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일과 함께 산 특수한 지위의 여인이다. 김정일의 장남까지 낳았다. 비록 버림받고 병 들어 심약해지기는 했지만, 한때 최고의 호사를 누렸던 여인이 북쪽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배신'으로 낙인찍힐 망명을 결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모스크바에 나와 있으면서도 보통사람은 엄감하기 힘든 갖가지 특혜를 받고 '호화롭게' 살아왔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을까. 호사는 누리지만 자유는 억압된 독재사회의 한계 때문인가. 옛 궁중비사에서 보듯 절대권력자 주변 여인들의 암투가 그토록 치열하다는 것인가. 또는 아들 이한영씨를 앞세워 언니 혜랑씨를 공략한 치밀한 '작전'이 주효한 것일까. 가장 철저한 감시사회라는 북한의 통제력이 이토록 허술할 수가 있는가.

성씨 일가의 망명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공작적' 요소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인가는 앞으로 남북간의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쪽이 강도 높은 경고를 했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명예를 실추시킨 성씨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설사 북한이 직접적 대응은 않더라도 남북관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씨를 굳이 남한으로 유도해 김정일의 민감한 사생활을 까발리며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사건의 와중에서 십여년간 감쪽같이 감추어져 왔다가 들통난 이한영씨의 존재는 남북관계의 '어두운'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한은 최은희·신상옥씨 부부 납치사건이 폭로돼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한영씨의 '남한행' 역시 이에 못지 않은 부도덕한 것이었음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의 처조카뻘인 이씨는 지난 82년 '귀순'한 것으로 모호하게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앞뒤 사정을 유추해 보면 미국 여행을 꿈꿨던 '철 없던' 이씨는 안기부 해외팀의 교묘한 기망과 치밀한 공작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서울에 '데려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증언'은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의 은밀한 고급정보를 캐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한다. 더구나 이씨는 그 뒤 누구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성형수술까지 받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위장됐다. 국익차원'이라는 이름 아래 버젓이 행해졌을 이런 비정한 일은 이미 지나간 일로 눈감아 줘야 하는 것인가. 만일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부라면 뒤늦었지만 무언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남북관계의 어두운 구석 '이한영씨'

이한영씨와 모스크바 어머니와의 통화내용은 공작이 개재됐음에도 불구하고 핏줄의 뜨거움을 새삼 느끼게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돼 주려고 애쓰는 '계산을 떠난' 모성애에 콧날이 시큰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아직도 이 땅에는 저마다 애틋한 사연을 간직한 채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많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든 작든 남북의 권력은 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들에게 생이별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성씨 일가의 망명이 민족의 비극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와 부패의 공생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자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 분리 불가능

정치 개혁 없이 부패 방지 불가능

정치 개혁 없이 부패 방지 불가능

정치 개혁 없이 부패 방지

▽ 세계일보 1996. 2. 24

전문가 칼럼

아침을 열며

鄭鎔碩

〈단국大정경대학장·정치학〉

「成憙琳소동」이 남긴 문제점

金正日(김정일)의 전처 成憙琳(성혜림)의 서방탈출설을 놓고 드러난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의 반응은 많은 문제점들을 또다시 남겼다. 언론과 정부의 대응태세가 신중치 못하였고 경망스러웠으며 국민의 쓴웃음을 자초하기에 족한 해프닝을 연출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필자가 성혜림탈출 뉴스를 접한 곳은 스위스의 제네바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병중인 김정일의 처가 서방으로 도망쳤다"는 극히 짧은 단신보도로 그쳤다.

그러나 서울에 돌아와 보니 우리 언론과 정부는 성혜림탈출설에 흥분한 나머지 냉철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인상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대체로 언론매체들은 성혜림 탈출이 북한 고위층 자녀인 玄정일 외교관부부및 康明道(강명도) 康成山(강성산)총리사위의 귀순사건과 더불어 북한체제의 붕괴조짐을 반영한다고 마구 써댔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李壽成(이수성) 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성혜림일행의 서방탈출과 평양시내 러시아 대사관 충격사건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가게 이르렀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성혜림 망명이후 북한측이 남한에 대해 모험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치안상의 대비태세를 강화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복잡한 여성관계로 벌컥 받고 끝내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나머지 도망친 한 여인의 愛憎(애증)스토리를 두고 한국언론이 「북한체제 붕괴조짐」이니, 「북한권력구조의 와해징후」니 확대해석하고 나선데는 심소를 금할 수 없었다. 냉정하게 분석한다면, 성혜림의 서방망명은 북한체제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던중 김정일에 의해 차이고 떠난 스캔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북한체제붕괴로 針小棒大(침소봉대)시키기를 주저치 않았다.

다만 성혜림이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남북관계에서 본 그녀의 가치는 김정일에 대한 개인적 정보가 많다는 것 그것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성혜림의 서방탈출은 북한체제의 붕괴징후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보수집 시각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매체들이 성혜림 현정일 감명도 등 이른바 북한귀족들의 탈북사건을 가리켜 김정일체제 붕괴조짐으로 속단했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분석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탈출동기는 반체제에 있지 않았고 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개인적 사연때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東獨(동독)의 경우 동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던 1961년 한해 무려 20만 7천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그런데도 동독체제는 끄떡도 하지 않고 29년을 버텼다. 61년 이후에도 동독주민들은 연평균 2만3천명씩 서독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이러한 동독주민들의 대거 탈출 틈결속에서도 서독 언론과 정부는 『동독붕괴징후』라는 극한적인 표현으로 동독정권을 자극하지 않았고 조용히 동독체제의 개방화를 유도해왔음을 우리 언론과 정부는 1994년 한해만 해도 50명이 탈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마도 언론쪽에선 이렇게 북어나기 시작한 탈북자들의 숫자를 중시한 나머지 북한체제의 붕괴징후론으로 연계시켰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곤산체제란 수십명 또는 수백명의 탈출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東獨(동독)의 경우 동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던 1961년 한해 무려 20만 명이 탈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체제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한귀족들의 탈출동기가 체제불만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에 대한 증오감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탈출을 북한체제 붕괴조짐으로 연계시킨다는 것은 희망적 기대감에 쫓긴 牽强附會(견강부회)로 보아 마땅하다. 북한귀족들은 특권계층으로서 현정일씨의 중언대로 절대적 북한체제 옹호자임을 잊어선 안된다.

물론 金日成(김일성)사망을 전후해서 시베리아 벌목공을 비롯, 북한주민들의 탈출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탈출동기는 체제불만 때문이 아니라 정보수집 시각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매체들이 성혜림 일가가 아직 한국땅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북한의 모험적인 보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총리주재의 통일안보조정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문민정부의 나약성을 드러낸 대응이었으며 북한은 이러한 허점을 간파, 즉각 공세로 나왔다. 남한의 보복을 공개적으로 우려하자 북은 그 기회를 놓칠세라 다음날 성혜림의 망명기도는 「한국의 범죄행위」라고 못박고, 보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쪽의 보복협박은 남한정부의 나약성이 빚어낸 것이었으며 남한정부가 북에 의해 얕잡힌 결과였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은 남북한 관계에서 항시 신중해야 하고 뀌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이 요구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북한 공산체제가 병들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속단하고 대처할 때 그것이 과생하는 부정적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명심해 주기를 당부해 두는 바이다.

▽ 세계일보 1996. 2. 26

統一칼럼

安燦一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유격대國家 북한의 한계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북한사회를 일제말기와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통치가 초기보다는 말기에 더 극성스러웠듯 현재의 북한 역시 일제말기처럼 독재국가의 증상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연구학자 와다 하루키 교수(도쿄대)는 「유격대국가론」에서 북한을 유격대국가가 제도화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북한 유격대국가의 성립시기를 6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67년 비교적 합리적 노선을 추구하던 「갑산지하조직원」 출신들인 박금철 이효순 허석선 등이 숙청된후 金日成직계의 만주유격대 출신들이 권력을 완전히 독점한 때이며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金正日이 중앙당을 완전 점거한후 이른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전면에 제시한 70년대 초반을 유격대국가의 성립시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때부터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유격근거지」로 되었고, 그 최고사령관은 金日成이며 인민은 모두 유격대원으로 되었다。

유격근거지안에는 「유격대문화」만이 존재할뿐 기타 다른 사조와 문화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북한 당국자들은 유격대문화와 정서가 맞지않는 15만명 이상의 동료및 적대계층 인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했다。 특히 군사분야에서의 유격대식은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아래 군인 모두를 유격대원으로 전락시켰다。

북한 유격대국가의 형성은 첫째 金日成을 위시로 최고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안정감과 과거에 대한 애틋한 향수, 둘째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한 패배의식의 확산, 셋째는 고립과 폐쇄가 자초한 인민경제의 파탄에 따른 내적위기의식 등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70년대 초반 金日成은 부자권력세습을 결정하고 난 후 대단한 안도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金正日이 73년 9월 중앙당 조직비서에 오른뒤에도 최용건, 김동규, 박성철 부주석과 남일 부총리 등 원로혁명 1세대들은 金正日을 「젖비린내 나는 아이」취급 하였다。 이에따라 金正日유격대사령관은 모든 정보차단으로 언제 「토벌」이 있을지 모르는 긴박상황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격근거지 인민들을 종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수시로 내려지는 「준전시태세」 때마다 불평없이 방공호나 지하갱도로 뛰어들어야 했고, 이른바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공제하는 식량배급의 감소에도 감히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또 언젠가는 근거지밖으로 나가 「해방전쟁」(남조선해방 및 한반도의 유격근거지화)을 치르자는 체제의 요구에 언제나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고립과 폐쇄가 자초한 경제파탄에 유격대원과 주민들의 소비생활은 부차적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제말기와 같은 유격대국가 북한의 앞날은 자명하다。 유격대사령관은 근거지내의 생활기반이 바닥나고 전략전술상 근거지 탈출이 불가피할때 주민들의 생사에 관계없이 근거지를 포기하고 떠날 수 밖에 없다。

오늘 북한이 처한 제반상황은 지난 41년 金日成이 일본토벌대에 쫓기다 못해 저들만 살겠다고 舊소련 영토로 도망치던 때와는 판이하다。 중국과 소련은 이제 더이상 북한의 원조국이 아니며 그들을 받아들여 「식객」으로 받아줄 아무런 명분도 없다。 이럴 경우 이판사판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유격대 국가는 이미 와해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나친 과민반응이 유격대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언젠가는 저 유격근거지 인민들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때 어떻게 그들을 계몽하고 보살펴주어 정신적 혈연적 연계를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연구과제다。

▽ 문화일보 1996. 2. 28

「北붕괴」美의 언론플레이

海外 특별기고

리처드 핼로런
(美언론인)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소식들이 이달초 워싱턴에서 새어나왔다. 이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워싱턴 政街의 오랜 기교, 즉 正道를 벗어난 언론조작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난민 기아 집중보도

뉴욕타임스紙는 「북한전체 붕괴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톱을 깔았다. 또 AP통신은 북한의 기아문제를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紙는 만주로 탈출하는 북한난민문제를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평양을 신중히 관망하고 있는 경제학자, 정보관료및 학자들은 북한이 깊은 곤경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폭발(Implosion:흔히 쓰는 폭발(Explosion)의 대치개념으로, 확고히 장악하고 있으며 김일성 2주기가 되는 오는 7월8일쯤 주석직에 공식취임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다.

그렇다면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가공할 얘기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韓國정부에 메시지

기밀을 폭로한 기사가 겨냥한 첫번째 대상은 물론 한국정부다. 클린턴정부는 현재 對北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서울측과 빚은 불협화음을 합리화하는 입장이다. 金泳三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합의할 때까지 더이상 對北 쌀지원은 안된다고 단호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최근 북한구호를 위해 유엔기구에 2백만달러를 보냈다.

클린턴정부는 서울측에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즉 비자금 스캔들로 촉발된 정치적 격변의 와중에 있고 독도문제로 일본과 외교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 북한의 위협문제로 인해 혼란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북한붕괴 위협 뉴스가 노리는 또다른 대상은 일본임이 분명하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오키나와 주둔 미군철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은 미군의 일본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나 북한 상황의 악화가 날침으로 이 어질 가능성을 적극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美의회도 겨냥

또 북한뉴스는 미국의회를 겨냥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對北협상에서 미국측의 양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영향력있는 美하원의원 4명이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정권이 미군부대를 위협하며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더구나 핵확산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단는 이유로 對北지원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에 관한 기밀을 언론에 흘린 것은 이같은 주장에 맞서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북한붕괴와 그에따른 한반도의 혼란및 적대상황이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위험천만한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식량지원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가공할 북한소식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또 올봄 예상되는 북한의 집단기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엔세계식량프로그램이 산정한 액수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더 많은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美국방부는 올해 이맘때쯤 북한에 관한 소식을 흘리곤 했다. 왜 그런가? 10월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국방예산안이 이 시기에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우려가 국방예산 통과는 물론 심지어 예산증액을 얻어내는 유효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형적인 관료전술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기사는 虛를 찔리지 않으려는 관료전술의 하나다. 만일 북한이 정말 붕괴의 상황을 맞게되면 美국무부와 국방부, 정보기관은 「봐, 내 말이 맞잖아」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관료들은 과거에 동유럽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같은 중대한 사태변화를 놓친 경험이 있다.

중대한 사건 돌발을 예견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을 받아온 관료들은 미리 비관적인 평가서를 내놓거나 최후의 날을 예견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 사건들이 실제 일어날 경우 관료들은 자기네 예측의 정확성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즉 이번 경우 북한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남북긴장이 완화된다면 아무도 그전에 무슨 경고가 나왔었는지 잊게 마련이다.

위에서 밝힌 모든 내용이 냉소적으로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 만큼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몇년전 기자들과 관료들이 언론과 정부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관료는 정통 언론브리핑과 正道를 벗어난 對언론 기밀누설 사이 차이점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는 「간단한 거 아니냐며 『내가 브리핑하면 당신은 흘린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 한겨레신문 1996. 2. 28

북한과 동독의 차이

요즈음 잇따른 북한관련 사태에 전국민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징후로서의 식량난, 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진 총격전, 최고실력자 김정일 옛 동거녀의 제3국 탈출, 주민들의 연이은 탈북사태 등은 북한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체제위기가 과연 체제붕괴로 연결될지는 과거 동독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비춰볼 때 의문점이 남는다.

북쪽 체제 붕괴 '기대' 잘못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90년 마침내 이뤄진 독일통일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결과였다. 서독 체제는 동독에 대해 모든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립하고 있었다.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는 동독의 계획경제 체제와는 달리 높은 생산력 발전을 이룩해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유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동독에 대한 체제우위를 확보했다. 또한 서독에서는 자유·인권·정의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질서가 유지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반 위에서 정치·사회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관리됐다.

반면 동독 체제는 당과 관료 등 지배층의 권력 독점으로 균형있는 정치발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치 체제상의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는 한편,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소련이 더이상 동독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마침내 민중봉기를 통해 서독 체제를 통일국가의 체제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절대우위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간 갈등은 물론, 발전격차에 의한 지역갈등 문제가 우리의 체제상 절대우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독의 경우 후견국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에 따라 동독정권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민중봉기에 대한 군부의 무력진압도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북한 후견국 중국의 건재, 러시아의 북한 지지,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진전 등의 대외환경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붕괴의 전조인 정권 핵심부의 균열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경우 동독과는 달리 군부를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중봉기의 성공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동독의 경우처럼 체제 붕괴과정에서 연착륙을 이룰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거나 조기통일의 환상에 빠질 경우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게 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오히려 이 시점에선 먼저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체제의 민주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 체제의 민주화를 통한 체제상 절대우위 확보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동시에 주변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시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일은 평화통일을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념과 현실간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 선진자본주의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체계와 비슷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실험적 단계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체제의 민주화는 통일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남북의 인구 및 경제발전 격차를 동서독과 비교할 경우 통일에 따른 한국인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서독주민들의 6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수치는 한반도가 현 시점에서 통일될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져 이에 편승한 권위주의 세력이 대두할 경우 우리의 민주화가 상당정도 뒷걸음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보여준다.

남쪽 민주화가 선결과제

더욱이 통일 뒤 옛 동독 주들의 경제상황 악화와 열등의식 및 불안감 심화 등으로 인해 동서독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 통일은 현재의 지역갈등 구조가 남북한 지역갈등으로 확대재편되는 좀더 심각한 사태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조기통일의 환상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체제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역량을 확충해 평화통일을 견인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시평

황병덕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신문 1996. 3. 5

統一 끈기있게 대처하자

宋 復
〈연세大교수·정치사회학〉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하고 멀잖아 통일이 되리라 믿는 사람이 많다. 이 지구위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이니만큼 통일의 열망도 그만큼 세다. 갈라진 나라로는 대만·중국이 있다 해도 인구로 보나 크기로 보나 이들 나라는 분단국가라 하기 어렵다.

어떻든 우리도 월남이나 독일처럼 그렇게 소원하던 대로 통일할 수 있을까. 월남과 독일 통일의 공통점은 다른 한쪽이 저절로 「무너진 것」이다. 전쟁을 치른 남의 경우 사정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군 철수후인 75년, 북쪽이 본격적으로 공격도 하기 전에 남쪽이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월남 중부의 요충지인 퀴논의 월남군이다. 당시 퀴논에 포진해 있던 월남군 최정예부대 15만명이 월맹군 불과 7백명의 교란으로 군단장은 배를 타고 도망가고, 사병은 뿔뿔이 흩어져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부대가 내려앉은 것이다. 지금도 하노이에선 그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쉽게 통일할 수 있었는지, 신기해 하기만 하는 회고담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미 CIA 도이치국장이 얼마전 말한것처럼 북한도 월남이나 동독처럼 「붕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붕괴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대로 통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의 「통일」이다. 붕괴와 통일을 등식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이다. 확실히 월남과 독일의 경우 「붕괴」는 곧 「통일」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가. 이 물음에 앞서 이들 나라는 어떻게 한쪽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었느냐의 풀이가 중요하다.

월남의 경우 남쪽 월남이 무너짐과 함께 그 정부를 떠받쳐줄 외부세력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통일의 필수요건이다. 월남 스스로 붕괴했다 해도 외부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 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다. 그러나 월남은 2차대전 직후의 영국 세력도, 직후의 프랑스 세력도, 그리고 맨 마지막의 미국세력도 물러가고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그 고립무원이 붕괴와 통일을 등식으로 만들어준 주요인이 된다.

이것은 독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거대한 소련제국도 붕괴되었다. 이 두 사건은 거의 동시에 전후해서 일어난다. 동독을 밀어주고 재건해 줄 외부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일 또한 「붕괴」는 곧 「통일」이라는 성취가 이뤄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가. 우리는 불행히도 21세기 초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중국이 북한의 배후세력으로 버티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그 뒤에 있는 중국이 월남의 미국이나, 동독의 소련처럼 팔장을 끼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중국과 북한은 수비동맹을 맺고 있다. 그 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더 이를 여지도 없이 연장할 것이라고, 지난번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의 중국당 총서기 江澤民이 기자회견에서 토로한 바 있다.

도이치국장의 말대로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해도,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면 또다른 「김정일 체제」를 중국은 북한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러시아도 똑같이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의 경험에서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붕괴가 남에 의한 통일로 이어지려면,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 통일이 이익이 돼야 한다. 현재의 분단이라는 현상유지보다 미래의 통일이라는 현상타파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혹은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통일 통일」하며,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본주의가 좋다고 그들에게 선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만큼 지금 통일의 장애요소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쳐대는 것만큼 통일의 저해요인은 없다. 적어도 통일에 관한한 우리는 독일이나 월남만큼 운이 좋은 나라가 못된다. 특히 월남과 달리 우리 주변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강대국이 너무 많다. 북한이 아무리 「거짓된 세뇌와 억압과 공포의 복합체 국가」라 해도, 그것이 냉혹한 국제관계를 바꿔놓지는 못한다. 북한이 아무리 국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무능력 집단이라 해도 그때문에 중국이 수비동맹을 폐기할 가능성은 없다.

너무 통일을 초조히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한 50년 더 끈기있게 참고 준비나 하자는 다짐이 가장 좋은 통일방안일지도 모른다.

▽ 중앙일보 1996. 3. 2

남북密使가 만나면

金性鎬 세상보기

『당신네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미(美) 중앙정보국장의 의회 증언에 대해 얘기좀 나눠 봅시다. 그는 당신들에게 주민 기아·주민 탈출을 막을 능력이 없다는 거요.』

『그 친구 웃기는구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미 중앙정보국장이라면 세계에서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아니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믿을 수밖에 없잖소.』

『꿈 깨시오. 우리들은 오히려 당신네가 자본주의적 모순이 극도에 이른 나머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질 것으로 보는데….』

『웃기는 사람은 미국 친구가 아니라 당신이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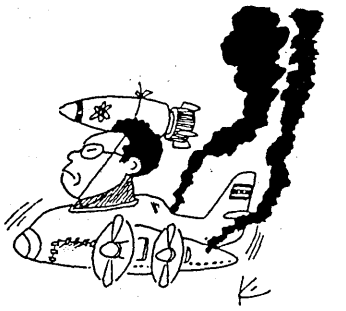
『좋소. 서로 한번씩 웃겼다치고, 당신 할 얘기가 뭐요.』

『당신네는 망하는 길밖에 안남았으니 이판사판으로 대남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널리 퍼져 있소.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은 용납할 수 없소. 일단 대남 도발을 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오, 얻는 것은 통일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전하려 하오.』

『감히 수령님의 명언(名言)을 도용하다니, 무엄하오. 있지도 않은 도발위협을 들먹이는 속셈이 뭐요. 전쟁을 원하오? 서울 불바다론을 다시 듣고 싶소. 노동 1호 미사일만으로도 부산까지 쑥밭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위협이지 뭐요. 또 한가지 말해둘 게 있소.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시오. 탈출자가 늘면 우리도 곤란해지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붕괴를 원하지 않소. 단지 점진적인 체제개혁으로 잘 살게 되고, 종국에는 대화에 의한 통일이 되길 바라오.』

『자꾸 통일 통일 하는데 당신들 통일할 준비 돼 있소.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려 죽자사자 싸우는 사람들이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소. 경제 성장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사람이 빵 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소.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루 두끼로 때우고 있어도 머지않아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면 우리도 동반 번영하는 길이



예약돼 있단 말이오. 또 개발중인 대포동2호 미사일을 캘리포니아 해안에 구경시키겠다고 하면 미국은 화들짝 놀래 지갑을 열게 돼 있소. 경수로만큼 큰 흥정거리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오. 우리는 배짱이 있고, 그 배짱에 기초한 외교력 또한 탁월하오.』

『당신들은 인민을 고도로 통제하는 덕분에 무너지지 않을 뿐인데 미안하지만 최근 그 통제력에도 금이 가고 있잖소.』

『배신자는 어느 사회에도 있는 법. 우리는 크게 신경쓰지 않소.』

『당신들이 우리 쪽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미 중앙정보국장도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소. 동포애에 입각한 원조를 받으시오.』

『숨이 넘어가는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면 그들의 목숨만 연장할 뿐이다—남쪽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다 아오. 그러니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으시오.』

『당신네가 중장기적인 붕괴 과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정부도 판단하고 있소. 붕괴 과정에서 당신들의 폭주(暴走)가 예상된다고 하오. 당신네는 고장난 비행기와 같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오.』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들 자유요. 그러나 비행기가 고장났다면 그 수리비는 당신들이 대야 하오. 또 서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으려면 그때도 돈을 내야 하오.』 (수석논설위원)

▽ 조선일보 1996. 3. 5

「위기지수」진단

창간특집

70 1920-1996

특별기고

金正日체제「出口」가 없다

이념-체제 포기않는한 貧困해결 못해

方燦榮 (前카자흐스탄 대통령경제고문)

94년 7월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로 부상한 김정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세가지 짐을 짊어지게 됐다.

첫째의 짐은 김일성이 통치이념으로 창시한 주체사상과 북한사회 현실과의 타협할 수없는 괴리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건설을 약속하는 주체사상과 그 추구가 결과한 북한사회의 극심한 빈곤 사이에 놓여있는 괴리를 좁혀가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이같은 부담은 북한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부조리가 심화되면 될수록 가중된다.

후계자의 딜레마

또한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이의 구현자로서의 그의 위대성이 부각되면 될수록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북한사회에 누적되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거 50여년간 주체사상이란 이념으로 유일무이하게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 한사람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정통적 후계자로 승계하는데 수반하는 또 다른 부담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유일무이한 통치이념으로 고수해야하는 지상과업에 있다. 이는 인민대중의 집단적 가치관을 표방하고 남북한 사회에서 계급투쟁을 통해 무산계급의 독재사회를 실현한다는 전제조건 아래서만 김정일이 김일성의 합법적 후계자로 옹립, 추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병폐치유나 인민대중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김일성의 혁명과업을 떠나서는 고려될 수 없음을 뜻한다.

또한 개혁-개방 정책을 수용해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치유함으로써 세계에서 동태적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생산적 일원으로 참여하여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선택 대안이 불행하게도 김정일에게 주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정일이 떠맡게 된 세번째 막중한 부담은 북한사회의 기아와 빈곤을 낳은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다. 소련으로부터 답습-모방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인류역사상 인간이 창안 시험한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제도로 분류된다. 이처럼 비효율적 경제체제와 주체사상으로부터 도출된 북한사회에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모순을 낳게 했다.

오직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만을 유일사상으로 고수하고 김일성주석의 명령에 무조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체주의 독재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은 소련및 동구권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는 와중에서 북한체제 붕괴방지에 도움이 됐지만, 제한된 자원을 김일성통치체제의 위대성 부각에만 배분함으로써 경제파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정일이 떠안게 된 이러한 부담은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안보적 입지의 악화와 전략적 고립으로 인해 더욱 가중됐다.

우선 한·소수교와 소련의 공산주의 붕괴로 기존의 북-소동맹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야기된 점이다. 이같은 변환는 북한이 무력남침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얻을 수 없을 뿐아니라 러시아의 핵우산 보호에서도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3만7천여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 아래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다음으로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낙후된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부분품 구입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유류수급 차질에 따라 기동훈련이 줄어들어 인민군의 전투력에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다.

안보-외교적 고립

핵무기개발은 북한위정자들에게 안보적 입지의 악화를 저지하고 전략적 고립으로 인한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평형장치(equalizer)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거센 반발로 북한의 위정자들은 전략적 고립과 안보적 열세를 만회할 수있는 또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얻어낸 미-북관계 개선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극한상황으로 치닫고있는 북한 현실과 관련해 김정일은 체제존속을 위해 가속적으로 전체주의적 통제와 억압을 구사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팽포한 체제 붕괴의 위협을 강수하든가 아니면 진화론적 진보를 위한 체제개혁과 개방을 수용함으로써 체제의 점진적 와해의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입장에 처해있다. 김정일의 번민은 돌풍 어느 것도 북한의 생존을 확고하게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 조선일보 1996. 3. 5

70 1920-1996

창간특집

흔들리는 北韓

특별기고

「亡者통치」기형정권 불안

韓-美-日 긴밀협조… 남북관계 개선 필수적

야마시타 신타로(駐韓 日대사)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된지 오래임에도 한반도에는 남북분단이라는 냉전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속에서 북한정세는 불투명한 점이 많고 김일성 주석 사후 아직도 노동당 총비서 및 주석자리가 공석인 채로 있어 「김일성 사망후의 김일성체제」라고 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비서의 후계준비는 20여년간에 걸쳐 진행돼 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가 국정 전반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내부상황은 지난해 홍수피해로 가중된 식량부족이나 에너지 부족을 비롯한 갖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적으로는 작년말 비무장지대 부근에 전투기를 전진배치하는 등 여느때와 다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이같은 불안정한 상태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듯 싶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는 북한정세를 계속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을 안정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개방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동시에 현재의 북한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살아남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고립화를 타개하기 위해 對美 관계개선을 돌파구로 삼으려 할 것으로 여겨지나,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남북간에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나 비핵화공동선언과 같은 중요한 합의가 체결돼 있으며 이의 착실한 이행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결한데도 남북간의 대화가 중단된 채 아무런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측의 對南 비방 및 중상이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는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 임하도록 모든 기회에 종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韓 日 美 3국이 대북한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3국의 협조체제가 반석과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정책전환을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이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2차대전 후의 일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2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남북통일에 관해서는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통일을 추진해간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지난해의 對北 쌀지원때 북한에 대해 먼저 한국으로부터 쌀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지금까지도 일북한국교정상화 교섭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누누이 남북대화 촉진을 요구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체제와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일본 자신이 직면하고있는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있다. 미-북 기본합의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공한는 것일 뿐더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위해 KEDO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왔다. KEDO를 통한 경수로지원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토록 돼있지만 일본도 뜻있는 공헌을 해갈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가까운 긴 세월에 걸쳐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둘러싼 한·일간의 협력은 북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강화로 발전해 가리라 확신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실시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 세계일보 1996. 3. 9

統一칼럼

金 正 敏

〈前북한 대양무역상사 사장〉

金日정권과 가짜달러

최근 미화 1백달러 위조지폐가 시중에 나돌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시대라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복잡한 설비, 정밀한 기구,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재원이 없이는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수사기관의 발표가 없어 위폐의 생산지나 발행처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의 영세한 범죄조직의 소행으로는 보기 힘든다. 그렇다면 국외의 어떤 불순집단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목적으로 막대한 기술설비와 자금을 투입해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필자는 북한에 있을 때 1988년까지 金正日을 위해 외화를 조달해주는 일을 했으므로 그가 어려운 외화사정을 타개하려고 가장 신임하는 절대측근에 지시, 달러를 위조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나 자신 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김정일의 외화난은 정권차원에서 매우 심각했다. 우선 노동당운영을 위한 외화자금이 절대부족했다. 당운영에는 金日成부자의 비자금, 별장과 초대소 자금, 당중앙위 행정업무상 모든 설비와 기술자재자금, 당 후비간부 양성자금, 대남사업자금, 외교자금 등 막대한 양의 달러자금이 필요했다.

金正日은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당중앙위 재정경리부 산하에는 39호실이 있어 금과 같은 각종 귀금속을 수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인다. 재정경리부에는 또한 대성총국과 만경무역이 있고, 당중앙위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대동무역과 같은 무역기관이 있다.

필자는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간부부 소속 대양무역이라는 비공개무역상사를 맡아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 무역상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나중에 인민무력부, 정무원, 외교부, 지방당, 지방행정기관, 산하기관기업체 부설 무역회사까지 동원했지만 지출항목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자 대외무역창구와 외교창구를 통해 위조달러를 취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외국 암달러시장에서 진짜미화 1백달러와 위조미화 4백~9백달러를 교환했으나 나중에는 북한의 무역상사들 가운데 믿을만한 상사를 비밀리에 선정해 위조달러를 구입하러 암달러시장에 진출시켰다.

1989년 제13차 세계평양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폐사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대양무역상사 사장인 필자를 黨的으로 지도하던 인물은 당중앙위 간부부의 金일산 副부장으로 그는 87년 필자에게 『대양상사 사장은 다른 무역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짜달러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국제조직과 연계하여 위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는 『그까짓 미국돈이야 가짜든 진짜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짜달러를 많이 만들수만 있다면 그 또한 혁명에 이로운 문제』라고 말하면서 『가짜달러 제조에 필요한 「붉은 수은」(암호명 고양이)을 아프리카지역에서 구입하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의 진의를 잘 몰랐던 나는 붉은수은이 위조달러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외국현지에서 미화 1백달러를 1달러짜리 새돈으로 교환하는 일을 주로 했다.

그후 우연히 자이레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필자의 후배였던 평성조폐공장 기사장 조문길(가명)대좌를 만났다. 인쇄물 수출업무차 나와 있던 그는 조직지도부와 통전부 간부들이 주최하는 위조지폐제조를 위한 비밀모임에 전문가자격으로 참석해 달러화 위폐제조문제를 여러번 토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필자는 내게 부여된 임무가 「달러화 위폐제조자재조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평성 조폐공장은 분공장을 설립하고 전문적으로 위폐를 찍어내고 있으며 통일전선부 또한 이에 가세하여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에 있는 「시대社」인쇄공장내에 위폐공장을 설치했는가 하면 인민무력부 외화관리국 산하 서포 분공장에서도 미화위폐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의 위폐제조 원리는 미화 1달러 지폐를 특수약품으로 깨끗이 지우고 그위에 1백달러짜리 위폐를 찍는 방식으로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발달돼 있었다.

만약 업무상 직접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비밀이 누설된 것이 확인되면 그 즉시 공장의 위치를 옮기고 비밀을 안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끌어가도록 돼 있었다.

최근 한국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달러가 북한이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대남기관이 정치-경제적 혼란을 목적으로 세계각국 밀매꾼들을 앞세워 위조달러를 대량살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 한겨레신문 1996. 3. 8

아침햇발

김 명 걸 논설위원

점검, 북한 붕괴론

북한의 폐쇄성은 자주 무성한 추측을 불러모으곤 한다. 많은 남쪽사람을 포함해 북한을 지켜보아야 하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닫힌 창문에 어리는 희미한 그림자를 다듬고 색칠을 하며, 내친김에 그림자 주인공의 건강진단까지도 시도한다. 이상없다는 진단도 간혹 있으나, 사망 임박을 알리는 추정의 잦기가 훨씬 높다. 마음속 깊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심리가 자리잡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국내외의 대세는 붕괴쪽

북한은 이런 선부른 진단에 불쾌감을 나타내곤 하지만, 때로는 어설픈 추리를 보며 여유를 가지기도 하는 듯싶다. 86년 11월 북한은 느닷없이 판문점 인근 선전마을에 세워둔 높은 깃대에 반기를 걸고, 확성기로 장엄한 장송곡을 계속 울려댔다. 조심성을 보이려던 세계의 언론이 마침내 '김일성 사망설'에 막 몰입해 가던 때와 몽골 대통령의 북한 방문일정이 맞물리지 않았더라면 그만 온갖 추리가 꼬리를 잇는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미지의 세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른다. 소련과 중국이 변모한 지금 북한은 그런 면에서는 세인의 이목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보이는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에는 그런 심리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자세로 접근할 여유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빈곤은 사실에 근접한 추론을 어렵게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에 대해 어떤 판단이나 견해를 밝힌다면 이는 즉각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정보기관은 수많은 과오로 그 명예가 크게 실추된 상태이나 아직도 수준 높은 정보수집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관의 책임자가, 그것도 유례없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존 도이치 국장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 악화는 현 정권을 급속히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제한전을 도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발언에서 새로움 같은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어쩌면 국내 강경 보수론자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라도 했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그가 유명 정보기관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그의 발언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 이런 발언을 일삼았던 인사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도이치 국장의 발언과 국내에서 비슷한 논지를 펴온 논자들의 주장이 다른 점을 굳이 찾는다면 발언의 의도나 주장의 논거에서 찾을 수는 있다. 그는 자신의 직책과 관련해 미국으로서는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을 예시하려 했을 것이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주로 찾으려 한 것같다. 국내 논자들은 북한의 붕괴는 당위이며, 지금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논거로 탈북자 증가와 같은 최근의 사태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북한 붕괴론에 시선을 보내는 이들의 관심을 끌만큼 무게를 지니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무너질 것인가 아닌가는 그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심목록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북한 체제 붕괴'가 바로 '남북통일'이라는 등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의 유력한 기회를 제공할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게 이것은 자유기 어려운 통일본보기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라안팎에서 이러한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오랜만에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는 신선함을 보여주었다. 이수성 국무총리가 북한 붕괴론에 임해야 할 우리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29일 합참본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귀에 담아둘 말을 했다. "북한 내부사정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성급한 단정은 우리의 건전한 대북관과 통일관에 혼선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북한 대응태세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통일노력 가로막는 걸림돌

발언 장소로 보아 그가 안보태세를 걱정해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북한 붕괴론이 대북관과 통일관에 혼선을 불렀다는 그의 진단은 정확하다. 북한 붕괴론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통일론이나 통일정책은 증발해버리지 않으면 낚잡이나 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데 누가 교류협력이니 신뢰구축이니 하는 멀고도 지루한 작업에 매달릴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 붕괴론은 통일을 지향하는 논의가 아니라 주체적인 통일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북한 붕괴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지워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 조선일보 1996. 3. 16

中-日 강자 부상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최근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처할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한반도는 분단상황과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동서 양진영의 초강국인 미국과 소련의 완충지대(Buffer Zone)역할을 해왔다. 그 사이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한 차례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완충지대 역할을 방패막이로 하여 그 뒷전에 있던 일본은 패전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계속한 결과 이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립를 굳혔고, 위쪽의 중국은 대륙간 유도탄과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제3위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가 국내 정치현실에 급급해 하는 동안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세는 급속히 변화하여 구소련이 몰락하고 일본과 중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가 또다시 이제는 일본과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강요당할 위험성에 빠지고만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받음으로써 한반도의 군사력을 방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힘이란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군사력은 주로 공격력을 의미하며, 21세기의 공격력은 핵무기와 핵무기의 유반수단의 유무에 달려 있다(중국은 현재 장거리 유도탄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H2의 발사로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현재 세계 제일의 핵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이므로 핵무기 제조 기술의 보유는 시간 문제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여 남북한이 언제까지나 대치상황 아래 놓여 있게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서둘러 정상화하려는 일본의 노력과 북한정권의 몰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중국의 노력이 그들의 이러한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그들의 어떠한 조치적어도 동정과 묵경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유도탄의 개발과 핵무기 제조기술의 확보를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만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음으로써 일본을 한국과 같이 미국의 핵우산 밑에 묶어둘 수 있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허한 의지만 외쳐봐야 냉엄한 외교 현실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非核化」 철회하라

재처리시설 갖자

우리의 비핵화 선언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인접국인 일본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일본이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 우리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여 용납하지 않아야 하며, 6공시대에 이루어진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의 비핵화 선언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인접국인 일본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일본이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첫번째 행동으로 우리에게는 핵 재처리 시설의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다(2년 전 필자는 프랑스의 핵 재처리 시설을 방문하여 그것의 안정성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바 있다). 일본이 핵무기 보유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의 핵 재처리 시설은 핵에너지의 원료인 우라늄의 재생산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지만 핵무기 개발 기술의 확보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내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여야 한다.

洪 尙 和

대통령이 나서야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은 우리의 핵 재처리 시설의 보유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들이 반대한다면 대동아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잔인함의 극단을 보여준 일본은 믿을수 있고, 역사상 한번도 외국을 침입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발생한 손익계산을 고찰해보면 먼저 일본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세계의 여론에 심었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양해를 얻었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국민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 그 후진성을 세계의 언론에 부각시킨 것밖에 없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아직 건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핵 재처리 시설의 건설계획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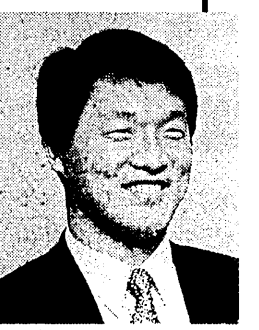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문민정부의 탄생주역으로서, 또한 성숙한 쿠데타의 주역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원칙을 굽히지 않는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세계의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단임제 대통령이 남은 2년의 임기동안 해야 할 일은 국내정치가 아니라 이러한 외교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비핵화 선언은 분명히 잘못된 역사이다. 지금이 바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인 것이다.

<소설가>

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한국일보 1996. 3. 14

한국 論壇



金 炳 局

北韓觀의 이중성

『베를린장벽 저 편에서 시위중이던 동독인이 서독을 향해 외쳤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자 서독국민은 자기네끼리 수군댔다. 「그래 우리는 하나야」』

통일이 현실로 막 다가온 89년 가을부터 서독인이 서로 주고 받은 농담이다. 동독의 시위군중이 외쳤다는 「우리」는 동서독을 통틀어 가리켰다. 장벽 너머의 형제와 연대하여 자유를 되찾고 시장경제에 동참하려는 시민혁명의 정신이 그 「우리」라는 말속에 담겨 있었다. 반면에 서독인이 중얼거렸다는 「우리」는 서독인만의 「우리」였다. 민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불확실한 통일을 모험하기보다 분단이라는 안락한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실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독은 결국 평화적 통일의 신화를 창조해냈다. 평범한 소시민이 동독인에 대해 품고 있던 이중적 감정을 스스로 이겨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통일의 주체는 서독의 기민당정부였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동독문제에 관해서는 이중적인 국민여론이 적기에 적절한 정책을 제시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수동적 여론수렴보다 능동적 여론형성에 나선 결과가 독일의 통일이라는 진단이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소시민 역시 북한과 관련하여 이중성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아니 한국전쟁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 이중성은 단순한 명분과 경제적 실리 차원의 갈등이 아니다. 동독은 그나마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다. 서독을 배제하고서는 살아 남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서독과의 공존을 제시한 이성적 국가였다. 북한은 전혀 다른 金正日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 핵을 담보로 원조를 얻어내려는 무모한 체제이고 테러와 학살의 정치로 민심을 통제하려는 무지한 정권이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켜 적화통일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얄팍한 속셈까지 갖고 있다.

지원論과 고사論

그러다보니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따로 없는 기이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개개 한국인의 마음 속마다 양자의 논리가 병존한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인민이 불쌍하고 金正日체제의 붕괴에 따를 혼란이 두려워서 「북한지원론」에 귀를 기울이면 즉각 마음 한 구석에서 「북한고사론」이 반격의 기회를 엿본다. 테러와 착취를 일삼아온 야만스러운 체제에 살 길을 열어준다는 발상 자체가 역겨운 것이다. 아울러 원조가 군사적 목적에 쓰여 언제 우리를 겨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가세하여 북한지원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金正日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면 분단이 고착화하리라는 우려마저 한국인을 억누른다.

하지만 춘궁기의 식량난을 방관하다가는 金正日의 북한이 최후의 발악을 할 지 모른다는 안보적 위기의식에다 가여운 인민만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동포애까지 가세하면 북한고사론에 대한 한국인의 의지는 어느 사이에 허물어진다. 게다가 탈북러시가 이어질 때 한국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북한고사론은 재건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산산조각나고 만다.

한국인은 이중적인 北韓觀의 포로이다. 통일의 명분과 안정의 실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북한지원론과 북한고사론 사이를 방황한다. 그러한 심리적 상태에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나올리 만무하다. 오히려 정부가 비판적 여론에 밀려 강경과 온건 사이를 몇 차례 오가다 나중에는 여론의 질책이 두려워 아예 對북한정책에서 손을 놓고 방관자세를 취할 위험성이 높다.

이제 선택의시점

역설적이지만 한국인이 이처럼 비전과 전략없이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인민에게 먹을 것만은 보장한 金日成 「덕분」이었다. 북한경제가 파산하지 않는한 한국인은 이중성 속에서 -다시 말하면 북한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무한정 연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문제의 회피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춘궁기까지는 버틸 군량미를 비축해두고 있다고 정부가 말한 것이 작년 가을이었다. 반년이 지나 이제 그 최종 기한이 현재로 다가와 있다.

무언가를 선택할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내리려 하지 않는다. 안정과 통일을 다 보장하고 북한지원론과 북한고사론의 위험성을 모두 피할 「샛길」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부재는 식량난에 처한 상대방에게 선택의 연기가 아니라 북한고사론으로 비칠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선택을 내린 셈이 되는 것이다. 다시 원점에서 치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高麗大교수·정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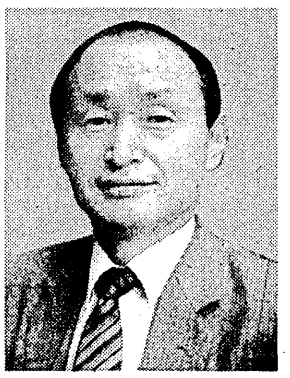
'南北 당국자 대화' 고수해야 하나

동면(冬眠)상태에 들어간 남북대화가 깨어날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쌀회담」도 원칙적으로 정부간 접촉은 아니다.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남한당국과의 직접대화를 회피하는 북한측에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도 남북한 당국자 대화원칙 고수가 과연 효과적 정책인가에 대해 이견(異見)이 나오고 있다. 북·미(北美), 북·일(北日)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시화(可視化)하는 등 우방국들의 대북(對北)정책도 전환기를 맞은 것같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대북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지註]

논 쟁

순수한 多채널 민간 교류 北체제 특성상 기대 못해

當局 회담이 우선



鄭鎔碩
<단국大정경대학장·정치학>

위장단체 내세워 南韓교란 가능성

오늘의 북한정권 특성으로 보아 남북관계개선의 실마리는 먼저 당국(정부)간 회담을 통해서만이 올곧게 풀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연유는 다음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이유로는 1인 우상화체제의 폐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金正日)은 신격화(神格化)붕괴를 우려, 남북한 민간인들의 접촉·교류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당국간 대화건, 민간 대화건 허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래서 북한은 양측 주민들간의 접촉·교류로 확대될 수 있는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측이 받아들이지 못할 「제정당(諸政黨) 사회단체 연석회의」「대민족회의」「범민족회의」「전민족회의」같은 것들만을 대신 내밀고 있다.

만약 한국정부가 당국을 제외시킨 북한측 주장을 수용한다면 북한은 그 기회를 이용해 1948년 4월에 그랬던 것처럼 주한미군철수를 비롯, 남한체제 와해를 위한 선전무대로 악용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 이러한 북측의 연석회의 또는 민족회의 주장은 민족동질성 회복이나 교류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남한의 자유민주체제 기반을 흔들고 대북불신만 고조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

둘째, 북한에 관한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다(多)채널 민간접촉교류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노동당 남조선공작책에 의한 지령에만 따를 뿐이라는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남한주민들은 민간교류가 비록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의해 관리된다 할지라도 북녘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게 되면 그쪽에 동족애와 자유사상을 묻어들게 할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형태의 민간교류도 북한사회에 자유바람을 스며들게 한다는 위험성을 남한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민간교류에 응할 턱이 없고, 위장된 민간단체를 내세워 남한파괴공작으로 나설 것이다.

80년대의 「평축」, 90년대의 「범민족대회」 강행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가 그 당시 얼마나 분열됐고, 갈등대치돼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던가를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지난해 15만t의 쌀을 남한으로부터 구걸해가면서도 가어코 「당국」간 대화형식을 기피했고, 지금도 기피하고 있는 저의 또한 남한정부를 화해의 대상이 아니요 타도와 대결의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출한데 바탕했다.

셋째, 남한이 북한의 고집대로 당국간 대화를 양보하고 민간교류로 끌려간다 해도 그것은 남북관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양측관계를 해친다. 남한의 순진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북한은 민간인들간의 접촉을 허락할리 없으며, 그들이 접촉하는 남쪽의 정치인·기업인·종교인·문화인들을 김정일 우상화와 남한사회 교란의 매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용당해온 것이 지난 반세기의 남북관계사였다. 거기에 재미를 본 북한은 남한과의 진정한 관계를 계속 거부하며 사술(詐術)에 의한 장난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이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민족관계를 정상의 궤도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도 남은 북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당국간 회담을 먼저 열어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못박고 난 다음 다채널 교류로 임하는 게 수순이라 믿는다.

대결 構圖에서 벗어나야 안정적인 민족통합 성취

전환점 모색필요

金基正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

美·日 역학 관계속 독자 영역 확보를

한국정치의 내외 온도차이가 극심하다. 안으로는 제15대 총선의 열기가 우리 정치무대의 중심에서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에는 여전히 빙하기의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 도통 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개방속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간신히 꾸려왔던 국제공조체제가 마침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보면 총선열풍이 지난후 남북관계의 전개향방이 자못 우려된다.

공조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우리 대북정책의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민족통합, 중단기적으로는 그 통합과정을 안정적 환경속에서 이루어내는 일임은 자명하다. 결국 통합에 이르는 과정속에서 어떻게 현 분단체제를 안정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으로 주입되는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거머쥠으로써 북한의 고사(枯死)속도를 가속화한다면 치기(稚氣)어린 통쾌감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나 위험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궁지에 몰려 위기감에 싸인 북한 권력층이 위험스러운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및 일본과 독자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전략에 악착같이 따라붙어 우리나름의 지렛대를 가져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미(韓美), 한·일(韓日) 공조체제의 구도를 유지하는 속에서 그들의 대북 관계개선을 남북문제와 연계해 그들의 접근속도를 조절하는 대북정책을 견지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접근법이 부분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나 앞으로도 여전히 효과적일지 미지수다. 그들의 동북아 전략구상과 이해관계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런 의구심이 앞선다. 총선이후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조치들을 자국의 계획표에 의해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역내 열강들의 한반도정책은 현 분단체제를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고장난 비행기인 북한을 그야말로 부드럽게 착륙시키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 착륙점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이다. 북한의 급격한 변동이 초래할 국제환경의 불안정은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단기적 목표가 남북한 통합과정의 안정적 관리라면 우리는 열강간의 이해관계에 포괄적 공통분모를 가진 셈이다.

문제는 북·미, 북·일 관계개선 과정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그것은 대북관계를 지나치게 대결적 구도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며 대미관계의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외교의 타성에서 비롯되는 판단이다.

요컨대 현시점은 국제공조체제의 기존 성격이 바뀌는 전환기 속에 놓여있다. 이제 공조체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제기된 시점에 서있다. 미국 및 일본과 포괄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대북관계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표와 부합하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정책적 차원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작업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 한국계 「신진」 의원 3명

「미래 주역」 기대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주역」 기대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국계 「신진」 의원

「미래 주역」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국계 「신진」 의원

「미래 주역」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東亞 時評 鄭 鍾 文

위기는 구분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미국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헌법 개정 문제는 의회 의제에 올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개정 찬성 의원들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뉴트 깅리치 의원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제기한 것이다. 깅리치 의원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나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헌법 개정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깅리치 의원은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깅리치 의원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깅리치 의원은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깅리치 의원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깅리치 의원은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깅리치 의원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東亞 時評 鄭 鍾 文

위기는 구분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미국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헌법 개정 문제는 의회 의제에 올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개정 찬성 의원들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뉴트 깅리치 의원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제기한 것이다. 깅리치 의원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나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헌법 개정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깅리치 의원은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깅리치 의원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깅리치 의원은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깅리치 의원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미국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헌법 개정 문제는 의회 의제에 올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개정 찬성 의원들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뉴트 깅리치 의원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제기한 것이다. 깅리치 의원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나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헌법 개정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깅리치 의원은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깅리치 의원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깅리치 의원은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가면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깅리치 의원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韓-美 사이버 전쟁 나선다

「미래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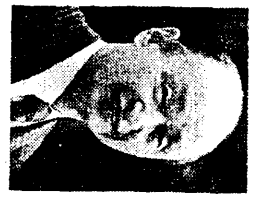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 사이버 전쟁 나선다

「미래 주역」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時評 鄭鍾文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교수〉

「미래 주역」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時評 鄭鍾文

「미래 주역」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계 3명 중 김동석(金東錫·Dongsuk Kim·민주·뉴저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4년 뉴저지 주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래 3선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뉴저지 주 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 의원」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미국 정치를 이끌 주역」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1996. 4. 15

日-北 움직임 주목

북한이 또다시 도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4일 북한은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비무장지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뒤이어 북한은 3일간 계속하여 중무장한 군인을 동원, 비무장지대내 진지구축작업을 강행함으로써 군사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지난 1953년 한국전 終戰(종전) 이래 남북한 간의 가장 기본적인 군사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를 벼랑끝으로 몰고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4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도 북한은 이 수법을 썼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핵위협은 남들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한 축에 연결되어 있던 미국의 주도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쌀과 중유 제공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익을 약속받았다.

북한은 이번에도 비슷한 구도로 사태를 몰아가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전질서를 교란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제외한 관계당사국과의 개별적인 접촉의 폭을 넓힘으로써, 한국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관계 정상화와 대북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서는 약점을 건드리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illegible]**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북한은 **[illegible]**장지대(DMZ)에서 정전질서 **[illegible]** 흔드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줄곧 요구하던 미사일회담에 임할 것을 통고하였다. 1994년 북한이 펼친 벼랑끝 외교의 도구는 핵이었다. 이제 미사일을 들고나온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북한은 한국전 당시 실종미군(MIA)유해의 송환카드도 제시하였다. 대북경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에 목말라 하는 미국 클린턴행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북일 수교를 겨냥한 평양과 동경의 물밑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일본 외무성의 외관단체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의 외교부 직속기구인 군축평화연구소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나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는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두 기관간의 접촉은 연구소간 학술교류라기 보다는 사실상 양 당사자간 정부교류의 전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북한의 정전체제 위반사태는 우려되는 점이 한부가지가 아니다. 우선 남북한 간의 문제를 보자. 북한의 내부사정은 북한이 핵을 볼한 벼랑끝 외교를 시도하던 1994년보다 더 열악해 졌다. 이미 알려진대로 경제는 구조적 파탄의 길에 들어선지 오래다. 지난해 발생한 유례없는 홍수로 말미암아 식량사정도 최악인 것으로 보고된다. 더구나 북한지도부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한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도발행동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양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민들에게 선전할 「천천지원쑤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이다. 문제는 행동에 관성(inertia)이 붙는 경우이다. 보다 강력한 효과를 얻으려고 목표로 정한 폭보다 행동의 수위를 높일 경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의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남북한 간에는 비상시에 대비한 조기진화장치(crisis prevention mechanism)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남북간 핫라인은 개점휴업 상태이고 그 밖의 쌍방의사 확인장치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

물론 고무적인 점도 한두가지가 있다.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중국도 이번 북한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1994년 연장된 「中朝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상의 「전쟁발발시 자동개입 조항」은 북한이 침입을 받았을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러시아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와 국제여론의 핵심적인 표현체인 유엔도 안보리의 對언론성명을 통하여 북한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 더 크다. 우리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어야 할 미국과의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한미간 유대를 이끌었던 세대들이 이제 전면에서 퇴장하고 그 자리를 전후의 세대들이 메우고 있다. 냉전도 끝났다. 이제 한미간에도 새로운 이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우호관계의 협성을 시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정책조율을 하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독도사태 때에도 보았듯이 일본은 한국에 민감한 사안을 터뜨려 시선을 끄는 사이 북한과의 단독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태세 가다듬어야

그러나 결국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한국이 쥐고 있다. 한국이 대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내부적으로 선거의 와중에 왜곡된 안보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대비책을 의논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의 당리와 당략을 떠난 초당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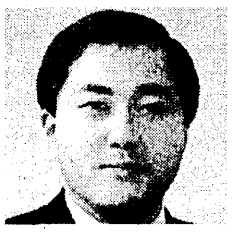
국가의 번영은 안보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여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시 안보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아침論壇

북한의 「벼랑끝」전략

盧 慶 秀



▽ 한겨레신문 1996. 4. 15

북-미 미사일협상의 앞길

이달 베를린에서 열릴 미국과 북한간의 미사일 확산에 관한 협상은 굳어 있는 양국 관계에 중요한 새 국면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북한은 미국이 94년 10월 제네바 핵동결 합의에 따른 무역·투자 장벽 완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차츰 실망하고 있다. 평양은 식량 수입에 쓰일 외화를 얻기 위해 광물자원과 그밖의 수출품의 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처지다. 미국의 계속되는 규제완화 거부에 직면한 북한은 마지못해서 미사일 문제에 관한 타협이 미국쪽의 경제적 양보를 가져다 줄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북한 협상단은 베를린에서 미사일 관련 타협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 평화체제를 위한 외교·군사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도 보인다.

처음 북한은 회담의 날짜·장소를 정하기 전에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평양은 이제 이달 19·20일 베를린 회담에 합의했다.

미국은 미사일로 의제가 한정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명확히 하려고 협상단 대표에 군비통제와 비확산 문제를 전담하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를 내세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다른 문제들도 제기할 것임을 나타내려고 북-미간의 모든 현안들을 다루는 리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을 대표로 삼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기로 한, 1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지침(MTCR)의 준수를 다짐함으로써 중국을 따르도록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제지침은 핵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 가능 무게 5백㎏, 사정 3백㎞ 이상의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제재 완화 겨냥 회담 응해

북한은 현재 80년대초 이집트에서 사들여 성능을 높인 사정 3백㎞급 및 6백㎞급의 스커드-B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해왔다. 93년 5월에는 일본에 이를 수 있다는 '로동 1호'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현재는 도달거리를 더 늘린 '대포동1·2호' 미사일을 개발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터질 경우 이 미사일들이 갖는 잠재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대포동1·2호가 미국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미국의 값비싼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함을 내세우려고 이런 주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위협을 명백히 격하한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정보평가는 "주요 핵강국들을 뺀 어떤 나라도 앞으로 15년 안에 미국 본토 48개주와 캐나다를 위협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알래스카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지 않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인 듯하지만 이것이 5년 안에 작동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선언했다.

핵협상 버금가는 난관 예상

미국은 관계개선을 향한 중요한 일보로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려 한다. 미국 관리들은 사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낮은 질, 특히 정확도 부족이 이를 사들이려던 중동 나라들의 관심을 식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미사일 수출이 군대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돼왔기 때문에 평양은 매력적인 경제 보상이 없다면 수출 동결을 고려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듯하다. 제조 동결은 더 큰 타협으로 여겨질 것이며 더 큰 보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양쪽에게 베를린 협상은 신포에 세워질 원전을 놓고 벌인 오랜 협상에 바견되는 긴 대화의 첫 수가 될 것이다.

미국의 공식 방침은 94년 핵동결 합의가 미국으로 하여금 제재를 완화하도록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합의문의 내용은 양쪽에 "무역·투자 장벽을 축소하는 조처"를 95년 1월21일까지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94년 11월 공화당이 의회를 석권하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했다. 관리들은 제재 완화가 점진적이지만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에 평양과 무역·투자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중대한 한걸음으로 시작될 것임을 10월에 털어놨다. 공화당의 압승에 직면한 행정부는 의회 보수파들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로 결정하고 팩스·전화 접촉과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수출 허용이란 최소한의 조처만을 취했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듯, 북한도 미사일 수출을 부인하기 십상이다. 중국이 미사일기술통제지침을 지키겠다고 합의한 지 여섯달 뒤인 92년 5월3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나는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에게 북한도 통제지침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부총리는 "다른 나라들이 수출규제에 찬동하는데 왜 우린들 그럴 수 없겠는가. 우리는 미사일 확산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가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시평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

▽ 동아일보 1996. 4. 17

북한이 응답할 차례

특별寄稿

韓 昇 洲

한반도와 주변의 정황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두 가지 사항, 즉 제주선언과 4자회담 공동제의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국가 사이에 접촉과 협의가 활발히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즉 한미회담에 이어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주간에 걸쳐 미일 정상회담, 미중 외무장관회담, 미러 정상회담, 그리고 중러 정상회담이 있따른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간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만큼 한미 양국 정상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깊이있는 협의를 가진 것은 당연하고도 적절한 일이다.

「4자회담」에 담긴뜻

제주선언과 4자회담 제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먼저 제주선언에서 미국은 앞으로 있을 미-북간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대신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대화와 병행하지 않는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동시에 4자회담제의로서 한미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문제를 한국이 포함되고 주도하는 다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제주 선언은 그것이 남북한간의 대화에 상관없이 북-미접촉의 협상을 가능케 하여 북-미간의 「제동장치」를 풀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북-미협상에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긴장완화 등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남북대화의 몫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4자회담 제의는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의된 4자회담은 그것이 성사될 경우 회담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원칙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2+2」의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가 실현되려면 결국 북한과 미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2」와 같은 성격의 회담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면도 있다. 우선 북한이 평화체제와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을 극구 거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얕보아서가 아니고 남북한간의 직교류와 협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을 배제함으로써 한미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과의 양자회담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대화 물꼬 기대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일차적으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이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1953년 휴전협정의 참전국으로서 관련되어 있다는 현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다자원의 지지와 보장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은 유명무실한 합의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며 그때까지 현존하는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따라서 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능동적 역할을 확인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한미 양국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중국과는 협의절차가 북한에는 사전 통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안에 대하여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예측하기 어렵우나 설령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제안자체로서 우리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이 과시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는 점도는 답성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불인정, 판문점 도발 등으로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기선잡기를 꾀하였다. 이제 한미 양국은 4자회담 제의로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다시 잡았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불은 다시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다. 북한이 자신의 존립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대화와 협상의 길을 택하기 바란다.

〈규태대교수·전의원부총재〉

▽ 한국일보 1996. 4. 17

특별기고

4者회담 제의의 참뜻

李 相 禹

〈西江大 정치학교수〉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다. 남북으로 나뉜 민족 사회의 두 덩어리를 하나의 민주 민족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이 통일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에 갈라져 살고 있는 민족 성원 전부다.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 국민들의 대표여야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남북한 정부 당국자가 두 당사자다.

통일 논의에 앞서 합의해야 할 일은 남북한 당국간에 서로를 협의당사자로 존중한다는 것과 전쟁하지 말기로 뜻을 모은 후 이 뜻을 다짐하는 「계약의 체결」이다. 누가 합의보아야 하는가? 당연히 총을 들고 휴전선에서 맞서 있는 군대를 통수하는 남북한 정부다.

이렇게 자명한 남북 당사자 협의 원칙을 북한은 지금까지 거부해 왔다. 대신 내놓은 제안이 북한 정부와 미국간의 「잠정평화협정」이었고 이를 강요하기 위해 북한은 그들이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정전협정 준수도 무시하고 북측 비무장지대에 무장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북한의 억지에 대한 대답이 어제 제주도에서 한미 정상의 공동 발표로 제시된 「4자회담」이다.

이 성명 내용은 사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남과 북이 주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의 보장자가 된다는 종전의 이른바 「2+2」회담을 조금 손질하여 처음부터 네 나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자는 것으로 고친 것이다. 다만 발표 형식이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 발표여서 제의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 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2자회담을 성사시켜 한국을 「미국의 종속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려 애썼고 한국은 남북 합의를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북한이 남북 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었다. 이런 정치 심리전적인 명분 싸움은 남북한 관계처럼 정치적 대결 관계에서는 그 상징성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된다. 그래서 남북 모두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해 왔고 이에 따라 그 동안 한반도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이번 제안은 하나의 타협안인 셈이다. 남북한의 안을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마도 이를 거부하거나 내용을 我田引水식으로 고쳐 해석해서 「변형된 북·미회담」으로 이끌어 나가려 할 것이다.

한국은 사실상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남북 당사자 원칙의 부분 수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달래보겠다는 생각이 있어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미간에 조성되어 오던 긴장을 풀 수 있는 「교통정리」의 의미이다.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 협정 체결 문제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주당사자가 되어야 하나 그 밖의 문제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2자회담」을 교적 부담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한결 자유스러운 대북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정책이란 목표와 현실을 조화시켜 나가는 기술이다. 이번 4자회담 제의는 목표도 살리고 현실도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숙된 정책 추진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의는 당장 성사될 내용들은 아니다. 북한이 받아 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그런 제안이다. 우리의 정책 의지 천명의 의의만으로도 우선 만족할 만하다. 다만 이제부터 다음 수를 침착하게 생각해 두어야 한다.

첫째, 우리의 대북한 정책의 출발은 북한의 전쟁 위협 제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미간의 구체적 협력 체제를 굳혀 가야 한다.

둘째로 북한이 이 제의를 변형하여 수용하려 할 때 쐐기를 박을 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누구든지 4자회담을 남북 당사자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고치려 할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셋째로 북한과 어떤 협의를 시작하든 「합의 사항 존중 의사」를 미리 다짐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우리와 「기본합의서」에서 정전 협정 준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어떤 회담도 의미가 없다.

이번의 4자회담 제의로 우리가 새로 얻어낸 것은 없다. 다만 무리하게 엮어 놓았던 남북 관계, 미북한 관계 및 한미 관계를 현실적으로 갈라 놓았다는 데 제일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제의를 계기로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 대북한 정책을 세워 나갈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조선일보 1996. 4. 18

전문가 진단

4자회담 제의 北경직 반응 불구 외교적 유연성 필요

金基正

남북해빙 기틀마련

총선이후 정부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은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 제의로 표면에 부상하였다. 그간 빙하기의 찬바람 속에서 국지적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비쳤던 남북관계의 긴장도, 북·미간 접촉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적 소외 가능성을 염려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나름의 훌륭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낸 셈이다. 실로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여겨진다.

4자회담의 제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외교적 경쟁구도에서 가지는 의미이다. 남북한 양측은 그간 남북한관계를 민족내부적 입장에서 접근했다기보다 국제정치적 틀 속에서 어느 편이 외교적 주도권을 쥐느냐의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남한배제론」 對 「남북대화연계론」이 그것이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잠정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정전협정무효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카드를 내보였다.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켜 남북한 대결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 제안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과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답을 얻어 낸 것은 우리측이 북한에 들려준 대답이다.

두번째 의미는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미·북관계의 정상화와 남북대화의 연계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경직된 사고와 행동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접근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공조체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한·미간 협력구도는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4자 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대화의 진전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대북전략에 유연성이 가미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진일보한 발전이다.

세번째, 더욱 중요한 의미는 남북한 관계의 냉전적 구도를 청산하고 장기적으로 해빙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탈냉전기의 세계적 긴장완화의 조류속에서도 여전히 긴장과 유화국면의 부침을 거듭하고 있던 남북관계의 고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이 4자회담에 내포되어 있다.

남북한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좌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번 4자회담 제의는 정서적 당위론에서 정책적, 현실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

4강 균형감각 유지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정책적 과제는 대략 두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는 4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상에 주어진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다시 외교적 수세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이 이번 4자회담의 제의를 결국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외교적 전략을 고려할 때 순순히 회담장에 걸어 들어오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4자회담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여전히 미국과의 양자간 접촉을 시도하리라 예상된다. 미국의 돌북아 전략의 기본 구도는 한반도 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개입(engagement)하겠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고, 또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협조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4자회담을 전제로 한 북한의 예비회담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사일 협상, 미군 유해송환 협상, 대북경제규제조치 추가 완화 등의 의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북·미관계가 이러한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우리로서는 잠기적 압박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두를 필요 없다

다른 하나는 4자회담이 출범하고 난 이후 벌어지게 될 4국간 역학관계의 재구성 문제이다. 4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 양국은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참구를 공식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것은 현 돌북아 국제관계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이다. 일본 또한 북·미관계의 진전속도에 맞추어, 혹은 그보다 더 빠른 템포를 보이며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 외교는 기존 4강의 구도 속에서 균형적 감각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연세대교수·국제정치학〉

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향신문 1996. 4. 17

특별寄稿

「회담」 성공의 네가지 기준

李瑞恒
(외교안보 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의 제주도회담결과로 나온 「한·미공동발표문」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및 미·중대표간의 4자회담제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최근 對美 평화협정공세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병력투입·진지구축 등 現 정전체제의 와해·무력화기도를 심화시키고 있어 한·미양국에 의한 이번 4자회담제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2+2」 가장 현실적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2+2회담」으로 불릴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북한에 의해 과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나 이번 4자회담제의의 의의를 평가하고 앞으로 성공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기준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기존원칙의 취지와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정전체제 대체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기본입장으로 ①당사자 해결원칙 ②정전협정 준수 ③실질적·단계적·점진적 접근 등의 세가지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들 원칙중 본래 당사자원칙은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외세간섭의 배제를 근간으로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주변국들의 개입이나 관여를 차단하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원칙은 이행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실적·실용적인 차원에서 남북한과 관련국 (즉,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당사자로 참여해 평화체제 전환과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4자회담제의는 그동안 유지해 온 당사자 원칙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둘째, 평화체제 구축은 무엇보다도 그 기준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체결과 잠정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 등을 감안할 때 남북한 및 미·중국간의 4자회담은 일단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4자회담제의는 북한의 타협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4자회담은 어떤 다른 것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형식(formula)임에 틀림없다.

셋째, 4자회담제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실효성의 문제이다. 즉, 4자회담의 결과로 합의된 협정이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인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성이 문제되는 것은 평화체제 전환의 핵심이 무엇보다도 실질적 평화의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둔 채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진정한 기준은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 내지 해소를 통한 평화의지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4자회담은 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자회담제의가 법리적 타당성을 지녔는가의 여부와 협정의 내용이 무엇을 초점으로 해야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바 있으므로 남북한 이외에 두나라가 4자회담에 참가하는 것은 일단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회담의 주요 내용도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전쟁의 종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북한관계의 개선 내지 정상화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평화협정은 과거문제의 처리보다는 향후의 평화정착과 이를 위한 제도적·운용적 틀의 마련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韓·美공조 강화돼야

이상과 같은 기준의 검토를 통해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및 미·중국간의 4자회담제의는 일단 그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남북한 당사자간 평화체제 구축이 시작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4자회담은 실용적 차원에서 남북한과 미·중국이 대등한 당사자로 참여하여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이룩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를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한·미간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겨레신문 1996. 4. 19

아침햇발

이 원 섭 논설위원

4·11총선을 며칠 앞두고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며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의도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부용'이라고는 하지만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온갖 험악한 용어를 써가며 김영삼 대통령을 헐뜯고 심지어 '타도 대상'이라고까지 몰아붙이던 북한이, 김영삼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으로 그를 도와줄 행동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의구심이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워낙 다급해 미국의 양보를 강제하려다보니 남쪽의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느니, 대남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군부쪽에서 주도한 것 같다느니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어떤 설명도 명쾌하지는 않다. 북한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정보도 흘러나온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북한의 돌출적 행동이 남한 정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시중에는 "북한이 지난번에 받은 쌀 15만t 값은 톡톡히 했다"는 쓰디쓴 농담마저 나돌고 있다.

북한의 '선택'

북한은 총선 직후 시사논평을 통해 "신한국당이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반인민적·반통일적 자세와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 대화를 완전 차단, 동결시킨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얼핏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북한이 남한 정세를 몰라도 그렇게까지 모른다는 것인지, 모든 사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잡기 어려운 것이다. 의도야 어떻든 북한은 이 점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섣부른 행동이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남한사회에서 그래도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남북문제를 대결적 자세가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대화로 풀려고 고민하는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을 실망시키고, 동포애를 바탕으로 문제를 보려는 많은 남한 주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교조적인 극좌 모험주의가 대남전술의 요체인 '대중성'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진보진영 실망시킨 '무력시위'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은 '제주선언'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공동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 여부가 달린 중요한 전환점이다. 다행히 북한은 18일 "회담의 현실성을 검토중"이라는 첫 공식반응을 보였다. 일단 회담성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태도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회담의 성사 여부는 북한 정권이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얼마나 현실감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형태든 남한을 제쳐놓으려는 태도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나 일본이나 결국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점은 상당부분 사실이기는 하다. 이제까지의 남한 외교정책이 미국의 입김에 의해 좌우돼 온 것이 현실이고, 북한이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벼랑 끝 외교'를 벌인 끝에 적지 않은 실리를 챙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진실일 뿐 전체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못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체제 흔들지 않는다" 믿음줘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일 의도를 겁내고 남한은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경계하는 한 단기간 안에 진전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민족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위론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 등이 끼어드는 것이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서로가 믿지 못하고 대화 자체를 꺼리고 있다면 그 누가 되든 제삼자의 도움이나 국제적인 보장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4자회담안이든 그밖의 어떤 제안이든 당사자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미국이 북한을 대화석상에 나오게 하려면 그럴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약속 등 당장의 '당근'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체제를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접촉하고 외교관계를 맺어가는 데 더이상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 '연착륙'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더욱이 선거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북-미 접촉은 막을 수도 없으려니와 공연히 발목만 잡으려는 모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북-미, 북-일 접촉은 오히려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고 불가측성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대미외교 등 한반도 정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과 이에 바탕한 유연한 자세이다.

▽ 경향신문 1996. 4. 19

한반도 4者회담 성사는 北내부위기 정도에 달려

■ 브레진스키 단독 인터뷰

카터행정부의 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박사(사진)는 17일(현지시간) 한반도 4자평화회담의 성패는 북한 내부의 위기 정도및 주변 강국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회담에서 배제된 러시아와 일본을 어떤 형태로든 참여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집무실에서 본사 특파원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브레진스키박사는 북한은 4자회담의 수락에 일정한 전제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부의 위기 정도가 심하고 또 중국이 수락한다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과 중국이 이번 4자 평화회담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과 중국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수락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북한은 분명히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갈라놓으려 하는 다면 이번 제안의 수락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한·미관계를 유지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락여부는 이번 제안이 공표되기 전에 미국이 중국과 진지한 사전협의를 가졌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발표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면 중국은 이번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전통지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면 일정한 전제조건을 붙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중국측의 최선의 반응이 될 것이다. 사전협의의 실상을 알 수는 없으나 미국측의 제안이 진지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회담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가지가 아닌 몇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는 북한자체의 내부 불안정, 나아가 위기의 정도이다. 불안정의 정도가 심하다면 이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상황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제안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요인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주변국가들의 반응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수락용의를 보인다면 북한으로서는 간단하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는 이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측과도 사전협의를 갖고 지지를 확보해두는 편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배제한 이번 제안이 발표됨으로써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불참을 종용할지도 모른다.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를 참여시켜야 한다면 일본도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협의의 형태가 될 것이다. 분쟁의 직접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한반도분쟁에 개입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가 협의하게 되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아시아지역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일본의 역할에 「점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점진적」이란 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자국의 방위는 물론 지역 집단안보체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보아 그렇게 하는 편이 극동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과의 양자간 안보관계에서 더 나아가 중국과의 일정한 협력관계까지를 포함한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통상문제가 아닌 안보문제에 집중했다. 이는 클린턴행정부 대외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일정부분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의 대만위기, 스프라틀리군도를 둘러싸고 정기적으로 대두되는 긴장, 특히 한반도에서의 긴장 등이 안보문제의 주가를 높였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아마도 미국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미국 국민들에게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지도자, 미군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진을 찍는 인물로 부각되는 것이 클린턴에게 유리하다. 군복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국민들에게 경원당하는 클린턴에게는 이같은 이미지가 특히 중요하다」 【워싱턴=朴仁奎특파원】

러시아·일본 참여도 바람직 北 수락할땐 전제조건 달것

▽ 경향신문 1996. 4. 27

南北관계 보는 「새로운 눈」

貞洞칼럼

表 完 洙

<본사 논설위원>

지금 폴란드는 40대 신세대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바웬사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오른 크바스니에프스키는 41세이다. 총리는 46세이고 외무장관은 49세이다. 불혹을 갓 넘긴 좌파연합의 크바스니에프스키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많은 서방 사람들은 동유럽이 다시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런 우려도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다.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앞서 속속 공산정권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탈리아까지 좌파정권이 장악하고 있다.

北 인사들 잇단 訪美

그러나 그들의 우려는 기우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구 공산당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대통령에 오른 크바스니에프스키는 여느 자본주의국가 대통령 못지않게 현실주의적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클린턴 미대통령 뿐 아니라 유럽 여러나라 지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폴란드가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념적 관점에서 자신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자신의 진실성을 과시하기 위해 좌파연합에서 탈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 폴란드 정계의 40대 「3인방」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80년대만 해도 폴란드에서 쉽지 않던 미국경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크바스니에프스키는 스웨덴에서 불법취업을 해 번돈으로 미국여행에 나서 건국 200주년 기념행사를 구경했다. 총리와 외무장관은 풀브라이트장학금으로 각각 컬럼비아대학과 프린스턴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들 「3인방」은 과거 사회주의를 신봉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사회주의의 붕괴를 믿지도 않는 이른바 「신세대정치인 그룹」에 속한다. 공산주의를 닫고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그들이 과연 어떤 정치작품을 만들어낼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요즘 북한 고위인사들의 미국 방문이 부쩍 잦아지는 것을 보고 문득 북한의 폴란드화를 상상해 본다. 그러나 바웬사가 있고 크바스니에프스키가 있는 폴란드와 김정일의 북한은 하늘과 땅처럼 기리가 멀다. 폴란드는 연 5%의 경제성장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5년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식량부족으로 주민들의 끼니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나 바로 북한의 사정이 그처럼 어렵기 때문에 북한 인사들의 訪美가 더욱 눈길을 끄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 대외경제위 김정우 부위원장은 일전 조지워싱턴대가 주최한 「한반도 경제협력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고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현재 미국을 방문중이다. 북한 올림픽조직위 장웅 사무총장도 미국 현지에서 애틀랜타올림픽 참가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일전에는 베를린에서 미사일협상이 열려 양측 대표들이 실무급 협상을 가진 바 있다. 북·미간에는 그야말로 물오른 듯 활발하게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우 부위원장은 특히 방미중 북한이 주체경제를 탈피하고 자본주의 기업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북한이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어오던 「주체」노선을 하루아침에 경제에서 제거해버리리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고정관념의 틀로 북한을 바라봐서도 안된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차피 확대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런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먼저 「작은변화」부터

정부는 현재 북·미접촉 양해기준을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 관한한 남북당사자 원칙이 준수돼야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 등 일반적 북·미관계 개선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골격인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올바른 대응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뒤늦게나마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 입장이 마련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여겨온 게 사실이다. 현실주의에 입각한 우리 나름의 객관적 통일방안이 없어 빚어진 2중성이다.

남쪽 사람들의 마음에 은연중 자리잡고 있는 오만도 흡수통일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큰 질서가 변하는 시대에는 작은 질서도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관계의 변화도 그런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예측불허의 北韓' 테오 좀머 특별寄稿

4者회담은 막다른 北韓에 탈출구

휴전선은 냉전 최후의 전선(戰線)이다. 북한은 이해불가능한 나라다. 프랑스 작가 폴 발레리가 말했듯 최악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한반도는 아시아의 분쟁가능지역중 가장 위험한 곳이다. 평화는 언제나처럼 요원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中·美 협력 분위기에 안도

첫째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교전당사국들은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라면 쌍방이 화해하고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정상화를 원하는 세력에 힘을 몰아줌으로써 적대감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첨예하게 맞부닥친 적의를 서서히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가간 화해는 법적으로 해결되기보다 분쟁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이뤄진다.

테오 좀머
獨 디 차이트紙 발행인

분단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의 효력마저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북한주민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기아를 감안한다면 언제라도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내부의 불안을 무마해야 하는 북한이 정치·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에 대해 제2의 무력침공을 해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4자회담은 건설적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4자회담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다.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히 회담을 시작하자는 이 제의는 한국과의 대화를 꺼려했던 북한으로 하여금 막다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4자회담안 지지의사를 신속히 밝혔다.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 협력한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다.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다. 독일의 경우 냉전은 열전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한국의 분단상황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현재도 그러하다. 동·서독은 서신과 전화통화를 나누고 서로 방문할수 있었다. 또 상대국의 TV프로그램 시청도 허용됐다. 서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경우 무역도 했다. 그러나 이중 현재 남북한이 시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

북한은 지난 40년동안 줄곧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고집해왔다. 북한의 고립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옛소련이 해체된후 오히려 심화됐다. 김정일(金正日)이 권좌를 차지한 후 평양으로부터는 현상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와 변화를 피하려는 조짐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설사 평화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회담의 결과가 통일은 차치하고라도 한반도 정상화로 귀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회담이 진지하게 진행될 경우 기대할수 있는 최상의 상황은 지금보다 우호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현존하는 상황」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 현상타파를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반드시 상호 무력행사의 포기로 연결돼야한다. 더이상 서로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말자고 약속하는 것—이것이야말로 데탕트의 출발점이다.

국경지대의 비무장화가 세번째 단계며 네번째 단계가 상호 군비축소다. 동시에 데탕트는 국가간 관계에 국한돼서는 안된다. 정상화는 양국 국민에게도 이익을 주어야 한다.

정상화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 필요한 사회발전은 양국이 서로 개방된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정권이 그러한 길을 택할 준비가 돼있는가. 평화회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그들의 의도를 판단할수 있는 첫 단서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이 과거처럼 이 제안을 완고하게 거절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의 변화가 북측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뒤엎는 급격한 정치·경제적 격변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89년의 독일을 보건대 그러한 격변은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발생했다.

통일, 주변세력 지원얻어야

한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격변의 개연성이 더 크다. 독일통일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4반세기동안 분단됐던 국가가 통일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만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역사가 던져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통일은 인접국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질서의 틀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과 미국·옛소련·프랑스·영국이 서명한 「2+4」협정을 기본구도로 삼았다. 동시에 유럽공동체도 통일독일을 지원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北 격변 가능성 높아… 온갖 상황 대비해야

「2+4」의 구도를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관계국가는 중국·미국·러시아·일본 등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바라건대 핵을 보유하지 않은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환태평양공동체는 통일한국이 활동하기에 걸맞은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단지 한가지 뿐이다. 머지않아 한반도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하리라는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를 개방하고 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도 있고, 붕괴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에 따라 국제평화회담은 이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박장희 기자]

▽ 중앙일보 1996. 4. 27

글로벌 포커스

북한에 시간을…

金永熙

지난 2월8일자 뉴욕타임스에는 북한 외교부 관리가 군부의 강경파를 비판하는 뜻밖의 기사가 하나 실려 그 의미를 놓고 해석이 구구했다. 외교부 부부장 최수헌(崔守憲)은 군부의 반대 때문에 외국에 대한 수해구호물자의 요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북한이 수해로 악화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정부와 구호기관에 긴급원조를 요청할 때부터 군부 강경파는 그것이 주체사상(主體思想)에도 위반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정이 워낙 급해 당(黨)과 외교부의 개방파 주장대로 외국의 구호물자를 받아들이다가 사태가 다시 반전(反轉)된 것으로 보였다.

북한 내부의 강온(強穩)세력간 견해차는 잘 알려진 일이었다. 그러나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구호물자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군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異例的)인 일이었다.

그것은 그때로서는 군부 강경파의 입장이 대외정책에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미국이 평양에 두게 되는 연락사무소에 보낼 외교행낭을 판문점을 통해 보낸다는데 외교부가 합의한 뒤에 군부의 반대로 그런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결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군부가 외교부의 발목을 잡은 경우의 하나다. 지난달 북한이 느닷없이 휴전협정체제의 준수를 거부한다면서 판문점에서 기행(奇行)을 저지른 일도 이런 큰 시야에서 보면 이해될 법도 하다.

지난 22일에는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우(金正宇)가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시장(市場)의 잿더미에서 세계의 자본주의시장으로 이행하는 야심적인 계획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연설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이 붕괴했다는 말을 세번이나 하고 어떤 나라도 국제적인 경제협력체제에서 고립되는 것은 시대착오(時代錯誤)라고까지 주장했다.

세계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자본주의시장으로 보는 김정우의 말은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넓은 세계의 시장을 외면하고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이것은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들의 말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베트남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강변(強辯)한다.

김정우가 북한 지도부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워싱턴에서의 활동목표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유리하게 유도하는데 있음을 감안해도 그의 발언은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벌인 시위와는 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속단을 경계하면서도 그의 말에 의미를 주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지각구조(plate tectonics)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대만해협의 위기, 미·일(美·日)안보관계의 강화, 내년 7월 홍콩의 중국반환, 미국의 장기적인 아태(亞太)군사전략 등은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이 지역도 냉전의 무거운 외투를 벗고 21세기를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부추긴다. 그 하나의 조건이 4자회담 성사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시간여유를 줘야 한다. 그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책토론이나 심지어 노선투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2+2」중에서 국내용인 앞의 부분(남북대화)을 너무 선전하지 말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다」는 투의 저속한 표현도 피하고, 공은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압박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헤이그에서 첸치천(錢其琛)외교부장이 한 말을 보면 중국이 아직은 4자회담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국제문제대기자·상무)

▽ 중앙일보 1996. 4. 29

중앙 시평

'4者會談'을 다듬어 가자

李相禹
<서강대교수·정치학>

「4자회담」은 그 속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느슨한 가방이다. 이 속에는 북·미회담도 담을 수 있고 북·일회담도 담을 수 있다. 물론 남북회담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4자회담은 틀이 잡힌 회담양식이 아니라 모든 회담의 길을 터준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의지의 천명이라 생각하면 된다. 4자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발전해 나갈지 아직 아무도 점칠 수 없다. 관계 당사국의 노력과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이 회담을 북·미회담으로 변형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체제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오직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처럼 노동당 1당지배의 전제정치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성취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경제역량을 갖추려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기술·시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인데 미국과의 관계개선없이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엄청나다. 지난 20년동안 공을 들여왔다. 때로는 사정도 했고 때로는 미국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허물겠다고 떼쓰기도 했고 휴전선에서 전쟁위협도 해 왔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북·미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으로 못박은 한국의 정책으로 미국이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4자회담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좋은 틀을 북한에 준 셈이다. 이 틀 속에서 남북회담을 뒤로 미루고 북·미회담만 밀고 나가면 북한은 원하는 대로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일문제와 평화협정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성명이 있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조건을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할 것이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휴전선에서 미군과의 충돌이 있을때 이를 수습하는 문제, 북한의 화학무기와 미사일의 제조·배치문제 등을 북·미간에 다룬다면 결국 당사자원칙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알면서도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미국에 의존하게 유도해 미국의 영향아래 넣어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에 북한이 방해하지 않게만 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은 그 대가로 약간의 경제지원과 북한체면 세워주기에 협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4자회담제안 이후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학술회의 명목으로 북한대표들은 미국에 교대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미사일 협상도 계속하고 있고 유해송환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4자회담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를 우리의 뜻에 맞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

한국이 4자회담에 동의한 것은 미국이 남북당사자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남북한간 긴장해소, 그리고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협의 등은 남북한이 우선 합의한 후 미국등 관련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4자회담에서 우리는 북·미 회담에 대한 방해를 하지 않기로 양보한 대신에 미국의 「당사자 원칙」지지를 받아낸 셈인데 이것을 더 확실히 굳히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우선 당사자원칙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남북한 문제는 따지고 보면 우리의 「국내문제」다.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다뤄가는 문제다. 이런 정신을 미국이 확실하게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신에서 당사자원칙을 해석한다면 미국은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분명해진다.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수교해서는 안되며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문제는 당연히 한국이 주도하도록 미국이 손을 대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지원도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

4자회담의 핵심은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사자 원칙을 존중하게 만드는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문가 제언

"안보정보 國益차원서 관리를"

南北 평화체제구축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黃炳茂
〈국방대학원교수·국제정치학〉

냉전이후 시기의 국가안보 문제는 그 영역의 확대와 상호 연계성의 증대로 보다 복잡해지고 안보방식도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냉전시기에 비해 군사안보의 비중이 낮아지고 경제안보·환경 및 마약범죄 등 비군사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빈곤과 사회불안의 정치적 불안정과 연계, 경제력의 약화와 과학기술 부진이 야기한 국방력의 약화 등 안보이슈의 상호연계성은 국력의 제요소를 망라한 총체적 역량임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전략은 국력의 제요소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 외교·통일·군사·정보 및 경제분야의 안보영역을 종합한 국가안보백서의 발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건은 의원입법활동을 비롯, 대국민 홍보 및 안보관료들의 정책입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민주화의 심화로 말미암아 안보 외교를 비롯, 안보정보의 공개와 국방과 다른 안보관련 부서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투명성 및 공개 문제와 관련, 국민요구의 증대를 정부는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당면한 문제인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국민의 관심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보정보의 공개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공개해야 할 정보와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가 있다. 국회의원이나 안보관료는 개인과 정파 및 부처의 이익을 떠난 국가이익 차원에서 안보정보를 관리해야 할 자세가 요구된다.

군사안보는 기능적인 면에서 군사기밀 영역에 속할 수 있으나 방위개념 전력증강의 기본방향과 같은 본질적 대안은 군 전문가를 포함, 광범위한 전문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채택할 때 안보에 대한 민·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안보전략과 역량의 확충을 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회의 안보관련 상임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전문가를 초청, 청문회를 통한 전문적 견해를 의정활동에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를 향한 한국안보전략의 기조는 독자적 방위력과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협력안보방위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협력방위체제는 냉전기 집단 안보형 방위체제와는 주변국 관계, 군사교리, 군사력 규모 및 전력구조 면에서 다르다.

한국은 집단안보형과는 달리 러시아·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안보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 북한과도 평화적 공존을 바탕으로 군사적 안정을 유지한다. 한국은 미국과는 포괄적 및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입각한 대북한 방위교리 위주로부터 주변국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교리로 전환된다. 방위력의 규모는 대북 대응전력의 확보로부터 주변국 불특정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방위적 충분성」 개념에 입각한 방위력 확충을 지향한다. 전력구조는 과거 대북형 지상전 위주로부터 해·공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핵문제는 비핵정책을 원칙으로 하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래 한국의 군사력 규모와 구조는 안보위협의 대응을 위한 군사력 소요, 즉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없다. 가용예산의 제약이 주요 이유다. 정부는 가급적 자원절약형 군사전략을 개발하고 국회는 이러한 전략이 구현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확충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문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시각을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崔相龍 칼럼

火曜世評

〈題字: 一中 金忠顯〉

평화통일과 4者회담

21세기를 맞으면서 한반도 통일이 이미 우리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의당 평화통일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화통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역사는 필연의 결과일 수도 있고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다. 어쩌면 통일도 오랜 평화공존의 연장선에서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다.

통일이 언제쯤 올 것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다만 역사적 경험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든 평화적인 방법이든 간에 공통점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통합한 것이다. 전자의 베트남 경우는 남한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독일식 통일은 북한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쟁을 통한 통일은 한국은 물론 주변 4대국이 다 바라지 않으며 북한도 승산없는 전면전쟁은 피할 것으로 보아 현실성이 적다. 독일형 통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북한당국은 북한인민이 스스로 독일형을 바라기 전에 파국이나 전쟁과 같은 최후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가능성 대비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룰테면 「경제5개년계획」과 같이 구체적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다. 당면 정책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것도 민족의 평화로운 삶이라면 평화는 단순히 통일의 수단만이 아니라 통일의 목표가치다. 어떤 경우라도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수반하게 될 전쟁에 의한 통일은 말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평화공존정책은 결과적으로 통일을 늦추게 될지 모르나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길이다.

평화통일은 그 성격상 先평화 後통일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식이 아닌 남북교섭을 통한 평화통일은 미증유의 세계사적 경험이 될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평화공존의 과정 속에서 체제유지에 실패한 북한이 자멸할 수도 있고 두 개의 건강한 정부가 평화적인 교류를 쌓아 나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최선의 통일정책이며 이를 주관하는 부서가 바로 통일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4월16일의 4자회담 제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귀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제주선언 속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韓美안보공약 이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가 있다. ①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한반도 평화확립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과제다. ③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美·北 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할 수 없다. 남북당사자 원칙이 관철된 셈이다.

최소한의 관련國

4자회담에 대해 중국은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江澤民(장쩌민)의 친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美日 신안보에 의한 군사적 역할과 독자적 北日 접촉의 길이 열려 있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부정적 태도는 예상된 일이나 한국과 미국의 설득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나 미국과 중국은 최소한의 관련국이다. 그것도 남북 당사자 대화를 원칙으로 하고 美中은 이를 보장하는 형식이라면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북한의 대응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당분간 남한 배제 北·美단독회담을 고수할 수도 있고 남북대화와 北·美대화를 이원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인다 해도 남북대화 수준에서 의견이 엇갈려 자주 만나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협상은 급진전할 수도 있다.

아무튼 현시점에서 볼 때 남북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는 1991년 12월의 남북합의서 이상의 것을 바라기 어렵고 국제적 보장안으로는 4자회담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한반도평화의 믿을만한 담보는 공고한 韓美관계다. 北·美관계의 진전이 韓美관계의 이완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워싱턴을 통한 평양접근은 아직도 한국의 국가이익에 反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의 통일및 평화관련 정책은 ①남북합의서 ②4자회담 ③韓美안보공약이라는 3가지 기본틀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전술의 융통성은 장려할만 하나 전략에 잦은 혼선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高麗大아세아문제연구소장〉

<부 록>
남북관계일지

남 북 관 계 일 지('96.2.1~'96.4.30)

2월

2. 1.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정당·단체 연합회의 관련 논평

- 북한이 진정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이 마주앉아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임.

2. 1. 통일부총리 기자회견: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 추진

- 남북회담이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문제가 실현되도록 힘 쓸 것임.
-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을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임.

2. 2. 공로명 외무부 장관 기자회견: 안승운 목사 원상회복 촉구

- 북한이 안목사를 납치해간 것은 사실이고, 현재 중국이 범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송환은 당연함.

2. 2. 미국무부 대변인, 대북 식량지원 관련 성명

- 미국 정부는 유엔식량계획(WFP)의 호소에 응해 북한의 홍수피해를 구호하는데 대외재난구호기금(FDA) 가운데 2백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음.

2. 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북 식량지원 발표

2. 8.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다각적인 탈북자 수용대책 및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방안 등 협의

2. 12. 강영훈「한적」총재,「제707대영호」선원 송환요구 대북 방송 통지문 발표

2. 12. 주유엔 북한 대표부, 북한 국제 쌀지원 선별수용 방침

- 외부에 식량지원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군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임.

2. 13. 북한 성혜림(김정일의 본처) 일행 4명 제3국 탈출

※ 성혜림(59), 성혜랑(61), 이남옥(30), 수행원 1명

2. 14.	국방부, '96. T/S 훈련 중지 발표 ※ '92, '94, '95에 이어 4번째 중단
2. 14.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하사관 조명길(25), 러시아 무역대표부 무장 난입 망명 신청
2. 15.	외무부 대변인, 북한 경비병 러시아 대표부 망명 관련 브리핑 – 망명 동기는 불분명하며,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러·북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전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임.
2. 15.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대책 협의 – 북한 권력승계 지연, 군부발언권이 높아지는 경향, 탈북자 증가 등 사회일탈 현상과 불안정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22.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평화보장 체제 수립 관련 담화 발표
2. 23.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잠정협정체결 대미제의 관련 논평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 기존합의를 존중하며 관련국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
2. 23.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 관련 브리핑 – 미국은 맹방인 한국을 포함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어떠한 협정 체결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
2. 25.	김영삼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인도 뉴델리) – 북한은 현재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북한이 불행한 종말을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2. 25.	KEDO 제4차 부지조사단 신포 방문 후 귀환(1.16~2.25)
2. 27. ~ 28.	남북종교인회의 개최(북경) ※ 남: 이재석 한국종교인협의회회장 북: 장재철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3월

3. 1.	김영삼 대통령, 남북대화 조속재개 촉구(3.1절 기념사) – 북한은 불신과 반목의 자세를 청산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광장으로 나와야 하며, 우리는 남과 북이 진정한 민족의 화해를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음.
3. 2.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대리, 「염분진」호 선원 송환 요청 대남전통문
3. 3.	김영삼 대통령·존 브루톤 아일랜드 총리 정상회담(방콕)
3. 4.	강영훈 「한적」 총재, 북한 화물선 선원 송환 관련 대북전통문 –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들을 '96.3.5, 11 : 00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송환하기로 결정하였음. – 아울러 동진호, 대영호 선원 등을 포함하여 귀측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측 인원들도 조속히 송환해줄 것을 촉구함.
3. 5.	김영삼 대통령·메이저 영국총리 정상회담(서울)
3. 5.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선원 판문점 통해 송환 ※ 선원 2명 : 리진규·김인철, 시신 2구 : 김순종·오승택
3. 6.	미국무부, 북 인권상황 최악 상태 지속 평가(연례세계인권보고서)
3. 6.	조선종교인협의회, 남한종교단체들에 편지 발송
3. 15.	장웅 북한 올림픽위원회 전무이사, 남북한 월드컵 공동개최안 부인
3. 18.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로 「한전」 공식 지정 ※ 장선섭 경수로 기획단장·클리블랜드 미대사·세키히로 모토 일대사 참석
3. 18.	IAEA 사무총장, 북 핵동결 검증 불응비난(IAEA 이사회 보고)
3. 18.~19.	KEDO 집행이사회 개막(뉴욕)
3. 20.	공로명 외무장관·중국 전기침 외교부장관 회담(북경) –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잠정협정은 실현성이 없으며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유효하다는데 합의

3. 20. KEDO-한국전력, 주계약자 합의서 서명(뉴욕)

3. 20. 유엔식량계획(WFP), 대북 쌀 수송선 침몰 성명

- 미·호·스위스 등이 기부한 쌀 6,500여톤을 선적한 대북수재 쌀 지원 선박「쳉다호」(중국선적 2,819t)이 3.19 대만해협에서 침몰하였음.

※ 3.11 방콕 출발 → 3.23 남포항 도착 예정

3. 22. 공로명 외무장관, 중국 강택민 주석 예방

- 남북대화 중재 요청

3. 22. 국제적십자연맹(IFRC), 북한의 두번째 식량원조 요청(6백만달러) 발표

3. 26. KEDO 총장단 6명 방북

-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 최영진 사무차장 등 대표단 신포지역 시찰

3. 28. 통일원 대변인, 북한측의 북경접촉 재개제의 관련 브리핑

- 북한측은 최근 북경접촉 재개 의사를 전해온 바 있음.
- 우리측은 이러한 주장이 정상적 대화방법이 아니라고 보며 한반도내 당국회담 개최와 대남비방 중지 등의 우리측 입장에 호응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3. 29. 김광진 북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비무장지대에서의 모종조치 위협 대남 담화

- 우리의 평화보장체제안 마저 거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대화의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우리의 대응책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른 조치들이 포함될 것임.

3. 29.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 김광진 차수 담화관련 발언

-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안정되어 있으며, 정전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30. 국방부, 북한 김광진 차수 담화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이 자신의 체제내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3. 30. 평양방송, 북경접촉 북측단장 전금철의 3.20자 대남전문 공개

- 제4차 접촉은 3.27경에 북경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4월

4. 2.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김광진 차수 담화(3.29)관련 발언

- 한반도에서는 전쟁전야의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전협정은 종지부를 찍었음.

4. 3. 최영진 KEDO 사무차장, 대북경수로 공사 '96. 6~7 착공 기자회견

- 북한은 신포지역의 100m 산등성이를 30m로 정지하고, 함흥-신포간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였음.
- 영사보호, 통신·통행협정, 부지인수의정서 등 부속합의서 협상은 4.8부터 뉴욕·평양 등에서 열림.

※ 3.26~4.2 KEDO 사무총장단 북한 방문

4. 4.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DMZ불인정」 담화 발표

4. 5. 국방부, 북한의 DMZ불인정 선언 관련 성명

- 우리는 현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간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수되어야 함을 재차 분명히 함.

4. 5. 평양방송, 북경접촉 북측단장 전금철 2번째 모사문 방송보도

- 귀측이 진실로 서로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제4차 북경접촉에 나와야 함.

4. 5.	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대남전문 관련 기자브리핑 – 북측이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전쟁위협 등 긴장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칙적 대화를 주장하는 양면 전술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앞으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내에서 공식적인 당국회담으로 열려야 하며, 대남 비방·중상 중지 등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힘.
4. 5. ~ 7.	북한 무장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 – 제1차(4.5, 18 : 00~20 : 30) : 박격포 1문, 무반동총 2정, 기관총 4정으로 무장한 120여명 – 제2차(4.6, 19 : 00~22 : 20) : 무장군 260여명 – 제3차(4.7, 20 : 07~22 : 35) : 무장군 230여명
4. 6.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DMZ도발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4. 7.	주한유엔군 사령부 성명 발표 –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북한측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음.
4. 8.	백악관 대변인, 북한의 무장군 투입 관련 논평 – 북한의 3일째 중무장군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침투에도 불구 한국에서 교전사태가 발생할 징후는 없음.
4. 8.	북한 중앙방송, 청년학생들의 군입대 탄원 보도 ※ 개성시(4.7), 신의주시(4.8)
4. 9.	대우 북경지사장, 경협논의 입북
4. 9.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전협정 유효 표명
4. 9.	유엔 안보리, 북한 도발 관련 긴급의제 채택
4. 10.	한·미, 북한도발 대응 긴급안보협의회 개최 ※ 공로명 외무·이양호 국방장관, 레이니 미대사·게리럭 주한미사령관

4. 11.	유엔안보리, 북한의 DMZ 도발 관련「의장언론발표문」채택 – 북한의 DMZ 무력시위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 북한당국에 정전협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4. 16.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4자회담 제의(제주) – 한국·북한·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 – 4자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음.
4. 16.	권오기 통일부총리, 한반도「4자회담」제의 관련 기자 브리핑 – 4자회담에서는 우선 4당국이 회담하나 남북한이 주체이며, 중·미는 중간에서 협조하고 결과를 보증하는 입장임.
4. 16.	중국 심국방 외교부 대변인,「4자회담」관련 발언 – 중국은「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
4. 16.	일본 하시모토 총리,「4자회담」제의 지지 표명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 개최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의의를 갖는 조치로 이를 지지함.
4. 16.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4자회담」제의 관련 거부 표명 – 미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서명국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미국과만 협상할 것이며, 신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중재자는 필요 없음.
4. 18.	북한 외교부 대변인,「4자회담」관련 기자회견 –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는 조·미간 결정할 문제인데 미측이 왜 갑자기 제안하였는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치 않음. – 우리는 어쨌든 미국측의 제안에 다른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중임.
4. 18.	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4자회담 반응 관련 논평 – 북한측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 같으며, 직접적인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4. 18.	유엔식량계획(WFP), 2차 대북지원 쌀 남포항 도착 발표

4. 20.	국방부, 북한 해군경비정 2척 경계선 침범 발표 – 4.19, 11 : 50 북한 경비정 7척이 북한한계선(NLL) 북방 6km 지점에서 기동훈련 중 2척이 NLL 남방 1km지점까지 월선함.
4. 20. ~ 21.	미·북 미사일 회담 제1차 회의 종료(베를린) ※ 북한 이형철 미주국장,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부차관보
4. 23.	북한군 창건일(4.25)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
4. 26.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남북한 「대학총장회담」 개최(8.15) 대북 제의
4. 26.	미 국무부, 경제제재 해제조건 대북 통보 – ①테러리즘 포기 ②미군유해 반환 ③미사일 협상 계속 등
4. 26.	방미 이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남북관계 긍정적 발언(워싱턴)
4. 27.	통일원, 3개업체 대북 「협력사업자」 승인 ※ 삼성전자(조선체신회사 합작) 700만불, 태창(능라 888 무역회사 합작) 580만불, 대우전자(조선삼천리총회사 합작) 640만불
4. 27.	제5차 KEDO 부지조사단 평양도착
4. 29.	(주)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발행일 : 1996년 6월 21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홍보협력관실(735-8766)
참여자 : 김 간 규
인쇄처 : 문성인쇄(주) 738-7434